

麗順事件

논문집 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말간사

추천사

추모시

차례

제1장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1. 국가폭력 피해자의 ‘보·배상’에 대한 성찰
- 5·18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 정호기
2.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 김창후
3. 한국현대사·민주주의·인권 / 안종철

제2장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지역주체의 역할

1.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향과 원칙 / 박종길
2. 진실규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박만순
3. 함평군의 진실규명을 위한 추진 사례 / 김규준

제3장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기조 발제 여순사건과 한국현대사 / 서중석

제1부 여순사건의 배경과 민간인 피해

1.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
-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최정기
2. 여순내란 진압의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 / 김무용
3. 여순사건 피해 실태조사 현황 / 박종길

제2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1.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연구 / 박찬식
2. 여순사건의 성격 / 김득중

제3부 여순사건의 영향

1. 여순사건 이후 군대, 그리고 대민통제 / 노영기
2.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 김춘수
3.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 언론탄압과 주민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김학재

제4장 60년의 한, 기억은 진실로 아픔은 상생으로

1. 기억투쟁의 문학 / 현기영
2. 기억과 부재, 그리고 역사(歷史)와 수사(秀史)
 - 역사의 현재화와 문학적 개별성을 중심으로 / 임동환

제5장 여순사건과 한국군

1. 한국군의 창설과 여순사건
 - 지휘부를 중심으로 / 노영기
2. 국군의 여수·순천 진압작전 / 김득중
3.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 주한미임시교문단(PMAG)의 진압‘주도’작전의 경위와 성격 / 안정애
4.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과 진압
 - 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 이선아

제6장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학살의 진상규명

1.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허상수
2.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이상울
3. 제주4·3사건 진실규명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김은희

제7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의 모색

1.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장완익
2. 여순사건의 제도적 청산과 진상규명의 실재 / 정호기
3.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소고 / 이영문

제8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색

1. 제주4·3특별법 제정과정과 4·3위원회 활동성과 / 양조훈
2.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 / 박찬식
3.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의 입법경위와 과제 / 김성곤

제9장 여순사건, 지방자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1.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완석
2. 과거사의 치유공간과 운영 주체의 성격 / 정호기
3.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및 추진 방안 / 이영일

제1장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2005년 10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2005. 10.

국가폭력 피해자의 ‘보·배상’에 대한 성찰

- 5·18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 정호기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 김창후

한국현대사·민주주의·인권 / 안종철

국가폭력 피해자의 ‘보·배상’에 대한 성찰

- 5·18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정 호 기(전남대 학술연구교수)

I. 과거청산에서 ‘보·배상’의 민감성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운동과 작업은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과거청산의 대상은 동학농민전쟁부터 최근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십수 개의 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 기구 자체의 과거청산 위원회들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세 조직에서 가동 중이고, 법조계에서 이를 준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한 과거청산 조직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에 의한 피해자들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들(즉,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등장했던 과거청산 관련 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 일부를 조직의 활동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청산 작업에서 항상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조직은 구성된 적이 없다. 그 동안 과거청산 작업은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보다는 진실규명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이다(김동춘, 2005: 22). 한국에서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은 ‘5·18민중항쟁(이하 5·18)’에서만 찾을 수 있다. 국가범죄, 인권 유린,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종종 이루어졌으나, 이는 과거청산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18 책임자 처벌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과거청산 위원회가 아닌 사법부에 의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거청산 작업과는 실행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책임자 처벌은 과거청산운동과 법률의 제정에서 항상 민감한 문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5년 5월에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에 ‘가해자’의 문제가 포함된 것은 발전적 성과임이 분명하다.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정도는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과거청산 작업의 과제가 있다. ‘보상’ 또는 ‘배상’이 바로 그것이다. ‘보·배상’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원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렇지만 과거청산운동에서 ‘보·배상’이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보·배상’은 충분한 진실규명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청산의 합리적 절차로 봐서도 적절한 것이며, 그간의 과거청산 작업에서 획득한 교훈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배상’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과거청산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의의, 내용과 절차 등을 다룬 연구들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보·배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연구는 보·배상의 형평성과 실질적 효과를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과거청산의 보·배상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5·18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의 추진 배경과 법 제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법 집행 이후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다.

보·배상은 일상 담론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청산운동을 촉발 및 촉진시키고, 보다 개혁적인 방식으로 청산작업이 진행되도록 추동하는 힘의 근저에 보·배상의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정황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첫째, 과거청산 관련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들 가운데 보·배상 문제가 필수적으로 언급되었고, 결국은 관련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5·18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법개정은 보상 관련 항목들과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를 통해 5·18은 현재 제5차 보상이 진행 중이고, 민주화운동은 제4차에 거쳐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을 접수하였다.

둘째, 보·배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과거청산법들은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내용의 수용을 요구하는 압력에 직면해왔다. 과거청산법의 제정 전 단계와 직후에는 진상규명의 대상과 시기, 이를 담당할 주체(위원회)의 구성, 책임자 처벌의 문제, 관련자의 결정 기준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작동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곧 바로 보·배상이 전면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 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과거청산법이 제정될 당시 배·보상이 누락된 경우 추후 법개정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¹⁾

1)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조치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4년 3월 2일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개정되었으나, 3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이유는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입법될 경우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 과거청산의 성과 혹은 문제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보상의 형평성과 적절성 논란은 대상자 판정 기준과 금액 및 항목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비교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 과거청산법에 의한 보상과 비교 속에서 표면화된다. 특히 비교의 주요 전거가 된 것은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었다.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전반적 수준에서 통계가 공개된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위 관련자의 보상금 수령, 출처가 불명확한 소문과 전언 등에 의해 그 내용이 과대 포장되어 회자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과거사정리법에는 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배상 문제는 완전하지 못한 과거청산법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고, 과거청산작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5·18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보·배상의 현황과 쟁점, 문제의 해결과 존속, 보·배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의 한계 등을 성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5·18민중항쟁 피해자의 배상

1. 광주보상법의 보상금 지급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신청은 총 5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1990년(노태우 정부), 제2차는 1993년(김영삼 정부), 제3차는 1997~1998년(김영삼~김대중 정부), 제4차는 2000년(김대중 정부), 제5차는 노무현 정부(2004~2005년)이다. 보상 신청은 광주보상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추가 보상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였다. 보상 신청 기회가 수 차례 연장되었던 이유는 제2차의 경우에는 법의 보완에 따른 것이 주요했지만, 이외에도 의도적 미 신청자, 인지하지 못한 신청자,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자 등이 존재했던 것에 기인했다. 보상 항목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2차부터였다. 이는 연행 및 구금자들에 대한 보상이 독립된 피해 유형으로 인정되고, 상이자를 총 14등급으로 분류했던 것을 기타 1, 2급을 뒀으로서 상이 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신청대비 인정율은 보상 신청 회수가 늘어날수록 낮아졌다. 제1차는 82.5%, 제2차는

66.0%, 제3차는 56.1%, 제4차는 54%,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제5차는 10.2%에 불과하다. 이는 근거를 갖춘 관련자들이 초반에 주로 신청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횡수를 거듭할수록 보상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사망자의 경우 제1차 보상 이래도 단 한 명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완료된 것은 제4차까지이고, 제5차 보상 신청은 현재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인정대상자는 2002년 5월 14일 현재 <표 1>과 같이 총 4,312명이며, 사망자는 154명, 행방불명자는 70명, 상이자는 3,181명, 기타자(순수 연행 및 구금, 수형자)는 907명이다. 현재 진행중인 제5차 심의 결과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상이자 15명, 기타자 39명을 보상대상자로 인정했고, 제4차 보상 당시 심사기준과의 형평성을 제기한 시국사건관련 신청자 115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재심사토록 하고 있다.

<표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현황(2002년 5월 14일 현재)

(단위: 명)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합계
계	2,224	1,194	442	452	4,312
사망자	154	0	0	0	154
행불자	38	9	17	6	70
상이자	1,971	765	210	235	3,181
기타자	61	420	215	211	907

* 주: 추가 신청으로 인한 중복 인정자는 포함하지 않음.

* 자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2002: 441 ~ 442).

제4차에 걸쳐 지급된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은 2002년 5월 14일 현재 <표 2>와 같이 총 228,369백 만원이고, 제1차에는 142,792백 만원, 제2차에는 39,226백 만원, 제3차에는 28,047백 만원, 제4차에는 18,304백 만원이다. 제5차의 경우 총 보상액은 1,362,944,000원이며, 최고액은 130,316,000원, 최저액은 3,521,000원일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 보상금 지급 현황(2002. 5. 14. 현재)

(단위: 백 만원)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합계
계	142,792	39,226	28,047	18,304	228,369
사망자	17,042	0	0	0	17,042
행불자	4,192	1,129	2,208	797	9,048
상이자	120,332	28,410	12,798	10,848	172,388
기타자	504	9, 687	13,041	6,659	29,891

* 주: 금액은 각 보상 때마다 집행된 금액을 총괄한 것임.

* 자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2002: 441 ~ 442)

2. 광주보상법의 보상 쟁점과 갈등 해소

광주보상법은 1990년 8월 6일에 제정되었다. 광주보상법은 정부·민정당안, 평민당안 그리고 공화당안,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 총 4개의 법안이 거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3당 합당으로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 광주보상법은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주청문회가 개최되었지만, 진상이 충분하게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관련자 및 시민들의 저항이 거센 정황 속에서 제정되었다. 광주보상법은 험난했던 5·18에 대한 기억투쟁의 성과를 담아내지 못한 채 5·18 가해자의 정치적 기반세력의 주장을 담아 탄생했던 것이다.

광주보상법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전제가 없었던 법률의 제정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주요 논쟁점들은 ① 보상인가, 배상인가의 문제, ② 보상대상자의 범위, ③ 보상금 수준, ④ 국가유공자 예우의 문제, ⑤ 유죄판결 확정자 및 구속자의 재심 등이었다(김재균, 2000: 158 ~ 162). 논쟁은 거의 대부분 정부 및 민정당의 안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수 차례의 광주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당시 야당과 관련단체가 주장한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보상인가, 배상인가의 문제는 5·18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가 여

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다. 광주보상법은 법률명 상으로는 ‘보상’을 명기하고 있으나,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5029호)」의 “제6조(배상의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를 명기함으로써 ‘배상’의 의미를 갖게되었다.

둘째, 보상대상자의 범위이다. 광주보상법은 보상금 신청대상을 ‘인적피해’에 한하여 관련성이 인정된 자만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 후 사망자, 상이자로 분류되는 피해자는 명확한 보상 대상자로 명기되었으나, 유죄판결 확정자 및 구속자, 기타 면직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광주보상법 제22조(기타 지원금)에 대한 정의와 해석과 상관적이었다. 이 조항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제1차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는 이를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차 보상에서는 ‘연행·구금되거나 수형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운데 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의한 보상은 즉각 반발을 가져왔다. 그래서 시행령 제21조 등을 개정(1993년 5월 29일)²⁾하여 연행·구금·수형받은 자에 대한 보상이 독립된 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 즉, 해직 혹은 학사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인데, 이는 광주보상법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심의되고 있다.

셋째, 보상금의 수준이다. 논쟁의 핵심은 적절한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다. 상대적으로 높게 보상금을 산정하면 보훈단체 등의 반발을 살 것이고, 낮게 산정하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이었다.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액은 일반적으로 단일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상금, 생활지원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연행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보상항목을 설정한 것은 관련자들의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보상하기 위함이었다.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연행보상금 등의 항목은 법률에 구체적 기준이 명기 혹은 근거를 갖고 있으나,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항목인 위로금은 광주보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가 지급했던 “위문금”³⁾을 지급받지 못한 관련

2) 개정된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는 다음과 같다.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광주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5·18관련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보상에 대한

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5·18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후자의 항목들 때문이었다. 또 하나 고려되는 것이 연행보상금인데, ‘형사 보상 1일 최고액’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여 국가보상의 최대치로 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넷째, 국가유공자 예우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를 고려하여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26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0호)」⁴⁾이 제정됨에 따라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과 가족’이다. 지원 내용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기 지급된 보상금을 연금 지급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과 차이를 두었다.

다섯째, 유죄판결 확정자 및 구속자의 재심은 형사 절차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5·18 당시 적용된 형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국가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부정되었다. 그러나 「5·18특별법」 제4조(특별재심)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 제4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포함됨으로써 재심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시작된 ‘5·18사건관련 재심청구’가 진행되어 1997년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정웅태, 2001: 526~529).

발표는 1980년 5·18 직후인 6월 6일에 있었다. 국가가 5·18을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보상은 ‘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민간인 사망자 총 149명 가운데 폭도 및 난동자로 분류한 36명을 제외한 113명의 희생자 유족과 중상이자 122명에게 지급되었다. 두 번째 보상은 1983~1984년에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권이 「전남지역개발협의회」라는 조직을 앞세워 망월묘역 해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족 총 151명과 중상이자 154명에게 ‘생활지원금’과 ‘이장비’라는 명목으로 지역 상공인들에게 반강제로 할당하여 모금한 성금을 배분한 것이었다. 세 번째 보상은 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권이 ‘5·18관련 피해자 보상 등 광주문제 치유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대상자는 제1차 1,656명, 제2차 1,285명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된 보상금들은 광주보상법이 실시되면서 상계처리되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박원순(1995), 유광중(1999), 안종철(2000), 김재균(2000) 등을 참조.

4) 이 법은 2004년 1월 20일에 “광주”라는 명칭이 갖는 제한성과 제반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Ⅲ.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1. 민주화보상법의 주요 쟁점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 법은 광주보상법을 모태로 제정되었다. 민주화보상법 제정의 주요 쟁점은 ① 법을 적용할 기간, ② 명예회복과 보상대상의 범위, ③ 실정법 위반자의 해당성 여부 등이었다.

보상이라는 문제로 국한하면, 처음 제정될 당시 대상자는 ‘사망 및 행방불명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과 상이자 및 그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시점과 상이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했다. 보상금 결정 기준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에 자주 인용되었던 것이 ‘전태일’이었다. 보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수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국가유공자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법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최대한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죄판결 및 구금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것 역시 처음 제정된 법으로는 명예회복 조치 이외에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었다.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관련자들에게 신청인 입증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어 궁금증과 갈증을 극대화한 다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의도를 비판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광주보상법과 달리 ‘항거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두 법의 보상 적용대상자 선정의 차별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광주보상법은 ‘수배’와 ‘구금’ 등이 피해보상 대상이었으나, 민주화보상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비판적 의견이 분분했다.

셋째, 해직 또는 해직 후 복직자의 근무 년 수 산정 및 연금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

떻게 보전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주장하는 법적인 논리들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5·18관련자들 가운데 해직된 국립대 교수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승소한 사건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1998년 10월 30일 「광주사태관련 해직 교수에 대한 ‘무직’ 재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처리방안」이 수립한 후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넷째,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들 가운데 ‘기여도를 산정’받아 인정된 사례들이다. 유족들은 기여도 산정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주화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기여도 사정을 둘러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회복’을 쟁점으로 제기하지만, 그 결과는 보상금 상승 효과를 갖고 있다.

2. 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과 미해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방법은 법 개정뿐이었다. 법 개정이 지연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신중한 논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이었다. 개정된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 항목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크게 세 가지이다. 보상금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고, 의료지원금은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따라 실질적 소요 비용(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법 제7조(보상금)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⁵⁾

개정된 민주화보상법으로 인해 첫째, 기존 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변경되었다. 즉, 개정된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 2(보상금의 조정지급)에서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호프만 계수와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24일 기준으로 <표 3>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164명(사망 47명, 상이 117명)이 조정지급 대상자가 되고, 3,087백 만원이 추가 보상을 받

5)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된 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 2(생활지원금)은 보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대상자의 다양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게 되었다.

<표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현황(2005. 6. 24.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결정		지급		미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19	23,527	382	22,446	37	1,081
사망	87	12,188	84	11,362	3	826
상이	332	11,339	298	11,084	34	255

* 자료: 이영재(2005: 19 ~ 20).

둘째, 유죄판결 및 구금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민주화보상법 제9조(생활지원금)⁶⁾의 개정이었다. 그런데 구금자의 생활지원금 지급에 적용되는 금액은 광주보상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37,360원)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광주보상법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다. 2005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생활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구금자 3,271명과 등외자 152명을 포함한 총 3,423명이고, 이 가운데 접수자는 구금자 1,301명과 등외자 30명 등 1,331명, 그리고 지급이 인정된 사람은 구금자 68명이다.

그렇지만 앞서 제기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보상 쟁점은 법의 개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위원회의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3월 27일에 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방안들을 담기는 했지만, 미해결 사안들이 남은 상태인 것이다.

IV. 보·배상에 대한 시선의 변화와 접근의 한계

과거청산에 있어서 보·배상의 문제를 바라는 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민주

6) 많은 사람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수령하고는 있으나,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주는 거부감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운동 관련자들의 다수는 자신의 활동에 대가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가치로 자신의 활동이 계량화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 차례의 보상 신청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5·18의 경우, 가해자의 일원이었던 자가 시혜적으로 실시한 보상에 응한다는 것은 그간의 신념과 계승 정신을 부정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폭력에 항거한 혹은 피해를 당한 자신의 과거사가 제도적으로 재평가되는 기회가 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중에는 보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 혹은 낙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과 가족의 해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적 참여에 의해 달성된 것이 명백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주장에 다수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보·배상이 구체화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감지된다. 여기에는 자신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가 여부, 피해를 당한 이후의 행적, 현재적 삶의 조건과 실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시선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청산의 선례가 되었던 5·18의 경우 1990년 노태우 정부의 제1차 보상이 실시된 이후 5월단체인 내부의 분열과 피해당사자 및 일반 시민, 광주와 타 지역간의 정서적 괴리와 이질감이 심화·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김재균, 2000: 173).⁷⁾ 이것은 5·18의 의의와 정신 계승을 둘러싼 진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고, 보상으로 5·18을 청산하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망각화 전략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후 5·18특별법 제정 투쟁을 통해 이러한 위화감을 다소 해소시켰다고는 하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의구심은 저변에 안착되어 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시기적으로 보면, IMF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차가워졌다. 게다가 종종 발생하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보상의 의미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배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배상을 수령한 이후, 오히려 주위로부터 위축되는 현실은 무엇인가 미흡한 구조와 상황에서 이 조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

7) 국가 보상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비단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과거 청산 과정에서도 기억투쟁 방식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것 가운데 국가 보상의 수용 여부가 문제가 있었다(박구병, 2005: 211).

제 관련자의 현재 삶과 생활 실태를 조사해보면, 다수에게 보상금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변주나, 2000; 박영주, 2004).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의 규명과 피해의 실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보·배상이 국가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저항적 기억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타협물 혹은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배상이 이루어진 시점이 장기화되어 피해가 만성화 혹은 누적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넷째, 피해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방법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사회적 지지망이 축소 혹은 해체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폭력에 대한 현재의 보·배상 연구는 정치·사회적 배경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쉽지 않다. 그 동안의 연구는 구체성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 타당성과 정의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보·배상 문제의 접근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청산에서 보·배상의 기준과 절차, 판정,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원인은 첫째, 보·배상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배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로만 공개되거나 인용되기 때문에 통계 결과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그 동안의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와 논의들은 일정하게 운동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보·배상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보·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과거청산운동이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폄하될 수 있었고, 피해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운동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보·배상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셋째, 보·배상을 지급받은 관련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배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5. 맺음말:

과거사에 대한 보·배상은 5·18과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사건과 특수

임무수행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폭력과 공권력의 부정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보나, 인간애 측면에서 보나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청산에서의 보·배상 여부는 이와 다른 지점들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즉, 보·배상 요구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논리에 의해 억압되고, 무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년을 되돌아 볼 때, 국가폭력에 대한 상처를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한 것은 관련자도, 시민도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신 군부와 이를 뒷받침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집행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보·배상 주장에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고, 기존의 과거청산 관련 보상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청산운동과 작업이 진실규명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확고한 지침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배상에 대한 쟁점들은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래서 5·18의 보상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의 치유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그다지 들려오지 않는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소모적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폭력에 대한 보·배상의 문제는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조금씩 진전되어왔고, 이것을 추동했던 것은 관련자와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갈구했던 시민의 힘이었다.

과거청산 보상법의 제정과 실행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쟁점들은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과거청산위원회들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청산의 보·배상은 이 세 가지 쟁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갈등을 생산하는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과거청산법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충실하게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인한 갈등과 고통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현재의 보상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과 과제들이 많다.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가 있고, 사회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파생적’ 피해가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경우, 일방적 피해자들에 대한 보·배상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로 남을 것이고,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많은 해직자들 그리고 해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문제도 계속되는 논란의 소지로 남을 것이다. 한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배상 조치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보상과 집단보상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집단보상의 모델적 선례가 없고, 효과를 극대화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여러 문서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은폐되었던 많은 사실들을 알려줄 것이고, 배·보상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련 자료들은 비공개로 문서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청산작업이 지닌 효과의 반감을 초래할 것이다. 신속한 보·배상 자료의 공개와 보고서 발간 및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때 다양한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02, 『5·18부상자회 20년사』.
- 김동춘, 2005,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8호), 한울.
- 김재균, 2000, 『5·18과 한국정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한울.
- 박구병, 2005,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와 ‘추악한 전쟁’의 청산」,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 박원순, 1995, 「배상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영주, 2004,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제4권 2호), 전남대5·18연구소.
- 변주나, 2000, 「15년 후 심신 충격」,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신일섭, 2005,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21세기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5·18 제25주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안종철, 2000, 「광주시 대책」,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 유광중, 1999,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 2005,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현황과 과거청산의 과제」, 『올바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정신계승사업의 역사적 과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학술토론회 자료집』,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외.
- 이은영, 2003, 「정부위원회 조직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근식·정호기, 2005, 「민주화운동에서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청산」, 『사회과학연구(제13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웅태, 2001, 「5·18관련자 재판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정호기, 2004, 「한국 과거청산의 성과와 전망: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제69호), 역사비평사.
- 정호기, 2005,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기억과 제도화: 5·18민중항쟁」, 『실천문학』(제79호), 실천문학사.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김 창 후(제주4·3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며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었지만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가 적시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며 법적·제도적으로 활발한 청산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해방, 곧 이어진 민족분단, 그리고 긴 군사독재시기를 거치며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이렇게 파행을 거듭한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축적·형성된 학살과 탄압, 인권유린의 실상들은 은폐되고 왜곡된 채 또 다른 희생과 억압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이런 우리들의 부정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유산을 청산해 더 이상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치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광주민중화운동보상법, 거창특별법, 제주4·3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사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등에관한진상규명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들이 제정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과거청산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체제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과거청산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청산은 한번에 완결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피해자집단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간이 흐르다 다시 이슈화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먼저 과거청산의 의미를 검토하고, 과거청산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원칙들 중 중요한 주아네 보고서의 인권옹호 기준과 광주 5원칙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 제주4·3특별법이 2000년 1월 공포된 후 지금까지 이 법에 따른 제주4·3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올바른 과거청산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볼 것이다.

2. 과거청산의 의미와 원칙

1) 과거청산의 의미

과거청산의 근본적 목적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사회·학술·법조단체에서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굴곡의 우리 과거사에 대해 줄기찬 청산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박원순, 조현연, 김동춘, 안병욱, 이재승 등) 과거청산을 “구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일정한 정리”에서부터, “일제시기 친일·부일행위에 대한 정리”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과거청산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안병직 외)에서 <역사와 기억-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사례별 연구>를 수행해 세계의 과거청산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 연구의 결과물로 『세계의 과거사 청산』(안병직 외 10인, 2005, 푸른역사)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청산의 의미를 비교적 쉽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그 의미를 ‘과거규명’과 ‘과거성찰’의 두 가지로 파악하고, “첫째 ‘과거규명’은 은폐·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규명은 사건의 진상과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의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명예회복 등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인 셈이다. 둘째 과거청산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성찰’로 이는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과거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순히 죄와 벌, 처벌 및 보상과 관련된 사법적 혹은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식과 역사인식, 가치와 윤리, 문학과 예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기념일, 기념물 등 공식·비공식적 기억과 기념문화의 문제이다. 아울러 과거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지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과거사에 직접 연루된 특정 당사자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한 사회 구성원 전부, 나아가 후속세대 전부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과거청산과 관련한 기존 논의

i) 주아네 보고서의 인권기준

우리가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데 적합한 과거청산의 기준을 말할 때 주아네의 보

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L. 주아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결의 제1995/35호에 따라 준비한 최종보고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과거청산의 원칙들을 제시했다(그 내용은 『민주법학』 제1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1996).

그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진실을 알 권리 ②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의 보장 ③ 진상조사기록의 보존과 공개 ④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 ⑤ 국제법원, 외국법원에 대한 관할권 보장 ⑥ 공소시효, 사면, 비호권 등의 배제와 제한 ⑦ 국가의 배상 의무(원상회복, 피해배상, 재할조치) ⑧ 국가의 상징적 조치(국가책임에 대한 공식인정,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복권의 공식선언, 기념 및 연례적인 추모, 역사교재 및 인권교재에 관련 사실 수록) ⑨ 재발 방지(관변폭력집단의 해체, 비상입법과 비상법원의 폐지) 등

ii) 광주민주화운동의 청산 5원칙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부터 시작하여 1997년 말 민주적 정권교체가 확정되기까지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역사적 운동을 보통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한다. 이 시기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에 대항해 시민들은 정치적 좌절을 딛고 광주학살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20년에 가까운 어둠의 시대에 광주민중항쟁 유족은 물론, 부상자, 구속자를 포함해 전국의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제시하며 일련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제기된 청산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3.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1) 제주4·3특별법의 실행과 4·3항쟁의 과거청산 현실

4·3특별법이 2000년 1월 공포된 후, 이 법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희생자 신고(최종 신고된 희생자수: 14,028명, 보고서의 추정 사망자수: 2만5천~3만명)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후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구성돼 자료조사 및 분석에 들어가 2003년 10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이 해 10월 31일, ‘저는 위원회의 건의

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하고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 희생자들을 신원(伸冤)했다. 우리 과거청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그러나 이렇듯 보고서의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가 겉으로 볼 때는 대한한국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청산의 역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하나 세운 듯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문제점은 4·3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잉태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원래 과거청산의 방향과 내용은 권위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될 때 그 이행과정의 성격에 좌우되며, 과거청산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국민적 합의 속에 국민적 청산의지가 수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민중봉기나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민주정부가 탄생해 ‘급격한 이행’을 시행할 경우, 인적청산과 피해배상, 국가적 기념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이 탄생해 적극적·원칙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렵사리 타협적 민주정부가 들어선 ‘완만한 이행’의 경우에는 청산대상자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적 조치와 법안이 만들어 지고 청산작업은 파행을 거듭한다. 우리는 현재 후자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체제이행을 통해 국가폭력은 저지했지만 국가로 하여금 과거의 국가폭력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애초부터 책임자 처벌과 배상에는 무시하고 소극적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위령사업을 행하고, 유족들에게는 신원과 약간의 생계비 지원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완만한 이행은 장기이행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이 이 말에 다름 아니다.

2) 성과

i)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① 이 보고서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우리 땅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Genocide)에 대한 우리 정부 최초의 공식적(official) 입장 표명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4·3항쟁 당시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집단학살됐음을 인정했다.

②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유족들이 끈질기게 벌인 진상규명운동이 비로소 열매를 맺어 진실투쟁을 위한 사회공동체 재결집의 초석이 되었다.

③ 제주사회를 반세기 동안 억누르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사라져 붕괴됐던 전통적 마을공동체 복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④ 향후 유사한 법안(과거사 정리법 등) 처리의 시금석이 되었다.

ii)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제주4·3유적 보존·복원/집단암매장지 발굴 사업

① 제주4·3평화공원 조성으로 4·3항쟁은 집단학살의 아픈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성스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② 제주도에는 4·3유적이 600여 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중요유적 일부를 보존·복원하는 사업은 4·3항쟁의 현장으로서 항쟁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제주4·3평화공원과 연계해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

③ 집단암매장지 발굴사업은 희생자의 신원을 위한 으뜸사업으로, 4·3항쟁 당시 집단학살의 실상을 널리 알려 인명의 소중함을 후세들에게 전파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체득케 한다.

④ 향후 유사한 사업(과거사 정리법 등에 따른 후속사업) 시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iii)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희생자 신원

① 대통령의 국가폭력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데올로기의 족쇄에 묶여 연좌제 등의 온갖 피해를 당했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첫걸음이었다.

② 대통령의 사과는 보고서의 7개 건의사항 즉,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지원·추모 기념일 제정·보고서를 평화 인권자료로 활용·생계가 어려운 유족 생계비 지원·집단암매장지 및 유적 발굴 지원·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의 지속 사업을 지속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③ 대통령의 사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민간인 학살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정부의 잘잘못을 가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세우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케 하는 초석이 되었다.

3) 과제

i) 4·3특별법의 개정

4·3특별법은 인권법을 표방하고 탄생했다. 그러나 완만한 이행기의 타협의 산물로 고고성을 올린 4·3특별법은 보고서가 발행되고 희생자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2005년 말 현재, 일각에서는 신원법(伸冤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4·3 관련단체와 유족들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해 작

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개정안)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 친족 범위 내에 있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④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개정안) “委員會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감정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방법 및 권한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⑥ 정부는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신설)

ㄱ. 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연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의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ㄷ.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ㅁ.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⑦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⑧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ii)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보완

① 역사청산 의식의 결여

보고서의 작성 작업은 4·3의 원인이나 배경, 경과 등을 나열하는 것만도 아니며, 미시적 역사관으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들춰내는 것만도 아니다. 이 작업은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개개의 진상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분명한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 과거청산의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청산 작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해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역사의 청산’ 문제는 ‘청산의 역사’를 동반한다고 하나, 진상은 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제주도 도처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잉진압을 해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몰타기식 서술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런 식의 서술법은 용어 선택의 문제에도 가해져 ‘초토화작전-->강경진압작전, 집단학살-->살상’으로 정부 입맛에 맞게 순화(?)되고 말았다.

② 바른 이름(正名) 찾기(4·3의 성격 규명)

보고서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4·3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건’의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일’을 말하는 일반적 개념이다. ‘4·3의 바른 이름을 찾기’는 사실 ‘4·3의 성격규명’에 다름 아니다. 보고서에서 4·3의 역사적 성격 규정이 유보된 것은 시대상황의 탓일 수도 있다. 향후에는, 특별법에 4·3의 발발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정했듯이 1947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4·3 정사(正史) 정립의 단초가 놓여져야 할 것이다.

③ 학살 책임자 규명

과거청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가해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수괴급으로 이승만(대통령), 조병옥(경찰 책임자), 함병선, 송요찬(현지 군책임자), 미국 등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집단학살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학살의 책임자 규명에는 소홀한 것이다.

④ 희생자의 선별

4·3특별법은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규정 자체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남았었는데, 보고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행방불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형인(불법재판 희생자, 형무소 재소 희생자)’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상 보수우익 세력들의 끝없는 방해로 당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군사재판으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희생자 인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우익들이 당시 좌익 사상을 가진 수괴급을 문제 삼자 헌법재판소도 우익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형식으로,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및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판결문에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희생자 선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학살은 좌익에 의한 것이든 우익에 의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집단살해방지조약에서 말하는 살해는 인간 일반에 대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 선별해 버린다면 그것은 국제인도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정권으로의 완만한 이행은 이렇게 곳곳에 문제점을 다시 심어놓아 결국 앞의 4·3특별법 개정 조항에서 보듯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해버렸다.

4. 맺음말

4·3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식 보고서를 채택케 하고, 정부를 대신한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냈다. 또한 4·3특별법은 제정 후 유사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4·3특별법의 태생적 한계인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의 부재는 제2, 제3의 과거청산을 불러올 소지를 애초에 안고 있었고, 그 결과 주아네 보고서가 급했듯 국가의 상징적 조치나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부재해 4·3특별법의 성과물 자체를 당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과거청산을 경험한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폭넓게 수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에게 맞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청산이 공적 차원의 ‘집단기억’을 만드는 행위이고, ‘기억 만들기’ 측면의 과거청산은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에 의해 과거를 해석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완만한 이행기의 우리가 갈 길은 자명하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특별법을 쟁취하던 초심으로 관련단체나 유족들은 돌아가야 한다. 4·3진상조사 보고서가 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불투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다는 총체적인 혹평도 있지만 곳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4·3특별법이 개정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싹도 틔워보지 못한 과거사정리법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개정안 자체도 주아네 보고서나 광주 청산 5원칙에 훨씬 못 미치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인권과 평화를 우리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힘들지만 소박하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가야 하는 길임을 명심할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1. 폭력의 역사는 청산될 수 있는가 - 과거청산의 사례와 4·3, 2001. 4. 3(김창록, 이한규, 양현아, 정근식의 수록 발표문)
2. 제주4·3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 - 『제주4·3사건 진상보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3. 9. 4(허상수, 이재승, 박태균, 임재홍의 수록 발표문)
3. 과거청산과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 2004. 12. 12 (박찬식, 장완익의 수록 발표문)
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05. 9
5. 『세계사의 과거사 청산』, 안병직 외 10인, 2005. 7, 푸른역사

한국현대사 · 민주주의 · 인권

안 종 철(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 : 정치학박사)

1. 해방과 국가건설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은 목메어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본 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한민족은 36년간 지속되었던 일본 식민통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의 순간, 한민족의 꿈은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식민지적 지배 구조와 봉건제적 유산을 타파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해방이 외세에 의해 주어졌듯, 해방 후 한민족의 운명은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민족의 열망과는 반대로 미국과 소련은 일방적으로 38선을 획정, 국토를 분단하였으며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하였다.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은 미소의 승인없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국제적 냉전이 심화됨에 따라, 미소의 합의에 의한 통일 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였고, 1948년 남북에는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가 설립되고 말았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건설을 위한 자주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 당국은 이러한 자주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 당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남한에 대해 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정 당국은 친일 관료와 경찰을 군정에 동용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군정 당국이 실시한 귀속재산 불하나 농지개혁 조차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고조시켰다. 군정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식민 잔재와 봉건 유제의 철폐, 철저한 개혁과 통일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유발하였다.

1946년의 9월 총파업, 10월 대구 사건, 48년의 제주 항쟁 등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군정의 실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 개혁과 통일 정부를 바라는 민중들의 요구가 투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기로 되어 있던 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주둔지인 여수에서 일으켰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 14연대에는

남노당 세력이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 제주 사건의 진압을 위해 차출 명령을 받자, 지창수 상사 등은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14연대 소속의 좌익계 장교와 사병들을 규합하여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봉기에 저항하는 우익계 장교와 사병들을 살해하면서 20일 새벽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여수의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들의 동조를 얻어 순식간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순천과 그 인접지역을 공략하였다. 여수 인민위원회는 20일 오후 여수 시가에서 3만여 명이 모인 인민대회를 개최하여, 정권 장악을 선언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었다. 이 사건은 삼시간에 인근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여기에 민간인까지 합세하여 경찰서, 행정기관,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인민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익세력들이 공격을 받았고, 공공 기관이 파괴되었다. 여수와 순천, 그리고 인근 지방이 봉기군의 지배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월 24일부터 국군과 경찰의 반격이 개시되고 10월 25일에는 미군의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다. 결국 진압군이 10월 25일에 순천을, 10월 27일에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반란은 종식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수천명을 넘었다.

여순사건이 사전에 남로당의 지시를 받고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14연대내에 좌익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간에 조직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들의 단독정부수립에 대항하는 일련의 반발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당시 여순사건이 다른 지역의 투쟁과 결합되지 못하고 한 지역만의 고립된 반향으로 머물렀다는 점에서도 남로당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한 것 같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로당은 전면적인 무장 투쟁으로 그 투쟁 노선을 전환하였으나, 남로당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군 내부의 조직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여순사건이 군 반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1948년 12월 30일에 전략적 도시인 대구 주둔 제6연대에서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으나 재빨리 진압되었다. 이로부터 몇 달 뒤, 38선에 가까운 홍천과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2개 대대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군내의 ‘좌익’ 세력을 숙청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숙청 작업으로 1948년-49년 사이 약 5천명의 장교와 민간인들이 해고, 투옥, 혹은 처형당했다. 혐의자들은 무자비하게 심문을 당했으며 고문도 비일비재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기소되었고 그들 중 다수가 처형당했다.

국가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 고문되는 등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는 유린되고 있었다.

소련군도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 직접 통치의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가 좌파에 의해 주도됨을 인식한 소련군은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함으로써, 간접통치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46년초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친일파를 처벌하는 등 식민잔재의 청산을 추진하였다.

유엔 한국 위원단의 입북이 거부되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공식 선포되었다.

북한에서도 19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한국전쟁과 이승만 정권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38선 이북에서는 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거쳐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서 좌우의 분열과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이라는 조건 속에서 외세에 편승한 정치세력에 의해 한반도는 분단국가라는 비극적 출발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비호와 친일세력, 그리고 이승만이 중심이 된 반공세력에 의해 수립된 새정부는 해방으로 부여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분단이 빚어낸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합하여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국제적 냉전을 심화시키고, 분단체제를 봉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전쟁은 남북한만의 갈등이 아니라 미소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됨으로서 동서 냉전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남한내의 정치, 사회, 경제상의 혼란과 남북한의 냉전에 입각한 통일 논리로 인해 일어난 한국전쟁은 남북한에 수백만의 사상자를 만들어 냈으며 남북한에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남겨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체제간의 국제적인 냉전질서의 구축과 전쟁경기를 이용한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군비의 강화, 이승만의 극단적인 반공 논리에 의한 독재권력의 강화와 분단상황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과 원조경제에 의존한 채 정적에 대한 테러적 탄압

과 민주적 대중운동이나 그 지도자들을 빨갱이로 몰면서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로 나아갔다. 이 시기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국가사회 상태가 지속되었고 정치 사상적 자유라는 주장은 교과서애나 나오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부패선거로 얼룩져 급기야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의해 이승만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들의 앞에선 것이 학생들이었고 이들은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3. 4.19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은 4.19 학생혁명의 의미를 축소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4.19가 단순히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학생들의 의거라는 정도로 규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에는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정신을 갖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에 봉기할 수 있었고, 4.19혁명에서 학생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민중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시대적 과제에 민감한 학생층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4월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침체에 빠졌던 변혁운동이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4월혁명 직후 급격히 성장한 각계각층의 민중운동은 이후 자주적 대중조직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학생층과 혁신세력이 추진한 민족통일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 시기가 제도적 민주주의와 개개인의 인권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4. 5.16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후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정 이양 후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군정 기간 내내 권력 기반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군정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각종 비밀 공작을 추진하였으며, 공화당을 조직하여 장래에 실시할 선거에 대비하였다. 아울러, 군부정권은 ‘4대 의혹 사건’을 통해 정치자금까지도 확보하였다.

군정을 마감하고, 제3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것이 1963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였다. 군부세력은 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은 최소한 정권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군부 정권은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을 통해 미일과 경제적 군사적 동맹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군부 정권은 부족한 정치적 정통성을 대일 청구권자금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

초기 군부 정권은 반공, 친미, 친일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 정책을 어느 정도 성공시킴으로써 안정된 정권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1967년에 실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정권의 불안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6.3 항쟁’이라는 대규모 저항에 부딪쳤으며, 월남 파병을 둘러싸고도 국론이 분열하였다. 박정희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가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항명사건이다. 3선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고, 박정희에 대한 반대세력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잘 나타난 것이 1971년의 대통령 선거였는데, 박정희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겨우 94만표 차로 신승하였다.

경제 개발의 추진도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다. 경제 개발 정책은 저임금에 의존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대외 의존이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는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저임금과 196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조리를 극적으로 드러내 준 사건이 ‘전태일의 분신’이었다.

5.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

유신체제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1972년 말의 유신헌법의 제안 및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성립되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사건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제도 변형 및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하여 50-60년대를 지배하였던 미국의 냉전 논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권에도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해빙 무드로 인하여 박정권은 반공을 구실로 민주세력을 탄압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정권은 한편으로는 국가위기를 내세우며 영구집권

을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1972년 남북한의 합의하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의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8월부터는 남북한을 오가며 적십자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10월 17일 마침내 남북대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본격적인 유신체제로 돌입했다. 박정권은 유신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기만적인 경제성장과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즉각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이에 당황한 군사정권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표한데 이어 잇따라 3호와 4호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유신운동이 더욱 거세어지자 1975년 5월에는 지금까지 유신체제를 지탱해오던 긴급조치를 총집대성한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이은 긴급조치의 발표는 오히려 민주회복국민회의라는 재야단체의 발족, 3.1 민주구국선언의 발표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의 결집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신체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1인 중심의 독재 지배체제였기 때문에 극도로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지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련의 국가제도의 변형이 선행되었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마저 지니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대미 의존적 종속적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모순의 발현을 억제하며 독점자본 편향성을 강하게 지닌 체제였다. 이러한 민중의 기대와 이해를 거부하면서 지탱된 유신체제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전체제의 약화 및 남북대화를 역이용하였고 빈번히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은 70년대 후반부터 민중들의 결집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1977년 청계 피복노조의 싸움은 긴급조치 9호 이후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가 벌인 가장 처절한 투쟁이었다. 70년대 노동운동 발전에 기폭제가 된 전태일을 배출시킨 청계피복노조는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마침내 노동조합과 노동교실을 지켜냈다. 또한 무려 2년여에 걸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사수투쟁과 함평고구마 사건으로 불리는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마침내 민중들의 힘찬 투쟁은 유신체제의 붕괴에 일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1979년 8월 9일 YH 무역 여성 노동자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이 시작되었고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부마 민중항쟁이 10월에 일어남으로서 결국 20년간에 걸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자멸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북한사회의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였고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사회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또한 주체사상을 북한주

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후계자문제를 등장시켰다.

6. 광주민중항쟁과 전두환정권

제5공화국의 시기는 10.26 사건이후의 상황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상황을 포함한다. 제5공화국의 출범은 12.12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 졌다. 이러한 출범은 단순히 10.26이후 벌어진 ‘서울의 봄’만을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부정이었다. 그후 그들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던 체제정비 작업을 바탕으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광주민중항쟁의 좌절과 독재권력의 탄압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곧바로 독재권력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 정면도전을 하는 ‘반미운동’이라는 외침과 재야세력의 조직화로 나타났다. 이런 노력은 1985년 2.12총선에서 관제 야당인 민한당을 하루아침에 지리멸렬케 한 신민당 돌풍으로 변하였다. 신민당은 민주화일정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등 서서히 권력교체를 위한 움직임을 제도정치권내에서 벌였다.

제5공화국 후반기의 상황은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공방과 억압이라는 개헌론쟁의 국면이었다. 집권세력의 4.13호헌조치, 박종철 고문치사와 그 조작사건은 각계각층의 호헌반대성명과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라는 범국민적인 대규모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6월 민주화대항쟁의 불꽃이 터졌다. 범국민적인 대규모 투쟁은 결국 6.29선언이라는 권력의 굴복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제5공화국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7. 유사군부정권과 민간정부의 등장

제한적이지만 6공화국에서의 민주화과정은 지속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내 계급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제껏 민주와 반민주사이의 형식적 대립이 아닌 민주주의의 틀속에서 현실적 내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그 대립의 축을 전환시켰다. 이처럼 민주실천이 시대적 사명으로 부각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연한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김영삼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87년 12.16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인한 노태우의 당선으로 제6공화국은 출범되었다. 뜨거운 6월의 민주함성은 몇달만에 민주정부 수립의 좌절로 귀결되기에 이르렀

다. 한편 출범 직후 실시된 1988년 4.26총선의 결과 여소야대의 정치구조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5공화국의 비리문제와 광주문제의 청산을 둘러싼 이른바 ‘청문회정국’으로 이어졌다.

제6공화국의 지배세력은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여소야대의 조건을 타결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3당합당을 시도하였다. 3당합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순식간에 여대야소 국회로 만들면서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여 통합 야당인 민주당이 1991년 9월 결성되고, 6공의 권력과 현대그룹간의 다툼속에서 재벌정당인 통일국민당이 1992년 출범하였다. 그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4대 총선이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는데 국민당의 급부상과 민주당의 좌초로 나타났다. 그리고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군부정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군부정치의 종료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의 험로가 시작되었으며 이의 바탕에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인권 역시 정치와 사회의 국민적 화두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다.

군사독재 시절 한국은 유엔의 인권위원회로부터 "중대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나라로 판정되면서 국제기구가 정식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바 있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지적과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민주화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1990년부터 인권·시민운동단체들이 국제인권제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3년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하는 유엔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간에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측과 시민사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초기 입법과정에 진통을 겪었다.

2001년 5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어 11월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단체는 물론 개인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보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지역주체의 역할

麗順事件 58주기 심포지엄

2006. 10. 18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향과 원칙 / 박종길

진실규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박만순

함평군의 진실규명을 위한 추진 사례 / 김규준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방향과 원칙

박 종 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연구위원장)

1. 머리말

재갈을 물리듯 50여년을 침묵으로 보내다 입을 열기 시작한지가 10여년 올해로 58주기를 맞는 여순사건은 그 어느 해보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12월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과거청산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조직구성과 준비를 마치고 2006년 5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조사개시를 하고 있다.

발족 후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어 왔었다. 전문연구자와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 희생유족대표, 시민사회단체관련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왔었고 이러한 의견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앞으로 활동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순사건 58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여순사건 58주기 행사위원회’는 그 동안의 문제점이 보완된 진실화해위원회의 계획들을 경청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토론할 계획이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제까지 지역의 과거사인 여순사건 진상규명활동을 벌여온 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전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면 한다.

약 1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여순사건의 경우, 일제 강점기를 청산하고 해방이라는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청산된 줄 알았던 일제의 주구들이 재 등용되고 일제강점이 그대로 상속된, 해방된 나라의 모순을 이야기 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체제구축의 희생양이 되어 빨갱이로 죽어가야만 했었다. 동족을 죽일 수 없다는 제주출병을 거부하던 14연대 사병들의 봉기로 시작된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밤에 시작되어 일주일 만인 10월 27일 완전 진압되고 시가지도 수복되었지만 민간인 희생은 이때부터 시작되어 희생자의 대부분은 부역자 색출

이란 이유로 군과 경찰로부터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부모와 남편과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은 빨갱이란 명예를 쓰고 지난 58년이란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고 이 후에도 사회의 냉대와 연좌제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민간인학살의 가해자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기득권층으로 자리하면서 지배계층인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으며,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기층 민중으로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인학살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족화해와 상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도덕성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00여년간 우리의 역사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분단, 독재라는 뼈아픈 상처로 점철되어 왔다. 하지만 더욱 더 우리를 비통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며, 몇 번의 시도조차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지난날의 과오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더 큰 과오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은 국가가 소위 아군에 의해 자국민을 살해한 과거의 반인권적인 사실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인권이 보장되며 참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가해자-피해자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사의 주체로 서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2.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여순사건이 일어난 후 소위 ‘여순반란’으로 통칭되던 대화는 지역민 모두에게 일종의 금기였다. 1967년 일본의 히구치 유우이치(樋口雄一)가 ‘여수·순천에 있어서의 근대 봉기와 민중’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고 국내에서는 1987년 황남준에 의해서 첫 연구 논문이 나온 정도였다.

70년대 말, 지역 향토사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여순사건의 재조명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돌기 시작했지만, 당시의 정세는 박정희 이후로도 여전히 군부 독재가 전 사회를 압살하던 시절이라 감히 앞장서서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기에 누구도 나서지는 못하였다. 80년대 말 향토사가 김계유씨를 중심으로 ‘여수·순천 반란사건’이라는 명칭을

문제 삼으면서 군인들의 반란을 지역민의 반란으로 오해하기 쉬우니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한 명칭을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호응을 얻었다. 이때까지도 전면적인 재조명을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부담을 많이 느껴야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4.3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작은 소모임 등에서는 사건의 재조명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순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고통을 감내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미망인을 비롯한 가족과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유명을 달리 하며 세상을 떠나고 있었지만,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은 없었고 가슴에 남은 한으로 묻혀져 갔다.

49년 여순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대전형무소에 갇혔던 남동생의 편지를 평생 속곳 주머니에 감추었다가 결국은 증거로 남기지 않고 관속에 넣어달라고 했던 여수 율촌의 서종X의 누님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기 어려웠던 80년대까지의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말해준다.

80년대 말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이란 소설을 시작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발간되면서 여순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가 되면서 여순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여수의 경우 여수문화원이나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재조명 여론이 제시되었고, 순천의 경우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나서서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잇따라 여순사건 관련 논문들을 한편씩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건 전체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전면적인 구상과 실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즈음인 1995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설립되어 필자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1996년 조사했던 여수시 화양면의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의 조사사례를 표본으로 조사방법을 보완한 후, 1997년에는 여수시 전 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여순사건 실태조사팀이 만들어졌고, 전남의 동부지역 일대에서 벌어졌던 여순사건과 관련된 지역조사를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실시하여 14연대 군인들의 봉기, 부역자 색출, 빨치산 토벌, 한국 전쟁 시, 보도연맹 학살, 전쟁 후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일어났던 좌우익을 망라한 희생자 조사와 증언을 청취하고 조사하여 자료집을 3권까지 발간하였고 구례와 광양지역의 조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1998년 여순사건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수지역에서 역사적인 위령제와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2006년 지금까지 전남동부지역으로 확대하여 이어져 오고 있으며, 초법적인 상황에서 암매장을 하였던 증거로 여수시 호명동과 여수시 봉계동의 산골짜기에서

암매장 유골을 처음으로 발굴하여 소문으로만 떠돌던 암매장의 증거를 국민들에게 공개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정치 사회적분위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는 점차 변화된 민주화의 정세를 예고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유족들도 조금씩 입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과 구례, 광양, 보성, 고흥 유족회가 만들어 지고 전국적인 연대활동에 참여하면서 과거사법 제정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순천지역의 경우는 그동안 여수지역 중심으로만 전개되어 오던 진상규명운동이 ‘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순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조직적으로 수년째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유족회와의 연대로 이어지면서 시민의 힘으로 위령탑을 세우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1998년 5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여순사건 추모위령행사는 전남동부지역 곳곳을 이 어가며 여수, 순천, 구례, 광양에 이어 금년 58주년 행사는 10월 19일 고흥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전개로 지역민들에게 는 여순사건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 등의 다양한 문제점과 진실규명의 당위성들이 알려지고 사건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도 지역의 뼈아픈 과거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정리된 자료와 교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여순사건에 대한 공동수업과 역사답사는 더욱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끝으로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집단학살을 주제로 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과 같은 국제심포지엄 행사와 더불어 매년 국내 연구자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선 그동안 연구자만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다양한 연구결과가 시민사회의 활동가와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시각과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법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져 과거사법 태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의 비판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직의 왜소성, 특히 민간인 학살 조사부분의 왜소성에 비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초조사를 외부용역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가해세력과 기득권층의 수많은 방해로 인해 비록 ‘누더기’ 또는 ‘면죄부 법안’ 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많은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족사의 새로운 시작점에 있다는 점이며 국민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여순사건 진실규명의 방향과 원칙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단일 사건과 비교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여순사건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을 갖게 한다. 발발시점은 1948년 10월 19일 21:00시로 알려지지만 여순사건의 종료시점은 진압이 완료되고 시가지의 치안을 확보하는 1948년 10월 27일로 보는 견해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까지 보는 견해, 빨치산 토벌이 완료되는 1954년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며 희생자의 분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수에서의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경우만 해도 희생자 대부분이 여순사건 관련자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보련에 가입을 하였고 실제 한국전쟁과 관련되거나 또 다른 이유를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리산과 백운산 등 전남의 동부지역에서 일어났던 빨치산 토벌과 관련된 희생사건을 한국전쟁으로 분류할지 여순사건의 연장선으로 분류할지도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를 감안하자면 문제해결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먼저 과거청산은 진실규명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상규명 없이는 피해자의 명예회복도, 가해자의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배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는 진실규명의 시기적 대상은 규정했지만, 진실규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진실규명이란 개별적 사건의 확인, 즉 가해자 및 피해자 확인,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개별적 진상규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진상규명 활동은 개별적 사건의 진상규명의 총합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실규명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즉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배경, 학살의 명령계통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바탕으로 ‘총체적 진상규명’을 전제할 때만이 온전한 사실의 재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총체적 진상규명을 전제하지 않은 개별 진상규명은 신원(伸冤)을 위한 증빙자료의 수집과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실규명의 방향

여순사건의 58년만의 역사적인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첫째, 여순사건 피해실태의 전체적인 규모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지역의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우선하여 인권적인 차원에서 희생자의 조사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행위와 가혹소각과 같은 재산손실 규모, 고문과 구타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정신이상자 등 사건관련 피해의 규모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현대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었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제주 4.3과 대구 10월 사건을 연계하는 공동사업 구상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재승님의 <과거청산과 인권>에 소개한 남미 과테말라의 경우, ‘역사적진실위원회’는 군인에 대해 국제인도법을 교육시키고, 엄격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만 복종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군인은 단지 군복무중인 시민일 뿐이라는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제시하였고, 여순사건 전문 연구자인 김득중 님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며,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셋째, 집단 학살지에 대한 발굴과 보존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해당지역인 전남의 동부지역에는 역사적 사건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이 될 의미 있는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가 여러 곳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사진작가 이경모의 ‘격동기의 현장’에 소개된 광양의 덕례리 사건 현장은 사진에서 보이던 장소와 일치하던 구도로의 모양이 최근까지 유지되다가 지금은 공장부지가 되어 시민사회와 유족 관계자 모두가 아쉬움을 버릴 수 없었다. 유적지 보전이나 발굴보존 방안은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지정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추모위령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이루어 져야한다. 이를 위한 계획들역시 조사완료시점이 아닌 조사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종합사업과 지역사업 배치 및 사료관과 기념관 설립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유족이나 지역관계자의 입장으로만 이해되어 특혜성 지역 위로사업 성격이 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며 역사적 교훈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한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신청인 개개인과 함께 사건전체에 대한 진실규명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의 경우 다양한 사건유형에서 보듯이 개개인의 사례보다는 사건 전체의 진

상을 규명하고 보았을 때 개개인에게 지워진 짐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당시 초법적인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형을 받고 처형되었던 희생자들이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이었는지를 들여 보아야 할 것이다. ‘손가락 총’으로 지목만 하면 본인도 모르는 죄가 뒤집어 씌워지고 재판도 없이 학교 교정에서 일본도로 목이 잘리는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여순사건은 민간인 학살 피해유형의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인권유린의 백화점과도 같은 사건이다.

14연대 봉기군의 반란이 있으며, 좌익청년들의 우익인사 테러, 우익인사의 좌익테러, 빨치산, 산간지역의 소개명령 시 희생자, 보도연맹관련 희생자, 한국전쟁 시 좌·우익에 의한 보복과 희생, 마을·종교 간의 갈등이 원인된 희생,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등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 진실규명의 원칙

우선 조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의 조사는 외부조사자에게 맡기게 될 거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같은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시간만도 많이 필요한데,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면 조사 자체가 줄속으로 또는 미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될 자료와 증인의 증언은 직접 조사와 질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가벼운 자료조사만 맡긴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자료조사는 종합적인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만 보아도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증언은 피해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피해 당사자가 거의 사망한 현 시점에서 사건 당시 실상을 거의 알지 못하는 유족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증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60여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명령체제로 이루어진 조직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불가피성과, 양심선언 등을 통한 진실에의 접근방법 등은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양심선언을 할 가해자를 국가적으로 찾는다는 대

국민 홍보방법은 어떨까?

셋째, 자료조사의 집대성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자료조사의 경우 신문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비롯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국방부, 국회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문서고 등에 있는 자료가 조사되어야 하고 이를 분석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자료조사보고서를 이용한 현지 확인조사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연구자와 제주4.3과 같은 경험자의 조언도 필요하다. 제주 4.3의 경우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과 관련된 명단이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유족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희생자가 일부 파악되는 성과가 있었던 바, 당시 이 명단에는 여순사건 희생자가 1,200~1,300 여명이 함께 수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단의 확보는 당장의 조사에도 활용될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넷째, 여순사건과 관계있는 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와 관련된 군경토벌, 미군의 직간접 개입여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여순사건은 사건 발발부터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빨치산 토벌이 종료되는 시점인 1954년 까지도 14연대 군인 봉기에 참여한 군인이나 민간인이 토벌과정 및 부역혐의자란 이유로 희생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의 보도연맹원 대부분도 여순사건 당시 관련자가 보련에 가입하였다. 한국전쟁 시 전국의 형무소에서 재소자로 수감되었다가 희생된 사람 가운데에도 여순사건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순사건과 관계있는 이들 모두는 여순사건으로 분류되어 종합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수년간 민간인학살문제에 집중해왔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수를 최소 2천 건으로 보아,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외조사인력을 포함하여 약 280여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학살규명범국민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중부, 영남, 호남지역을 조사하는 3개 과와 함께 총괄조사과와 특별조사과를 둬으로써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의 전국적 범위를 갖는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4년 동안 평균 40여명 내외의 인력이 진상 조사를 수행했다. 제주4·3이라는 단일 사건 조사 인력이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민간인 학살 조사규모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자,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되면 민간

인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리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민간인학살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옳다. 현재 인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진상규명 활동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총 정원은 187명이다. 이중 민간인학살 부문에 40여명의 조사관이 맡은 사건 수는 총 신청건수의 85%인 4,10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독립조사국과 인권침해조사국의 사건 수는 각각 100여건과 300여건으로 알고 있다. 또한 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 후 90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정된 인원으로 폭주하는 조사신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는지 걱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설치한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와의 관계도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만 해놓아 과거청산의 여러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 위원회의 시행령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행령은 충분한 진상조사를 가능케 하고 짜임새 있는 조직 구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된 후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왜소하게 구성된 데에는 보수 정치인과 보수진영의 방해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의 무관심도 일조하였다고 보아진다. 이제라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제대로 된 법과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촉구할 일이다. 진실을 위한 진상규명활동은 이제 시작이며 그 일은 결코 진실화해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반세기만에 찾아온 민족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¹⁾

박 만 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충북대책위 운영위원장)

1. 지역에서의 진실규명 운동의 현주소

1) 과거사법에 대한 유족 및 마을 주민들의 이해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충북대책위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과거사법에 대한 홍보와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9월 말 현재까지 매일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을을 찾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당연히 노인정이다. “할아버지,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된 사실 알고 계세요”, “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접수를 받은 지 1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조차 과거사법에 대한 유족들의 이해도는 저조하다 못해 답답하기 까지 하다. 상반기에 다녔을 때에는 만난 유족들의 과반이 법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 8월 ~ 9월에는 상반기에 비해 언론과 유족들간의 구전홍보로 인해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유족들이 법제정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그 마을에 희생자 수가 많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경우가 아니고는 대다수가 과거사법 제정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유족들과 주민들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혼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 공고, 관공서에 플래카드 게시나 전광판 설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소식지, 반상회보등에 과거사법의 내용을 수차례 게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지자체의 홍보와 유족과 시민들의 이해의 간극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유족들의 피해의식은 차치하고라도 법제정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나 지방정부의 홍보방식이 유족과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첫째의 문제점은 상기의 방식 속에 나타나는 내용상의 문제점이다. 과거사법 신청대상의 80%를 상회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어렵다. 피해자와 유족 · 주민들의 의식에 뚜렷히 남는 단어들은 ‘보도연맹’, ‘부역자’, ‘미군폭

1) 본 글은 필자가 2002년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하는 역할을 두서없이 정리한 글이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주로 충북지역에 한정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격'등의 단어인데 신청방법과 절차라는 홍보물이나 문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진실규명 신청대상(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하반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상당히 극복되었다.

둘째의 문제점은 상기의 홍보 방식에 국한됨으로 인해 유족과 주민들의 법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이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의 큰 효과는 읍·면 단위별 이장단 회의를 통한 공지와 이에 대해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마을에서 이장들의 구술 홍보등이 가장 큰 것인데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지역사회의 여론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여야 한다.

과거사법 제정과 신청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유족과 주민들 또한 진실규명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많은 유족과 주민들은 신청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면 신청서 작성에 함께 하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건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것은 피해의식이다. 관련 희생자를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유족들을 '빨갱이 가족'으로 비난한 역사적 과정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족들과 마을 주민들의 뇌리에 아직도 깊게 낙인 찍혀 있다. "또 도장 잘못 찍어서 피해보면 어떡할라구"하며 할아버지를 만류하는 할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규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과거사법 제정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유족회 결성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흐름 또한 존재한다. 충북지역의 경우 2006년에 오창유족회가 결성되고 현재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 유족회(준)가 정식 결성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존재했던 단양 노동리·마조리 유족회 또한 재점화의 불길을 당기려 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법의 제정에 따른 유족들의 진실규명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우호적인 반응, 지역단체와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 지자체의 인식

올해 충북대책위가 밝혀낸(2006년 8월 9일 충북대책위 주최의 단양 노동리·마조리 학살사건 유족 증언대회. 장소: 단양군청) 단양 노동리·마조리 학살사건의 정황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노동리·마조리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근택)은 1999년도에 결성되어 국방부, 국무조정실, 각 정당, 충청북도에 수차례 진정서와 호소문을 보냈으나 그 답변은

“노근리 사건 종결 이후 노근리 사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똑같은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작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을 때 위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충청북도와 단양군의 현재 담당자는 8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충북도내의 지자체 대다수가 과거사법의 정확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 단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거사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방적인 신청서 접수, 그리고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써의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하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히 이야기하는 말이 “인력과 예산이 없다”,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과거사법과 그 시행령은 지자체가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과 그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는 진실규명운동의 총체적 전망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보다는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와 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단순히 전달하는 스스로를 문서수발자의 역할로 국한하는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가 취해야 할 행정자세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역사적 과제인 한국현대사의 진실규명이라는 대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이전’이라는 과제에도 지자체가 법적 권한과 인력과 예산의 부재만을 탓하고 있었을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이나 ‘부역(협의)자 학살사건’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거나 접수시에 “본 사람이 있느냐”, “증거나 관련문서가 있느냐”식의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족들의 가슴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진실규명운동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유족회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진실규명운동을 요구하면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이해 (충북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북은 2002년부터 시작해온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충북대책위)이 2002~2003년도에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2004~2005년도에 침체기를 거쳐 2006년부터 재도약을 하게 된다. 타 지역의 경우 과거사법 제정 이전까지는 학살지별·사건별·지역별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다 관련법 제정 이후로 그 활동이 소강상태이

다.

충북대책위는 2006년도에 들어서 전임활동가 2명과 1명의 비전임 영상활동가의 (2006년 10월 현재 3명의 전임활동가) 활발한 활동을 중심으로 유족회와의 긴밀한 연대·운영위원회의 정례화·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으로 진실규명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담론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참여 단체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비참여 단체의 경우는 이해정도가 더욱 낮은 형편이다.

언론은 과거사법에 대해 뉴스, 다큐멘터리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사법의 내용과 유족회 활동, 민간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민간인 학살의 실태와 바람직한 진실규명운동의 방향등에 대해 기획 시리즈물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이상으로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서 지자체(지역사회)가 과거사법 제정 이후 진실규명운동에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서의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접수상황을 통해 본 지자체의 역할

1) 충북지역 피해 현황(충북대책위 통계 자료)

* 사건유형별 중복되는 인원은 삭제함

사건유형	인 원
국민보도연맹원	최소 5,044명 이상
부역혐의자	최소 33명 이상
교도소 재소자	최소 400명 이상
6.25 발발 이전	최소 30명 이상
미군에 의한 학살	최소 1,117명 이상
총 계	최소 6,624명 이상

2) 9월 25일 현재 전국 접수 현황

▲위원회접수 1,487건 ▲서울 110건 ▲부산 104건 ▲대구 62건 ▲인천 46건 ▲광주 70건 ▲대전 45건 ▲울산 38건 ▲경기 168건 ▲**충북 531건** ▲충남 62건 ▲전북 113건 ▲**전남 1,275건** ▲경북 186건 ▲경남 396건 ▲제주 235건

3) 10월 9일 현재 충북 접수 현황 : 총 574건

구 분	사 건 유 형 별									
	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직	기
계	574	2	0	537	3	23	1	0	0	8
도 청	285	1		282						2
청 주	36	1		22	2	9				2
충 주	4			2		1	1			
제 천	1					1				
청 원	79			71		7				1
보 은	9			8						1
옥 천	28			28						
영 동	25			23		1				1
증 평	1				1					
진 천	7			3		3				1
괴 산	1			1						
음 성	11			11						
단 양	87			86		1				

※ 유형별 분류

가 : 항일독립운동

나 : 해외동포사

다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라 :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등 인권침해사건

마 :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사건

바 : 법원의 확정판결사건

사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접수사건중 진정인의 재조사 요구 사건

직 : 역사적으로 중요사건중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기 : 다른기관 소관이거나 비해당 사건

4) 충북지역 접수현황 분석

청주, 청원, 괴산, 진천의 대부분의 사건을 충청북도에 접수하였다. 단양 곡계굴은 42명의 연서명을 받아 1건으로 접수되었고, 괴산 사리면은 82명의 연서명을 받아 1건의

로 접수되어 신청인은 총 696명이다.

접수 건수 중 ‘한국전쟁 전후의 집단 희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접수 건수의 93.5%이다.

현재 충북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규모(2006년 10월 9일 현재 6624명 중 노근리 300명을 제외하면 6324명)를 기준으로 했을때 11% 수준이다.

사건유형별 접수현황은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이다. 교도소재소자 사건과 부역혐의 학살사건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는 교도소재소자 사건과 부역혐의 학살사건의 유족들의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은 단양지역이 절대 다수이며 영동(노근리 제외)의 일부 지역에서 접수되었다. 보도연맹원 사건은 전 시·군에 걸쳐 접수되었다.

접수 현황을 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불균형이 매우 큰데 이는 지역별 학살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족회 존재여부와 충북대책위의 활동여부(제천·충주·증평은 충북대책위가 실태조사나 신청서 지원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이다)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민간인학살 사건 537건중 충북대책위와 유족회가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은 건수는 5% 미만이다.

이는 과거사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및 접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자체와 유족회·민간단체가 제대로 결합하면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음을 역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상기의 분석은 비단 충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자체 단체장 면담 내용과 후속 조치

충북대책위는 2006년 3월 3일 충청북도 부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영동부군수, 옥천군수, 음성부군수, 청원군수, 단양군수, 괴산군수를 면담하였다.

대책위와 유족의 요구는

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도·군정 소식지에 게재, 시장·군수회의시나 읍·면장 회의를 통해 과거사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을 이장단 회의까지 과거사법의 내용과 신청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일부 군에는 더욱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제안하였다.

② 읍·면사무소로의 출장접수를 요구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은 시·군

단위라기보다는 읍·면 단위이다. 그렇기에 접수 역시 사전 홍보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출장접수를 받거나 읍·면 단위에 접수창구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미신고된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사건 파악과 진실규명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④ 지자체 차원의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재정지원 포함)을 요청하였다.

⑤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단양군수에게 요청한 「한국전쟁전후 단양지역 민간인피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례」이다.

*** 이상의 ①, ②, ③항은 모든 지자체에 요구 하였다. ④항은 청원군수, 단양군수, 괴산군수에게 요구하였다. ⑤항은 단양군수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 일부 단체장은 법적 권한의 부재와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난색을 표명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접수건수가 저조한데 유독 우리에게만 뭐라고 하느냐”는 발언에 이어 타 시·군의 접수현황을 파악해 역으로 항의하는 상황까지 전개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단체장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요구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약속하였다. 그 예로는 ‘선전물’을 전 가구에 맞게 제작하여 발송하겠다 라는 것과 군담당자의 책임하에 읍·면단위의 경로당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과거사법을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겠다,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 조례제정, 위령제 재정지원(군 예산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위령비 건립을 2006년 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후속조치로는 전반적으로 충북도내의 과거사법에 대한 홍보(구체적인 내용은 생략)가 더욱 활기를 띠었다는 점이다. 물론 출장접수나 경로당의 홍보와 미신고된 사건의 실태파악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전된 몇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는

① 청원군 현도면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 차기 이장단 회의까지 보고하라고 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태파악을 한 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 사업으로 면 차원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옥천군에서는 이장 단위까지 공문을 보내 민간인학살 사건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③ 영동군에서는 17,000매의 선전물을 제작해 전 가구에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우편물을 통한 발송이 아니라 이장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 적지 않은 선전물이 이장집에 묵혀 있는 상황이다.

④ 청원군의 경우 북이면은 유족들의 건의에 따라 북이면장이 충북대책위에 요청하여 이장 및 유족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충북대책위와 유족회의 요구로 북이면, 가덕면, 문의면, 남일면 총 4개면에서 이장 연인원 150명이 참여한 자리에 충북대책위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⑤ 충북대책위원회가 읍·면사무소에서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지원시 사전홍보 및 당일 진행에 관련해 약간의 협조를 하였다.

참고로 충북대책위원회는 10월 9일 현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20회

▲시·군청 방문 접수 4회

▲도청 방문 접수 : 1회

▲마을 경로당 방문 접수 : 다수

▲유족 자택 방문 접수 : 다수 등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 드렸다.

⑥ 충청북도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과거사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하였다는 점이다.

3.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써의 지자체

1) 집단학살의 책임으로부터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집단학살의 가해자와 가해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사건유형별에 따른 가해자(집단)가 다를 수 있고, 직무 수행시 직책과 권한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은 학살의 집행이 지역별로 진행되었고, 학살 집행자들의 소속이 군인이나 경찰, 좌·우익단체, 기타를 막론하고 지역적 연고와 지역권력과의 상호관계로 인해 그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대의 민간인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그 집행자라 할 수 있는 국군의 경우 그 소속이 지역권력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학살을 전후한 보도연맹원 모집 → 관리 → 소집 → 구금 → 학살 → 사후 조치에 이르는 전과정을 보았을때 지역권력(경찰, 지자체 등)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즉 56년 전에 발생했던 각 지역별 학살사건이 사건유형에 따라 책임의 정도는 달라

질 수 있겠으나 과거와 현재의 지자체에게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한 주체이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2) 관내 주민들의 민원사항

민간인학살사건을 포함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신청대상은 현재에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지자체의 구성원들이다.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자는 이념의 잣대에 의해 ‘빨갱이’로 내몰렸고, 그 가족들은 평생을 ‘빨갱이 가족’이라는 굴레로 온갖 경제적·정신을 고통을 당해 왔다.

이제 그 피해자와 유족들은 50여년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의 대우와 따듯한 눈길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제는 ‘동등한 시민’ 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기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가 어느 규모냐의 문제와는 상관 없이 지역민들이 차별을 받아 왔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화합 · 지역화합을 위한 교량 역할로써의 지자체

50여년전 전쟁의 과정속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은 국가차원에서 시민을 양민과 빨갱이로 나누고, 이념의 잣대를 빌미로 반공주의적 국가관을 강요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40여년간 재생산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라는 무기로 사상의 자유와 민중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이는 남북의 분단상태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좌제는 제 2의 민간인 학살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좌제를 통한 일상적 감시와 차별은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와 유족은 ‘빨갱이’, ‘빨갱이 가족’으로 치부되었으며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피해자와 유족을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원히 소외·격리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간의 분열·지역(마을)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확대해 왔다.

그렇기에 이제 지자체는 56년 전의 학살사건 그 자체의 책임소재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문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살 이후 이루어진 차별과 시민간의 분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자기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주민화합·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교량으로써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4. 지자체가 ‘진실규명의 동반자’임을 부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

1) 지자체를 문서수발자로 전락시킨 ‘시행령’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방법, 이를 위한 홍보문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단순한 신청서 접수와 문서 수발의 기능에만 국한시켰다.

시행령 제10조, 12조, 15조에서는 진실규명 업무의 공동수행에 있어 지자체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만 언급하여 ‘전문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의 관련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교육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자체(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은 진실규명운동의 한 주체로서의 지자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 스스로 작아지고자 하는 지자체

진실규명의 한 주체로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미비점을 근거로 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 규정하는 자세이다. 둘째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이에 대한 지역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이다.

3) 전문성이라는 칼을 마구 휘두르는 한국사회

시행령 개정에 있어 주로 공론화되는 것이 조사관의 증원과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방안이다. 이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 깔린 생각에는 지자체와의 공동업무 수행이나 지자체의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담당 공무원)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

일부 논의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군 전담요원 250명 확보방안이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법적 권한의 부여와, 교육과 적합한 인원의 충원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비판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에 대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실제로는 지자체의 역할을 협소하게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조사인력의 절대부족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현재는 수사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능력이 절실하다.”라는 말이 절실히 와 닿는다. 자료수집과 진실규명운동에 대한 국가기관·지자체간·민간단체간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 내는 일을 한편에서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조사하는 방안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연구하고 그 방안을 수립한다면 ‘전문성’이라는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5. 지자체의 자기정립을 위한 제언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진실규명의 주체’로써의 숲을 보자

충북대책위의 5년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중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다. “만약 행정조직이 총 동원 되어서 이장들이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를 독려하고 읍·면 단위별로 지자체가 신청서 작성을 주도하면 얼마나 신청을 할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다.

약 3개월이면 무연고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접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바람직한 방식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상상이 계속 머리에 남을까?

이는 지자체가 이 사업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않고는 총체적인 진실규명운동은 고사하고 신청 자체가 미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이용한 접수 건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향후 명예회복에 관련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를 단순히 효율성의 극대화 라는 가치속에서 행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국가적 시책에 지자체가 동등한 주체로써 참여해야 한다는 대전제인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법의 개정이나 시행령의 개정 방안은 이 글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지자체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시행령 개

정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발로 뛰는 홍보

이제 접수 기간이 불과 40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 40일 이나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관공서나 준공공기관·마을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전단이나 포스터, 플랜카드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읍·면 단위가 기본이 되어 행정책임자, 관계공무원, 이장이 통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의 최일선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장들을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시켜 자발적으로 진실규명운동의 첫 단계인 접수에서부터 사후조처까지 동참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 언론의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방안을 피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자세의 홍보는 현 지자체 공무원과 마을 이장단·시민들의 일방통행식의 홍보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더욱 활기를 얻을 수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하에 기초자치단체별·이장단·시민들과의 간담회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훌륭한 홍보방법이며 이를 통해 홍보를 더욱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육성될 것이다.

홍보가 접수 기간(2006.11.30)까지만의 홍보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사와 위령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과거사법의 의의, 지역 현대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방적인 형태의 신청서 접수

읍·면 단위의 출장접수나 접수창구 개설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다만 여기에 요구되는 권한과 인력의 문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합의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남은 기간에 이 방안을 기초자치단체가 취한다면 현재까지 접수한 건수의 2배 이상은 신청할 것이다.

3) 미신고된 사건의 실태(예비)조사

“56년전 민간인 학살사건을 누가 가장 잘 알까?” 가장 잘 아는 순서대로 보면 유족 → 마을 주민 → 관련 민간단체 → 지자체 → 국가 순일 것이다.

즉 마을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입을 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자료조사를 포함한 기초조사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겪고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입을 여는 것이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조사와 더불어 지자체가 해당 관내 지역의 사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미신고된 사건의 실태조사를 한다면 유족과 시민들은 훨씬 쉽고 주체적으로 입과 마음을 열 것이다.

즉 진실규명의 첫 단추인 사건접수를 유족 개개인의 의지에만 맡기는 문제는 이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색케 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자료조사나 미신고된 사건의 처리방안에만 의존해서도 안되고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4) 바람직한 지역현대사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궁극적 목표가 진실규명을 통한 시민화합·민족화합이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이 유족 개인의 한과 고통만을 이야기 하는 폐쇄된 창고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 평화의 광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다. 지역현대사를 문자로, 영상으로, 연극과 춤으로 새롭게 써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조급하게 이루어져서도 안되지만 조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후속조치로서의 위령사업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5) 진실규명운동의 총체적인 계획 수립

홍보 → 접수 → 실태(예비)조사를 포함한 공동조사 → 지역현대사 정리 → 위령사업 등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6) 진실규명 전담자 확보

위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확보했을때 그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논의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논의와 연관되어 지자체

에서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전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진실규명을 위한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진실규명운동은 단체장의 의지나 행정철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의 진실규명운동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수립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8) 지역 민-관 협력기구 구성

진실규명운동은 국가차원의 문제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만이 할 수 있거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즉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인력과 예산의 빈곤함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의 보완, 행정의 효율성의 극대화하는 요소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과제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시각하에서 민-관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민·관 협력기구는 지자체-학계-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접적 당사자인 유족회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함평군의 진실규명을 위한 추진 사례

김 규 준(함평군청 자치행정과장)

1. 함평군의 여건

우리 함평군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많은 양민들이 아군과 적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지역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 함평지역은 6.25발발이후 적과의 교전에 의한 사상과 부상보다는 1950년 이후 공산당 잔여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양민학살사건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2.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개요

함평 양민집단학살 사건은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2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1960년 6월 8일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3개면(나산, 해보, 월야)에서 무려 524명의 양민이 학살되었고 1,454호의 가옥이 전파 또는 반파된 사건이다. 또한 3개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함평읍 일부지역과 기타지역)에서도 소집단 및 개인별로 학살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건의 진상 기간은 한국전쟁전후 즉 1948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 함평군 타지역 희생자 현황 - 6개읍면 870명

계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870	29	340	122	81	25	273

3. 함평 양민학살 규명을 위한 노력

함평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과거사 진실규명의 한 부분인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학살 진실조사를 위한 군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동안 특위활동을 전개하였다.

▷ 특위활동결과를 97년 12월 함평양민학살사건피해 진상조사실태보고서를 발행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15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 또한 함평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등 4개 단체가 가족과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 함평군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 현황 - 4개단체 311명

유족회	회 원	활동지역	비 고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196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함평읍 양민희생자	30	함평읍	
손불면 양민희생자	42	손불면	
신광면 양민희생자	43	신광면	

4. 진실규명을 위한 주체로서 함평군의 역할

함평군은 진실규명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발효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의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오고 있다.

※ 전남 시군 접수 현황 비교표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담 양	곡 성	구 례	고 흥	보 성	화 순	장 흥	강 진	해 남	영 암	무 안	함 평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신 안
1,451	3	137	37	79	3	12	-	96	15	23	39	9	-	112	4	7	441	1	31	389	8	5

5. 유형별 추진 사례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발효이전

1)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시기 : 1996. 12. 28

- 구성인원 : 제2대 함평군의회 의원 8명

○ 활동기간 : 1996. 12. 30 ~ 1997. 12. 29(1년간)

○ 주요 활동내용

- 학살피해자 신고 접수
- 현지 확인 및 탐문을 통한 피해 진상조사
- 피해유족 실태파악
- 제15대 국회에 제출한 의회차원의 청원 관철 촉구
- 학살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대책 강구등

○ 활동현황 총괄 - 총 44회

정부부처 및 정당방문	정부부처건의 및 청원	기타단체 및 의회방문	자체간담회	현지조사	통보
8	2	6	5	14	9

2) 기타 활동 상황

- 1993. 11. 27 : 제1회 합동위령제 개최
- 1996. 06. 01 : 함평군 함평 양민학살 명예회복 전담기구 설치
- 1996. 12. 28 : 양민학살 피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 1998. 09. 14 : (사)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법인 설립 허가
- 2000. 06. 19 : 명예회복 탄원서 제출 - 대통령, 국회
- 2000. 08. 23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접수
- 2000. 08. 04 : 국회의원 입법발의
- 2001. 12. 04 : 함평 양민학살 학술대회 개최
- 2003. 02. 27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2004. 10. 19 : 향토문화회관에서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발효이후 추진사례

1) 진실화해를 위한 전담반 구성 운영

- 운영시점 : 2005. 12. 01
- 전담직원배치 - 자치행정과(당시 총무과) 2명
 - 각 읍면 1명씩(전담공무원 지정)

○ 주요내용

- 관계법공포 주요내용 홍보(자치회보, 군홈페이지, 언론매체등)

- 각 읍면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지원 창구운영
- 매월 마을단위 자치회날 이용 신청 접수 대행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운영 : 2006. 03. 06
- 구성인원 : 위원장외 23명
- 활동내용
 - 참전지역 피해 사전조사를 통한 정부조사 대응
 - 유족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 희생자 현지조사 협조 및 명예회복 신청 지원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경험이 있는 연구소와 조사용역 체결
- 용역결과 자료발간 : 2006. 09. 28
 - ※ 연구용역결과물 :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 연구보고서
- 용역비 : 군비 3천만원 지원

3) 추진위원회 사무실 제공

- 위원회 사무실 : 함평군청 제2청사내 사무실 제공(15평 규모)
- 사무실 집기 : 각종 사무기기(컴퓨터등 5종)

4) 기타희생자 신청·접수 상황

- 매월 주민자치회 개최 홍보 및 신청 접수 대행 : 10회
- 마을담당공무원 271개리 일제출장 지원 : 5회
- 추진위원회 활동시 현장조사 협조 등

나. 현재까지 신청자 접수 현황

2006. 9. 31현재

계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	관외	위원회
441건	17	57	50	5	1	12	12	25	10	18	147

제3장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2008년 10월 17일

기조 발제 여순사건과 한국현대사 / 서중석

제1부 여순사건의 배경과 민간인 피해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

-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최정기

여순내란 진압의 대항 계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 / 김무용

여순사건 피해 실태조사 현황 / 박종길

제2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연구 / 박찬식

여순사건의 성격 / 김득중

제3부 여순사건의 영향

여순사건 이후 군대, 그리고 대민통제 / 노영기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 김춘수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 언론탄압과 주민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김학재

한국현대사와 여순사건

서 중 석(성균관대학교수 · 한국사)

1. 당대 남한의 축소판이자 현대사의 축소판
2. 단선단정반대와 여순사건
 - 1) 이승만권력의 취약성 1 - 단정운동
 - 2) 이승만권력의 취약성 2 - 친일경찰과 민생문제
 - 3)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투쟁과 투쟁만능주의
3. 여순사건과 극우반공체제의 초기적 형성
 - 1)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모해와 제거
 - 2) 주민학살
 - 3)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악용
4. 맺음말

1. 당대 남한의 축소판이자 현대사의 축소판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사건은 동족상잔을 가져올 제주도출병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여수주둔 14연대 병사들이 연대 인사계 지창수상사의 선동에 따라 일으킨 14연대반란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두 (분단)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5·10선거 직전에 일어난 제주4·3사건과 같이 남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혁명의 열풍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해방은 당연히 (통일)민족국가를 수립케 할 것이라는 민족혁명적 기대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또한 두 사건은 체제선택과 관련된 이

테올로기경쟁의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테올로기경쟁은 단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 친일파문제, 민생문제, 토지문제, 부패 · 부정문제, 사회혼란문제 등과 중첩되어 있었다.

제주4·3과 관련해서 조덕송은 『신천지』 1948년 7월호에서 “선동만으로 전 도민이 다 총대앞에 가슴을 내어밀 것인가. 제주도사건은 그대로 ‘조선의 축소(縮圖)’(따옴표는 필자가 했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썼다. 문제는 그와 같이 전 도민이 다 총대앞에 가슴을 내어밀게 한 것이 무엇이나에 있다. 당시 미군정 검찰총장이었던 이인은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이것을 터친 것이 제주도사태의 진상”이라고 간결히 토로했다. 관공리, 경찰, 사설청년단체의 폭력을 수반한 억압과 횡포, 부정 · 부패, 민생문제, 친일파문제 등이 4·3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총장인데도 이테올로기경쟁은 별것 아닌 것으로 접어두고 있다. 조덕송은 당국자가 주장하는 공산계열의 선동, 모략은 근인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의 축소판’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전 도민이 총대앞에 가슴을 내밀었다는 조덕송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 1948년 8월호에 실린 홍한표의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에도 “도민의 거의 전부가 참가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쓰여 있다. 여순사건은 어떠한가. 김득중의 박사학위논문 「여순사건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에는 봉기 주동자가 수십명에 지나지 않는 소수였는데도 2천여명에 가까운 연대병력이 일순간에 봉기에 합류했다고 쓰여 있다. 또한 14연대 병사들의 반란 다음날인 10월 20일 오후에 열린 인민대회에 모인 군중이 김남식의 『남로당연구』에는 약 4만명으로, 황남준의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에는 3만명으로 나와 있다. 4만명이나 3만명은 과장된 숫자로 보이지만, 대회장은 열띤 분위기였다고 한다.¹⁾

남로당이 일으킨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건에서 주민이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에 남한 각지에서 이승만대통령과 미군정 · 이승만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선단정은 이 시기에 두드러진 불만 또는 반대나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단선단정은 이승만으로 상징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비판은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친일경찰에 대한 불만, 분노도 컸는데, 그것도 또한 이승만과 연결되는 점이 있었다. 억압과 민생문제, 부정 부패, 사회혼란도 이대통령과 관계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1) 10월 20일 열린 여수인민대회 분위기는 여수군청 공무원으로 이 대회를 지켜본 김계유의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 겨울, 258-263쪽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1946년에 목포는 103,081명, 군산은 66,715명이었는데,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3-20) 여수는 군산과 규모가 비슷했다.

제주4·3도 그러했지만, 여순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남로당의 모험주의적 투쟁 행태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남한의 축소판으로서 단선단정 문제, 친일경찰문제, 민생문제를 고찰하고, 그와 함께 남로당의 투쟁방식도 살펴볼 것이다.

여순사건은 당대 남한의 축소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극우반공체제와 관련된 여러 현상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주민학살이 여순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주도로 이어져 한국전쟁에서의 주민학살과 함께 극우반공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점들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가를 중시하여, 여순사건이 극우반공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총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단선단정반대와 여순사건

1) 이승만 권력의 취약성 - 단정운동

꿈같이 해방을 맞은 한국인은 곧 독립이 될 줄 알았고, 분단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인은 분단이 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불원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지어 남북교류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했던 1960년대 하반기에도 거의 모두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통일원이 발족된 직후인 1969년말에 실시했던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에 응답한 사람이 90.6%나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년 이내에 통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9.5%로, 10년내에는 안 된다고 응답한 19.5%보다 두 배나 많았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10년 내에 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본 사람들이 39.5%나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었을까.

분단을 눈앞에 둔 1948년에 단정수립을 반대하고 반드시 통일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한 데에는, 백남운이 맑스주의 학자답지 않게 『조선민족의 진로』에서 “조선민족은 세계사상에 희귀한 단일민족”이라고 말한 바가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단일민족으로서 고려 이후 항상 하나의 국가를 가져왔으므로, 해방후에도 당연히 하나의 국가를 가질 것으로 알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북과는 달리 당시 남한 경제가 몹시 안 좋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하자원의 분포, 공업의 분포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단을 반대한 이유의 하나

였다.

이 시기에 분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해방 후 지도자들의 좌우대립을 지켜본 한국인은 분단이 되면 남북간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극좌극우가 각각 강대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1948년에 남북협상을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성명서 등 각종 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전쟁에 대한 심각한 우려이다. 1948년 4월 문화인 108인은 자주 인용되는 「남·북협상을 성원함」이라는 글에서 국토 양단 이후 오는 사태는 “저절로 민족 상호의 혈투가 있을 뿐이니, 내쟁(內爭)같은 국제전쟁이요 외전(外戰)같은 동족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것에 역비례해서 이승만 등 단정운동세력에 대한 비판이나 반감이 클 수 있었다.

이승만 등 단정운동세력이 경원시된 데에는 단정운동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이승만의 단정운동은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불가피한 국내외정세로 어쩔 수 없이 분단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승만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우선 단독정부라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파도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에 처음으로 전북 정읍에서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 6·3정읍발언은 최초의 공식적인 주장이자 단정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이전부터 이승만은 통일정부 수립과는 거리가 멀게 활동하였고, 그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었다. 1948년 5·10선거 참여자 중 유난히 이승만이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은 그러한 점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승만한테는 파당성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났지만, 태평양전쟁시기에도 내분을 일으켜 미국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해방후 미국무부는 이승만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파당성이 한국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그의 귀국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좌익을 억누르고 정국의 해계모니를 잡는데 이승만이 필요하다고 본 맥아더사령부의 조치로 주한미군사령부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해 정국을 이끌어가고려고 했으나 곧 실패했다. 독촉중앙협의회 중앙위원을 선정하는 임무를 맡은 전형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한민당원이어서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거처는 비서진에 의해 인의 장막이 쳐져 국민당당수인 안재홍조차 이승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귀국하자마자 노골적으로 편당성향이 드러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에 따라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자 이승만을 민주위원의장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소공위가 열리기 전날인 1946년 3월 19일 이승만은 갑자기 민주위원의장직을 ‘휴직상태’로 떠났고, 김규식이 의장대리로 민주위원을 대표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승만을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걸림돌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이승만은 미국이 배후에서 작용했겠지만 폭로사건으로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해방되기 전인 1945년 3월 미국의 실업가 돌베아에게 자칭 주미전권공사 및 특명전권대사의 이름으로 광업권을 판 것이 말썽이 되어 언론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한 것이다.²⁾

그러나 미소공위가 잘 풀리지 아니하자 이승만이 돌연히 급부상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4월초 미국 샌프란시스코방송에서 남한단정설과 함께 이승만이 남한정부 주석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소련과 협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경우 정부수반은 김규식이 적당하지만, 미소대립으로 단정을 수립할 경우 정부수반은 이승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승만은 통일정부에 부적당한 인물이었지만, 정권 접근을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1945년 연말 김구·(중경)임시정부 중심으로 반탁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때 이승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반탁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미소공위에서 신탁통치문제를 포함한 미소공위 활동에 협력한다고 서명하는 정당·사회단체는 미소공위의 협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공동성명 5호가 4월 18일 발표되자, 김구는 반탁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승만은 자신을 찾아온 미군정의 굿펠로우를 만나고 4월 23일 공동성명 5호에 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는 5월 8일 미소공위가 휴회하자 5월 11일 이승만은 지방에서 “자율적 정부수립에 대한 민성이 높은 모양이며, 나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한 적은 있으나 발표는 아직 못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6월 3일 남한에 임시정부 같은 것을 수립하자는, 세상을 놀라게 한 ‘정읍발언’을 한 것이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한국인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 분단 정부 수립 발언이었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국절 운운 하면서 이승만이 건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말이 수천년간 독립국가를 발전시켜온 우리한테 합당하냐는 주장은 일단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건국설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뉴라이트의 21세기 신화일 뿐이다.

1948년 두 (분단)정부가 선 이래 한국인은 통일을 절규하면서 분단은 미소의 냉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보니까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2)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흥빈, 「한반도분단의 뿌리」 『신동아』 1983. 8. 192-193쪽 참조

희생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승만 때문에 분단되었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개가 이승만을 미워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었다. 이승만은 분단을 시킬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5·10선거는 이승만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5·10선거 실시에도 이승만은 관여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유엔과 미국은 정부수립에 관계가 있지만, 정부수립의 주체는 아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와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를 결정했고, 유엔임시위원단과 주한미군사령부·미군정은 선거법을 확정하고 선거날짜를 잡고 5월 10일 선거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정부수립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재민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통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었고, 그 국회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정읍발언이 있었을 무렵 이승만은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것도 당장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 그의 단정운동은 미소대결을 넘어서서 미소전쟁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승만이 (통일)임시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사령관과 러치 군정장관은 단정이 수립된다는 낭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와 러치는 이승만이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1946년 6월초 하지는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이승만과 면담을 가지도록 추진했다.⁴⁾ 그리고 하지는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을 지지, 지원했다.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이승만은 1946년 12월 도미하여 올리버 등과 함께 “한국은 내란의 위기 직전에 있다”, “하지는 한국을 소련에 팔아 넘기려 한다”라고 선동하며 단정 수립 여론을 조성했다. 1947년 3월 12일 냉전이 가시화된 트루만독트린이 발표되자, 이승만은 트루만독트린이 모든 나라에 서광을 비쳤다고 찬양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선전했다. 그는 3월 22일 뉴욕에서 “미국은 30일 내지 60일 이내에 남조선독립정부의 수립을 용허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무부는 그의 발언이 광신적이며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1947년 5월 재개된 미소공위가 참여한 미소대립으로 실패하고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토의중이던 10월 이승만은 유엔이 한국문제를 푸는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거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국가를 두 동강 내는 것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다루는 우회적

3) 올리버, 『이승만비록』, 박일영역, 한국문화출판사, 1982, 69쪽

4) 위의 책, 66쪽

방식으로 나왔고, 또 분단문제로 고민중이던 인도 중국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어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안이 결의되었는데, 이승만은 유엔결의를 기다릴 것 없이 단정을 세우자고 나선 것이다. 그의 지시에 의해 10월에 잇달아 총선거촉진국민대회가 열렸고, 그 다음달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헌국회의원선거는 처음으로 치러진 보통선거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었으나, (분단)정부 수립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유권자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서도 표출되었다.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선거인등록을 한사람이 934명, 하지 않은 사람이 328명이었다. 등록한 사람도 84명만이 자발적이었고, 850명은 등록을 강요당했다고 답변했다.

5·10선거에는 단정운동세력도 참여했지만, 조봉암 등 통일운동세력도 참여했다. 현실적으로 분단을 막을 수 없는 시점에 왔으면, 5·10선거에 참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민주주의와 민족 대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김구·김규식·조소앙 등 중도와 민족주의자들과 5·10선거에는 차마 입후보할 수 없었던 안재홍 등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은 5·10선거 이후 민족진영 단결을 모색하면서 1950년에 치러질 선거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었다.

단정운동세력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는 5·10선거에서 드러났다. 민중의 지지를 받는 김구·김규식 등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한민당·이승만 세력은 미군정하에서 막강한 위세를 자랑해 5·10선거는 이들의 독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198명의 당선자중 한민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은 겨우 29명이었고, 이승만지지자가 많은 독립촉성국민회도 55명이었다. 더욱이 독촉국민회 등에서는 5·10선거에 되도록 많은 세력이 참여해 새 정부가 폭넓은 기반위에 세워지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선거가 시작될 무렵부터 지방에서 일부 중도파가 출마하는 것을 경계해 ‘공산주의자의 주구’ 등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들에 대항해 단정운동세력 공동명의로 단일후보를 공천하자고 결의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5·10선거는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갑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썽이 생긴 것을 제외하면 역대 선거중 부정이 적었다.

제헌국회의원 중 60명 내외는 대체로 김구·김규식과 성향이 비슷했다. 이들은 무소속구락부를 조직해, 국회속기록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장서서 진취적인 헌법을 제정했고, 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김구 조소앙을 밀어 수구적·외세의존적이고 극우파시즘적인⁵⁾ 단정운동세력과 싸우면서 민주주의와 민족 대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다. 이승만 등 단정운동세력과 맞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파처단에 앞장서고 농민 위주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였다. 1949년 6월 김구암살사건, 국회프락치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들이 제헌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소장과 전성시대’가 열렸던 것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시점에서부터 단정운동세력의 도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이승만 권력의 취약성 - 친일경찰과 민생문제

미군정기, 정부수립 직후에 소요 폭동 봉기가 자주 일어난 데에는 단선단정 문제와 함께 친일경찰에 대한 반감과 민생고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해방은 모든 한국인한테 환희의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다. 동족을 억압, 강제연행, 수탈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악질 친일파들은 일제가 패망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해방이 되었을 때 암담한 심정이었다. 그중에서도 경찰이 더욱 심했던 바, 해방이 되어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경찰 출근율이 20%밖에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군이 독일·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 친일관료와 경찰을 재등용, 승진시키고, 일제말처럼 대민사업에 앞장서게 한 것은 큰 해악을 남겼다.

해방직후 친일파는 민족의 단합과 새 사회, 새 국가 건설에 암적 존재였다. 이 때문에 친일파 처단은 토지개혁과 함께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떠올랐다. 김구 일행이 귀국한 직후인 1945년 12월 5일 『조선일보』가 「임시정부에 제언함」이란 사설에서 “현재 민족통일전선의 암이 되어 있는 것이 친일파 민족반역자 문제이다. 이런 도배를 신성한 우리의 건국에서 배제함으로써 후환을 단절하는데 어느 누가 찬동치 않을까”라고 쓸 정도였다.

『조선일보』사설처럼 친일파는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암적 존재였다. 이들은 거의 모든 정치세력이 친일파 처단을 역설하거나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로지 이승만과 한민당만이 친일파 처단을 반대할 뿐이었다. 따라서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단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단정운동에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점 때문에 친일파들은 더욱 미움을 사지 않을 수 없었고, 단정운동세력은 반민족적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반탁세력은 통일세력과 분단세력으로 나뉜다. 반탁세력중 일부가 분단

5) 한 미군보고서에는 이승만과 단정세력의 성향을 파시즘으로 기술했다. 또 이승만은 한국에서 독재자의 목소리를 원한다고도 기술했다.(G-2보고<美군사고문단정보일지> 5, 1947. 12. 8. 301쪽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자료총서 2, 1988-1989 영인>)

세력이라는 것은 반탁운동이 벌어질 때부터 분명했다. 반탁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던 1945년 12월 29일부터 거의 대부분이 친일행위자인 서울시내 경찰서장, 조선 금융단 등이 반탁투쟁에 나섰고, 일제강점기 관리였던 군정청 관리들은 탁치반대 총사직을 결의하고 시위행진했다. 이로써 그때까지 매국노 민족반역자로 비난받으며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받았던 친일파가 하루아침에 ‘애국자’로 둔갑했다. 친일파들은 격렬하게 반탁투쟁을 벌였다. 12월 30일 서울시청 관리들이 탁치반대총사직을 결의한 것에 이어 반탁투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31일에 군정청 서울시청 체신국 등은 파업을 벌였고, 중경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가 포고 1,2호로 경무부 등 경찰을 접수하려 하자 서울시내 10개 경찰서장이 이것에 추종했다. 이들은 즉시 파면당했다.⁶⁾ 집권할 것 같은 세력한테 재빠르게 편승하려 했는데,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이었다.

친일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반민법 파동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승만은 귀국직후부터 친일파와 뿔레야 떼기 어려운 관계가 있었다. 친일파들이 접근하기도 했지만, 이승만 스스로가 적극적이었다. 대한경제보국회 문제만 해도 그러했다. 친일경제계의 거물 민규식 등은 1945년 12월 3일 돈암장에 초청받아 이승만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경제보국회를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이승만의 알선으로 미군정을 통해 조선행으로부터 거액을 융자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켰다.

장택상은 이승만이 미군정 경찰권을 쥐고 있던 조병옥과 자신에게, 또 두 사람을 통해 경찰에게 가장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고 회고했는데, 이승만은 주민들의 원성의 표적인 친일경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이 컸다. 장택상에 의하면 이승만은 경찰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간부 전원을 초대해 만찬을 같이하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경찰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친일경찰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키워주기만 하면 일제한테 충성을 다한 것처럼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파시즘이나 독재권력의 도구였다. 아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도, 1948년에 들어서면 거의 모든 경찰서에 이승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승만과 경찰의 관계는 일제강점기 이래 민중의 경찰에 대한 감정을 이승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첩해서 갖게끔 했다.

대구폭동으로도 불리는 10월항쟁이나 제주4·3봉기가 일어난 데는 경찰문제가 있었다. 10월항쟁은 경찰에 대한 증오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 경북에서 경관 40여명이, 그것도 잔인하게 난도질당하는 등 참혹하게 살해당했다.⁷⁾ 주한미군은 10월항쟁의 폭발이 친일경찰에 대한 증오감에 직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0월항쟁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6)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168쪽

7) HUSAFIK(Hi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3, 367-370쪽(둘째개 1988 영인)

“일제시대에 근무했던 한국인 경찰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에 경찰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친일경찰간부 적결이라는 근본적인 방안 대신 다음과 같은 미봉책을 내놓았다. “권한남용, 야만행위, 정치적 과당행위와 박해, 그리고 잔학행위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도 분명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릴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시될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감사방식을 강화할 것”⁸⁾

여순사건 직후 한 의원은 군정 3년 동안의 행정 부패와 폭압행위를 한 경찰에 대한 원한이 민중의 뇌 속에 침투했던 것이 여순사건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고,⁹⁾ 미대사관 보고서는 여순사건 때 공산주의자와 경찰 간에 어느 쪽이 더 나쁜지 모르겠다는 선언을 기술하면서, 제주도폭동에서도 경찰의 야만성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코멘트했는데,¹⁰⁾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감정은 여수순천지방에서도 비슷했다. 또한 경비대 사병과 경찰의 갈등은 여순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찰과 경비대간의 반목은 고질적인 것이었다. 경찰은 경비대가 경찰예비대로서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했고, 대우와 무기지급에서 경찰보다 낮은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경비대원들은 일제의 주구였던 자들이 자신들을 멸시한다고 생각했다. 경비대원들은 경찰한테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남지역에서도 경찰과 경비대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1947년 4월 광주에 주둔했던 4연대 병사들이 순천경찰서를 습격했다. 그해 6월에 4연대 병사 300여명이 영암경찰서를 습격한 영암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으로 전남지방에서 오래 기억되었다. 여순사건 발생 직전인 1948년 9월 24일에는 구례에서 경찰과 경비대원들이 충돌했다. 당시 14연대 병사의 회고에 의하면, 여수 주둔 14연대 병사가 오락회 등에서 “나는 지서를 습격하다 왔다” “나는 순경과 싸우다 왔다”하면 부대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상황이었다. 김계유는 반란을 일으킬 때 지창수상사가 14연대 각 막사로 뛰어다니면서 “지금 여수경찰이 쳐들어왔다”고 외치며 다녔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한테 반란을 선동할 때 경찰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부추긴 것으로 기술했다.¹¹⁾

민생고와 공무원의 부패도 여순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해방 3년 동안 주민들은 물가고와, 생필품 품귀, 식량문제, 곡물수집문제 등으로 몹시 고통을 겪었다. 1936년을 100으로 할 때 1945년 10월의 도매물가지수는 2,672였는데, 1947년 12월에는 58,305

8) 「朝美共同騷擾對策委員會報告書」(10월항쟁직후인 1946년 11월 29일 제출),(심지연,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1991, 420-423쪽 수록)

9) 『국회속기록』, 제1회 105호, 1948년 11월 16일 김옥주의원 발언

10) 『주한미국대사관주간보고서 Joint Weeka』 2, 200쪽(정용옥편, 영진문화사, 1993 영인)

11)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 겨울, 254-255쪽

로,¹²⁾ 2년 2개월에 20배 이상이나 치솟았다. 농산물에 비해 특히 공산품의 가격이 치솟아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서울도매물가로 1945년 8월에 100이던 곡물이 1947년 12월에는 936이 되었는데, 직물의 경우 같은 기간에 100에서 3,482로 뛰었다.¹³⁾

미군정은 일제말의 공출을 수집으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원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10월항쟁에도 미곡수집과 하곡수집이 영향을 미쳤는데, 1947년초의 미곡수집 반대투쟁으로 1만명 이상의 농민이 검거되었고, 6,7월 경찰력을 동원한 하곡수집 강행에 또 다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1948년에 들어와 미군정은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97%라는 아주 높은 수집실적을 올렸다. 이해 3월 절량농가는 40%를 넘어섰다. 전남 영암에서는 기아군중이 식량창고를 습격해 수집미를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전남 농민들은 이해 여름 전년보다 3만5천석이 증가한 19만8천석의 하곡 수집 배당을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6,7월에 태풍과 장마가 몰아쳤다.¹⁴⁾

엄밀하게 말하면 민생고는 갓 수립된 이승만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일제의 경찰과 관리를 미군정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이승만정부가 인수한데다가, 이승만은 이들 친일 경찰·관리를 대표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어서 민생고로 말미암은 반감이나 원성은 그 만큼 이승만정부한테 돌아갈 수 있었다.

극우단정운동세력은 일제강점기나 미군정기에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민족앞에 떳떳하기가 어려웠고, 부패분자가 많았다. 요정정치는 1945년 9월 미군이 상륙하자 한민당간부들이 미군장교들을 향응으로 대접하면서 유행했는데, 조병옥 장택상 등 경찰간부들은 요정에 자주 드나들었다. 1948년에 노덕술 최운하 등 14명의 경찰 간부가 폭행 능욕 상해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해에 경찰 고위간부인 최난수 홍택희 노덕술 등은 테러리스트인 백민태를 고용해 친일파 처단 활동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후에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승만정부 초기에 활약했던 친일 경찰간부들은 대개가 부패나 부정 비리사건, 독직사건, 권력남용 등으로 당시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다. 이미 194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말에도 없던 수십종의 각종 기부금 강요가 생겨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친일 경찰·관리들과 결탁한 모리간상배의 준동도 많았다. 친일 경찰·관리들의 억압과 횡포, 권력남용, 기부금 강요, 부정 부패 비리, 모리간상배의 준동으로 어디에서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12)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1-328

13) 위의 책, 3-119

14) 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401쪽;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425-429쪽;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91쪽

3)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투쟁과 투쟁만능주의

앞에서 단선단정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한국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살펴보았지만, 민중에 대해 영향력이 컸던 김구 및 김규식 등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단선단정을 반대하기는 했으나, 단선단정 반대 투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단선단정 반대투쟁은 남로당이 벌였다.

남로당은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통과된 직후인 1947년 11월 26일 국토를 양단하고 민족을 분열하는 단정 단선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948년 2월 7일부터 “괴뢰적 단선 단정을 분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5·10선거파괴투쟁은 1948년 5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선전선행대가 조직되고 일부 지방당에서는 소규모지만 무장대도 조직했다. 5·10선거반대투쟁으로 제주도에서는 두 개 선거구가 무효로 처리되었다.

여수지방에서도 5·10선거반대투쟁이 일어났다. 여수지방의 종고산 구봉산 마래산 예암산 등에 단선 반대 봉화가 올랐다. 전남의 13개 학교가 단선반대 동맹휴학에 들어갔을 때 여수에서는 3개 학교로 가장 많았다. 선거당일에는 돌산면에서 수십명의 군중이 투표소를 습격했다. 순천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습격 및 테러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보성 구례 고흥 광양 등지에서도 지서 등의 습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여수사건 관계자들은 주민과 병사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통일과 단선단정 반대를 특별히 강조해 내세웠다. 지창수도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한테 그 점을 강조했지만, ‘제주도 별출동거부병사위원회’ 명의의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란 성명서에는 “이승만괴뢰, 김성수 이범석 도당들은 미제국주의에 발붙이기 위해 조국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정권을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다.¹⁵⁾ 항일동맹휴학을 주도해 2년형을 받았고 여수사람들한테 신망이 있었던 여수인민위원회위원장 이용기는 취임사에서 이승만의 단정운동을 혹독히 비난하고 친일파 모리간상배를 비롯해 이승만의 단선단정 추진에 앞장섰던 경찰과 한민당, 여러 청년단체의 악질적인 간부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징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뒤에도 단선단정문제를 자주 언급했다.¹⁶⁾ 그는 온건파로 경찰과 우익인사를 난폭하게 학살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반란군이나 남로당을 따라가지 않고 여수에서 자결했다.

단선단정반대투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할 것이 있다. 남로당은 모험주의나 맹동

15) 이 성명서는 반란군이 남긴 것 가운데 남아 있는 보기 드문 문서이다.(김득중, 앞의 글, 58쪽)

16) 김계유, 앞의 글, 261-267쪽

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투쟁 일변도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미 1947년에도 3·1절시위, 3·22파업, 5·1메이데이투쟁, 7·27공위경축대회 등을 서울과 지방에서 대규모로 가져 대회·시위 중심의 정당이 되어갔고, 그 만큼 정치적으로 고립되어갔으며, 탄압에 직면했다. 단선단정반대투쟁을 대규모로 전개한 2·7투쟁, 특히 5·10단독선거 반대투쟁은 지서 관공서 등의 습격과 테러가 병행된, 그야말로 모험주의적인 가두투쟁이었다. 동시다발적인 가두투쟁은 목표 설정 등과 관련된 치밀한 분석이 결여된 투쟁만능주의의 소산이었고, 그러한 행태는 당원들의 규율을 해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남로당은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했는데, 엄격한 심사없이 당원을 받아들였다. 1947년 미소공위에서 협의대상문제가 구체화하자 남로당은 당원 1백만명 돌파를 목표로 5배가 10배가 운동을 전개했던바, 개별심사없이 모집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조직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제주4·3무장봉기도 중앙당 또는 상급당인 전남도당과 상관없이, 또 어떠한 상황이 초래될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달삼 등 제주지역 강경파가 주도해서 일으켰다. 그 점은 여순사건도 비슷했다. 주민들 피해는 심대했고, 당은 큰 손실을 입었다.

5·10반대투쟁도 그렇지만, 여순사건에서 관계자들이 단선단정을 반대한 경우 그것이 남로당노선을 추종했다고 볼 수 있는냐는 점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그 당시 김구가 갖는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남로당이 조직한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위원회는 5월 5일 성명서에서 남북연석회의의 단선보이코트를 실천하자고 호소했는데, 일반인한테 이러한 주장은 김구, 김규식의 단선반대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승만에 대한 것이 여순사건에 미친 점도 여러 가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4연대 내에 좌익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증언이 엇갈리는데, 남로당의 장교 프락치로 여순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지회는 14연대 모병과정에서 “이승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 이승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입대시켰다.¹⁷⁾ 지창수, 정낙현, 최철기, 김근배, 김정길 등 남로당과 연결된 14연대 하사관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동질적인 인물들이었다.¹⁸⁾ 이들 하사관들이 이승만을 미워하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었지만, 모두가 공산주의자인지는 의문이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다음날 여수의 한 시민이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마 이번 사건도 어쩌면 그놈의 이승만 땀새 일어난지도 모를까다. 김구씨 말대로 남북협상을 끈덕지게 해가지고 나라를 통일시켜놓고 봐야 하는 건디 그놈의 영감태기가

17) 김득중, 앞의 글, 47쪽

18)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1997, 752쪽(김득중, 앞의 글, 46쪽에서 재인용)

얼른 대통령 해묵을라고 반쫓가리 정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는 영영 반쫓가리가 되 뿌리고 동맹파업이다 데려다 하는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잉교”¹⁹⁾

이승만 단정운동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던 여수인민위원회위원장 이용기도 여순사건에서의 행동을 보면 공산주의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일각에서 북에서의 정부 수립은 이승만정부 성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지지한 것에는, 안재홍이 지적인 대로 이승만정부에 대한 불만이, ‘못 보는 곳’ 곧 북을 동경하게 만들었던 것도 작용했다.²⁰⁾

3. 여순사건과 극우반공체제의 초기적 형성

1)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모해와 제거

극우반공독재 하에서는 반공주의자도 정치적 반대자이면 모해하고 제거하고 탄압하였다. 이승만정권하에서 발생한 김구암살사건, 조봉암·진보당사건, 장면부통령저격사건, 경향신문사폐간사건, 박정희군사정권에서 일어난 장면총리, 장도영, 김동하 등의 반혁명사건 등이 쉽게 떠오를 수 있다. 박정권은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야당정치인을 대거 중앙정보부에 끌고갔고, 김대중납치사건이 일어났으며, 긴급조치 1,4호, 9호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부활시키려는 학생과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끌고갔고, 집안에 연금하기 일수였다. 전두환·신군부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을 조작했고, 민주인사들을 연금했다. 극우반공체제 유지와 정치적 반대자 때려잡기는 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14연대반란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정부수뇌층이 발 빠르게 이승만의 최대 정적을 모해하고 탄압하는데 우선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승만정권을 이해하는 데나 극우반공체제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순사건에 대해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10월 21일 “이번 사건은 공산주의자와 또 하나 대한민국에 반감을 가진 일부 극우정객분자가 결탁해서” “미리부터 계획했던 음모를 이번 기회에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에도 이범석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에서 14연대 반란을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로 설명했다. 같은 날 김태선 수도경찰청장은 “소위 혁명의용군사건은 최능진 오동기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기들 몇 사람이 숭배하는 정객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한 사건”으로, 쿠데타를 감행하기 직전에 검거했는데, 말단세포분자들이 여순사건

19) 김계유, 앞의 글, 256쪽

20) 안재홍, 「1주년 회고와 전망(1)」, 『조선일보』 1949년 8월 15일

을 야기했다고 발표했다. 10월 27일에도 윤치영 내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오동기연대장이 반란을 사주 선동중 최능진을 주모로 한 혁명의용군 관련으로 체포되자 심복동지 약 40명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10월 29일 기자가 “반란사건 배후에 이총리가 극우진영과 좌익계열의 합작이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승만대통령은 “국무총리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을 줄로 믿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승만정권의 수뇌부들이 똑같이 연거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그것과 연결된 일정한 ‘계획’ 또는 ‘음모’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48년 10월 1일 체포된 최능진은 안창호와 함께 수양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46년에는 조병옥의 친일경찰 등용과 부패에 항의하다가 경찰간부직에서 밀려났다. 5·10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갑구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서북청년회와 경찰의 잇단 방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극적으로 후보등록을 했다. 그러나 선거 2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개입으로 중도하차했다.²¹⁾ 그는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서재필을 옹립해 또다시 이승만에 대항했다. 광복청년회 출신의 오동기는, 여순 군반란 진압을 지휘한 하우스만에 의하면 팔팔한 우익으로 최능진사건에 잘못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혁명의용군사건에 대한 김태선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죄목이었던 “남북노동당과 결탁하여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점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최능진은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에서도 무력공산혁명의 혐의가 없어 정치적 조작의 혐의를 질게 했다.²²⁾

여순사건·혁명의용군사건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이승만정권에 의해 극우의 배후로 지목된 김구였다. 시중에는 여순반란에 김구의 선동이 있었다는 등 구구한 억측이 떠돌았다. 언론에서는 이범석 등의 발표에 대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자유중국의 중앙통신사 서울특파원은 한국정부가 반란군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김구가 10월 27일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도했다.

“나는 극우분자가 금번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극우라는 용어에 다른 해석을 내리는 자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11월 초 소련 10월혁명기념일을 전후하여 수도경찰청에서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일제 검거에 나서, 포고령 1호 및 내란음모혐의죄 등으로 수백명을 구속했다. 그중에는 김구

21) 서청대원이 후보 등록서류 일체를 날치기하고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지휘하에 경찰이 동원되어 갖가지 후보등록무효화 작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171-172쪽 참조

22)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163-164쪽

23) 위의 글, 162-163쪽

의 오른팔이라는 엄항섭과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등 남북협상파의 일부 주요 인물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았다.

한국처럼 도덕성이나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도 드물었다. 김구는 이범석이 여순사건의 배후를 발표했던 10월 21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에서 통일문제가 적극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통일운동은 이승만의 단정운동을 도덕적인 면에서나 대의명분에서 비수처럼 날카롭게 찔렀다. 김구의 통일운동은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가 지방에 내려가면 일하던 농부들조차 일손을 멈추고 그를 따를 만큼 열광적이었다.²⁴⁾ 그는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에 대해 모해가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김구암살행동대원인 홍종만이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에 한독당에 입당한 것은 모해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두희는 홍종만의 추천으로 김학규 조직부장을 소개받아 1949년 2월경 한독당에 입당했다.

결국 김구는 1949년 6월 안두희소위한테 대낮에 살해당했다. 김구 암살후 장례일까지 문상객이 124만명이나 되고, 7월 5일 서울에서 장례인파가 한국역사에서 전무후무한 50만명이나 되었으며, 그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분향소를 찾아온 추도객이 많았다는 것은 이승만·극우반공세력의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김구암살에 대한 이승만정권의 처리과정도 극우반공세력의 정치적 반대자 모해 및 탄압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간략히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암살 다음날인 6월 27일 최대교 서울지방법원장은 김학규 조직부장 등 한독당원 7명에 대해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총장에 의해 초법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경무대에서 최검사장 모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²⁵⁾ 이날 국방부는 안두희가 한독당 노선 때문에 언쟁 끝에 김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대통령은 7월 2일 경교장 문상 행차 전에 발표한 담화에서 김구암살은 한독당내 의견차이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9월 30일 헌병사령관 전봉덕과 서울시경국장 김태선은 공동성명에서 7월 하순경부터 이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와 군의 요인 암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독당의 반국가적 반정부적 행위를 비난하고, “민족진영의 탈을 쓰고 파괴살상을 기도하는 사이비적 우국도배에 대하여는 좌익공산도배에 준하여 가차없는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여당으로 해방후 우익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한독당은 김구를 잃은 데 이어, 친일파와 연결되어 있는 단정운동세력에 의해 줄지에 ‘사이비적 우국도배’로

24) 윤석오, 「경무대 四季」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69쪽. 이승만 비서였던 윤석오는 당시의 정세로는 백범의 인기가 이박사를 앞지르는 듯하다고 기술했다.

25) 『중앙일보』 1992년 4월 15일. 최대교는 한독당원 영장발부건으로 항의 사직서를 냈다.

낙인찍혀 ‘좌익공산도배에 준하여’ 가차없는 철퇴를 맞음으로써 풍지박산이 되었다.

2) 주민학살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보다 반년 뒤에 일어났지만, 큰 희생은 여순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정부수립과 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주민학살은 현대사 최대의 비극으로 지우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제주도와 달라서 여순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좌익에 의한 잔혹한 학살도 많았다. 여수의 경우 김계유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 72명, 민간인 16명이 희생되었다. 순천에서는 더 많은 경찰과 민간인이 좌익에 의해 학살당했다. 구례와 벌교·보성, 광양 등지에서도 희생이 있었다. 이처럼 경찰과 우익인사의 희생도 많았지만, 군·경에 의한 희생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토벌부대가 순천을 탈환한 10월 23일 경찰대가 순천읍민들을 순천북국민학교에 집합하게 했을 때의 광경을 유건호기자는 이렇게 썼다.

“주로 청년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남녀학생들만 모인 곳, 또 팬츠만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벌거숭이 집단도 있다. 경찰대가 구분해 놓은 것이다. 심사중인 그룹 앞에는 경찰관에게 끌려나온 사람이 충혈된 눈으로 이 얼굴 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고,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시선을 피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얼굴을 들었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쳐서 ‘저 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기만 하면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정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천신만고 사건현장에 도착한 기자의 눈앞에 전개된 첫 광경이었다”²⁶⁾

사정은 여수도 비슷했다. 10월 26일 오후에 육지에서 무수히 소총, 기관총, 박격포 쏘아대는 소리와 바다에서의 철새없는 함포사격으로 여수는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 14연대 반란군 주병력은 빠져나가 소수 반란군과 남녀중학생들이 주저항세력이었는데, 진압군의 공격으로 시내에 갇힌 시민들이 적지 않게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공설운동장 종산국민학교 등 다섯군데로 끌려갔다. 김계유는 서국민학교로 끌려가 ‘심사’를 받았다. 심사요원들이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하면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되었다. 파리한 물골의 앳된 젊은이들이 2-3명 혹은 4-5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총소리가 나 사람들 가슴을 열어붙게 했다. 종산국민학교 버드나무밑에서 김종원은 여러 번 상륙작전에 실패한 것에 분풀이 하

26) 유건호, 앞의 글, 149쪽

듯 일본도를 휘두르며 즉결처분했다. 그는 돌산도 남면 등지에서도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날 밤 내내 전남 동부지방에서 가장 큰 상설시장인 서시장에 불이 나 온통 다 태워버렸다. 27일 밤에는 충무동 중앙동 등 여수 중심지 일대에 엄청난 화재가 나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었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진압작전 때문이었다.

26일 다섯 군데로 끌려갔던 주민들은 28일쯤 풀려났지만, 그때부터 부역자 색출이 시작되었다. 40세 미만의 남자 약 5백명이 종산국민학교로 끌려가 12월 중순께까지 팬티만 입힌 알몸으로 모진 고문을 받으며 닭달을 당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문을 당하다가 취조관한테 끌려가면 공포에 질려 취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취조관 재량에 따라 버드나무밑 즉결처분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군법회의로 넘겨지기도 했다. 밤만 되면 종산국민학교에서 처형한 시체를 트럭으로 싣고가 만성리 굴너머에서 태웠다. 주민희생은 당시 여수군 소속 여러 섬에서도, 순천 구례 보성 등지에서도 일어났다.

김종원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이었지만, 여순사건에서 주민들의 희생이 컸던 데에는 백인엽 함병선 박기병 김백일 송석하 등 진압군 지휘자들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만주국에서 태워 없애고 굶어 없애고 쏘아 없애 삼광(三光)작전을 알고 있었고, 군·경 재량으로 적대세력을 즉결처분할 수 있는 임진격살(臨陣擊殺)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것처럼 큰 희생이 있었던 것은 상부에서 묵인하거나 엄벌주의로 나온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부역자 색출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11월 5일 발표한 여순사건 담화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이 총질하고 심악(甚惡)한 짓을 저지른 것을 개탄하고,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10월 25일 계엄령을 선포한 후 김완룡법무관을 불러 “임자가 가서 한 달 안에 그 빨갱이들 전부 다 재판해서 토살하고 올라오라. 그럼 계엄령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²⁷⁾

군법회의의 경우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논문에는 광주 여수 순천에서 열린 군법재판에서 단지 7일 동안에 무려 1,500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각지에서 행해진 고등군법회의에서 1,931명이 재판을 받았던바, 그중 69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른 한 자료에는 대전군법회의에서 4,750명이 재판을 받아 3,715명이 혐의자, 1,035명이 불기소석방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쓰여 있다. 사형은 곧 집행되었다.²⁸⁾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방에서 주민희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 더

27) 김득중, 앞의 글, 269쪽

28) 위의 글, 164-168쪽

욱 참혹한 주민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당시 위원장 고건국무총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48년 11월 중순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됐다. 중산간마을 거주자에게 통행금지를 포고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작전이었다.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사건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1만4천여명의 2배쯤 되는 2만5천명에서 3만명이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신고된 희생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민집단학살이 도처에서 저질러진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제주읍 노형리 512명, 조천면 북촌마을 462명, 표선면 가시리 419명을 비롯해 100명 이상이 희생당한 마을이 45개소나 된다.

여순사건에서 시작되고 제주도에서 한층 더 큰 규모로 자행된 집단학살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훨씬 더 크게 일어났다. 전쟁발발 직후 전국 거의 모든 군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자가 형무소재소자들과 함께 집단학살당했고, 11사단에 의해서 거창 고창 함평 함양 남원 등지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주민집단학살은 극우반공체제를 형성하는데 유력한 기제로서 작용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던 집단학살은 목격자 또는 그 사실을 들은 자로 하여금 시효 없는 공포를 갖게 했고, 피학살자 가족들을 따라다닌 연좌제의 굴레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공포와 피해의식은 극우반공체제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었고, 극우반공체제에 의한 역사의 무지와 역사 왜곡, 의식의 전도현상이나 굴절현상은 역으로 극우반공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극우반공이데올로기는 공포와 피해의식, 무지와 왜곡의 집적과 체계화, 의식의 전도 또는 굴절을 이용하여 억압적 공격성을 가차없이 발휘하여 장기간 극우반공체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3)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악용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승만대통령의 11월 5일 담화에는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의 구절에 이어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민중이 절대복종”하라고 되어 있다. 뒷 구절은 ‘어떠한 법령’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떠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10월 28일 윤치영내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도 간취된다. 윤치영은 국회에서 경찰이 인권유린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고 공산당취체법을 시급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국회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만들고 있었다. 9월 20일 김인식 의원 등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동의하여 동의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여순사건이 거의 진압되어가던 10월 27일 다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동의가 통과되어, 법안이 11월 9일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이때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은 기존의 내란죄와 명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불리었고, 이 명칭은 제2독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드러난 문제점과 비슷했다.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3·1운동 시위자들에 대해서 적용했던 제령 7호, 그후의 치안유지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 명확하고, 형법상의 내란죄나 살인·방화에 관한 법규 등 기존의 형법으로도 공산당의 범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해야 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이 우려되고, 남북통일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사설을 썼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경고코자 한다. 국제정세가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질 것을 생각할 때...”²⁹⁾

소장과 의원들(한민당의 조헌영의원 포함)은 두 차례 폐기안을 냈고, 심의보류안, 제1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 등을 내며 반대했으나, 정부와 한민당이 강력히 밀어붙여 국가보안법안은 11월 20일 통과되어 12월 1일 공포되었다.

이승만은 법을 잘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 전민중이 ‘절대 복종’하라고 지시했는데,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것이라는 것은 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이미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10월 28일 윤치영은 국회에서 경찰이 인권유린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시급히 공산당취체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었

29) 『조선일보』 11월 14일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조선일보사, 『조선일보명사설 5백선』, 1972, 510쪽)

다. 그는 이날 여순사건 반란자들이 제1호 사형선고자로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부요인, 금융, 기업, 산업 각 방면의 인사 약 8만명을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전혀 있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급보’라고 하면서 강화도에 반란군이 3천명 침입했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위사실’이었다. 윤치영은 다음날 3천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국회에서 약 40명의 반란군폭도가 기관총 두 대와 그밖의 무기를 들고 상륙했다고 줄여 말했다. 그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은 곧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8일 윤치영은 국회의원이 인민군을 환영했다고 일갈하고 이어서 “예비검속을 하려니까 검사가 반대를 합니다. 인권유린이니 무어니 합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누구를 가리킬까. 순천지역 국회의원 황두연은 이 시기에 순천에 있다가 엉뚱하게도 인민재판 배석판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가 죽음일보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달아나 살아난 자초지종을 얼마후 국회에서 밝혔다. 황의원은 어쨌든 목숨은 구했는데, 순천의 한 검사는 죽임을 당했다. 군정시기에도 경찰의 인권유린에 비판적이었고, 경찰이 체포한 좌익을 석방하거나 경형을 구형하여 경찰과 마찰이 많았던 박찬길검사는 여순사건이 나자 숨어 있다가 국군이 들어와 평온해지자 안심하고 나왔는데,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억지죄명으로 즉결처분을 받아 총살당했다. 박검사의 죽음은 큰 파문을 던졌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가져왔다.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경찰이 박검사와 다른 19명을 재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군에서 주었다는 사형집행장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처형했는데, 이 사형집행장은 군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격앙했고, 경찰은 적반하장격으로 하루 동안에 걸친 전국적인 ‘항의파업’에 돌입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대통령은 경찰의 업무계속을 구실로 삼아 모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덮어두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여순사건 담화에서 불순분자는 남녀아동까지라도 제거하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적용될 수 있는 불순분자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에 있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구성한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11월 5일 제출한 결의안중 제8항은 “정부는 금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거국적 강력내각을 조직하여 민심을 일신케 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대통령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이나 언론이 도각(倒閣)운운 하는 것은 국법위반이므로 이 나라에서는 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는 9일 담화에서 제8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소련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산당의 편을 들어서 공산당의 죄를 정부에 씌운다고 비난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비판자나 반대자를 종종 공산당 또는 공산당협력자로 몰았다. 제2

차세계대전때 루즈벨트 미대통령이 한인독립운동세력 대동단결을 권장한 것도 공산당 보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여순사건이 발발하자마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여순사건을 극우와 연결시키고, 최능진 오동기 등이 숭배하는 극우 정객을 수령으로 공산주의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했다는 혁명의용군사건을 발표하여 극우극좌의 합작음모라는 ‘기이한 음모’를 ‘폭로’했는데, 이승만은 11월 10일 중앙방송국을 통해 “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애국단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소련의 목적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해하려는 분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려는 공작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언하고, “소위 우익진영이라는 단체에서는 종종 남북통일이라는 미명하에서 소련의 계획을 절대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만이 누구를 가리키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극우반공체제에서 이승만정권이나 박정희정권에 대한 비판을 ‘북괴’에 동조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기이한 논법이 이미 여순사건때 나타나고 있었다. 김구는 “나는 극우분자가 금번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극우라는 용어에 다른 해석을 내리는 자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지만, 이승만 등 극우는 민중이나 정치적 반대자, 비판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전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순사건때 주민들을 학교교정에 모아놓고 ‘부역자’ 또는 ‘협력자’ ‘가담자’를 색출하고 학살하는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안이 심의되고 있을 때 여수순천지방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는 인권이 극우반공체제에서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었다.

4. 맺음말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두달 남짓밖에 안되어 일어난 여순사건은 동족상잔을 가져올 제주도출동을 거부한다는 남로당 프락치 지창수 등의 14연대 하사관 중심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반란에 일반사병이나 전남 동부지방 주민들이 반응을 보인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제주4·3봉기도 단선단정을 반대한다면서 일으켰지만, 여순사건에서도 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은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받았다. 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주장은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원성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때문에 분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귀국한 이래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한민당·친일파와 함께 조급하게 국토를 동강내는 단정운동을 벌인 것은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한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순사건 관련 자료에는 친일경찰에 대한 민중과 경비대원들의 반감이 많이 나온다.

미국과 하국의 수집, 민중에 대한 억압, 횡포와 권력남용, 비리 부정 부패는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성, 분노는 관리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특히 친일경찰에 대해서 심했다. 그런데 친일경찰이나 관리는 주민들한테 이승만과 연결되어 비취지는 측면이 있었다. 남한의 축소판이라고 할만한 여순사건은 남로당의 투쟁만능주의가 사병이나 주민들의 이승만·친일경찰 및 관리에 대한 반감에 연결되어 일어난 것으로, 순식간에 전남 동부지방을 휩쓸었다.

여순사건이 발발했을 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이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예고했다.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의원과 정부요인 등 약 8만명을 반란자들이 사형선고자 명단에 올려놨다느니, 서울의 관문인 강화에 3천명의 반란군이 침입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범석과 윤치영, 김태선 등은 극좌극우가 결탁해 숭배하는 정책을 수령으로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혁명의용군사건이라는 것을 계속 발표하여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김구를 음해했다. 극우반공독재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모해하고 제거하려는 책동이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여순사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황두연의원사건이나 박찬길검사처단사건은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전남 동부지방에서 어떻게 당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했다. 여순사건에서의 주민학살은 바로 제주도로 이어져 외진 섬에서 수만명이 집단적으로 희생되었고, 전쟁이 발발하자 전국 각지에서 훨씬 더 큰 학살이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여순사건에서 보여준 정부, 군·경의 처사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독재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극우반공독재정권이 정치적 비판자 탄압과 정치조작, 긴장고조, 민중 억압을 통치수단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정운동세력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관계가 있다. 단정운동세력은 일제강점기건 미군정기건 정신적 도덕적으로 몇몇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체질이나 성격상 민주주의와 민심에 어긋나는 방향에 서 있었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은 대단히 강했다. 이 때문에 극우적 수단과 정치적 조작이 요구되었던바, 그것이 정부수립직후 여순사건에서 노출된 것이었다.

단정운동세력한테 여순사건은 극우반공체제 형성의 호기였지만, 그러나 여순사건으로 극우반공체제의 토대가 굳건히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이승만대통령이 경찰을 주요 기반으로 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간과하기 쉬운데, 정부수립 초기였던 만큼 이승만권력에 대한 제약도 컸다. 제헌국회는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헌법제정, 정부통령선출 등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해방이 열어놓은 민주주의혁명, 민족혁명, 사회혁명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역행되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승만과 친일파가 다수 포함된 단정운동세력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극우적 반공 공세로 나갔지만, 오히려 정국은 1948년 12월부터 ‘소장과 전성시대’가 열려 소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민특위활동이 전개되었고, 농민적인 농지개혁 추진, 그밖의 개혁 추진과 통일지향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소장과전성시대는 이승만정권의 총공세라고 할만한 1949년 6월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암살사건, 국민보도연맹결성 등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극우반공주의가 위력적으로 나온 것은 여순사건 직후가 아니고, 1949년 6월 이후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피의자 구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수순천지방이 포함된 전남의 경우 경찰국은 1949년 2월부터 4월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67건 87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일제시 죄수가 남북 합해서 1만2천명이었고, 미군정시기 남한에만 1만8천명을 정원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취임한 6월 6일에 2만2천명이었고, 7월말에 3만명이 되었으며, 10월초 현재는 3만6천명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늘어난 죄수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피의자였다.³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순사건에서 최초로 극우반공체제의 양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국회의 무력화, 김구암살 등을 통해 한층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체제라고 할만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주민집단학살과 각종 참화 등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 서부터였다.

30) 김득중, 앞의 글, 283쪽 ; 서중석, 앞의 책 2, 273-274쪽

제1부 여순사건의 배경과 민간인 피해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

-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최정기

여순내란 진압의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 / 김무용

여순사건 피해 실태조사 현황 / 박종길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

-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

최 정 기(전남대 사회학과)

1. 문제 제기
2. 여수지역과 일제시대의 유산
 - 1)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 2) 일제시대의 사회운동
3. 해방 이후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4. 해방 이후 여수지역의 사회운동
 - 1) 사회운동 조직
 - 2) 주요사건과 여수
5. 결어

1. 문제 제기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때,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두 개의 계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중 하나의 계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개항이다. 개항을 통해 조선사회에서는 서구문명의 근대성이 강제적으로 이식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의미의 근대성이 한국사회에서 해체모니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계기가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개항 이후 형성된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그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모순 및 계급적 갈등, 사회세력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전쟁상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쟁으로 폭발하였던 시기였고, 그 결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규정력을 행사하는 분단체제의 모태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에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일제시대에 형성된 사회적 모순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는 양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전개될 현대사회의 윤곽을 그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방정국 시기에 진행된 좌우갈등과 대립,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에 발생한 정치적 갈등, 나아가 토지개혁 및 지주들의 몰락과 같은 반봉건적 유제들의 소멸은 현대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적 맥락에서 해방정국이나 한국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과정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수지역의 경우는 해방정국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과는 약간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수지역의 해방정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그것과 여순사건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황남준, 1987; 안종철, 2000). 만약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을 기하여 해방정국 3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여수지역의 해방정국과 그로부터 2달 남짓 지나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여순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이 해방정국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여수지역의 해방3년사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수지역의 해방3년사와 여순사건 사이의 인과적 관계는 또 다른 연구에서 질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여수지역의 해방정국과 여순사건 사이에서 인과적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이 글은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회운동¹⁾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방정국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시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일제시대까지 형성된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갈등 및 대립이 표면으로 표출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여수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수지역을 무대로 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서로 대립하거나 타협하였으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

1) 여기서의 사회운동 개념은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집합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행동까지 망라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용례라는 점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그 둘 모두를 사회운동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정치적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주체들의 의지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태도, 해당 지역의 국가 강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은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미군정의 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국가 강제력은 어느 지역이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대중의 정치적 태도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1) 전남지도



이 글은 기본적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다만 당시에는 순천지역이 전남 동부 지역²⁾의 지배적인 도시였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수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가 순천이라는 점에서 순천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여수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순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것이다. 이 지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수가 순천 이외의 다른 지역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방정국에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여수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타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여수지역의 사회운동만을 다룰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순사건을 다룬 다른 글들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일제시기 이후 해방정국에 이르는 동안을 대상으로 여수지역의 사

2) 전남 동부지역이 6개군(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인지 아니면, 앞의 6개 군에 곡성을 더하여 7개 군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2004: 15쪽)을 참조하라.

회경제적 상황 및 사회운동 진영에 대해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 여수지역과 일제시대의 유산

1)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여수는 좌수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부터 항구가 발달한 곳이지만, 일제 초기에는 미미한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곳이다³⁾. 그 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여수는 일본과 교통할 수 있는 주요 항구라는 점에서 다시금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수는 한 편으로는 호남지역의 면화가 일본으로 수송되는 항구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일본의 어업 이민단이 정착하는 어업전진기지였다. 그리고 여수항구가 갖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총독부에서는 1918년(大正 7년) 8월 1일 여수항을 지정항으로 지명하였다. 당시 지정항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선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전국 어업의 근거지가 될 수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볼 때 당시 여수지역은 좌수영이 철수한 지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진출하는 통로로 다시 성장하게 된 것이다(김계유, 1988: 429쪽, 450-451쪽).

그러다가 1920년대 말 조선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여수항은 다시금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1929년 초 일본의 군소 자본들이 종화, 중앙동 일대를 경쟁적으로 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수지역의 지형 상 택지조성이나 공장부지 건설 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도시의 골격이 갖춰지자 1930년 12월 25일에는 광주-여수 간 전라선 철도가 개설되었으며, 같은 날 여수-시모노세끼(下關) 간 연락선이 취항하게 되었다. 조선의 내륙지방과 일본을 잇는 중간지점으로 여수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 이와 같은 도시의 성장을 배경으로 1931년 4월 1일에는 여수면이 여수읍으로 승격되었다(안중철 외 3인, 1995: 122-123쪽). 이 시기 여수지역의 성장은 인구수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인구는 1926년의 1만 3,176명에서 1935년에는 그 두 배인 2만 6,853명으로, 그리고 1940년에는 1926년의 세 배 가까운 3만 7,814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수의 변화는 당시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도시화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농민군이 밀고 내려와 여수지역이 불타버렸으며, 1895년에는 전라 좌수영도 철수해버렸다고 한다. 그 결과 19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여수는 매우 한적한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김계유, 1988).

한편 일제시기 여수지역의 도시화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호남지역에서는 목포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도시가 아닌,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 첫 시도는 조면사업 관련 공장의 건설이었다. 한일합병 후 여수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어업과 공유수면 매립 외에 관심을 가진 분야는 조면사업이었다. 당시 여수지역은 면화생산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에 착안한 오사카 면화상인 야마모토(山本金藏)와 여수거주 일본인 혼다(本田安五郎)가 합작하여 산본조면공장을 세운 것이다. 이 공장은 한 해 500만근의 면화를 처리할 수 있어서 조선 최대의 조면공장으로서 지칭되었다(김계유, 1988: 491쪽). 이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 여수지역의 면화생산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1911년 여수지역의 면화생산량이 8,500근이었던데 비해 10년 뒤인 1921년에는 243만 6천근이었고, 1927년에는 500만근이었다. 이는 여수지역 농산물 총생산액의 10%에 달하는 수치로(전계서, 429쪽), 당시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규모가 큰 정미소가 세워졌는데, 이들 공장들은 모두 일본과의 교역관계를 고려하여 여수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 여수지역의 공업은 천일고무공장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천일고무공장은 일본의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김영준이 1932년 1월 경⁴⁾ 여수에 들어와 남산동에 설립한 공장이었다. 최초의 공장 규모는 자본금 10만원의 합자회사로 30명 정도의 종업원이 일하는 수준이어서 별로 크지 않았는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1937년에는 자본금 50만원 수준의 주식회사 체제로 성장하였다. 또 1938년에는 공장이 비좁아 서교동으로 공장을 이전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리와 대전에 분공장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이미 이 시기에는 천일고무공장이 전국에서도 굴지의 고무공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천일고무공장 사장 김영준은 비단 천일고무공장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수많은 족적을 남긴 기업가이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부터 해방정국에 이르는 시기의 여수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여기서 천일고무공장 사장인 김영준에 대해 알아보자.

김영준. 1900년 경남 의령군에서 빈농의 4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15세 때 일본인 가게에서 점원생활을 하다가 일본인 주인의 추천으로 일본에 건너가 와타나베고무공장에 취업하였다. 그곳에서 고무배합기술을 터득한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부

4) 천일고무공장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1940년 판 『공장명부』의 1932년 1월, 『조선은행회사요록』의 1933년 4월, 『여수·여천발전사』, 『여수·여천향토지』 등의 1935년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여기서는 당시 여수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던 정충조의 재판기록에 “193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천일고무공장에서 파업을 세 차례 주도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이전에 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1932년 1월에 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하였다.

산에 천일고무공장을 차렸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지만, 부산지역의 경쟁회사인 일본인 소유의 丸大고무신공장에게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제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후 여수로 와서 1932년 1월 다시 천일고무공장을 세웠으며, 이때부터 그의 절정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1937년 조선고무공업연맹회의 부회장이 되었으며, 호남의 갑부 현준호와 호남화학공장을 세웠고, 서울고무공업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으며, 구례에 전국 규모의 천일제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 1938년에는 김해에 있는 일본인 대지주 땅을 3,300정보나 사들이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등 전국적인 부자로 명성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해방 직전까지 14-5개의 기업을 가진 국내 굴지의 상공인이었으며, 그로 인해 도평의원 에 당선되고, 일본에 비행기를 헌납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해외무역이나 원양어업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또 한민당 여수지구책을 맡는 등 정치와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48년 10월 23일 여순사건의 와중에서 처형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천일고무공장 이외에도 일제하 여수지역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다. 분야별로 보면 천일고무공장 외에도 천일화학이라는 화학분야의 공장이 있었으며, 여수가 항구인 관계로 여수조선철공주식회사 등 여러 개의 조선공업 관련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항구의 특성상 양조공장도 종류별로 모두 갖춰져 있었으며, 그 외에도 직조공업이나 전분공업, 제재소, 연탄공장 등이 설립되어 있었다(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482-487쪽).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인구수 등 당시 여수지역의 규모에 비해 공업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우선 여수지역은 노동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⁵⁾. 그래서 사회운동도 농민운동보다는 노동운동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한편 당시의 상황에서 여수지역은 비교적 ‘돈이 많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여수 사이에 정기여객선(興亞丸)이 취항하면서부터는 여수에서 일본으로 쌀, 면화, 수산물, 광산물 등이 실려 나갔고, 일본에서 잡화, 의류, 의약품, 기계 등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 물건들을 거래하는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여수가 호황을 누린 것이다(김계유, 525-526쪽). 이러한 호황은 사회운동 진영에게 그다지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와 관련된 통계는 구할 수 없었지만, 항구에 상시적으로 있는 부두노동자 외에도 이들 공장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일제시기의 사회운동

전남 동부지역, 특히 여수지역은 전남지역의 근현대 역사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한 시기에도 여수지역은 관군의 편이 되어 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285-288쪽). 또 여수지역은, 몇 몇 사람이 의병에 가담한 경우는 있지만, 190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의병운동이 직접 일어난 곳은 아니다(김계유, 273-276쪽). 3·1운동 때에도 여천지역의 쌍봉, 소라, 율촌 등 3개 면에서 4월 1일 산발적인 소규모의 만세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날 밤 돌산, 남면, 화정, 삼산 등 4개 면에서 일부 어부들이 산발적인 시위운동을 벌였다(전계서, 281-282쪽)고 하지만 대중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에 여수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운동 조직은 소작인단체가 유일하다. 즉 1923년 1월에 율촌면, 화양면, 삼일면, 소라면, 쌍봉면 등 5개면 연합으로 소작연합대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또 그 시기를 전후하여 각 면에 면을 단위로 한 소작인단체가 조직되기도 했다. 각 면 소작인 단체는 그 내부에 간부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평의원, 고문 등을 두었고, 소라면과 삼일면의 경우에는 면을 몇 개의 구로 나누어 구마다 평의원과 간사 1인씩을 두고 사무를 집행하였다(김점숙, 1993: 36쪽). 이렇게 보면, 당시 소작인단체가 매우 조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소작인단체들이 별다른 사회운동을 전개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1920년 무렵까지 여수지역에서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집합적인 대중들의 행동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한편 지역 전체의 보수적인 성향과는 달리 전남 동부지역은 전남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이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1925년 4월이었으며, 당시 그 운동의 주도세력은 이른바 화요파⁶⁾였다. 그런데 20년대 전반기에 전라남도의 대부분 지방은 이미 서울청년회의 영향권에 있었다. 따라서 화요회계가 중심이 된 제1차 조공은 조공이 결성된 지 1년이 넘는 1926년 5월 현재에도 단지 광주, 순천, 광양, 구례의 네 지역에 야체이카⁷⁾를 설치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서울청년회 세력이 절대적이었던 광주에 화요회계 조공 조직을 만들어 낸 것은 신동호였다. 신동호에 의하여 조공에 가입한 노상열과 최안섭 2인이 순천의 농

6)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한국의 공산주의운동은 당파싸움이 치열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초의 당파로는 화요파와 서울파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뒤에 화요파로 흡수되는 북풍회가 있었고, 또 3차 조선공산당 창건 시 제 당파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ML계가 있었다.

7)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는 핵이라는 뜻으로 공산주의운동에서는 보통 세포라고 부르는데, 이를 소련어로 번역한 것이 야체이카이다.

민운동을 매개로 순천과 광양 및 구례의 활동가들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이균영, 『신간회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18쪽). 물론 이 시기의 당 조직에 여수지역의 인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1925년 12월에 결성된 제2차 조선공산당은 전남지역의 경우 그 조직이 더 확대되었다. ‘1차 당’시기보다 ‘2차 당’시기에 당 조직이 확대되었던 구체적 내용은 도 기관의 설치이다. 전남지방의 경우 다른 여타 지방보다 당과 고려 공산청년회 조직에서 선진적이었다. 조선공산당 도 간부로는 책임비서 신동호 외에도 김기수와 신명준이 그 직책을 맡았고, 고려 공산청년회 도 간부로는 최안섭이 책임을 맡고 정순제, 노상렬이 간부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전남도당은 3개의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 광주 야체이카는 김유성, 조준기, 최안섭, 순천 야체이카는 이영민, 이창수, 박병두, 광양 야체이카는 김완근, 정진무, 신명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공산청년회도 전남에 4개의 야체이카를 조직했는데, 광주(최안섭), 순천(정순제), 광양(정순화), 구례(정태중)에 각각 배치하였다(이기하, 1976: 442-445쪽). 2차 조선공산당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조직 구성원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활동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순천과 광양지역의 활동가들은 향후 전남 동부지역의 사회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에서도 여수지역 출신의 이름은 찾기 어렵다.

여수지역에서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처음 이름이 나온 것은 여도현이다. 그는 여수군 여수면 서정 출신으로 1929년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동년 3월에 민족운동 참여 혐의로 퇴학처분을 당하고, 그 해 8월 고향으로 내려와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을 모아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결국 성진회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며,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누가 그 독서회의 구성원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수·여천 향토지』에서는 오우홍, 윤경현, 김권문, 유병훈, 이기동, 이기암, 백인렬 등을 언급하고 있고, 이기하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는 4-5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후자의 자료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여수 수산학교 학생들이 독서회를 만든 것은 사실이고, 이 조직이 향후 여수지역 사회운동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여수지역의 사회운동은 여도현이 만든 독서회가 최초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도현이 체포된 뒤에 여수 수산학교 학생들의 독서회를 담당한 것은 김영균이었다. 그는 1929년 8월에 소련 하바로우스크 원동대학을 졸업한 뒤, 여수에 와서 김용환, 여운종, 장평완, 박채영, 김인식 등과 함께 제2회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여수 수산학교 내에서도 윤경현, 이용기 등 14명의 학생들이 맑스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독서회(여수 수산학교 맑스주의연구회)를 조직하고 이를 세 개의 조로 구분하여 수산학교 각

학급을 지도하여 오다가 결국 1930년 9월에 체포되었으며, 1931년 8월에 공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공판에 회부된 14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이기하. 1354-1355쪽).

윤경현, 이용기, 오걸포, 정학조, 곽재석, 김봉철, 진자미,
김양호, 백인렬, 정보한, 조병호, 박창래, 김재곤, 차용헌

한편 여수에서 독서회를 하고 있던 김영균은 이 조직을 해체하고, 사회과학연구회와 청년전위동맹을 각각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조직의 주요 활동을 보면, 여수지역의 각급 학교에 적색 뼈라를 살포하고, 학생들의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을 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다가 김영균은 서울로 가고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복역하던 이창수가 출옥하여 여수로 왔다. 그는 여수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여수 공산주의운동의 침체가 활동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10여 명의 활동가들을 규합하여 1932년 7월 국제적색노동조합 테제에 의거한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위’를 조직하였다(전계서. 1354-1355쪽). 그 부서 및 간부는 다음과 같다.

표 1) 여수적색노동조합준비위 부서 및 간부 명단

책임비서 - 정충조	
교통운수노동부 - 김용환	식산(해산)노동부 - 박채영
점원노동부 - 여운종	정미노동부 - 주원석
철공노동부 - 장동완	토목건축노동부 - 이창수
부인노동부 - 오우홍	

이 조직은 각 부문별로 노동자를 조사하고, 직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또 여수 청년 회관에 각종 좌익 서적을 비치하고,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였다가 여수청년전위동맹으로 개조하였으며, 여기서 성장한 활동가들을 여수 항운수노동조합이나 천일고무공장, 각 정미소 등에 들어가 활동하게 하였다. 당시 이들의 활동이 매우 왕성하였으며, 심지어 일본 경찰은 후일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이들이 여수 시내 각 방면의 실권을 장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결국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는데, 1933년 봄 관련자 1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책임자였던 정충조는 피신하였다가 1934년 6월에 체포되었다(전계서. 1355-1357쪽). 이 사건으로 모두 13명이 짧게는 8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책임자인 정충조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정충조. 1909년 전남 여수군 소라면에서 출생하였다. 친부는 그렇지 않지만, 종가의 대를 잇기 위해 당숙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천석꾼의 아들이 되었다. 경성에서 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3학년에 중도 퇴학을 당했으며, 이후 일본 동경에서 사립정칙영어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였다.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도 학창시절이었다. 이후 조선에 돌아와 1932년 7월 여수 적색노동조합 준비회를 조직하고 그 책임비서가 되었으며, 1933년 5월 초에는 조선공산당 재건 전남동맹을 결정하고 동 조직의 반제부 및 자금부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4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2년간의 재판 끝에 1936년 6월 징역 5년이 언도되었다. 해방 이후 김양수의 한민당에 대응하여 순천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순천 공산당에서도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미 군정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1947년을 전후하여 월북했으며, 그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⁸⁾.

한편 여수지역 사회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김수평도 이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

8) 무등일보에 연재했던 기사이며, 안종철 외 3인(1995: 122-127쪽)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하였다. 그는 1935년 일본 유학 도중 잠시 귀국하여 여수청년들과 함께 지하 독서회를 조직했다가 다음 해인 1936년에 구속되었다(김득중, 2004: 17쪽). 그 역시 독서회를 통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하 여수지역의 사회운동은 1929년부터 1935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민운동이 주도적이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학생들의 독서회와 적색노동조합 운동이 주요한 운동의 형태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이 강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적 보수적인 동부 지역에서도 여수는 특히 사회운동의 세가 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해방 이후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마주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인의 귀국과 친일파의 처리문제, 그리고 귀환동포의 처리문제였다. 해방이 됨과 동시에 일본인들은 급하게 우리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또 일제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여수지역이 매우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여수는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호남지역의 일본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으며,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탄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다. 또 그런 만큼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갖가지 혼란과 무질서로 어지러운 실정이었다.

최초 해방 직후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수지역이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에 있는 치안대(대장 김수평)의 역할이 컸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여수시내의 치안 유지 및 재산관리였다. 반면 귀환동포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군청이나 읍사무소 등이 담당하였다. 당시 여수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군청과 읍사무소 등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군정당국에 의해 군수로 임명받은 정재완의 활약으로 해방 직후의 급박한 사정에서 여러 가지 시급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300-304쪽). 그러나 귀환동포의 문제나 물자부족의 문제 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해방정국 전 기간에 걸쳐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들이었다. 특히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전재민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주자의 문제는 해방정국의 골칫거리였다. 다음의 신문기사⁹⁾는 순천지역과 관련된 것이지만, 당시 상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하 모든 신문기사는 필자가 기사를 요약하고, 용어도 상당부분 현대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1948. 8. 31. 순천군내에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전재민, 실업실직에 방황하고 비참한 상태 —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알선하는 독지가가 있다. 천일제재공장 지배인 이용기, 사장 김영준이다, 이들은 1천여 명의 공원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있다(동광신문).

한편 귀속재산 문제 역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해방 당시 여수에는 약 5,000명 가량의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무렵 시내 중심가의 땅이나 건물들은 물론, 공장, 점포 등 제법 규모가 있다는 부동산은 거의 일본인 소유였다(김계유, 1988: 227쪽). 그런데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인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들 재산들은 모두 소유주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른바 ‘적산’ 혹은 ‘귀속재산’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군정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1946년 12월 31일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어 ① 일본인 소유의 대지, ② 건물, ③ 기업체, ④ 잡종지(농지는 신한공사), ⑤ 기타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찾아내서 정당한 연고권자에게 불하해주고 대금은 년부로 국고에 납부토록 하였다. 그리고 귀속재산의 관리기관으로 중앙과 도, 부, 군 등에 ‘귀속재산관재서’를 두게 되었는데, 여수에도 여수군귀속재산관재서가 생겨 김중섭이 초대 서장을 맡았고, 2대 서장은 장말수가 맡았다. 이때 불하된 비교적 규모가 큰 귀속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김계유: 227-228쪽).

개인재산 및 농업관련 시설 - 다까세(高瀬)농장건물, 오오스까(大塚治三郎)의 건물과 대지, 혼다(本田安五郎)의 건물과 대지, 고려농장창고
공장 - 전남제빙, 여수토지건물주식회사, 황양기선, 여수기선, 천기기선, 일신정미소, 여수철공소, 삼화철공소, 조일직물, 제일조선, 한국조선, 녹미정종도자, 하기장유공장, 일본수산주식회사
상회 - 본전상점, 길부선구점, 부사옥여관, 만월루, 산해루,
공공시설 - 식량영단, 중앙극장, 여수신사
정체불명 - 삼여팔(森興八), 기본정일(磯本政一), 도모에야, 정길신(政吉信), 해월록

이상의 귀속재산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수지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이 농업 시설보다 많은 지역이다. 또 일본이 패망했지만, 여수항구는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있었다. 귀국하는 일본인이나 귀환동포 뿐만 아니라 미군의 물자들도 여수항을 통해 하역되고 있었으며, 또 남해안의 수산물들도 여수항을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

그런 만큼 타지역에 비해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양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여기서는 해방 직후 광주에서 발간된 신문들의 기사를 토대로 여수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고자 한다. 먼저 여수항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1946. 1. 23. 전남 어련(漁聯)에서 래 24일 여수출장소를 통하여 해태 입찰 판매 실시(광주민보)
- 1947. 11. 20. 여수 개항 중앙당국에 진정, ---여수항은 남조선 연안의 무진장한 수산물 집산지인 동시에 곡창 호남을 종횡하고 있는 전라선의 종단항으로 1만톤급 선박이 자유로 항안에 기항할 수 있는 천연의 양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미군용품물 비롯하여 석탄 기타 중요 화물이 매월 10여만 톤씩이나 양륙되고 있는 한편 대외 수출품으로도 이미 해태 3백만○, 머루치 6만관의 해산물이 지정되어 있는 등 실에 있어서는 정식 개항장과 하등 손색이 없는 현상이므로 ---(동광신문)
- 1948. 1. 18. 개항장으로 여수를 지정, 기존의 남조선 개항장으로 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인천, 부산, 목포, 군산, 흑호의 다섯 군데였음. 실시기일은 미정이지만, 3월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동광신문)
- 1948. 6. 13. 여수 항만작업사 성대히 발족, 김영준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동광신문)
- 1948. 8. 1. 여수 런던 전기상사에서 대평무역에 거래 요청(호남신문)
- 1948. 9. 10. 목포세관에서 여수세관 분리 승격(호남신문)
- 1948. 9. 24. 여수 밀수비료 압수한 것 비료 회수에 급급(호남신문)
- 1948. 9. 28. 여수 밀수입 비료 압수 취조 중(호남신문)

이상의 기사에서 우리는 여수 항구가 정치적 격변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의 어업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여수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해방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밀수입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개항장 개설 요구 시의 기사를 보면, 해산물은 물론이고 미군 물품이나 석탄 등 매월 10여만의 화물이 여수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수 항구의 호황은 그대로 산업분야의 활성화로 연결되었다. 그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1947. 5. 8. 여수 노총 주최로 오동도에서 메이데이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공장 노

동자와 일반노동자를 망라하여 2만 여 명의 회중이 참집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여흥으로 남자부에서는 씨름대회, 여자부에서는 석사(石射)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당일 양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동광신문).

씨름 1등상 김동준, 2등상 김점석, 3등상 남기열
 석사(단체대표 경기) 1등 이순덕(공영직물), 김소준(조일직물)
 2등 도상룡(공영직물), 이순자(조일직물)
 3등 차연례(공영직물), 박순자
 4등 서지관(천일고무) 김의생

1947. 8. 23. 지난 20일 하오 4시부터 광주상공회의소에서 한국무역협회 전남지부 창립 총회 개최, 지부장 김영준(여수), 부지부장 조천섭(광주), 목포 미정, 이사 이성태, 김용환, 서재홍, 노인환(이상 광주), 이규홍(순천), 연창희(여수), 감사 김규수(순천), 이우현(여수)

약간의 과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947년에 열린 메이데이 기념식에 2만 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과의 정기연락선도 취항을 멈추었지만, 여수지역의 산업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런 만큼 여수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부자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있는 기사가 그러한 사실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광주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전남지부의 창립총회에서 여수·순천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장 김영준은 물론이고, 이사 8명 중 4명이 이 지역 출신이다. 여수지역에 자산가가 많다는 것, 그리고 여수지역이 해방정국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1946. 5. 22. 종합대학 창립을 전제로 한 광주의전의 의대승격 운동에 기금 모금 결과는 다음과 같다(광주민보).

광주부 1,547,000원	장흥군 367,000원
목포부 960,000원	강진군 399,000원
광산군 386,000원	해남군 503,000원
담양군 344,000원	영암군 340,000원
곡성군 254,000원	무안군 423,000원
구례군 241,000원	나주군 550,000원
광양군 300,000원	함평군 328,000원

여수군	874,000원	영광군	381,000원
순천군	624,000원	장성군	400,000원
고흥군	498,000원	진도군	280,000원
보성군	487,000원	완도군	436,000원
화순군	342,000원	제주군	736,000원

1947. 4. 19. 여수행 열차도 2등차를 연결(동광신문)

첫 기사는 광주의전의 승격운동이 일어나던 1946년 경 전남 각 지역에서 벌어진 모금운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수부의 모금액은 광주와 목포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지역과의 금액의 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물론 이러한 기부액의 차이가 각 지역의 경제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여수지역의 기부액수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여수지역에는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자산가가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수지역에 부유한 자산가가 많다는 것, 또 여수항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과 해방 직후 여수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자산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여수항을 통한 거래도 활발하며, 그만큼 일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지역민들 역시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식량부족이었다. 이 문제는 비단 여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1946년의 10월인민항쟁이나 1947년의 ‘3·22총파업’ 시의 시위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인 상황이었다. 1947년까지 여수지역에서 이에 대한 불평이나 시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1948년에는 여수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발견된다.

당시는 식량을 배급하던 시기였는데, 여수지역에서 19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8만 여수 읍민의 원성이 높았던 것이다. 당시 2기분 배급식량으로 백미 2,900포와 잡곡 4,200포, 합계 7,100포를 도정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데,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식량영단이 가공을 의뢰한 공장에서 쌀을 빼돌리고 대신 모래를 채워놓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 천 가마니씩 착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수 지역민들은 당국에 대해 원성이 자자했다(안중철, 2000). 타 지역에 비해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롭거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당

국에 대한 불만은 매우 심했던 것이다.

4. 해방 이후 여수지역의 사회운동

1) 사회운동 조직

전남의 동부지역은 해방 당시부터 미약한 조직적 역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익세력에 비해 좌익세력의 힘이 약한 지역이었다. 또 세력이 약해서인지 좌익세력이 별 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던 곳이며, 그에 따라서 미군의 탄압도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타협적이고 온건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은 특히 여수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그러한 특성은 먼저 여수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수지방의 건준은 8월 20일 경에 조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 2) 여수 건준의 직책과 구성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정재완	대학 중퇴, 독립운동 경력, 천일고무공장 관리직, 한독당
부위원장	이우현	수산학교 졸, 정미소 경영, 한민당
총무부장	김성택	인쇄소 경영,
재정부장	김정평	동경유학, 대지주 집안,
문화부장	김문평	대지주 집안
관리부장	김경택	일제시 도평의원
민생부장	연창희	광주사범 졸, 교사, 김영준의 후원으로 화신백화점 운영
노동부장	이창수	공산주의자,
치안부장	김수평	명치대 졸, 대지주 집안의 서얼

* 안종철(1990; 1991; 2000), 전남일보광주현대사기획위원회(1991), 김득중(2004)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하였다.

여수 건준에는 이외에도 안종호, 김우성, 김관평, 조종웅, 정태식, 여도현, 오두영, 이용기, 김종균, 박채용, 강제주, 김한희, 문제호, 남병일, 정경수, 김득평, 김정식, 장기, 이기조, 이흥근 등이 참여하였다(안종철, 1991: 95쪽). 건준 구성원들의 주요 경력을 통해 볼 때 전체 9명의 간부 중 이창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산가 출신이라는 점

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만큼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주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정치적 이념으로 보더라도 이창수를 제외하면 모두 당시의 정치적 국면에서 우파의 핵심인물이거나 최소한 우파세력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사들이었다. 훗날에는 좌파로 분류되는 김수평도 이 시기에는 중도적인 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옳으며, 좌파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여수 건준은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해방 직후 여수지역의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청년들의 조직화였다. 즉 해방청년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문성취, 주선본, 조근명, 정기만, 이형곤, 황상기, 정효근, 김수옥, 김근두, 권영수, 김생일, 서종현 등 여수·여천지역의 청년 33명이 조직을 결성하고, 여수시내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검은 셔츠와 제복으로 통일된 복장을 하고 군대식의 상명하복 규율체계 아래에서 행동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전게서: 94-95쪽). 하지만 이들 청년들의 정치적 지향은 분명치 않으며, 좌나 우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반민족인 세력들을 증오하는 정도의 민족주의세력으로, 그리고 지역방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착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¹⁰⁾.

한편 여수 인민위원회(이하 인위)는 우파 세력이 우세한 건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로 구성되었다. 현재 그 구성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증언들을 정리한 자료¹¹⁾에 따르면, 주요 참여자는 김수평, 김정평, 이용기, 이창수, 여도현, 유목윤, 박채영, 주원석, 이윤구 등이다. 이들의 정치적 지향도 분명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일제 하에서 독서회 등의 활동을 했던 인사들, 또 적색노조준비위 등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지역 사회운동의 맥을 잇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좌파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건준에 참여한 인사들에 비하면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 일제하 사회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45년 말의 상황에서 곧바로 좌파 인사로 분류할 수는 없다. 심지어 인위에는 일제하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우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기와 같이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10) 김득중(2004)은 이에 대해 김수평 등과의 관계와 여수 인민위원회의 선전활동에 대한 이들 청년단체의 지지 등을 근거로 이들의 활동을 좌익활동으로 규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수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조직화된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좌익진영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군정 당국과 김수평의 관계 등을 볼 때, 이들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시 친일의 흔적을 불식할 수 없었던 우파 세력들이 이들 청년단의 민족적인 색채에 대해 좌파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1991), 안종철(1990: 1991) 등은 주요 내용이 현지 증언자의 증언을 정리한 것들이다.

그런 만큼 인위는 여수지역의 민족주의적인 인사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 민중들의 일반적인 지향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서울에서 1945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여수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중립적인 인사인 여도현과 대지주 집안인 김정평(김남식, 1988)이라는 사실은 여수 인위를 좌익인사들의 모임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이에 반해 한편 해방정국에서 우익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의 경우는 건준이나 인위와 달리 처음부터 여수지역에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1945년 9월 말 한민당 광주시당이 결성되고,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의 군당이 결성되었는데, 여수지역에서는 김문평을 중심으로 한민당 여수군당이 결성되었으며, 순천지역에서는 김양수를 중심으로 순천군당이 결성되었다. 또 다른 우익정당인 한독당의 경우에는 한독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당시 광양지역에 거주하던 이은상이 선출되었으며, 결성식 사회를 본 것도 광양의 정순모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 동부지역의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수에서도 정재완이 이 결성식에 참여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독당 여수군당 역시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안종철, 1990: 25-26쪽).

이와 같이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5년 말까지 여수지역에서 형성된 정치세력들의 구도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해계모니였다는 것이 타당하며, 1948년이 올 때까지 그러한 구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즉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8년 초까지 여수지역의 정세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이 이 지역에서는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한대로 이 지역을 담당한 69군정중대가 해군 출신으로 온건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지역의 정세가 특별히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수지역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지형이 바뀌게 된 것은 단정단선반대운동이 진행되면서 부터였다. 여수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조직적인 수준에서 해방 직후와는 다른 증언이 나온 것은 1948년 여름에 진행되었다는 지하투표와 관련해서이다. 1948년 당시 전남 동부지역의 도당 오르그(조직책)였다는 윤기남은 당시 순천에서 실시된,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8·25 지하연판장 선거’에서 60%가 넘게 투표에 참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윤기남.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여순사건이 끝난 뒤 구례지역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조사했으며, 그 명부가 ‘지하연판장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¹²⁾, 윤기남의 증언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런 투표가 가능할 정도로 전남 동

부지역의 조직력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동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여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항의 사례들, 예를 들면 여수 인근에서 인공기가 게양되거나 봉화불이 켜지는 것은 그러한 조직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주요 사건과 여수

여기서는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여수지역의 정세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수지역의 조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해방 직후의 여수지역은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한 채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 등을 중심으로 한 우파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여수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이 1946년 10월 인민항쟁 시의 봉기 발생지역이다. 당시 섬인 진도와 완도를 제외하고, 전남의 모든 군에서 항쟁이 발발하였으며, 심지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6개 군에서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그림 2).

그림 2) 1946년 10월 인민항쟁 시 전남지역의 봉기 발생지역



* 자료: 안종철(1990: 115쪽)에서 재인용.

12) 구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여순사건 직후 군인들이 남로당 입당원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최정기 외, 2008: 29쪽). 그러나 그 수가 한 마을에서 다수이며, 본인이 입당한 지도 모르고 있고, 그 시기가 지하투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그것이 지하연관장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여수지역에서는 봉기를 주도할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또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정치적 구도가 10월 인민항쟁이 종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의 여수 관련 신문기사들을 보자.

1947. 5. 8. 여수 노총 주치로 오동도에서 메이데이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공장 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망라하여 2만 여 명의 회중이 참집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여흥으로 남자부에서는 씨름대회, 여자부에서는 석사(石射)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동광신문)
1947. 8. 31. 순천군내에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전재민, 실업실직에 방황하고 비참한 상태,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알선하는 독지가. 천일제재공장 지배인 이용기, 사장 김영준, 1천여 명의 공원과 그 가족에게 도움 (동광신문)
1947. 11. 5. 민족청년단 여수단부에서는 지난 26일 여수극장에서 무료 공개로 시민음악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조선 명창 김연수와 명창 김○○ 양인의 특별한 찬조출연으로 --- 단원 조양래씨의 --- 동단 창립1주년기념대회 참가보고와 여단원 박달○씨의 제7기훈련수료의 감상담---(동광신문)
1947. 11. 20. 11월 30일자로 여수극장에서 한민당여수군지부 창설 1주년 기념식 거행(동광신문)
1947. 12. 19. (18개 군단이 결성을 마친 상태에서) 여수 광양 양군 대동청년단 결성, 여수단장 문균, 부단장 김수옥, 김수인(동광신문)

가장 주목이 가는 기사는 1947년도 메이데이 행사와 관련된 기사이다. 그날 여수 오동도에서 좌익계 노동운동 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에 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한독립촉성노동조합총연맹(노총)이 주도하는 행사에 2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는 씨름대회와 석사대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즉 여수지역에서는 좌파의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마저도 우익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세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천일고무공장 사장 김영준이었다. 한민당 여수 지구책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 굴지의 자산가였고, 또 당시로써는 보기 드물게 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행하였던 김영준의 태도가 여수 지역의 우파 헤게모니 장악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그 뒤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김영준이 순천지역 전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기 공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필수품까지 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대로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익세력의 힘을 강화시키고, 좌익세력들의 근거지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시기 우익세력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신문기사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여수지역에서는 민족청년단(이하 족청)에서 무료로 시민음악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당한 재력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명창 등을 출연하게 하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 신문기사에서는 “7기 훈련수료의 감상담”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로 볼 때 당시 족청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단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당시 여수지역의 우익 청년단 조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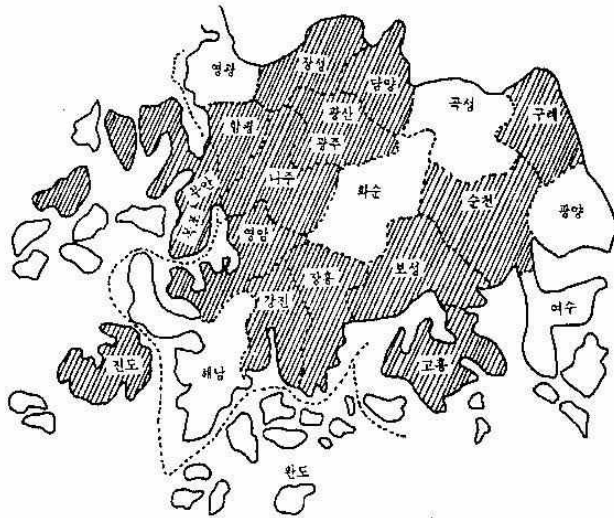
정치적으로 평온하던,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의 정치적 구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47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순천군 내에서도 특히 보성이나 광양, 구례 등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1947년 순천에서는 좌익세력들에 의한 3·1절 시위가 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3월 22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총파업에서도 순천지역에서는 참여 움직임이 있었으며, 메이 데이 때도 송광지서 관내에서 수 천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기차를 경비하던 국방경비대가 습격을 받아 군인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수시로 순천시내 각급 학교에서 정치적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검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¹³⁾. 그러나 여수지역에서는 이 시기에도 별다른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동부지역 내 정치적 구도의 차이는 1948년의 2·7구국투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그림 3). 그에 따르면 흔히 동부 6군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서 여수와 광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봉기들은, 이미 1947년 초부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저항 사례들에서 표출되었듯이, 이 지역 좌파 진영의 힘이 강력해진 결과이며, 또 당시 전남지역에서 보이는 미군정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파도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파도는

13) 이상의 내용은 1947년도 동광신문의 3월 6일, 27일, 4월 10일, 5월 3일, 8월 3일, 27일, 10월 11일자 기사를 참조하였다.

당시 여수에도 이미 도달한 상태인 것 같다.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저항의 양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파도가 아직 여수에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2·7구국투쟁 시에도 여수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수에서 이 시기에 철도 및 항만노조 5,000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투쟁이 있었다(김득중, 2004)고 하지만, 그것이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림 3) 1948년 2·7구국투쟁 시 전남지역의 봉기 발생지역



* 자료: 안종철(1990: 116쪽)에서 재인용.

그것은 여수지역의 경우 2·7구국투쟁이 종료된 후에도 한동안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익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당시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신문기사들에서 확인된다.

1948. 2. 28. 지난 10월 13일에 동부 6군에서 소년군 발족(동광신문)

1948. 3. 19. 민족청년단 여수단부에서는 지난 15일 여수극장에서 도단장 주봉식씨와 총본부 여성부장 김현○, 도단부 여성부장 유충희씨를 맞이하여 여성부 결성(동광신문)

1948. 4. 3.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여수지부에서는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여수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지부장 문○○, 부회장 전신덕, 총무 김필순(동광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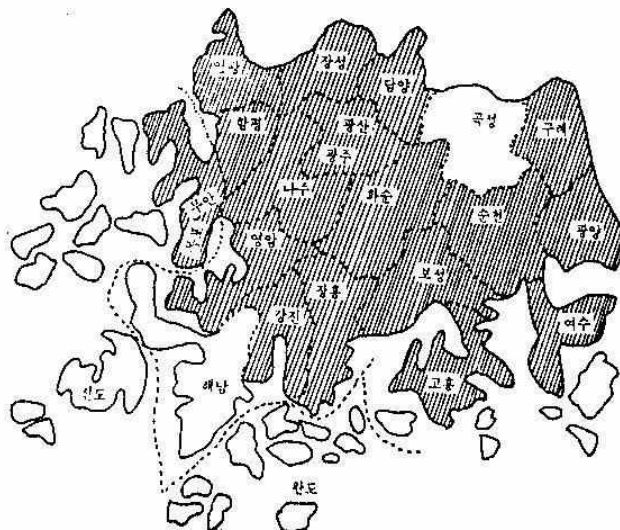
1948. 4. 3. 여수 건국청년회 김봉채 회장 이하 30여 명은 지난 28일 구봉산 등반대회(동광신문)
1948. 4. 8. 한민당 여수군지부 집행위원회(지부장 김영준)(동광신문)
1948. 4. 28. 민족청년면단 순천군 해룡면에서 결성식(동광신문)
1948. 4. 30. 여수대동청년단 진용 개편, 단장 연창희, 부단장 장중채, 사무국장 김태규 등(동광신문)

그러다가 여수지역에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1948년 4월 초였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1948. 4. 8. 2·7폭동사건 이후 각지에서 준동하는 파괴분자는 금반 여수에도 출현하여 일당 5명을 여수경찰서에서 3월 30일 새벽 5시에 일망타진하였다. 즉 여수읍 문수리 강용수(27), 동산동 전형남(28), 교동 신종식(20), 동산동 유목남(24), 공화동 조재윤(26) 등 5명은 일본도 네 자루를 소지하여 강도 및 요인암살을 계획, 그들은 남로당 결사대로 이전에 철도를 파괴한 바 있음(동광신문)
1948. 5. 16. 지난 8일 하오 8시경 여수 인근 10여개 산에서 봉화(동광신문)
1948. 9. 26. 여수 국기게양대에 인공기 게양(호남신문)
1948. 10. 7. 포고령 위반자 중 4명 사면 석방(호남신문)

여수지역에 이른바 남로당 결사대로 불리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철도를 파괴한 적이 있으며, 요인 암살 및 활동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흐름만으로 여수지역의 정치적 구도가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뒤의 신문기사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여수지역의 정치적 지형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10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봉화불이 여수 인근의 산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또 국기게양대에 인공기가 걸려 있기도 했다. 당시 봉화불을 올리는 방식과 인공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좌익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였다. 그동안 우익에게모니 하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여수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곧바로 봉기발생 지역의 변화로 나타난다(그림 4).

그림 4) 1948년 단정단선반대운동 시의 전남지역 봉기발생지역



* 자료: 안종철(1990: 116쪽)에서 재인용.

1948년에 발발한 단정단선반대운동에서는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모든 군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여수에서도 여수중학교, 여수농업학교, 여수여중 등 3개의 학교가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5월 10일 선거 당일에는 돌산면 죽포리에서 수십 명의 군중들이 투표소를 습격하여 방화하다가 30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인공기 게양이 여수에서도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행위였다(김득중, 2004: 27쪽). 이제 여수지역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었으며, 그들을 변화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분단국가의 수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어

여수지역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부흥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 및 교통이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별로 크지 않았던, 따라서 도시적 정체성이 거의 없었던 여수가 일제시기에는 불과 20년 정도의 사이에 급속하게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그것도 행정도시가 아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토대로 하는 도시화였다. 따라서 일제 시기의 여수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다.

한편 일제하 여수지역의 사회운동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별다른 조직이나 사건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도시적 정체성이 별로 없는 만큼 사회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도 별로 없었으며, 경제적인 풍요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여수지역에서 최초의 사회운동이 나타난 것은 1930년대였으며, 그것도 겨우 5-6년에 불과한 기간이었다. 또 사회운동이 지역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도 그렇게 큰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운동의 주도 인물들이 향후 여수지역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여수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교역이 활발한 상태였으며, 그런 만큼 여수지역에는 부유한 자산가들이 많이 있었다. 또 이들 자산가들의 사회적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으며, 다른 지역 자산가들에 비해 지역민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 시기 여수지역에서 주목할 부분은 항구의 발달이었다.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여수항은 귀환동포로 붐볐으며, 미군의 물자 수송과 해산물의 거래로 여전히 많은 사람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수지역의 사회운동 역시 1947년까지는 일제시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여전히 우익 해계모니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7년까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발생사건의 측면에서나 여수에서 이러한 우익 해계모니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변화가 시작된 것이 1948년 초였다. 단선단정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수지역에서도 봉화불이나 인공기 게양, 시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을 주도한 것은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저항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점차 좌파의 색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과 함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당시의 이슈에 대해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내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수지역의 정치적 지형변화와 여순사건을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이 글을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여수지역의 해방정국과 여순사건은 아무런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은 여수라는 지역의 토대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과는 전혀 다른 무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1967.
- 김계유 편저. 『여수 여천발전사』. 반도. 1988.
- 김남식. 『남로당연구 I』. 돌베개. 1984.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석학·임종명. 『광복30년 1』. 전남일보사. 1975.
- 김점숙. 「192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 -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소. 『한국 근현대 지역운동사』 II. 호남편. 여강. 1993.
- 광주일보사. 『광주·전남 100년 연표, 1900 1993』. 1993.
- 신주백.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선인. 2005.
- 안종철.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광주·전남 지방현대사 연구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 1991.
- _____.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2000.
- 여수·여천군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군향토지』. 1982.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1집. 1998.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자료집』 2. 1999.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3집. 2000.
- 여순사건진상조사위원회. 『여순사건 순천지역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여순사건화해와평화를위한 순천시민연대. 2006.
- 윤기남. 「내가 겪은 여순사건①」.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1997.
- 이균영. 『신간회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기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I』.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6.
- _____. 『해방전 정당·사회단체 연구참고자료 -초기공산주의운동을 중심으로-』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 정근식·김민영·김철홍·정호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 1995.
- 최정기 외. 『전쟁과 재현』. 한울. 2008.
- 홍영기 책임편집. 『여순사건자료집 I -국회속기록·잡지 편』. 선인. 2001.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 광주민보. 1945년 11월 - 1946년 5월.
- 동광신문. 1946년 6월 - 1948년 6월.
- 호남신문. 1948년 7월 - 1948년 10월.

여순내란 진압의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

김 무 용 (진실화해위원회)

1. 종합적인 군사훈련장으로서 여순사건
2. 군인봉기의 내전화와 대항 게릴라 작전
 - 1) 내전에서 게릴라전으로의 이행
 - 2) 대항 게릴라 전략의 개념과 적용과정
3. 대항 게릴라 작전의 내용과 초토화 정책 실시
 - 1) 작전과 주민통제 수단으로서 계엄령
 - 2) 초토화 정책과 부락방화, 가옥 소각
 - 3) 통비부락 소개정책과 집단부락 건설
4. 비민분리 정책의 실패와 민간인 희생화 전략

1. 종합적인 군사훈련장으로서 여순사건

1948년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반공이 체제이념이자 삶의 기준으로 구체화되는 중요 계기였지만, 한편으로 군경의 토벌작전, 대항 게릴라 작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순사건은 첫째로 제주 4·3사건에 이어 육지에서 민간인, 게릴라를 상대로 하는 비정규전, 게릴라전이 본격 수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군은 비록 4·3사건 토벌에 참여했지만, 대항게릴라 작전의 개념과 전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군이 여순사건에서 응용하고 적용한 대항 게릴라 작전의 내용과 전술은 이후 육지에서 대항 게릴라 작전의 기본교리가 되었다.

둘째, 국군 입장에서 여순사건은 최초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군사훈련 무대였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제주 4·3사건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전투경험이 부재하였고, 자체 군사전략과 전술을 실전에 적용하여 전투한 경험이 없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여순사건

1) 당시 국방경비대의 기본훈련은 1949년 3월 말에 완료되며, 대대 연대급 훈련은 6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주한미특별대표부 무초특사와 유엔한국위원단 호주대표 쇼의 한국정세에 대해 대담」 (1949.2.7), FRUS 1949, 953~955쪽,

의 토벌작전에는 미군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합적인 실전경험을 쌓았다.²⁾

국군은 여순사건 토벌에서 작전공간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3개도 지역으로 확대된 전장에서 유기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종합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육군참모부장 정일권은 여순사건에서 비롯된 지리산지구 전투는 “국군의 전체면에서 볼 때 하나의 작전 이라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며 전초전의 성격도 못되는 한 개의 큰 훈련”이었다고 평가하였다.³⁾ 채병덕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숙군을 단행하여 인적 요소요소를 갖추는 한편, 그동안의 토벌전에서 전투 능력을 함양한 국군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모든 작전 태세를 완비”하여 “지리산·제주도 혹은 38선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훌륭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강문봉은 “작년 4월(제주 4·3사건-필자) 이래 군은 누차의 토벌전을 계속해 왔으나 10월 반란사건 때에는 전술상으로 말하는 작전까지에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準作戰을 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⁴⁾ 해군제독 손원일은 해군은 “여순사건 당시 육군의 상륙작전에 호응하여 군대수송 등에 노력”했으며, 특히 여순사건에서 “비로소 상부로부터의 備砲허가를 받고 그 후 2일 간이란 단시일 내에 造兵廠의 전 능력을 동원하여 대포를 설비하고 육군의 수송 옹호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 주한미군사령관 콜터도 여순사건에 대해, “기본훈련에 그리 틀리지 않고 전투에 경험도 없는 국군대원들은 최초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하였다.⁶⁾

지금까지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 인민위원회 활동, 숙군, 국가보안법 제정을 비롯한 반공체제 구축, 국가와 민족담론의 생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⁷⁾ 이 글에서는 국군의 여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채택하였던 대항 게릴라

2) 여순사건에서 항공대는 반란군의 정찰, 수색, 권고문 살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해군함정은 전남지구 해안선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순사건 관련 국방부 발표 제2호』, 『서울신문』 1948.10.24) 또 1948년 10월 20일~11월 6일까지 해군은 함정 9척, 인원 268명(연척수 115척, 연인원 2,941명)이 참가했으며, 포로 176명의 전과를 올렸다. 『해군작전 전과현황』, 『시정월보』 제3호(1949.3.31), 61쪽.

3) 「〈국군의 방위 태세는 완벽 : 국방부 수뇌부와 본사 좌담회〉」, 『연합신문』 1949.5.26.

4) 「〈국군의 방위 태세는 완벽 : 국방부 수뇌부와 본사 좌담회〉」, 『연합신문』 1949.5.26. 특히 “인적 구성”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편성·훈련·장비 등에 있어 당면한 적에게 대하여 충분한 물량적 여유를 가졌으므로 해서 작전에 지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5) 「〈국군의 방위 태세는 완벽 : 국방부 수뇌부와 본사 좌담회〉」, 『연합신문』 1949.5.26.

6) 「콜터 주한미군사령관, 여순사건에 대해 발표」, 『한성일보』 1948.11.6.

7)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종명,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64호), 2003 ;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서중석, 「정부수립 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90, 1995 ; 안진, 『미군정기 억압기

작전의 내용과 개념을 주요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서구나 아시아 지역의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계엄령, 초토화 정책, 부락소개와 집단부락 건설, 그리고 비민분리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작전개념과 정책은 만주 등지에서 일본군 경험에 있던 국군 지도부에게 익숙한 내용이었다.

역사적으로 내전은 폭력의 극단성과 야만성, 그리고 잔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였다. 내전에서 극단적인 폭력의 야만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비전투원인 민간인 희생의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대개 민간인을 군사작전의 계획적인 목표로 설정한 결과였다.⁸⁾ ‘여순사건’이 내전으로 발전하고 게릴라운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은 군사작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은 대항 게릴라 작전과정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대량학살을 단순한 작전상의 오류가 아닌 민간인 희생화(civilian victimization)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손실이 많은 지구전이나 소모전에서 국가는 필사적으로 승리하거나 군인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개 민간인의 목표화, 민간인의 희생화를 작전으로 채택했다.⁹⁾ 이러한 접근은 여순내란 진압작전, 그리고 이후 산악지역의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대량학살의 상호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군인봉기의 내전화와 대항 게릴라 작전

1) 내전에서 게릴라전으로의 이행

여순사건은 14연대 군인봉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 좌익세력과 결합되면서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은 20일 오전 11시 경 여수 경찰서를 방화하여 불태우고 여수시를 점령한 뒤 곧 읍사무소에 보안서를 설치하고 지방민과 합세하여 한민당·대청요인과 경찰관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군청 은행 회사 등 주요 기관을 접수하고 인민위원회 등의 간판과 인공기를

구 연구』, 새길, 1996 ; 정석균,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 여·순반란군 토벌을 중심으로」, 『군사』 19, 1989 ; 안종철, 『광주전남지방 현대사연구』, 한울, 1988 ;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사, 1988 ;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 김점권, 『한국전쟁과 남로당 전략』, 박영사, 1983.

8) Stathis N. Kalyvas,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Cambridge Univ. Press, 2006, p. 54.

9) Alexander B. Downes, Restraint or Propellant? Democracy and Civilian Fatalities in Interstate War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6(Dec., 2007), p. 873.

내걸었으며, 지방 민청원과 중학생을 모아서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반군은 지방인민을 중앙광장에 모아놓고 인민대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부진을 선거하고 곧 시가행진을 벌였다.¹⁰⁾

중앙동 광장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민대회에서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¹¹⁾ 인민대회에서는 노동자대표, 학생대표, 여성대표, 남로당대표 등이 번갈아 연단에 올라 청중의 박수속에 연설했다. 대회에서는 과거 좌익활동에 따른 “혹독한 고문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어 이웃 간에 소문이 있던 파리한 사람들이 막(幕)을 제친 듯” 등장하여 인민위원회·민애청·민주여성동맹·합동노조·교원노조·철도노조 등의 깃발을 들고 나왔다.¹²⁾ 인민대회에는 14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지창수 특무상사를 비롯하여 군인들과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운동을 해온 이용기(李容起), 이창수(李昌洙), 김수평, 주원석(朱元錫), 유목윤(兪穆允), 김상렬(金相烈), 김현수(金炫洙), 강대훈(姜大勳), 서종현(徐鍾鉉) 등이 나와 있었다.¹³⁾

이어 23일에는 최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익인사 9명을 총살하였다. 이들은 주로 한민당 여수지부장·대한노총 여수지구 위원장·경찰후원회장·CIC 여수주재원·사찰계형사 등이었는데, 이는 반란군과 지방좌익이 추구하는 적대적인 계급정치의 성격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¹⁴⁾

또한 식량창고를 열고 전 시민에게 백미 3합 식을 배급하는 한편 천일고무 공장에서 흰 노동화를 몰수하여 반군과 의용군 및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천일고무 등 주요 생산공장을 종업원에게 운영권이 위임되었다.¹⁵⁾ 또한 접수한 은행에서는 「인민위원회」의 결재로 개인 및 단체에게 「정액의 대출(貸出)」을 하였다.¹⁶⁾ 산업기관의 접수와 노동자 경영은 혁명시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좌익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봉기세력은 여수와 함께 순천에서도 우익요인·경찰관가족을 처형한 뒤, 경찰서, 군청, 읍사무소, 전기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접수한 후 인민공화국 국기 및 간판 등을 게양했으며, 계엄령을 발포하여 당지 재판소를 인민재판소로 개칭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⁷⁾ 이어 당시 경찰, 우익정당·단체,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부근 주민에게 분배

10) 이재한, 「전남반군의 진상」, 『개벽』 80호, 1948.12.

11) 의장단 선거는 이미 준비한 인명을 부르고 박수로써 가결하는 형식이었는데, 李容起·朴采英·宋郁·兪穆允·文聖輝·金貴榮의 5인이 선거되고 人委의 간부는 의장단에 일임키로 결정되었다. 「여순사건, <여수·순천 현지 르포>」, 『조선일보』 1948.11.3.

12)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1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36~137쪽.

14)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15) 이재한, 「전남반군의 진상」, 『개벽』 80호, 1948.12.

16)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하였다.¹⁸⁾ 여순 내전에서 나타난 좌익세력의 정치는 대개 해방직후 시도했던 전통적인 혁명 프로그램에 근거해 있었다. 이는 해방공간에서 실패한 혁명을 만회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성격이 강했다.

반란세력이 점령한 여수에서 대중들의 흥분과 열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였다. 여수는 새로운 세상과 해방을 꿈꾸는 공화국이 되었다. 특히 반란군의 선전 속에 대중들은 흥분하였고, 새로운 공화국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다. 주민들은 “외계의 다른 통신은 하나도 없고 다른 보고는 없고, 완전하게 인민공화국이 되었다는 생각” 아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봉기세력을 환영하였다.¹⁹⁾ 반란의 첫날이 저물어 갔지만, 사람들은 반란으로 펼쳐진 “새로운 이변(異變)” 속에서 ‘눈을 감은 채 흥분으로 오래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²⁰⁾

여순내전은 과거 억눌린 자들이 복귀하는 해방의 공간이었다. 21일부터 반란군의 “모든 기관은 일제히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과거의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반동분자」의 「적발」이 계속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해방」이 된 작부(酌婦)들은 「남성동무」들과 「찌-프」차를 어엿이 같이 타고 3색 인공기를 흔들었다.²¹⁾ 여수와 순천에서 이른바 인민재판의 재판관은 고용인이나 좌익학생들이 도맡았다. 또 읍장이나 군청의 주요 인사들의 취조는 그 기관의 급사나 심부름꾼이 해냈고 자본가들의 죄상 또한 그 집의 남녀 종업원에 의해 들춰졌다. 그들이 바로 총살형을 내리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집행까지도 한 것이다.²²⁾

여순내전에서는 많은 우익인사들이 ‘악질반동’으로 규정되어 참혹하고 잔인하게 처형되었다. 이는 계급정치로서 여순내전이 지니는 잔인성과 적대의 정치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해방 후 좌우대립과 투쟁, 정부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형성된 적대와 분노는 여순사건이라는 내전과정에서 계급의 적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로 폭발하였다. 우익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원시적으로 표출되었다. 곧 ‘칼로 전신을 찌르고 망치로 구타하여 기진맥진한 다음에 총살하여 10자로에서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는’ 야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²³⁾ 여수경찰서 양발원 서장은 두 눈이 뽑힌 채 차에 매달려가면서 참혹하게 죽었는가 하면 한운경(韓雲京) 검찰서장은 총살당한 후에 콜타르로 불태워지기도 했다.²⁴⁾

17) 「반란사건 상황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89호, 1948.10.26.

18) 「여순사건, <기자 현지답사 : 계엄령 선포된 순천의 거리 표정>」, 『세계일보』 1948.10.28.

19) 「반란지구 현지조사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4호, 1948.11.2. ; 「여순사건, <기자 현지답사 : 계엄령 선포된 순천의 거리 표정>」, 『세계일보』 1948.10.28..

20)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21)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2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4~145쪽.

23) 현운삼,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대호』, 1948.12월호.

반란세력의 우익에 대한 잔인한 행위는 순천에서도 재연되었다. 특히 순천경찰서장 양계원에 대한 총살형은 가장 처참하였다. 반군은 그를 시내에 끌고 다니며 “나는 순천 군민의 고혈을 빨은 서장이요”라고 외치게 하고 만일 연속해서 외치지 않을 때에는 청년학생들이 주위에서 죽창으로 찔렀다”고 한다.²⁵⁾ 이러한 내전시기의 잔혹성은 계급의 적에 대한 적대와 원한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억눌렸던 과거에 대한 보복의 표현이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여순내전의 참여세력을 남로당 간부급인 지도층, 민애청을 비롯하여 실제 행동에 나선 행동층, 무지한 군중이 대부분인 맹목층·하부층 세가지로 분류하였다.²⁶⁾ 또한 같은 구분이지만, 반군세력이 점령한 전남 동부지역도 여수, 순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도층, 행동층, 단순가담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지도층은 반군 점령지역에서 수립된 인민위원회의 지도부를 형성했던 인물들이며, 행동층은 민애청원, 협동노조, 철도노조, 교원노조, 지하 좌익단체, 청년단체, 학생층으로서 사건 당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층이었다. 단순가담층은 대체로 농민이었다. 농민층의 참여는 지주-소작제에 따른 계급갈등 속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세우는 남로당의 토지정책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⁷⁾

‘여순사건’은 비록 14연대 군인봉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 좌익 및 민중과 결합하면서 내전으로 확대 발전되어 갔으며, 이는 계급과 세력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당시 정부도 여순사건의 내전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었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여순사건은 “지방민중이 주동되어 가지고서 郡 내부에서도 반란 분자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민중이 주체성적 권력을 취해서 사건을 폭발”시킨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²⁸⁾ 국회에서도 반란은 민중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 일어났으며(김명동 의원), 반란이라는 폭발물에 불을 붙인 것은 공산주의자이지만, 폭발을 시키는 데에는 “민중의 불만과 불평”이 중요한 원인(조헌영의원)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²⁹⁾ 따라서 여

2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4~145쪽.

25) 「여순사건, <기자 현지답사 : 계엄령 선포된 순천의 거리 표정>」, 『세계일보』 1948.10.28.

26) 현운삼,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대호』, 1948.12월호.

2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70~171쪽.

28) 그는 여순사건의 “조직적 상태는 여수의 면모만을 보고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순천·보성 등지에서 반군이 나기 전에 여기 저기에 무기 준비·쌀 몇몇 가마·인민해방군을 환영한다고 하는 기빨·인민공화국의 기·그 발동시의 대열 이것이 전부 다 조직되고 다음으로 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벌써 인민군 딱딱 조직되어가지고서 나오는데 그 인물들하고 과거에 인민공화국 때에 그때 선발되었던 간부를 요것들이 불려오는 대로 조직을 짜고 들어가자 경쟁을 해가지고 올리고 인민재판도 판결방법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29) 「반란사건 수습대책에 관한 건」, 『제1회 국회속기록』 제91호, 1948.10.29 ;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결의안」, 『제1회 국회속기록』 제97호, 1948.11.6.

순사건에 참여한 1000여 명이 모두 공산계열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순천 여수에 있는 민애청이라든지 공산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최윤동 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

여순사건 진압작전은 군인봉기가 내전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군의 여순사건 진압으로 “반란지구에 있는 여수 순천 집단부대 만은 확실히 분산”되었으나, 이는 “마치 양철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사면팔방으로 뿌려논 것에 불과”(조국현 의원)했다.³¹⁾ 여수 순천에서 시작된 내전은 반란군의 이동에 따라 전남 동부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반란군이 점령한 보성에서는 “시민들이 환영하여 무혈 진주”하였다.³²⁾

정부군의 진압작전으로 여순내전에서 나타났던 공화국의 꿈은 산산 조각났다. 짧은 내전기간 동안 좌익세력이 상상하던 “184시간의 공화국의 꿈”³³⁾은 정부군과의 치열한 전투와 게릴라전 속에서 깨어져 갔다. 여순사건의 내전적 성격은 정부군의 진압작전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침 부산에서 파견된 해군부대와 국방경비대 병력 일부는 육해군 합동으로 여수상륙을 시도했으나, 반란군의 역습을 받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가운데 퇴각했다. 또한 순천 남쪽에서는 1개 대대병력 이상의 진압군들이 장갑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여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으나, 시내에서 5마일 떨어진 미평 부근에서 반란군의 매복에 걸려 퇴각하였다.³⁴⁾

국군의 첫 번째 진압이 좌절되자, 정부는 여수탈환에 최대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국군 진압부대는 27일 새벽 작전을 시작하여 여수 시가의 한복판에 있는 인민군 사령부를 지향하여 4방면에서 포위공격을 시작하였다.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총 사령관 및 白소령 지휘 아래 관군의 보병대는 총약진격하여 반란군을 격파하고 여수 시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전투는 여수점령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다. 이 전투와 동시에 읍사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인민위원회·보안서로 몰린 일부 반군도 공격 소탕하였는데 이곳의 전투 역시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었다.³⁵⁾

국군의 진압작전에서는 내전과정에서 급진 좌파정치의 이상을 행동으로 옮긴 젊은 집단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국군의 23일 총공격 개시 이후, 시가전이 전개되었는데, 진압군은 “반군 외에 무기를 소지한 적의 치안대·학생·민애청원들도 대항”하였으므로 “가

30) 「반란지구 현지조사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4호, 1948.11.2.

31)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호, 1949.1.27.

32) 「金炯元 공보처차장, 여순사건은 현지 좌익분자들의 계획적 음모라고 주장」, 『서울신문』 1948.10.29.

33)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3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38~139쪽.

35) 「여순사건, <반군의 본거, 여수소탕전 詳報>」, 『호남신문』 1948.10.30.

가호호를 수색”해야 했다.³⁶⁾

국군의 발표에 따르면, 여수진압작전 과정에서 국군과 전투를 벌인 “여수저항부대”는 “반란군 3명 미만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 지휘하의 시민부대”였으며, 특히 “남녀 중학생의 집요한 저항에 봉착”하였다.³⁷⁾ 국군 진압부대의 토벌에 맞서 “여수를 방어하는 사람들은 약 천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남로당 활동가들, 그리고 청년단체원”들이었다.³⁸⁾ 진압군은 가는 곳마다 이들을 제압했으나 때로는 반란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기로 무장한 ‘치안대’ ‘민애청원’(민주애국청년동맹원) 등 좌익 계열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교전을 치르기도 했다.³⁹⁾

육군 총참모총장 송호성은 25일 교전 중인 여수읍내까지 출동하여 상황을 시찰한 후, “시가전투가 반군진압작전으로부터 완전한 봉기시민 소탕으로 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공격에 앞서 3차나 빠라를 뿌리는 등 반군측과 양민을 분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는 반도측 보안대의 방해로 말미암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했다.⁴⁰⁾

여순내전에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른 반란군과 좌익세력은 산악지역을 거점으로 한 게릴라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부에서는 여순반란을 김지회 휘하의 공산당원들이 무기를 획득하여 봉기한 반도의 협력을 받으면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⁴¹⁾ 14연대 군인들이 여수점령 이후 열차로 이동하여 순천을 장악했지만, 처음부터 “열차를 탄 반란군의 목적지는 당시 순천이 아니라 구례 쪽”이며 “지리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⁴²⁾

정부는 반란초기에 반란군의 광주 점령을 제일 우려했으나, 곧 “순천이 제일 중심 지대이며 앞으로 반란군이 지리산에 들어갈 염려”가 있으며, 지리산에 집결하면 공격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⁴³⁾ 정부는 여순사건 반란세력의 목표를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게릴라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곧 국군이 10월 24일 17시 20분 광양서를 탈환하자, 반란세력 1000여명은 “지리산에 입거를 극력 노력 중”이며, “지리산을 근거지로 제2 제주화”한다고 파악했다.⁴⁴⁾

36) 「金白—사령관, 여순사건 전투경과 발표」, 『동광신문』 1948.10.27.

37) 「여순사건, 金白—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3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38~139쪽.

39)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8쪽.

40) 「여순사건, 金白—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41)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4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4쪽.

43) 「반란사건에 관한 건」, 『제1회 국회속기록』 제89호, 1948.10.27.

44) 「반란사건 상황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89호, 1948.10.26.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반도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척수산맥을 이용해서 북과 연락을 취하고, 산맥을 이용해서 도처에 게릴라 거점을 잡아가지고 제주도사태를 남한각지에서 전개시킬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여수, 순천도 급하지만 우선 병력을 분할해서 지리산의 인구를 봉쇄하도록 작전명령을 내렸다.⁴⁵⁾

2) 대항 게릴라 전략의 개념과 적용과정

역사적으로 대항 게릴라전(counter-guerrilla warfare)의 전략과 작전개념, 그에 따른 군사교리는 강압적인 군사전략(coercive military strategy)에 기초해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적성지구(작전지구) 설정, 비민분리 정책, 초토화와 방화, 주민 소개와 집단 수용, 대민공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내용의 대항 게릴라 작전은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등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1940년대 동북지역에서 항일 게릴라 세력을 토벌할 때 채택하기도 하였다. 미군의 전통적인 대게릴라 토벌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군사지침은 이른바 ‘찾아서 고정시키고 싸워서 끝내는’ 4F 전술(Finding, Fixing, Fighting, Finishing), 또는 3F 전술(Find 'em, Fight 'em, Finish 'em)이었다.⁴⁷⁾ 4F 전술은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미 고문단이 원용덕 사령관에게 넘겨준 작전개념이었다.⁴⁸⁾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반란을 “단시일 내에 진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북은 남원·곡성, 서는 화순·보성, 동은 하동 방면으로부터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를 완전포위 봉쇄”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일부 병력을 남부 해안으로 상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⁴⁹⁾

국군 진압작전은 결국 27일 여수를 탈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반쪽의 승리였다. 당시 국방부는 여수진압 작전 과정에서 직접 작전지시를 내렸다. 곧 “사태가 중요하니까 시가전을 어떻게 작전하고 나가는 것까지 지도”했다. 이에 “시가 복판으로

45)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46) 벤자민 발렌티노 지음, 장원석·허호준 옮김,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Cornell Univ. Press, 2004, pp. 200~206.

47) Charles T. R. Bohannan, Antiguerrilla Operations,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41(May, 1962), p. 20.

48) 김·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184쪽.

49) 「반란군에 대한 李範奭 국방장관의 고시문」(단기 4281년 10월 22일 국무총리겸국방장관 李範奭),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서부터 공격하지 말고 시가주위로부터 복판을 봉쇄하는 동시에 집을 한집 한집씩 뛰어 넘어서 담구멍을 뚫어서 집을 연락시켜서 이 시가전을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⁵⁰⁾ 국군은 진압작전에서 "총력마다 수색"하여야 하였다.⁵¹⁾

국군의 진압작전은 순천이나 여수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이는 "반란군을 얹잡아 본 결과"였다. 순천에서도 처음에 실패하였고 여수에서도 23일경에는 완전 점령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일단 퇴각 당하였다가 작전도 바뀌고 인원과 무장을 보강시킨 후에 완전 탈환하였다. 정부는 이를 "초기의 온정적 작전에서 적극작전으로 전환한 까닭"이라고 설명하였다.⁵²⁾

특히 정부는 반군세력이 지리산에 입산하여 게릴라운동의 근거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꾀으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오판도 크게 작용했다. 초기에 반군의 광주점령이나 북상을 우려하였다. 정부는 반란군을 여수 순천에서 격퇴하자, 반군이 지리산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산악지대에 먼저 강군을 배치하고 광주 남원에서 남쪽에 있는 폭도들을 서남해안으로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⁵³⁾

결국 순천에서 북상한 반란군이 광양·하동 등을 휩쓸고 드디어 26일에는 구례에 나타나 많은 식량과 물품을 약탈하여 가지고 지리산의 입구인 노고산 중턱 봉우리인 문수리까지 침입함으로써 "국군의 미연방지책도 수포"로 돌아갔다.⁵⁴⁾ 당시 국군은 반란군의 북진을 저지하려고 전주-순천간 철도를 파괴하는 봉쇄작전을 폈다가 다시 복구 개통시키기도 했다.⁵⁵⁾

국군의 반군 점령지역 탈환은 한편으로 육지에서 지방좌익이 지역을 거점으로 게릴라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순 봉기세력은 이제 지리산을 근거지로 기존의 전술을 전환하고 정부군을 상대로 게릴라 전을 전개하였다. 곧 유격대는 지금까지의 "대대 단위의 대규모 부대를 동원한 공격전술을 버리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수의 소규모 부대를 분산시켜 기습하고 곧바로 퇴각하는 소위 '치고 달리기'식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대략 "각각 50여 명씩으로 구성돼 여덟 개의 부대로 나누어진 유격대는 보다 넓은 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유격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구례, 곡성, 장수, 거창, 함양, 산천, 진주, 하동, 광양 등지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식의 통치"를 지속하였다.⁵⁶⁾

50)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51)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52) 홍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월호.

53) 「李範奭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여순사건 경위와 성격을 설명」, 『자유신문』 1948.10.22.

54) 「여순사건, <지리산 전투 종군기: 方慶麟」, 『국제신문』 1948.11.2.

55) 「여순사건 관련 국방부 발표 제2호」(10월 23일 오전 8시 현재), 『서울신문』 1948.10.24.

여순봉기 세력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악 및 농촌지역에서 게릴라 정치를 지속하면서 정부는 이들을 상대하는 작전개념과 전술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당시 정부는 여순사건이 단순한 군사반란이 아니라 내전적이고 민중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도 군사적 강경책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곧 여순사건에 대해, “제주도 사태만 보더라도 군사력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완전한 해결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⁵⁷⁾

그럼에도 정부의 게릴라 토벌작전의 개념과 전술은 주로 강압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군사작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군 제5여단과 제2여단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백운산지역 구례 반란군들의 전멸작전을 벌였다.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은 “적의 본거는 완전히 분쇄 소각”되었으며, 현재 반란세력의 “병기를 주운 지방폭도가 개별적으로 집단이 되어 최후의 반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반군들은 거의 없어지고 지방폭도가 주동이 되어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운산에서 노획한 서류 가운데는 “여수 반란사건이 무계획, 비조직적이었다는 것을 자기 비판하는 서류”도 발견되었다⁵⁸⁾

지방 좌익의 게릴라전이 본격화되면서 게릴라 전술의 일반적인 공식이 정립되고 있었다. 정부는 “폭도는 소위 ‘게릴라’(遊擊)전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의 포착(捕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밝혔다.⁵⁹⁾ 정부는 “우리가 대부대로 가면 폭도는 삼삼오오로 흩어져 무기를 감추고 양민으로 가장하며, 우리가 소부대로 분산하면 한 곳에 집중하여 이것을 추격하며 또는 군대를 피하여 경찰 혹은 양민의 촌락을 습격하는 등 집산리합의 비상한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게릴라를 소탕하려면, 첫째 요건으로 일반민간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⁰⁾

국군은 여순내란 진압 과정에서 대항 게릴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국군은 여순사건 진압 이후 산악과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릴라 토벌작전, 곧 대항 게릴라 전략의 작전개념과 전술을 정립하고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당시 국군은 “일본 · 만주 · 중국 등 군대에서 실전의 경험”⁶¹⁾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만

56)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82~183쪽.

57) 「여순사건, <사설 : 전남사태의 비극>」, 『동아일보』 1948.10.28.

58) 「金白一 제5여단장, 백운산 작전 결과를 발표」, 『독립신문』 1948.11.27 ; 「제5여단장 귀환 談, 반군 거의 소탕」, 『조선일보』 1948.11.30.

59) 폭도의 기본원칙은 적진아퇴(敵進退退) 적퇴아진 적주야오(敵駐我擾) 적피아타(敵疲我打)의 16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48.11.30.

60) 이에 일반이 폭도의 행동을 신속히 보고하며 군의 행동을 폭도에게 알리지 말고 또는 식량 의류 기타의 편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폭도 포착이 極難」, 『조선일보』 1949.3.15.

61) 「<국군의 방위 태세는 완벽 : 국방부 수뇌부와 본사 좌담회>」, 『연합신문』 1949.5.26.

주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하던 대항 게릴라 전략의 작전개념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들 작전 개념을 정리하면, 초토화 정책과 방화, 부락소개와 집단부락 건설, 비민분리 정책 등이었다. 이러한 작전개념은 산악과 농촌지역의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갔다.

3. 대항 게릴라 작전의 내용과 초토화 정책의 실시

1) 작전과 주민통제 수단으로서 계엄령

일반적으로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계엄령은 군이 사태를 장악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여수군 및 순천군에서 발생한 군민 일부의 반란을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공고하였다.⁶²⁾ 정일권 육군참모장은 “금번 계엄령 실시는 작전확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⁶³⁾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호남 지구 내에서 군사와 관계있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일체는 계엄지구 총사령관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처단하게 되었다.⁶⁴⁾

국군은 계엄령 선포로 군용 이외의 교통 전신망은 전부 차단하고, 민사처를 설치하여 피난민 귀환자에게는 양민증을 발행하였다.⁶⁵⁾ 일반 시민은 신분증이 있어야 통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군은 연대 총사령부에서 민정실, 그리고 민사지도부, 특별조사부 등을 설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⁶⁶⁾

이어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은 포고문을 발포,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 및 행정 일반은 본인이 독할한다고 선언하면서, 1) 야간 통행을 20:00시부터 5:00시로 제한, 2) 각 시·군·동·리에서는 국군 주둔시 혹은 반도 번거 접근지역에서는 항상 대한민국기를 게양할 것, 3) 대한민국기를 제식대로 작성하여 게양하며 不規縉褻한 국

62) 「여순사건, <대통령령 제13호. 계엄선포 관한 건>」, 『관보』 제10호, 1948.10.25.

63) 「丁一權 육군참모총장,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이 여순사건 주동자라고 발표」, 『세계일보』 1948.10.27.

64) 「金完龍 국방부 법무총감, 여순사건 관련자에 대한 고등군법회의를 개시한다고 발표」, 『동광신문』 1948.11.5.

65) 「여순사건, <기자 현지답사 : 계엄령 선포된 순천의 거리 표정>」, 『세계일보』 1948.10.28.

66)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3호, 145~159쪽, 1948.11.1. 「반란지구 현지조사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4호, 1948.11.2.

기를 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민족에 대한 충실이 부족하다고 인정함, 4) 반란분자 혹은 선동자는 즉시 근방 관서에 고발할 것, 5) 폭도 혹은 폭도가 지출한 무기, 물품, 금전 등을 은닉 또는 허위보고치 말 것, 6) 군사행동을 추호라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한다고 공고하였다.⁶⁷⁾ 호남방면 작전군사령관은 이어 계엄지구 일대에 다음과 같이 통신기관 제한 계엄령을 내려, “군용 전신·전화(경찰용 포함) 이외의 통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⁶⁸⁾

여수 순천지역의 반란지역에 국한되었던 계엄령은 11월 1일부터 전남북 일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미연방대책”이었다.⁶⁹⁾ 계엄령에 근거한 포고문은 1949년 들어서도 지역 단위 작전지구에서도 계속 발표되었다. 지리산전투지구 총지휘관 김백일대령은 전투지구내의 일반 관민 통행제한을 12월 25일 정오부터 실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제한지구”를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남원군, 구례군, 함양군 내 석복·함양·유림·마천·휴천·수동 각 면, 산청군내 생단·오부·산청·신안·이장·단성·금서·시천 각 면, 하동군내 청암·악양·화강 각 면 해당자는 군경을 제외한 일반 관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각 거주지구에서 100m를 이탈치 못하는 동시에,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부락을 이탈 방황하는 자는 적 또는 이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사살한다는 것이었다.⁷⁰⁾ 이러한 조치는 계릴라 토벌작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적성지구, 작전지구의 설정을 의미했다. 이는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이었다.

여순사건에서 계엄령은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발동하는 최고 비상조치라는 일반적 의미를 떠나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순사건에서 계엄령은 반군토벌작전에서 민간인 처리업무의 복잡성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 특히 작전지역 내에서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여수 순천지구에 대통령령으로 사건을 용이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처리는 軍部에서 하도록 하고 군경의 지휘를 군에서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⁷¹⁾ 계엄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하기 위한 조

67) 「元容德 호남방면 사령관, 계엄지구에 포고문을 발표」(단기 4281년 11월 1일,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 「元容德 호남방면 사령관, 계엄지구에 포고문을 발표」, 『동광신문』 1948.11.5.

68)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작전군사령관, 통신제한 계엄령 발표」, 『서울신문』 1948.11.14.

69) 「전라남북도 일원에 계엄령 선포」, 『자유신문』 1948.11.13.

70) 포고문에서는 군경이라 할지라도 소정 완장을 패용치 않은 자는 반도로 간주, 사살 또는 체포한다고 밝혔다. 「지리산전투지구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자유신문』 1949.12.30.

71)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치가 아닌 사건수습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당초부터 사태를 수습하기에 물론 시간을 단축시키며 강력하게 짜른 시간 안에 용이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도 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수사를 강하게 하며 한쪽으로는 극도의 악질분자를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서 “군사행정에는 계엄령이 대단히 필요되며 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⁷²⁾

군사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계엄을 사고하는 논리는 1949년 들어서도 계속 되었다. 호남지구 헌병사령관 김인경대위는 1949년 1월 17일 “반란사건 발생과 동시에 계엄지구 내에서 여행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동 사건을 신속히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으로 동시에 여행자의 생명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밝혔다.⁷³⁾

여순반란사건이 진압되었는데도 계엄령이 계속 실시되자, 국회에서도 논란이 거듭되었다.⁷⁴⁾ 당시 김백일 전남지역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오로지 방금 시행중인 귀순공작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며, 계엄령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엄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귀순공작이 완료되면 즉시 폐지할 예정이니 일반 국민은 이러한 견지에서 조금 더 부자유를 참아주기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⁷⁵⁾

계엄령은 작전지구에서 군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른바 “속결 처단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⁷⁶⁾ 이승만은 이에 대해, “반란지의 계엄령은 반란분자를 징벌한다는 것보다도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법이 너무 완만하여도 치안 방해”가 되며, “다만 반란지에 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폐단은 없을 줄로 믿는다”는 입장이었다.⁷⁷⁾

계엄령은 특히 대상범위와 시기가 한정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었다. 사회 일반에서도 ‘전남북 전역에 발표중인 계엄령의 범위를 줄일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⁷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군을 소탕하는 게릴라 전에서,

72) 그는 계엄령을 “요전 일전에 철폐할 수도 있었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악질분자들이 약삭빠르게 범물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망가 가지고 주동분자들이 숨어있다가 계엄령 철폐할 시간을 기다려서 살살 기여들어와서 나중에 혹 붙잡힌덤편 죽은 놈은 죽고 있으니 증거불충분이라 해서 죄를 가볍게 하자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 기껏해야 평시 범물에 의지해서 가볍게 처결당할 것이라든 것을 생각하고 도처에 잠복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攪亂사건 보고, 단기 4281년 4월 以降」,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73) 「金仁京 호남지구 헌병사령관, 여행증명제 폐지를 발표」, 『서울신문』 1949.1.19.

74) 「국내 攪亂사건 보고, 단기 4281년 4월 以降」,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75) 「金白一 전남지역 계엄사령관, 계엄지역 민심안정과 여행증명제도 등에 대해 담화를 발표」, 『동광신문』 1948.1.18.

76) 「李承晩 대통령, 국민징병 등 현안과 관련하여 내외신기자와 문답」, 『경향신문』 1948.11.20.

77) 「李承晩 대통령, 국민징병 등 현안과 관련하여 내외신기자와 문답」, 『경향신문』 1948.11.20.

78) 「李承晩 대통령, 국민징병 등 현안과 관련하여 내외신기자와 문답」, 『경향신문』 1948.11.20.

“작전상 계엄령”을 쉽게 철폐하는 것이 어렵다(정광호 의원)는 주장도 있었다.⁷⁹⁾ 그럼에도 비록 “계엄이 軍略上 부득이 일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허용해야 하지만(서용길 의원), ‘여수 순천만이 계엄지구가 아니라, 현재 계엄지구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⁸⁰⁾ 특히 김병희 의원은 “대체 계엄이라는 것은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구역은 어느 범위이며 즉 여수 순천에만 한한 것인지 남조선 전체에 한한 것인지 또 효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다.⁸¹⁾

나아가 신성균 의원은 “폭도가 일어나지도 않은 전라북도 일대에 準계엄령”이 내린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전북에 대한 계엄령은 “준계엄상태이지 계엄령을 정식으로 발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북은 지리적으로 여수와 가깝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태의 진압 정리의 필요성에 의지해서 준계엄상태”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²⁾

김옥주 의원은 국민들은 2개월 동안이라는 기나긴 동안에 계엄령 지대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계엄령이 2개월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벌써 열이 식어져서 충격을 보통으로 알고 사체도 보통으로 알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단히 최악한 경우에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엄령이 너무나 遲遲하기 때문에 계엄령에 대한 계엄성이 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⁸³⁾

특히 계엄령 실시에 따른 주민통제의 불편함도 계속 제기되었다. 조국현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령이라는 구실 밑에서 불철저한 여행증 신원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민의 일상생활을 여지없이 구속하는 반면 오히려 반도들이 여행증 신원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형적 현실을 정부는 못보고 있는가”하고 질타하였다.⁸⁴⁾

무엇보다 군 사령부를 통해서 여행증을 받지 않으면 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락과 부락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는 강화하더라도 계엄령을 해제하자는 주장(이정래 의원)도 등장하였다.⁸⁵⁾ 계엄령 지대에서 지방사회는 군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군대가 왕인 그야말로 군대의 세상이었다. 계엄령이 실시되는 군이나 면에서는 ‘스물두서너 살 먹은 장교들 때문에 그저 찢찢매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여행권 얻으려고

79)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호, 1948.12.21.

80) 「반란지구 선무공작위원 파견의 건」,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0호, 1948.12.3.

81) 「黃斗淵의원 신변에 관한 질문」, 『제1회 국회속기록』 제94호, 1948.11.2.

82) 「국내 攪亂사건 보고, 단기 4281년 4월 以降」,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83)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호, 1948.12.21.

84)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호, 1949.1.27.

85)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1949.1.26.

수백 명이 경찰서 앞에 와서 늘어서는' 풍경이 일상적으로 연출되었다.⁸⁶⁾ 나아가 “계엄령지대에서는 국회의원도 소용이 없고 대통령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런 폭언을 하는 국군”도 있었다.⁸⁷⁾ 조영규 의원은 전남지구의 계엄령 하에서 장교급은 없지만, “상식을 잃은 그런 병사가 자기의 직권을 너무 亂用하고 권리를 너무 쓰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⁸⁾

결국 “전투행위가 돌발하는 지구에 있어서 계엄령을 펴는 것은 당연”하나, “전투행위가 종료된데 있어서는 조속히 계엄령을 폐지 해제”(김문평 의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되었다.⁸⁹⁾ 이러한 논란 끝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49년 2월 5일부터 전남·북 각지의 계엄령은 해제하였다.⁹⁰⁾ 그러나 기존 계엄령이 해제된 지대에 법적 근거없이 경비령이 다시 실시되어 종전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다.⁹¹⁾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동분자들이 대부분 정돈되어 계엄령은 더 필요치 않으나 혹시 잔당들의 후환이 있을까 하는 준비로써 경비령은 경관들의 치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⁹²⁾

2) 초토화 정책과 부락방화, 가옥소각

국군의 여순내란 진압작전과 게릴라 토벌작전에서는 14연대 반란군인과 지방좌익 만이 아니라 비전투원인 민간인이 대량으로 희생되거나 학살되었다. 여순 내란 진압작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은 넓은 의미에서 초토화 정책의 결과였다. 국군의 여순내란 진압과 게릴라 토벌작전 과정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인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채택되는 초토화 정책이 사용되었다.

국군의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 채택한 초토화 작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다. 국회의 조국현 의원은 “반란지구에 더 한 걸음 심히 나갈 것 같으면 전 부락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초토전을 국군이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⁹³⁾ 나중이지만, 정승

86)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이성학 의원 발언),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4호, 1949.1.26.

87) 위와 같음.

88) 「반란지구 전남 영광의 실정보고」,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0호, 1949.2.2.

89)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1949.1.26.

90) 「국방부, 전라남북도 계엄해제를 발표」, 『호남신문』 1949.2.5 ; 「여수·순천지구 계엄령 해지 공포」(<대통령령 제55호,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 『관보 호외』 1949.2.5.

91) 「申性模 내무부장관, 계엄령 해제·민보단 강제가입문제 등에 대해 기자회견」, 『조선일보』 1949.2.10.

92) 「이승만 대통령, 남북통일방안·이북도지사 임명 등에 대해 기자와 문답」, 『자유신문』 1949.2.12.

93) 「조국현 의원, 제2회 13차 국회본회의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 『제2회 국회속기

때는 “진압군의 진압방식은 마치 일제하 만주군의 초토화작전과 흡사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진압군은 단시일 내에 여수를 진압하려고 마음먹은 듯 젊은이로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려 하였을 뿐 아니라 재산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하였다.⁹⁴⁾

당시 정부 진압군이 여수 내전 진압과 이후 게릴라 토벌작전에서 초토화 정책을 실시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만주에서 일본군 경험에 있는 진압군 지도부 입장에서 초토화 작전은 익숙한 작전개념이었지만, 여수 진압작전에서는 초기의 작전실패에 따른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은 여수나 순천에서 첫 진압작전이 모두 실패하자, 작전도 바꾸고 인원과 무장을 보강한 뒤 다시 진격하였다. 정부는 이를 “초기의 온정적 작전에서 적극작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⁹⁵⁾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여수가 빨리 진압되지 않은 것을 근심”하고 직접 현지로 내려가 시가전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는 “집체적으로 항상작전에 다소에 들어간 폭도를 진압하려면 공격작전을 해야 되며 외세작전”을 해야된다고 판단했다.⁹⁶⁾

정부는 특히 14연대 반군 만이 아니라 여수시민들이 봉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역시 진압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당시 진압군은 반란세력은 “반란군 2백 명, 민병 1천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로당원과 민애청원을 비롯하여 학생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⁹⁷⁾ 이범석은 여수 진압에 대해, “민중이 합한 것을 상상치 않다 하더라도 수천명의 폭도를 진압하는데는 역시 최소한도로 대등한 병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⁹⁸⁾ 육군 총참모총장 송호성은 25일 교전 중인 여수읍내까지 출동하여 상황을 시찰한 후, “시가 전투가 반군진압작전으로부터 완전한 봉기시민 소탕으로 변하였음”을 인정하였다.⁹⁹⁾ 곧 진압작전을 봉기에 참여한 시민, 민간인 소탕작전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가 비록 비행기로 “「두 시간의 여유를 준다」”는 귀순권고 전단을 살포하고¹⁰⁰⁾, “반군측과 양민을 분리”¹⁰¹⁾시키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반란군=폭도와 일반 시민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진압군이 여수에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는 배경이었다. 이는 국방부장관 이범석이 “폭도보다도 여수는 어떻게 훈

록』 제15호, 1949.1.27.

9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64쪽.

95) 홍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월호.

96)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97) 「여순사건, 호남작전사령부, 여수 탈환을 발표」, 『서울신문』 1948.10.31.

98)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99) 「여순사건, 金白一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100)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101) 「여순사건, 金白一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련이 잘 되었는지 아이농 민중 학생농들이 이것이 지도하고 또 전부 무기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가 폭도입니다. 이 사태의 처리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라는 발언에서도 확인된다.¹⁰²⁾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진압군이 14연대 반군만이 아니라 여수시민들을 작전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 어떤 증언자(김봉련)는 “진압군에게 비친 여수는 완전한 좌익의 소굴”이었으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진압과정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¹⁰³⁾ 정부와 진압군의 이러한 인식 아래 26일 여수공격을 시작하면서 “무차별 사격과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곧 “신시가지에 무차별 총격과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고, “민가와 시민들을 닥치는대로 수색”했으며,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 사격”하였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국군이 젊은 사람만 보면 총살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다.¹⁰⁴⁾

정부의 여순사건 진압작전 결과, 막대한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초토화 정책을 채택한 결과였다. 정부와 국군은 여순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민간인 대량 학살 또는 희생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주로 반군이나 좌익에 의한 만행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¹⁰⁵⁾ 국회의원 노일환도 국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세간에 반군이 들어왔을 때 보다는 관군이 내려가서 민중에게 희생시킨 그 숫자가 많다”는 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무차별 학살할 수 있는 기회”에서 국군과 반군 가운데 어느 편이 “민족을 학살한 그 숫자가 많은가”를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⁰⁶⁾

특히 여순내란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시내 전소에 대해서는 좌익의 소행이라고 주장과 단순 화재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당시 언론은 여수에서 “반란군이 도망칠 때 휘발유를 뿌리어 때마침 부는 서북풍에 2천여 호가 소실”되었다고 소개했다.¹⁰⁷⁾ 좀 더 구체적으로 27일 오전 10시경에 국군의 장갑차대가

102)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0호, 1948.10.28.

10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64쪽.

10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4쪽.

105) 설국환은 “순천 여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군과 반도가 방화와 강도질을 자행하였고 강간과 시체파괴를 여지없이 하였을 뿐더러 살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전가족 몰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현지의 사체에서 부녀자 노인의 시체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시체에 손을 댄 흔적도 별로 보지 못”했고, 다만, “數人의 경찰책임자와 국군장병의 가족을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사자의 구전으로 들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지금 적발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다소의 예누리도 있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106) 「국내 攪亂사건 보고, 단기 4281년 4월 以降」,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107) 「여순사건, <여수·순천 현지 르포>」, 『조선일보』 1948.11.2.

여수 시내에 돌입하자, “폭도들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기 시작”했으며, “저녁까지 시내의 변화가요 중심지인 중앙동·교동의 전부와 姑蘇洞·陵洞·西校洞의 일부 도합 2천여 호가 燒盡”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⁰⁸⁾ 또한 항도 여수시가 “반군이 퇴각할 때 단말마적 최후발악으로 방화하여 폐허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¹⁰⁹⁾ 국군의 공식적인 주장은 반군이 “중앙동·교동·공화동 방면에다가 방화로써 최후의 발악”하여 화염이 충천했다는 입장이다.¹¹⁰⁾

이에 비해 국회 황병규 의원은 국군이 “25일 진격 당시부터 바로 진격해서 반란군을 진격시켰다면 오늘날 같이 여수의 참극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측하면서, “26일 전투가 시작한 그때 일부에 화재가 났는데 그날 밤 마치 바람이 상당히 불어 시내 전체에 불이 나가지고 여수 중심지가라는 것은 전부 타버리고 말았”으며, ‘각 관공서, 각 은행, 각 단체, 각 사업장 무려 1,700여호 그 외에 2,600~2,700여 호가 완전히 전부 타버렸’다고 주장했다.¹¹¹⁾ 또 일부에서는 국군 장갑차가 시내에 돌입하기 전인 “엿저녁부터의 불이 계속하여 타고” 있었다거나, “해안통과 西町일대의 여수 심장부는 완전히 재”가 되어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건물의 뼈다귀 하나 없이 홀짝 1,938호가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¹¹²⁾

그러나 이들 주장이나 보도는 당시 국군의 진압작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 국군은 여순지역의 반란군을 포위하여 섬멸할 계획 아래 송호성 장군을 호남방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4연대(광주)는 여수 서방, 제3연대(전남)·제2연대(대전) 일부 병력은 여수북방, 제12연대(군산) 일부병력은 광주에서 여수 서북방, 제5연대(부산) 일부 병력은 여수항 해상, 제6연대(대구) 일부 병력은 여수 동북방, 제15연대(마산) 일부 병력은 여수동방으로 진격하여 21일 18시에 반란군을 포위하였다.¹¹³⁾

또한 국군의 본격적인 순천 탈환작전도 10월 22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국군은 새로 지급받은 81mm 박격포 8문을 포진하여 적의 집결지를 포격했다. 진압군의 박격포는 반란군이 모여 있던 초등학교와 경찰서 부근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 L4 정찰기의 공중지원 아래 장갑차부대까지 총공격을 개시했다.¹¹⁴⁾

108) 「여순사건, <여수·순천 현지 르포>」, 『조선일보』 1948.11.3.

109) 현운삼,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대호』, 1948.12월호.

110) 「여순사건, <반군의 본거, 여수소탕전 詳報>」, 『호남신문』 1948.10.30.

111) 「대구반란사건 및 여수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8호, 1948.11.8.

112)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 「여순사건, <여수의 근황 : 잿더에서 방황하는 실신한 읍민들>」, 『독립신문』 1948.11.9.

113)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참가한 출동부대의 정원은 장교 140명, 병사 9,732명이었다. 「국내 攪亂사건 보고, 단기 4281년 4월 以降」,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11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7쪽.

진압군의 최초 여수공격은 23일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급파된 5연대 1개 대대가 선상 박격포 사격 및 상륙작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진압군의 공격은 박격포 사격의 미숙함과 무분별성, 여수 14연대 반란군의 강한 저항으로 다수의 사상자만 내고 실패로 끝났다. 이어 24일에는 반군 토벌사령관 송호성 장군의 직접 지휘 아래 제3연대 1개 대대병력으로 제2차 공격을 시작했지만, 여수 진입로인 미평지역에서 반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였다. 국군의 이 날 패배는 여수진압작전을 전환하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국군은 여수진압에 총력을 기울여 “육·해·공의 입체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¹¹⁵⁾

특히 김종원 지휘 하의 제3여단 제5연대는 여수 해안을 봉쇄하고 반란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 LST 2호함에서 여수 해안을 향해 함포사격을 계속 했다. 이 사격은 기관총수로 조직된 중화기부대가 중심이 되었다. 이에 당시 한 신문은 “여수해안선 일대는 상당한 사격력을 가진 관군의 공격으로 주인 잃은 초가집, 공장, 창고 등의 건물만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도했다.¹¹⁶⁾ 그러나 해안지역의 좌익세력의 저항은 치열해 5연대 주력이 승선한 LST가 상륙을 하지 못하였다. 5연대는 상륙작전을 위해 81mm 박격포 2문을 갑판에 설치해놓고 사격을 계속했다. 이에 “갑판의 반동으로 탄착점이 형성되지 않아 여수읍내를 더욱 초토화시켰을 뿐 아니라 진압군측에 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다.¹¹⁷⁾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내는 “박격포 소리에 천지는 진동되고 그러고 몇 정의 기관총 소리가 또 철환이 울려오는 소리는 소낙비가 울려오는 그 형상”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양민은 피하자니 뒤로는 반란군이 둘러싸고 전부 포위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모든 신예무기를 가지고 양군이 싸우는 그 순간에 피하려니 피할 데가 없고 도주하려니 도주할 길이 없는 현상”이었다.¹¹⁸⁾

국군은 초기의 진압작전을 강압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하였다. 26일 밤 8시, “서시장 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더니 전 시가지에 옮겨 붙었다.” 이는 잔당들을 뿌리뽑겠다는 진압군이 그들의 말대로 ‘본때’를 보여준 것“이었다.¹¹⁹⁾ 이 때의 진압작전은 이전의 작전실패에 따른 보복적인 성격이 강했다. 진압군이 본격 26일에는 이미 반란 주력

115)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2쪽.

116) 「여순사건, 해군의 여순 탈환작전」, 『부산신문』 1948.10.30.

11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0·156~157쪽.

118) 「대구반란사건 및 여수반란사건에 관한 보고」(황병규의원 발언), 『제1회 국회속기록』 제98호, 1948.11.8.

119)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1991, 140~141쪽.

군이 퇴각한 뒤였다. 당시 진압군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15연대 상륙을 엄호하기 위한 과도한 함포사격은 필요하지 않았다.¹²⁰⁾ 여수의 진압작전은 "빈대를 잡기 위해 삼간초옥에 불지른 과잉 방위"였다.¹²¹⁾

국군 진압부대가 여수로 들어온 26일과 27일 난데없는 불이 여수 시내 곳곳에서 일어났다. 26일에는 서시장에서 밤새도록 불이 났고, 27일에는 충무동 시민극장 주변에서 불이 나 밤새 여수 시내를 불구덩이 같았다.¹²²⁾ 이틀간의 여수 시가지 화재에 대해서는 진압군의 포격으로 불이 붙었다는 주장과 반란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불을 질렀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민들은 진압군이 의도적으로 불을 놓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¹²³⁾ 이는 당시 여수지역의 좌익세력이 건물을 이용하여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압군이 시가전에 장애물이 되는 시내 건물들은 작전상 방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¹²⁴⁾

국회에서도 김문평 의원은 "사실 금반 여수는 1,400호가 소실하고 그랬는데 그 책임 규명을 해본다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⁵⁾ 또한 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로 몰려 곤욕을 치렀던 황두연 의원은 국회 신상발언 과정에서 "전부가 생각해 보니 좌익계열이 불지른 일도 없고 언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말하였다.¹²⁶⁾

여순사건 진압 이후 국군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과 농촌지역의 게릴라를 토벌하는 작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화 또는 소각이었다. 국군의 부락방화나 가옥소각은 이미 여순사건 진압작전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사회부 장관 이윤영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948년 12월 현재 여수 순천지역의 전소(全燒)가옥은 1,988호, 반소(半燒)가옥은 133호, 전체 1,271호로 집계되었다. 또한 구례·광양·보성·고흥 등 각 군의 전소가옥은 1,479호, 반소가옥은 17호, 전체 1,496호로 보고되었다.¹²⁷⁾

이는 국군이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만 아니라 이후 게릴라 출몰지역에서 부락방화나 소각을 작전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연대에 입대했던 정동화는 "산간주민들

120) 위와 같음.

121) 위와 같음.

12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5~156쪽.

123) 이에 대해 5연대장 김종원이 화재 진압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중서 초등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위 중삼은 화재가 났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중앙동에서 불이 나자 당시 소방서장이었던 오 동환씨가 급히 중서국민학교로 뛰어들어왔어요. 시내에 온통 불이 났으니 모두 나가서 불을 끄자는 것이에요. 그러자 당시 중서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5연대장 김종원이 총대로 오서장을 구타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5~156쪽.

12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5~156쪽 참조.

125)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1949.1.26.

126) 『반란사건에 관한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93호, 1948.11.1.

127)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3호, 1949.1.25.

입장으로 반란군들이 내려와 식량을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진압군에게 그것이 걸리면 곧 즉결처분되거나 마을 전체가 불살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⁸⁾

회에서 조국현 의원은 국군이 반란지구에서 “전 부락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초토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²⁹⁾ 최범술 의원은 국군이 박격포로 게릴라 활동지대를 소각하거나 민간인 가옥을 소각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 전부 집에 불을 질르거나 또는 그 지대를 반란군에게 준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자미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¹³⁰⁾ 이정래 의원은 국군의 “부락 방화 산림 방화 이런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군이 “이 부락은 반도의 출몰이 상당하고 그 부락 사람으로서 일부분은 반도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방화”를 하거나 “산림 깊은 산중에 반도가 숨어있다고 해가지고 산에 다가 불을 놓는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¹⁾ 유성갑 의원은 국군이 팔왕산과 가까운 “관덕리라는 마을에 있어서는 연락을 했다고 해서 그 70여 호나 되는 동리를 전부 불살러버렸을 뿐 아니라 식량까지도 전부 태워버린 사실도 있다”고 비판하였다.¹³²⁾

국군의 부락방화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1949년 4월 들어 사회부 장관 이윤영은 “폭동지구 구호대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반도 격멸을 위하여 부락을 전소함으로써 무고한 양민들이 집과 가산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반란시의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국방부와 내무부에 연락하여 필요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¹³³⁾

정부의 이러한 방침 속에서도 국군의 부락방화와 가옥 전소는 계속 증가하였다. 1949년 6월 15일 현재, 여순사건 이후 전남 도내의 피해상황 가운데, 주가(住家) 전소(全燒)는 7,086호, 반소(半燒)는 3,931호로 집계되었다. 이는 1949년 3월 15일 현재와 비교하면, 주가전소 165호, 반소 101호가 증가한 것이었다.¹³⁴⁾ 1949년 12월 20일 현재, 전남지역의 전소가옥은 9,909호로 증가하였다.¹³⁵⁾ 이러한 가옥전소의 증가는 전국

12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67쪽.

129) 「曹國鉉의원, 제2회 13차 국회본회의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 『제2회 국회속기록』 제 15호, 1949.1.27.

130) 「반란지구 실정보고」,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8호, 1949.1.19.

131)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1949.1.26.

132) 위와 같음.

133) 「李允榮 사회부장관, 반도토벌을 위한 총력 全燒를 중지시키겠다고 언명」, 『경향신문』 1949.4.28.

134) 「여순사건 이후 전라남도의 피해 집계」, 『연합신문』 1949.6.18.

135) 「사회부, 해방후 현재까지 정치적 사변으로 1만 3,000여 명 사망했다고 발표」, 『조선일보』

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1949년 12월 20일 현재, 전국에서 전소된 가옥이 4만 221호, 반소가 3,827호였으나, 1950년 2월 20일 현재, 사회부 집계에 따르면, 가옥전소는 4만 7,572호, 가옥반소 4,681호로 증가하였다.¹³⁶⁾

국군이 게릴라 소탕 과정에서 사용한 가옥 전소는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오석주 국회의원은 고흥지방의 가옥전소를 비판하면서 “가옥을 태워버린 가족과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은 식량과 가재도구마저 상실하여 일시에 처참한 결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였다.¹³⁷⁾ 이는 정부와 국군당국이 가옥전소에 따른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군사작전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결과였다.

3) 통비부락 소개정책과 집단부락 건설

군경은 게릴라를 소탕하는 작전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술로 부락소개를 실시했다. 부락소개는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전술로서 이른바 비민분리 정책의 핵심이었다. 비민분리 정책은 게릴라와 민간인을 공간적 사회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세계 게릴라 토벌작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일본군이 1930년대 만주 항일유격대 토벌작전에서 비민분리정책을 실시했다.¹³⁸⁾

정부와 군경당국은 여순사건 직후에는 부락소개 정책을 부분적으로 실시했다. 1949년 들어 산간지역에서 게릴라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주민과 게릴라 사이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게릴라 활동지역의 부락소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부락소개는 기본적으로 게릴라와 부락민이 일정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당시 정부와 군 당국은 일반적으로 게릴라운동의 존재나 장기화가 부락주민과의 연계 속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게릴라 활동지역에서 “부락민은 그들(반군)에 협력하고 있어 국군의 일거일동은 하나 빠짐없이 신속히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인식 아래 “공격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이라고 생각했다.¹³⁹⁾ 또한 통비부락이나 민주부락(공산부락)에서는 세포망이 있어 정보원이 국군내습을 사전에 연락한다고 생각하였다.¹⁴⁰⁾ 1950년 2월 17일 신태영 육군총참모장 참석 아래 열린 경상북도 반도

1950.1.19.

136) 「여순사건 이후 전라남도의 피해 집계」, 『연합신문』 1949.6.18 ; 「전국의 戰罹災民이 총 79만 호에 육박」, 『연합신문』 1950.3.8.

137) 「국회의원들, 호남지역의 치안·식량사정 등을 조사」, 『조선중앙일보』 1949.4.13.

138) 일제는 비민분리정책을 지역 비민분리정책(集家公작=집단부락건설, 無住지대 건설)과 향촌 내부의 비민분리정책(보갑제도, 검문과 단속, 거주증명서 발급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田中恒次郎, 「反滿항일운동」, 淺田喬二・小林英夫 편,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시조사, 1986, 365쪽.

139) 「여순사건, <지리산 전투 중군기 : 方慶麟」, 『국제신문』 1948.11.2.

폭도소탕 제2차 회의에서 제130부대장 김백일대령은 “잔존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 힘은 가히 세지 않을 것이나 민중의 세포조직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¹⁾ 제5사단장 송호성도 “지방폭도”의 소탕 문제는 “일반 민중의 협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부락사람들의 자세한 점을 그 부락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이므로 불순분자의 숙청을 부락사람 자신들이 실행하여 주면 문제가 간단”하다는 입장이었다.¹⁴²⁾

따라서 군경당국 입장에서 게릴라 토벌은 부락민의 협조를 얻거나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부락자체를 소개시켜 게릴라와 부락민이 결합 또는 연계하는 공간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도출되기 마련이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토벌지구에서 폭도들의 책원지나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는 전략상으로 민가를 소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¹⁴³⁾ 또 제5사단장 송호성준장은 1949년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설명하면서, “백운산 작전은 폭도들의 보급로가 되기 쉬운 산간부락을 일정한 지점으로 집단 소개시키는 동시에 현재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부락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군민합작으로 최단시일 내에 소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¹⁴⁴⁾

게릴라 활동지역의 부락소개는 1949년 8월 들어 전면적인 소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전면적인 부락소개는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년이 지났으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 부락지역의 공비가 토벌되지 않고 게릴라운동이 고착화·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면적인 부락소개는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9년 8월 전국 지방장관에서 행한 발언에서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반도들과 연락을 갖는 부락도 있어 편익 공여의 길을 차단치 않고는 치안공작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락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리산 기타 반도의 소굴지대에 산재한 부락 소개”를 주장하면서, “공비피해의 우려성과 통비의 경향이 있는 부락은 그 자체 피해의 미연방어와 공비에 대한 편익 공여의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조기 소개”하는 동시에 “피 소개 부락민의 이주생업보도 등 그 정착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⁴⁵⁾ 이총리의 발언은 이른바 동계 공비소탕을 앞두고 이른바 치안공작 차원에서 유격대 토

140) 「〈태백지구의 현상 : 崔約翰 본사특파원 記〉」, 『동아일보』 1949.12.14.

141) 「육군총참모장 참석하에 경상북도 공산유격대 소탕 제2차 회의 개최」, 『동방신문』 1950.2.22.

142) 「宋虎聲 제5사단장, 산간부락민을 집단 疏開시켜 게릴라를 완전 소탕하겠다고 기자회견」, 『호남신문』 1949.7.28.

143) 「金내무부장관 당면 문제, 방금 현지에서 조사, 소란지 소개가 지나쳐」, 『조선일보』 1949.10.14.

144) 「宋虎聲 제5사단장, 산간부락민을 집단 疏開시켜 게릴라를 완전 소탕하겠다고 기자회견」, 『호남신문』 1949.7.28.

145) 「지방장관회의서 李총리 중대발언 : 치안확보에 획기적 조치, 통비부락은 소개, 피해 가려 촌락도 사전조치」, 『조선일보』 1949.8.26.

벌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¹⁴⁶⁾

특히 내무부 당국에서는 “반도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경과의 긴밀한 연락” 아래 “지리산 부근 일대에 산재한 부락들을 수개 지점에 몰아 집단부락을 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내무부는 이러한 “집단부락은 일찍이 만주에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지적하고, “집단부락 가옥 단위수는 50호 이상 100호 미만으로 하고 그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아 주야로 경비”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¹⁴⁷⁾

전라남도는 통비부락을 사전 소개하라는 국무총리의 중대발언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민 각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재민 구호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리산 인근의 담양·구례·광양·장흥·영암·영광·장성 등의 지역에서 부락 229개, 호수 7,183호, 인원 4만 1천여 명을 소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소개에 따른 이재민 구호대책은 국민회, 한청부인회 등에서 주동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¹⁴⁸⁾

정부가 군경당국 입장에서 부락소개는 대항 게릴라 작전의 중요 전술이었다. 당시 군경은 부락소개를 ‘작전상 필요하여 단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공산도당의 전술을 잘 파악”해야 하고, ‘공산당들의 긴밀한 조직체’를 조직적으로 격파하기 위해서는 “위선 분산된 부락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증을 교부하여 완전무결한 조직체를 완성”하면 생활에 안정성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었다.¹⁴⁹⁾ 중부전투 총사령관 송호성도 공비소탕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산간 부락소개와 집단부락 구성을 주장했다.¹⁵⁰⁾ 주민소개에 따른 집단부락 건설은 전통적인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핵심요소였다.

부락소개가 국가차원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의 핵심전술로 전면화되면서 부락소개는 지리산 인근지역 만이 아니라 게릴라가 활동하는 모든 산악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산악 소란지대” 또는 “소란지구”에서 소개는 군 작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경북 봉화에서는 군이 전체 9개 면에서 “36부락을 내놓고 전부 다 집을 헐고 다른 데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려 졌다. 군은 태백산지구 7개 군에 대해서도 소개령을 내렸다.¹⁵¹⁾ 당시 1949년 10월 현재 지리산 인근 지역 이외의 소개 지역은 경북 영주·봉화

146) 「李範奭 국무총리, 유격대 토벌을 위해 지리산에 산재한 마을을 疏開시킬 것이라고 언명」, 『조선일보』 1949.8.26.

147) 「군경, 지리산록에 게릴라 습격에 대비한 집단부락 축조를 계획」, 『서울신문』 1949.8.8.

148) 「통비촌 소개 준비, 전남은 2백여 부락! 총 인원 4만여 명의 범위로」, 『조선일보』 1949.10.8.

149) 「金相鳳 전라남도 경찰국장, 선무공작 강화와 도피자명부 작성 등에 대해 기자회견」, 『호남신문』 1949.7.15 ; 「본 사령관 談 : 부락 소개는 작전필요상 실시」, 『조선일보』 1949.10.12.

150) 「중부전투총사령부, 대전에서 강원·충남·충북·경북지역의 군관경 연석회의 개최」, 『동방신문』 1949.11.6.

151) 「제5회 16차 국회본회의, 반란지구 疏開對策에 관한 건을 토의」, 『제5회 국회속기록』 제16호,

· 울진,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의 7개 군으로 파악되었다.¹⁵²⁾

사회에서는 부락소개는 비록 “공산비적의 천인공노할 폭거를 신속하고도 철저히 토벌 하려는 군의 기동성으로부터 오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치안수습의 한 방편”으로 요청 되었지만, 무리한 소개에 따른 원성도 크게 일어났으며, 국회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¹⁵³⁾ 군 작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소개정책의 필연적 결과였다.

당시 법률적 측면에서 비록 “긴급피난법”이 있었지만, 부락소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분명치 않았다.¹⁵⁴⁾ 이에 1949년 10월 8일에 열린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조현영 의원은 “소란지구 소개대책에 관한 결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출하여 가결되었다.¹⁵⁵⁾ 이 결의안에서 제시된 “소란지구 민가 소개의 근본방침과 대책”은 1) 국방부·내무부·외무국방위원회·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각 2인, 기타에서 3인으로 소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2) 주위에 築城할 수 있는 30호 이상 집단부락 또는 자동차 도로에서 2km 이내에 있는 부락의 소개는 소개대책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는 것이었다.¹⁵⁶⁾

전남지역의 경우, 토벌작전으로 집을 버리고 소개한 도내 농민의 수는 10월 25일 현재, 18만 2,852명(3만 3,646호), 작년 반란사건 이후 인명피해수는 1만 1,131명, 주택 파괴 및 소실 수는 1만 1,871호, 그에 따른 도내 이재민 총수는 31만 8,457명(5만 8,734호), 피해총액은 200억 원에 이르렀다.¹⁵⁷⁾

정부도 국회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했다. 내무부 장관은 “소개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폭도들의 책원지나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한”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정도를 넘는 곳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⁸⁾ 국회의 결의에 따라 정부는 “소개 중지 결정”을 내리고 희망자에 한하여 복귀를 허락하였는데, 전남지역의 경우, 복귀 가능인원은 소개 농민 18만 2,852명(3만 3,646호) 가운데, 6만 5,289명(1만 2,151호)으로 추산되었다.¹⁵⁹⁾

1949.10.8 ; 「〈社説：소란지구의 疏開問題〉」, 『서울신문』 1949.10.12.

152) 「국회, 疏開대책위원을 선임」, 『서울신문』 1949.10.12.

153) 「제5회 16차 국회본회의, 반란지구 疏開對策에 관한 건을 토의」, 『제5회 국회속기록』 제16호, 1949.10.8 ; 「〈社説：소란지구의 疏開問題〉」, 『서울신문』 1949.10.12.

154) 「제5회 16차 국회본회의, 반란지구 疏開對策에 관한 건을 토의」, 『제5회 국회속기록』 제16호, 1949.10.8.

155) 「제5회 16차 국회본회의, 소란지구 疏開對策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하고 건설부 설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울신문』 1949.10.9.

156) 「제5회 16차 국회본회의, 반란지구 疏開對策에 관한 건을 토의」, 『제5회 국회속기록 제16호』, 1949.10.8 ; 「국회, 疏開대책위원을 선임」, 『서울신문』 1949.10.12.

157) 「유격대 토벌작전으로 疏開된 전라남도 도민 수는 18만여 명」, 『호남신문』 1949.11.11.

158) 「金내무부장관 당면 문제, 방금 현지에서 조사, 소란지 소개가 지나쳐」, 『조선일보』 1949.10.14.

159) 「유격대 토벌작전으로 疏開된 전라남도 도민 수는 18만여 명」, 『호남신문』 1949.11.11.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영준 문교사회위원장이 전국 사변지구와 소개지구의 이재민 구호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조사한 보고를 보면, 1949년 10월 현재, 남한일대의 사변지구와 소개지구의 이재호수는 13만 3,813호, 인원수 69만 3,554명이었다.¹⁶⁰⁾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소개 중지 결정은 지역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군 당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섬멸과 귀순의 양면작전”을 전개한다는 구상 아래 대전회의·대구회의 등을 거쳐 “긴장 及 가속한 전략”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은 동기를 이용하여 내년 봄 2, 3월까지 ‘반도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침으로 “경찰 독찰대의 조직과 양민보호를 위한 통비부락의 소개” 등을 마련했다.¹⁶¹⁾

결국 부락소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전남 일대의 산간부락 소개는 1949년 12월 들어서도 계속 되었다.¹⁶²⁾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1949년 11월 중부 전투총사령부(총사령관 송호성) 주최로 열린 군관경 연석회의에서 송호성은 공비소탕을 위해 “옥석을 구분”해야 하므로 “우선 급속도로 산간벽지에서 삼삼오오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산간부락을 단시일 내로 소개”시켜 집단부락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⁶³⁾ 1950년 2월 17일 신태영 육군총참모장 참석 아래 열린 경상북도 반도폭도소탕 제2차 회의에서 제130부대장 김백일대령은 “소개부락에 있어서도 식량과 귀중재산을 매장치 말고 일제히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⁶⁴⁾

1949년 말 1950년 들어 정부와 군의 부락소개 정책에서는 부락의 연대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전남 이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문시환 경상남도 지사는 치안확보에 대해 제3사단과 협의한 뒤, 치안의 부락책임제를 강조하면서, “치안확보에 대한 민간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부락마다 비상 돌발사태를 미연 방지하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國是에 반대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¹⁶⁵⁾

또한 1949년 10월 1일부터 남원에 주둔중인 지리산 전투지구 경찰대 총지휘관으로 부임한 최치환 총경은 “일선 지대 주민들은 공비의 식량입수를 방지코자 공동관리로서 절대 탈취 당하지 않도록 양곡 등을 깊이 감추고 있으므로 2선 외 여러 동포도 이와 같이 그들에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한다고 요망하였다.¹⁶⁶⁾ 또한 제130 부대장 김

160) 「동란지구 이재민 구호대책안의 국회 회부와 소요예산 산출 기준」, 『서울신문』 1949.10.26.

161) 「〈己丑年의 정계회고정부편〉(1)~(2)」, 『국도신문』 1949.12.18.

162) 「〈희망과 건설을 찾아서 : 호남지구 탐방 행각기〉(1)~(4)」, 『국도신문』 1949.12.17.

163) 「중부전투총사령부, 대전에서 강원·충남·충북·경북지역의 군관경 연석회의 개최」, 『동방신문』 1949.11.6.

164) 「육군총참모장 참석하에 경상북도 공산유격대 소탕 제2차 회의 개최」, 『동방신문』 1950.2.22.

165) 「文時煥 경상남도지사, 국민운동 강화와 치안부락책임제에 관하여 기자와 문답」, 『민주중보』 1949.9.29.

백일 대령은 일부 부락민들이 “비적”을 감추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이 같은 이적행위를 감행하는 자는 부락 전체에 그 책임을 지울 것이며 엄중한 처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¹⁶⁷⁾ 그는 특히 “일반으로 하여금 각 면부락에서 보초를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¹⁶⁸⁾

게릴라 활동지역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부락주민들도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지리산 전투지구 총지휘관 김백일대령은 1949년 12월 전투지구 내에서 일반 관민 통행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일반 관민은 각 거주지구에서 100m를 이탈하거나 부락을 이탈 방황하는 자는 적 또는 이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사살한다는 내용이었다.¹⁶⁹⁾

결론적으로 1949년 들어서도 가옥 소개는 계속 꾸준히 증거하였다. 1949년 6월 15일 현재, 여순반란사건 이후 전남도내의 소개 가옥은 2,030호였다.¹⁷⁰⁾ 1949년 12월 20일 현재, 전체 소개 가옥은 7만 7,041호였으며, 요 구호인원 수는 52만 3,683명에 이르렀다.¹⁷¹⁾ 1949년 10월 25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토벌작전으로 소개한 농민의 수는 18만 2,852명(3만 3,646호)였다.¹⁷²⁾

사회부가 1950년 1월 사변 피해상황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소개가옥의 실태를 보면, 전북 3,137호, 전남 33,646호, 경남 8,612호였다.¹⁷³⁾ 또한 사회부에서 집계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대소사변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면, 1950년 2월 20일 현재로 이재호수 14만 9,899호, 이재민 총 78만 9,913명이 계상되었는데, 그 가운데 11만 3,574호, 60만 189명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써 그들 대부분은 산간부락의 주민이었다. 또한 사변으로 소개한 부락호수 및 그 인구실태를 보면, 전북 3,137호 1만 8,030명, 전남 3,910호 18만 7,139명, 경남 1만 2,461호 6만 4,937명이었다.¹⁷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 11월부터 1950년 2월 초순까지 경북지방의 소개 피해상황을 보면, 소개 가옥 2만 7,000호, 이재민 14만 3,200명이었다.¹⁷⁵⁾

부락소개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농민은 소개 때문에 “농경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의·식·주 세 가지의 곤란”을 느꼈으나, “도회지로 나와 방 한

166) 「최근 지리산 공산유격대 진압작전의 상황」, 『자유민보』 1950.2.12.

167) 「金白一 130부대장, 이적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연합신문』 1950.2.14.

168) 「육군총참모장 참석하에 경상북도 공산유격대 소탕 제2차 회의 개최」, 『동방신문』 1950.2.22.

169) 「지리산전투지구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자유신문』 1949.12.30.

170) 「여순사건 이후 전라남도의 피해 집계」, 『연합신문』 1949.6.18.

171) 「사회부, 해방후 현재까지 정치적 사변으로 1만 3,000여 명 사망했다고 발표」, 『조선일보』 1945.1.19.

172) 「유격대 토벌작전으로 疏開된 전라남도 도민 수는 18만여 명」, 『호남신문』 1949.11.11.

173) 「사회부, 정치적 변란으로 인한 각 지방구제사업 내용을 확정」, 『공업신문』 1950.1.20.

174) 「전국의 戰罹災民이 총 79만 호에 육박」, 『연합신문』 1950.3.8.

175) 「崔昌順 사회부차관, 경상북도 일대의 이재민 구호대책을 천명」, 『조선일보』 1950.2.16.

칸이라도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거의 다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도시에 나온 소개민들은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었으며, 산촌에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빈약한 사람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¹⁷⁶⁾ 또한 도시로 내려 왔으나 “들어앉을 곳이 없어 개천가 다리 밑으로 서리를 피하지 않으면 안될 집단”도 많이 있었다.¹⁷⁷⁾

4. 비민분리 정책의 실패와 민간인 희생화 전략

일반적으로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이른바 비민분리정책은 작전의 중심 내용이었다. 특히 전투원과 비전투원, 민간인의 구별이 어려운 내전에서 비민분리정책은 우선 고려할 사항이었다. 여순내전에서도 반란군과 지방좌익, 일부 시민이 결합되어 있었고, 국군은 진압작전과정에서 양자를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육군 총참모장 송호성은 여순진압에서 약간 고전한 것은 “양민과 반민의 구별이 곤란하였던 까닭”이며, “공격에 앞서 3차나 빠라를 뿌리는 등 반군측과 양민을 분리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반도측 보안대의 방해로 말미암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¹⁷⁸⁾

정부와 국군은 여순사건 이후 산악지역의 게릴라 소탕작전에서도 비민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게릴라와 부락민의 연계를 공간적으로 봉쇄하는 부락 소개도 비민분리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민분리 정책은 정치적 대안이나 경제적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주로 군사작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군경의 작전은 지방정치 수준에서 각종 세금과 부역이 나날히 증가하고, 군경이 반란군에게 유린당한 부락에 가서 부락민들을 때리고 무전취식하여 “어떤 기회에 폭동이 일어나면 그 민중이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김병희 의원은 “전남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에 공산주의자를 막는 지방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제조소”라고 지적하였다.¹⁷⁹⁾ 조국현 의원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谷城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민들이 반군에게 약탈되고 군경에게 매맞고 세금 바치고 각 단체에게 기부금 강요당하고 집 잃어버리고 옷 잃어버리고 밥먹을 수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그 우름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는 哭聲”이 되었다고

176) 「강기문 국회의원, 지리산지구를 시찰하고 실정을 보고」, 『국도신문』 1949.9.26.

177) 「〈희망과 건설을 찾아서 : 호남지구 탐방 행각기〉(1)~(4)」, 『국도신문』 1949.12.17.

178) 「여순사건, 金白—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179)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5호, 496~502쪽, 1949.1.27.

말했다.¹⁸⁰⁾

산간지역 민간인들이 군경과 게릴라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곧 “밤에는 ‘밤손님’이라고 불리는 좌익세가 내려와 밥과 가축, 젊은 청년을 잡아가는가 하면 낮에는 군인과 경찰이 달려와 좌익에 협조했다고 때리고 죽이기를 거듭”했다.¹⁸¹⁾ 이에 산간지대 주민들은 특히 정부가 ‘반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 충성을 표하느니 보다 그들은 실낱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반도들을 은닉 옹호하는 것이 양책”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군경의 경비력이 미약한 가운데 군경에 협조한다면 보복살해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⁸²⁾ 이는 비민분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환경인 동시에, 군경이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 민간인 희생화 전략을 채택하는 배경이 되었다.

국군의 여순내전 진압 및 이후 지리산 게릴라 토벌과정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이 대량으로 희생되거나 학살되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1948년 10월 30일 현재, 전남 반란사건의 전과 및 손해를 보면, 반란군은 사상자 319명, 포로 2,327명(장교 1명, 사병 2326명), 협의자 892명, 합계 3,528명인데 비해, 국군측은 전사 29명(장교 2명, 사병 27명), 전상병자 58명(장교 3명, 사병 55명), 행방불명 222명(장교 3명, 사병 219명)이었다.¹⁸³⁾ 1948년 12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종합보고를 보면, 국군은 전사 141명, 전상 183명, 기타(포로, 행방불명 등) 16명인데 비해, 반군측은 유기시체 821명, 포로 2,680명이었다.¹⁸⁴⁾ 또한 1948년 11월 1일 현재, 전남 보건후생국의 여순사건 피해통계를 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2,533명, 경상자 480명, 행방불명 330명에 이르렀다. 사건의 핵심지역인 여수는 사망 1,300명, 중상 800명, 경상 350명, 전체 2,450명이었으며, 순천은 사망 1,134명, 중상 103명, 행방불명 818명, 전체 2,055명이었다.¹⁸⁵⁾

전투원에 비해 민간인의 희생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비대칭적 구조는 국군 진압작전의 실수라기보다는 민간인이 작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인 희생의 비대칭성은 이후 국군의 대항 게릴라 작전 속에서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이는 특히 여수·순천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된다. 1948년 11월 1일 현재, 여순사건의 피해통계에서

180) 위와 같음.

18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73쪽.

182) 「吳錫柱 의원, 고흥지방 치안문제에 대해 국회에 보고」, 『서울신문』 1949.4.19.

183) 「여순사건중 국군 전과와 피해에 대한 국방부 발표 제11호」, 『호남신문』 1948.11.12.

184) 「제1회 124차 국회본회의에서 이범석 국무총리, ‘1948년 4월 이후 국내 소란사건 보고」,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12.8.

185) 「전라남도 후생국, 여순사건 피해 상황 발표」, 『호남신문』 1948.11.5.

곡성 8명, 구례180명, 고흥 76명, 보성 148명이었으나¹⁸⁶⁾, 12월 8일 현재 이들 4개 지역의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자 570명, 중상자 705명, 전체 1,281명이었다.¹⁸⁷⁾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전투에서 민간인 희생의 높은 비율은 군사작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 희생화 전략을 반영한다. 국군의 여순내전 진압이나 이후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도 민간인은 작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전은 구조상 전투원과 민간인이 상호 일정하게 결합되어 있다.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 총사령관이었던 송호성도 반군 진압작전이 “완전한 봉기시민 소탕”으로 변했다고 인정하였다.¹⁸⁸⁾ 채병덕 육군참모장은 “일반 여수시민 중에 다수가 가담하였고 심지어 여학생과 남학생까지 합류하였기 때문에 지형과 도시상태와 아울러 공격에 착수키 곤란하여 전투에 막대한 곤란”을 받았다고 밝혔다.¹⁸⁹⁾

또한 호남작전사령부는 여수탈환 직후 “남로당원과 민애청원을 비롯하여 학생이 다수 참가”했고, “이들 민병은 반군과 합세하여 옥내에서 옥외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처참 가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며, 결국 “시가지의 3분의 1은 폐허가 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¹⁹⁰⁾ 자연히 23일 “총공격 개시 후 시가전을 전개하였는데 반군 외에 무기를 소지한 적의 치안대·학생·민애청원들도 대항하였으므로 가가호호를 수색”해야 했다는 것이었다.¹⁹¹⁾

당시 군은 진압과정에서 “일반시민의 희생자는 국군측의 각별한 고심으로 극히 소수”¹⁹²⁾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국군은 내전 진압이나 대항 게릴라 작전과정에서 이른바 전투원과 비전투원, 반군이나 폭도와 민간인을 적극 분리하거나 구별하지 않았다. 이는 국군의 초기 진압작전에 실패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25일 반군 토벌사령관 송호성은 예비 정보도 없이 여수 읍내로 진격했다가 집중 사격을 받고 주변의 병사가 전사하고 자신은 『헬멧』에 총탄을 받았다. 이 때 송호성은 “부득이 다수의 시민 살상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심히 걱정”하였다.¹⁹³⁾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군경의 진압과정에 대한 고충을 설명하였다. 곧 진압과정에서 “사실 군경은 어느 것이 반도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¹⁹⁴⁾ 또한

186) 「전라남도 후생국, 여순사건 피해 상황 발표」, 『호남신문』 1948.11.5.

187) 「李允榮 사회부장관, 여순사건·제주사건 피해·구호상황에 대해 제2회 13차 국회본회의에서 보고」, 『제2회 국회속기록』 제13호, 1949.1.25.

188) 「여순사건, 金白一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189) 「蔡秉德 육군참모총장, 여순사건 경위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 『서울신문』 1948.10.29.37.

190) 「여순사건, 호남작전사령부, 여수 탈환을 발표」, 『서울신문』 1948.10.31.

191) 「金白一사령관, 여순사건 전투경과 발표」, 『동광신문』 1948.10.27.

192) 「여순사건, 金白一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부산신문』 1948.10.31.

193)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경찰관들은 며칠 밤을 通夜한 피로와 흥분으로 눈이 충혈하고 사나워졌”으며, “순천의 거리에 서로 묶기어 총살된 채 썩고 있는 동료들을 본 그들로서 당연 이상의 당연한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이 진압행동에서 만일 반도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곧 후일 다시 경찰관이 그들의 손으로 살해될 위험성을 의미한다는 직접적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좀더 도를 넘는다면 그것은 곧 양민에게까지 무한한 혐의를 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¹⁹⁵⁾ 국방부 최용덕도 “제주, 전남 등지의 반란사건과 국경방위에 있어서의 월남 불순분자 토벌에 비교적 장기간 종사한 병사의 사기가 비교적 살벌한 기풍에 젖어” 있다고 인정하였다.¹⁹⁶⁾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민간인 대량희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진압군의 과도한 진압이 지역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주장¹⁹⁷⁾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란군의 강경한 저항에 대한 진압군의 강경진압이 살육전을 속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⁸⁾ 또한 “진압군도 야만성에 있어서는 반란군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¹⁹⁹⁾ 다만, 여수 순천지역 반군이나 좌익의 잔혹한 행위가 진압군의 보복행동을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된다.¹⁹⁹⁾

여수 진압작전에서 반군이나 비전투원인 민간인은 모두 작전대상이 되었다. 진압과정에서 “학생이면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이거나 총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집집마다 사람들은 모조리 손을 들고 나와야 했다.”²⁰⁰⁾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미국기자는 “『순천을 탈환한 국군도 점령 초의 수시간 동안 공산당원에 못지 않게 야만적으로 읍민을 취급하였다』 고 보도”했다.²⁰¹⁾ 당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은 국군이 “진압해 들어오면서 사람

194) 좀더 설명하면, “중학교의 어린남녀학생이 자루를 잘라버린 총을 치마 속에 숨겼다가 저항하였다던가 농부같은 사나이가 총을 들고 댐비는 장면을 당한 군경으로서 전 읍민을 일단 집에서 몰아내고 샷샷치 수색하는 이외에는 안전을 기할 방법이 없었고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군경은 처음에는 일반 민중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할 여유를 못 가졌던 것이다.”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195)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196)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3호, 1949.1.25.

19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1991, 162쪽.

19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1991, 167쪽.

199)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실 순천 여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군과 반도가 방화와 강도질을 자행하였고 강간과 시체파괴를 여지없이 하였을 뿐더러 살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전가족 몰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현지의 사체에서 부녀자 노인의 시체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시체에 손을 댄 흔적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200)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2-19>, 1948.11월 하순.

201)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합병호. 같은 내용이지만, 『신천지』에서는 조금 다르게 소개하였다. 곧 “『타임』지의 특파원은 현지 보도중에서 국군이 순천에 진주하였을 때 공산군이 한 것만큼 한 정도로 행동을 하였으며 여수반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홍

만 보면 무조건 썩버릴 정도”였으며, “나이 어린 한 학생의 손목을 잡고 냄새를 맡아보던 진압군인은 화약냄새가 난다며 끌고 가 죽이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²⁰²⁾

여순사건 진압 당시, 군경 당국은 “이 지방이 특히 평소부터 험악”하며, “순천 여수는 빨갱이의 소굴”이라고 말하였다.²⁰³⁾ 증언에서도 “진압군에게 비친 여수는 완전한 좌익의 소굴”이었으며, “진압군은 단시일 내에 여수를 진압하려고 마음먹은 듯 젊은이로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여수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유행시켰다.²⁰⁴⁾ 군경의 강압적인 진압은 이후 게릴라 토벌작전에서도 재연되었다. 김수선 의원은 국회에서 ‘군경이 가가호호에 들어가 총칼로 견제하면서 한 마디해도 총살, 두 마디도 총살, 세 마디도 총살, 일단 민중은 총살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래서는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지적하였다.²⁰⁵⁾

적군은 여순사건 진압 이후, 산악 지역에서 실시한 대항 게릴라 작전에서도 민간인 희생화 전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1월 19일 군은 구례 방면에서 반란군과 폭도를 습격하여 반란군 37명, 폭도 450명을 체포하고, 폭도 203명을 사살하였다.²⁰⁶⁾ 군이 전과보고에서 민간인의 포함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폭도에는 다수의 민간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여순사건 직후부터 전과보고에서 반도, 인민군, 폭도, 유기시체를 각각 구분²⁰⁷⁾하고, 민간인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인은 분류상 폭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성갑 의원은 1949년 1월 국회에서 팔왕산 지역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수를 506명으로 보고했는데, 이 숫자는 “반도에게 죽은 사람, 반도에게 협력하다가 죽은 양민”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밝혔다.²⁰⁸⁾

군의 전과보고에서 특이한 사실은 아군의 전과이자 적군의 손해로 유기시체 항목이 항상 등장한다는 점이다. 1948년 11월 8일 순천여수지구 전투사령부 참모장 위대선 소령이 발표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종합전과를 보면, 적의 손실로 분류한 유

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월호.

202) 전석영씨의 증언,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40쪽.

203) 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월호.

20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64쪽.

205) 「제6회 7차 국회본회의, 의원들이 군경의 민간인학살 의혹을 제기」, 『제6회 국회속기록』 제7호, 1950.1.17.

206) 「국방부 발표 : 구례방면 2백명 사살, 오대산의 匪賊 1소대를 전멸」, 『조선일보』 1948.11.23.

207) 「제5여단종합전과를 발표, 포로 2천여명」, 『조선일보』 1949.1.12.

208)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1949.1.26.

기시체는 393명이었다.²⁰⁹⁾ 유기시체는 사실상 사살하거나 즉결처분한 적, 곧 반도나 폭도의 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의 게릴라 토벌과정에서 즉결처분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여순사건 직후 2여단과 12연대 혼성부대인 김백일 중령 지휘하의 전투사령부대는 1948년 11월 1일부터 구례읍내에 사령부를 옮겨놓고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했는데, 화엄사 일대의 반도 주력을 격퇴시키고 포로 200여 명을 잡았으며, “현지 총살을 단행”하였다.²¹⁰⁾

군의 대항 게릴라 작전이 전개되면서 유기시체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제5여단사령부가 1948년 12월 1일 발표한 계엄지구 제2차 종합전과에서는 유기시체는 671명이었다.²¹¹⁾ 이어 제5여단 보도부가 제2호로 발표한 종합전과에 따르면, 1948년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기시체 숫자는 순천·여수지구에서 364명, 백운산·지리산 지구에서 32명, 고흥·보성·별교방면에서 40명, 화순방면에서 34명이었다.²¹²⁾

1949년 4월 들어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지리산 지구 전투의 종합전과 보고에서, “폭도 유기사체”를 193명이라고 발표했다.²¹³⁾ 또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각 지구 종합전과 보고에서 신태영 육군총참모장은 지리산지구에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5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²¹⁴⁾ 여순사건과 지리산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벌인 제211부대장 박임항 중령은 1950년 1월 8일 열린 귀환 신고식에서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1월 25일까지 4,382명의 적을 사살했다고 전과 보고했다.²¹⁵⁾

군이 반란지구에서 대항 게릴라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은 계속 증가하였다. 국회에서 민간인 인명피해가 계속 논란되자, 당시 호남지구 전투사령관인 원용덕은 “무장폭도가 20여 명이 나타나면 민간폭도도 이와 합세하여 고함을 치면서 몽둥이를 들고 기세를 올리며 악악 소리를 지를 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총부리를 안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어떠한 마디가 썩을 때 그 마디를 잘라야만 의학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²¹⁶⁾

209) 「여순사건, 여순지구 전투사령부, 국군의 종합전과와 전투사령부 해체를 발표」, 『호남신문』 1948.11.10.

210) 「전남전투사령부, 지리산 부근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2백여 명 체포」, 『호남신문』 1948.11.9.

211) 「계엄지구 제2차 종합전과발표, 유기 시체 670」, 『조선일보』 1948.12.4.

212) 「제5여단종합전과를 발표, 포로 2천여명(구례지구의 2여단 관하 전과는 제외함)」, 『조선일보』 1949.1.12.

213) 「蔡秉德 육군참모총장, 지리산 반란군의 주력을 섬멸하였다고 발표」, 『서울신문』 1949.4.13.

214) 「申泰英 육군총참모장 대리, 4부합동 대전회의와 각 지구 종합전과에 대해 발표」, 『경향신문』 1949.11.28.

215) 「여순사건·지리산유격대 소탕작전을 마친 211부대 귀환신고식 거행」, 『서울신문』 1950.1.30.

216) 「국회 민정조사반, 元容德 호남지구전투사령관과 회견하고 반란정세에 대해 기자와 문답」, 『동광신문』

민간인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반란군이 죽이는 것보다도 국군이 죽이는 수효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²¹⁷⁾ 이러한 사실은 비록 군의 전과보고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 인근의 게릴라 활동지역에서 인명피해, 민간인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을 비롯한 사변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1949년 12월 20일 현재, 전국에서 1만 2,959명이었으나, 1950년 2월 20일 현재 민간인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은 3만 6,285명이었다.²¹⁸⁾ 정부의 게릴라 소탕작전이 집중되었던 전남의 경우, 1949년 3월 15일 현재, 사망 350명에서 1949년 6월에는 사망 5,379명, 그리고 1949년 12월 20일 현재, 8,280명²¹⁹⁾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1949.5.10.

217) 「반란지구 선무반 보고와 대책강구의 건」, 『제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4호』, 474~483쪽, 1949.1.26.

218) 「사회부, 해방후 현재까지 정치적 사변으로 1만 3,000여명 사망했다고 발표」, 『조선일보』 1950.1.19 ; 「전국의 戰罹災民이 총 79만호에 육박」, 『연합신문』 1950.3.8.

219) 「여순사건 이후 전라남도의 피해 집계」, 『연합신문』 1949.6.18 ; 「사회부, 해방후 현재까지 정치적 사변으로 1만 3,000여 명 사망했다고 발표」, 『조선일보』 19450.1.19 ; 「사회부, 정치적 변란으로 인한 각 지방구제사업 내용을 확정」, 『공업신문』 1950.1.20.

제2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연구 / 박찬식

여순사건의 성격 / 김득중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비교 연구

박 찬 식 (제주4·3연구소 소장)

1. 머리말
2. 항쟁과 봉기
3. 폭동과 반란
4. 민간인 학살과 피해 실태
5. 제언 : 역사적 기억과 진실 밝히기

1. 머리말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자 분단체제 성립 60주년으로서 한국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해이다.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분단이 된 역사를 찬양 일변도로만 기념할 수만 없는 게 한국인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눈을 지방으로 돌리면 신국가 건설을 전후하여 대중들이 항쟁하다가 대규모 수난을 겪은 4·3사건과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도 60년이 흘렀다. 특히 국토의 남단에서 상호 연관성을 맺으면서 일어난 두 사건은 동족상잔의 비정규전을 통해 민간인 집단 학살의 비극적 사태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비장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마냥 60주년 기념을 ‘대한민국 건국’에만 맞추는 중앙 권력의 위세가 지방민의 활력을 억누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4·3사건과 여순사건의 명칭에 대해서는 공적 인식의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와 개인·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 폭동·반란과 항쟁·봉기의 관점으로 대별되어 통칭되어 온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간인 학살(희생)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선 4·3사건의 경우,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면, 4·3의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실태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확정했다. 4·3진상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희생자 수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은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순사건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과거사 중의 한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구례지역 여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① 계엄령 실시와 국가보안법 제정(1948. 12. 1) 등 한국사회의 분단체제 공고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② 여수 제14연대의 반란으로 비롯되었지만, 진압군경과 반란군 양측에 의해 군경과 민간인이 다수 희생된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청사건 만을 조사할 경우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사건이며, ③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제2전선 지역에서의 민간인 집단학살의 발단이 되어, 국민보도연맹 사건·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부역혐의 희생 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며, ④ 당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반란동조세력’으로 규정되어, 피해의식도 깊고, 상호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 지역사회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순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뒤 여순사건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위원회의 입장은 이 사건을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보는 점에서는 4·3사건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 시기에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연쇄적으로 일어난 4·3사건과 여순사건은 현재 국가적 해결과 역사적 규명에 있어서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중고생의 국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도 같은 면에 등재되어 한국인에게 동류의 현대사 주요사건으로 인

식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최근 보수정권과 뉴라이트 진영으로부터 똑같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건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공동 운명의 길에 놓인 4·3사건과 여순사건을 상호 비교하며 60주년을 회상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작은 항쟁과 봉기를 일으켰지만 미군정과 대한민국으로부터 폭동과 반란의 낙인이 찍혀 대량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던 두 사건의 상호 비교 검토는 냉전과 분단체제, ‘대한민국 건국’에 따른 지방민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정한 국민화를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항쟁과 봉기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좌파세력이 일으킨 자발적인 봉기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무장봉기의 직접적인 주체가 남로당과 14연대라는 차이점 외에도, 지역 토착 좌익조직의 동향과 대중의 호응 면에서는 서로 많이 달랐다.

우선 두 사건의 발발 배경과 원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좌파 세력의 동향이다. 양 지역 인민위원회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7년 3·1사건 때까지 강력한 정치사회적 자치 역량을 보존하였다. 중앙에서도 “제주의 인민위원회는 건준 이래 양심적인 반일제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韓獨·獨促國民會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¹⁾ 1946년 10월 항쟁에 불참하거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중앙 좌익세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사례는 제주도 좌익세력의 후진성이 아니라 강한 조직력에서 비롯한 자치적 성격으로 해석된다(박찬식, 2006).

반면 여순 지역의 인민위원회 권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때문에 10월 항쟁 기간에도 이 지역의 좌익세력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미군정과 경찰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지 않았으며, 인민위원회의 명맥은 다른 지방에 비해 온존한 채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조직 역량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가 여순사건 때 인민위원회 재건 등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김득중, 2003).

1947년 제주에서의 3·1사건은 1년 뒤 4·3봉기 발발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사건이었다. 전 도민의 공동체적인 3·1집회 참여와 3·10총파업 동참은 미군정으로 하

1) 『동아일보』, 1946년 12월 21일.

여금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후 제주도는 일방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3·1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민중과 좌익세력은 인민위원회 중심의 자치조직의 활동을 거부하고 탄압하는 미군정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3·1사건 이후 4·3분기 때까지 제주도민의 외부세력에 대한 반감은 커져갔다. 특히 3·1사건 이후 미군정의 지시를 받아 타 지역에서 들어온 서청·응원경찰대의 횡포와 만행에 저항하여 19세기 민란의 전통과 같이 제주도민 대다수가 4·3분기에 심정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4·3분기 1년 전부터 형성된 제주 공동체의 정서적 반감이 저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탄압으로 인한 수세 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투쟁을 결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4·3분기 이후 5·10단선 거부 때에는 전도민적인 거부가 이루어졌다. 5·10 거부투쟁에서는 각 해변마을마다 주민들 대다수가 전부 투표를 거부하기 위해 산간 마을이나 한라산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내려왔다. 4·3사건 초기에 대중들은 한라산의 유격대를 선택했던 것이다. 당시 항쟁파들이 믿었던 것은 제주민중들이었다. 그러한 자신감이 정세를 낙관적으로 판단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순사건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출동 거부의 명분을 가진 14연대 군인의 봉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우 우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봉기에 지방 좌익세력과 주민들이 순식간에 가세하면서 사건이 전남 동부의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파급되었던 것은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소작인의 열악한 생활조건, 그리고 식량수집으로 인한 궁핍이라는 원인을 제시하는 견해와 각 지방에서 활동했던 좌익세력의 역량이나 조건을 중시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 지역 주민들이 신생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 친일세력에 대해 가졌던 반감 등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구술자료의 확보와 문헌자료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4·3분기와 여순봉기 당시 9연대와 14연대 등 국방경비대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두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봉기 직전에 9연대와 14연대에는 남로당에서 포섭한 좌익세력이 다수 들어있었다. 남로당은 장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에서, 하사관·사병 공작은 각 도당에서 담당하였다. 봉기 지도부는 이러한 이중 세포조직 때문에 4·3과 여순봉기에서 전술상 오류를 범하였다.

제주도인민유격대는 9연대에 투입시킨 고승옥 등 하사관을 중심으로 4월 3일 경비대를 동원시켜 제주읍내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부대 내에 중앙당과 연계된 문상길 소위로부터 중앙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4·3분기에서 가장 주력으로

기대했던 국방경비대 동원에 실패함으로써 이후 투쟁의 전개에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여순봉기 과정에서도 전남도당에서 관리하던 지창수 등 하사관이 봉기를 결정하였으나, 중앙당과 직결된 김지회 등과의 교감이 전혀 없이 급작스레 결행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봉기 때 누가 남로당원인지 모른 채 남로당 세포로 있던 장교들이 초기에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두 사건이 공히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결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4·3봉기와 여순봉기 당시 9연대와 14연대 등 국방경비대는 경찰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경찰예비대라는 뜻이 담긴 경비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경비대원과 경찰 간에 무력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9연대의 김익렬 연대장은 경찰과 서청의 무리한 탄압 때문에 4·3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여 선무공작에 주력하였고, 4월 말 김달삼과의 평화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경비대와 경찰의 반목은 4·3봉기에서 유격대가 9연대 동원을 계획하고, 이후 투쟁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정세를 낙관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순봉기에서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이 군인들을 무리 없이 동참케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당시 제주도과 여순에서 군과 좌익조직,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적 목표가 되었다.

여순사건은 4·3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14연대의 출동 거부는 수세 국면에 놓였던 한라산 유격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였다.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는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9연대 토벌대를 향하여 14연대와 같이 봉기의 대열에 가담할 것을 호소하였다.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 쫓겨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일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부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인민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 나라,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고 경비대원들을 선동하였다. 한라산 유격대는 10월 23일 제주읍을 공격하고 대중 집회를 여는 등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여순사건의 초토화 진압을 완료한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강경토벌의 명분을 더욱 축적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3. 폭동과 반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제주도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한라산 유격대를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은 신생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발발한 4·3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따라 신생 국가를 거부하는 ‘叛亂’으로 남한에서 인식되어 왔다. 더욱이 지하선거 및 백지날

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도한 김달삼 등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에게 4·3과 제주도는 반드시 ‘肅清’해야 할 배타적 제거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1948년 10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고등군법회의 관할 권한을 인가 받은 제주 진압부대(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칭은 ‘숙청부대’였고 그들의 작전 내용은 ‘숙청 행동’이었다.²⁾

‘숙청 행동’의 시작은 10월 17일 송요찬 제9연대장이 제주 해안에서 5km 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 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였다. 신생 정부는 10월 18일 제주 해안을 봉쇄했고, 제주도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제14연대를 제주에 파견 명령을 내렸다. 이를 거부한 여수 주둔 14연대 봉기가 발발하자 대한민국은 제주를 포함한 두 곳의 반란지구를 설정해 총력 진압에 나섰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지구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지경으로 정한다.”고 제주도 토벌의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4·3은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미군정 시기로부터 신정부로 통치권이 이양된 1948년 같은 해에 일어난 대중투쟁이다. 4·3사건은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 폭동으로 미군정은 인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발한 여순사건은 신생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압되지 않은 4·3사건 또한 서서히 반란으로 규정하여 갔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여순사건 이후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같은 반란지구로 인식하여 갔다.

국방부는 “제주도에는 의연히 반도가 지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남 여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였다.³⁾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21일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전 각료 및 공무원들에게 유시하여,⁴⁾ 제주도와 전남지역을 같은 반란지구로 인식하였다. 결국 두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했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갔다.

특히 대한민국이 여순사건에 대해 가졌던 위기감은 심각한 것이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강력한 반공노선의 구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다. 반공노선은 곧바로 ‘제주도 반란

2) 「육군총사령부 일반명령 제2호」, 1948년 10월 27일.

3) 『국제신문』, 1948년 10월 28일.

4)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지구'에도 적용되었으며, '빨갱이섬(Red Island)에 대한 사냥'에 거리낌 없이 군·경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여순사건과 4·3사건은 반공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용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순 진압과 4·3 진압 과정에서 내려진 계엄령은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항상적으로 제도화되었고, 초토화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한국의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여순사건은 길게 보았을 때 4·3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박진경 연대장의 암살사건 등으로 인한 군부 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 원인이 되었다.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익세력의 체계적인 '반란'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좌익세력에 대한 진압만을 넘어서 여수와 순천의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학살된 결과를 볼 때,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확실한 반공체제로 전환코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인명 살상은 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도되고 묵인된 것이었다.

4. 민간인 학살과 피해 실태

4·3사건은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또한 여순사건 때문에 4·3에 대한 진압의 강도는 더욱 세었다. 결국 두 사건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모두 엄청난 집단적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좌익세력의 주도로 일어난 사건임과 더불어 좌익세력만을 향한 진압을 넘어서 엄청난 수의 민간인 학살로 귀결된 것은 한국현대사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4월 3일 무장봉기에 참여한 인원이 350명 정도이며,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행불자가 2만5,000~3만 명이었던 것은 민간인과 유격대를 구별하지 않은 초토화작전의 결과였다. 저항이 시작된 이후 일반 민중의 동조 및 참여가 늘어나자, 좌익 제거, 공비 소탕을 명분으로 일반 주민을 공산폭도로 규정하여 학살하였다.

10월 여순사건 이후에는 수백 명씩 죽어가는 집단 참살이 이어졌다. 이러한 참상은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었다. 대학살이 1948년 가을부터 집중된 것은, 여순사건 이후 저항이 본토로 확산되는 것을 강력한 진압을 통해 차단하려는 국가의 기획된 의도였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서부터 걸림돌로 남아있던 변방 제주섬의 도전세력을 최종적으로 근절시킬 호기로 여겨졌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은 여순사건 발발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여순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제주도 사태를 남한 각지에서 전개시키려 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1948년 10월 이후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사망자가 급증하였다는 점은, 저항의 강령 때문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강화라고 보인다. 그 시기는 4·3사건 초기보다 저항이 약화하였던 시점으로 쌍방의 공방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충분히 선무공작을 통해서도 저항세력을 무마시킬 수 있는데도 초토화작전을 통해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을 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 행사의 기본적인 정당성과 도덕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여순사건에서도 진압군은 일반 시민들을 봉기군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인명과 재산을 빼앗는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새로 출발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정권의 존립을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진압을 서두른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정부군은 무차별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여순사건 때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군인봉기와 지방민의 합세에 대한 지배권력의 응징이자 보복이었고, 이승만 반공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밑거름이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군대를 전부 동원하여 전남 동부지역을 진압하였고, 경찰·청년단 등이 총동원되었다(김득중, 2003).

여순사건이 끝난 뒤 정부는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여수·순천·구례·곡성·광양·고흥·보성·화순 등지의 피해상황을 조사케 했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월 10일까지 인명 피해는 총 5,530명(사망 3,392명, 중상 2,056명, 행방불명 82명)이고, 가옥 피해는 8,554호(전소 5,242호, 반소 1,118호, 소개 2,184호). 사건의 경과가 단 1주일에 불과했지만 피해는 막대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여수지역과 순천군 외곽지역(구 승주군) 등 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는 여수지역 884명, 순천 외곽지역 1,320명이었다. 우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좌익에 의한 희생자보다 약 3배가 넘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소년과 청장년층이었다. 특히 여수지역에서는 이 연령층이 전체 희생자의 96%를 점하였다. 여순사건에서 대부분의 민간인 희생자가 젊은 층이었으며, ‘반란군’이 아니라 진압군에 의해 발생했음이 드러난다.

한편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인명 피해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고,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14,373명 가운데 심의대상인 13,595명(778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철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결과, 희생자로 13,564명이 인정되고, 31명이 불인정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유족 총수는 29,239명으로 확정됐다.

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 · 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 ·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 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순사건이 진압된 다음 많은 민간인이 군법재판을 받았다. 군법회의는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광주와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된 대전 등지에서 열렸다. 군법재판은 수천 명의 관련 혐의자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처리하였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949년 1월 22일까지 대전군법회의에서 모두 9차례 재판이 열려 3,715명에 형이 선고되고, 1,035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여러 기록을 종합할 때 군법회의에 회부된 여순사건 관련자들은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수형인 통계는 알 수 없다.

4·3사건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4·3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수형인명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사건 군법회의’는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사흘 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상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4·3위원회, 2003).

이와 같이 군법회의 또는 일반재판을 거친 여순과 4·3사건 관련 수형인들은 인근 목포형무소·광주형무소·대전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괄 군에 인계되어 총살 암매장되었다. 이들은 1949년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도 함께 가담했다가 희생되었다(박찬식, 2008).

5. 제언 : 역사적 기억과 진실 밝히기

4·3사건과 여순사건은 6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도 경험자들이 다수 존재해 있으면서 역사적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이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직접 진상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두 사건은 모두 좌익세력의 봉기가 발단이 되었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 유린사태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 동안 국가의 강력한 힘에 억눌려 사건의 진실을 발언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기억이 억압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정부의 진상조사 작업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 준다.

4·3연구소는 2000년에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민간인들의 명부를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데이터베이스 처리한 결과, 100여 명의 복역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증언 채록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증언을 기피했다. 찾아가서 만났을 경우에도 “어떻게 알아서 찾아왔느냐?”는 식의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마치 죄를 숨기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들킨 수배자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는 증언자들도 있다. 이런 모습은 제주도민 전체를 빨갱이로 몰아감으로써 3만에 가까운 인명이 학살되고, 그 이후 반공 군사체제 하에서 억눌려왔던 제주 사람들의 4·3사건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4·3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형기를 마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보안감찰’, ‘요시찰’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특히 내란죄 적용자나 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끊임없는 공안당국의 감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전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의식을 남겼다.

제주에 돌아와서 정착한 복역생존자들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거나,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의 잡다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마을에서 사회정화위원장·청년회장·이사장·개발위원장을 지내고 새마을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다 내가 빨갱이가 아니었다는 점을 몸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일”이라고 말하였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똑같이 적용되었다. 매우 짧은 기간에 벌어진 봉기군의 일시적 폭력에 비해 진압군 및 국가공권력의 폭력은 장기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여순사건 당시의 국가폭력은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라는 기제를 통해 국가적·사회적 폭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며칠 동안의 봉기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빨갱이’ 낙인이 찍혀 처형되고 학살되었으며, 형무소의 죄수가 되었다. 빨갱이는 대물림 되어 그 가족들 또한 국가에 의해 감시를 받고 이웃들에게 혐오 대상이 되었다. 제주도민을 구하겠다는 여순봉기의 명분은 역으로 제주도를 초토화시키는 구실로 악용되었고, 두 지역은 비극적인 공동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4·3사건이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서 장기간 주민공동체가 공유한 체험이었다면, 여순사건은 단기간 전남 동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단절된 경험이었다. 제주도민은 4·3

문제를 공동체적 해결 과제로 여겼다. 4·19 공간이 열리거나 1987년 민주항쟁의 한복판에서 4·3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서 제주지역에서의 4·3은 독재 청산 못지않게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상처였다. 여수·순천이 14연대 군인들의 반란과는 관계없다는 지역민들의 인식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의식의 깊이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민주화시기에 4·3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위령제를 자체적으로 집행했던 것은 4·3 해결 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데에는 유족의 공동체적 대응이 큰 노릇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4·3 해결을 둘러싼 이념과 정파적 갈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4·3 해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위의 구성, 1994년 제주도지사 중재의 합동 위령제 개최, 1999년 여·야 합의의 4·3특별법 국회통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여순사건의 해결 과정은 대한민국의 ‘반란’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 감추기와 지역민들의 콤플렉스 때문에 원만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순사건 피해실태조사’를 계기로 유족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유족회는 급선무로서 진상규명과 위령탑 건립을 원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으로 국회와 정당에 청원하고 지방의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과 성격 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호소하여 왔다(박정석, 2002). 그 결과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경우 유족 구성원들의 기억은 부모나 가족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멈추어 있다.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사회의 여순사건 인식은 ‘반란’의 국가 인식에서 ‘집단학살’의 지역주민의 인식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 같다.

미진하지만 먼저 국가적 해결 과정을 밟은 제주의 해법이 여순에 주는 교훈은 진상규명의 방향을 폭동과 항쟁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민간인 학살, 주민 대희생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의 해결 과제를 지역 공동체의 현안으로 보편적인 인권 회복의 문제로 접근할 때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희생에 맞추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서와 의식, 생활, 문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해법을 지역공동체와 지역의 역사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전예원, 1997.
- 박정석, 「전쟁과 고통 : 여순사건에 대한 기억」, 『역사비평』 64, 2003.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전남사학』 22, 2004.
-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 2006.
-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과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 양정심, 『제주4·3항쟁』, 선인, 2008.
- 김무웅, 「제주4·3 토벌작전의 민간인 희생화 전략과 대량 학살」,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0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구레지역 여순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08.

여순사건의 성격

김 득 중(성균관대 강사)

1. 1948년 10월 19일, 여수 · 순천
2. 여순사건의 성격(1) - 봉기 주체의 측면
 - 1) 14연대 군인 - 무력봉기의 주동자
 - 2) 지방좌익세력 - ‘인민행정’의 주체
 - 3) 동요하는 인민 - ‘봉기 참여 대중’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강요된 선택’
3. 여순사건의 성격(2) - 지배정권의 대응
 - 1) 여순사건에 대한 남북한 정권의 인식
 - 2) ‘적 창출’의 계기로서의 여순사건
 - 3) 국가폭력의 전면화 - 폭력 세례와 반공국민의 탄생
4.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

1. 1948년 10월 19일, 여수 · 순천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제14연대 하사관 그룹은 제주도로 파병되어 동족을 죽일 수는 없다며 파병 명령을 거부하고 충구를 이승만 정권으로 돌렸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막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14연대 하사관들이 주도한 봉기는 사병들의 동의를 얻으며, 다음날 여수, 순천 끝이어 전남 동부지역 수 개 군으로 번져 나갔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봉기군의 엄호 아래 인민위원회가 재건되었고 반동세력 숙청 등의 ‘인민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즉각 투입된 진압군에 의해 순천은 23일, 여수는 27일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정부군은 주민을 상대로 한 무차

별적 진압을 실시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였다. 여수가 정부군에 점령된 뒤에도 14연대 봉기군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지방 좌익 세력 등은 부근의 산악지대인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계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대구10월항쟁’이나 ‘제주4·3항쟁’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을 남한 사회에 미쳤다.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순사건은 전국적 범위에서 그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미군의 철군정책도 변화되었고,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지배정권의 공세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전개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순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여순사건 발발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으며, 이 평가가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 아무런 의문 없이 수용되어 재생산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1948년 남한 대중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도 알기가 힘들었다.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순사건을 정부 발표나 보도 통제(검열)가 이루어진 신문 보도를 통해 접했다. 신문 르포 기사는 좌익세력의 비인간적 잔인성을 강조하는 문장과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는 일반 사람들이 여순사건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묘사였고, 언어였으며 감정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강한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확립된 뒤에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안다는 것은 ‘반공 국민’의 본분에 위배되는 고통스런 일이었다. 기정 사실을 뒤집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식한 채 ‘역사적’ 진상 규명을 외면해왔다.

여순사건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정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잔혹한 난동이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양민이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승만 정권의 입장이자 미국의 입장이었으며, 당시 신문의 보도 태도였고 우익단체, 문인, 종교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잔인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유통되는 정상적인 상식이 되었다.

1976년 국사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제주도 폭동’과 ‘여순·순천 반란’은 1982년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사건과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서 공산무장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제주도 폭동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공산당들은 탄약고, 병기 창고를 파괴하는 한편, 관공서,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이에 국군은 그들을 토벌하고 반란을 진압하였다. …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되었다.”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적 역사 서술의 기본 골격은 사건 발생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순사건 인식은 제주 4·3사건을 ‘공산폭동론’이라고 파악했던 것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최근 제주4·3사건이 공산폭동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인식을 모색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순사건은 아직도 공산폭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에서 여전히 공산폭동론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형성에 기초가 된 적대 논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성’, ‘악마성’, ‘야수성’ 등을 강조하면서 강한 적대 의식에 기초한 국민적 의식을 창출했고, 이를 통해 국민을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통합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순사건은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의 역사적 자원으로 끊임없이 활용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 성과¹⁾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여순사건을 다룬 주요논문은 다음과 같다.樋口雄一, 1976,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 4, 社會評論社;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권(여순반란편), 전남일보사; 황남준, 1987, 「전남 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John Merrill, 1989, Korea :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Inc.; 김계유, 1991,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안종철, 1997, 「여순사건의 발발과 전개」, 『순천시사』; 임종명, 2003,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가을호(통권64호); 김득중, 2004,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김득중, 2007, 「여순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반공담론의 창출」,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선인; 김득중, 2008,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내일을 여는 역사』 봄호
1991년 발표된 김계유 선생의 「여순봉기」는 사건 당시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필자가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여순사건을 증언하고 기록한 귀중한 글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돌아가신 고 김계유 선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복을 빈다.

첫째, 여순사건의 주체는 누구인가? 14연대 군인들인가, 지역 좌익세력들인가? 아니면 지역민들인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둘째,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봉기군 점령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셋째,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러한 정권의 대응은 이후 대한민국 국가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넷째,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현재적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왜 여순사건을 알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여순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질문들이다. 봉기 주체세력의 성격과 활동 내용,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와 방식,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과정에서의 여순사건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순사건의 성격(1) - 봉기 주체의 측면

1) 14연대 군인 - 무력봉기의 주동자

지창수가 중심이 된 제14연대 하사관 세력 수십 명은 장교들을 사살한 후 제14연대 사병들을 규합하여 봉기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다.

14연대 군인들은 “군대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있어야 하며, 군은 외래 식민지정책의 앞잡이가 아니라 전 근로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주도 파병을 거부했다.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한 이유는 제주도 파병 반대, 이승만 정권 반대라는 정치적 이유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 군인들은 미군 철수를 정치적 구호로 내걸었지만, 순천에서 포로로 생포한 미 군사고문단원들을 풀어준 경우에서 나타나듯 미군을 살상할 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점점 죄어오는 숙군의 두려움은 봉기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숙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하사관 세력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봉기를 계획했다. 또한 14연대가 봉기 과정 중에 중요하게 내세웠던 명분 중의 하나인 경찰을 타도하자는 호소는 경찰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던 사병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봉기를 주도한 하사관 그룹은 “이승만이 일본으로 도피했다”, “인민군이 남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는 소문을 유포시킴으로써 14연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 시도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단정권 반대라는 정치적 명분과 경찰을 타도하자는 호소는 경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14연대 일반 장병들에게 쉽게 납득되었기 때문에 장병들 대다수는 자연스럽게 봉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순사건의 급속한 확산과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일어난 봉기는 아니었다. 봉기를 주도한 것은 장교가 아닌 남로당 세포 하사관들 수십 명이었다. 서서히 다가오는 숙군의 위협을 느낀 하사관들은 동족상잔의 파병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갖고 수일에 걸친 숙고 끝에 최후의 방법으로 봉기를 선택했지만, 계획되지 않은 반란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창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하사관들은 ‘자신들의 동지’일지도 모르는 장교들을 사살하고 여수와 순천으로 향했다. 전남 동부지역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병들은 낙오되기도 하고, 도망치거나 흩어져 버린 경우도 많았다.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들은 각 지역에서 모병으로 충원되었던 14연대의 군인들의 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봉기가 확산된 것이라기보다는 낙오된 병사들의 귀향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모병으로 소집된 수많은 연대 사병들이 사상적으로 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나타났던 14연대 군인들의 분산, 이탈, 도주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남로당은 군대에 대한 공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많은 수의 장교들을 포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4연대의 봉기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발발했으며, 다른 군대나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를 추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순천에서 진압군으로 내려왔던 4연대 200여 명의 합류로 인한 사기 고양과 초기의 지역적 승리도 잠시 뿐이었다.

여순사건과 1948년 11월 2일에 발생한 대구6연대 반란사건은 분산된 채 지역적으로 발발했는데, 이는 남로당의 군대 장악력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들 이었다. 이 같은 산발적 봉기의 속출과 이에 따른 정부의 숙군 실시는 국군이 반공 군대로 탄생하는 기초가 되었다.

한편 14연대 군인 내부에서는 주도세력의 변화가 일어났다. 14연대 봉기의 초기 지도자는 지창수 하사관 등이 이끄는 그룹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기의 주도권은 김지희, 홍순석 등의 장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사관보다는 장교가 군 병력 운용과 전술 그리고 향후 전략 설정에서 더 경험이 풍부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이 계급이 더 높은 장교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14연대는 봉기를 일으킨 주체 세력이었고, 사건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

적 역할을 했다. 경찰에 비해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봉기군은 여수 경찰은 물론 인근지역 응원경찰이 합류한 순천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북(구례), 동(광양), 서(별교, 보성) 세 방행으로 병력을 이동시킴으로써 봉기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봉기군은 지역을 점령한 다음 경찰로부터 노획하거나 신월리에서 가져온 총으로 학생과 청년들을 무장시켰다. 여수의 경우, 21일에는 민애청, 민청 등의 대중단체원들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무기를 들고 우익인사, 경찰 체포에 나섰다. 군인들은 경찰, 친일파, 우익 청년단원 검거와 숙청 과정에서는 지역 좌익세력과 협력하였다. 이것은 지배세력의 저항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지역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봉기군은 반동세력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인민위원회가 펼쳤던 이른바 ‘인민행정’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봉기군 역할은 반동세력 숙청과 점령 지역의 물리적 방어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후의 지역 행정은 완전히 인민위원회가 맡고 있었다. 봉기군은 정부 진압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진압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인근 지역이나 산악지역으로 후퇴했는데, 이에 따라 지역 방어는 지역 좌익세력과 주민들이 조직한 인민위원회와 인민의용군이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던가는 당시 반란군토벌사령관이었던 송호성이 지적한 바 있다. 송호성은 진압군이 “부득이 다수의 시민 살상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후퇴하고 진압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장한 시민들(인민의용군)은 여수와 순천을 방어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여기서, 무장한 시민들이 정부 진압군의 적이 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인들은 물리력을 갖춘 세력으로서 점령이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좌익세력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지역 좌익세력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여순사건의 촉발자인 14연대는 ‘해방 지구’를 확장하고 보위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뿐 행정에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수에서 14연대 봉기군은 ‘제주도파병거부병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족을 상잔하는 제주도 출병 절대 반대’, ‘미국도 소련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자신의 주장이 담긴 슬로건을 읊내에 붙였다. 14연대 군인들의 주장은 『여수인민보』²⁾에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명의로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

2) 박찬식, 1948,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11월 하순호

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천명되었다.³⁾

이 성명서에서 14연대 봉기군은 “우리는 조선 인민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목적은 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굴종하는 이승만 괴뢰, 김성수, 이범석과 도당들”이 미 제국주의에 빌붙기 위해 분단정권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군인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며, 두 가지 강령을 제시했다. 그것은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였다.

이러한 구호는 제주도 파병을 반대한 14연대 군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지만, 무력봉기의 정치적 구호로는 매우 간결한 것이었다.

2) 지방 좌익세력 - ‘인민행정’의 주체

봉기 소식이 인근 지역에 전해짐에 따라, 봉기군이 진입하기 전에 지역 좌익세력이 사전에 봉기하기 시작했다. 구례는 반군이 들어오기 이전인 1948년 10월 21일부터 남로당 구례군당과 각 면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10월 21일 구례경찰서가 점령당했고, 경찰지서는 지방 좌익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반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 명의 경찰이 피살되었다.⁴⁾ 이 날부터 구례군인민위원회와 각 읍·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보성에서도 지역좌익세력들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무혈점령했다. 고흥에서는 순천으로부터 이동해온 14연대 군인들과 지역 좌익세력이 함께 고흥읍을 점령하고 경찰관과 우익을 총살하거나 타살하였다.

여수·순천의 경우, 좌익세력들은 14연대 봉기군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 곧바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 행정을 담당하고 이끌었다. 여수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중앙동로터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여수인민대회(10.20)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남로당은 14연대 봉기 소식을 접한 뒤, 지하활동을 전개하던 당은 공개하지 않고 대

3) 이 글은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한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가장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문헌이다. 이 성명서는 John Muccio,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lion, 1948. 11. 4. RG 319, ID File, No. 506892에 전문이 영역되어 실려 있다. 고영환, 「여순잡감」, 전국문화단체총동맹, 1949,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107쪽에는 이 성명서의 일부가 실려 있다.

4)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99~100쪽.

중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방침은 실현되지 못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자 그동안 지하에서 활동 중이던 당, 대중단체가 모두 모습을 드러내었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으로 이루어진 대중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좌익세력의 중심이었던 남로당 세력이 전면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수의 경우, 남로당 여수군위원회, 여수군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전평 여수지방평의회, 여수농민위원회, 민주애국청년동맹 여수군위원회, 여맹 여수위원회, 철도종업원 여수평의회, 협동노조여수위원회, 학통 여수위원회 등이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순천에서도 10월 20일 밤, 여맹과 민청이 지하에서 나와 간판을 걸었고 인민위원회도 재건되었다. 순천에서는 이날 밤, 인민군 사령부와 순천군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합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로 순천군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기로 결정했다.⁵⁾ 학생들은 민애청의 지도 아래 조직되었다.⁶⁾

남로당은 14연대 봉기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며, 대중단체는 드러나게 하지만 당은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응축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폭발한 지역 정세를 이겨낼 수 없었다. 특히 경찰이나 극우세력 척결에서 나타난 대중의 과격함을 제어할 수도 없었다. 당의 지도는 이미 폭발한 사건 전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남로당의 사태 판단이 정확한 것이었는가 또는 남로당이 과연 얼마만큼의 지도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부분은 사건의 전개가 당 지도 방침을 뚫고 나올 만큼 강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인민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활동한 곳은 여수였다. 순천에서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숙청에 치중하였고 여수처럼 여러 방면에서의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활동을 펼칠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봉기 이유와 목표를 설명하는 성명서에서는 단 두 가지의 간결한 강령만을 제시한 것에 비하여 여수인민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모두 6개 항의 혁명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 오늘부터 인민위원회는 모든 행정기관을 접수한다.

5) 정종균, 1982, 「미제와 리승만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어난 려수군인폭동」, 『력사과학』1호, 27쪽

6) 「남행록(完): 박종화」, 『동아일보』 1948.11.21; 정종균, 앞의 글

2.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3.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자에 통째로 팔아먹으려 하는 이승만 분단정권의 분쇄를 맹세한다.
4.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민주적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5. 미 제국주의를 위해 한국을 식민화하려는 현존하는 비민주적인 법령을 철폐한다.
6.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 등을 철저히 처단한다.⁷⁾

인민위원회는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밝혔으며, 스스로를 이승만 정권을 대체하는 행정기관임을 밝혔다. 여순사건 당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는 1945년에 건설되었다가 미군정이 부정하여 와해되었던 자치 권력기구의 사실상 재건이자 계승이었다. 인민위원회가 추진했던 민주적인 토지개혁, 비민주적인 법령철폐, 민족반역자와 악질경찰 처단 등의 정책 방향은 미군정이 부정했던 1945년 인민위원회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한편 여수인민위원회는 1945년 인민위원회의 단순한 재건은 아니었다. 남북 분단정권이 수립된 상황에서 재건된 인민위원회의 정책은 북한정권에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수 인민위원회가 밝힌 6개항의 혁명공약은 제주도파병거부병사위원회가 밝힌 강령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방 후에 나타났던 인민자치 권력의 경험은 부활한 것이다. 토지개혁과 친일과 척결 문제는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경제적, 정치적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가 미처 해결되지 못하고 분단정권이 들어선 시점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과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였다.

봉기군이 여수를 점령한 수일 동안 여수에서는 극빈자에 대한 쌀 배급, 친일파·모리간상배의 은행 예금고 조사 및 재산 몰수령 발포, 금융 대출, 몰자(찌가다비, 담배) 분배, 종업원에게 산업기관의 운영권 위임, 반역자 색출 등의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지역 좌익이 중심이 된 인민위원회가 담당했다. 주민들은 대출 신청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하는 등 인민위원회가 실시한 조치들에 대해 광범하게 호응했다.

14연대 봉기군과 지역 좌익세력에는 일정한 역할 차이가 있었다. 봉기군은 점령지역의 행정을 장악하고 추진했던 주체는 아니었으며, 대부분 통치(행정)는 지역 사정에 밝고 정치운동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좌익 세력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7) From John J.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e Rebellion(1948. 11. 4), RG 319, ID File No. 506892(「여수반란의 회고와 관찰」), Enclosure p. 2~3

그러나 남한에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토지개혁과 친일과 처단은 해방직후 상황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 이미 정부가 수립되고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혁명적 주장은 미래에 기대기보다는 과거에 다시 기대는 방식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주장들은 사회운동의 퇴조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순사건은 당이나 운동조직에 의해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명확한 목표를 지닌 투쟁도 아니었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조직적 봉기의 궤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14연대 군인들은 명확한 정치의식으로 무장되어 운동을 이끌기에는 무리였고, 지역 좌익세력은 해방 이후의 전개된 정치운동의 연장선 속에서 갑자기 발발한 봉기에 대응해갔다. 발발 초기에 주도권을 지녔던 군인들은 “일을 일으켜 놓았지만 일을 벌여놓고도 찢찢매었”기 때문에 여수 좌익세력들은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를 조직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⁸⁾

해방 후 발발한 대구사건이나 제주4·3사건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순사건도 좌익정당의 지도력이 관철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봉기에 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사건 발발 초기에는 좌익 정당이나 좌익 인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봉기를 이끌었지만, 이들은 인민위원회 같은 조직 구성과 활동 같은 일정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인민위원회 활동도 그렇지만 직장에 구성되었던 직장위원회 등은 일반 대중의 참여 없이는 조직되거나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이같이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활동들이 확대될 수 있었던 토대는 대중의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 동요하는 인민 - ‘봉기 참여 대중’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강요된 선택

하사관 세력 수십 명이 주동한 봉기가 14연대 대다수 군인들이 참여하는 봉기로 급속히 확대된 것처럼, 14연대 봉기는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지역 민중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반란지역을 취재한 설국환 기자는 “반군은 가는 곳마다 자체의 수보다 더 많은 봉기 민중을 얻었”다고 밝혔다.⁹⁾ 설국환은 민중이 봉기에 호응한 이유는 봉기군의 위협도 한 몫을 했겠지만, “양군철폐, 남북통일, 제주토벌반대 등 반군측이 부른 구호가 민중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20일 오후 3시에 여수 중앙동 로터리에서 열린 인민대회는 갑작스레 만들어진

8) 김계유, 1991, 앞의 글, 265쪽

9) 설국환, 앞의 글

시민대회였음에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봉기군을 환영하는 집회에 참가했다.¹⁰⁾ 14연대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해방군으로서 환영을 받았다. 군인이 여수 시내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은 일어나서 환영했다고 한다.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 곳이나 가, ‘이거 내 거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군인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¹¹⁾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담배와 라이터 등을 파는 날품팔이 소녀들은 반동경찰과 반동분자를 잡아들일 때 가담했다.

순천에서는 21일 오전 10시에 14연대 봉기 군인들의 무력시위가 순천재판소 앞 광장에서 있었는데, 이 시위에는 순천 시민들도 합세했다. 14연대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앞장섰고, 중간에는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중학생들과 청년들이 위치했다. 대열 마지막에는 14연대 군인들이 행진했다. 이들의 수는 약 1천 여 명 정도였다.¹²⁾

14연대가 내세운 정치적 주장에 공감하였던 학생, 청년 등은 초기부터 군인들과 합세하였다. 학생들은 군인과 인민위원회가 배포한 무기로 무장하고, 반동세력 색출에 나서 친일경찰, 반동세력을 검거하였다. 여수의 경우에는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였고 순천에서는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을 조직하여 순천경찰서에 인민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치안대(보안대)도 다시 결성되었다.

주로 청년 학생층으로 구성되었던 인민의용군은 14연대 봉기군과 더불어 지역을 방위하는 주요한 물리력이었다. 인민의용군은 정부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공격하였을 때, 지역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 순천이 진압군에게 비교적 손쉽게 점령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수에서는 14연대 군인과 인민의용군이 몇 차례에 걸친 진압군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진압군은 여수 함락을 위해 함정과 비행기를 동원한 전면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하게 된다.

여수와 순천에서 청년학생들 상당수가 봉기에 가담하게 된 것은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해방 직후 국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학습과정을 거쳤다. 순천사범학교에서는 모스크바삼상안을 둘러싸고 찬반탁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고, 전국학생총연맹(학련) 같은 조직은 순천지역에서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다. 해방 후에 볼 수 있었던 정치적 차이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폭발해버렸다. 봉기군을 막는데 협력했던 순천사범생 손동인(孫東印)과 순천중학생 손동신

10) 김계유, 1991, 앞의 글, 258쪽. 당시 『조선일보』(1948.11.2) 등에는 당시에 모인 사람이 약 4만 명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숫자이다. 당시 여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였고, 중앙동 로터리는 4만 명이 운집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다.

11) 14연대 군인이었던 곽상국 인터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팀

12) 『경향신문』, 1948. 10. 26.

(孫東信) 형제는 봉기세력에게 학살당하였다. 손씨 형제는 우익의 반탁운동에 몸담고 있었고, 학련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다.

여순사건에는 여성(여학생), 청년, 학생, 사회하층민들이 합류했는데, 14연대에 동참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다. 대중들이 봉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생활상의 핍박과 억압, 미흡한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통일정권 수립이라는 민족적 대의 때문이었다. 경찰 등에 대한 반감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치의식은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던 남로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남로당은 이러한 수준에서 대중과 융합할 수 있었고 당 활동의 주위로 대중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봉기에 합류한 대중은 반동세력에 대한 숙청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젊은 층과 사회 하층민들이 나서면서 폭력의 사용은 확대되었지만, 뚜렷한 정치적 목표 없이 제어되지 않은 폭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반동세력 숙청을 명분으로 진행된 폭력 확산은 쉽게 통제하기 어려웠다. 봉기 초기에 반동세력에 대한 숙청이 무원칙하게 진행되자 여수인민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동숙청을 금지했지만, 순천에서는 무자비한 반동세력 숙청이 행해졌다.

기층 민중과 학생 등 일반 민중들이 대거 봉기에 참여함으로써 봉기의 외연이 넓혀졌지만 자연발생적 폭력이 확대되면서 좌익 정당이나 14연대 일부 군인들도 통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들은 14연대에 의한 무력 봉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반동분자 숙청이라는 즉자적인 행동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과격하 분노의 표출에 비해 봉기에 합류했던 대중들은 인민위원회가 정한 구체적 방침에서 벗어난 특별한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고, 인민위원회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4연대 군인들이 장기간 점령할 수 없었던 지역(구례, 고흥, 보성 등)에서는 제대로 된 인민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투에 따른 ‘봉기군의 군사적 점령-정부군의 재점령’이라는 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우익인사 처형-좌익인사’ 처형이 뒤를 이었다. 군사적 변수가 상황을 압도하고 몇 일만에 정반대의 정세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대중의 자발적 움직임이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제 갓 인민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활동에 대중들이 호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점령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약 8일간 인민위원회가 활동했던 여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중들은 인민위원회가 제공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배급 물자를 수령하고 직장위원회를 조직하는 등의 수동적 활동에 한정되었다. 봉

기군이 점령했던 시간이 짧았거나 인민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 여순사건은 빈번한 전투와 연속되는 학살로 여순사건은 기억된다. 그러나 폭력의 경험 기억은 전투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진압전투에 이어 전개된 협력자 색출로 시민들은 더욱 더 강한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동세력 숙청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봉기 참여 대중의 모습은 14연대라는 물리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진압작전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대중들의 모습은 점령군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압군이 여수에 진입하자 곳곳에는 진압군을 반기는 ‘반란진압 용사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¹³⁾ 그러나 진압군은 반란군과 협조자를 골라내기 위해 각 학교 운동장에 시민을 집합시켰다.

라이프 기자 칼 마이던스는 순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 3명의 기자와 함께 내가 시내에 들어갔을 때 전 시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아져 앉혀져 있었다. 이곳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정부의 군대가 반란자들의 잔학 행위와 같은 짓의 야수성과 정의를 무시한 태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얼굴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그 표정 - 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마디의 항변도 없었다. 살려 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소리도 없었다. 신의 구원을 비는 어떤 중얼거림도 다음 생을 바라는 한마디의 호소조차 없었다. 수세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울 수조차 있었겠는가.¹⁴⁾

마이던스가 묘사한 순천 시민의 모습은 ‘공포’와 끝없이 보이는 ‘무기력’이었다. 순천 시민들은 자기 가족의 시체를 조심스레 찾아내고는 ‘통곡 속에 광란’에 빠지는가 하면, 군대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력자 색출을 ‘침묵’으로 기다리며, 자신의 목숨이 손가락 하나에 정해지는 순간에서조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했다. 생사를 결정하는 폭력이 전면화 된 협력자 색출 과정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13) 리영희, 1988, 『역정-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22쪽

14) Carl Mydans, 1959, More than Meets the Eye, New York, Harper&Brothers, p. 292~293.

었다. 마이던스는 아마 수 세기 만큼의 세월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도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 때문에 그들은 울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순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은 삶/죽음을 앞에 놓은 채 이 편이냐 저 편이냐는 선택을 강요하였다. 한 기자는 여수에서 한 농부의 아내를 만났다. 그 집 천정은 두 군 데나 총알로 뚫린 상태였고, 그 여인은 수십 대의 장갑차 무장 ‘트럭’ ‘짐’에 실린 수백 명의 국군들이 박격포 중기관총들을 가지고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상황이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 좋으시요’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그 여인은 ‘양반네 편이 좋아요’라고 주저 없이 대답하였다. 양반네 편이라는 것은 우리 편 즉 국군 편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군, 인민군, 반군 이들 즉어(卽語?)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경찰에 심문당한 농부들이 호칭을 혼용(混用)해서 봉변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한다. 여수시내에 국군이 들어가는 상황은 이 여인의 집에서 보면 태극기가 오르는 집들의 선이 전진하는 것으로 그림같이 보였다. ‘왜 우리 편이 좋아요?’ 하고 재차 물은즉 ‘양반네 편이 더 세지 않으라우’하며 오히려 우문(愚問)이란 듯이 빙그레 웃는다.¹⁵⁾

폭력을 목격하고 폭력을 경험한 농부의 아내에게 선택이란 분명하였다. ‘밤에는 인민 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된 산악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은 여순 진압작전 중에 벌어지고 있었다. 여수 진주 사령관 송석하 소령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좌익과 우익은 어느 일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중간은 차도(車道)를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도 차가 닳치면 어느 편이고 비켜야 할 것이다”¹⁶⁾

어느 한쪽을 택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송석하 소령의 말은 당시 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잘 요약하고 있다. 중간의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할 차도였으며, 차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닳칠 미래는 달려오는 차뿐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중간의 길은 길이 아니라고 했고, 오직 한편의 길만을 인정한 채 이 길을 걷도록 국민에게 강요했다. 이 길을 걷지 않는 국민에게 닳쳐오는 차는 생명을 언제라도 빼앗을 수 있는 국가폭력이었다.

여순사건이 처음부터 14연대 무력 봉기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전체 성격

15) 설국환, 앞의 글

16) 「반란지구 답사기」(完), 민주일보 1948.11.12.

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여순사건은 좌익세력의 목적의식적 봉기나 대중의 자발적 운동이 발전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급작스런 봉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약 14연대의 반란이 없었더라면 여수와 순천에서 벌어진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순사건을 특징짓는 유혈적 참상은 처음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4연대 하사관 세력들이 자신들의 동지일지도 모르는 장교들을 사살한 시점부터 무력봉기의 제어할 수 없는 성격이 드러났다. 무장한 자로써 군인이라는 존재는 그 실존 자체가 폭력의 사용을 일상화한다. 14연대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는 자신들의 행위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교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의 논리는 여수, 순천 등지에서 반동인물 숙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가공할 폭력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사용자가 능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폭력은 통제되지 못했고, 원하는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3. 여순사건의 성격(2) - 지배정권의 대응

1) 여순사건에 대한 남북한 정권의 인식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부는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객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극우정객으로 지목된 김구가 여순사건 관련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일반 여론도 동조적이지 않자, 정부는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그 뒤 정부는 다시 여순사건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란으로 규정했고, 이 배후로 국제공산주의 세력인 소련을 지목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여순사건은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합작품이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변화된 정부의 반란 주체세력 규정은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결국 북한 공산주의자를 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의 자세한 실상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주체 세력을 규정해버렸다.

한편 북한정권은 여순사건에서 북한정권 지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북한은 신문을 통해 10월 22일부터 평양 조선중앙통신발로 「소위 국방군 여수 14연대, 단정을 반대하여 무장 폭동」이라는 제목으로 여순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4면으로 발행되던 『투사신문』은

항상 1면을 할애하여 남한 소식을 보도 했는데, 약간의 시간지체가 있지만 남한의 통신사 AP 통신사 등의 기사를 상세히 전투상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22일 여순사건이 보도된 이래 거의 매일 전투상황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을 소개했다.

10월 29일 『투사신문』은 봉기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하자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남한정부를 ‘괴뢰정부’라고 일관되게 지칭하던 북한은 진압군의 여수 함락을 보도하면서 “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수하면서 끝까지 과감하게 반격을 가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보도는 남한의 봉기가 얼마나 북조선을 지지하였는지, 이승만 정부는 얼마나 인민을 학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폭로에 맞추어져 있었다.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태도는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그대로 이어졌다. 북한의 연구들은 여순사건을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승만 괴뢰도당의 반인민적 파쑈 테러 통치’에 반발하여 일어난 ‘애국적 군인들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으로 평가하면서,¹⁷⁾ 남쪽 인민들이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남조선에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⁸⁾ 북측의 시각으로 보면, 여순사건은 북의 인민공화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순사건의 성격에 대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규정은 정치적 목적은 다르면서도, 봉기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지지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물론 인민위원회의 경우,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지지했으나 여순사건 전체의 흐름이 일관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공산주의적 색채와 함께 경제적 실정과 경찰 같은 통치기구에 대한 반감, 즉 반이승만 정부적 경향 등이 융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다양한 흐름을 오직 하나의 흐름만을 부각시켜 이를 사건의 성격으로 규정해 버렸다. 정부가 여순사건을 북한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자의 난동으로 여순사건을 규정해버리면서, 이승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저항했던 비판적인 목소리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북한 또한 여순사건의 다양한 경향을 오직 하나의 언어(“인민공화국 지지”)로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관견(管見, 대롱이로 보는 좁은 시각)의 유사성은 적의 창출(making enemy)을 통해 상대방의 정당성을 박탈하고 자기 쪽 체제의 안정성과 우월성을 입증하는 논리 구조 속에서

17) 정종균, 1982, 「려수군인폭동의 영향 밑에 일어난 남조선괴뢰군내 애국적 군인들의 투쟁, 『력사과학』3호, 24쪽

18) 김광일, 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결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제2호, 29쪽

탄생된 것이었다.

2) ‘적 창출’의 계기로서의 여순사건

군인반란에 지역민까지 합류해버린 여순사건에서 과연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가는 불분명했다.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말한 것처럼,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은 공산주의자였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일제시기에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에 대한 반공주의 선전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통치 하에서 국내 외 사회주의자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며 견결한 투쟁을 지속한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좌익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사회주의 이론이 널리 확산되어서라기보다는 독립투쟁에서 보여준 사회주의 세력의 지속적 투쟁이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이란 민족적 투쟁의 전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는 해방 후 좌익세력 활동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다.

1945년 말부터 전개된 이른바 ‘신탁통치 파동’은 좌익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였다. 우익세력은 소련이 주장한 신탁통치에 좌익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좌익세력을 친소주의자=반민족주의자=매국노로 자리매김했다.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우익은 친일파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었으며, 민족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민족주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우익세력은 반공을 자신의 이념적 쏫대로 반공의 가치를 내걸음으로써 정치적 발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좌익세력의 이미지가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일변하기는 하였지만, 공산주의자를 열렬한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좌익과 우익은 정치적 정당성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였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상황은 국제적 냉전 체제와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대립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상대방은 소련과 미국의 ‘괴뢰정권’로 간주하는 한편, 상대방의 존재는 자신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체제 수립으로 경쟁과 대립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되어 갔다. 제4·3봉기는 더 이상 정치적 타협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 여순사건은 적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에게는 분란을 일으키는 혼란 유발 세력이자, 양민을 마구 학살하는 도살자,

악마의 이미지가 고정되었다. ‘좌익=반민족주의자=매국노’라는 등식이 정치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좌익=살인마=악마’라는 등식은 좌익을 인류를 저버린 비도덕적 존재=인간 이하의 존재(귀축, 이리 같은 짐승)로 간주하게 하였다. 물론 좌익을 살인마로 간주하는 등식은 정치적 차원의 규정을 내포하는데, 그것은 좌익세력을 같은 민족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비국민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공산주의자를 지칭할 때는 ‘빨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죽음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었다.

‘빨갱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누가 동맹이고 누가 적인가에 대한 신념을 창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는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피아를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으로 등장한 반공주의가 그토록 많은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론)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덕적, 감성적, 종교적 어휘를 양산해냈다. 여순 진압 직후부터 신문은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마구 죽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보도했으며,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을 소련 지령을 추종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매국노로 간주했다. 이승만의 표현처럼 반란자들은 ‘한 하늘 아래 두고는 같이 살수 없는 존재’ 즉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가 되었다.

문인들은 ‘잔인무도한 귀축(鬼畜)들’, ‘잔인무도한 귀축의 소행들’, ‘악의 승리’, ‘인간성 상실’, ‘저주의 보상’, ‘악의 주독’, ‘마의 숨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반란군의 악행을 묘사했다. 반란군은 악마의 군대라는 것이 이들이 토해낸 언어였다. 언어는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세계의 중요한 창조자가 되었다.¹⁹⁾ 이렇듯 공산주의자를 표현할 때는 선악 구분에 기초한 이분법적 논리의 종교적 언어가 사용되었다. 사실 여순사건에서 종교인의 피해는 많지 않았다. 봉기군이 특정 종교를 소지했다고 해서 검거하여 처형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²⁰⁾

19) 머레이 에텔만, 1996, 『상징의 정치시대』, 고려원, 201쪽

20) 여순사건에서는 포로로 잡힌 미군은 회생당하지 않았고, 신자와 교회의 피해도 적었다고 미국인은 보고했지만, 반탁운동을 열심히 벌였던 순천사범생 손동인과 순천중학생 손동신 형제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기독교적 순교’가 되었다.

외국과 유엔에서 정부로 인정받기도 전인 정부수립 2개월 만에, 국가에 충성을 바쳐야 할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갖고 있는 군대 조직에서 반란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해 버렸다는 사실은 신생 이승만 정권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군이라는 국가 조직의 내부에서, 국민으로 만들어져야 할 인민이 국민으로 포섭되지 않고 국민되기를 거부하며 반란에 동참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이 토지개혁을 비롯한 정책으로 계급적 차이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북한 인민들을 창출해나가는 과정은 남한 반란과 대비되면서 이승만 정권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승만 정권에게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가 할 수 있는 온갖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공산주의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자가 벌여놓은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현실’이 공산주의 비판에 더욱 소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참혹한 현실’은 객관적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정치적 경계선을 형성하기 위한 믿고 싶은 가상(fantasy)에 불과했다.

여순사건을 전후로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자를 ‘민족의 적’으로 위치지우는 이념 공세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공산주의자(타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은 공산주의자를 부정적인 타자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을 구성한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미지를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였다. 공산주의자는 맞서서 전멸시켜야 하는 타자로서 위치 지워졌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적대의식은 공산집단의 구성원을 자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점을 끊임없이 구분하고 강조함으로써 가능했다. 이제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는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외부의 집단으로 위치 지워졌으며, 위협과 적의를 제공하는 주체로 부각되었다.

‘적의 창출(making enemy)’ 과정이 실제 사실과는 큰 연관이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내부 구성원의 지지가 미약했던 이승만정권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외

21) 적 창출은 항상 경쟁 상대를 의식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정치논리이지만, 객관적 실재와는 상당히 유리된 환상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적 창출의 논리는 적을 바라보는 논리가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잘 지적하고 있다. (1)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2) 그러나 적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원했다. (3) 적의 지도자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 (4) 우리는 영토와 패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위해 싸운다. (5) 우리는 본의 아니게 희생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적은 고의로 잔학행위를 한다. (6) 적은 비열한 병기나 전략을 쓰고 있다. (7) 우리가 받은 피해는 적고 적에게 가한 피해는 심대하다. (8) 예술가나 지식인들도 정의의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 (9) 우리의 대의는 신성한 것이다. (10) 이 정의에 의문을 던지는 자는 배반자다. 모렐리, 앤ヌ(Morelli, Anne), 2002, 『戦争プロパガンダ 10の法則』

부의 적대적인 타자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적에 대한 규정은 실제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나 강한 신념과 힘을 발휘했다. 이것이 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주의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처럼 미래를 향한 생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주체로 정립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설해나갈 이념적 꽃대 - 자유주의, 민주주의 - 가 허약할수록 반공주의의 뜨거움은 더해만 갔다. 내부의 공허가 타자에 대한 뜨거운 적대적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감은 전체 국민들에게 유포되었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을 반공사회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경험과 근거로 작용했고, 이후 지속되는 남한 반공체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시했다.

냉전시대에 미·소가 표면적으로는 타협 불가능한 세력으로 상대방을 규정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세력과 다른 정치세력을 구별하고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양시킨 이승만정권의 대응은 세계적 냉전 논리의 연장선 속에 있었다.

지배층에게 반공산주의라는 대의명분은 세계적 냉전체제의 논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계층의 분파적 이해나 개인의 이해를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군대에서 실시된 숙군은 전 장교의 5%를 제거하였는데, 그 결과 군대에서는 광복군이나 이승만 정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인물들이 대부분 숙청되었다. 대신 여순사건 등에서 강경 작전을 주도한 만주군 인맥이 부상하여 대부분의 군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우익청년단원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그 결과 군대는 인적으로는 친일파, 내용으로는 반공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반공을 대의로 내세우며 개인적, 분파적 이해를 추구하는 양상은 검찰, 경찰, 국회,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일어났다.

한편 ‘공산주의자’라는 적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였다. 한 집단의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남한 정권 존립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분단정권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국민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의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면서 반공 정권(‘반공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Principes ´el´ementaires de propagande de guerre), 草思社

반공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 요건 이었고, 국민의 형성과정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완성을 지향해 가는 운동이었으므로, 배제와 포함의 조건은 끊임없이 유동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3) 국가폭력의 전면화 - 폭력 세례와 반공국민의 탄생

법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 실시, 7월 헌법제정, 이에 따른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지만, 신국가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흔히 국가 구성의 세 요소로 드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

남한이라는 영토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했다. 특히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결합했던 해방 후를 거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분열된 인민을 유산으로 넘겨받아 자신의 정당성과 이념을 확산시켜 국민을 이념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다. 신생 정부의 능력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승인에 이승만 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이는 세계 국가 체제 하에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통치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군정하에서 정치적 대립을 겪은 분열된 인민을 유산으로 받았다. 분열된 인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 것은 제헌국회의원선거였다. 이 선거에 처음으로 주권자로 참여한 인민은 국민이 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참여했던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선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흔히 얘기되지만, 5·10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성취했던 제도적 성과가 아니라 미군정으로부터 부여된 선거였기 때문에 투표자들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주권자로서 참여한 것이었다.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념적 통일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형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 것은 ‘선거’가 아니라 제주사건, 여순사건 등에서 전면화 된 ‘국가 폭력’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국가 수립과정에서 폭력의 행사는 일반적이었다.²²⁾ 근대국가의 특징 중의 하나는 폭력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대, 경찰은 국가 존재를 유지하는 폭력기구로 기능한다.

22) 에르네스트 르낭은 “국민통일이란 늘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데쓰야, 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149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식으로 설립한 국군과 내무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던 경찰은 여순사건에서 국가 폭력 기구로서의 면목을 드러냈다.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시민들은 진압군이 젊은 사람만 보면 총살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고, 나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진압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모두 모이라는 장소에 나왔다.²³⁾

진압군은 운동장 등에 모인 사람을 양민과 협력자(부역자) 양편으로 나누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쪽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사건 가담자는 즉결처분장에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죽이거나 곧바로 총살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되어 재심사를 받거나 군대, 경찰에 넘겨져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협력자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じかだび,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는데, 객관적 기준이나 자세한 조사가 아닌 지역 우익인사나 경찰의 지목과 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봉기에 협조하였거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협력자 색출 당시 사상적으로나 행동에서 좌익에 진정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순천지역 국회의원 황두연, 순천 검사 박찬길, 여수여중학교 교장 송옥 등의 지방의 중요한 인물들은 봉기군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과 사이가 좋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생명을 건지거나 처형되었다.²⁴⁾

미 군사고문단원으로 진압에 적극 참여했던 하우스만조차도 순천 경찰이 “본격적으로 복수하러 나섰고, 수감 포로와 민간인들을 처형하고 있다 …… 여러 명의 친정부 민간인들이 이미 살해되었으며 시민들은 우리가 적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을 정도였다.²⁵⁾

여수 신월동의 김봉련은 “여순사건 당시 좌익에 진정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이 심한 현실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모든 물자를 그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반란군에 봉사한 사람도 다수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있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장교인 백선엽도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지금도 당시 그렇게 많은 ‘빨갱이’가 있었다고는 생각

2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54쪽

24)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 2000,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317~335쪽을 참고.

25) “Yosu Operation, Amphibious Stage”, G-2 Intelligence Summary No.166, 1948년 11월 5~12일

하지 않는다. 단순가담자의 대부분은 핵심 좌익계 인물들의 선전과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²⁶⁾

그러나 진압군에게 비친 여수는 완전한 좌익 소굴이었다.²⁷⁾ 혐의자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가 또는 반란군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협조 활동을 벌였는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진압군은 반란이 휩쓸고 간 지역 전체를 공산주의 세력권으로 간주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을 감행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심사 과정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주저함과 동요는 죽음을 의미했다. 이제 의심과 동요는 끝나야 했으며, 삶의 지속을 위해서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했다. 여수 순천의 협력자 색출과정은 폭력을 통한 국민형성의 실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수 지역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며, 죽음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결정적 도약이었다.

지역 유지와 우익 인사들조차 진압군의 처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여수 사건 민간인 학살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반공이 지칭하는 직접적 대상은 당연히 공산주의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던 것이다.

반공주의의 대상(배제의 대상)은 공산주의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반이승만 성향의 정치인,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전혀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였다. 이념으로서 반공이 정립되고, 적을 색출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수사건에서 군경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정부 진압군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모두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반공 이념의 사정권이 어디까지 미치며,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에 동조한 대중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을 봉쇄해야한다는 압박은 봉기 지역 주민 전체를 적으로 상정하게 하였다. 폭력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설정된 외부의 적(공산주의 집단인 북한)이 아니라 내부의 대중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정권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를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항 가능성이 있는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었다. 이승만 반공체제는 사실상 대중억압체제였던 것이다.

여수사건을 거치면서 군대와 경찰은 자신의 조직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친일과 소굴로 비난 받으며 상처를 입었지만, 조직적으로는 더욱 팽창했다. 1948년

26)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2쪽

2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163~164쪽

11월 현재 약 3만 5천명이었던 경찰관 총수는 1949년 3월에는 4만 5천명에 이르렀고, 1950년에 가서는 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내내 경찰은 온갖 정치적 대소사에 개입하는 정권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군대는 경찰보다 더욱 큰 변화를 겪었다. 국방경비대 시절 경찰예비대로서 활동하면서 경찰에 눌러 지냈던 국군은 진압작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찰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 또한 사건 후 대대적인 숙군을 통해 조직을 정화(淨化)한 결과 남한의 가장 강력한 반공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숙군을 추진했던 인물들은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학살을 주도하고 시행한 세력이었다.

국군은 여순사건에서 최초로 전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수진압작전을 통해 합동작전을 경험했다.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여순사건은 전투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비극적이게도 첫 전투의 대상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내부의 국민이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무차별 작전의 경험은 여순사건뿐만 아니라 제주사건에서 나타났으며,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주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군은 자신들의 첫 전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군대가 자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했다면 1980년 광주에서 철모에 흰 띠를 두르고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4.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

여순사건은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비극적 경험이며, 이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폭력의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여순사건으로 형성된 이념 강요의 폭력성이 아직도 숨 쉬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지시한다.

1. 여순사건은 반란=봉기의 국면과 더불어 이승만 정부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의 국면=반공 공세 국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순사건은 오직 하나의 국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복합적 국면을 시야에 넣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은 반란군과 구별하기 위해 철모에 흰 띠를 둘렀다.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의 철모에도 흰 띠가 둘러져 있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컫는 명칭은 많다. 사건 당시에는 ‘여순반란’²⁹⁾ ‘전남반란사건’³⁰⁾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까지는 ‘여순반란사건’ ‘여순 14연대반란사건’ ‘여순병란’ ‘여순봉기’ ‘여순사건’ ‘여순군민항쟁’ ‘여순항쟁’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성격 규정을 포함한다.

현 시점에서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용어가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이념적인 논쟁 구도 때문이다. 정명(正名)은 사건의 성격을 파악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그 성격은 아직도 충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용어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정부를 부정하고 일으킨 ‘반란(叛亂)’이며, 군인이 주동이 된 ‘병란(兵亂)’이었다. 또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꺼번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봉기(蜂起)’이며, 이승만 정권의 실정에 저항하며 저항권에 기초한 주권의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던 ‘항쟁(抗爭)’이기도 하였다.

역사적 해석은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관에 따라 사건에 부여하는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중 그 어떤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용어들은 특정 주체나 특정 국면을 부각시키는 단점이 있다.

해방 후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정치적 경험을 겪은 남한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아직은 낯선 존재였다. 여순사건은 유동하는 남과 북 사이에서 동요하는 인민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남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주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지칭하는 용어가 사회성과 역사성을 띤다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반란’이라는 규정은 여순사건에 대한 극히 부정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빨갱이’라는 낱말이 극히 부정적인 내용을 함축한 채 사용되는 경우와 똑같다. 여순사건에서 ‘반란’이라는 용어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에는 공산주의자를 비인간적 존재, 악마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주체를 비도덕적 존재로 간주하고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이승만정권이 여순사건에 대응한 방식이었다.

흔히 여순사건에서 좌익세력의 살상행위가 많이 언급되지만, 실상 여순사건에서 죽음을 당한 민간인들 중 좌익(봉기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경우보다 군경 진압군에 의해

29) 『동광신문』 호외, 1948. 10. 21.

30) 『국민신문』, 1948. 10. 2.

죽음을 당한 경우가 훨씬 더 수적으로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살상 행위로만 서술되어 왔던 것이다.

3.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의 전면화는 단순한 폭력의 과잉이 아니었다. 정치적 정체성이 아직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진 군경의 국가폭력은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국민/비국민의 분리방식이 대단히 잔혹한 학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누가 ‘민족’과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민족 구성원의 자격 심사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에서 벌어진 ‘편 가르기’와 광범한 민간인 학살은 국민심사의 과정이었다.

반란 주체들(또는 주체들로 간주된 자들=협력자)은 정권에 의해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죽음을 당해야하는 존재, 건전한 사회 건설과정에서 뿌리 뽑혀져야 하는 잡초 같은 존재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배제한 연후에야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인민은 ‘대한민국의 반공국민’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공으로 탄생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애국심의 과도한 동원과 ‘합법적인’ 국가 폭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애국이라는 대의 명분, 다수에 대한 봉사라는 보편성,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은 국가의 호명 앞에서 어느 순간 국민을 폭력적 국민과 전쟁기계로 탄생하게 한다.

4. 반공주의의 문제는 특정한 이념을 국가정책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지 않다. 반공이라는 잣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자의 존재 자체를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폭력을 통해 국민형성의 진로를 찾아갔다는데 반공주의의 문제가 존재한다.

반공주의 확산과정에서 사용된 배제와 통합의 권력 기술은 지도층의 통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기술을 몸에 각인하고 받아들인 주체들이 만들어지고, 전쟁과 배제의 경험을 경과하면서 이를 국민의 외부에 있는 비국민에게 구사할 수 있는 폭력적 국민이 탄생했다는 점이야말로 반공주의 국민형성이 남긴 가장 뼈아픈 역사적 유산일 것이다.

‘국민’이라는 정체성 형성은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동시에 동질성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국민’이라는 정체성 속에는 개인과 집단을 국가의 일부로 위치지우고, 사회 속의 개인을 국가의 부속물로 동원하려는 의도가 내재돼있다.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배제된 자, 죽음을 당한 자는 자양분으로 뿌려진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기꺼이 죽은 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자까지도 희생자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는 또 한번의 폭력이자 국가에 매몰된 시각일 뿐이다.

5. 여순사건은 60년 전에 일어났지만, 여순사건이 던졌던 문제들은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여순사건이 제기했던 국가 폭력과 저항(저항권, 저항폭력)의 문제, 국민형성의 논리, 반공주의 문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이 역사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되돌아가야 근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3부 여순사건의 영향

여순사건 이후 군대, 그리고 대민통제 / 노영기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 김춘수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 언론탄압과 주민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김학재

여순사건 이후 군대, 그리고 대민통제(對民統制)

노 영 기(조선대 강사)

1. 머리말
2. 여순사건 이후 군대의 변화
3. 군경의 협력과 친일파의 입대
4. 군대의 ‘반공화(反共化)’
5. 군대의 권한강화와 그 영향
6. 맺음말

1. 머리말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극우반공체제의 틀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우선 이 사건이 제주도 파병과 숙군(肅軍)에 반대한 전남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남로당원의 선동으로 발생한 ‘반란사건’으로 규정되었다.¹⁾ 하지만 모든 평가가 ‘반공’에 맞춰진 까닭에 여순사건의 배경과 의미, 여순사건의 영향에 대해 소홀히 다뤄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은 이 사건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극우반공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²⁾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순사건과 그 영향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여순사건 발생 이후의 군대의 변화가 민간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기존 연구의 경향을 고려하여 여순사건 이후의 군대 변화와, 이 변화가 민간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순사건 이후 군대의 변화

-
-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1968; 사사키저, 강영구 편역, 『한국전 비사』 上, 병학사, 1977
 - 2) 황남준, 「전남지방과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최정기 외, 『전쟁과 재현』 한울, 2008.

1948년 10월 27일 정부군이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여순사건 발발 직후부터 전개됐던 군대의 작전은 일차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또다른 작전이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은 여순사건에 휩쓸렸던 지역에서 이른바 ‘부역자’ 처벌을 진행하는 한편 여순지역 인근의 산악에서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던 반군을 진압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행정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군대, 그중에서도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진압하는 데 핵심이었던 육군은 여순사건을 통해 나타났던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갔다.

무엇보다 먼저 취해진 조치는 군대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나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반체제 세력들을 대량으로 제거하는 숙군이었다. 이미 이전부터 숙군은 진행되어 왔으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여순사건 이후의 숙군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³⁾ 첫째, 숙군의 대상이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해졌다. 여순사건 이전의 숙군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한정해 전개되었다. 또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숙군이었다. 장교들이 숙청된 경우는 조선공산당 모임에 나가는 등 좌익활동을 전개했던 이병주와 제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 및 그리고 인민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제14연대장 오동기 등 일부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여순사건 이후의 숙군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숙군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이었다.⁴⁾ 숙군이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숙군을 실무에서 담당했던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특별조사과)가 확대되었다. 1948년 11월 1일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는 이름을 방첩대(SIS : 대장 - 대위 김안일)로 바꾸고 그 기구를 전국으로 확대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전남 광주(11월 10일)와 전북 전주(11월 16일) 등지에 파견대를 설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순사건 이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숙군이 진행되어 대구사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체제에 대항하는 사건이 군대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⁵⁾

둘째, 1949년 상반기에 38선 경비부대인 제1연대와 8연대를 제외한 모든 연대가 1946년에 작성된 ‘백부계획’에 따라 설치된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고 있다. 여순사건 이전에 국방경비대는 주둔지에서 모병과 훈련이 이루어지며 장교의 파견과 예산배정 등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자연 ‘향토연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대 창설

3) 여순사건 이후 육군의 숙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노영기, 「육군창설기 육군의 숙군에 관한 연구」 1998,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 언제 이 법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 자료로는 문상길 중위의 재판 때부터 국방경비법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이후에도 숙군을 피해 탈영하거나 월북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탈영은 개인적인 형태의 도피일 뿐 ‘여순사건’이나 ‘대구사건’과 같은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때부터 하사관들은 계속 근무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순사건과 대구사건은 창설 때부터 계속 근무해오던 하사관들의 선동에 사병들이 호응하며 발생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육군은 ‘향토연대’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대처해나갔다. 여순사건 이전까지 제주도에 파병된 제11연대를 제외하고는 부대 주둔지의 이동은 없었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거친 뒤 각 부대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는 여순사건 이전에 창설되었던 각 연대의 부대이동을 살펴본 것이다.⁶⁾

연대	원래의 주둔지	이동일	최종 주둔지
제1연대	서울	1949. 1. 22	의정부
제2연대	충남 대전	1948. 12. 29	제주도(인천)
제3연대	전북 남원	1949. 1. 27	용산
제4연대	전남 광주	1948. 11. 20.	20연대 개편
제5연대	경남 부산	1949. 7. 10.	충남 온양
제6연대	경북 대구	1949. 4. 15.	22연대 개편
제7연대	충북 청주	1949. 2. 20.	강원 원주
제8연대	강원 원주	1949. 2. 10.	강원 춘천
제9연대	제주도	1948. 12. 15.	충남 대전(서울)
제10연대	강원도 강릉		
제11연대	제주도	1949. 2. 1.	경기 문산(개성)
제12연대	전북 군산	1949. 1. 29	인천(문산)
제13연대	충남 온양	1949. 1. 25	경기 고양(수색)
제15연대	경남 마산	1948. 11. 25.	전남 여수(순천)

위의 표에서처럼 여순사건 이전에 창설되었던 부대들 대부분이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다. 이중 38도선 경비부대였던 제1연대와 8연대와 새로 개편된 제20연대(제4연대)와 제22연대(6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들은 도의 경계를 넘는 주둔지 이동을 단행하였다. 여순사건 이전까지 부대가 이동했던 예는 제주도에 파병된 제5연대와 제11연대 뿐이었다. 그 외 1946년 ‘10월항쟁’ 당시 시위진압을 위해 일시 출동하거나 여순사건 진압작전을 위해 파병되었다. 즉 여순사건 이전의 부대 이동은 시위진압이나 군사작전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었으며, 작전이 끝난 뒤에는 원래의 주둔지로

6) 이 글에서는 여순사건 이전에 창설된 연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뒤에 창설된 연대에서도 6개월 정도의 시기를 두고서 부대의 주둔지 이동을 단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돌아왔다. 하지만, 여순사건 이후의 부대 이동은 ‘향토연대’의 특성을 해체하고 소요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좀 뒤의 일이지만 국방부에서는 ‘대구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제6연대를 해체하여 제22연대로 재편함과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도시(trouble-making town)’인 대구의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 3여단 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옮기려고 계획하였고,⁷⁾ 결국 1949년 2월 25일 국방부의 계획대로 여단 사령부를 대구로 옮겼다.⁸⁾

다음으로 여순사건과 대구사건 이후 육군은 손실된 병력의 보충을 진행하였다. 여순사건 직후부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단장 로버츠 준장은 병력 보충을 제안하였다. 그는 1948년 10월 22일에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력을 50,0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며, 14연대를 다시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⁹⁾ 그러나 손실 병력의 보충은 ‘향토연대’였던 국방경비대의 모병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¹⁰⁾ 부대 주둔지와 관할지에서 사병들을 모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입대시키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11월 11일 육사 제7기 졸업식에 참석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육군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며 이후에는 “인재 보충에 각별 유의해 불순분자의 유입을 방지하며 과거와 같이 추천인이 불책임한 일을 함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무분별한 모병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¹⁾ 이 같은 모병방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한 시기에 군대를 만들려했던 우익청년단체들의 움직임과 연계되었다.

무분별한 모병이 제한되는 대신 우익청년단체의 입대가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이전에도 청년단체의 활용이 구상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는 이범석에게 청년단체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이범석도 청년단체 활용을 계획하였다.¹²⁾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우익 정치세력과 사설군사단체들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즈음해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육해공군동지회를¹³⁾ 비롯해 각종

7)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Supreme C/S DND To Chief, KMAG (1949. 2. 15).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8, 320쪽.

9)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에게」 1948. 10. 22.

10) 당시 군대의 수는 5만 여 명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육군사령관 송호성은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7만에서 8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일보」 1948. 9. 27.

11) 「독립신문」 1948. 11. 13.

12)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Mr Hwang(interpreter). Col Wright, Lt Col Voss and General Roberts』 1948. 9. 20.

1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부터 육해공군동지회는 이전부터 군대를 구상하며 비밀조직을 만들어오다 주한미군방첩대의 감시를 받았다. 주한미군 방첩대는 이 조직에 이승만(사령관), 이청천(참모장), 신태영(참모부관), 강낙원(작전참모), 강병순(작전참모 부관) 등이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HQ, USAFIK, 『G-2

청년단체들이 스스로 군대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육해공군동지회는 과거 군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사관학교 개교를 계획하였다. 이 조직에는 과거 일본군 헌병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였다.¹⁴⁾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에 따르면, 서북청년회에는 국군 1개 사단을 모병할 수 있는 권한이 약속되었으며 2,000명의 신상명세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대동청년단과 조선민족청년단 단원들은 국군이 창설되면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¹⁵⁾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뒤 서북청년회는 국군에 103,000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그러나 국방부는 기존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전환시켜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9월 18일 국방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일체의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겠으니 해산하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다.¹⁷⁾ 국방부의 경고에 따라 사설 군사단체들의 군대 창설계획은 중지되었으나 이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이들은 군대의 정화를 주장하며 입대하게 되었다.

10월 26일 대동청년단의 대표 조영환·진승국·채택룡 등은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방경비대가 미군정기에 만들어져 애국청년단체(우익청년단체를 말함 : 인용자 주)가 참가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¹⁸⁾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각 청년단체를 통일하여 그중 우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병(民兵)을 약 5만 명 가량 조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¹⁹⁾ 11월 12일 전국애국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시국대책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중에는 국방경비대 강화방안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 국방군을 전적으로 재검하되 군기대는 애국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편성할 것. 상비군의 수를 10만으로 할 것. 병역법을 제정하여 병력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 애국청년단체를 주체로 호국군 조직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⁰⁾ 국방부에서도 청년단체를 포섭하는 모병을 계획하였다.²¹⁾ 1948년 12월 말 청년단체 간부나 군사경험자들을 모집, 특별훈련을 거쳐 임관시켰다.²²⁾ 1948

Periodic Report』 1948. 2. 14-2. 16. #760.

1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7. 7~7. 8. #879.

1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6~8. 7. #905.

16) 그중 3,000명은 장교가 될 것이며 나머지는 사병이 될 계획이었다. 서북청년회 간부들은 잠재적인 장교 요원들은 제공될 수 있으나 사병들은 100,000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9월에 훈련을 시작할 것이며 이 훈련이 끝난 뒤에 서북청년회가 제공한 사병들을 훈련하는데 이용될 계획이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8. 31~9. 1. #926.

17) 「국제신문」 1948. 9. 19.

18) 「세계일보」 1948. 10. 28.

19) 「한성일보」 1948. 10. 30.

20) 「독립신문」 1948. 11. 14.

21) 「동아일보」 1948. 11. 16.

년 12월 20일 200명의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비밀리에 대전의 연대에 입대하였다.²³⁾ 우익청년단체 성원들의 입대는 이 단체들에서 이전까지 공공연하게 행사하던 사적(私的) 폭력이 국가 공권력으로 편입됨을 뜻하였다. 또 이들의 입대는 군대 내 이데올로기의 재정립과 통일을 의미하였다. 즉 반공이념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육군은 이념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비밀리에 입대한 대전 제2연대는 1948년 12월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이 중에서 제2연대 제3대대는 대부분 서북청년회 단원들로 구성되었다.²⁴⁾ 특히 1948년 12월 20일 제주도에 파견된 서북청년 단원들은 ‘특별중대(elite company)’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특별중대는 2여단 내에서 반대자를 색출하는데 최선봉으로 활용되었다. 육군은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이 부대들은 주로 서북 출신들의 우익 청년단체 성원들을 주축으로 편성하였다.²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대가 재편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거의 무차별적인 모병이 이루어지자 군대에서는 이를 금지시켰다. 1949년 1월 5일 국방부 보도과장이창정 소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에도 응모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경고하는 동시에 군 당국의 진의를 천명한 바 있지만 아직 징병령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이 때 응모여부는 절대로 자유인 것이다. 현재로 호국군 요원(護國軍 要員)을 모집 중에 있으나 그 모집에 있어서 강요하는 일이 있다면 자진 응모하려던 청년은 도리어 응모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지목 받는 청년을 강제 응모시킨다면 군의 역량을 약화시킬 뿐더러 일단락 짓게 된 숙군을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군으로서는 아직 그러하게 지나친 모병을 하지 않아도 국토방위와 국가 주권옹호·국민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두는 동시에 이 기회에 동지여러분께 부탁코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의 의도를 오해치 말고 애국심을 그릇되게 발휘하지 말아 주며 또한 우리 국군의 역량을 절대 신뢰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은 바이다.”²⁶⁾

여순사건 이후 모병제도가 바뀌었다. 여순사건 이전까지 군인들을 보충하는 것은 대

22) 「자유신문」 1948. 12. 26.

2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2. 27~12. 28, #1023.

24) 「육본 작명 甲發」 제81호, 1949. 5. 5.

25) 이때 발족한 특수부대는 독립제1대대·호림부대·보국대대(제803독립대대)였다. 독립제1대대와 보국대대의 임무는 빨치산 진압과 선무공작이었고, 호림부대의 임무는 주로 대북첩보 수집이었다. 초반기에는 국방부 제4국에서 담당했으나 제4국이 폐지된 뒤에는 육군본부 직속의 특수부대가 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8, 333~334쪽; 국방부, 앞의 책, 1984, 147~151쪽.

26) 「한성일보」 1949. 1. 6.

상자들을 모집하는, 말 그대로 ‘모병(募兵)’제였다. 그러나 여순사건 이후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대상자(성인 남성 20세)들을 모두 징집의 대상으로 삼는 ‘징병’제로 바뀌었다. 비록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1949년 7월 15일 국회에서는 병역법이 통과되어 8월 6일부로 공포되었다. ‘병역법’의 제정은 국방경비대와 같은 ‘모병’이 아닌 병역 대상자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며 만 20세가 되는 남성들을 국가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이것은 병역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국민’을 체제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였다.²⁷⁾

3. 군경의 협력과 친일파의 입대

여순사건 이후 변화 중의 한 가지는 미군정기 내내 대립했던²⁸⁾ 군경찰 사이의 화해가 시도된 점이다. 군경간의 화해 시도는 미군정부에서 있어왔다. 그러나 국방경비대 시절의 군경간의 화해가 개별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행사였던 반면, 여순사건 이후 추진된 군경간의 화해는 군경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순사건의 직후부터 정부에서는 군경협력을 강조하였다. 군대와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이 함께 10월 26일 전남 광주의 제5여단사령부와 제8관구경찰청(전남도경찰청)을 연달아 순시하였다.²⁹⁾ 10월 28일 대통령 이승만은 군경 협력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³⁰⁾ 11월 13일 정부대변인 김동성 공보처장은 ‘여순사건의 원인이 군경대립이라는 것은 낭설’이라고 발표하였다.³¹⁾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훈령 제3호’를 공포해 군경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11월 27일 서울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참관한 군경간의 친선행사가 열렸다.³²⁾ 이후로도 군경간의 협력 시도는 계속되었고 그

27) 김득중은 병역법 시행을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반공전선에 나가 싸우는 것이 국민의 의무가 되었다고 했다. 김득중, 앞의 논문, 294~295쪽.

28) 국방경비대 제1연대 연대장 베로스(Russel D.Barrows)중령은 “일주일에 한 번꼴(about once a week)”로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n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자료집 - 시민소요·여론조사 보고서(2)』, 1995, 238쪽).

29) 「서울신문」 1948. 10. 29.

30) 「동아일보」 1948. 10. 28.

31) 「대동신문」 1948. 11. 13. 그러나 이 같은 성명은 여순사건의 원인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여순사건 직후 여순사건 후 국방부 인사국장이던 강영훈 중령은 여순사건의 원인에 대해 “많은 경관은 다만 묵묵히 어느날 만을 기하고 있는 국군 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군병사의 반경감정(反警感情)은 결코 사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모략으로 발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주사태만 하더라도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설국환, 「叛亂地區踏査記」『新天地』3권 10호, 1948. 11.

결과 빨치산 진압을 위한 군경 합동회의가 열렸다. 더 나아가 때로는 군경합동 부대가 편성돼 빨치산을 진압하기도 했다.³³⁾ 각지에서 현지 경찰들은 지형과 지물을 잘 몰랐던 진압작전 부대의 길 잡이 노릇을 했고, 또 여순사건 이후 전군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숙군이 진행될 때 경찰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배자들을 검거하는 등 숙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⁴⁾ 이외에도 좌익세력을 검거하는 일에서도 군경합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음으로 여순사건 이후 과거 친일파로 비판받아야 할 인물들이 군대를 도피처 삼아 입대하였다. 1949년 1월 반민특위가 발족하고 친일파 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나 육군은 당시의 요구를 ‘반공’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묵살하였다.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당시 여론 때문에 군대는 공개적으로 친일파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1949년 1월 중순 국방부에서는 일제시기 고등경찰이나 헌병으로 근무한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채용하지 않겠다는 모병방침을 공고하였다.³⁵⁾ 그러나 친일파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원칙은 실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미 일본 관동군 헌병대 오장(伍長 : 하사관) 출신인 김창룡은 육군 정보국제3과(방첩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1948년 11월 군사 경력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우며³⁶⁾ ‘친일파’라는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1948년 11월 20일, 11월 24일, 12월 10일 임관한 인물들 중에는 다수의 일본 육사 출신들이나 만주군 출신과 그리고 전봉덕과 같은 친일경찰들이 포함되었다.³⁷⁾ 1949년 1월 24일 육사 8기 2차로 소위 임관한 사람들 중에도 일본군에서 헌병 조장을 지냈던 경력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규원·조병진·장준식·최승화 등 일본군 헌병 조장이거나 준위 등을 지낸 인물들이 한꺼번에 임관하였다.³⁸⁾ 이들 외에 노엽도³⁹⁾일본군 헌병 출

32) 「한성일보」 1948. 11. 28.

33) 1949년 4월 육군 제5사단과 전남도경찰국의 군경합동부대가 빨치산 진압작전을 수행하려고 출동하였다. 「자유신문」 1949. 4. 2.

34) 1948년 11월 29일 국방부는 숙군에서의 공로를 이유로 육군 정보처·군기대·수도청 사찰과 등을 표창하였다. 「자유신문」 1949. 11. 30.

35) 「자유신문」 1949. 1. 16.

36) 「조선중앙일보」 1948. 12. 23.

37) 특임 5기에는 이들의 예도 광복군 출신으로 장흥과 박영준 등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친일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다.

38) 이들의 직위나 기록으로 볼 때 일본군 헌병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였다. 헌병대 조장을 지낸 장준식과 최승화는 각각 7년과 6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39) 육사 8기 2차로 특별임관한 사람들중 이덕수와 노엽이 있었는데, 이덕수는 일제시기 독립군 활동을 하다 노엽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을 밝힌 이덕수를 노엽이 풀어주었으며 그 인력으로 해방 후 육사에 함께 입학했다고 한다.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291쪽. 그뒤 노엽은 육군 정보국 방첩과에서 활동하였다.

신이였다.⁴⁰⁾

1949년 1월 29일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던 김상돈은 일제 때의 고등경찰관이나 악질 고관 군인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⁴¹⁾ 반민특위법에는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와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반민법의 공직 규정에 따르자면 육군 수뇌부 상당수가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⁴²⁾ 육군참모총장 이응준과 채병덕, 신태영(대리)은 일본육사를 졸업한 뒤 일본군에서 영관급 장교를 지냈으며, 38선 서부 지역을 경계하던 제1사단장 김석원도 마찬가지였다.⁴³⁾ 이들 중 이응준과 김석원은 일제말기 학병들과 지원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을 다니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일본이 항일빨치산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군에 설치했던 ‘간도특설대’ 출신 장교들, 일본군이나 만주군 헌병대 출신 등 수많은 군인들이 반민법의 처벌대상자이거나 최소한 공직에도 나설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군 지휘부의 핵심을 형성하였던 점이었다.

김상덕의 입장과 반민법의 규정은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었다. 1949년 2월 2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 이들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장공속죄(將功贖罪-장차 공을 세워 죄를 면제받다 : 인용자 주)토록 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며⁴⁴⁾ 친일경찰과 군인들의 숙청을 반대하였다. 다음날 김상덕은 다시 “치안문제, 정부위신 문제, 인심수습 등을 예고하였으나 악질 반민자 처단에 있어 국군이나 경찰에 추호도 동요될 것이 없으며 동시에 인심수습에 있어서는 반민특별법을 철저히 운영함에만 있는 것을 또 언명한다”며⁴⁵⁾ 친일경찰과 군인을 숙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자신들이 반민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국방부와 육군 최고 수뇌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였다.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원용덕·정일권 등과 의논해 자신이 참모총장을 그만두게 되면 원용덕·정일권 등 군 수뇌부가 모두 물러나겠다는 것을 정부 측에 전달해, 군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⁴⁶⁾ ‘친일파

40) 이들의 군번이 한꺼번에 부여되었고 특별 2반으로 임관한 것으로 보아 이들 외에도 일본군 헌병 출신들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다.

41) 「자유신문」 1949. 1. 31.

42) 반민특위를 검토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군의 핵심이 친일경력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38~41쪽.

43) 특히 김석원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1개 대대를 이끌고 중국군에 맞섰고, 그 공로로 천황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았다. 그는 이 은사금을 성남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헌납했고, 해방후 성남고 이사장을 지냈다.

44) 「자유신문」 1949. 2. 3.

45) 「자유신문」 1949. 2. 4.

46) 고정훈, 앞의 책, 98~101쪽.

속청' 요구를 비껴갔다. 오히려 친일경찰이었던 헌병대 부사령관 전봉덕은 '국회프락치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다. 그 뒤 6월 29일부로 헌병대에서는 이익흥·홍순봉·안익조⁴⁷⁾ 등을 헌병 소령으로 특별 임관시켰다.⁴⁸⁾ 이들 외에도 김정빈·김홍걸·백원교·박경후 등이 헌병 대위로 특별 임관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친일경찰 출신으로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은 직후 군으로 입대하였다.⁴⁹⁾

4. 군대의 '반공화(反共化)'

여순사건 직후 군대는 여순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극우반공체제를 지킬 수 있는 물리적 기구로 변모해 나갔다. 이를 위해 군대는 여순사건 이후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 이데올로기의 재정립과 이념의 통일을 기하였다. 이것은 국방경비대 시절 주한미군이 내세웠던 '불편부당'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여순사건 이후 군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1948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범석은 주한미미시군사고문단(KMAG)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사건(여순사건·대구사건:인용자)이 대한민국 군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이를 계기로 '반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⁰⁾ 군대는 이전까지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못했던 '반공'을 공식 이념으로 병사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하였다.

여순사건 이전에도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공공연하게 반공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여순사건 전까지 군에서는 민족통일을 바라며 동족상잔에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반공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었다.⁵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일반의 여론은 무력

47) 안익조 安益祚(?~1950) 일제시기 만주군 소교 출신이다. 해방후 경찰에 투신해 제5관구 경찰청 총무부 과장, 경북 군위 경찰서장을 지냈다. 제2사단과 제3사단 헌병대장을 역임하였고, 제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부역자'로 분류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1950년 11월 7일 총살형에 처해졌다. 「영남일보」 1950. 3. 23; 「동아일보」 1950. 11. 8.

48) 이들은 군번 15111~15113으로 임관되었다. 자료에는 이들이 헌병 특임으로 1949년 7월 1일 임관한 것으로 돼 있다.

49) 반민특위를 연구한 한 연구자는 친일경찰 출신들이 반민특위의 활동이 미치자 군대에 입대한 것으로 지적하였다(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328~329쪽). 하지만, 이들이 군대에 입대한 시기는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은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들이 입대한 시기가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되지 않았던 이유는 친일경찰 출신들이 주로 입대했던 헌병대 사령관이 광복군 출신으로 군의 민간 사찰과 정치개입에 반대한 장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장흥이 헌병사령관에서 해임된 날은 김구가 암살된 직후였으며 친일경찰이 군으로 입대한 시기와 일치한다.

50) AMERICAN MISSION IN KOREA, 『MEMORANDUM FOR THE RECORD -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51)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서중석, 앞의 책, 2권, 44~45쪽.

통일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석은 가장 먼저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대결을 가정한 사상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⁵²⁾ 일반의 여론과 상반되었으므로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었으나 이범석은 반공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1948년 8월 10일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 내정된 이범석은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Roberts) 준장과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은 반공이 되어 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하는 군대가 되어 한다”⁵³⁾고 역설하였다.⁵⁴⁾ 9월 8일 이범석은 미국 『성조(Stars and Stripes)』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실패하면 전쟁에 의해 남북통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해⁵⁵⁾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내비쳤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대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며칠 뒤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인 공보처장 김동성은 정부 일각에서 표명된 북진 무력통일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였다.⁵⁶⁾ 9월 24일 열린 국방부 산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다음의 선서문을 작성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뒤 국회를 방문하였다.⁵⁷⁾

“대한민국 국방군은 시조 단군의 건국훈을 본받아 **정부를 봉대하고** (군의 : 인용자)최고통수자이신 **대통령 명령을 지성으로 받들어 충과 성으로써** **國과 주권을 옹호하고, 민족을 애호함은 열과 힘을 다함으로써** 국군으로서의 천직을 완수해 장래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 분투 노력할 것을 삼가 각하 앞에 엄숙히 선서하나이다.(강조는 인용자)”

이 선서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라서 군대의 일반적인 임무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다.⁵⁸⁾ 즉 국가와 주권을 옹호하고 민족을 애호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만 있을 뿐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방향에서 활동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기 전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한 신문에 기고한 ‘建軍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라는 글에서 ‘건군의 기본이념’을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보유하는 국방군을 창설한다”며 국군의 사명으로

52) 강영훈, 「철기장관 국방시대 회상」(李範奭將軍記念事業會編, 『鐵驥 李範奭 評傳』, 삼육출판사, 1992, 106~107쪽).

53)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s and Lee Bum Suk at 1600 9 August 1948』 1948. 8. 10.

54) 1948년 9월 24일 열린 국방부 산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전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공산주의 야성과 비애국적 비민족적 성질을 파괴하라”고 연설하였다.

55) 「동아일보」 1948. 9. 11.

56) 「동아일보」 1948. 9. 18.

57) 「국민신문」 1948. 9. 26.

58) 이날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중에는 “...공산주의 야성과 비애국적 비민족적 성질을 파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시정월보』 창간호, 1949. 1. 5. 76쪽.

“국토와 민족방위, 즉 국방은 외국의 내침에 제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을 보호하며 주권을 옹호하는 3대 조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⁹⁾

‘반공’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범석은 국방부 직속의 정보기구 설치를 계획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정보기구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국방부 내의 정보기관 설치에 반대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주장처럼 당시 군내 정보를 수집하는 각 군의 정보국(G-2) 외에도 서울시경 사찰과 등 다양한 정보기구가 존재하였다.⁶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에서 이범석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철수가 예정된 주한미군 방첩대를 대신할 한국인 기구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특무교육이 주한미군 방첩대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⁶¹⁾ 결국 이범석의 국방부 직속의 정보기구 설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뒤 상황이 변화하자 정보기구를 수립하겠다는 이범석의 입장이 관철돼 1948년 12월 8일 국방부에 제4국(정보국)이 설치되었다. 국방부 제4국은 방첩 활동과 정보 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다.⁶²⁾ 국방부 제4국 국장에는 민족청년단 감찰부장 출신의 김근찬(金根燦)이⁶³⁾ 임명되었다. 이 부서는 육군 호림부대·보국부대·독립대대 등 대북 첩보수집 활동과 빨치산 진압작전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방부직제에 있는 조직⁶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임명신 상공부장관의 지원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나갔다. 그러다가 1949년 1월 16일 발생한 ‘수원사건’과⁶⁵⁾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퇴임으로 인해 1949년 5월 해체되었다. 이후 방첩

59) 이외에도 군정군령의 관계 등 편제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 「수산정제신문」 1948. 10. 12.

60) 이 시기 정보기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국가 정보기관의 형성과 활동」 『제노사이드 연구』 제2호, 선인, 2007.

61) 『CIC(방첩대) 보고서(1945. 9 - 1949. 1)』 1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00쪽, 이 때 특무교육을 받았던 명단은 다음을 참고. 김학재, 앞의 논문, 164~165쪽의 표를 참고.

62) 김근찬은 국방부 제4국의 임무를 북한 동향에 대한 첩보수집과 국내에서 난동하는 적색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CIC공작(방첩 활동을 지칭 : 인용자 주)으로 규정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3, 14쪽.

63) 일명 김석관이다. 국방부 제4국은 존재기간이 짧았고 정보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실체와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장인 김근찬은 해방 직후 임시정부환영회에도 참여한 뒤 이범석이 만든 조선민족청년단 감찰부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국방부 제4국장을 맡은 이유는 족청 감찰부장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1977년 국방부 제4국 활동을 증언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앞의 책, 2003, 14~15쪽.

64) ‘국방부 직제(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의 제7조에 “제4국은 조사, 防諜 및 검찰에 관한 사항을 분掌한다”고 명시되었다. 「관보」 20호, 1948. 12. 7.

65) 이 사건은 1949년 1월 16일 대한청년단 수원군단부 결단식에서 대통령 암살계획을 적발하였다고 한청분단장 김만길 등 37명의 단원을 대한관찰부 요원들이 납치, 고문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관찰부

활동 등 국방부 제4국의 임무는 육해공군 각 정보국으로 이관되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반공궐기대회를 열거나 대대적인 월남 군인들의 환영식을 열며 ‘반공’을 고취시켜 나갔다.

여순사건 직후 군대는 ‘반공이념’을 주입시키기 여러 가지 교리를 마련해 나갔다. 1948년 11월 20일 제1여단장 이응준 대령은 ‘사병훈’을, 12월 1일 여순사건 토벌작전 전몰장병합동위령제에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국가·민족에 대한 충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를 격발시키는 ‘국군 3대 선서’를 선포”해 전 부대에 반포시켰다.⁶⁶⁾ 사병훈과 국군 3대 선서에는 군이 반공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⁶⁷⁾

또 군의 반공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제의 방식과 용어가 차용되었다. 일제의 용어였던 ‘군신(軍神)’이 등장하고, ‘육탄10용사’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군신으로 추앙되었던 인물들은 백인기(白仁基)와 위대선(魏大善)이다. 백인기 중령은 육군 제12연대장으로 여순사건이 일정하게 마무리 된 시점에서 전남 구례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중 구례에서 남원으로 구례 산동면에서 빨치산의 매복에 걸려 습격받은 뒤 도망치다 힘에 부치자 자살했던 인물이었다. 위대선 중령은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서 빨치산 진압작전을 지휘하던 중 빨치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들은 여순사건 이후 전남지역에서 빨치산 진압작전에 나섰다가 빨치산의 매복에 걸려 죽은 육군의 고위급 장교들이었다. 군에서는 이들을 ‘군신(軍神)’이나 ‘호국의 신(護國의 神)’으로 추앙해 추모하였다.

1949년 발생한 38선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육탄 10용사’의 이야기도 신화화됐다.⁶⁸⁾

소속이자 국방부 정보국 부평과전대 정보원이었던 김성렬, 강형희, 이연종, 박시현 등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결국 국회는 정부에 대한관찰부 해체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동시에 1949년 예산에서 관련 항목을 전액 삭감하였다. 「한성일보」 1949. 1. 27. 이승만 대통령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이어지자 ‘대한관찰부’를 대통령 직속의 ‘私行御使’격으로 발동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며, 그 임무로는 비행을 정탐해 감봉·징직·파면을 시켜 법의 처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밖에 司正局이란 美 CIC와 같은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아래 모든 정치관계·기타를 정탐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서울신문」 1949. 1. 20.

66)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1집, 1955, 19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388~389쪽. 이날 위령제는 관민합동으로 총 91명의 사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만 대통령 이하 각 부 장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육해공군 장병, 경찰, 그리고 각 학교 학생, 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등 다수가 참여하였다. 육군본부의 『육군발전사』 제1집에는 이날 위령제에서 92명에 대한 위령제였다고 나온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신문보도에 총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육군본부의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 「서울신문」 1948. 12. 2.

67) 1948년 12월 10일 육사 제8기생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내외빈 축사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맨 마지막 순서는 최용덕 국방부 차관의 선창으로 ‘사상을 통일하자!’, ‘국토를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것이었다. 「국제신문」 1948. 12. 14.

68) 북한에서는 ‘육탄 10용사’ 중 서부덕(徐富德)상사와 오제룡(吳濟龍) 일병 등이 살아있으며, 38선 일대에 이들의 사진이 들어간 대량의 환영전단·환영전단·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살포하기도 하였다고 한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의 292고지를 두고 남북한이 사단 급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날의 전투는 4일간 지속되고 한국군은 1사단의 몇 개 대대 병력을 투입하였지만 292고지 전투에서 승리하지는 못하였다.⁶⁹⁾ 이 송악산 전투에서 ‘육탄 10용사’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 최초로 ‘육탄 10용사’의 신화가 발표된 것은 5월 6일 전황 발표에 서였다. 이날 개성 전투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5월 5일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국군 옹진부대 서부덕 이등 상사 외 8명이 북한군의 토치카를 육탄으로 부딪쳐 깨뜨리고 전사했다는 것이었다.⁷⁰⁾ 군 당국에서는 이들을 일본군의 ‘육탄3용사’⁷¹⁾보다 낫다며 칭송했다.⁷²⁾ 일본의 ‘육사 3용사’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도 재현된 것이었다. 국회에서도 6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육탄 10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⁷³⁾ ‘육탄 10용사’에 대한 정부 당국과 육군 수뇌부의 칭송에 이어 그 유가족들에 대한 원호 모임도 추진되었다. 낙랑클럽과 이대동창회에서는 100만원을 모아 유가족 한 집 당 10만원씩을 5월 25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달하였다. 또 5월 30일 이화여대 동창회 주최로 ‘육탄 10용사 유가족 원호음악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이 음악회는 초대권 없이 총 수입을 그대로 유가족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다.⁷⁴⁾ 또 ‘육탄 10용사’를 기리는 ‘육탄 10용사’동상을 건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순국10용사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다.⁷⁵⁾ 육군본부 정훈국에서는 ‘육탄 10용사’를 기리는 『육탄 10용사전』을 9월 20일 발간하였다.⁷⁶⁾

이 같은 추모 방식은 집합적 전쟁기억을 전승하고,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창출 혹은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사자의 추모공간과

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앞의 책, 522~525쪽.

69)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339쪽. 송악산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병준, 같은 책, 333~345쪽.

70) 「동아일보」 1949. 5. 8.

71) ‘육탄 3용사’는 1932년 2월 2일 일본군 일등병 3명이 폭약을 가득 채운 길이 3미터의 대나무 탄약통을 들고 상해 근교의 중국군 방호선에 돌격함으로써 일본군의 진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한 전투에서 탄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들이 탄약통을 들고 있는 동상을 곳곳에 건립하였고, 이들을 주제로 한 ‘야마토 다마시의 노래’가 유행가가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3, 4학년생의 창가로 만들어졌을 만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大貫惠美子, 이형철 역, 2004, 『사쿠라도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211~212쪽.

72) 5월 19일 국무총리 이범석은 ‘육탄 10용사’를 치하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이 담화에서 “10용사의 충렬 위대한 공훈은 건국청사에 찬연히 빛나”며 “소위 왜적의 육탄 3용사와 같이 명령에 의한 결사대가 아닌 스스로 살신성인 한 것이니 “10용사의 영령은 전 민족의 숭존(崇尊)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유가족은 정부에서 최선의 구휼을 도(圖)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949. 5. 20.

73) 「제헌의회 속기록」 제3회 국회속기록 제13호(1946. 6. 6), 256쪽.

74) 「동광신문」 1949. 5. 26.

75) 회장에는 신익희 국회의장, 부회장은 이재순이었다. 「자유신문」 1949. 7. 16.

76) 육군본부 정훈국, 1949 『육탄 10용사전』, 국방신문사. 이 책은 서문(국방장관 신성모, 총참모장 채병덕, 제1사단장 김석원 등의 발간사)과 ‘10용사전을 내며(육군 정훈감 송면수)’ 그리고 ‘비둘기고지육탄전기’와 육탄 10용사 개일 별 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추모 의례를 진행해 침략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케 했다.⁷⁷⁾ 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 방식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계승 재현되었다.

5. 군대의 권한강화와 그 영향

여순사건 이후 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군대의 권한이 강화된 점이다. 군대의 권한 강화는 이미 4·3항쟁의 진압에 국방경비대가 동원되면서부터 예견되었다. 4·3항쟁이 쉽게 진압되지 않자 주한미군정은 경찰을 대신해 국방경비대를 진압작전에 동원하였고, 여기에 반대하는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는 대신 일본군 학병 출신으로 일제시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박진경 중령을 제11연대장에 발령하였다. 이후 국방경비대와 경찰은 역할을 구분하였다. 국방경비대는 진압작전에 동원되었고, 경찰은 치안유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국방경비대 창설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국방경비대 초창기에는 국방경비대가 치안권을 보유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의 통제를 받기도 하였고,⁷⁸⁾ 치안권을 둘러싼 대립이 군경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4.3항쟁을 진압하며 군이 경찰을 대신해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위상변화는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한층 군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군대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사법권을 관할하며 경찰의 치안권 행사를 통제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군대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하였다. 1948년 12월 국방부에서는 ‘계엄법·국군운수항역군사보위법·징발법·군기보호법’ 등을 초안해 국회에 회부하였다. ‘계엄법’은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하였을 때 전국 또는 한 지방을 경계하는 법이며 임전(臨戰)지역과 비상지역의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보고하되 임시 계엄은 별항에 규정된 최고사령관이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엄령이 포고 또는 선고되었을 때는 그 지역 내의 군사에 관계 있는 행정과 사법 사무는 그 관상(管常)의 권한을 최고사령관에게 일임한다고 규정되었다. ‘징발법’은 전시 혹은 사변 기타 군사상의 필요에 응해 국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움직이게 할 때에 있어서 그 필요한 지방인민에게 부과 징집하는 법이다. 그리고 평시에는 행군과 연습을

77) 일제하 전쟁과 관련한 각종 추모 공간과 의례 및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호기, 「일제하 조선에서의 전쟁사자 추모 공간과 추모 의례」,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05.

78) 1946년 8월 6일 주한미군정청 장관 리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국방경비대원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방경비대는 조선의 예비경찰대이므로 그들은 경찰권(치안권을 의미 : 인용자 주)은 없다. 국립경찰은 민중을 위하여 민중의 공복으로써 봉사하고 있는데 국방경비대는 위험 때와 특별명령을 받았을 때에만 체포할 권리가 부여된다”며 국방경비대의 치안권 행사를 금지시켰다. 「조선일보」 1946. 8. 7.

할 때에는 본법을 적용하며 그 세칙은 명령으로 정한다. 징발의 대상은 의식주에 관한 거의 전부에 걸쳐 있으며 징발서는 징발구의 책임자에게 교부하며 징발이 면제되는 것은 대통령·부통령·국무장관 혹은 외국 대공사관과 영사관의 차마 그리고 철도·체신·군대·학교·박물관·도서관·병원 등과 전기 건물 저택 등이 면제되며 학교는 때에 따라 징발할 수 있고 그 배상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해 보상하며 징발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군기보호법’은 군사상의 비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 혹은 우연한 원인으로 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군항·요항·방어항(軍港·要港·防禦港) 기타 군사시설을 측량·묘사·촬영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였다. 군기운수항역군사보위법은 군사상의 요구에 의해 국군의 인마, 기타 군수제품을 수송 양륙하는 항만과 그 주의의 해륙지역을 국군운수항역이라 해구와 임시의 두 가지로 나누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이를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그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⁷⁹⁾ 결과적으로 이 법률안들 중에서 ‘계엄법’만 통과되었지만 군이 ‘전시’라는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민간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었고, 해당 지역의 모든 군대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들 중에서 ‘계엄법’만 1949년 통과되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었다.

여순사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군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일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다.⁸⁰⁾ 여기에 군에서는 군 관련 기사에 대해서 군작전과 군기 보호를 내세우며 사전 검열제를 실시함으로써⁸¹⁾ 정확한 정보 전달 조차 차단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 직후 발표된 ‘계엄령’은 불법이었다. 아직 국회에서 ‘계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조차도 국회에 출석해 ‘임시적인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대는 전권을 장악하였다. 계엄사령관에게는 고등군법회의 설치권이 주어졌고, 해당 지역의 민간사회에 대한 행정권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입법권은 없으나 계엄사령관은 법 보다 우월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고문을 발표해 민간사회를 통제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의 일상이 군대에 의해 통제되었다. 통금시간과 신분증명서 그리고 여행증명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마을 소개(疏

79) 「민주일보」 1948. 12. 4.

80) 김득중은 ‘계엄령’ 발표의 이유를 진압군이 민간인들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계엄령선포 지역의 상황을 보면 타당한 지적이다. 김득중, 앞의 논문, 261쪽.

81) 「세계일보」 1948. 11. 21.

開)를 통해 거주자의 자유마저 빼앗겨 버렸다. 또 마을 주민들은 군경의 감시 아래 생업에 종사하였다. 즉 빨치산 진압을 명목으로 소개된 마을의 주민들은 군대와 경찰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농사를 지어야 했다.⁸²⁾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 인근에 위치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은 ‘산사람’들이 들어와 징발하는 것을 예방한다며 소나 곡식 등을 지서에 맡겨 놓게 했다. 하지만, 밤중에 빨치산들이 지서를 습격해 소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유일한 생산수단인 소를 잃어버린 채 다음해 농사에서 소를 대신해야만 했다. 또 지리산 자락에 논이 있는 경우 군대가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아침에 농사를 짓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모여 미리 작성된 연명부와 대조, 팔에 도장을 찍은 뒤 농사를 지으러 갔다. 오후가 되면 다시 같은 장소에 모여 군의 대조작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간혹 일행 중 뒤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나타나기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귀가할 수 없었다.⁸³⁾ 또 군사작전을 위한 목적에서 주민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심지어 계엄령이 발포된 지역의 음식점 허가까지 군에서 담당할 정도로 통제되었다.⁸⁴⁾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집단부락’과 각종 방책이 세워져 이분법적 구도-국민과 비국민의 분리-가 형성되었다. 즉 ‘집단부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 규정되어 군경의 보호를 받았으나 ‘집단부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비국민’으로 간주되었고 진압의 대상이 되었다.

또 현지에 주둔 중인 군대의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즉결처분’이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직후 구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상당 부분은 현지 지휘관들의 뜻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례 주민들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재판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 없이 마을 단위로 연행된 채 학살당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는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되어 군인들 뿐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도 군이 담당하였다. 여순사건 직후 여수와 순천 그리고 광주에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⁸⁵⁾ 좀 뒤의 일이지만 계엄지구 전투사령관에게는 고등군법회의의 재판권이 부여되었고,⁸⁶⁾ 그에 따라 민간인들에 대한

82) 「자유신문」 1949. 10. 21.

83) 구례군지편찬위원회, 수집자료.

84) 1949년 2월 17일 제주도 시찰을 마치고 광주에 도착한 이웅준 참모총장을 맞이해 제5사단 주최로 군·경·민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장들에게 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건의하라고 요구하자 광주부윤은 “계엄 발포중이라 해 군에서 요리점 허가까지 취급한다는 정식 통문을 받은 일이 있는데 행정기관을 위해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호남신문」 1949. 2. 19.

85) 여순사건 이후 고등군법회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득중, 앞의 논문, 163~170쪽.

86) 국방부, 「일반명령 제6호 - 고등군법회의의 재판권 부여」 1949. 12. 13. 이 명령은 1949년 9월 15일부 일반명령 제51호로 부여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에게 부여된 고등군법회의의 재판권을 1949년 12월 10일

재판도 계엄군이 주재하는 군법회의로 진행되었다. 민간인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김장렬 의원 등 63명의 국회의원이 군법재판으로 수형된 사람들에게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건의하였다.⁸⁷⁾

여순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는 각종 준군사조직이 만들어졌고, 이것의 훈련은 군에서 직접 담당하였다. 군대의 임무와 규율 등이 민간 사회의 영역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1948년 11월 20일 대통령 긴급임시조치령이 공포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하는 청년들을 기간으로 호국군을 창설하였다. 1949년 1월 7일에 제101·제102·제103·제106 여단 등 4개 여단이 창설되었다. 1월 11일 그 직속으로 지역별로 10개 연대 편성을 완료하였고, 도·시 단위 부대에는 현역 장교를 배치하였다.⁸⁸⁾ 또 1948년 12월에 ‘학도 호국단 조직 및 지도요령’이 만들어졌고, 1949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학도 호국단이 창설되었다.⁸⁹⁾ 1948년 12월 문교부와 국방부는 국가비상시국수습대책으로 향토방위태세를 철저히 하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양양시킬 목적에서 1948년 겨울철에 각 중등학교 체조교사 260명에게 임시 군사훈련을 시킬 것에 합의하였다.⁹⁰⁾ 이들은 군사교육을 이수한 다음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켜 학도호국단의 배속장교로 배치되었다.⁹¹⁾ 1949년 3월 9일 국방부와 문교부는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군대 ‘구령’ 기준을 개편하였다. 이날 회의의 결정은 일본군대식 구호를 새로 바꾸는 것이었으며, 문교부가 참가한 것은 군대의 구호가 학교 체육 용어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⁹²⁾ 이렇듯 준군사조직의 훈련을 군에서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군은 민간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시켜 나갔다.

군에서는 준전시의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민간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군 사찰기관은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간에 대한 사찰을 강화해나갔다.⁹³⁾ 여순사건 이후 전개된 숙군을 계기로 군 사찰기관들은 군 내부 뿐 아니라 민간사회로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군에서는 숙군을 전개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을 강화하였다. 헌병사령부에서는 숙군과 함께 국회의

부로 안동지구전투사령관 및 소속 장교에게 까지 확장시키며 대상지역도 안동지역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었다.

87) 「서울신문」 1949. 4. 20.

88) 국방부, 앞의 책, 1984, 151~152쪽.

89) 中央學徒護國團, 『學徒護國團十年誌』, 1959, 75쪽.

90) 「자유신문」 1948. 12. 16.

91) 국방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 (1945·8~1950·6)』, 삼화출판, 1984, 152쪽.

92) 「동아일보」 1949. 3. 19.

93)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사찰기관의 형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학재, 앞의 논문.

원, 공무원 및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좌익세력을 색출한다며 연행을 강행하였다.⁹⁴⁾ 육군 본부 정보국에서도 민간인들을 연행해 조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헌병대와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연행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않으며, 체포 구금 수색은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⁹⁵⁾ 하지만, 헌병대나 군 정보기관의 사찰과 구금은 이 같은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군 사찰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연행 그리고 뒤이은 무리한 고문수사 등은 필연적으로 고문치사와 같은 불상사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 소속 요원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민보단장 고희두를 연행해 고문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⁹⁶⁾ 이 사건은 1949년 9월 29일 고희두가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에 구속돼 수사를 받던 중 급사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우익 단체인 민보단 단장이었으므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 소속 이등상사 도진희를 독직 및 고문치사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⁹⁷⁾ 이 사건으로 도진희는 구속돼 징역형을 살던 중 한국전쟁이 터지자 그의 상관이었던 김창룡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⁹⁸⁾

1949년 4월 13일 헌병대 사령관 장흥은 헌병대의 민간인들의 취제(取締) 또는 구인(拘引)하는 것은 불법월권행위이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⁹⁹⁾ 그러나 ‘군의 대민사찰 금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은 “앞으로는 헌병대라도 일반민간을 구속감금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던¹⁰⁰⁾ 것처럼 이후로도 군의 민간사찰은 계속되었다. 군 사찰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사찰기구가 속해있던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는 1949년 10월 8일 연석회의를 열어 사찰기관을 일원화하며 군은 민간사건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94) 헌병사편찬실, 『한국헌병사』, 헌병사령부, 1952, 187쪽.

95) 『대한민국 헌법』 제9조.

96)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민간인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육군 정보국장 백선엽의 회고에 따르면 제1연대 정보장교였던 김창룡이 찾아와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알리고 도움을 청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한다. 김창룡의 직책과 백선엽의 회고로 볼 때 ‘고희두 사건’은 아닌 듯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백선엽, 『군과 나』, 320쪽.

97) 「국도신문」 1949. 10. 15.

98) 한국전쟁 이후 도진희는 정계로 진출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1956년 1월 김창룡암살건이 발생했을 때 도진희는 주범 허태영의 공범 혐의로 구속되었다.

99) 헌병사편찬실, 앞의 책, 제2편, 11~12쪽.

100) 「자유신문」 1949. 5. 26.

다.¹⁰¹⁾ 결국 1949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일반인(민간인 : 인용자 주) 수사는 불가하며, 수사기관을 일원화 한다는 ‘헌병 및 국군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¹⁰²⁾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사찰기관의 문제가 계속되자 육군참모총장 대리 신태영은 1950년 1월 1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방첩대가 민폐가 많으며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 방첩대를 해체하는 일대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⁰³⁾

여순사건 이후 군은 민간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 아니라도 각종 시국 관련 사건의 재판을 군에서 담당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호익 총경 암살사건’과 ‘국회프락치사건’ 연락원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대한 재판이다. ‘김호익 총경 암살사건’은 1949년 8월 12일 서울시경 사찰과 김호익 총경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남로당원 이용운의 저격을 받아 살해된 것이었다.¹⁰⁴⁾ 이 사건은 사건발생 장소(서울시경 사찰과 별실)와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군법회의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사건의 배후수사는 서울시경 사찰과에서 진행하였고,¹⁰⁵⁾ 기소도 검찰에서 하였으나 그 재판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진행되었다. 기소 당시 적용된 법률은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이었다. 피의자인 이용운은 “나는 지방인(민간인을 의미 : 인용자 주)이니 군법회의에 회부될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 이 공판에 응할 수 없다”며 군법회의 회부를 거부하였다.¹⁰⁶⁾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용운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았다.¹⁰⁷⁾ 민간인들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에 대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원용덕은 “이번 사건을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은 이적행위와 작전지구 등에서 간첩행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준엄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은 피고 9명은 전부가 아직도 매국노의 탈을 못 벗고 개준(改悛)할 의사가 없으므로 단호한 처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라며¹⁰⁸⁾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당연하다고 발언하였다. 원용덕의 발언은 법에 근

101) 「자유신문」 1949. 10. 11.

102) 『국무회의록』 1949. 11. 1; 「동아일보」 1949. 11. 3.

103) 「국도신문」 1950. 1. 13.

104) 김호익 경감(사후 총경으로 추서)은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으로 ‘국회프락치사건’을 비롯해 ‘국제간첩사건’, ‘법조계 및 법원 내 남로당 세포사건’, ‘신문기자 검거’, ‘소련영사관간첩사건’ 등을 적발한 사찰과의 핵심이었다. 「조선중앙일보」 1949. 8. 14.

105) 서울시경 사찰과는 이 사건의 배후로 소련영사관을 지목하고 소련 영사와 그 부인을 연행하였다. 「경향신문」 1949. 8. 17; 「서울신문」 1949. 8. 19.

106) 「동아일보」 1949. 9. 28.

107) 이용운 외에도 여순사건 당시 제14연대 중대장으로 이후 빨치산을 이끌었던 김지희 처 조경순을 비롯,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던 김태준·유진오·홍순학·유호진·박우용·리원장·이용환 등과 김지희의 부인으로 알려진 조경순이 함께 군사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용덕, 검찰관은 김근배 등이었다. 「동아일보」 1949. 9. 30; 「서울신문」 1949. 10. 1.

108) 「서울신문」 1949. 10. 1.

거한 것은 아니었다.

‘국군조직법’이나 ‘국방경비법’은 군법회의의 적용대상을 군인이나 군속(軍屬) 또는 군 관련 정보를 취급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프락치사건’은 헌병대에서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국회프락치사건’의 연락원으로 체포된 김정환·박연휘·정재한 등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949년 9월 3일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12월 6일 사형이 집행되었다.¹⁰⁹⁾ 전체적으로 여순사건 이후 군대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등 치안권과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6. 맺음말

여순사건 겪은 뒤 군대는 내부에서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숙군을 광범위하고도 무차별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물리적 기구로 변모하였다. 숙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며 군대는 여순사건에서 표출된 문제를 해결해갔다. ‘향토연대’를 해체하기 위해 각 부대의 주둔지 이동을 단행하였고, 군대 창설 초기의 무분별한 모병을 폐지해나갔다. 또 여순사건 후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우익 청년단체 회원들이 군대로 입대하였다. 경찰과의 협력도 강조되었으며, 숙군과 빨치산 진압 등에서 군경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군경의 갈등해소는 이후 반민특위 활동이 전개되자 친일경찰 출신들의 입대를 가능케 했다. 또 여순사건을 거친 뒤 군대는 ‘반공’을 공식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이념을 전파하는 데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였다.

여순사건 후 가장 큰 변화는 군대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군대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채 민간사회를 통제하였다.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간에 대한 사찰 강화와 군법회의 회부 등을 통해 민간사회를 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민간사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09)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164호, 1948. 11. 28;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180호, 1949. 12. 1.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김 춘 수(성균관대 강사)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하여 결정하는 자이다.”(칼 슈미트, 『정치신학』 (1922), p.13)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통해 법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창출하고 보장한다.”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2008), p.59)

1. 머리말
2. 계엄령 발포
3. 즉결처형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에서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이전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4·3사건 당시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발포되었다.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포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았으며, 국회에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계엄을 선포해야할 상황인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¹⁾.

따라서 여순사건 시기 계엄령에 대한 논의는 계엄령 선포와 계엄령 실시과정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한 법제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포과정의 혼란, 무원칙성에 맞춰져 있었다²⁾. 이러한 점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계엄령의

1) 제1대국회 1회 89차 국회속기록(1948. 10. 27) ; 제90차 국회속기록(1948. 10. 28); 제91차 국회속기록(1948. 10. 29); 제92차 국회속기록(1948. 10. 30); 제93차 국회속기록(1948. 11. 1); 제94차 국회속기록(1948. 11. 2)

2) 여순사건과 4.3사건 관련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 3사건 진상조사 보고

불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계엄령의 실시과정과 관련해서는 계엄상태에서의 민간인 즉결처형문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존재 여부, 군사법상의 군사재판의 절차성 준수 여부, 적용법인 국방경비법의 부존재와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여순사건과 4.3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한 상태로 소개와 징발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국민의 생사여탈을 군의 명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여순사건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당시의 ‘모든 일’은 계엄령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또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계엄령이 무엇이었는데 묻자 ‘군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태, ‘분대장에게도 즉결권을 준’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지구에서 발생한 폭력-즉결처형, 주민 통제-은 몇 몇 악명 높은 군인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상의 법과 규칙 적용이 중단된 예외상태는 보편적 법질서의 밖에 있으면서도 법질서와 관계를 맺는다.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주권자’는 일상에서 보호 받아야할 존재에 대해서 그 보호를 중단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외 상태인 ‘계엄상태’는 보호 받아야할 국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죽이더라도 죽인자에게 죄를 묻지 않아도 되는³⁾”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근대국가는 계엄령을 대표로 하는 긴급사태·예외상태를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작전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엄상태에서의 총살은 그가 ‘빨갱이’였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죽인 뒤 ‘빨갱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된다. 따라서 여순사건에 따른 계엄령에 대한 고찰은 계엄령 선포와 적용과정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계엄 상태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자와 그렇지 않은자, 법안에 있는 자와 법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근대 국가의 구조적 폭력성이라는 일반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계엄령의 선포와 적용과정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은 어떠한 차원에서 선포되었으며,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계엄령 선포의 혼란(계엄령 성격의 불명확성, 중복 선포)과 계엄법의 부존재에 따른 위헌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의 유의미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계엄령 선포 상황을 계엄령 실시·적용, 그에 따르는 결과로부터 소급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계엄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계엄령의 선포로 많은 문제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계엄령 선포 과정은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령의 실시·적용 그리고 그에 따르는 효과와는

서』, 2003 참조

3)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옮김,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이와 관련해서는 김학재, 「한국전쟁기 봉암도 수용소 사건 이후의 유엔군 포로정책」, 제노사이드연구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8. 9. 참조

다른 차원의 경험과 국면이 결합될 수 있다.

둘째,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의 구체적 양상의 문제이다. 그 동안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재판의 존재여부, 제주4.3사건에서 밝혀진바 과정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순사건 당시의 군사재판의 양태는 당시 생존자나 목격자 증언에 의해 일부 알려졌을 뿐이다. 이글에서는 여순사건 당시의 군사재판 기록을 통해 그 구체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여순사건과 4.3사건 당시의 계엄령 경험이 1949년 계엄법 제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계엄법 제정과정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으로 창출된 가상의 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 실시 경험은 법제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 바, 이에 대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법적 선포와 혼란된 적용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구조적 폭력이 제도화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령의 문제를 관련 법의 존재 부존재로만 수렴한다면, 역으로 계엄법이 있었다면, 그리고 계엄법이 규정한 바의 절차를 지켰다면 당시 계엄령은 합법이므로 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계엄령이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군 현지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내려지고, 이러한 계엄령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이유로 한 국가폭력의 행사가 과연 온당한가라는 점에서 논의되어야한다.

2. 계엄령의 발포

여순사건 당시 1948년 10월 22일 5사단 사령부 사령관 김백일에 의해 내려진 최초의 계엄령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엄령을 발포했는지 많은 부분 의문에 쌓여있다⁴⁾. 이승만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령 발포를 부인하는 언론 보도는 이 시기 계엄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려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또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1월 26일 여수 순천 지구에 재차 계엄령이 발포되었고, 11월 1일 호남방명 계엄사령관에 의해 어떤 근거 없이 전남북 일대로 계엄령은 확대 실시되었다⁵⁾.

10월 22일 내려진 계엄령에 대해 김득중은 ①10월 22일 오전 이승만이 계엄선포를 인정했다는 점 ②‘본관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발포된 것으로 해석하였다⁶⁾. 그러나 22일 내려진 계엄령이 이승만의

4)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 앞의 논문, 260~276참조

5) 『자유신문』, 1948. 11. 5

지시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다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제정 공포 순서를 밟은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

10월 22일 최초 계엄령 발포를 이해하기 위해 여순사건 발생 초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의 소식을 접한 군 수내부와 국방부는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바빴고, 사건을 어느정도 이해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21일 무렵 이후였다⁷⁾. 1948년 10월 20일 미 임시고문단은 미 사령관에 여수반란을 보고하였으며 로버츠 임시고문단장은 하우스만 대위 정일권 대령 등 고문단, 국방경비대 장교들을 비행기 편으로 광주로 가 보좌를 하고 자신의 사령부로 정보 보고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⁸⁾. 또한 임시고문단은 전반적인 작전에 개입하여 진압상황을 토론하고 지시하였다. 하우스만을 중심으로한 광주의 사령부는 매일 서울의 미군사고문단(단장 로버츠)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실제적 작전 지휘는 광주사령부에서 하우스만이 지휘했다고 할 수 있다. 로버츠가 송호성 장군에게 보내는 1948년 10월 21일 편지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은 광주의 4연대와 12연대를 통해 남원 -여수 축을 따라 반군을 봉쇄하고 진압하고자 하였으며, 이 봉쇄가 끝난 뒤 봉쇄망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수 순천을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최우선 수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전상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로버츠는 “(…) 수중에 보급물자를 충분히 장악하고 필요한 것을 한국군 사령부에 연락하라. 당신은 작전 상황과 당신의 결정에 사령부들이 항상 연락되어 있도록 유지해야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히 6연대 대대병력과 15연대 대대 병력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물자보급은 한국군 사령부를 통해 유지되고, 정보는 미고문단을 통해 유지되도록 지시하였다⁹⁾. 또 로버츠 문서철의 여순사건 기록에 따르면 미 임시고문단이 여수진압 작전 병력배치, 병력 이동상황을 통제하고, 작전지시는 물론 미고문단의 현지파견으로 정보수집활동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¹⁰⁾. 광주사령부와 미고문단의 활동 초기 대응에 대한 고찰은 당시 사령부에서 계엄령을 전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 미군보고서를 통해서도 초기상황에서 어떤 형태이건 계엄령(martial law)을 내렸다는 언급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미고문단과는 무관하게 이승만이 광주사령부를 통해 계엄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을까? 당시 광주 사령부와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근거는 찾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6) 김득중, 앞의 논문, 261쪽

7) 백선희, 김점곤 등 군수뇌부가 사건 발생 직후 광주로 내려와 사령부를 설치하지만, 사건 정보의 부족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8) 로버츠 문서철, summary of events. 20. October. 1948, p107.

9) 로버츠 문서철, summary of events. 21. October. 1948, p483.

10) 로버츠 문서철, summary of events. 20. October. 1948, p474.

여순사건 초기 상황에서 이승만이 계엄령을 전술적으로 고려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모든 정보는 미고문단에게 있었다.

한편 1949년 계엄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권 논쟁은 여순사건 당시 현지사령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지사령관에 의해 내려지는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과는 별도로 임시계엄이라 하여 ‘교통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지사령관이 내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계엄에 대해 백관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이 계엄의 선포를 준비하는 중에 먼저 임시라도 해야되겠다, 긴급필요에 의해 필요하겠다 할 때 하는 것¹¹⁾”으로 설명하였다. 계엄의 선포 필요성에 대한 판단

계엄법이 종래 법 제정 이전의 계엄령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을 때 현지사령관의 계엄령 선포는 이미 여순사건 당시 실시경험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여순사건 발생 초 계엄령 발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많은 문제가 된 만큼 계엄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지역계엄사령관의 선포권’으로 명문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계엄법제정 논의 이전 논의에서도 지역사령관의 계엄 선포권 문제는 제기되었다. 여순사건 관련 계엄령이 실시 중이었던 1948년 12월 4일 국방부는 계엄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의 중심 내용은 ‘계엄을 임전지역과 비상지역으로 나누고, **대통령이 이를 보고하되 임시 계엄은 별항에 규정된 최고사령관이 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엄령이 포고 또는 선고되었을 때는 그 지역내의 군사에 관계 있는 행정과 사법 사무는 그 관장의 권한을 최고사령관에게 일임¹²⁾’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엄령 기간 중에 국방부에서 제출한 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순사건 당시에 발포된 계엄령이 현지사령관에 의해 발포된 ‘임시계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고문단과 광주사령부에서 계엄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10월 22일 김백일에 의해 내려졌던 계엄령은 ‘위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임시계엄’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승만은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백일의 계엄령 발포는 어떤 경험에 기인하는 것인가.

김백일이 만주군 출신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김백일의 만주군의 경험은 일본의 계엄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엇보다 김백일은 중일전쟁 이후 만주지역에서 실시된 계엄령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¹⁴⁾. 특히 1937년 12월 18일 중국

11) 제5회 제19차 국회속기록(1949. 10. 12)

12) 『민주일보』, 1948. 12. 4

13) 김백일(본명 : 김찬규)은 만주군관학교 5기로 졸업하여 간도특설대 창설 당시 소위였다(신주백, 「만주군 속의 조선인 장교와 한국군」, 『역사문제연구』 제9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92쪽

14) 일본에서 2.26사건을 계기로 1936년 2월 27일 帝都에 계엄령 포고가 있었으며, 이틀뒤 1936년 2월 29

청도에서는 ‘支那3연대 사령관○○○가 계엄을 실시하는 동시에 19일 ○주만의 항구 봉쇄공사 착수했다¹⁵⁾’는 점을 보면, 계엄 발포의 과정이 중앙에서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해당 지역 사령관의 발포라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백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당시 만군 출신의 군 장성들이 일본계엄령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지사령관에 의한 계엄령 발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시기 발포되었던 계엄령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1】 계엄법 제정 이전 계엄령 실시 사례

관련사건	발포일	해제일	선포주체	해당지역	비고
10월사건	1946.10.3	1946.10.21	미군행정관, 파즈대좌	대구	『조선일보』, 1946. 10. 12
	1946.10.31	-	목포군정관	목포 및 무안 일대	『동아일보』, 46. 11. 5
여순사건	1948.10.22	-	5여단 사령부 사령관 김백일	여수 순천	『서울신문』, 1948. 10. 24
	1948.10.25	1949.2.5	이승만	여수, 순천	『관보』 제10호
	1948.11.1	-	호남방면 사령관	전라도	포고문(『동광신문』·『자유신문』 1948. 11.5
	1948.11.1	-	남원방면 사령관 원용덕	남원	『평화일보』, 1948. 11. 3
	1948.11.5	1948.11.11	호남방면 작전군 사령관	전라도	동신기관제한 계엄령 『서울신문』, 1948. 11. 14
	1948.12.24	1949.2.5	목포해군기지 사령관 정금모 중령	목포부·무안군 근역 전남 해안일대	『서울신문』, 1949.02.11
4.3사건	1948.11.17	1948.12.30		제주도	『관보』 제14호
	1948.11.23				포고령 1호(『조선일보』, 1948. 11. 30)

일 계엄사령관의 告諭(칙령 제18·19호 2. 27일 관보 공포)를 발표되었다. 유고의 내용은 “이에 본직은 대명을 받아 병력으로 계엄지경을 경비하고,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 사무의 군사에 관계한 것을 장악한다. 계엄사령관 香推浩平”이었다. 이로써 체포장교 15명을 체포하여 7월 18일에 총살하였으며, 민간인 주모자 150명을 계령사령부에서 검거하여 8월 19일에 각 총살되었다.(『東日』, 36. 2. 28)

15) 『만주일보』, 37. 12. 20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순사건과 4.3사건 이전 10월사건 시기에도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1946년 10월 2일 경찰에 의한 시위대 진압이 어렵게 되자 미군정지사(경북)은 미군을 동원하여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다. 10월 2일 오후 3시 경 대구 주둔 미제 2보병연대가 투입되었고 오후 5시경 대구지역에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당일 오후 7시 통금령이 발포되고 위반 시 체포하여 대량검거가 발생했다¹⁶⁾. 다음날 10월 3일 주변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10월 6일 계엄 사령관의 추가 포고령이 발포(야간통행금지 등)되었다. 이 계엄령 하에 대구 및 인근지역에서 2,250명이 체포되었고, 682명이 석방되었으며 군법회의에서 57명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¹⁷⁾. 대구일대에 내려졌던 계엄령은 10월 21일에야 해제되었다¹⁸⁾. 그러나 다시 10월 31일 전남 무안 군 일대 소요사건으로 계엄령이 발포(야간통행금지 위반 시 총살)되었는데, 이는 목포군정관에 의해 선포되었다¹⁹⁾ 이와 같이 미군정 하 계엄령 발포과정은 지방의 군정중대(행정관)이 당지에서 발생한 정치적 소요 및 무질서에 대응, 진압하기 위해 전술부대를 개입시키는 방법으로 발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수립 후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계엄령 의결 이전에 한국군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계엄령을 작전행위로 실시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즉, 미군정의 martial law 전통이 경험적으로 한국군 지휘관에게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인 법무부 장관의 계엄 발포 사실 부인은 위헌 사실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행위²⁰⁾라기보다는 10월 25일 국무회의 계엄령 의결을 현지사령관의 계엄 발포의 ‘추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 법무부 장관은 “반란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 발포한 것²¹⁾”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순사건 당시 계엄 선포 이후 “11월 1일부터 전남북 일원에 걸쳐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한다. 즉 여수 순천의 반란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란지역에 국한되었던 계엄령을 다시 확대한 것인데 전남 이리읍은 지난 10일 경부터 국군의 삼엄한 배치아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한다. 그런데 이것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미연방정책이라 한다”²²⁾라는 보도와 육군참모장 정일권의 10월 26일 담화에 따르면 “금번 폭동지구에 실시된 계엄령은 작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

16) 『조선일보』, 1946. 10. 12

17) 미제24군사령부 감찰참모실, 「한국대구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한 보고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시민소요 여론조사 보고서」 1, 1995, 193~201쪽

18) 『조선일보』, 1946. 10. 31

19) 『동아일보』, 1946. 11. 5 ; 『서울신문』, 1946. 11. 5

20) 김득중, 앞의 논문, 268쪽

21) 제1회 제92차 국회 속기록(1948. 10.30), 706~707쪽

22) 『경향신문』, 48. 11. 3

엄령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일반적 요건(the state of emergency)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목적으로 한 martial law에 따른 ‘무력을 통한 질서 회복’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이상의 논의로 보았을 때, 10월 22일 김백일에 의해 선포되었던 계엄령은 선포 주체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일본의 계엄령 경험으로, 김백일을 비롯한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들은 현지사령관이 발포하는 ‘임시계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10월사건 당시의 계엄령 발포로 대표되는 미국의 martial law의 경험이었다. 일본의 계엄과 미국의 martial law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식민지와 미군정을 경험한 한국에서는 두가지 다른 차원의 경험이 하나로 수렴되었다. 일본과 미군정의 계엄령은 ‘위급 상황에서 현지사령관에 의한 무력사용에 의한 진압 및 질서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계엄령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적용이 국회에서 문제 되었고 계엄령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여순사건 관련 계엄령보다 뒤에 내려진 제주지역의 계엄령은 중앙의 의지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려졌고, 현지에서 시행될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현지사령관은 계엄령 운영에 대한 개인적 이해의 편차가 많았고, 특별한 법이나 규정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령관의 경험에 의해 계엄령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3. 즉결처형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현지사령관에 의한 계엄령 선포는 정부의 ‘추인’을 얻으면서 권한과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지사령관의 판단에 의한 계엄령 선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계엄령 운영은 현지사령관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계엄령의 발포로 군에 민간인 진압과 처리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군을 통한 국가의

23) 이와 관련하여 미군 보고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동 보고서는 ‘비상사태(the state of emergency)는 종종 한국이나 미국사람들에게 계엄령으로 불린다. 이것은 잘못이다. 계엄령(martial law)은 한 번도 한국정부가 선포한 적 없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2. 5, 237쪽)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미군사법에서 martial law는 질서교란지역에서 당해지역의 군사령관이 무력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HQ, USAMGIK, ‘Sop for martial law’, 1947. 10. 10)

24) 중앙에서의 지시와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현지 사령관의 계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 경찰로 근무했던 김호겸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지역계엄사령관 송요찬은 “계엄령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홍순봉은 “일제 경찰로서 만주에서 근무할 때 조선인 중에서는 최고직책을 얻을 정도로 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홍순봉이 계엄령이니 포고령이니 하는 것을 모두 대신 써 주었습니다”라고 하여 일제경찰을 지낸 홍순봉은 계엄령 포고령을 써 줄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앞의 보고서, 280쪽)

자의적인 권력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과 군사재판으로 구체화 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반드시 계엄령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4.3사건과 관련한 소위 ‘2차군법회의’는 1949년 7월 계엄령이 해제된 상황에서 있었고, 적용된 죄목도 국방경비법 제 32조 33조 위반이었다²⁵⁾. 그러나 계엄령하에서 군사재판은 ‘무력을 통한 질서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적용되었다. 즉 하나는 범죄자 처단·처벌을 통한 질서회복이며, 둘째는 사건의 수습국면에서 여순사건 과정에서 행해진 무수한 즉결처형을 정화하는 작업이었으며, 셋째는 어떠한 중간자도 허용하지 않는 ‘빨갱이’와 ‘국민’ 구별짓기의 현상이었다.

여순사건 당시 즉결처형에 대해서는 사건 경험자들의 증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는 절차, 내용, 희생자수는 물론, 현지에서 과연 ‘군법회의’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하도록 한다.

한 퇴역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법무관 김완룡이 순천하고 여수에 와서 뭐-한일이 있는가, 그 사람 개고기를 엄청 좋아했어... 술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올라갔지”, “군법회의고 뭐고 그냥 갖다 죽이는 거지. 재판이라는 게 뭐 있었나?” 라고 술회하였다²⁶⁾. 또 어느 참전군인은 “수색해서 잡은 사람이 70명되는데 그것을 분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총살을 시켰는데, 한사람 당 세 사람 식입니다.(...)주민들 가운데 좌익계를 잡아서 총살했지요²⁷⁾.” 라고 하여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는 즉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1949년 1월경 구례지역에서 활동했던 15연대 정보과 문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는 군법회의를 진행한 여력도 없이 즉결처형이 이루어졌다.

“공비의 성분별 분류를 했다. 생포공비는 8할 이상이 강제입산 또는 혈연관계로 동조한 자들이었다. 정보 조사로 기간 중 약 160여 명을 체포 현장에 가서 분류하였는데 절대 은거지를 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민의 동조 경향과 연대 수용제한을 고려하여 대부분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도 이 현지출신(승주)이고 보니 난처한 경우가 참 많았으나, 미온책으로는 공비세력만 증가할 형세였다²⁸⁾.”

연대 수용제한은 현지에서 처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대체로 현지 마을 창고나, 논 밭 등에 무차별적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며칠간 고문 구타를 통해 ‘공비’와

25) 제주 4.3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에 대한 민간인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6) 미공개 증언(서○○ : 여수 순천 구례지구 참전. 당시 중대장), 2008. 4. 김춘수 채록,

27)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증언록』, 국군2연대1세대 하사, 정○○

28)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증언록』, 국군 15연대 S-2 문관 정○○; 당시 정보 부대의 문관 중에는 출생지를 중심으로 지역에 파견하여 정보수집과 성분분류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의 관련성 혹은 은거지에 대한 취조가 있는 후 군법무관 혹은 정보과 군인등에 의해 생사를 결정하는 ‘성분 분류’를 했다. 성분 분류 후 즉결처리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석방 혹은 형무소행을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결처리된 사람들을 ‘형식적 군법회의’ 명부에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와 상관없이 어떤 이는 군법회의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어떤이는 이 광경을 즉결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즉결처형과 군사재판은 구분되지 않는다. 자의성과 우연성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은 많은 즉결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였다.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목숨을 부지할 시간을 벌었고, 일부분은 운이 좋게 가족을 면회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더욱 운이 좋은 경우는 석방되어 이후 보도연맹과 부역자 학살에 의해 희생되기까지 길게는 2년의 시간을 벌기도 했다. 군사재판은 재판의 형식을 띠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주4.3사건 관련 수형자 증언에 따르면 군법회의는 공정한 예심을 거치지 않았으며, 법정을 열지도 않았으며, 한날에 수 백 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피고인의 무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 논증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하였다고 한다. 제주4.3사건 관련 수형자들은 “형무소에 가서야 자신이 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²⁹⁾”고 말하고 있다.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도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다. 여수 종산국민학교에서 법무관 4명이 재판을 했는데, 혐의자가 한명씩 법무관 앞에 나와 각각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법무관 옆에는 경찰이 서 있다가, 혐의자가 앞에 가면 이름을 확인하고 대충 조사한 다음 바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법무관을 만나는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곤 했다³⁰⁾. 또 주한미군사고문단 보고서는 한국군 장교들이 오전에 6~70건을 판결하고 오후에는 처형을 감독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³¹⁾.

이렇듯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도 4.3관련 군사재판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구체적인 재판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주4.3사건 관련 수형인 명부³²⁾는 유일한 정부문서로서 구체적 인명과 형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앞의 보고서, 280쪽

30)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 1집, 1998, 250쪽

31) 주한미군사고문단 연락사무소가 제2군사령관 소장 밀리스 2세에게, 제주 4.3연구소편, 20000,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359~340쪽. (김득중, 앞의 논문, 168~169쪽 재인용)

32) 제주 군법회의 관련 문서로는 제주지방검찰청이 보존하고 있었던 「군법회의 수형인명부」가 유일하다. 「군법회의 수형인명부」는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 육군중령 함병선의 명의로 1948년 11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명령제20호’와 194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에 수도경비사령부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중령 함병선의 명의로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

에서 주목되었다³³⁾.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 판결집행 명령서(이하 ‘판결 집행명령서’)로 이 자료는 1차적으로 여순사건 관련 군사재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약 1개월 반이라는 시차를 두고 진행한 두 군사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자료의 성격

‘판결집행명령서’는 피고인 ○○○의 수용자 신분장으로 피고인 명적부, 집행지휘서와 이에 첨부된 별지로 구성되어있다. 집행지휘서는 피고인 성명, 형명, 재판확정년월일, 비고(재판일, 죄명)가 기재되어 1948년 12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관이 복역장소인 목포 형무소장에게 송부한 문서이다. 집행지휘서에 첨부된 별지는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의 명령 제3호 명령서이다.

‘판결집행명령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된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계엄령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1차~4차까지는 당시 신문에 회부자 수 등이 간략하게 보도가 되었다. 미군 보고서에는 1948년 11월 29일까지 5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총 1,700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반란병이었다³⁴⁾. 1949년 1월 미군보고서는 이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총 2,817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³⁵⁾. 그러나 민간인과 군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형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2】에 서와 같이 계엄해제 직후 인 1949년 2월 7일 『자유신문』에 따르면 1949년 1월 22일 현재 군법회의는 총 9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3,715명이 회부되었다³⁶⁾. 1차~4

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로 구성되어 있다.

33)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는 제주4.3사건 당시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을 심사하고 집행을 명하는 명령서로서 작성된 것이며, 이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형자 관리를 위해 명부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소위 ‘수형인 명부’와 관련되어서는 계엄령의 불법성과 국방경비법의 부존재논의를 통한 군사재판의 불법성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승, 「제주4.3 군사재판의 처리방향」, 『민주법학』, 2003, ; 김창록, 「1948년 헌법 제100조-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법학연구』 제39권 1998; 이경주,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현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제22호, 2002; 김순태, 「제주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민주법학』 제14호, 1998 등이 있다.

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정보일지』), 1948. 12. 4일자. 632쪽

3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9. 1. 12

36) 『자유신문』, 1949. 2. 7

차까지의 군법회의가 1948년 11월에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나 5~9차 군법회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표2】 민간인 군법회의 회부·판결 동향

군법회의 차수	1949. 2. 7자			기타 신문 ³⁷⁾	비고
	혐의자	석방자수	유죄판결자수	혐의자	
1차	55	12	43	48	1948.11.4
2차	458	190	268	458	1948.11.13~14
3차	617	110	507	805	1948.11.20~21
4차	203	40	163	203	1948.11.24~25
소계	1,333	352	981	1,514	
5차	448	114	334		
6차	423	117	306		
7차	526	130	396		
8차	438	185	253		
9차	547	137	410		
합계	3,715	1,035	2,680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법회의는 해당 계엄지구에서 계엄사령관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법회의의 단편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1차~4차까지의 고등군법회의의 뿐이다.

① 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1월 4일 개최되었다. 계엄지구 법무처 발표에 따르면 ‘모처에서 개최된 호남방면 반란군에 관련된 지방민 폭도에 대한 제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판결내용을 보면 사형 12명, 무기 9명, 20년징역 11명, 5년 징역 4명, 즉시 석방 12명이었다³⁸⁾’.

37) 1차 고등군법회의(광주) 관련 『동광신문』, 1948. 11. 6; 『호남신문』, 1948. 11. 6·13; 『독립신문』, 1948. 11. 16; 2차 고등군법회의(순천)관련 『동광신문』, 1948. 11. 17 : 3차 고등군법회의(여수) 관련 『동광신문』, 1948. 11. 24 :4차 고등군법회의(순천) 관련 『동광신문』, 1948. 11. 27

38) 『호남신문』, 1948. 11. 13

② 2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13~14일 양일간 순천에서 열렸다. 2차 군법회의와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관 김완룡 중령은, “순천지방 반란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된 일반 폭도혐의자 458명 중 양민으로 판명되어 석방된 자 190명을 제외한 268명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결과는 사형 102명, 20년 징역 79명, 5년 징역 75명, 무죄석방 12명이라는 바, 사형언도를 받은 102명의 형 집행은 확인 장관의 확인을 얻은 후 불일내 집행할 것 이라는데 특히 노령 또는 연소자 부녀 등에 대하여서는 동양 도덕의 미예를 밝아 극형을 금하고 온정적 판례가 있었다고 한다³⁹⁾”라고 하였다.

③ 3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20~21 양일간 여수에서 열렸다. 3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19일까지 여수에서 잡힌 ‘지방폭도’ 805명 중 석방자 299명을 제외한 506명에 대하여 11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고, 결과는 사형언도 208명, 20년 118명, 5년 징역 108명이었다. 확인 장관의 확인이 있는 대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⁴⁰⁾

④ 4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24~25 양일 간 순천에서 열렸다. 4차 고등군법회의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순천지역에서 검거된 혐의자 203명에 대한 재판이었다. 석방자 40명을 제외한 163명에 대하여 사형 73명, 20년 징역 48명, 5년 미만 42명이었다. 확인장관의 서명 후 형의 집행이 예정되었다⁴¹⁾.

⑤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군법회의와는 별도로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있었다. 1948년 11월 27일 『서울신문』 기사를 통해 중앙고등 군법회의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중앙고등 군법회의는 육군중앙고등재판장 이지형의 발표에 따르면, 11월6일~20일까지 10회에 걸친 공판으로 417명 중 사형 224명, 무기징역 50명, 5년징역 110명, 1년징역 30명, 보류 28명, 무죄 1명의 판결을 내렸고 1차로 사형을 받은 55명에 대하여 대통령의 집행확인이 있었다⁴²⁾. 약 14일간 417명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있었지만, 1일 평균 30명 가까운 인원이 판결을 받았다. 한편 판결 후 확인장관의 서명 후 형집행이 가능했는데, 군인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집행확인 후 사형이 집행되었음이 확인된다⁴³⁾.

1948년 11월에 있었던 군법회의를 살펴본 결과 ‘판결집행명령서’는 11월 13~14일 양일간 순천에서 있었던 ‘제2차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로 판단된다. 2차 고등군법회의와 관련한 보도내용은 ‘판결집행명령서’와 재판회부자의 수, 형 판결자수가 동일

39) 『동광신문』, 1948. 11. 17

40) 『동광신문』, 1948. 11. 24

41) 『동광신문』, 1948. 11. 27

42) 『서울신문』, 1948. 11. 27

43) 여순사건 혹은 이와 관련한 숙군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1949년 『국방부특명절』은 군인들에 대한 군법회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할 뿐만 아니라, ‘판결집행명령서’는 판결일시를 1949년 11월 14일로 적고 있다.

(2) 자료의 구성과 형식

‘판결집행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제3호</p> <p>I. 설치명령 : 단기4281년 10월 30일 附 湖南軍行命 제6호 및 단기 4291년 11월 3일 附 同 수정명령 제10호</p> <p>II. 공판장소 : 계엄지구 전남 순천동국민학교</p> <p>III. 피고인 : (성명, 주소, 연령, 직업)</p> <p>IV. 죄목 : 1. 죄과 :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 내란 및 국권변란죄 2. 죄과 : 포고령제2호 위반 범죄사실 : 공중치안 질서 문란죄</p> <p>V. 항변 : 전피고인은 右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p> <p>VI. 판정</p> <p>VII. 판결</p> <p>VIII. 판결언도 일자 : 단기 4281년 11월 14일</p> <p>IX. 심사장관의 조치 : 記 판결을 승인하며 적절히 집행을 명함</p> <p>X. 확인장관의 조치 : 記 사형판결을 확인함. 但 ○○○ 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적절한 집행을 명함. 사형집행에 관하여서는 호남계엄지구사령관에게 일임함.</p> <p>XI. 복역장소 : 목포지방형무소</p> <p style="text-align: right;">단기 4281년 11월 24일 전남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 육군중령 김백일</p>
--

자료의 형식면에서 4.3사건 관련 ‘군법회의수형인 명부’와 큰 틀에서는 동일하나

【표3】에서와 같이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3】 4.3사건 관련 수형인명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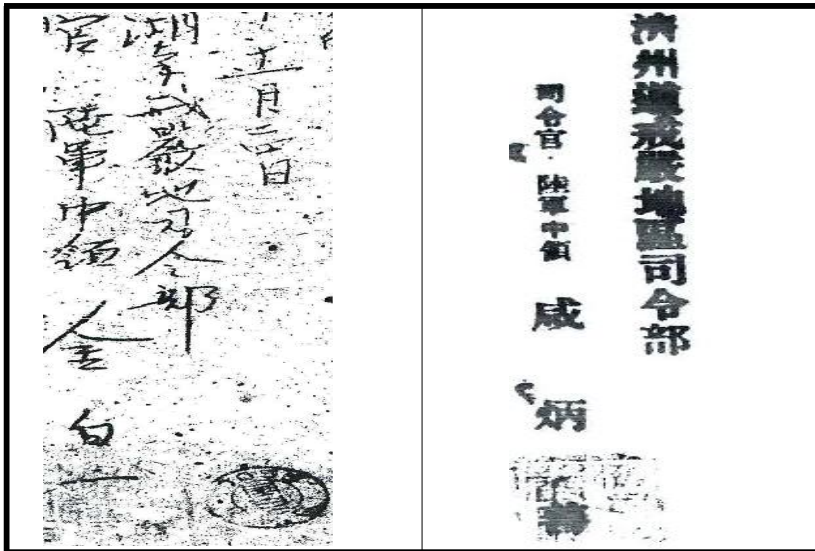
분류	4.3 수형인명부	판결집행 명령서
공판장소	• 제주지방법원	• 계엄지구 전남 순천 동국민학교
죄 과(범 죄 사 실)	•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	• 형법 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내란 및 국권변란죄) • 포고령 제2호 위반 (공중치안 질서 문란죄)
사 형 판 결 자 처리 ⁴⁴⁾	• 사형 집행기한 명시 • 집행 방법 장소 제주도계엄사령 관이 명함 • 계엄해제시 제2연대장이 행함	• 사형집행에 관하여 호남계엄지구사 령관에게 일임
복역장소	• 남수인, 여수인, 소년수인 구분 수형 명기	• 성별, 연령 구분 없음
자료상태	• 활자체 • 군법회의 별도 양식	• 필사체 • 별지 무양식 백지

4.3사건과 군법회의와 비교하면, 여순사건의 경우 순천지방법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민학교에서 군법회의가 진행되었다. 또 사형집행 방법과 복역장소 지정 등에서 불명화 하고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과 또한 형법 77조 위반과 포고령제2호위반을 섞어서 쓰고 있다⁴⁵⁾. 반면 4.3사건 관련 군법회의의 경우 죄과 범죄사실이 단일하며 복역 문제와 사형집행 기한까지 명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돈된 형태의 문서임을 알 있다.

44) 사형은 단기4282년2월28일 이내로 집행하며 기 방법 및 장소는 제주도계엄지구사령관이 이를 명함(단 계엄령 해제시 제2연대장이 행할 것임).

45) 적용죄목이 (구)형법 77조와, 포고령 2호로, 동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제 형법과 미군정이 한반도 진주 후 ‘점령군’으로써의 성격을 드러내며 밝힌 포고령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국가수립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의 경험이 뒤섞여 있다. 계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집행 주체인 현지사령관은 일제식민지 경험과 미군정 시기 경험 둘 다를 가져움을 볼 수 있다.

【그림】 계엄사령관(김백일, 함병선)의 직인



한편 자료 상태로 보면 두 문서가 다른 상황에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두 문서는 모두 계엄사령관 함병선과 김백일의 직인이 찍여 있는 것으로 보아 원본을 등사한 자료이다.

두 자료는 각각 11월 24일과, 12월 29일에 작성되어 약 한달 여 기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문서이다. 그러나 여순사건 관련 ‘판결집행명령서’는 필사체로 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식 재판 용지가 아닌 무양식 백지를 사용하였다. 1948년 11월 4일에 열렸던 1차 군법회의 회부인원에 비교하여 4배가 넘는 인원을 현지에서 13,14일 이틀 동안 처리했던 제2차군법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⁴⁶⁾.

(3) 누가, 무슨죄로 몇 년형에 처해졌나

제2차 고등군법회의와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순천지방 반란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된 일반 폭도혐의자’는 458명이었다. 이중 ‘양민으로 판명되어’ 190명이 석방되었고, 나머지 268명에 대한 고등군법회의가 진행되었다. 고등군법회의 결과는 사형 102명, 20년 징역 79명, 5년 징역 75명, 무죄석방 12명이었다⁴⁷⁾.

46) 4.3사건 관련 수형인 명부는 1차~12차에 걸친 군법회의 판결 내용을 하나로 모아 별도로 활자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49년 군법회의 자료의 경우 더욱 간략화 되어 정리되어 있어, 정리후 직인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47) 『동광신문』, 1948. 11. 17

그러나 글자가 뭉그러지고, 자료 상태가 좋지 않아, 268명 전원의 기록을 복원하지는 못했다. 「피고인명」에서 확인 가능한 인원은 254명이었고, 「피고인명」과 「판결」 항목을 비교하여 확인 가능한 인원은 270명이었다. 관독과정에서 중복 셈해진 경우와 동일인을 다르게 관독했을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표4】 순천제2차 고등군법회의 형량별 인원

출처	형량	사형	무기	20년	5년	무죄석방	총 인원
‘판결집 행명령서’	인원	102(46)	(66)	80	75	13	270
	비고	*()는 감형자 제외 후	*()사형에서 감형	-	-	-	-
동광신문	인원	102	-	79	75	12	268

【표4】와 같이 ‘판결집행명령서’와 『동광신문』(48. 11. 17)의 보도기사를 비교해 보면 사형, 5년형 판결 인원은 동일하나 20년형, 무죄석방자가 각각 『동광신문』 보도에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무죄석방자의 경우 「판정」, 「판결」에 모두 동일 인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문기사 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형판결자 중 46명이 확인장관의 확인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던 점은 기사 보도일자가 11월 17일로 형이 확정되는 11월 24일보다 앞서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형량 면에서 무기징역이 전혀 언도되지 않았다가 확인장관 조치로 66명이 무기로 감형되는 것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4.3사건 관련 수형인명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자를 20년 형으로 감형하는 확인장관의 조치가 있었다. 범죄사실에 의해 형이 언도되기 보다 형량을 안배하여, 방면, 석방, 감형등으로 재판의 외형을 갖추려고 했던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일반 폭도혐의자’로 잡힌 사람 중 반수 가까이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체포의 자의성을 잘보여주고 있다.

한편 형량으로 보면 4.3사건 관련자들에 비해 형량이 무거웠음을 알 수 있다. 무죄석방자 13명을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4.3사건 관련자들이 사형 4%, 무기8%, 20년형 11%, 15년형 30%, 5년이하 47%로 나타나는 반면 여순사건 관련자들은 사형 17%, 무기 25%, 20년형 30%, 5년이하가 28%로 사형과 무기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군법회의 회부자 중 절반 가까이가 사형과 무기를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체포자 중 절반 이상이 무죄방면된 반면, 나머지 절반이 사형과 무기를 받았다는 사실, 458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들에 걸쳐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외형만 갖추었을 뿐 ‘군사 재판 식 즉결’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초등학교 같은 넓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진압군 스스로 ‘막대한 수의 포로를 현지에서 처벌’했다⁴⁸⁾고 인정했다. 군사재판 회부전에 죽은 봉기군과 시민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의 연령과 계층은 다양했다. 군사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미군 트럭에 실린 사람들 중에는 남녀 젊은이 뿐만 아니라 60세가 넘는 늙은이, 어린 학생까지 있었다. 한 여학생은 인공기를 들고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한 수염난 노인은 3.1운동 때 투사였지만 인민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⁴⁹⁾. 이례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의 신원이 알려진 것은 제1차 고등군법회의의 경우다. 1차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14연대 군인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시민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고학력 층이 많았다. 사형구형자 28명 중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다수였고, 교육자가 많았으며, 여성도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⁰⁾.

순천 제2차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를 통해 254명의 피고인명, 주소, 나이, 직업, 판결 형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 【표5】 【표6】 【표7】 과 같다.

【표5】 지역별 현황

지역	고흥	곡성	광양	군산	보성	순천	여수	장흥	계
인원	1	1	4	1	6	226	13	2	254

【표6】 연령별 현황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이상	모름	계
인원	30	142	57	16	4	5	254

48) 『동광신문』, 1948. 11. 7

49) 정광현, 「반란진압 후의 모습」, 『주간 서울』 제14호, 1948. 11. 15. (김득중 앞의 논문 164쪽 재인용)

50) 『동광신문』, 1948. 11. 6

【표7】 순천군 지역 현황

면	가곡 면	덕암 면	도사 면	별량 면	산하 면	상사 면	서면	순천 읍	주암 면	해룡 면	황전 면	모름
인원	1	2	9	30	1	8	8	115	10	27	12	3

*덕암면 철도관사 :2명 ; 순천중학교 관사: 1명 포함

거주지역을 보면 순천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순천 중에서도 순천읍, 별량면, 해룡면, 황전면, 주암면, 상사면, 서면 순으로 거주 분포를 보인다. 순천읍 거주자들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희생이 많았던 철도원, 학생/생도, 교원, 관리 은행원 등이 순천읍에 거주지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양복점, 이발업, 시계업 등의 자영업자와 노동/인부, 무직자 등 도시 소상인과 빈민층이 다수 끌려갔던 것과 관련된다. 다른 자료를 통해 별도 확인 필요하나 군사재판이 열린 곳을 중심으로 하여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크다⁵¹⁾. 여수지역의 경우 울촌면, 여수읍 출신으로 철도원 교원 학생 등이 많았다. 보성지역은 보성읍, 득량면, 조성면, 별교면 등 순천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직업은 철도원, 학생, 관리 등으로 주소지가 보성이더라도 순천지역에서 생업이나 학업을 하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광양, 곡성 지역 또한 광양읍이나 죽곡면 출신으로 순천 인근 면 출신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아 약 56%에 달하고 있고, 1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봉기군 협력’혐의가 10-30대 남성에게 집중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⁵²⁾. 성별과 관련해서는 기입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오경심 등과 함께 ‘여성동우회’ 일원으로 활동했던 강○○의 증언을 통해 많은 수의 여성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는 진압군인에 의해 14연대 군인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순천북국민학교에 시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 잡혔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갈마골에 피신해 있다가 며칠 뒤 순천경찰서로 잡혀갔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⁵³⁾. 당시 군·경은 포고를 통해 ‘반란군에 대한 침식제공에 대해 총살형에 처할 것’이라고 한 만큼 “호박잎 하나라도 건네준”사람은

51) 구례군의 경우 산동면과 광의면 지역에서 국군3연대가 주둔한 뒤 지역민들을 연행→구금→고문(조사)한 뒤 즉결처형하거나, 형무소로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구례여순사건」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과정은 군법회의나 군사재판이라는 언술이 보이지 않고, 관련 문서가 발굴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들 국군3연대가 수행한 것은 구례지역에서의 ‘군법회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군법회의’가 설치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혐의자 색출’을 진행했다.

52) 이는 순천지역 『실태조사보고서』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53) 강○○ 증언, 「내가 겪은 여순사건」,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역과 전망』 2집, 1990. 6, 19~20쪽

모두 붙잡아 갔고, 침식을 제공한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라고 할 때,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8】 직업별/형량 현황

직업	형량						인원
	사형	무기	20년	5년	무죄	모름	
공업	1			1			2
관리	2	3	1	2			8
교사/교원		2	5	5	1	1	14
기자	1						1
노동/인부	3		1	2			6
농업	22	18	13	26	5	10	94
목공			2	1			3
무직	1	2	3	3			9
상업	1			1			2
생도/학생		5	3	4	5	4	21
서기						1	1
시계점	1						1
양복점	1						1
어업	1						1
운전수	1						1
은행원		2					2
이발업	1	2				2	5
전공	1	1					2
제재업		1					1
직공			1				1
철도원	4	16	24	7	1	6	58
모름	3	2	7	3	1	4	20
합계	44	54	60	55	13	28	254

【표8】에서와 같이 군법회의 회부자의 직업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생도, 교원, 관리, 은행원, 기자 등의 비율이 농업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다. 이는 제1차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이 고학력자나, 교육자 등이 많았던 것과 일치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농업, 교원, 철도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당시 가장 많은 직업군이었던 농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회부된 학생, 교원, 철도원은 사건 당시 ‘반란군 협력세력’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철도원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철도를 책임졌던 점과, 여수에서 14연대 군인들이 철도를 이용해 순천역으로 들어와 해방구를 만들었던 점, 그리고 해방이후 철도노조 활동의 경험 등으로 봉기 참여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군·경의 주목이 되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조차 이들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 철도 공무원들은 봉기군의 위협 때문에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많은 수가 석방되기도 했다⁵⁴⁾. 그러나 석방된 인원만큼 많은 인원이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았다. 석방된 사람과 형을 받은 사람은 군사재판을 통해 ‘양민’과 ‘협력자’로 결정되었다.

학생과 교사는 일찍부터 봉기의 협력자로 주목되었는 데, 특히 봉기의 주동자가 여수여중 송옥교장이라는 보도와 여학생들까지 전투에 참가했다는 신화를 유포시키면서 군·경은 학생과 교사들을 ‘반란 가담자’로 몰아갔다. 송옥 여수여중학교 교장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것은 교육계에 적화사상이 침투한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⁵⁵⁾. 교사들이 반란군에 협조했으니 그 지도를 받은 학생들 또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단순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물론 처음에 학생들의 행동은 자율적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일부 교사들의 조종 아래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도되었으나,⁵⁶⁾ 점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어찌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 변해갔다⁵⁷⁾. 또 광주에서 제1차 고등군법회의가 끝난 뒤 법무총감 김완룡 중령은 발표를 통해 피고 중에는 전문대학 출신이 다수 있고 대부분이 교육자이며, 이들은 학생을 동원하고 무기를 주어 양민을 대량 학살케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른 신문에는 중등학교 교원들이 치안대 취조위원으로 활약했다고 보도됐다⁵⁸⁾. 이러한 언론플레이는 실제 군법회의에 학생, 교사 등이 회부되고 형판결을 받음

54) 김득중은 허정의 증언을 들어 100여명의 철도원이 석방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수는 정확치 않다. 다만 제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철도원 약 60여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 1979, 163쪽)

5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실태조사자료집』 2권, 73쪽

56) 『서울신문』, 1948. 11. 6.

57)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실태조사자료집』 2집, 75쪽

으로서 사실로 둔갑했다. 언론은 인민대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송옥 교장을 사건의 주동자로 조작하였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과장된 언사는 이미 ‘죽여도 될 존재’라는 규정에 다름없었다. 이러한 규정이 군사재판을 통해 확정되고, ‘죽여도 되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태를 창출했다. 즉, 사건의 수습국면에서 열렸던 군사재판은 사건 과정의 모든 즉결 처형과 학살을 덮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군사재판 없이 즉결처형된 사람은 ‘빨갱이, 범죄자, 동조자’였다는 인식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에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창출되며, 공산주의 협력자는 ‘죽여도 되는 존재’가 된다.

셋째, 노동/인부, 직공, 무직 등의 도시빈민층과 시계점, 양복점, 이발업 등 도시소상인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점이다. 도시빈민층과 소상인들의 봉기참여 여부와 더 붙어 당시 군·경이 그들을 주목했던 이유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과 형량은 특별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전공, 노동/인부, 무직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원은 적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받았다는 점이다. 철도원의 경우도 무죄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20년 이상의 높은 형을 받았다.

(4) 희생 과정

사실 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진압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혐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협력자 색출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계엄령은 현지 사령관을 비롯한 군이나 경찰이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순천읍을 제외하면 별량면, 해룡면, 주암면, 황전면 거주자가 많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을까.

‘판결집행명령서’에서 확인 가능한 인면 254명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실태조사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표9】와 같이 19명이 일치하였다⁵⁹⁾.

58) 「여수·순천 등 피난 지구 답사기(4)」, 『민국일보』, 1948. 11. 26

59) 이름, 거주지, 나이 일치자인데, 나이의 경우 간접증언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한 살 또는 두 살 정도의 차이는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표9】 ‘판결집행명령서’와 ‘실태조사보고서’ 동일 희생자

‘판결집행명령서’						실태보고서 내용
번호	이름	주소	직업	죄명	판결	
1	조○○	주암면 오산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2	조○○	주암면 오산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3	조○○	주암면 오산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4	김○○	주암면 오산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무기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5	조○○	주암면 오산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6	정○○	주암면 요곡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입산 후 토벌대에 의해 총살
7	정○○	주암면 요곡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농부인데 순천경찰서로 압송된 후 1948년 10월 경 행방불명
8	김○○	황전면 수평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무기	순천 경찰서로 잡혀가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한달 마포형무소에서 3년 복역중 한국전쟁 발발후 풀려나거나 총살
9	김○○	황전면 수평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목포형무소 총살
10	양○○	서명 죽평리	관리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잡혀가 행방불명
11	최○○	상사면 필진리	철도원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순천철도근무원으로 14연대 군인들에 의하여 순천역에서 희생당함
12	장○○	상사면 연동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
13	김○○	별량면 운천리	농업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경찰에 의해서 총살
14	강○○	순천읍 덕암리	철도원	형법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형→ 무기	순천 경찰서로 잡혀가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한달 마포형무소에서 3년 복역중 한국전쟁 발발후 풀려나거나 총살
15	최○○	별량면 덕정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목포형무소에서 집단총살
16	신○○	별량면 덕정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공주형무소에서 총살
17	양○○	별량면 신천동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대전형무소에서 총살
18	이○○	별량면 송기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순천농고 대대장으로 형무소에서 총살
19	김○○	별량면 송기리	농업	포고령 제2호 위반	5년	김천형무소에서 총살

『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이 구 승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 외곽지역에 한정되고 있어 재판에 가장 많이 회부되었던 순천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동 자료가 ‘제2회 군법회의’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면 19명의 일치만으로 이를 일반화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실태보고서』의 증언을 통해 적어도 19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과정으로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단면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⁶⁰⁾.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전면 수평리에서는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마을내에서 좌익성향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경찰이 체포하여 고문을 가한 다음 전주, 목포, 마포형무소에 수감시켰다. 특히 김○○ 과 강○○은 동네사람 5명과 함께 인공시절(여순사건 직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부르라고 해서 만세 삼창을 했다는 죄목으로 순천 경찰서로 잡혀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한달 마포형무소에서 3년 복역 중 한국전쟁 발발 후 풀려나기도 했다⁶¹⁾. 이들은 ‘2차 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사례이다.

이러한 부역자 색출과정은 월등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월등면 의 피해사례를 보면 사건 후에 부역자 색출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각 마을마다 젊은 청년들을 가려서 지서에 모이게 한 뒤에 고문 등의 방법으로 부역자를 가려내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주변의 밀고나 손가락질로 가려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룡면과 상사면은 순천지역에서 좌익 활동자의 고향이거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좌익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경찰에 의해 지목되어 마을 사람들이 희생된 경우이다⁶²⁾. 이들은 여순사건 이후 군인이 진주하면서 부역자 색출이 시작되고 남로당원을 중심으로 한 무고한 청장년들의 희생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협력자 색출 초기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은 흘산리 앞 개천변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고 일부는 순천으로 호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좌익활동의 유무가 희생과 관련되

60)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이었던 아버지를 3살에 여의고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아온 한 여성은 몇 년 전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이 반란군에 의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50이 넘어서야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임을 알고, 직장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규명작업을 위해 뛰어다니고 계시다. 본인은 동 ‘판결집행명령서’에서 가장 먼저 그 분의 아버지 성함을 찾아보았고, 그 분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분이 느꼈을 억울함 슬픔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유도 모른 채 집단적으로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죽었을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든 이제라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은 훼손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6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앞의 보고서, 187쪽

62) 해룡면은 도룡의 강인수에 의해 중흥의 김학모, 해창의 김선지와 용전의 윤석환 그리고 복성의 장기옥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해룡면에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도룡으로 이곳은 면책인 강인수가 있었던 곳이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다. 일제시대 순천의 3.1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용암마을의 박00의 영향을 받은 박대규와 서정리의 최규관, 금곡의 이준평, 마륜의 백길선, 도월의 최택용 등이 남로당 시절의 주요 활동가였다

지는 않았다.

주암면의 경우 낙안 내운출신인 김용길이 처가인 오산으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주암면 전체 좌익활동이 전개되었고 김용길은 오산회의를 통해 사상학습과 교육, 좌익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또한 주암면 인민위원장과 전라남도 유격대 부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좌익의 거물로 지목되어 주암면 전체 주민들은 좌익가담여부와 무관하게 오산마을과 인근마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큰 지역이 되었다. 상사면 오곡마을은 적극적인 좌익 혐의자도 없이 많은 희생자가 난 마을로 대부분이 형무소로 끌려가 한국전쟁시에 사망하였다. 연동마을은 상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는 마을로 오곡마을과 함께 형무소에서 끌려가 희생자가 많았다⁶³⁾.

협력자 색출은 군인들이 진주한 이후 현지상황을 잘 아는 경찰에서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군이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비해 현지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군인들의 경우 경찰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정보에 대해 많이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의 자체 정보조사 활동도 진행했으나, 많은 경우 ‘손가락질’이나 상황에 의해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의 경우 좌익활동자의 출신지역이나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지역에 대해서 마을민 전체를 ‘협력자’로 의심하여 고문이나 취조를 통해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과정은 크게 경찰에 의해 경찰서 등지로 연행된 경우와 진압 군인들이 현장에서 소위 ‘성분분류’하고 즉결처형한 후 생존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범죄 사실에 의해 연행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혐의’만으로 연행되었다는 점을 희생지역 증언을 통해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적 상황과 더불어 ‘제2차 군법회의’에서 회부되어 다수가 희생되었던 철도원의 희생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철도원은 국군이 진주하면서부터 ‘봉기군 협력자’로 의심받아 집단희생되었는데, 그 희생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었다. ‘판결집행명령서’에서 파악되는 철도원은 약 58명인데, 이중 장○○의 희생과정은 군사재판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준다⁶⁴⁾.

희생자의 부인 진○○의 증언에 따르면, 봉기군이 순천역을 점령하자 아침에 출근했던 장○○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봉기군 점령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진압군이 들어오자 철도국원은 전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출근하니 출근당일, 장○○등을 호명하여 순천역 창고에 가두었다. 몇 일을 창고에 갇혀 있는 동안 부인이 먼

63)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두명이 전쟁직후 풀려난 것과 달리 동일한 사건으로 이들과 함께 같은날 ‘제2차 군법회의’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는 전쟁 직후 총살되었다.

64) 장○○·진○○, 미공개 증언, 김춘수(2007.11)

회를 간 일이 있었고, 며칠 뒤 시내로 옮겨졌다고 해서 주변으로부터 무고하다는 진정서를 가지고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서 실고 떠나고 있었다.

“조곡동 야산입니다. 바로 집 뒤였고, 차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따라 올라갔는데,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집에 와서 통곡만 했습니다. 큰 아버지가 이튿날 낮에 가보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뼈도 뭐도 없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를 세줌 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외숙이 올라가 보니 제복 단추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와 함께 죽은 사람은 3-40명이었다고 한다. 부인은 조○○의 제사를 음력 10월 29일 지내고 있는데, 이날은 순천시내로 가다가 트럭을 만난 날이라고 한다.

이 증언은 ‘제2차 군법회’의 상황은 물론 철도원의 연행 희생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철도원들은 진압군이 들어온 뒤 순천역 창고에 가두어져 한 동안 군기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순천시내로 옮겨진 뒤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때 잡혀간 사람은 ‘판결집행명령서’에 따르면 약 58명 정도이고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은 4명이다. 이들 4명은 다른 사형판결자들과 함께 총살되었다. ‘판결집행명령서’에 따르면 판결집행을 상신한 것이 11월 24일이다. 계엄사령관에게 사형집행이 일임되었고,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11월 29일 조곡동 야산에서 총살된 뒤 화장되었다⁶⁵⁾. 당시 ‘2차군법회’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44명으로 장○○와 함께 희생되었다고 하는 인원, 그리고 그의 부인이 목격한 트럭 대 수는 44명과 거의 일치한다. 순천지역 실태조사 자료와 ‘판결집행명령서’를 비교해 본 결과 사형판결자의 유족들은 대부분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군법회의 이후 소식 두절된 상황에서 여순사건 관련자들이 대전형무소에서 집단처형된 사실을 관련지었기 때문이다. 군법회의 사형판결자들은 순천 동국민학교에서 형을 받은 뒤 수감되었다가 판결 받은 장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곡동 야산에서 11월 29일 총살되었던 것이다.

‘제2차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의 연행, 고문, 총살과정은 군법회의로 명명되는 재판이 결코 재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범죄사실이 아니라 혐의나 개인적 원한에 의

65) 총살 후 화장하는 식의 학살은 여순사건이나 형무소 학살 등 대규모 학살 현장에서 자주 등장했다. 여수의 만성리 학살이 대표적이며, 대전형무소 채소자 학살지였던 대전 산내면 골령골 학살 증언자들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M-1 총을 발사하면 총에 맞은 사형수는 고개를 푹 떨구고 그러면 뒤에서 지휘자가 확인사살을 해요. 뒤이어 소방대원이 손을 풀고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에 던져 50~60명씩 차면 화장을 해요”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군사재판 후 형집행은 총살 뒤 시신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나타났다. 군사재판이 소위 ‘정당한 법집행’과는 거리가 먼 은밀하고 추잡한 학살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손가락질로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들은 고문과정에서 ‘협력자’나 ‘빨갱이’로 변해갔고, 군법회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이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소명의 기회는 물론이고 가족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었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5) 예측가능하지 않은 삶들

즉결처형을 당한 이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손가락’이 자신을 지목했기 때문에 죽었을 뿐이다. 죽음을 면한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되어 군·경에 의해 일명 ‘재심사’ 받았다. 재심사의 형식은 고문으로 차라리 즉결분되는 것이 나았을 지도 모른다는 후회를 할 만큼 혹독했다. 재심사 분류 후 같은 혐의로 잡혀온 이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석방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사형판결자와 무죄 석방자가 어떤 기준으로 갈렸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군법회의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계엄사령관 김백일은 “단시일 내에 실시하였던 관계로 조사 불충분하여 불완전한 판결을 한 일도 없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탄원서를 받아 재심사하기로 되어있다⁶⁶⁾”라고 말했지만, 형을 확정하고 5일만에 형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재심은 있을 수 없었다. 사형판결자는 본인의 이름 밑에 사형이라고 적혔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총살 당하고 불태워졌다. 다시 무기징역과 20년형 5년형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났음에 대한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운 좋게’생을 이어 형무소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에 들어와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들에 대한 집단처형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군경이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초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가운데 사상범만을 골라 1,800명을 3일 간에 걸쳐 집단 처형하였다. 대전형무소 집단 처형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순사건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전 형무소 형무관의증언에 따르면 사상범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으라는 법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구분되었다고 한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4.3사건 관련자는 7년형을 선고받은 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순사건 관련자는 1000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었을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트럭에 태워졌다.

‘판결집행명령서’를 통해서도 이들의 죽음은 확인된다. ‘제2차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

66) 『대동신문』, 1949. 1. 25

67) 『제민일보』, 2000. 1. 11; 『한국일보』, 2000. 1. 8·9; 『한겨레21』, 2000. 1. 20 (김득중, 앞의 논문 재인용)

을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어 형무소로 이송되었던 김○○와 강○○는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시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부르라고 해서 만세 삼창을 했다는 죄목으로 5명이 순천 경찰서로 잡혀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목포형무소에서 한달 마포형무소에서 3년 복역중 한국전쟁 발발후 풀려나기도 하였다”한다. 이들은 여순사건 당시 ‘제2차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김○○와 강○○와 일치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된 뒤 목포형무소에 수형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살아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살당하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증언을 근거로 ‘판결집행서 명령서’와 비교해본 결과 『실태조사보고』에 대전형무소 등지에서 희생되었다고 유족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판결집행명령서’에 사형판결자를 제외하고 모두 5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목포형무소, 공주형무소, 대전형무소, 김천형무소에서 집단 총살된 것으로 유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실 『태조사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김○○(별량면)와 곽○○(철도원)도 ‘제2차 군법회의’에서 5년 형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⁶⁸⁾. 5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총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특히 김 ○○는 무기와 3년형이 엇갈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계엄령 하에서의 즉결처형과 군법회의 판결에서 사형을 면하고 가벼운 형을 받아 형무소에 수형된 사람들이 한국전쟁과 함께 모두 집단 사살되었다. 형무소에 와서도 생과사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각각의 단일한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 두 사건의 진압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보편화하는 과정으로, 국민의 일반 권리를 동결하는 예외 상태의 창출과 이를 법 · 제도를 통해 보편화하는 과정이었다.

이글에서는 앞서 예외상태의 창출로서 계엄령의 발포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계엄령의 발포 이후 '폭력에 따른 질서회복 과정'으로서의 군법회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군법회의는 예외상태에서 일명 '죽여도 되는자'를 통해 새로운 법적 규범을 창출해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1장에서는 계엄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무력을 통한 질서회복의 차원에서 발포된

68) 순천유족회 조사(2007. 1)

것으로 만주군과 일본군에 복무했던 당시 장교들의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으며, 이는 다시 미군정시기 지역사령관의 전술적 차원의 계엄 발포 경험에 추가되어 나타난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계엄령 발포 과정을 계엄법의 존재 유무를 넘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여순사건 제2차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를 통해 당시 ‘군법회의’라고 불리운 것은 ‘군사재판식 즉결’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형을 받았는지, 어떻게 군법회의에 갔는지에 대해 답해 보았다. 그리고 제2차 군법회의 관련자들이 11월 14일 판결을 받고 24일 판결집행명령이 떨어진 뒤 사형판결을 받은 44명은 군법회의 장소와 멀리 않은 조곡동 야산에서 11월 29일 총살된 뒤 화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순사건 관련으로 형무소에 갇던 사람들이 한국전쟁 직후 총살되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무력을 통한 질서회복’차원의 군사재판은 군사재판 이전에 자행된 수많은 학살을 정당화하고, ‘빨갱이와 양민’을 갈라치며, 일명 ‘빨갱이’로 낙인 찍힌자들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존재로서 새로운 법적 상황을 창출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계엄령으로 창출된 새로운 규범은 1949년 계엄법이 제정되면서 예외상태는 일상화되었다. 1949년의 계엄법 제정 과정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이라는 ‘내전’에서 물리적 승리를 경험한 이승만 정권의 우위와 김구암살, 제헌국회 내 소장파몰락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수립 초기 계엄령 실시 경험과 국회 내 저항세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진행된 계엄법 제정 과정은 제주4·3과 여순사건으로 창출된 가상의 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계엄법의 제정은 4.3사건과 여순사건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당하고 야만적인 현실을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즉 계엄법의 법제화를 통해 계엄령의 부당성과 야만성이 온당한 것으로 전화하고, 다시 이 법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예외상태’의 일상화는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⁶⁹⁾. 따라서 계엄법 제정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는 예외상태(계엄령, 혹은 비상사태로 대표되는)를 창출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가폭력의 행사는 법률에 의거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데 여러 제약조건이 법 조항에 반영되고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근대

69)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의 “정당한 폭력의 독점” 곧 법의 독점을 의미한다. 권력의 폭력성은 법에 의해 수행되면서 성스러움으로 은폐되고 정당성만 부각된다. (르네 지라르·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김도현, 「법의 폭력성: 법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 재인용)) 법제화는 폭력에 대한 성스러움의 부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여전히 예외상태가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엄법(령)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경험이 계엄법 제정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과제로 두고자 한다.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 언론탄압과 주민통제 정책을 중심으로

김 학 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2. 여순사건 이후 군사담론확산과 공보처의 언론통제
 - 1) ‘반란사건’의 보도와 국가 기밀의 등장
 - 2) 공보처의 언론 탄압과 언론계의 저항
 - 3) <선전중앙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공보처의 문화검열
3. 여순사건 이후의 주민 통제와 ‘내전’의 침입
 - 1) 행정말단기구의 장악과 국민회 주도의 관제 ‘국민운동’
 - 2) 국민반과 유숙계를 통한 감시의 일상화
 - 3) 인구조사와 신분증의 물신화
4. 맺음말 : 예외를 규정하는 권력과 타자

1.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여순사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군 반란으로 시작된 사건은 지방 좌파와 대중들의 참여로 순식간에 전남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대대적 군사작전으로 이를 진압했으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미군사고문단 자격으로 진압에 참가한 하우스만이 기억하기에 여순사건은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어서 38선 경비병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용병력’을 이용해 진압작전을 폈다고 회고 하고 있다.¹⁾

그런데 정부가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을까? 한편으로 ‘군 반란’이자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던 정부, 정치인, 군은 다른 한편으로는 ‘적’과 전투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고 있다. 과잉진압으로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이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은 완전히 은폐된 채, 군부의 과시적 회고 속에 ‘작전’에 못 미치는 하나의 ‘훈련’으로 자리매

1) 하우스만(J. Hausman),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정일화 옮김. 한국문원 . 174쪽.

김 되어있다.²⁾ 여순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정부는 이 사건을 극우정객과 극좌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이라고 발표했고, 가장 위협적인 정적인 김구세력을 반란의 진원지로 지목하여 공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김구가 관련설을 부정하고 일반 여론도 동조하지 않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지역의 민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바꾸어 설명했다. 정부는 정적 공격과 이념적 색깔 씌우기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진압을 위한 법적 준비인 계엄령을 마련하였다.³⁾ 휴회중이었다가 10월 27일경 재개된 국회에서는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책안을 마련했는데, <시국수습에 관한 대책>의 핵심은 ‘청년단체 해체와 향위단(가칭)조직 및 군사훈련’, ‘군사유사단체 해체와 호국군 조직’, ‘38선 취체 강화’, ‘전국적으로 일제히 철저한 호구조사의 실시’, ‘정부책임과 거국적 강령내각 조직’⁴⁾ 등이었다. 국가의 군사적 물리력 증강과 대국민 감시 통제 체도가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한 결과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과연 여순사건은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끝난 것이었을까? 여순사건은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외상(Trauma)적 사건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여순사건이 국가와 군부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는지의 사실관계보다, 이것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내부의 위기로 규정하여 모든 갈등요소들과 반대를 제거해나가는 국가사업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은 군부와 경찰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기구에 실질적인 내적 통일성을 가져오게 한 ‘반공국가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방식은 정치·사회·질서의 재편을 가져왔고 그 폭력적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형성기의 갈등과 투쟁이 국가형태에 각인된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이 시기에 형성된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적 특성에서 거꾸로 당시 국가권력의 정당성 부재와, 그로 인한 격렬한 저항과 반대의 수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또 다른 지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을 했고 수

2) 『연합신문』의 양우정이 주최하여 국군의 활동상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한 좌담회에서 정일권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처에 대해 ‘작전이라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며 전초전의 성격도 못되는 한 개의 큰 훈련이었다’고 회고하고 있고, 강문봉은 ‘여순훈련의 귀중한 경험은 가까운 장래의 돌발사태에 낙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제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신문』, 1949. 5. 26

3) 김득중(2002) : 161-162쪽

4) 『서울신문』 1948. 11. 6.

많은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 죽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이 사건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전’이나 ‘전쟁’ 같은 위상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우리가 국제법적 위상이나 국가주권 차원의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수준의 문제로 치부되는 영역, 군이 지칭하는 소위 ‘비정규전’이라는 ‘자국 영토 내의 주민들에 대한 군사작전’ 수행의 영역, 국가의 ‘주권 수호’로 규정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탄압당해도 정당화되는 영역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인 ‘비정규전’이 곧 ‘대한민국’의 국민형성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외적인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내전’수준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국가’를 상상한다는 것, 그것이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진실이고 여순사건의 진실이지 않을까?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듯이 ‘반공주의’는 정부수립 이후 체제형성과정에서 크나큰 파괴적 영향력을 미쳐왔던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반공’은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었다. ‘반공주의’를 통해 무엇을 왜 반대했는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공산주의자들을 파괴적인 악으로 구성하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반공주의’를 통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정상적인 사회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적나라한 폭력과 탄압, 그리고 한편에는 극단적인 특권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리는 권력의 양극화였다.

이 현상의 논리를 우리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⁵⁾의 논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외 상태란 법과 규칙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외상태는 보편적 법질서의 밖에 있으면서도 법질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상적 구조를 가지며,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교차점에 있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언저리”에 위치한다.⁶⁾ 정치권력은 예외를 통해 정상규칙을 구축하고, 그래서 그 예외적 상황들을 정당화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지속시킨다.

근대 국민국가는 무엇이 질서이고 혼돈인지, 무엇이 법이고 무법인지, 누가 국민이고 누가 적인지,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박탈하고 독점했다.⁷⁾ 정권을 차지한다는 것,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5) 칼 슈미트(Carl Shumidt)는 이러한 예외상태 논리에 주목하였지만,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명제를 『정치신학』(1922)에서 제시하여 독재와 파시즘의 이론적 명제를 정당화했다.

6) 아감벤은 나치의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가 이러한 예외상태 논리가 물질화된 공간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외상태’가 점점 더 현대 정치의 지배적인 통치 패러다임이 되어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예외상태가 원칙이자 일상, 정상이 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감벤의 해석이다. 조르지오 아감벤, 박진우 역, 『Homo Sacer: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7)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2008, 69쪽.

곧 그 독점적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같은 경쟁이었고, 한국의 국민형성 과정은 실제로 내전적 갈등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과 병행해 진행되었다. 정부는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면서 배제된 존재를 골라내고 분리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이 상황에 실정법의 적용도 거부하여 법적 권한을 박탈했고, 이들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 권리도 보유하지 않은 예외적 존재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역은 이중적 예외를 통해 확보되고 구축되었다. 동시에 세계체제의 갈등이 전이되고 머무는 주변적 공간으로서의 한반도에는, 정상과 예외가 뒤집힌 ‘예외상태’를 지속해야만, 체제의 안정성과 정당성, 이해관계가 보장되는 체제가 형성되어갔다. 그 논리의 최대치이자 궁극적 귀결은 내부의 반대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여 제거하고 절멸시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여순사건부터 한국전쟁시기까지 여순사건에 대한 정권의 대응과정 중에서 특히 언론탄압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 과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예외상태’ 논리가 관철되어가는 특유의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 집권초기 20개월(1948. 10. 19 - 1950. 6. 25)간의 변화가 사회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순사건 이후 군사담론확산과 공보처의 언론통제

1) ‘반란사건’의 보도와 국가 기밀의 등장

여순사건 이후 정부의 언론정책은 정권이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사건직후 한국의 언론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언론은 단순히 정부의 사전검열과 보도관련 지침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군의 공식발표와 그에 부응하는 기사들만을 게재하도록 강제되었고, 이로서 사람들은 정부의 입을 통해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며 정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 조건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강제되었다. 그것의 결과는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초로서 ‘공산주의자’가 맞서서 전멸시켜야 하는 ‘타자’이자 ‘비인간’으로 규정되는 것이었다.⁸⁾

여순사건 발발 직후인 10월 20일, 공보처는 정부의 발표 이외의 모든 기사 게재 자체를 완전히 금지 시키는 보도 관제조치를 실시했다.⁹⁾ 21일에 국무총리 이범석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을 보도하는 조건으로 기사게재 금지를 해제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8) 김득중, ‘여순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반공담론의 창출’,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007. 93쪽.

9) 『조선일보』, 1948. 10. 26.; 『한국언론연표 II』, 446쪽.

정부의 공식 해석과 입장을 공표 했다.¹⁰⁾ 같은 날 내무부 장관 윤치영은 여순사건 보도 금지는 ‘타지역에 불안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여수지역으로부터의 보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¹¹⁾ 국방부 역시 10월 20일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켰고¹²⁾, 한달 후인 11월 20일 국방부 보도과장은 공보처의 요청에 의해 앞으로 군 관계 보도는 사전에 일일이 검열하겠다는 공문을 각 언론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공표했다.¹³⁾ 군 관련 기사에 대한 검열은 이후 헌병사령부로 이관되었는데, 1949년 1월 14일, 헌병사령부는 정식발표를 제외한 모든 군 관계기사를 헌병사령관이 검열하겠다고며 검열 관련 규정을 작성중에 있다고 발표했다.¹⁴⁾ ‘여순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군 관련 기사에 대한 초유의 사전 검열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당시 신문들은 지면이 삭제된 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검열과 정보통제는 곧 ‘국가 기밀’이 탄생하는 지점이었다. ‘비밀’이 있어서 정보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에 대해 정보통제를 하기 위해 금지된 ‘비밀’이 구성되는 것이다.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아닌가하는 규정과 기준은 특정한 정보를 차단하고, 특정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가 결정하며 그러한 권력을 누가 갖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정보의 흐름과 생산을 통제하는 권력을 소수의 주체만이 독점하게 될 경우, 그는 모든 정보에 접근가능하고 모든 정보의 흐름과 확산을 통제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비대칭적인 소통의 권력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특히 그 정보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¹⁵⁾와 연결될 경우, 극단적 권력이 행사될수록, 더 많은 것이 극도의 기밀이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여순사건 이후 숙군 과정을 거치면서 군은 스스로 사회로부터 은폐된 기밀이 있는 곳, 비밀스러운 곳이 되어갔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1948년 12월 1일 국방부에서는 발표한 전문 4장 45조의 ‘방첩규정’이다. 군 기관 전체의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국방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내에서부터 시행된 방첩규정에 의하면, 군 내부에 출입하는 ‘일반인’은 출입증을 소지해야하고, 오후 4시 이후에나 면회가 가능했으며, 군사기밀 누설방지를 위해 출입기자는 일정한 장소이외엔 출입이 금지되었다.¹⁶⁾

10) 『경성신문』, 1948. 10. 22.; 『한국언론연표 II』, 447쪽.

11) 『한성일보』, 1948. 10. 26.; 『한국언론연표 II』, 449쪽.

12) 『세계일보』, 1948. 10. 22.; 『한국언론연표 II』, 446쪽.

13) 『동아일보』 1948. 11. 21.

14) 『서울신문』, 1949. 1. 15.; 『한국언론연표 II』, 484쪽.

15) ‘죽여도 되는 인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 인간’의 명단 같은 다양한 종류의 블랙리스트가 대표적이다.

역시 같은 날에 공포된 임시우편단속법(1948. 12. 1 법률 제11호¹⁷⁾)의 경우, 전국의 체신망을 국가의 검열망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모든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제한 가능하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열이 가능하게 했다. 임시우편단속법의 시행규칙(1949. 5. 18 체신부령 제3호)에서는 ‘국가를 모독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기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등을 압수, 송달정지 시킬 수 있었고, 한글(한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우편물은 한글과 영어 번역을 첨부해야 했다. 동시에 ‘암호, 은어, 비밀인크, 맹인용 점자’역시 한글, 영어로 번역문을 첨부해 그 번역물은 검열국에서 보관하게 했다.

전체 우편을 검열하는 이러한 조치는 1948년 11월 11일 체신부가 여순사건에 대해 우편물 및 전신·전화 이용제한 규정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체신부장관은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당분간 관공서 상호간, 신문잡지, 전보, 신문전보 등은 모두 검열을 받은 것만 송수신이 가능하다고 발표했고¹⁸⁾ 11월 16일부로 체신부에서는 임시우편단속법 시행을 위해 검열(檢閱)과를 신설했다. 우편물 검열은 미군정시에 실시되다가 행정권 이양과 동시에 폐지되었던 것이었다.¹⁹⁾ ‘공산주의자들의 편지연락을 막기 위해’서라고 정당화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한 일간신문은 ‘우편이 아니면 연락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고’, 앞으로 여차피 공산주의자들이 편지연락을 안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검열하기 위해 ‘이 법이 수고할 것이라는 것이 우습다’고 조롱했다.²⁰⁾ 이승만은 우편물 검열²¹⁾ 시도가 지나치게 일제말기의 통제정책과 유사하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아 ‘일제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나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답변했다.²²⁾

이처럼, 여순사건이후 언론에 대한 1차적인 조치가 관련 기사에 대한 사전검열과 삭제였다면, 2차적인 조치는 보도 내용의 방향과 관점을 점차 정권의 입장만을 대면하는

16) 『평화일보』, 1948. 12. 23.

17) 1949년 1월 14일 시행령 공포

18) 『세계일보』, 1948. 11. 13;

19) 『동아일보』, 1948. 11.19.; 『한국언론연표 II』, 460쪽.

20) 『조선일보』, 1948. 11. 25; 한국언론연표 465쪽

21) 임시우편단속법 [제정 1948.12.1 법률 제11호]

제2조 대통령은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 국외에 전달되는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은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체신부장관은 우편물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단속상 필요한 증명, 해석, 기재 기타의 행위를 시킬 수 있다.

22) 『경향신문』, 1948. 11. 27.

것으로 정하고 극단적인 군사 조치를 일간신문들을 통해 일상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소위 ‘공식 발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 1 : 여순사건 직후 정부와 군의 공식 발표〉

날 짜	내 용
1948년 10월 25일	김백일 사령관, 여순사건 전투경과 발표 김학일 제5여단장, 여순사건 진압상황 발표 내무부, 10월 25일 여순사건 진압 상황 발표 여순사건, <대통령령 제13호, 계엄선포에 관한 건> 국군, 보성에 진격하여 유지 중심 비상수습대책위원회 조직 여순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 제3호 여순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 제4호
1948년 10월 27일	김백일 지휘 국군 제5여단, 여수시가에 진입 해군의 여순 탈환작전 호남작전사령부, 여수 탈환을 발표 <반군의 본거, 여수소탕전 상보>
1948년 11월 3일	국방부,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를 전국에 배포
1948년 11월 4일	이승만 대통령, 여순사건 가담자의 철저한 색출을 지시하는 담화를 발표
1948년 11월 6일	여순지구 전투사령부, 국군의 종합전과와 전투사령부 해체를 발표
1948년 11월 10일	여순사건중 국군 전과와 피해에 대한 국방부 발표 제11호
1948년 11월 23일	대전군법회의, 여순사건 관련 224명 사형, 110명 무기징역 언도
1948년 11월 26일	5여단 정보참모, 이달 내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폭도로 처단한다는 경고문 발표
1948년 12월 7일	김완룡 호남계엄지구 군법회의 재판장, 혐의자 중 양민구별 문제 등을 기자와 문답
1948년 12월 28	국방부 정훈국, ‘시련의 1년과 국방군’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1949년 1월 8일	호남지구 헌병사령관, 비작전지구에서 즉결 처분을 금지하는 담화를 발표

이처럼 여순사건 발발이후 신문에는 전투경과와 진압상황이 수없이 보도되었다. 당시 언론에는 관련자를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 군법회의에서 관련자 224명에 사형을 구형한 것, 각종 전투경과 및 진압상황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었으며²³⁾, 언론

23) 『국민신문』, 1948. 10. 24, 『동광신문』, 1948. 11. 27.

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와 군’의 공식논평을 여과 없이 확산시켰다.

그런데 ‘공식논평’은 단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공식적 발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범석의 발표이다. 1948년 10월 24일,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범석이 살포한 ‘반란군에 고한다’라는 포고문의 내용이 당시 가장 많은 독자를 갖고 있던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에 그대로 게재되었다.

이것만이 제군이 살아가는 길ियो, 제군의 가족이 바라는 방법ियो,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태도이다.

1. 제군은 동지와 상의하여 단체로든지 또는 개인 단독으로든지 제군의 양심이 허용치 않는 현재 반란의 지휘자를 즉시 총살하고 부대에 백기를 달아 귀순의 意를 표하라.
2. 전기가 부득이한 시에는 반군의 폭행이 이용되는 총기, 화약탄 및 기타 군용품을 즉시 파괴한 후, 탈주하여 토벌 국군에 투항하라.²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반란 지휘자를 총살하고 투항하라’는 이 섬뜩한 포고문은 단지 14연대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일간지에 보도함으로써 여수와 순천을 예외적인 ‘반란지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정부의 진압작전에 전 국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이승만은 ‘여순사건 관련자’를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각 지방의 남녀노소’들도 ‘공정한 시각과 냉철한 판단으로 현 정부를 신뢰’하고, 이러한 사태가 지난 이후에도 ‘도피·암약하는 반역도배’를 공동으로 방어하고 남김없이 절멸하자고 요청했다.²⁵⁾ 정부의 이러한 시각과 조치는 ‘전국’을 ‘예외적 공간과 상황’과 연관된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온 국민을 ‘내전’에 관련된 ‘잠재적 관련자’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현실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 중요한 ‘군사작전’으로 알려진 ‘양민과 반군의 구별’²⁶⁾이었다. 여수, 순천지역에서 이 작전은 학교의 교정에 수만 명의 시민을 집결시킨 후 ‘손가락질’을 통해 가려내고 즉결처분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⁷⁾ ‘양민과 반군’을 구별하는 이 작업이 바로 분단국가가 내부의 국민을 극단적인

24) 여수, 순천지역에서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이 발표한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의 내용. 『서울신문』, 1948. 10. 24.

25) 『국민신문』 1948. 10. 24.

26) 『서울신문』, 1948. 10. 31.

27) 김득중. 2000.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307-316쪽.

타자로 분리해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한 이 ‘내부의 적’이라는 타자성을 차별화하며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분단국가의 ‘국민형성과정’의 핵심적인 모델이었다. ‘전쟁논리에 따른 투항권유’, 최초의 군사작전에서 수행된 이 작업이 향후 주된 국가사업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적대적 공격성과 전쟁논리, 군사담론으로 가득 찬 담론들을 언론을 통해 유포시켰다.

정보의 검열과 군사담론 확산의 배경이자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해석 태도였다. 정부의 ‘공식발표’를 통해 드러나는 여순사건 해석의 핵심 논리는, 이 사건이 ‘현지 좌익분자들의 계획적 음모’라는 것이었다. 사건직후 공식 보도와 해석을 독점한 정부는 공보처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10월 28일 김형원 공보처차장은 이 사건이 ‘여수14연대의 반란에 민중이 호응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좌익분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 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발표했다.²⁸⁾

결국 거대한 정치적 현상과 혼란스러운 갈등 상황에 대한 정보의 차단과 통제는, 모든 사건을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태에 대한 음모론적 해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배후를 상정해 사태의 모든 근본 원인으로 귀인시키는 이 편집증적 태도는 사건의 중층적 원인이나 배경,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현상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은폐해버리고, 자신을 ‘위협받는 존재’로 위치지우며 자신의 적대적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편집증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원인을 상정해 무조건 확신한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전후 대규모의 정치적 탄압과 정부의 무능,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심화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모든 사태를 적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생각과 행동을 적으로 몰아 절멸시키려 했다. 결국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해석과 태도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과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응하여 특정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 전체를 절멸 시키거나 정치, 사회, 제도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물리적 진압의 방식으로 나아갔다.

2) 공보처의 언론 탄압과 언론계의 저항

28) 『서울신문』, 1948. 10. 29.

독자 여러분 요새는 게재하지 말라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신문해 가기가 차차 어려워지니 그런 줄이나 아십쇼(1948. 12. 15, 『민주일보』)

소련의 적색팽창정책과 투쟁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백척간두에 호한 현 비상사태하의 언론출판정책을 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의 기본적 성격의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라도 승리를 위한 목적수단에 적응하는 투쟁하는 문화무기로서의 언론출판인 것이다. (1949. 10. 9, 공보처장 이철원)

정부수립 이후 언론정책을 주도한 곳은 공보처였다. 그리고 그 공보처는 미군정의 공보부의 직제와 기능, 성격과 인물들을 거의 그대로 이관한 기구였다. 결국 정부수립 이후의 언론정책과 언론통제는 1945년 이후 미군정의 언론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여순사건은 더욱 노골적인 언론탄압을 가능케 한 계기였다. 향후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본틀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기 공보부의 활동은 군정청의 다양한 업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집하고, 언론매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공보부에서는 인사이동, 정세에 대한 성명서 및 논평, 법령에 대한 공식 발표, 경제적 상황과 정책 등 모든 공식적인 언론의 역할을 담당했다. 공보부는 또한 각종 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²⁹⁾ 흥미로운 것은 공보부에서 검열과 언론 통제 업무 이외에도 군정청법령 제 55호에 의한 정치단체의 등록 사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신문 등록제, 허가제가 언론을 통제 관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정당 및 정치단체의 등록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불법단체가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적 통제 수단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으로 공보부는 수시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등록, 재등록을 요구하며 등록하지 않는 단체들을 점차 명단에서 누락시키고 불법화시켰다.³⁰⁾ 공보부는 이미 마련해놓은 언론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문의 허가과 취소, 정간과 폐간 조치를 통해 정치적 저항을 탄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구였다.³¹⁾

29) 『조선일보』, 1946. 9. 6.

30) 공보부는 1947년 9월, 등록하지 않으면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등록수속을 촉구했고, 1948년 10월에는 정당, 사회단체가 한달 안에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49년 10월 18일에는 133여개의 정당과 단체들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그 안에는 남조선 노동당,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9년 12월 26일에는 추가로 조선건국청년회, 민중당, 한국농민총연맹 등 29개 단체를 등록 취소시켰다. 1949년 9월에는 신문들도 공보부령 1호를 적용해 10일 이상 휴간하는 신문들을 자동 허가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31) 공보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관사위폐사건’이었다. 군정청 공보부는 1946년 5월, 갑자기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사위폐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지폐위조단의 소굴’로 해방일보를 인쇄하는 조선정관사소재지 근택빌딩이자 조선공산당 본부를 지목했다. 조선공산당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이미 경찰과 공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린

<표 2 : 미군정기 언론 관련 법령 현황>³²⁾

일 시	법령 명칭	주요 조치	비 고
1945. 9. 7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2호	공공의 평화와 질서 교란, 연합군에 대한 적대행위 처벌	폭 넓은 처벌 규정
1945. 10. 9	군정법령 11호	치안유지법, 출판법 등 일제악법 폐지	허가제 기반의 신문지법 유지
1945. 10. 30	군정법령 19호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록제 실시	좌익 언론 실태파악
1946. 4. 12	군정법령 68호	영화의 취체를 공보부로 이관	공보부 강화, 관련업무 종합
1946. 4. 18	군정법령 71호	각도에 공보과 설치, 방송업무 전담	전국의 선전활동망 구축
1946. 5. 4	군정법령 72호	주둔군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이나 행위, 인쇄물, 서적 발행 유포하고 선동하는 행위 처벌	좌익 탄압 강화, 선전활동 불법화
1946. 5. 29	군정법령 88호	신문용지 부족을 이유로 신문, 정기간행물의 허가제 실시 , 법률 위반시 당국이 허가 취소	언론 통제 강화 (자유당시기까지지속)
1946. 6월	군정청 발표	용지난 이유로 신문의 신규 허가 중단	진입금지
1947. 3. 26	공보부령 1호	정기간행물 신규 허가 정지 , 허가된 간행물도 4월 20일까지 발행하지 않을시 허가 자동취소 .	허가제의 강화
1947. 3. 20.	법령 136호	신문 및 정기간행물 허가 권한을 상무부장에서 공보부장으로 바꿈.	공보부 강화
1947. 9. 19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법	발행 허가제, 허가권자 공보부장, 허가취소와 발행정지의 네가지 사유	과도정부수립후 통제 관련 입법의 종합, 완성
1948. 3. 20	군정법령 170호	보도 무선송신의 허가제 실시.	무선 통신망 통제
1948. 4. 8	군정법령 183호	조선 총독부의 집회취체령,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조선임시보안령, 보안법 등 폐기	관련 법 정비

사안이므로 여론을 뒤집을 수가 없었다. 건물 일부가 폐쇄되었고, 자본주의체제가 규정하는 영원한 범죄인 지폐위조의 죄가 공산당에게 부가되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 5. 16, 5. 20.

32) 김민환(1995)과 조소영(2003)에서 참조하여 구성.

미군정기 언론관련 법령은 정부수립 이후의 언론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1호를 통해 군정의 실시를 선포했고, 이어서 포고령 2호를 통해 ‘포고 명령 지시를 위반한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이나 소유물을 해치는 자,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는 자,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 등은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하여 사형 또는 다른 형벌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법도 아니고, 그 권력의 국제법적 근거 자체가 모호한 이 포고령 2호는 그 포괄적 내용 때문에 미군정기 내내 언론인 뿐 아니라 각종 정치범과 민간인들을 군법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군정초기에 하지는 언론에 대한 불간섭과 검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치안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처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언론자유가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은 하겠다는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은 해방이후 한국의 언론 상황을 규정한 유일한 원칙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11호를 통해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등을 폐지했으나 신문의 발행을 국가가 허가해야 가능한 허가제를 규정한 신문지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10월 30일 군정법령 19호를 공포하여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록제를 실시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언론 정책 수행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주로 좌익 언론의 실태 파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결국 대한제국에서 식민지기를 거쳐 이어져온 언론탄압 제도는 그대로 살아남았고, 공보부라는 국가선전기구와 등록제와 허가제 실시 같은 군정의 정책이 추가되었다. 이상의 법률들은 모두 언론에 대한 행정, 사법적 통제의 근거가 되었다. 1946년부터 미군정이 공격적인 언론 통제를 단행한 이래, 우익신문도 때론 표적이 되었지만 언론 통제의 초점은 좌파 계열 언론과, 진보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언론들을 통제하는 것에 있었다. 그 방식은 직원들의 검속과 구속, 벌금형, 정간과 폐간 등이었다. 미군정기 언론의 탄압과 정·폐간 조치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 미군정기 언론관련 통제와 테러 사례>33)

시행일	언론기관명	처분 종류	이 유	적용법규
1945.11. 10	매일신보	정간	좌익지	태평양방면포고령 제1호
12. 29	조선인민보	청년단 습격	좌익지	-
1946. 1. 7	대동신문사	인쇄공장 테러	좌익지	-
1. 8	자유신문사	인쇄공장 테러	좌익지	-
5. 15	대동신문	무기정간	암살선동 연합국비방	"
5. 11	인천신문	60여명 검속(CIC)/벌금형	허위 보도/명예훼손	"
5. 18	해방일보	무기정간	위폐사건관련	"
7. 7	자유신문	발행인 편집자 구속	콜레라기사	"
7. 7	조선인민보	발행인 편집자 구속	콜레라기사	"
7. 7	대한독립신문	발행인 편집자 구속	콜레라기사	"
8. 16	동광신문	정간	좌익지	"
8. 18	호남신문	정간	좌익지	제 1, 2호
8. 28	전남민보	정간	좌익지	"
9. 6	조선인민보	무기정간	좌익지	"
9. 6	현대일보	무기정간	좌익지 미군축출선동	태평양방면포고령 제2호
9. 6	중앙신문	무기정간	좌익지	태평양방면포고령 제2호
9. 7	남선신문	무기정간	좌익지	태평양방면포고령 제2호
9. 27	인민해방보	조건부 정간	불명	도군정관 명령
9. 30	자유신문	청년단 테러	-	포고령 2호
11. 16	인민해방보	무기 정간	좌익지	-
1947. 1. 28	민주중보	폐간	좌익지	포고령 2호
1. 28	조선일일신문	폐간	납본 불이행	포고령 2호
1. 28	부산일보	폐간	납본 불이행	도지사 명령
3. 18	남선신문	정간	좌익지	도지사 명령
6. 1	신광일보	폐간	-	불명
6. 1	남선신문	폐간	-	불명
10. 8	조선일일신문	폐간	좌익지	불명
10. 8	인민해방보	무기정간	발행무능력	포고령 2호
8. 5	서울중앙방송국	12명 구속	남로당 적화선전	공보령 제1호
8. 10	부산민중보	폐간	10월 항쟁 보도	포고령 2호/법령 19호4항
8. 10	부산인민해방보	폐간	불 명	포고령
8. 11	노력인민	폐간	좌익지	포고령
8. 11	국제일보	폐간	불 명	불명
8. 20	민 보	무기정간	발행무능력	"
8. 27	중외신문	무기정간	발행무능력	공보령 제1호
10. 18	해방통신	폐쇄	안전과 질서 교란	공보부령 제1호
1948. 4. 8	중앙신문	판권취소/정간	변경신고 미비	포고령 2호/군정청행정명령
4. 27	독립신보	주필 관계자 검거/벌금형	-	미군정법령제 88호
5. 9	독립신보	자진휴간	군정비방	포고령위반
5. 26	신민일보	폐간	좌익지	불명
5. 26	우리신문	폐간	좌익지	미군정법령제 88호
6. 16	민주중보	무기정간	일본인관리 내한 보도	태평양방면포고령 제2호

33) 박계옥, '미군정하의 신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4, 29쪽. 김민환, 1995, 『한국언론사』, 『자료대한민국사』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후 언론정책과 공보처의 역할은 보다 억압적이 되었다.³⁴⁾ 특히 김동성과 이철원이 재직하던 1948년에서 1950년까지의 시기 공보처는 각종 언론과 문화, 사회에 대한 감시와 검열에서부터 선전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과 수위를 높이게 된다.³⁵⁾

여순사건 당시의 공보처장인 김동성³⁶⁾은 1948년 8월 4일 임명되었다. 김동성은 8월 5일의 제1차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기관을 탄압하는 의견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³⁷⁾ 군정과 남한정부가 행정권 이양을 마무리하여 남조선과도정부의 공보부가 남한 공보처로 이양(9. 11)되었고, 과도정부 공보부장 이철원이 물러난 자리에 김동성이 정식으로 공보처장에 취임(9. 13)하게 되었다. 당시에도 김동성은 ‘과거 군정기에 언론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취임의 변을 밝혔다.³⁸⁾

그러나 김동성이 공식으로 취임한 바로 그날부터 『제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보』 기자 등이 경찰에 검거되기 시작해 일주일 후에는 40여명이 구금되었다.³⁹⁾ 이에 국무총리 이범석은 정부의 정책에서 이탈된 ‘공산당의 대변인 증거가 있는 신문사들’을 탄압했으며 앞으로도 단호히 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성 역시 이러한 조치는 언론계의 문제가 아닌 ‘모종의 계획 하에서 나온 사건’이므로 앞으로 ‘공정 무사한 보도와 건설적인 비판으로 언론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육성’을 약속했다.⁴⁰⁾ 이범석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9월 16일 대한독촉국민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전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근간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정부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어 이를 방임한다면 10·1사건 이상의 폭동이 예상되는 바이다. 우리는 1. 人共に 가담한 정당·사회

34) 미군정청 공보부는 1948년 7월 1일부터 사실상 그 기능을 정지하게 되었다. 과도정부에 공보부 고문으로 슈트워드만이 남아 있었지만, 각국과의 고문은 모두 미국공보원 또는 미24군으로 이관되었다. 『동아일보』, 1948. 7. 4.

35) 이 시기 공보처장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김동성(1948. 8. 4 - 1949. 6. 4), 이철원(1949. 6. 4 - 1950. 8. 15), 김활란(1950. 8. 15 - 11. 26), 이철원(1950. 11. 26 -)

36) 초대 내각의 공보처장으로 임명된 김동성은 개성 출생으로 1909년에 중국 소주동오대학에서 유학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15년에 오하이오주립대학 3년을 수료하고 1918년에 귀국했다. 1920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한후 1921년부터 1년간 위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1924년에 조선일보편집인 취임하여 1932년에 조선일보편집국장이 되었다. 1945년에 합동통신사사장에 취임했다.

37) 『동아일보』 1948. 8. 7.

38) 『대한일보』 1948. 9. 14.

39) 제일신문 : 발행 겸 업무국장 조정건, 이창조, 임규수, 김원효 △조선중앙일보 : 사장 이달영, 업무국장 이장영, 편집국장 신승우, 판매부장 하계명, 회계원 하창원, 이영균, 오세영, 홍두원 △세계일보 : 사장 김종량, 편집국장장 김창엽, 김학선, 장재규, 이규대. 『대공일보』 1948. 9. 22.

40) 『서울신문』 1948. 9. 25.

단체를 즉시 해체시킬 것 2. 정부를 반대하는 언론기관은 일간·주간을 막론하고 폐간 혹은 압수할 것 등을 건의한다.⁴¹⁾

기자들에 대한 검거는 시작에 불과했고, 폐간과 압수조치는 현실화되었다. 당시 미국과의 행정권이양 협상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분당 정부가 수립된 것에 대해 김구가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조소앙은 ‘단정 수립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하는 등 정권출범 초기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흐름이 조성되는 가운데 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0월 4일, 경찰은 『조선통신』을 기습하고 부사장 이중조와 차장 김문수 등 7명을 검거했다. 조선통신사 간부 검거사태가 발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언론계가 저항하기 시작했다. 10월 10일 『서울신문』은 ‘언론자유 문제’라는 사설을 통해 사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언론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헛말’이라고 항변했다.⁴²⁾ 서울 각 신문사의 주필과 편집국장으로 조직된 언론단체 담수회(淡水會)는⁴³⁾ 공보처를 방문하여 언론보장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주정부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최근의 사태는 ‘일제시대나 군정시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들은 언론 자유 원칙과 언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언론에 관한 행정을 일원화하여 공보처에 전담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⁴⁴⁾

그러나 공보처는 『조선통신』을 정식 폐간(10. 13)시켰다. 발행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최근 ‘모종사건의 취조진행 및 보도 태도 등이 남한에서는 용납키 어려운 바’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다. 김동성은 언론자유는 ‘국가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조선통신의 보도가 ‘민주국가 건설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폐간의 법적 근거는 (광무)신문지법이며 ‘상부의 결재’를 얻은 조치라고 설명했다.⁴⁵⁾ 조선통신 폐간 사건은 이후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언론간의 ‘언론자유’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다.

41) 『세계일보』 1948. 9. 17.

42) 『서울신문』, 1948. 10. 10.

43) 대책위원은 이견혁, 장인갑, 이신섭, 양재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언론단체들의 주장도 언론자유를 언론사의 자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신문 관련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면 ‘언론창달’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언론인의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통제당국을 일원화시키라는 주장도 방어적이며 협소한 대응 방식이었다.

44) 『동아일보』 1948. 10. 13.

45) 『자유신문』 1948. 10. 14. 『국제신문』 1948.10.13(2), 『동아일보』 1948.10.14(2). 『조선통신』 폐간에 대해서는 공보처장 김동성이 『합동통신』 사장이었기 때문에 경쟁사를 선택해 탄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국회 116차 회의록』 1948. 11. 29 《4. 국회의원기사에 관한 질문》

정부수립 두 달 만에 여순사건이 발발했을 당시 김동성은 맥아더의 초청에 의한 이승만의 일본 방문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당일 일본으로 갔다가 10월 21일에 귀국한 김동성은 신문의 자유는 ‘공정한 사실 보도’를 ‘적절한 비중’으로 보도할 자유이며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는’ 비판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⁴⁶⁾ 이처럼 ‘언론 자유’는 언제나 언론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서두에서 형식적으로 참조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당연하게도 ‘의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누가 무엇을 ‘정부를 전복’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설명도 없었다.

이승만은 어떤 나라에서도 신문의 자유를 위해 ‘정부과괴에 대한 언론’을 허락하거나 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승만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의 자유’정도로 치부했고, 그러한 ‘언론자유’보다 우월하고 우선 보호해야 할 것이 ‘국가의 자유’라는 논리를 펼쳤다. 신문이건 정당이건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먼저 국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⁷⁾

경찰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사이비 기자의 위법행동’과 ‘북한의 사주와 선동’, ‘괴뢰정부의 찬양’을 문제 삼았다. 여순사건 직후 경찰은 다수의 언론인을 체포하며, 구속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제1관경찰청장 조재천은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하의 언론자유를 망각한 행위를 하는 사이비적 기자들의 위법행동은 용서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경찰청장 김태선은 조선통신사의 폐간에 대해 사주 김영식이 북로당으로부터 얻은 홍삼수출권으로 통신사를 유지하고 있고, 조선통신은 김영식과 북로당의 사주, 선동을 받아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북조선 괴뢰정부를 지지 찬양 하는 불온기사’를 보도해왔다고 폐간 이유를 밝혔다. 공출제도에 대한 비판과 중국의 모택동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추곡수집을 반대선동하고 북조선 괴뢰정부를 지지 찬양’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대중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단호히 처단한 것이며, ‘결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⁴⁸⁾ 경찰의 논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언론탄압을 그저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만이었고, 정부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정권이 적대시하는 국가와 인물과 사건 자체를 정권처럼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모두 반정부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46) 『세계일보』, 1948. 10. 22.; 『한국언론연표 II』, 447쪽.

47) 『조선일보』, 1948. 10. 23.

48) 『조선일보』 1948. 10. 21., 『서울신문』, 1948. 10. 22. 『세계일보』 1948. 10. 24.

여러 언론사들이 연이어 폐간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신문』(10. 29)의 폐간으로 더욱 본격화된다. 조선통신이 폐간되던 10월 13일, 『국민신문』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 특사 무쵸⁴⁹⁾가 한국정부에 대한 전 국민의 신뢰 여부를 조사하여 현 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미 본국 정부에 보고했고, 이승만에게 국무원 개조를 요청했다는 추측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과괴분자’들이 ‘정부를 교란하고 인심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방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폐습이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그날로 편집국장 장인갑은 구속되었다. 결국 『국민신문』은 광무신문지법 제11조를 적용해 폐간되었는데, 공보처장 김동성은 ‘우호국 특사에 대해 허위보도’를 하여 미국과 한국을 ‘이간(離間)‘시켰고 국체를 모독(冒瀆)하고 국정을 저해하는 허위보도’라고 폐간 이유를 설명했다.⁵⁰⁾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군정이 실시되고, 다시 분단정부가 수립되는 극심한 체제변동 상황은 현실과 법제의 극심한 괴리를 낳았고, 과거의 악법을 폐기하려는 미군정 포고(5호, 11호)와 헌법정신(100조)⁵¹⁾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식민지 이전의 악법과 식민지기의 악법, 군정기의 악법과 새로운 정부의 악법이 중첩되는 기이한 상황을 낳았다. 당시 정부가 적용한 신문통제 법령은 구한말 광무 11년(1907. 7. 24)의 법률 제1호 신문지법⁵²⁾과 미군정청법령 제 88호였는데, 특히 광무신문지법은 1948년 4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폐기되었다고 판시한 것을 5월 21일 미군정하의 대법원이 부분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큰 물의를 일으켰던 법이었다. 광무신문지법 제 11조는 ‘황실(皇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체를 문란(紊亂)하거나 혹 국제우호를 저해할 사항은 기재함을 부득(得)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황실’이나 ‘국체’같은 봉건적 개념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국제우호를 저해’한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아예 기사 게재 자체를 금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⁵³⁾

신문폐간에 적용한 또 다른 법률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제88호(1946년 5월 29일)는 신문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한 것으로 신문의 허가제(1조)를 규정하고 허

49) 1948년 8월 23일 미국 대통령 특사/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어 한국 방문 8.24 한미행정이양회담 재개

50) 『국민신문』 1948. 10. 13. 『한성일보』 1948. 10. 15., 『국민신문』, 1948. 10. 27.; 『한국언론연표 II』, 449쪽.

51) 헌법 제100조 「헌법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52) 1907년(광무 11) 7월 24일, 이완용 내각에 의해 제 1호로 공포된 언론관계 법률

53) 제11조 이하 제16조까지는 ‘국헌문란’ ‘국제교의의 저해’, ‘관청기밀의 설포’(각 관청의 기재금지 명령을 포함), ‘피의, 피고인의 구호’, ‘비방’, ‘안녕질서의 방해’, ‘풍속혼란’ 등등 추상적인 기재금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었다.

가 신청이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될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4조)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었다. 법령 제 88호를 어긴 경우는 군정재판에 처해졌다.

10월 한달에만 두 개의 신문을 폐간시킨 정부는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10월 26일 군정법령 88호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발행인 자격을 강화한 신문지법 초안을 마련해 법제처에서 검토했다. 내용은 허가제(2조)와 발행인 자격(3조), 각종 보도내용 제한(9조), 허가취소 규정(13조)등 광무신문지법이자 군정법령 88호보다 더 강화된 억압적인 것이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보도금지 조항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간과 정간의 조치를 당해야 했다.

제9조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은左의 사항을 게재하지 못한다.

1. 국헌을 문란하고 국제교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안녕질서를 문란하거나 공공복리와 선량한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민심현혹, 경제교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는 사항
4. 기밀에 관한 관공문서와 비공개 의사로서 당국의 발표가 없는 사항
5. 공판에 회부하기 전 또는 공개하지 않는 재판사건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사항
6.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항⁵⁴⁾

더군다나 신문지법 초안에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공보처장은 재판권이 라도 발행물을 압수하고 발행을 금지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에 소위 언론 3단체⁵⁵⁾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신생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파괴하며 국민의 당연한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며 특히 검열제도를 ‘식민 지적 노예화’라고 규탄했다. 언론단체는 역사적 악법인 광무신문지법 존속은 반역사적 위험이며 사법권을 행정권에 종속시키는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⁵⁶⁾ 당시 『조선일보』는 광무신문지법을 ‘언론폭압의 적용법률’로 규정하고 그 정체를 파헤치는 기사를 실었다. 이 법안은 ‘왜의 침략 약탈 정치가 한국을 군사점령하에 두고 전횡을 농단하는 첫 조치’로 당시 ‘민중의 구국운동을 살육’하는 폭압과 병행해 발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조선일보는 광무신문지법이 발표된 이틀 후에 법률 제2호로 발표된 ‘보

54) 『대한일보』 1948. 10. 26.

55) 신문 주필, 편집국장들의 모임인 담수회, 언론인 단체인 조선언론협회, 조선신문기자협회

56) 『국제신문』, 1948. 10. 29., 『동이일보』, 1948. 11. 3.

안법'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보안법'은 '결사 집회 기타 민중적 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문지법에 없던 추가조항을 넣어 '정치적으로 불온(不穩)한 언론, 행동'(제4조)을 불법화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기미독립선언이후 보안법에 의하여 처형된 것은 '실로 기십만일 것'이라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제정한 법을 신생 민주공화국에 적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역사적 정치적으로 반동의 극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⁷⁾

언론계의 저항은 거세졌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1월 4일 수도경찰청은 '폭동음모' 혐의로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 7백 명을 검거했고, 그중에는 합동통신 편집국장, 국민신문 논설위원, 민주일보 기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국민신문 폐간에 대해 '보통상식으로서도 누구나 방임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보처장 김동성은 언론단체의 항의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미 수차례 신문의 보도와 편집 태도를 경고했음에도 몇몇 언론들이 '반사회적 반민족국가적' 보도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정확한 기사나 오보, 낭설의 조작, 선량한 풍속의 파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국가를 위한 '새로운 의미의 신문윤리운동'을 언론계가 전개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성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범법자를 징벌키 위해서 법을 발동하는 것'⁵⁸⁾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정부대변인은 '대통령제도 하에서 정부타도는 즉 국가타도'라는 담화를 발표했다.⁵⁹⁾ 내무부 장관 윤치영의 대응도 비슷했다. 윤치영은 국회에서 '언론을 탄압한 기억이 없다'면서 광무신문지법이 문제라면 '신문지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신다면 다행'이라고 발언했다.⁶⁰⁾

결국 언론계와 정부의 대립은 국회로 번져갔다. 11월 8일, 국회 제 98차 본회의에서 노일환 의원은 정부가 헌법을 통과시킨 후에 오히려 '반민주주의적이고 가장 악독한 팽소 경향을 밝는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단계에서 기본이 되는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일환은 이렇게 '반민족적인 파오'를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민중과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순사건이 더욱 확대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사건들을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탄압정책을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⁶¹⁾

57) 『조선일보』, 1948. 10. 29; 『한국언론연표 II』, 450쪽.

58) 『조선일보』, 1948. 11. 6- 11. 7.; 『자유신문』, 1948. 11.10.; 『한국언론연표 II』, 457쪽.

59) 『동아일보』, 1948. 11.11.; 『한국언론연표 II』, 457쪽.

60) 1948. 11. 15., 『국회속기록』, 제104호, 1쪽, 4-11쪽.

그러나 국회의 비판이 이렇게 근본적인 수준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11월 29일 116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보처장을 출석시키고 언론문제를 질의하면서 『대한일보』 62)의 국회의원 모독기사 논란이 되었다. 당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해 ‘정부 안에 왜놈의 개노릇 하던 놈들’을 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다른 언론을 탄압, 폐간하면서 왜 국회를 모독하는 대한일보는 내버려 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공보처장은 국민신문 폐간에 대해서는 ‘국가 체면에 손상될 기사를 실어’ 폐간시켰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이 너무 많다. 아무쪼록 그걸 없애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대한일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⁶³⁾ 김동성은 이러한 신문들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통제하는 유일의 수단은 법률에 의해서 폐간, 정간 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⁶⁴⁾

국회에서는 공보처가 각 신문사에 보낸 9개 게재금지 사항이 논란이 되었다. 김동성은 ‘반국가적 반민족적 기사가 무엇인지’ 신문사에서 제시해달라는 것에 대해 공보처에서 몇가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던 것이라며 절대로 언론을 탄압한 것도 강제로 기사 게재를 금지시킨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⁶⁵⁾ 이후에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아홉 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1)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북한괴뢰정부’이라 할 것
- (2) 김일성 수상 운운의 정식 예우를 하는 듯한 문구사용을 말 것
- (3) 봉화를 올린 것과 인공기 달은 것을 보도하지 말 것
- (4) 미군철퇴를 보도하며 민심에 어떤 정치적 불안을 끼치는 논조를 피할 것
- (5) 미군 주둔을 훼방하는 논설과 기사를 게재치 말 것
- (6) 미국대입성적의 불량 혹은 지지(遲遲), 기타의 형식으로 대입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도를 하지 말 것
- (7) 반란군 혹은 인민군을 동정하거나 이를 의거로 취급하여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논조

61) 1948. 11. 8., 『국회속기록』, 제98호, 12-14쪽.

62) 사주 이종형은 일제시기 일본 경찰과 결탁해 기독교계를 탄압한 대표적 친일파였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처리하는 국회에 대해 ‘공산당 매국노의 앞재비 국회의원은 숙청하자’는 등 연일 적나라한 비방을 신문에 실었다.

63) 1948. 11. 29. 제1회 『국회속기록』 제116호, 1118~1128쪽

64) 국회 116차 회의록 1948. 11. 29 《4. 국회위독기사에 관한 질문》

65) 『서울신문』, 1948. 12. 1.; 『한국언론연표 II』, 467쪽.

를 금할 것

- (8) ‘동족상잔’이라는 문구는 叛徒와 國軍警을 동일 위치에서 보게 되므로 금후 사용을 중지할 것
- (9) 국가·사회적으로 무익한 개인의 비방이나 명예에 관계되는 중상적 기사를 취급치 말 것⁶⁶⁾

하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모독당하는 것에만 항의하고 더 이상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2일,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한일보』와 함께 『민중신문』도 국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광무신문지법에 의해 ‘발행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⁶⁷⁾ 그리고는 곧 권승렬이 기초한 전문 32조의 신문지법이 법제처에서 초안을 제정해 12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다음날 국무회의는 신문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처장 유진오는 영미권과 달리 유럽 대륙계에는 형법 외에 별도로 신문지법이 있으며, 한국은 이와 유사하고 다만 ‘국헌을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법률의 취지와 위상을 밝혔다.⁶⁸⁾

언론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12월 9일 중앙청 기자단이 신문지법의 게재 금지사항은 취재자유와 보도자유는 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과거 ‘팻쇼’ 전제하의 언론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며 신문지법 철폐를 국무회의에 요청했고, 『조선일보』와 『민주일보』 등은 ‘역사를 더럽히는 법안’(12월 9일), ‘입헌국가의 일대 오점’(12월 10일), ‘다시 암흑이 오려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 3단체도 또 다시 신문지법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⁶⁹⁾

그러나 신문폐간은 계속되었다. 신문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30일에는 김동성은 국회에 상정된 한일통상조약을 보도한 『세계일보』가 ‘정부의 기밀서류를 무단 공표’한 것에 대해 경고했고, 이듬해 인 1949년 1월 13일 광무신문지법을 적용해 ‘국제교의를 저해’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해 국가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왔다’면서 발간허가를 취소시켰다.⁷⁰⁾ 그리고 신문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어 1949년 1월 16일에는 국무회의가 수정된 신문지법 초안을 통과시켰

66) 『제2회 국회속기록』 제31호, 576~577쪽

67) 『서울신문』 1948. 12. 3.

68) 『서울신문』 1948. 12. 9. , 『자유신문』, 1948. 12. 8.; 『한국언론연표 II』, 471쪽.

69) 『동아일보』 1948.12.10(2), 『한성일보』, 1948. 12. 18.; 『한국언론연표 II』, 472~474쪽.

70) 『대동신문』 1948. 12. 31.; 『한국언론연표 II』, 479쪽. 『자유신문』 1949. 1. 14.

다. 내용은 언론계의 반발을 미약하게 수용하여 조문수가 17조로 줄어들었고, 9조의 게재금지사항은 세 개로 축소되었으며 게재 금지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재판 전에도 공보처장이 발행물 압수와 발행금지, 정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었다.⁷¹⁾

비록 거센 반발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1949년 3월 5일 『국제신문』을 폐간시킨 정부의 설명은 가히 점입가경이었다. 김동성은 국제신문이 ‘공산 계열의 발호를 조장하고 파괴분자의 준동을 엄호하는 태도’가 있고 ‘정부시정방침 주지에 비협력적’이라고 규정했고 수많은 사례를 들었다. 다른 신문들이 해주의거사건을 보도(1. 23.)할 때 국제신문은 작게 보도하여 ‘민족의식의 양양과 건국이념을 과소평가하며 이북 괴뢰정권을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인공기 게양사건(2. 6.)을 ‘보도’하여 ‘파괴분자의 신호수적 역할’을 했으며, ‘경북 폭동사건’에 경북지사가 가담했다는 기사를 게재(3. 4)하여 ‘치안을 방해하여 민심을 교란케 하고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여 파괴분자에게 이롭게 하며 관과 민을 이간’시켰다는 등 기사의 보도량과 편집 방향, 사건 보도 자체 등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면 적을 이롭게 했다는 식의 이유를 들었다. 김동성은 1948년 12월 기사중 104건의 정부발표가 42건밖에 보도되지 않은 것이 비협조적인 증거라고 제시했다.⁷²⁾ 이와 유사하게 『대구시보』는 배급물자를 가로챈 간부들에 대한 기사와 양곡정책이 부진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발행허가가 취소(3. 28)되었고 도지사 개인감정으로 폐간되었다는 의혹을 샀다.⁷³⁾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허가된 정기간행물의 총수가 264건이고 남한 전체에 존재하는 통신사가 6개, 신문사가 57종이었는데, 당시까지 정기간행물 허가가 취소된 것이 총 53건이었다. 공보부령 1호(보고와 허가제도)에 의해 취소된 것이 38건(주간 4, 순간, 2, 월간 32)이었고, 광무신문지법에 의해서만 15개 언론사가 폐간(통신 1, 신문 8, 주간 1, 월간 5) 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⁷⁴⁾

71) 『한성일보』 1949. 1. 16, 1. 18.

72) 『서울신문』 1949. 3. 6. 『자유신문』 1949. 3. 13, 『한국언론연표Ⅱ』 500쪽

73) 『서울신문』 1949. 3. 28.

74) 『연합신문』 1949. 4. 3.

<표 4 : 정부수립 이후 신문 폐간·정간과 언론인 검거>75)

시행일	언론기관명	처분 종류	이 유	적용법규
1948.9. 13	제일신문	폐간/직원 구속	북한예찬/국시위반	광무신문지법
9. 15	조선중앙일보	정간/사장 등 구속	국시위반	광무신문지법
9. 18	세계일보	정간	국시위반	광무신문지법
10.13.	조선통신	폐간	보도 태도	광무신문지법
10.24	민성일보	기자 6명 검거,구속	-	-
10.29.	국민신문	폐간	보도 태도	광무신문지법/법령 88호 4조
12. 1	수산경제신문	발행인 검거	미상	미상
12. 2	대한일보	폐간	국회 모독	광무신문지법
12. 2	민중신문	폐간		광무신문지법
1949.1. 13	세계일보	폐간	정부방침배치	광무신문지법
2. 19	합동통신	경찰이 기자 구타	-	-
2. 19	평화일보	경찰이 기자 고문	-	-
2. 29	한국일일신문	폐간	발행무능력	광무신문지법
3. 3	주간 수도신문	폐간	4조 가항	미군정법령제 88호
3. 5	국제신문	폐간	정부발표문 적게 취급	미군정법령제 88호
3. 6	수도신문	폐간	-	미군정법령제 88호
3. 15	노력인민	검거/신문압수	불명	불명
3. 23	대구시보	폐간	국가질서 교란/정부비협조	미군정법령제 88호 4조
3. 30	혁신보	자진폐간	불명	불명
4. 2	독립신문	경찰이 기자 구타	불명	불명
5.	비판신문	압수	동아일보 조작사진	광무신문지법
5. 3	서울신문	무기정간	게재반정부적 이적행위	광무신문지법/군정법령 88호
6. 6	화성매일신문	폐간	남북통일운동 선전	광무신문지법/군정법령 88호
7. 16	서울타임즈	기자검거/폐간	유엔한국위원단 보도	광무신문지법/국가보안법
7. 16	국도신문	기자 검거	유엔한국위원단 보도	국가보안법
7. 16	조선중앙일보	기자 검거	유엔한국위원단 보도	국가보안법
7. 16	고려통신	기자 검거	유엔한국위원단 보도	국가보안법
9. 30	평화일보	폐간	-	-
10.11	조선중앙일보	폐간	발행무능력	공보령 제1호
12. 9	노력인민	체포/신문,인쇄기압수	불명	불명

정부수립 7개월 만에 10여개의 신문사가 폐간되더니 49년 5월 3일에는 결국 당시 가장 좋은 시설과 가장 많은 독자를 갖고 있던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이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간되었다. 공보처장 김동성은 담화에서 『서울신문』은 귀속재산으로서 신문사 간부들에게 운영을 일임한 것인데, 그 논조가 ‘반정부적 이적행위’라는 비난이 있어 정간시켰다며 다른 신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75) 계훈모 편, 『한국언론연표 II』, 『자료대한민국사』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가 하면 이러한 고귀한 언론자유를 악용해서 반정부적인 기사의 오보 심지어는 사실무근한 것의 허위날조등 신문 사명의 본도를 이탈하는 경향이 극심함은 실로 통탄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략) 건국초기의 다단한 정국과 경제 산업계의 현상이 자못 **불안한 듯이 이를 왜곡과대하게 보도하여 민심을 현혹**시키고 민족국가에 다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어..적어도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소하기를 경고하는 바 76)

공보처는 통계수치까지 제시하며 정부발표 기사량(1월 60%, 2월 43%, 3월 43%, 4월 39%)을 문제 삼았고, 해주의거사건을 무성의하게 취급한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제 주도시찰기사’보다 반민특위 기사를 크게 다룬 것, 한국의 UN가입문제를 작게 다룬 것, 대통령담화를 1면 톱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모두 ‘정부의 기관지적 신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수습대책을 문제 삼으며 ‘중간에서 주민만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3월 16일)를 크게 보도한 것은 반(半)야유, 반(半)선동적이며 정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이고, ’이북동포의 참담한 상황‘을 작게 보도한 것은 ’이북공산도당의 착취실상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⁷⁷⁾ 다음날 이승만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러한 조치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 ‘누가 정간을 시켰어?’라고 반문했고,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가 막연하여 정부 정책을 상세하게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공보처를 통해 조사 시키겠다’고 답했다⁷⁸⁾ 이승만은 공보처의 언론사 폐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대하고 거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듯한 형식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언론계는 다시 한번 저항에 나섰다. 담수회(淡水會)는 이승만에게 서신을 통해 악법의 적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명시가 없으니 법치의 공정 타당성이 없다는 측면과 공보처장이 언론 기관 모두를 ‘반국가적 파괴음모적 이념의 소유자’로 규정하는 것이 모욕적인 폭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항의했다.⁷⁹⁾ 중앙청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시에 접근

76) 『조선일보』 1949. 5. 5(2), 『연합신문』 1949. 5. 5(3)

77) 『조선일보』 1949. 5. 8(2)

78) 『자유신문』 1949. 5. 7(2), 『연합신문』 1949. 5. 7.

79) 하지만 서신은 최근 정부 기관이 기자들에게 간섭과 불친절 사례가 있는 것에 고려해달라며 ‘각하의 건강을 축복’하며 마무리되어 저항의 수위가 이전과 달라졌다. 『자유신문』 1949. 5. 7. (담수회 소속으로 명의를 올린 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국도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합동통신, 공립통신, 국제통신, 고려통신, 조선중앙일보, 부산신문,

가능했던 기자는 한명 밖에 없었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충분한 보도를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보도개방을 요청하며 정간처분 해제를 요구했다.⁸⁰⁾ 정간을 당한 『서울신문』도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통해서 각각의 기사 취급에 대한 공보처의 지적을 반박했고, 기사의 질이나 논조에 문제가 없고 계속되는 사건의 보도의 연속성이 아닌 하루치의 기사만을 문제 삼고 있으며, 문제가 된 당일 지적하지 않고 한참 후에 정간명령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서울신문은 ‘민의를 대변자’로서 미래를 위해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보처에서 수차례 간부퇴진을 종용해 와서 간부들이 1948년 9월에 ‘정부의 시정을 부연 철저케 하여 국책 수행에 협력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으로 기관지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신문은 정간이후 간부의 사임을 명한 것은 퇴진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⁸¹⁾

서울신문이 정간되자 드디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6월 2일 열린 제3회 임시 국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언론탄압에 관한 긴급 질문>이 있었다. 김영기 의원은 정부수립 반년 만에 정간, 폐간된 언론사가 13개에 달한다며 언론탄압을 문제삼았고, 조영규 의원은 언론자유는 ‘헌법의 한도 내의 자유’라면서 언론자유 악용과 국가를 혼란시키는 자유는 억압해야한다고 주장했다.⁸²⁾ 6월 4일 계속된 질의에서 김영기 의원은 다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언론자유 보장 없이는 민주정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여섯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그 질문이란 정부수립 이후 폐간, 정간된 건수가 몇 인지, 기사 게재금지사항 철회, 폐간이유로 항상 거론하는 반국가, 반민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국가정책에 대한 찬양보다 냉정하고 엄중한 비판을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과 윤리인데 이것이 반국가적인지, 국내 최대신문 서울신문을 반국가적이라고 정간시키는 것은 독자 국민을 반국가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니 오히려 공보처가 반국가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김병희 의원은 정부의 언론정책이 ‘반역사적 정책’이라고 단언했고, 서울신문을 정간시키고 관리인으로 김동성을 임명한 것의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처 차장 김형원⁸³⁾이 했다. 김형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는 언론은 허락할 수 없다’면서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공보처가 논

경향신문, 태양신문, 한국일보, 수산경제신문, 평화일보, 서울타임스, 자유신문)

80) 『자유신문』 1949년 5월 8일

81) 『조선일보』 1949. 5. 17.

82) 1949.6.2, 제3회 『국회입시회의속기록』 제10호, 2쪽~5쪽,

83) 김동성은 1949년 5월 23일 11명으로 구성된 친철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의하여 국무회의의 결의를 통해 다음의 7개항을 결정해 언론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에 위반**되는 기사
2. 대한민국정부를 **모해**하는 기사
3. 공산당과 괴뢰정권을 **인정내지 옹호**하는 기사
4. 허위의사를 **날조 선동**하는 기사
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 날조적인 논조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7.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김형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공보처의 처지로 봐서는 이 신문이 나쁜 신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면서 이를 ‘민주주의 때문에 참고 지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처럼 영향력이 큰 신문이 잘못되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면서 서울신문사에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조치를 취해왔고, 간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신문편집내용을 고칠 수가 없어서 각서를 쓰게 했으며, 그래도 간부 교체가 되지 않자 국무회의 의결로 정간시켰다고 증언했다. 말하자면, 가장 큰 신문사를 정권이 접수해 경영 편집진을 교체시키려 했던 것이다. 강선명 의원은 결국 공보처장이 서울신문을 뺏으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일환 의원도 공보처장이 서울신문을 정간시키고 관리인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렵치하고 삼척동자라도 알만큼’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8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공보처를 비판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장병만은 해방이후 전국에서 신문이 간행되었고, 탄압할 법이 없으면 ‘남로당 기관지가 몇 백개가 나올지 모른다’며 ‘진공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창섭도 7개 조항을 폐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로 들어 갈 것’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조치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간섭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일환 의원은 의사일정 마지막에 ‘7개 조항 취소와 서울신문 속간, 김동성 신문 관리자 임명 취소’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원 126명중 32명 찬성, 48명 반대로 부결되었다.⁸⁴⁾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에 침묵하고 있던

84) 1949. 6. 4 제 3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 12호, 3쪽-17쪽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6월 4일부로 공보처장은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던 이철원으로 교체되었다. 미군정기 내내 공보부장 역할을 해왔던 이철원은 6월 14일 국회의 취임사에서 정부가 처한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의 군대는 인민군이 아니라 ‘비적’으로, 북한정부는 북한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쏘련의 괴뢰정부’라고 불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탄압이나 폐간, 정간은 졸렬한 정책이라면서 ‘민중은 우리의 거울’이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고, 앞으로 광무신문지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⁸⁵⁾

그러나 사실 국회에서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면화 된 1949년 6월은 엄혹한 시기였다. 미군 철수가 진행(6. 29 완료)되는 과정에서 소위 우익의 총 공세가 시작되었다.⁸⁶⁾ 세명의 소장파 국회의원이 ‘남로당의 첩자’라고 구속(5. 20)된 것에서 시작해, 반민특위가 친일경찰간부를 검거하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와해시키고(6. 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장파 김병희, 노일환 외 5명의 의원이 구속(6. 21)되었고 국회부의장 김약수 까지 구속(6. 25)된 다음날 김구가 암살되었다(6. 26). 보도연맹 중앙지부가 창설(6. 5)되었으며 관제반공데모가 거리를 휩쓸었다.

정간이 해제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신문 정간해제를 결의하여⁸⁷⁾, 정간된 지 49일 만인 6월 22일부로 속간되었지만 속간된 서울신문은 편집 방향과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중립적 논조는 ‘확고한’ 반공 논조로 편집 방향이 바뀌었고,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어 주주총회와 간부인사를 공보처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며, 1952년 4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공보처장이 신문사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는 1960년 4.19까지 지속되었다.⁸⁸⁾ 서울신문이 이러하데 다른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언론인들은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되고 있었고, 이철원은 이들을 검거하는 와중에 무고한 언론인들이 간혹 섞여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⁸⁹⁾ 당시 언론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보처의 공식 발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고 있었다. 언론계가 평정된 이후 이제 공보처는 언론계가 심리전의 무기가 되길 요구했다. 이철원의 언론에 대한 입장은 10월 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언론출판정책의 방향’이라

85) 1949. 6. 14 제3회 『국회립시회의속기록』 2쪽-4쪽.

86)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96, 201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1996, 455쪽.

87) 『조선일보』 1949.6.19(2)

88) 『서울신문사십년사』 p.208

89) 『국도신문』 1949. 9. 23.

는 글에 매우 잘 드러나 있다.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가존립에 대하여 **적성적인 언론을 용허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추출되는 결론인 것이다....언론출판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요청되는 임무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공산주의 화에 대한 투쟁에 있어 **적개심을 앙양하고 투쟁의욕을 진작하는 일**이다.... 언론출판에 관여하는 제군은 투쟁하는 현 계급에 있어서는 국민정신을 지도하는 **심리전 내지 신경전의 투사**이며 또한 **군중심리의 조직자**인 것이다....언론출판기관에 관여하는 제군이 스스로 국민의 선두에서 **적색괴뢰에 대한 증오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 국가에 대한 언론출판인으로서의 지도적 사명을 다할 것인가.⁹⁰⁾

1950년 2월 2일에는 이원홍 의원 외 12인명의 의원들이 또 다시 수정된 신문지법 초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 정식 상정하기로 가결되었다. 이 법은 1조에 ‘본 법은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분을 내걸었지만 허가제(3조)가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가 30일후에 효력이 상실(5조)되게 해놓았고, 발행이 10일간 중지되면 일간신문은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고(6조), 이 법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은 다시는 발행·편집·주필·인쇄인이 될 수 없었으며(10조), 게재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17조)에서 공보처장이 외교, 군사, 행정기밀을 언제든지 게재 금지,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18조) 되어있었다.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나 민주적 절차가 아닌 정간과 폐간조치(20조)도 빠짐없이 들어있었다.⁹¹⁾

이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사나 대법관 대리가 폐단을 지적하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청 기자단과 법조기자단은 신문지법의 허가제, 게재금지 조항, 정간, 폐간, 압수 조치 규정을 문제 삼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반박했다.⁹²⁾ 이 법안과 관련된 언론계의 반발도, 정치권과 국회의 반발도 이전만큼 격렬하지 않았음에도, 당분간 신문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슈화 되지 못했다. 이미 국가보안법과 국방경비법, 계엄령과 경찰의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굳이 별도의 법안으로 언론을 탄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50년 3·1절을

90) 『서울신문』 1949. 10. 9.

91) 『조선일보』 1950. 2. 3.

92) 『서울신문』 1950. 2. 9.

전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시내 수개 신문사에서 언론인들을 다수 검거했고, 언론인 19명이 남로당 중앙선전부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으로 송청되었다.⁹³⁾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자유당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고 소위 ‘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다시 별도의 신문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광무신문지법이 1952년 4월 7일자로 폐지될 때 까지 언론탄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3) <선전중앙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공보처의 문화검열

정부는 언론계를 탄압해 정부의 기관지처럼 공보처의 통제하에 두는 것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여순사건 직후 정부는 문화계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유력인사들을 모아 현지에 파견했다. 문교부는 문인, 화가, 사진가를 모았고, 사회부는 천주교·기독교·대종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 대표자들을 조직했다. 두 조사반은 현지를 둘러 본 뒤에 사건 실태와 향후 대처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각각 작성했다.⁹⁴⁾ 조선영화사가 여순사건 촬영을 위해 영화인들을 파견한 것이 10월 24일이었고, 사회부가 종교단체 위문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11월 2일, 문교부의 문인조사반은 11월 3일이었다. 사회부 파견 종교단체는 현지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문교부 파견 문인조사반은 여수지역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들을 모아 화신화랑에서 ‘여순사건 반란 현지 보도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⁹⁵⁾

여순사건 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선전업무를 수행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선전 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11월 18일 공보처에서는 <선전대책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은 이범석이었고, 부위원장으로 김동성, 황희찬이 임명되었다. 다른 부서에는 정부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교육, 언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 기획부, 백낙준(연대총장), 현상윤(고대총장), 양우정(평화일보 사장), 김 훈(기획처 차장), 김형원(공보처 차장), 황희찬(내무부 차관), 오종식(사회부차관), 손석태(문교부차관)
2. 실천부, 최두희(동아일보사장), 박종화(작가), 유치진(작가), 황의찬, 오종식, 손석태, 최용덕(국방부차관), 김수학

93) 『조선일보』 1950. 3. 7.

94) 김득중, ‘여순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반공담론의 창출’,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007. 93쪽.

95) 『서울신문』 1948. 11. 24.

3. 재정부 최형주(조선은행 총재), 최태욱(금융조합연합회장), 이종찬(조선농회부회장), 장희창(재무부차관)⁹⁶⁾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한달 만에 대통령령35호로 공보처에 선전대책중앙위원회가 설치(11. 30)되었고, 이후 연이어서 각 시도의 선전대책위원회 직제가 마련(12. 20)되었다.

공보처는 선전대책중앙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선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1주년을 맞아, 3천만이 다같이 한결같은 마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 216명의 강사들이 16개의 반, 연극대와 영화대로 나뉘어 전국 각지에 파견했다. 공보처장 이선근은 이것이 ‘실로 국가비상시에 처한 지상명령에 수응하는 획기적 사업’이며 ‘민심의 불안을 양성하는 단말마의 발악을 남김없이 봉쇄하고 백일하에 꿈꾸는 그들 적색마귀를 제거하기 위하여 3천만 민족의 양심에 호응하는 정의의 기치를 들고 미로에 방황하는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철추를 가하고자 쫓아간 것’이라고 발표했다.⁹⁷⁾

이철원은 1949년 12월에 ‘건전, 활발, 명랑한 사기를 배양하고 저속, 애상한 유행가 등으로 민족정기를 위축시키는 것을 일소’하겠다면 직장, 군대, 학교, 극장, 요정 등지에서 각 책임자가 지도, 연습시켜서 단시일내에 전국방방곡곡에 유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처는 ‘애국의 노래’, ‘민족의 노래’, ‘건국

96) 『조선일보』, 1948. 11. 23.

97) 당시 각도에 파견된 계몽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있었다. 『서울신문』, 1949. 10. 23.

구분	도별	조별	인솔자	성명	단체명	강연자이름
제1반 (연극대)	경기	1	林 曠	林鍾和	극예술협회	
	전남	2	외무부차관	高在旭	태평양가극단	金春植
	경북	3	朴裁英	姜仁澤	민족예술무대	
	경남	4	吳宗植	陳承錄	서울笑劇團	
	전북	5	俞莞昌	俞鎭活	새별악극단	崔大成
	충남	6	총무처차장	문교부차관	白鳥樂劇團	金德寶
	강원	7	기획처차장	상공부차관	현대가극단	姜惠遠
	충북	8	사회부차관	李正安	文協	
제2반 (영화대)	경기	1조	(1) 보건부차관	朴順奉	安潤璟	
	전남	2조	(1) 국방부차관	趙東植	(2) 安仁浩 琴玉淵	
	경북	3조	(1) 체신부차관	朴鎬炳	(2) 朴日문 徐斗石	
	경남	4조	(1) 공보처차장	元春義	(2) 공보국장	姜完得 (3) 출판국장 (4) 威處植
	전북	5조	(1) 법제처차장	沈廷燮	(2) 朴在萬 林源相	
	충남	6조	(1) 교통부차관	尹用淳	(2) 朴源權 金基壽	
	강원	7조	(1) 재무부차관	金光敏	(2) 趙熙章 洪成洛	
	충북	8조	(1) 黃文星 金昌俊	(2) 梁明煥 金晶熙		

의 노래‘ 등을 국민가요로 제정하였다.⁹⁸⁾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 50년 5월에 ‘선거촉진 방공방첩 강화주간’을 설치했고, 확성기와 웅변대회, 표어 선정, 연극, 만담 촌극을 총 동원해 선거를 알리고 반공주의를 유포시키려 했다. 각 학교에서는 반공에 관한 작문과 표어제작, 포스터전과 수상식을 개최하게 하였고, 전람회를 개최하여 ‘정판사위폐사건’, ‘국회프락치 사건’등으로 전람회를 개최하여 ‘남로당의 악행과 공산주의 음모를 폭로’하여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기로 했다. 심지어 이 방첩기간 동안 각 기관 부처에 ‘임시 첩보원’을 지정해 관할 기관에 잠입시켜 기밀서류를 훔쳐온 후 마지막 날에 산하기관장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이를 공개하고 기관장에게 주의를 준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가두 방송과 각종 연극, 강연회, 대한청년단원들을 활용해 스탈린과 김일성, 박헌영, ‘국회 프락치 의원’등으로 분장시켜 국군에게 체포되어 끌려다니는 가장 행렬을 시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방공방첩’ 표어를 모집해 다음과 같은 표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⁹⁹⁾

1. 누설말자 軍機, 분쇄하자 모략
2. 간첩은 노린다, 당신의 불평을
3. 방첩으로 멸공, 국방으로 통일

공보처는 언론뿐 아니라 영화나 연극, 출판과 문학 등 문화 전반에 대한 검열도 다시 실시했다. 영화검열은 1948년 10월 9일부터 재개되었는데, 이철원은 검열의 이유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따라 영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영화예술성의 상실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밀수입영화 방지와 불법상영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고, 기일안에 검열을 받지 않으면 상영 공개권이 없어지게 했다.¹⁰⁰⁾ 1949년 초까지는 검열 업무를 관장할 부서가 중복되어 문화계에 검열권을 두고 공보처와 문교부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¹⁰¹⁾ 공연법을 통해 연극 각본 등을 검열하려던 것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자, 1949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연극 각본 검열업무를 공보처 주관으로 하기로 결정했고¹⁰²⁾ 9월 19일 부터 각 도별로 설치된 공보과에서 연극 각본과 영화 대본의 검열이 시작되

98) 『한성일보』, 1949. 12. 2.

99) 『경향신문』, 1950. 5. 17.

100) 『자유신문』, 1948. 10. 9.

101) 『경향신문』, 1949. 9. 19.

102) 『경향신문』, 1949. 10. 2.

었다. 모든 연극영화는 각도별로 도지사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극장에는 검열관의 좌석이 설치되었다. 광주에서 상영되던 ‘울밀에 선 봉선화’는 ‘현 시국에 비추어 내용이 불온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상연이 중지되고 각본이 압수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아시아레코드사의 ‘여수야화(麗水夜話)’ 레코드의 가사가 ‘불순할 뿐 아니라 민심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졌다.¹⁰³⁾ 이철원은 이듬해 1월에 또 다시 국산영화에 대한 사전 각본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해방이후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하게 했지만 ‘이렇다할 발전이 없고’, 영화인들의 제작태도가 ‘무정견’하여 영화의 고귀한 예술성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¹⁰⁴⁾ 동시에 각종 공연단체들도 ‘저속한 공연단체가 폐를 주는 예가 많다’면서 모든 공연단체는 공보처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등록증을 발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¹⁰⁵⁾

잡지 등의 다양한 출판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검열은 교과서부터 시작되어 문고부에서는 ‘국가이념에 배치되는’ 중등교과서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¹⁰⁶⁾ 일반 간행물들의 경우 경찰의 사찰과와 공보처가 긴밀히 협조하며 진행되었다. 1949년 12월 이철원은 출판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민족도의를 손상시키며 풍기에 저촉되는 저속한 잡지, 유행가, 탐정소설, 만화 등’이 ‘국민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보처는 일부를 제외한 일본서적의 번역출판도 금지시켰다.¹⁰⁷⁾ 검열은 곧 국가에 의해 ‘문화계’에 차별과 위계적 분류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경찰국에서는 좌익계열 문화인을 3급으로 나누었는데 ‘1급에 속하는 자는 이미 모두 월북했고, 2급에 29명, 3급에 22명이 있다’고 밝히면서 ‘좌익계열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간행한 서적을 모두 압수하고, 앞으로 간행, 창작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에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신문사, 잡지사, 문화단체에 배부하여 발표와 투고, 개제를 금지시킴으로써 원천봉쇄하려 했다.¹⁰⁸⁾ 이들이 전향하여 ‘대한민국을 지지 육성하려는 태도가 현저하게 표현’되는 것이 공보처의

103) 『동광신문』, 1949. 7. 7. 『경향신문』, 1949. 9. 3. 『부산일보』, 1949. 9. 20.

(1) 도내에 공연하는 연극은 그 단체 여하를 막론하고(계몽단체를 포함) 도지사의 각본 검열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각본 검열을 受할 시는 신청서 2통과 각본 3부(전후 표시를 附할 것)를 늦어도 공연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극장에서는 검열관의 입검석을 설치하여 점등하여 둘 것.

104) 『국도신문』, 1950. 1. 25.

105) 『국도신문』 1950. 2. 21.

106) 『조선일보』, 1949. 10. 1.

107) 『경향신문』, 1949. 12. 4. 『한성일보』, 1949. 12. 15. 『자유신문』, 1950. 4. 8.

108) 『자유신문』, 1949. 11. 6.

원고 심사로 확인된 후에야 집필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¹⁰⁹⁾

공보처는 선전을 이유로 방송 청취료도 일방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북한정부와의 선전전이었다. 이철원은 ‘대한민국정부의 유일한 국책선전기관이요, 보도 기관인 중앙방송국의 기계시설이 노후하여’ 방송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이북괴뢰집단측에서는 시설확충에 분망하며 서울방송의 30배나 되는 강력한 전파로 허위 모략방송을 자행하여 민심을 소란케’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전파 전에서의 우열’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방송기기를 구입하려면 당시 돈으로 약 1억 1,500만원이 필요했고, 결국 11월부터 방송 청취료를 월 3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¹¹⁰⁾

이 처럼, 여순사건 이후 정부의 언론·문화 정책은 ‘예외적 비상사태’를 근거로 삭제와 검열, 언론사 폐간과 보도통제로 나타났다. 수많은 언론사를 검열하고 폐간시키고 기자들을 체포해 들이면서도 그것이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정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언론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목살은 언제나 이 위기상황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각종 신문들이 폐간되어 가는 상황은 언론을 탄압할 법도 없으면서도 ‘광무신문지법’이나 ‘미군정 법령’을 적용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예외적 영역’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통권력을 독점한자와 모든 소통권한을 박탈당한 자가 생겨났다. 한편에는 모든 것을 검열 하는자가 생겼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것을 검열 받아야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말만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한편에는 모든 ‘기밀’정보에 접근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할수 있는 권력이 생겼고, 다른 한편에는 심지어 자신의 생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에도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기력한 대중들이 생겨났다. 한편에는 신문사 사장이 되고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자들(양우정, 김동성)이 생겨났고, 수많은 신문들은 발행 자체가 금지되었고 기자들은 구속되었다. 이미 좌파와 좌파 언론들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반발이 테러로 진압된 상황에서, 보수언론들의 언론자유도 언제건 목살되었다. 결국 언론자유에 규제조항이 생기고, 언론자유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되고,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에게는 심리전의 무기가 되어 적대를 고취시키는 전쟁 선전기구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109) 『연합신문』 1950. 2. 5., 『국도신문』 1950. 4. 8.

110) 『서울신문』, 1949년 10월 28일

3. 여순사건 이후의 주민 통제와 ‘내전’의 침입¹¹¹⁾

1) 행정말단기구의 장악과 국민회 주도의 관제 ‘국민운동’

반공사상 전개, 반공국민 조직, 반공사회 실천 이것이 민족공동의 과업이요,
이것이 국민운동의 내용이요, 목적인 것이다.¹¹²⁾

여순사건 이후 중요한 정치적 반대세력, 국회의 소장파 의원들, 군과 공무원, 교육계 인사들을 숙청한 이후, 정부는 언론과 선전체계를 장악했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전면화했다. 정부의 대국민통제는 기본적으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내전 수준의 격렬한 정치적 갈등을 ‘전국가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해 전국의 주민들에게 ‘생활도덕’으로서 ‘반공’을 강제하고 깊숙하게 침투시켜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주민통제에 대한 구상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국회에서 내무부장관 윤치영이 발표한 시정방침에서부터 등장한다. 윤치영은 당시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경찰로 태어나는 것과 경찰력 강화, 지방제도 확립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섯 번째로 ‘국민조직과 및 그 운동’을 강조한 바 있다. 윤치영은 ‘건국초의 현실정’을 고려해 ‘국민운동의 필요가 절실’하므로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국민운동’을 위한 조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¹¹³⁾

이러한 ‘국민운동’이란 1차적으로는 정권을 위한 주민동원과 통제의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이는 곧 새로 탄생한 정부가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포섭하고 경계 안에 가둬두는 ‘국민형성’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수립을 통해 이승만과 한민당계는 일단 고지에 깃발을 꽂아 ‘국가’라는 추상적 상징차원에 영역표시를 한 셈이지만,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개별화하여 다시 하나의 ‘국가·국민’으로 통합시켜 국민을 형성하고, ‘국가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국가기구를 차지한 파워블록은 ‘국가보안법’과 ‘정보기관’을

111) 3절의 내용들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정부수립후 국가감시체계의 형성과정’(2004, 서울대학교) 3장과, ‘국가권력의 모세혈관과 1950년대의 대중동원 - 국민반을 통한 감시와 동원’(2007) (김득중 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선인)를 정리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112) 여순사건 이후 대한독립촉성회가 언론에 발표한 성명의 내용. 『대한일보』, 1948. 10. 26.

113) 『시정월보』 창간호, 9~12쪽 1949. 1. 5.

이용해 정적을 제거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국민운동’을 실시하여 ‘반공국가’에 적합한 ‘국민’들을 구성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때론 매우 일상적 차원의 규제와 규율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이 말단으로 침투하는 매개는 ‘동-반’을 단위로 한 식량과 이동의 통제, 각종 세입과 병역의무의 부과, 감시와 밀고의 의무화 등 행정적 조치였다.

정부수립이전부터 말단행정단위는 지배권력이 침투하여 정치적 동원과 식량배급의 단위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었고, 말단행정단위를 권력의 하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부수립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국내평정의 과정에서 물리력의 독점을 완수하지 못하고, 여전히 억압적 권력에 의존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구가 미치는 권력망의 영역은 그리 견고한 것이 아니었다. 형식적으로는 명령체계가 갖추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력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당장’ 해결하려는 방식이 말단의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반관(半官)적 성격의 지지세력들의 조직을 장려·운영하는 것이었다.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1월, 서울시는 각 구, 동, 직장 단위로 ‘서울시 애국총연맹’을 결성하려 했다. 애국연맹 결성에 관해 서울시장 김형민은 ‘170만 시민이 한 뭉치로 엉키어 국권을 위반하고 국시에 배치되는 각종 악질선전과 모략을 애국심으로 배제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하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¹¹⁴⁾ 자치기관을 표방하여 국가주도로 주민을 조직화하고, 민보단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규율, 통제하려던 시도가 발빠르게 시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애국연맹은 각 도별¹¹⁵⁾로도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국민회 주도로 국민운동이 본격화되자 1949년 9월 해체되었다.¹¹⁶⁾ 해체되기 전까지 애국연맹은 서울시(각도 행정기관), 문교부 교화국과 함께 ‘신생활운동’을 주도했다. 주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문교부가 주도한 ‘국민생활재건운동’의 경우 이미 1947년 11월부터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 재건 훈련, 국민경제의 재건설’을 기본목표로 삼고 추진되었다.¹¹⁷⁾ 서울시에서 조직된 신생활축진회에서는 ‘교통도덕과 시간여행을 철저히 할 것’에서부터 적절한 결혼연령을 제시하고, 남녀의 의복 표준을 제시하는 등 ‘신생활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규율을 만들어 갔다.¹¹⁸⁾ 서울시의 ‘신생활운동’은 각종 구민권기대회, 수양담화회, 강연만담회, 신생활복재단강습회 등을 개최하였고, 가두방송, 선전탑 건립, 국산장려·소비절약 표어모집, 미신타파 강조

114) 『경향신문』, 1948년 11월 12일자.

115) 『강원일보』, 1949년 3월 6일자.

116) 『국도신문』, 1949년 9월 23일자.

117)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7년 11월 18일자.

118) 『동아일보』, 1949년 6월 25일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¹¹⁹⁾ 전쟁발발 이전까지 주로 문교부가 주도한 ‘신생활운동’을 통한 일상의 규율은 보다 세세한 것까지 진행되었다.¹²⁰⁾ 즉, 식생활 개선의 내용으로는 점심식사는 뜨거운 음식을 삼가 연료를 절약하고, 혼식을 장려하여 쌀을 절약하며,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접대습관을 없애 간소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민의복’의 경우, 남녀모두 색깔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다듬이’를 폐지할 것, 남자공무원은 ‘건국복(일제시기의 국민복)’을 착용하고, 여자공무원은 여름에 양말을 신지 말 것, ‘일반여자’는 조끼허리통치마를 입을 것과 근로할 때에는 ‘몸배’를 입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산품애용’, ‘가사 교과서내에 생활개선운동 내용 기술’등을 포함한 것이었다.¹²¹⁾ 1949년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양곡에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신체제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범람하는’ 일반 음식점을 식량소비의 ‘최대의 암’으로 규정하고 정비하려 했고, 제과업, 양조업등의 쌀소비를 제약하고 이러한 시책을 애국반상회, 강연, 격문을 통한 ‘계몽운동’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중국에는 ‘전국민 일체로 각 실천항목에 총진군하여 신국민가정생활의 일상체제화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¹²²⁾

1950년에 이르면 내무 행정기구가 추진하던 ‘국민생활개선운동’의 목표와 성격도 ‘동북아 반공의 최전선에 적합한 것’으로 추진되었음을 노골화했다. 전장의 논리로 재편된 일상에서 이전의 여가와 여흥은 곧 사치가 되었다. 정부는 ‘동아 반공의 중책과 북한의 실지를 회복한다는 민족적 지상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대한 시국과 심각한 민생고를 모르는 듯 사치에 흐르고 유행을 쫓는 경향이 심한 ‘일부국민’을 계도하려 했다.¹²³⁾ 정부는 이러한 ‘시국’에 ‘주책없이 먹고 질탕 놀아야만 속이 풀리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설 명절을 두 번씩 쉬는 것은 ‘미개 문명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했

119) 실천요강과 실천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실천요강> 1. 道義: 정직·순결·사랑 2. 儀禮: 관혼상제 제도의 연구와 실천 3. 經濟: 근로·절약과 경제생활의 건설 4. 衣服: 의복의 과학화 5. 飲食: 식생활의 과학화 6. 住宅: 주택의 과학화

<당면실천사항>

1. 실천: 가. 교통도덕 나. 시간斷行 2. 의례: 가. 혼례 나. 상례 다. 제례

3. 의복: 가. 하절 남녀 통상복 표준형 설정 나. 학생의 하절제복

4. 음식: 가. 여관음식의 개선 나. 단체식당 관리 다. 가정식사 개선 라. 고급요정 요리 규격화 시행 등

5. 주택: 가. 국민주택설계도 현상모집 나. 기존 주택 개선 등 『한성일보』 1949년 10월 11일자.

120) 당시 문교부 생활개선과에서는 의례, 도의, 의복, 음식, 주택 등 다섯 개의 분과별로 위원을 선출하여 발표했다. 『경향신문』, 1949년 3월 15일자.

121) 『서울신문』, 1949년 8월 27일자.

122) 『시정일보』 제3호, 104-106쪽, 1949년 3월 17일자.

123) 『자유신문』, 1950년 2월 25일자.

다.¹²⁴⁾ 동시에 애국반과 대한청년단, 각 관계기관이 ‘수시 순찰 경시(警視)하여 악질자를 적발, 엄중처단’하는 사찰활동을 지시하였다.¹²⁵⁾

<표 5> 정부수립 이후 ‘동회, 애국반’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각종 국민운동의 현황

날짜	행사·운동 명칭	비고
1949년 4월 18일	생신구국운동	상공부, 전력증강
5월 10일	태평양동맹 촉진 국민대회 5·10선거 1주년 기념	전국애국단체연합회
6월 10일	호국학도비상궐기대회	학도호국단
6월 12일	남북통일촉진 이북5도 학생대회	전국학생총연맹 서북건설대
6월 15일	방위강화국민대회	목포 애국단체연합회
7월 16일	학도방위강화총궐기대회	학도호국단
7월 23일	월남군인환영대회	육군본부 정훈감실 보도과
8월 -	국민식생활·의복개선요령 제정	문교부
10월 -	관민합작 국민운동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내무부 합동
10월 19일	여순사건 분격궐기대회	여순사건 1주년
10월 -	‘無牛肉日’일 제정	서울시
9월 -10월	생활개선과 국산품 애용 신생활운동	사회부
10월	의생활 개선운동	문교부
10월	비행기헌납운동	대한노총
12월	음력설 강력 단속	사회부
12월 28일	전력사용 합리화 운동	李寧鎭 충청남도 지사,
1950년 2월 17일	미신타파주간	사회부
	관민합작 국민생활개선운동 전개	국민회, 내무부 합동
3월 10일	식량소비절약 국민운동	농림부등 각부처
3월 6일	국민생활개선운동	차관회의, 선전중앙대책위
3월 8일	무주일(無酒日) 제정	서울시

결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각종 규범과 선전기관을 통해 ‘양곡소비규정’, ‘신생활운동 규정’을 정하고 선전하여 일상생활 영역에서 규율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애국반과 관변단체, 행정기관은 사찰자, 감시자로서 활동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건

124) 『서울신문』, 1949년 11월 24일자.

125) 『동방신문』 1949년 12월 29일자.

국초기'와 '위기'에 '적합한' 내핍과 절약을 강요하고, 동시에 '근대적인 표준'으로 '국민의 생활상'을 공식화하면서, 상호감시체계를 유도하려 했다. 이렇게 '예외상태' 논리에 기반한 일상의 규율로 '반공주의'가 전파되고 일상의 행동 하나 하나가 반공체제에 적합한 '반공국민'의 '반공도덕'의 기준으로 평가되어갔다.

주민 통제와 동원의 양상이 보다 정치적이고 보다 분명하게 '반공'을 표방하게 된 것은 여순사건 이후였다. 이승만이 총재로 있고, 배은희, 명제세, 신익희 등이 포진해 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한민당과의 갈등과 국회내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저항 등에 직면하던 상황에서 여순사건을 겪게 되었다. 1948년 12월 26일, 독촉국민회에서 '국민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전쟁발발 이전까지, 국민회가 주도하는 각종 관제 국민운동이 시행되었다.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 소위 '애국 3단체'를 위시로 한 '국민운동'은 정부수립이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반관(半官)'을 표방하는 조직을 이용해 주민들로부터의 공출과 정치적 동원을 시도했다. 동시에 사회부,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식생활, 의생활 규제가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해졌고, 사법기관이 주도한 전향기구인 국민보도연맹 역시 전 국민을 상대로한 '귀순공작'을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수행하였다.

주민통제와 동원의 수위와 목적은 더욱 강해졌고, 전장과 국경의 논리가 관철되었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초토화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제주도를 방문하고 '관민합작으로 반란분자를 다 소탕시키고 구제책을 준비중'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관민합작으로 반란분자를 다 소탕시키고 구제책을 힘껏 준비하는 중이나 한번 숙청하고 방임하면 또다시 반란분자들의 공작을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해안경비대와 우리 해군이 속행선과 순양대와 포격대를 강화해서 해외에서 잠입하는 무리를 다 토벌하여 밖에서 반동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며... 국민회와 청년단과 부녀단을 정부 후원기관으로 각 동리와 촌락에 철저히 세포조직을 완성하여 동일한 주의와 동일한 행동으로 서로 보호하며 연락해서 물샐 틈 없이 조직해 놓고 어떤 집 틈에서든지 타처 사람이 들어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게 될 때에는 24시간 이내로 최근 경찰관서에 보고해서 일일이 조사함으로 반란분자들이 자유 행동할 곳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유럽 각국에서 이와 같이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태리에서 더욱 이와 같이 진행하기로..(강조는 인용자)¹²⁶⁾

126) 『조선중앙일보』, 1949. 4. 13.

이는 적대적 국경이 일반 주민들의 일상으로 침입시키는 구상이었다. 해안과 지상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국경이 만들어졌고 각종 관제조직과 사회단체들은 서로 서로를 감시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되었으며, 가정과 집은 외지인의 출입을 기록해야하는 장소가 되어갔다. 여순사건 직후 소위 ‘애국 3단체’로 불리우던 대한청년단, 국민회, 대한부인회 모두가 일민주의의 ‘4대 지강’을 널리 선전공작하여 (일반 동포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내무부를 통해 각 도지사와 부윤, 군수, 경찰관리들에게 국민회와 대한청년단을 모아 ‘관민협작으로 반공운동을 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¹²⁷⁾ 이러한 시기에 일개 정치집단인 국민회가 내무부와 함께 ‘국민반’ 운영을 통해 ‘반관반민’ 형태의 ‘국민운동’을 본격화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려 했다.

반공사상 전개, 반공국민 조직, 반공사회 실천 이것이 민족공동의 과업이요,
이것이 국민운동의 내용이요, 목적인 것¹²⁸⁾

독촉국민회는 위와 같은 구호를 내걸로 ‘관민일체가 되어 반공태세 강화와 국가보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국민회와 정부의 각부장관, 도지사, 군수로 구성된 ‘관민협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애국반을 국민반으로 개편하여 국민회 지방조직의 말단 기관으로 할 것 등을 이승만에게 건의하였다.¹²⁹⁾ 1948년 12월 26일로 명칭을 ‘국민회’로 바꾼 이후 운동목표를 ‘관민일체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 관민구별이 없이 모두가 국민회원이 되는 것’으로 정했다.¹³⁰⁾ 이듬해인 1949년 2월 15일에는 국민회 결성 3주년 기념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당면정책 5개항을 발표하였다.

1. 국민운동은 국력을 강화하여 국위를 높이는 국민전체의 직접적 운동이다.(..) 3천만은 단일체계를 갖추어 당면한 중요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민협조하에 부락·직장의 말단에 조직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 급속한 국가내용의 완성을 위하여 3월 말까지 전국적 조직과 기구의 개편을 決行하는 동시 道·郡책임자는 총본부 인준을 필요로 한다. 幾個人중심이나 어떠한 派別性이나를 배제하고 진정한 국민의 국민회가 되어야 한다.
3. 민족의식과 墾産意慾을 최고도로 양양하기 위하여 국민계몽을 목적인 국민지도원을

127) 『서울신문』, 1949. 4. 12., 『조선중앙일보』, 1949. 4. 15.

128) 『대한일보』, 1948년 10월 26일자.

129) 『서울신문』, 1948. 11. 19.

130) 『동아일보』, 1948. 12. 26.

개설 한다.

4. 國聯신위원단을 맞이하여 남북통일의 거족적 열원을 조속한 기일 내에 성취하기 위하여 **一大 사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북한 괴뢰정권의 타파와 반동분자가 改過遷善을 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계몽대**를 각 지방에 파견한다.
5. 재일 60만 동포의 사상지도나 권익옹호가 절대로 요청되므로 본회에서는 일본지부를 설치키로 한다.¹³¹⁾

이상의 정책은 각 지방본부로 하달되었는데, 특히 전라남도의 도대회에서는 애국반을 국민반으로 개편하는데 있어, ‘국민전부가 <가>급 회원이 되고 특히 입회절차를 밟은 자는 <나>급 회원’이 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민회는 또한 중앙 총본부에 ‘국민지도원 강습소’를 설치하고 ‘애국성이 견고한 인사를 강습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전국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행정권력을 침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반관조적이 자의적으로 행정단위의 명칭을 개편하고, 국민의 입회심사를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구분·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구호수준이 아니라 회비를 징수하고 행정기관과 전국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일개 사조직이 유사-국가 노릇을 하려 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회’는 조직강화를 위해 ‘시장, 군수, 읍면장, 서장, 지서장은 국민회 조직과 회비징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은 이승만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민회가 지방 행정기관 이상의 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던 셈이다.¹³²⁾ 전국적인 조직화를 시도한지 몇 개월 후인 1949년 6월 2일, 국민회에서는 제 1차 각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표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운동’안으로는 1) 국민강습소의 개설, 2) 계몽강연, 좌담회 실시, 3) 가두선전의 적극화, 4)벽보의 활발화, 5)이동전람회의 개최, 6)포스터 선전의 완벽, 7) 노래운동의 완벽 등이었다.¹³³⁾

독촉국민회의 ‘국민운동’의 목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반강제하여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가 미군철수를 앞두고 ‘미군철수반대’, ‘방위강화’를 ‘국민운동’으로 공론화하려는 시도였다. 독촉국민회의 선전부장이자, 일민주의 보급회의 경남지역 위원장이던 양우정은 연합신문의 사장으로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육군차모 정일권, 제 1사단장 김석원, 작전국장 강문봉, 김종오 등을 불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이승만의 주장을 따라 소위 ‘태평양 방위동맹’을 결성하고, 아시아 반공의 최전선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장했고, 1949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언기를 주장하는 것 역시 ‘국민운동’의 이름으로 이

131) 『연합신문』, 1949. 2. 16.

132) 『동광신문』, 1949. 3. 12, 『호남신문』, 1949. 3. 20.

133) 『연합신문』, 1949. 6. 4.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⁴⁾ 실제로 미군철수를 앞두고 ‘방위강화국민대회’가 애국연맹의 주최로 1949년 6월 11일 개최되었고 필요한 자금은 상공회의소에서 중요 산업체에 기부금을 할당하여 충당했다.¹³⁵⁾

1949년 8월 24일 개최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는 국민회가 ‘국민운동 사무’를 담당 하게 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열성의 응결력으로써 정부시책을 호응 완수하며 공산 주의를 분쇄 극복하는 주축기관이 될 것’을 명시했다. ‘국민운동’의 지시명령계통은 정부, 국민회의 양 계통을 따를 것이 공식화되었고 매호당 200원의 회비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국민운동’을 위해 애국반이 국민반으로 개편되었고 각 국민반은 10호내지 20호를 단위로 구성하려 했으며, 국민반은 최소한 월 1회이상 반상회를 개최하게 하였다.¹³⁶⁾ ‘국민운동’의 주축인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의 유지비로 매세대에 매년 마다 총 400원씩이 부과되었다.¹³⁷⁾

국민회에서 시도한 ‘국민운동’이 지방장관회의를 거쳐 내무부와 합동으로 전개될 것이 공식적으로 표명¹³⁸⁾되면서, 국민회의 당론이 전국의 행정망을 통해 국가의 정책으로 하달되어갔다. 국민회 사무국장 이활은 사적 조직이 국가의 행정계통을 수단이자 매개로 하여 권력화되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반관반민’이라고 규정하였고, 정부 각부장관, 공보처장, 내무차관, 국민회 최고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³⁹⁾ 결국 1949년 10월 1일부로 서울시의 애국연맹이 해체되고 국민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시가 구청을 통해 각 동회로 10월 1일 일제히 상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¹⁴⁰⁾

관변조직이 수행한 규율과 감시의 역할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 중 하나가 ‘기부금’문제¹⁴¹⁾였다. 주민들에게는 ‘관공청은 기부금진청’이라는 인상이 생길 정도로, 학교, 시, 구청, 동회, 각 단체, 각 관청의 기부모집이 빈번했다. 민보단¹⁴²⁾ 숙소 건축 등을 이유로 동회를 단위로 할당된 기부금은 주민들에게 배당되었고,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쌀 배급을 해주지 않거나,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 해주지 않는 징수방식

134) 『연합신문』, 1949. 5. 26., 『동아일보』, 1949. 5. 31.

135) 『연합신문』, 1949. 6. 11.

136) 『경향신문』, 1949. 8. 26.

137) 『자유민보』, 1949. 12. 28.

138) 『서울신문』, 1949. 9. 7.

139) 당시 위원회내부에는 내무부, 사회, 재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 13개 장차관이 관변측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국민회측의 오세창 명제세 신익희 배은희 이윤영 지대형, 그리고 이활, 최태용, 이성주, 박제영 등이 참여했다. 『동아일보』, 1949. 9. 12.,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9. 9. 16).

140) 『경향신문』, 1949. 9. 23.

141) 당시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어 있던 청년단체들은 비합법적 자금에 의존했는데 그들이 모집한 강제적 내지 ‘자발적’ 기부금은 1949년 국가세입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Henderson, 2000[1968] : 225)

142) 민보단은 지방의 경우 의용단, 호국단 등의 명칭을 갖고 있었다.

까지 생겨났다.¹⁴³⁾ 동회단위로 배속되어있던 (향보단)민보단, 대한부인회,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는 명령계통이 시장에게 있었지만 말단에서는 별개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각 단체별로 기부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⁴⁾ 결국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 68호로 ‘기부통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가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법인, 정당, 단체에서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정기적 각출은 1인당 1년에 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정부공식기관이 아닌 관변외곽단체적 성격을 지닌 민보단,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의용소방대의 기부금 모집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공식화, 합법화하는 한편, 어느 정도 통제만 하는 형국이었다. 각 단체별로 일정금액을 별도로 걷어들이는 것을 형식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를 통합한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으며, 동-반을 단위로 한 관변단체의 회비징수는 전쟁발발 직전까지도 계속되었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300개 동회에서 1년간 걷어들이는 금액은 8억원에 달하고 있었고,¹⁴⁵⁾ 전라북도지역에서 반강제적으로 징수된 기부금은 무려 93종에 이르고 그 금액이 약 16억원에 달했다.¹⁴⁶⁾

전국의 행정망을 ‘국민운동’의 단위로 편입시키려했던 ‘국민회’의 위치는 자의적이고 애매했다. 국민회, 일민주의 보급회의 ‘반관반민’적 특성에 대한 의심과 지적에 대해, 일민주의 보급회는 ‘일민주의는 당시가 아닌 국시’¹⁴⁷⁾라고 변명하였고, 국민회는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회비를 징수하여, 국가의 공식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 국민회 출신 간부가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에 반대하며 입후보 했을 때의 국민회는 ‘민간 임의단체’가 되었다. 이들은 심지어 ‘국민운동은 국력 강화운동으로 건국하에 있어 국토와 사상의 통일, 반공태세를 완비하는 국가지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순수한 애국운동’인데 ‘국가적 대우는 고사하고 피선거권 박탈’로 대하는 것은 음모이거나 ‘인식착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¹⁴⁸⁾

이처럼 다양한 반관(半官)조직과 당이 주도한 관제 ‘국민운동’, 행정기관이 주도한 ‘생활개선운동’이 모두 행정 명령계통을 이용해 사업내용과 실적을 할당하고, 각종 계도적 선전과 상호감시를 유도하여 규율화를 시도하면서 말단 행정체계인 ‘반’은 정치적 규율과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조직들이 비록 5·30선거를 전후로 정치세력화를 꾀

143) 『국제신문』, 1948. 11. 7.

144) 『동아일보』, 1949. 3. 5.

145) 『남선경제신문』, 1950. 5. 21., 『서울신문』, 1950. 6. 13.

146) 『연합신문』, 1949. 6. 21.

147) 『민주중보』, 1949. 12. 16.

148) 『연합신문』, 1950. 2. 10.

했던 것은 그 대대적인 조직화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들의 모호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부금을 걷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발달된 국가기관의 역할을 대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각종 회비를 공출 당하면서 자체적 상회와 각종 강연회, 좌담회에 참석하여 ‘국시’와 ‘반공도덕’을 학습해야 했다. 또한 여순사건 이후 정부의 공식 공보기관은 선전대책중앙위원회가 되어 ‘반공선전’의 중심이 되려 했고, 각종 ‘반공’ 국민운동을 주도하던 인사들이 발탁되었다.¹⁴⁹⁾ 당시 수많은 ‘관료 국민운동’, 국민운동의 ‘관제어용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한 신문의 사설에서는 이런 형태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며 저변부의 민중과 교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병폐로 지적하고 있었다.¹⁵⁰⁾ 무엇보다도 이미 쌀배급통장이나 미곡공출과 배급시 유통인구를 파악하는데 적용한 연대책임제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행정말단단위는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체계로 활용되었다.

2) 국민반과 유숙계를 통한 감시의 일상화

지하에 묻힌 적을 유숙계로 찾아내자 / 너도나도 유숙신고 살펴보자 우리반원
신고하자 유숙계 너도나도 정확히 / 너도나도 신고하자 오나가나 유숙계를¹⁵¹⁾

국민반은 곧 반공체제 하위 단위로 가정을 정치적 통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서울시 경찰국장 김태선은 ‘서울시내 각종 애국반을 통해 부동인구의 동향을 살피어 치안을 교란시키는 반역분자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애국반을 재편성, 재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재편성의 실제적인 내용은 앞으로 ‘가족 이외의 친척이라도 부동인구가 가정에 유숙할 경우 각 가정에서 유숙인물을 반장을 통해 소관 경찰관서에 보고’하는 유숙계가 도입될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물론 이 역시 ‘국민운동’을 표방하고 있었다. ¹⁵²⁾

유숙계의 내용은 단순히 유동인구를 파악하려는 것뿐이 아니었다. 즉 ‘매 10호마다 한 반을 조직하여 상호 연대책임하에 반국가적 불순사상의 침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149) 한국전쟁 발발 3개월 전인 1950년 3월에 선전대책중앙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여러 분과위원을 설치하여 ‘국민생활 개선 실천운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결의했는데, 새로 설치된 부서와 그 구성인원은 정부의 각부서의 관료나 선전담당자, 유수대학의 총장, 각 신문사 사장, 문화계 인사를 망라하고 있었다. 『자유신문』, 1950. 3. 8.

150) 『한성일보』, 1949. 9. 14.

151) 『경향신문』, 1949. 8. 25.

152) 『연합신문』, 1949. 4. 8.

것으로, 연대책임을 통한 상호감시와 밀고를 조장하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것은 ‘이미 외국에서 실시중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¹⁵³⁾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시도는 반대에 부딪혔다. 1949년 4월 29일에는 원장길·노일환·이문원·김용현 등 국회의원 93명이 ‘유숙계는 위헌이므로 철회하라’는 긴급 동의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고¹⁵⁴⁾, 국회내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김옥주·강옥중·김병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의하여 거주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법에 의하지도 않고 여사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거주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숙계는 한 개의 행정조치이지 법률은 아니니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¹⁵⁵⁾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5월 5일 유숙계 초안이 내무부에 상신되었고 1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6월 4일부로 <시령 제 6호>로 공포 실시되었다. 유숙계 실시의 이유는 ‘해방이후 서울시내에 인구이동이 심한데 각 동회 반을 재편성치 않아 현재 유명무실하며, 최근 유령인구와 부동인구의 증가로 식량정책과 세무행정상 지장이 막대하며, 치안을 교란하여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공산도배 등은 대부분 동가식서가속하는 부동인구로 치안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국장이던 김태선은 ‘유숙계의 실시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숙계는 세세한 애국반 운영세칙으로 뒷받침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유숙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동회장은 반장상회, 반장은 반상회를 매달 1회 반드시 개최해야했고,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하려했다.¹⁵⁶⁾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공안과 내에 유숙계를 설치하고 애국반을 재편성하였는데 그 수는 동회 284개소에 1,967통, 반은 1만 9,388개소였다. 1949년 7월 25일부터 서울에서 실제로 시행된 유숙계 규정은 ‘반원과 구분되는 유숙자’를 나누고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한자, 직업상 외박이 잦은자’가 미리 ‘반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규정되어있었다. 반장은 ‘반내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경찰서장은 이 규정을 부하직원, 동회, 민보단 분단장 및 반장에게 철저히 주지 시켜야 했다. 1949년 8월 말에 이르면 서울에서 8월 한달동안 유숙계 신고를 위반한 사람은 3만 6,796명이며 이중 외박이 1만 3,384명, 유숙이 2만 3,402명이었고 이들중 1,163명이 과료처분, 182명은 구류처분에

153) 『서울신문』, 1949. 4. 19.

154)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선중앙일보』 1949. 4. 29.

* 主文: 來 5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국민조직 재편성에 의한 ‘외래유숙자 신고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조치이므로 정부는 즉시 이를 철회할 것.

155) 『조선중앙일보』, 1949. 5. 5.

156) 『동아일보』, 1949. 6. 4. 『서울신문』, 1949. 4. 25.

회부되었다.¹⁵⁷⁾

<표 6> 1949년 서울시에서 시행된 유숙계의 운영현황

시 기	취체수와 신고현황
1949. 7. 25 -31	총 483건 취체, 신고는 외박 5,901, 유숙 8,533명
- 8. 14	총 870건 취체, 외박 8,858명 유숙 포함 2만 7,745명
- 8. 31	총 3만 6,796명, 외박 1만 3,384 유숙 2만 3,402

서울시에서의 실시에 힘입어 경찰력을 이용한 유숙계는 전국적인 실시를 계획하였다. 김효석 내무부장관은 앞서 ‘국민회를 모체로 국민조직을 강화’하라고 발표하던 1949년 8월 24일의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유숙계는)대통령 각하의 유시(諭示)로서 목하 서울 시에서는 그 실시를 보고 있어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각 지방장관들은 유숙계의 전국 확대실시를 위해 ‘미리 제반 준비를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1949년 7월 25일부터는 도시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기간을 설정한 유숙계를 실시했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1949년 9월 5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유숙계가 실시되었으며, 1949년 11월 12일부로 부산시에서도 유숙계가 실시되었다.¹⁵⁸⁾

3) 인구조사와 신분증의 물신화

극단적인 권력의 양극화로 인해 한편으로는 그 권력의 상징물이 물신화되었고,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곧 권력박탈과 죽음의 낙인이 되기도 했다. 이미 여수, 순천지역에서 태극기를 ‘제대로’ 게양하지 않으면 총살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국기가 극단적으로 물신화되었던 것이 전 사회영역에 파급되고 있었던 셈인데, 개개인이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의 경우 당장의 필요 때문에 강력하게 일상생활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것은 처음엔 쌀배급과 배급통장등으로 다가왔고, 군기관의 신분증이 엄청나게 권력화되면서 신분증이 계급화된 위계구조를 갖추고 전 국민에게 발급되어갔다.

국민 개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필요는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정보수집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가는 동시에 다양한 (신분)증명서가 등장했다. ‘정보’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며 일상생활에서 국가기구와 국가요원들의 ‘업무수행’에

157) 『경향신문』, 1949. 7. 21. 『동아일보』, 1949. 7. 25. 『서울신문』, 1949. 8. 31.

158) 『자유신문』, 1949. 8. 26. 『경향신문』, 1949. 8. 23. 『영남일보』, 1949. 9. 8. 『자유민보』, 1949. 11. 13.

필요한 것이어야 했다. 즉, 도처에 검문소가 운용되고 이동을 통제해야 할수록 국민은 표식을 소지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주민관리체계는 식민지시기의 관리체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¹⁵⁹⁾ 특히 식민지기 관리체계는 점령지에서의 이민족에 대한 지배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노동, 전쟁동원 보다는 배제와 통제의 수단이 더욱 비대하게 발달했었다.

미군정기부터 ‘예방주사 증명서’나 본국으로 송환시킬 일본인들에 대한 ‘신분증명서’, 통행금지 조치에 따른 ‘야간통행증’과 ‘외출허가증’ 등이 발행되는 등 국가 공식기록과 행정적 통제 수단으로 신분증이 발행되고 있었고, 이는 일련의 금지 조치와 무관한 특권을 갖게되는지, 모든 통제와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증명서가 되었기에 일종 위조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효력을 없애고 회수하는 일도 생겼다.¹⁶⁰⁾ 월남 이주민들에게는 이주민증이 발행되기도 했다.¹⁶¹⁾

식량의 배급과 공출문제로 신분증이 발행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배급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유령인구’를 색출해내려 했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세밀한 사찰을 하기 위해 ‘공민증(公民證)’¹⁶²⁾을 발행하려 했다.¹⁶³⁾ 실제로는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등록표’나 ‘거주민 등록제’, ‘개인별 통장제’가 실시되었다. ¹⁶⁴⁾이 이루어졌다.¹⁶⁵⁾ 1947년 3월경 서울시에서 발행하려던 ‘(인구)등록표’는 수집된 등록표가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샀다.¹⁶⁶⁾

159) 대만, 조선, 만주국에서 실시된 제국의 신민관리 시스템은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었다. ‘비민분리’(匪民分離)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노동력으로 동원하며 다른 한편으로 ‘비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등록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나 점령지라는 ‘주변’을 향할수록 동원보다는 배제나 통제의 측면이 강해졌다. 이타가키 류타, ‘제국의 신민관리 시스템’, 『당대비평』 2002, 175-176쪽.

160) 『조선일보』, 1946. 6. 19. 『경향신문』, 1946. 6. 17. 『매일신보』, 1945. 9. 8. 『서울신문』, 1946. 9. 6.

161) 『서울신문』, 1947. 5. 6.

162) 북한은 전쟁발발 이전부터 ‘공민증’을 발행하고 있었다. 월남하던 반공주의 인사들은 이 ‘공민증’이 없어 운송, 교통수단에서의 검문 검색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1946년 9월, 북한거리와 기차역에는 ‘1. 공민증 없는 자는 공민권 없다. 1. 공민권 없는 자는 여행할 수 없다. 1. 공민증 없는 자는 반역자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사(1982), ‘개마고원의 3대’, 『논픽션 시리즈 6』, 219) 북한의 공민증 발행은 탈식민사회에서 제 1의 의제였던 토지개혁(1946년 3월),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7월)에 이어 1946년 9월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류길재, 1998 : 87)

163)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7. 2. 13.

164) 1948년 2월 21일 공포된 법령 168호 ‘식량 급 물자배급제도 위반 행위의 처벌’에 의해 서울시는 ‘유령인구 적발’을 하려 했고, 그 시행방법 세칙을 정했다. 이에 의하면 조사는 시를 주체로 시에서 1,000명 중앙식량행정처 30명 수도관구경찰청 50명 생필품관리원에서 500명을 전부 1,000조로 편성하고 조사원 감찰대가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통장기재 사항과 실제인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8. 3. 9.

165) 김영미, 2000 : 74

166) 『경향신문』, 1947. 2. 20.; 『서울신문』, 『동아일보』 1947. 3. 20.

신분증이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띄고 급속히 물신화 되어가는 계기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이었다. 당시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은 ‘제주소요 진압방법’ 혹은 ‘폭도측에 가담한 동족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민증’ 발급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포로와 귀순자들은 비행장에 집결시켜놓고 폭도와 양민을 엄격히 구별하고 폭도는 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도록 될 것이나 일단 **군에서 조사한 결과 완전히 양민이라고 인정되며 증명서를 교부 받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기로 되었다.(강조는 인용자)¹⁶⁷⁾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서 9연대장 송요찬이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포고위반은 총살을 시키던 상황에서 양민증과 반대되는 권력의 증명은 군·관 신분증과 ‘군 발행 특별 통행증’이었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와, 감시 받고 ‘순수한 양민이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증을 소지했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압에 나선 군대는 계엄을 선포한 순천 일대에서 ‘군용 이외의 교통전신망은 전부 차단’하고 ‘ 시내 요소 요소에는 바리케이트가 증축’하는 동시에, 반란과 진압을 피해있다가 주거지로 돌아오고 있던 ‘피난민 귀환자’들에게 양민증을 발행하기 위해 민사처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반란군’이 ‘인민증’을 발행하고 인민증을 가진이에게 쌀을 배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상황에 대한 군사작전상의 대응이기도 했다. 전라남도 목포의 경우,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선박운항의 운항증, 여행증, 여행증명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양민증이 활용하겠다는 공고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계엄지구에서 양민증이 광범위하게 발급,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¹⁶⁸⁾ 1949년 1월 27일 국회에서 조국현 의원은 정부의 여순사건에 대한 민심수습 정책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조국현은 군경이 점령한 지역에서 민가의 닭과 돼지, 식량을 ‘무전취식’하고 주민들을 무조건 구타할 뿐만 아니라 전 부락을 방화하고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동시에 계엄령이라는 구실로 실시하는 여행증명과 신원증명 발행이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가혹하고 폭력적인 대책에 있다고 비판 했다.¹⁶⁹⁾

167)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8. 6. 4.

168) 『한성일보』, 1948. 10. 20. 『세계일보』, 1948. 10. 24. 『동아일보』, 1948. 11. 14. 『서울신문』, 1949. 2. 11.

169) 제2회 『국회속기록』 제15호, 274~275쪽

이처럼 신분증은 특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당장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신원조사와 지문채취, 신분증의 활용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은 관공서, 그 중에서도 특히 군부였다. 이는 무엇보다 숙군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948년 9월 30여명의 장교들에게 특무교육을 시키던 와중에 국방경비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기획되었는데, 1948년 8월 1일 이후 지문채취작업이 경찰의 협조하에 빠르게 진행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9월 초순까지 대략 절반정도의 국방경비대원 지문채취가 완료되었고, G-2의 신원조사, 지문채취, 신체검사 등은 이후의 모병원칙이 되었다.¹⁷⁰⁾ 각종 신분증이 군사적 목적으로 빈번하게 발행되고 특권적인 신분증 소유층이 생기자 특히 정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육본 정보국에서는 기존의 신분증을 전부 회수하고 재발행하는 조치를 취했고,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총 2만 2,119건에 달하는 통행증 발행건수와 빈번한 위조사례를 감당하지 못하고, 통행증 갱신 조치를 취했다.¹⁷¹⁾

군·정보원·공무원의 신분증 - 청년단체, 학도호국단(의용군)신분증 - 여행허가증¹⁷²⁾ - 거주증 - 양민증의 위계에 이어 ‘자수증’이 교부되었는데, 이는 1949년 6월 전후의 대대적인 전향유도기에 등장한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에서는 ‘보도연맹원증’을 발부했고¹⁷³⁾, 숙군을 담당한 사단 정보처, 각 헌병대, 방첩대, 22연대 정보과 및 각 경찰서, 철도 경찰 등으로 접수되는 자수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진을 첨부한 ‘자수증’을 교부하려 했다.¹⁷⁴⁾

여수·순천, 전라남도 등 계엄지구에서 대민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 신분증의 확산이 1949년 9월경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지역에서는 ‘발악적인 공산도배들의 소위 9월 공세설과 아울러 긴박한 국내 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증’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는 ‘양민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순분자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170) 노영기, 1998 : 32

171) 『자유신문』, 1949. 7. 10. 『동아일보』, 1949. 9. 21. 『경향신문』, 1949. 11. 21. 『한성일보』, 1949. 12. 12.

172) 당시 군인, 공무원의 신분증은 사진과 지문, 본적, 성명, 소속이 적혀있고 각종 날인이 찍혀있는 형태였고, 전쟁 당시 미군이 발행한 유격대원신분증, 도강증을 제외하고는 학도의용군신분증, 대한청년단 신분증 등도 사진을 부착하고 본적, 주소, 성명, 소속 등이 적혀있는 형식은 유사하다. 여행증명서나 제 2국민병 등록보류증명서 등은 사진 없이 직접 기재한 형태였다. (유격대원 신분증과 도강증은 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1992), 『학도유격부대전사』, 장교신분증과 대한청년단 신분증, 제2국민병등록보류증, 여행허가증 등은 신현정(1987), 『가평반공투쟁사』, 학도의용군증은 중앙일보사편(1983) 『민족의증언 2권』에서 각각 확인가능하다.)

173) MBC(2001) 중 선우종원의 증언.

174) 『영남일보』 1949. 6. 15.

한 것으로 전라남도내 각 시장, 군수, 경찰서장의 합동회의에서 결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15세 이상 55세까지의 남녀에게 교부할 계획이었다.¹⁷⁵⁾ 9월 28일 대통령과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각도의 의원들의 발언 요지만 공개되었다. 주로 치안상황과 ‘군·경·민 일체’, ‘오대산 봉쇄’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이 자리에서 충북의 조종승은 ‘공민증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¹⁷⁶⁾

이후 본격적으로 신분증을 대다수의 주민에게 발행하려던 것은 경상북도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49년 10월에는 경상북도에서 ‘도민증’이 발행되었는데, ‘민정을 조정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장과 국민회 군지부장의 명의로 발행된 도민증은 14세미만 및 60세 이상자나 군인, 경찰, 관공리에게도 발행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반국가 사상을 포지(抱持)하고 대한민국정부 시책을 방해하는자’, ‘치안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자’에게도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⁷⁷⁾ 1950년 1월에 경상남도의 합천군에서 면장회의의 안건으로 ‘병사사무처리, 기부금 통제법 실시, 국민운동 강화’이외에도 ‘도민증 발행의 건’이 여전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발발 이전에는 전지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신분증을 발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⁸⁾

전쟁발발 이후 서울과 수원지역에서는 ‘시민증’이 발행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하다는 선무방송을 하면서 대전으로, 부산으로 도망치기 바빴던 수뇌부들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도강파’로 특권계급화 되었고, 오히려 남아있던 주민들은 ‘잔류파’로 부역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시기에는 부역자 처벌¹⁷⁹⁾과 함께 신분증의 물신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9·28 수복후 서울에서는 ‘보통 사람도 양민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인 시민증 발급이 생겨났던 것인데, 시민증 발급은 제주와 여수·순천에서 계엄군이 그러했듯이 ‘양민과 잠복해있는 적색분자를 구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시민증 발급은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반장이 시민증 발급 신청서류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면서 특정한 집은 빼놓기도 했다. 더군다나 당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가기 위해서는 ‘간첩색출’을 목표로 검문이 심했고, 후퇴이전에 발급한 시민증이 없으면 검문을 통과하기 어려웠다. 또한 시민증 발급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다. 1950년 11-12월 중에는 시민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일제 검색이 실시되기도 했고, 화교에게도 시민증을 부과하는 문

175) 『한성일보』, 1949. 9. 5.

176) 『동아일보』, 1949. 9. 29.

177) 『영남일보』, 1949. 10. 1.

178) 『남선경제신문』, 1950. 1. 11.

179) 부역자 처벌에 대해서는 박원순(1990), 김동춘(2000), 서중석(2000) 참조.

제가 행정적 문제로 등장했으며 시민증을 위조하던 사람을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¹⁸⁰⁾ ‘1·4후퇴’기인 1951년에 들어서는 각 구청에서 시민증 발급사무를 취급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다가 감시와 심사를 위해 시민증 갱신을 실시하기도 했고¹⁸¹⁾, 1952년에 시민증 사무는 구청에서 경찰서로 이관되었다.¹⁸²⁾

1951년 3월 15일 재수복된 서울에서는 ‘적성(敵性)’ 주민을 가려내기 위해 돌아오는 피난민을 대상으로 미군 민사처에서 발행하는 ‘도강증’을 확인했다. 도강증은 시민증 발급을 보장하는 단서였으며 시민증은 다시 대한민국의 충성스런 국민임을 증명하는 무기였다. 서울 잔주민의 경우 도강증을 받을 기회가 있을 리 없었다.(전상인, 2002 : 218)¹⁸³⁾ 1950년대 초반에는 도민증을 담보로 점유하는 일 등 ‘유가증권’화 된 도민증은 크고 작은 문제를 낳았다. 전후인 1950년대 후반에는 ‘간첩 색출’을 빙자한 잦은 일제 검사 - 1959년 8월은 한달간 -와 갱신에 대한 반발로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¹⁸⁴⁾

신분증은 국가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충성도’는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합법화된 폭력을 독점한 그들의 권력행사를 보증해주는 물신이었다. 특히 국내평정기에 빈번하게 공포된 계엄령을 통해 특정 지역을 격리시켜 국내 영토를 분할했고, 격리된 공간 내부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저항과 반항의 경험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아가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으면 즉결 총살시키는 계엄군에게 ‘최대한의 식별가능성을 제공’하는 서약을 했다는 증명서가 교부되었다. 물론 이것은 이미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에서 성문화된 억압의 장이 일상의 도처로 침윤해 들어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당장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혹은 살기 위해서 신분증만큼은 당장 필요했다. 공민, 시민, 도민, 양민 등의 개념어가 간첩색출과 피아구별 등 군사작전의 편의를 위한 신분증의 이름으로 등장했다는 것에서, 그것은 어떤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권력기술과 그 기술의 대상으로 범주화·대상화된 주체들로 구성된 ‘반공국민’의 하위범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80) 『조선일보』, 1950. 11. 23., 12. 2., 12. 11.

181) 『조선일보』 1951. 7. 23., 『조선일보』 1951. 9. 23.

182) 『조선일보』 1952. 2. 2.

183) 1953년 6월 15일에 발행된 한강 도강증은 미군이 발행하였고, 한강검문소의 헌병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과 이름, 생년월일과 신장, 몸무게이외에 어느 군부대에 소속되어있는지를 명시하게 되어있었다.(웅진학도유격부대전우회, 1992))

184) 『조선일보』 1956. 6. 24.

〈표 7〉 정부수립 이후 발행된 신분증 현황

발행시기	신분증 종류	발행 주체와 관련 정책
1946년 5월	야간통행증, 외출허가증	미군정의 통행금지
6월	한국거주 일본인의 신분증명서	미군정의 본국송환/불법거주자
6월	예방주사 증명서	미군정의 통행금지 대상
1947년 2월	공민증(公民證) *발행계획	서울시 식량배급과 공출제
3월	(인구)등록표, 개인별통장	서울시 식량배급 거주민 등록제
5월	이주민증	군정 외무처의 대규모 월남대비
1948년 6월	양민증	통위부 참모총장 제주도 진압
9월	국방경비대 신분증	군 숙군과 모병. 지문채취와 신원조사
10월	특별 통행증	9연대장 송요찬, 통행금지 통과
10월	양민증, 여행증, 신원증	계엄 민사처, 여순사건 진압
11월	인민증	반란군, 쌀 배급
1949년 2월	양민증	전남 계엄사령부 운항증, 여행증을 통합
6월	보도연맹원증	국민보도연맹
6월	자수증	국군 사단 정보처, 헌병대, 경찰서
7월	거주증, 여행허가증, 공무원신분증, 출장증명, 운행 허가증	경찰서장, 통행제한
9월	정보기관 신분증	육본 정보국, 정보원 특권
9월	국민증/공민증	전라남도, 9월 공세 대비
10월	도민증	경상북도, 반국가사상자 발행금지
11월	통행증(2만여건)	서울시 경찰국, 위조로 인한 갇힘
1950년 9월	시민증	서울시, 부역자 색출
1951년 3월	도강증	미군 민사처가 피난민에게 발행

정부는 행정체제와 관변조직을 ‘국민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감시하고 규율하려 했다. ‘국민반’이라는 행정말단기구를 통해서는 일률적이고 위계적인 명령계통으로의 위계적 통합을 시도했고, 심지어 일개 정치조직이 국가를 대리하면서 운영비와 보고를 의무시켰다. 결국에는 경찰이 ‘유숙계’를 공포하여 지역적 공동체의식이나 가족주의, 기타 인간적 유대관계를 모두 상호감시와 의심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조치까지 취해졌다. 국민들 스스로 신고하고 감시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처

벌하려 했다. 또한 여순사건 이후의 군사작전에서 ‘피/아 식별’을 위해 급속히 배포된 양민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의 세세한 심사와, 지역단 위에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반장’에게 검증되어야 하는 생존을 위한 도구로 다가왔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적과 우리’, 그리고 부역자를 가르고 감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사람의 목숨과 존재를 구속하고 소외시키는 물신이 되었다.

4. 맺음말 : 예외를 규정하는 권력과 타자

그들은 언제나 너무 많다. ‘그들’이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낫게는 아예 없어야 좋을 사람들이다. 반면 ‘우리’가 충분한 적은 결코 없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들이다.¹⁸⁵⁾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예외상태를 창출해내는 정치권력은 ‘우리’의 권력 독점과 ‘그들’의 권력 박탈을 위해 두 가지 예외를 적용했다. 여순사건 이후 국민형성 과정에서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적인 이유로 죽여도 면책권을 갖는 권력의 길이, 다른 한쪽으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해도 그것에 어떠한 정치·사회·사법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추방의 길이 생겨났다. 법질서를 초월한 예외적 권력과 법질서에서 예외로 추방된 권력박탈이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이후 정권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를 완전히 진압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집권정당의 권력으로, 대통령의 권력으로 수렴되었고, 그에 대한 모든 비판은 반국가행위로 제거되었고 적극적인 동조하고 상대를 절멸하려는 그 ‘전쟁 아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윤리적 배신으로 처벌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외상태로 회귀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려 하는, 모든 법질서를 무시한 예외적 조치를 정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정치권력의 고유한 속성을 읽을 수 있다.

모두를 진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특권을 독점하려는 기도와 철저한 권력의 위계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권력을 끊임없이 양극화 시켰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할 수 있고, 모든 정보에 접근가능한 소통권력을 가진자와 그의 모든 말은 거짓이고, 음모고, 발설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규정되고 정해진 답만을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존재가 생겨났다. 언론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신문사의 자유로, 신문사의 자유

185)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2008, 71쪽.

가 좌파언론이 아닌 신문사들의 자유로, 보수 언론의 자유가 친정부 언론의 자유, 친정부 언론의 자유가 전쟁선전기관의 자유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보이는 권력독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민간도 아닌 국민회가 정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불법화시키고 금지시키는 사회정책을 수행한 것에서 적용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주민을 동원했고, 국민반에 소속된 주민들은 법도 아닌 국민회의 명령의 형태로 강제되는 ‘내전’에의 참여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공도덕’의 배신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 누군가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신분증을 부여하며 갇힐 수 있는자와 신분증을 갖지 않은 죄로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국가건설과 국가운영은 권력의 독점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순사건 이후 언론탄압과 주민통제의 역사를 접하면서 고민해야할 것은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부인하고 편향적 해석으로 은폐시키고, 그 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 신화를 덧씌워 기념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적나라한 폭력의 사실들과 영원히 완전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외상적 진실들을 온전히 대면하며 어떻게 이 예외적 구조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제국 ‘본토’의 법과 질서와 제도가 적용되지도, 권리가 주어지지도 않는 이중적인 예외상태에 처한 상태로 제국에 포섭되어 있었다. 해방된 한반도는 정치체제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군정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 국내의 법률이 아닌 적 점령지를 점령할 때 적용하는 군사적 규율들이 적용된 상태로 냉전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분단정부는 냉전의 양측으로 편입되면서 같은 민족의 다른 체제의 존재 자체를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의 ‘예외적 상황’에 근거하고 적용된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적용하여 체제를 선택한 ‘우리’에게는 법과 권력과 권리를 주었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모든 정치·사회·법적 권한을 박탈했고, 때론 절멸시켰다. 권력의 진정한 민주화와 대안적 권력이란 바로 이렇게 중층적으로 누적되어있는 역사적 예외상태의 폭력적 구조를 극복하고 대안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자 지향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예외상태가 누적되어 있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 지구적 수준의 진정한 예외상태의 도래를 미리 예감하고 그것의 폭력성을 예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과거는 도처에 고통과 예외가 편재하고 오랜 시간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곳이었고, 폭력을 예감하지 못했던 혹은 예감하고도 무기력하게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그리고 ‘그들’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는 수준의 저항만으로 타협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남아있다. 폭력을 예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소수만 흥분해 싸우고 있을 뿐, 세상은 그저 고요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윤리적 무감각은 재앙을 반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제4장 60년의 한, 기억은 진실로 아픔은 상생으로

여순사건 60주기 문학예술제

2008. 10. 25

기억투쟁의 문학 / 현기영

기억과 부재, 그리고 역사(歷史)와 수사(秀史)

- 역사의 현재화와 문학적 개별성을 중심으로 / 임동환

기억투쟁의 문학

현 기 영 (소설가)

우리가 발음하기에 익숙한 것은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처럼 ‘전쟁과 평화’이지 ‘평화와 전쟁’이 아니듯이, 언제나 평화보다 전쟁이 우선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평화는 그 사이에 잠깐씩 끼어 있는, 말하자면 전쟁의 임시적인 소강상태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갈수록 대량살상의 전쟁이 확대되는 걸 보면, 문명의 진보에 반비례해서 인간성은 더욱 더 퇴보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프로이트는 세계대전을 보고 새디즘과 폭력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인간 종자가 워낙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인데, 그러나 정작 문제인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항상 평화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고, 또는 세계대전을 전쟁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했다. 일본은 아시아 공영권의 평화를 위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고 했고, 미국은 이라크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이라크 전을 수행한다고 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부분 핵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고 발언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북한을 향한 위협용 수사만은 아니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말은 쉽게 하지만, 부분 핵전쟁은 남북한의 무고한 민간인 수십만이 파괴됨을 뜻하지 않은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6.25전쟁 와중에 그리고 그 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수가 8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수의 원혼들이 아직도 진혼이 안 된 채 허공중에 떠돌고 있는 상태로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쟁 이후, 역대 독재정권들이 대물림하며 그것을 은폐하여 왔기 때문이다. 집단 기억의 말살을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 그들이 저지른 제노사이드의 범죄들은 철저한 금기의 영역이어서, 거기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희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용공분자로 낙인찍힌 채,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었다.

그들은 그 사건들을 공식 역사에서 지워 버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민중의 기억도 말살하려고 했다. 이른바 ‘망각의 정치’였다. 피해 당사자들의 맺힌 한을 해원(解冤)해 주기는커녕 입도 병긋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민중의 기억이 철저히 부정되고, 그 기억에 대한 사소한 언급도 용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중은 스스로 그 기억을 지워내는 기억의 자살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근 과테말라는 군사 정권이 자

행한 학살·고문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한창인데, 그것을 ‘역사적 기억의 회복’(Recovery of Historical Memory)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 스페인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도 ‘역사적 기억’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그러한 사건들을 소재로 소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왜곡된 공식 기억을 부인하고, 민중의 망가진 집단 기억을 복원해 내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나의 4·3 관련 소설들도 대단히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졌다. 말을 낮추고 더듬으며 혹은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던 증언자들의 달랠 길 없는 쓰라린 원한과 분노, 그리고 그 두려움, 나는 그것들이 고스란히 내 작품에 반영되어 지기를 원했다. 그 증언들에게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피와 땀을 부여하려는 작품 형상화의 과정에서 나는 증언자들이 겪은 고난이 마치 나 자신이 겪은 듯한 기이한 일체감, 동일시 현상을 느꼈다. 한밤중 혼자 책상에 앉아 글을 쓰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무당의 신들림과 흡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 작품은 무당의 해원굿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그 때 나는 문학이야말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최소 3만 명이 학살당하고 130여 개 마을이 소각된, 4·3사건의 그 엄청난 진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까지 30년간 금기의 영역에 매장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내 소설들은 그것의 극히 일부만 묘사했을 뿐인데도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는, 너무 끔찍하다고, 공권력이 설마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고, 믿을 수 없다고, 저자인 나를 불온한 의도를 가진 자로 의심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극우반공주의자들은 그 참혹한 제노사이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섬주민이 그렇게 당할만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도리어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그러나 그 수만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죽어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갔다. 미국을 모르고, 미국의 세계전략도 모르고, 오직 전통적인 민란만 알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가공할 4·3은 도무지 이해불능이었다. 몇 명의 주동자만 희생되는 것이 민란인데, 왜 4·3사건에서는 민중 자체가 몰살당해야 했던가!

4·3사건은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족이 동족을 학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사건에서, 미국은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가?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미군복, 미군화에 미제 총을 쏜 조선 토종 병사들만 보이고 미군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 전쟁 속

의 인간은 본능적, 충동적이기 마련인데, 말단 소총수에게까지 살인 면허를 줌으로써 인간의 야수성을 극대화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보이지 않은 그들은 군사고문단이란 이름을 갖추고서 그 섬을 해상 봉쇄한 군함들 속에, 병력 수송의 LST 속에 제주읍의 CIC 사무실 속에 있었다. 점령국이 식민지 민중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책략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용병술, 가능한 제 손에 피를 덜 묻히고 동족으로 하여금 동족을 치게 하는 것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나의 단편소설 <쇠와 살>중의 한 대목이다.

이것은 누구의 범죄인가. 기관총인가, 기관총 사수인가, 사격 명령을 내린 장교인가, 무선 전화로 처단명령을 내린 대대장인가, 그 위의 연대장인가, 그 옆의 그림자같이 붙어있는 미군사고문관인가, 그 위, 또 그 위, 마침내 삼각형의 꼭지점은 누구인가? 트루먼(Truman)은 정말 진인(眞人 true man)이었나?

변변한 무기도 없이 억제할 수 없는 분노만 가지고 봉기한 2백여 명의 젊은이들을 죽이기 위해 그런 식으로 무고한 양민 최소 3만 명을 용공으로 몰아 소탕한 것이 바로 4.3사건의 골자인 것이다. 나는 4.3에 대한 최초의 글에서 ‘미친 시대의 광기’라는 표현을 쓰는 실수를 저지른 바가 있지만, 그것은 광기의 발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한 이성적 행위였다. 그 당시에 백살일비(百殺一匪)라는 말이 있었는데, 양민 백을 죽이면 그 중에 게릴라 한 명쯤은 끼어있게 마련이라는 것. 그래서 게릴라 2백 명을 죽이려면 양민 3만을 소탕해야 한다는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제주도의 8할을 붉은색으로 칠하여, ‘붉은 섬’ 혹은 'RED ISLAND'라고 명명했다. 당시에 그 붉은색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4·3의 수많은 양민들이 붉은색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 그 대량학살을 ‘레드 헌트’(RED HUNT)라고 불렀다. 내가 군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할 때도 ‘빨갱이 작가’라고 불렸다. 고문으로 용공 조작하려고 했던 그들이 내게서 발견한 붉은색이라곤 고문에 짓이겨진 중지 손가락에 엉긴 끈끈한 피 뿐이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6.25전쟁 와중에 그리고 그 전쟁 전후에 수많은 양민들이 그렇게 붉은색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무자비한 만행을 할 수 있었던가. 전쟁의 잔혹상을 목도한 프로이트는 인간에겐 사디스틱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말단 병사들과 순경들에게 그 사디즘을 자극하고 충동질 한 것

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수뇌부와 그 배후의 미국이었다.

오래고 지난한 싸움이었던 민주화운동은 다행스럽게도 90년대에 접어들어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던 4·3진상규명운동도 그 열매를 딸 수 있었으니,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불가능을 꿈꾸었던 제주도민에게 그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은 현재로선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피해자(양민)의 억눌렸던 기억의 담론화는 지금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체제의 공식 기억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3사건은 진상규명운동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그래도 형편이 나아 어느 정도 사회적 쟁점화에 성공한 편이라면, 여수·순천 등 다른 지역들은 이제 겨우 출발 단계에 놓여있다. 한반도 도처에 규모는 다르지만 4·3과 비슷한 성격의 대량학살 사건들이 진상이 숨겨진 채 산재해 있다. 오늘의 한국인 대다수는 유태 수난의 대명사인 ‘아우슈비츠’라는 고유명사는 알더라도 제 나라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은 까맣게 모르는 역설의 역사를 살아오고 있다. 해마다 수십 편씩 미학적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 영상 작품들을 창작해 냄으로써, 자신의 민중수난사를 세계화하고 있는 그 민족에 건주어 생각할 때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반세기 동안 숨겨져 온 그 사건들이, 그 속에서 희생된 수십만 원혼들이 아직도 어둠에 갇힌 채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 애원의 손을 흔들고 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세상이 영판 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역사적 비전을 한 단계 높인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실종되어 버리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달라졌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은 시대착오라고 폐기하고 오직 경쾌한 것만을 좇으면서 모든 것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 버린다. 오직 엔터테인먼트만이 능사다. 90년대부터 문화예술계와 학계에 새로운 풍조로 자리잡은 ‘모더니티’는 현재 이전의 것은 모두 훌가분하게 털어 버리려는 경쾌성에 사로잡혀 있다. 공동체의 과거인 역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는 생의 밝은 면을 향하는 것이 생명의 본능인데, 누가 그러한 때죽검의 세계를 좋아하겠는가. 4.3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 지긋지긋한 참사를 떠올리기가 싫어 자꾸만 잊으려 하지 않았는가.

생각컨대, 전쟁과 민중수난의 슬픔은 순수 문학에 나타나는 감미롭기조차 한 애잔한 슬픔이 아니라, 비참한 때죽검과 피·비명·울음소리와 무서운 고통의 슬픔이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쓴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아도르노의 절망적인 탄

식이 나왔다. 문학은 환상·로맨스·픽션 같은 걸 좋아하는 대신, 치열한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삼기를 꺼려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왔다. 독자는 본능적으로, 평이하고 심적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글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슬픔을 다루더라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예컨대 멜랑콜리한 슬픔만을 다룬다. 그래서 비참한 때죽검과 피·비명·울음소리와 무서운 고통은 문학 속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제노사이드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익숙한 도식을 거부하고 일상의 논리는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불편스러워 한다. 문학에서 슬픔과 불행을 다루더라도, 전반적으로 행복한 분위기 속에 포용되었을 때만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작가로서 공동체의 참혹한 경험들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작가, 지식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숨겨진 슬픈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던, 혹은 포스트모던한 상상력도 좋지만, 그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와 민중 수난의 기억을 폐기처분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쓰여 있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 한 가지, 인류가 그것을 잊는 것이다.” 불행한 과거를 망각하는 자는 개인이든 사회이든 간에 그 과거를 다시 반복할 운명이 된다는 말이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유대인의 슬로건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기억의 작업이 요구된다. 반나치 유대 수난의 내러티브가 영화와 소설의 형식으로 해마다 여러 편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잊지 않기 위한 재기억의 작업이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역대 정권에 의해, 극우파에 의해 부정당하고, 왜곡되어진 그 역사적 기억을 바로 잡는 일, 인정받지 못하고 최악의 누명을 쓴 채 버려진 수많은 죽음들, 그 억울한 죽음들과 상처들을 망각과 무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진혼하는 일, 무의미한 그 죽음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그리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고문과 옥살이로 육체와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위무하는 일, 다시 말해서 민중 수난의 말살된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기억(rememory)시키는 일을 살아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살아있는 자들(미체험 세대를 포함하여)은 아무리 괴롭고 불편하더라도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거늘, 수십만 조상의 통한의 죽음을 어찌 공동체가 무심할 수 있겠는가. 원혼은 섬기면 보살펴 주고, 푸대접하면 해코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작가는 그 진혼굿을 주재하는 무당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권세력은 지난 20여년 간의 민주화 과정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면서, 다시 한 번 민중의 역사적 기억을 말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순사건은 이미 청산된 60년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적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기억과 부재, 그리고 역사(歷史)와 수사(秀史) - 역사의 현재화와 문학적 개별성을 중심으로 -

임동환 시인

1.서론: 역사적 기억과 시적 기억

일반적으로 기억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생의 순간 강렬했던 인상을 되풀이해서 체험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그 기억을 먹고 산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기억은 과거의 일을 끝이끝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특히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기억하고 싶거나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생의 트라우마만을 선별적으로 기억한다. 대체로 시간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지금에도 여전히 보존하고 싶거나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사건 또는 사물에 대한 인상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기억들은 자신의 소망에 따라 재구성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억조차 부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데리다의 지적대로 현전하는 것의 의미는 부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결정한다. 기억하는 자로서 작가의 역할은, 따라서 어떤 사실을 끝이끝대로 재현하거나 제시하는데 있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과거’로서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는 작업은, 지금 여기에 부재하는 목소리를 복원하고 드러내는 작업일 수 있다. 현재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기억 속에 억압되고 묻혀온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현재적 의미가 달라진다. 예컨대 ‘여수’를 두고 쓴 한 편의 시를 보자.

늦겨울 어둑어둑 무렵
Hits 집 ‘삼학’ 가파른 층계 이층에 올라가 창가에 앉아
술상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모진 외로움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초저녁인데도 불빛은 새 항구로 가고 없고
깃발 흔들던 바람도 가고 없고
불을 채 못 끈 배 한 척이 부두 한편에 매달려 있었다.
사내아이 하나가 서툰 자전거를 몰고

가로등 불빛 속으로 들어와 핸들에서 두 손을 떼고
 아슬아슬 축대 가장자리를 스쳐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혼자술로는 더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없는 형상!
 이 밤은 별나게 깊어갈 것이다.

- 황동규, 「여수 구항(舊港)에서」 186)전문

위 시 속에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여순사건’을 읽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어디에도 한국 현대사의 한 구석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역사적 공간으로서 ‘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수라는 동음이의어를 통한 한 시인의 주관적인 ‘여수(旅愁)’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혼자술”을 마시는 한 여행객의 “어떤 모진 외로움” 또는 개인적인 쓸쓸함만 전해온다. 여행자로서 “어둑”한 “늦겨울” “가파른 층계”의 “이층” “창가에 앉아/술상”을 “기다리며” 느낀 객수(客愁)가 전경화 되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여수’는 별다른 역사적 변별성을 갖지 못한 수많은 항구 도시의 하나로 다가온다.¹⁸⁷⁾

이와 달리, 동학혁명이나 광주항쟁, ‘여순사건’ 또는 ‘제주 4·3 사건’ 등이 역사상 ‘반란’과 ‘사태’에서 ‘사건’ 또는 ‘혁명’으로 승격(?)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누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반란’이 되기도 하고 ‘항쟁’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지나 해석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어디까지나 올바른 의미의 기억은 기억주체의 관심사와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한다. 누가 어느 입장이나 가치관을 가졌는가에 따라 특정한 역사의 가치와 성격이 달라진다.¹⁸⁸⁾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역사적인 기억이 특정 시점에 한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는 정치 사회적 조건과 지배적인 가치, 신념과 이념에 관계되어 있다면, 특히 시적 기억의

186) 황동규, 『꽃의 고요』, 문학과 지성사, 2006.

187) 여지껏 순천지역을 포함한 ‘여순사건’이 문학(사)적으로 큰 비중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순 반란’이나 ‘여순 사태’라는 명명(命名) 속에 가려지고 진실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나기 어렵다.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순사건’과 관련성이 미미하거나 지극히 사인화(私人化)되어 있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억의 역사 대상으로서 ‘여수’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여수’를 대상으로 한 김명인의 시 「여수」와 민병일의 시 「여수로 가는 막차」 등과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과 한강의 소설 「여수의 사랑」 등엔 ‘여순’ 지역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 대신 감상적이고 회귀적인 정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차차 밝혀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88) 예컨대 한국현대사 차원에서 ‘여순사건’은 ‘사태’가 아닌 ‘사건’이라는 중립적인 용어가 보여주듯이 지난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부정적 지식과 이미지가 많이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의 이러한 중립적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그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여순사건’ 하면 좌익세력의 폭력과 비인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그 주체 세력은 짐승이나 악마의 수준으로 격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우 주로 사적이며 익명적인 주변자 또는 소수자로서 겪는 아픔과 슬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위대한 <대문자 기억>이라기보다, 그것들에 의해 사소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이내 잊어지고 마는 소문자적 기억이 시적 기억에 가깝다.¹⁸⁹⁾ 역사적 기억이 다수자적이고 물적인 집합의 역사에 가깝다면, 시적 기억은 소수자적이고 분자적인 기억의 형태를 띠고 있다.¹⁹⁰⁾

단적으로 역사적 기억의 경우 역사를 소유한 지배자 통치 권력이 그렇지 못한 기억을 소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강요하는 형태를 취하기 쉽다. 즉 역사적 기억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계열화된’ 사건들의 집합이자 주로 권력의 정통성을 주축으로 특정한 사건들을 선조적으로 포괄하거나 배제하는 범주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⁹¹⁾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역사적 사실은 모두에게 객관적인 사태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을 소유한 자들이 일정한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시적 기억의 경우 거기서 벗어나는 일종의 예외적 현상 또는 어떤 변이이자 그 역사적 시간이 지워버리고 억압한 주변적이고 파편적인 시간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역사 개념이나 역사체계의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부정된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秀史)라 할 수 있으며,¹⁹²⁾ 특히 그중에서도 시적 기억은 역사적 특수성의 지배와 간섭을 벗어나는 개별성의 실재와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의 호명과 개인의 부재

지상에 존재하는 온갖 동식물 가운데 진정한 의미로 역사적인 것은 인간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전의 생활 조건들을 흡수하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생활의 조건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¹⁹³⁾ 즉 우리가 기억해내고 학습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은 한 문명이나 공동체의 생활양식 속에 변화를 남긴 사건 또는 일군의 행적을 가리킨다. 특정한 시기에 한 집단 또는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자, 위대한

189) 이진경 지음,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2, p.49.

190) 들뢰즈와 가타리는 몰(mole)과 분자(molecule)를 구분하면서 분열증 분석을 전개한 바, 분자는 탈코드화 되고 탈영토화된 운동을 지칭한다. 반면에 몰은 그 운동을 재영토화하고 초코드화하는 조작을 가리킨다. 쥘르 들뢰즈·가타리 지음/최명관 옮김, 『앙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p.413~5.

19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2002, 푸른숲, p.38~40.

192) 신범순은 역사 시대가 억압하고 지워온 것들을 복구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주변사나 종속사, 표상사 같은 대항역사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존의 ‘역사’적 개념과 다른 의미의 ‘수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신범순, 「노래의 수사」, 『문학들』 (2007. 가을호), 문학들, 2007, p.111~6.

193) 체베데이 바르부 저/임철규 역, 『역사 심리학』, 창작과 비평사, 1983, p.9.

영웅이 남긴 삶과 행위에 관한 기록이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는 한 개인들을 상황에 따라 인종과 민족, 국민으로 호명(interpellation)한다.¹⁹⁴⁾ 이데올로기적 코드와 목적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주체로 형성된다. 하지만 예컨대 6·25 한국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인종끼리의 전쟁을 의미하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두 정치집단 또는 국가들의 국민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두 정부는 정치적 범주로서 국민을 동원한 것이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전쟁 주체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국가나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자립성은 현저히 축소되거나 말살된다. 정서적 유대와 일치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속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그 유기체적 조직 내의 일개 부분으로 전락한다. 하나의 정치적 이념 또는 역사적 신념이 자칫 타자에게 유효하고 타당한지 객관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만인에게도 적용된다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자의 자기화를 추구하는 역사 속에서 개인은, 단지 집합적이고 평균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즉 역사의 기억은 집단의 기억이다. 자기 자신보다 물개인적 공동체나 생물학적 유기체 강조 속에서 자칫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개인을 적으로 돌리기 쉽다. 개인의 감정이 곧바로 일반적인 법칙으로 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설령 그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자칫 자기만족에 빠진 타자의 법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며, 자칫 자기만의 진실을 모두의 진실로 호도하는 자기에적 환상으로 돌변하기 십상이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
더이상 무너질 수는 없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아 그것은
우리들 희망의 파괴
우리 민중의 해방출구의 붕괴
차라리 목숨을 주자
양상한 이 육신을 내던져
불패의 기둥으로 세워두자

194) 자주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경우에 따라 생물학적인 단위의 ‘인종’으로, 문화적인 측면의 ‘민족’으로, 정치적인 범주의 ‘국민’으로 엄격히 구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동지들
내 모든 것인 살불이 노동자 동지들
내가 못다 한 엄중한 과제
체포로 이어진 크나큰 나의 오류도
그대들 믿기에 승리를 믿으며
나는 간다 죽음을 향해 허청허청
나는 떠나 간다.

이제 그 순간
결행의 순간이다.
서른다섯의 상처투성이 내 인생
떨림으로 피어나는 한줄기 미소
한 노동자의 최후의 사랑과 적개심으로 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
마지막 생의 외침
아 끝끝내 이 땅 위에 들꽃으로 피어나고야 말
내 온 목숨 바친 사랑의 슬로건

“가자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 박노해, 「마지막 시」 일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른바 ‘시대의 막장’이라고 불렸던 ‘안기부의 지하밀실’에 끌려간 “나”는 ‘24시간’ 이어지는 끊임없는 ‘폭행’과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살불이 노동자 동지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표명한다. 비록 “체포로 이어”지는 “크나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투사인 “나”는, “자본가세상”의 척결과 “노동해방”의 “쟁취”를 목표하는 노동자 세력과 자신의 목표를 동일시한다. 나의 “무너”짐이 곧 혁명세력으로 설정된 노동자들의 “희망의 파괴”와 “민중의 해방출구의 붕괴”로 여긴다.

그러나 “죽음”까지 각오하는 비장함과 낙관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노동자”의 능동성보다 “나”의 결의나 “슬로건”에 더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 즉 표면상 여기서의 “나”는 자신의 “온 목숨”을 바쳐 역사적 대의에 따르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여전한 신뢰와 그들의 “승리”에 대한 “나”의 편집증적 확신은, “나”의 “죽음”이나 고통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자기애적 환상에 가깝다. 비록 체포된 상태지만

여전히 “나”는 노동자 세력과 함께 하는 혁명가이며,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의 향유의 성격이 강하다.

즉 “나”를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인생”을 산 “서른다섯”의 “한 노동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나”는 “노동자”라기보다 그들을 지도하거나 계몽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이다. 비록 “최후”의 “순간”까지 “노동자”에 대한 “사랑”과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정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여기서의 ‘나’는 사회변혁의 이상적인 주체로 설정된 노동계급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하는 지도자적인 주체이다. 끊임없이 자기희생과 “결행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에 대한 “나”의 동일시는, 실상 그들을 목적론적으로 도구화된 존재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가인 “나”의 표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세력이 지닌 자생적 운동 능력과 연대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식의 시 「낡은 교과서」는 그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이다.

나는 그들이 버린 낡은 교과서를 알고 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결코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낡은 교과서. 애인과 헤어지고 이불 속에서 울며 읽었던 낡은 교과서. 아, 연탄 불을 갈아가며 숨어 살던 흑석동. 다시 가보니 닥터 지바고보다 지독한 눈이 내리고, 지적 오만이 병처럼 꿈틀거렸다. 나보다 가진 게 없었던 자들이 밥을 먹여 주던 시절. 어디쯤일까. 비닐에 묶어 파묻었던 낡은 교과서. 이제는 늙어 목이 쉰 낡은 교과서.

- 원구식, 「낡은 교과서」¹⁹⁵⁾ 전문

여기서 “나”는 한때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결코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학생운동권 내부의 지침과 더불어 그에 걸 맞는 학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자신보다 “연탄 불을 갈아가며 숨어 살던 흑석동”시절 “가진 게 없었던 자들”로부터 “밥”을 제공받기도 한 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랑하는 “애인”과 눈물을 머금은 채 “헤어지기도” 했는데, 오직 예비 “혁명가”로서 정체성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시절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모든 것을 뒤엎고 무화시키는 “눈”만 “지독”하게 내리고 있다.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비닐에 묶어 파묻”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혁명서적들은 어느 날 문득 “늙어 목이 쉰 낡은 교과서”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운동권의 반성적인 회고담이나 청산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다. 당시 학생운동이 일련의 시대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 원구식, 『마돈나를 위하여』, 한국문연, 2007.

왜 자신들이 그 시절에 행한 일련의 행동과 말들을 일종의 “지적 오만”으로 보고 있는냐는 점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긴 어렵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우선 학생계급인 “나”가 ‘노동계급’으로의 자기지양이 그리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를 포함한 “그들”의 행위가 ‘역사의 진리’를 소유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엘리트적 정체성의 산물이었다는 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최영미 시인의 시 한 구절대로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서른, 잔치는 끝났다」)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이른바 역사발전을 위해 “나”의 사랑까지 희생했다는 도덕적 우월성이 어떤 면에서 위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인을 위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해 세상을 뒤바꾸려 한다’는 판티즘 속에서 예비 혁명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향유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아니지만, 박노해나 원구식 시인의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다. 집단의 기억으로서 역사의 기억이나 정치적 호명 속에 개인이 설 자리는 없다. 박노해의 시 “가자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통쾌할 수는 있으나 인 자칫 광기어린 자만의 독무대를 연출하거나 극단적인 타자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¹⁹⁶⁾ 설사 인류와 한 집단을 위한다는 구호나 강령이 당대의 사회와 역사적인 가치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립적 개인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전화할 수 있다.¹⁹⁷⁾

3. 문화세계의 균열과 개별성의 존재방식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시의 최초 기원이자 질료는 기억이다. 하지만 모든 기억들이 곧바로 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적 기억이란 시간의 풍화 작용을 견뎌낸, 인간의 내밀한 미적 본능을 불러내는 추체험 된 기억만이 유의미할 뿐이다. 어떤 식으로든 삶

196) 그렇다고 문학의 모든 정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학은 얼마간 정치적이며 당파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절실한 느낌이나 사고 대신 역사와 개인의 합법칙성만을 강조하는 구호적이고 선동적인 시에 거부감을 갖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의 안이함과 피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종호, 「시와 정치적 전언」, 『시란 무엇인가-경험의 시학』, 민음사, 2001, p.222.

197) 한 작가가 자신의 주관적 사상이나 이념을 작품 속에 구현하려 할수록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이른바 예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문학의 정치성과 예술성이 별개여서가 아니다. 특정한 시각이나 이념의 해석체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실재에 대한 배제를 낳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문학적 개념화는, 소속한 문학 집단의 관점에서 충실함으로 결과적으로 실제 사건과 개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추상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의 심연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기억들만이, 필시 작가의 세계관의 반영일 터인 하나의 거대한 작품의 흐름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억들은 한 개별자를 둘러싼 전형적 환경의 전형적 인물 식의 문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데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설령 한 개별자를 둘러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매우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서이다.¹⁹⁸⁾

지난 시대의 민족·민중문학 계열의 시들이 흔히 빠져들기 쉬웠던 함정이 바로 그것이다. 특수성이 강조되던 시대 속에서 각 개인들의 개별성은, 무매개적인 직접적 소여, 우연적 소여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이미 실재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은 예술적 형상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부정되어야 할 그 어떤 것이 된다. 구체적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면 불가피하게 한 개인의 개별자적 실재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수적인 것으로서 사적인 것이 공공적인 것 또는 보편적인 것에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척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지나치게 시대정신이나 역사의식 등 특수성을 의식한 시들이 자칫 상투적이고 구조적인 작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단지 미학적 거리의 미확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적이고 사적인 체험이 곧바로 보편성으로 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감정이 곧바로 모두에게 타당한 법칙이 될 수 없다. 한 시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체험이 그것들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분명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결코 보편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보편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개별성은 포착불가능하기에 특수적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러한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독립성과 자존감이 확보된다.

해변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기 • 전망 좋은 방에 흔들의자 두 개 갖다놓고 종일 쳐다보기(생각이 있으면 적어서 보여주고 때리기 없기) • 강화도 안면도 홍도 울릉도 개도 선유도 목포에서 밀물때와 썰물때에 부두 말뚝 위에 걸터앉아 있기 • 해변에서 망둥어 낚기 • 태풍부는 날 동해 쪽 이름 알려지지 않은 포구에서 방파제 때리는 파도를 보고 놀라지 않기 • 뽕밭 걷기(밭에 묻은 뽕은 씻지 말고 햇빛에 말려 털어내기) • 상추씨 심어 상추나면 된장 조금 넣고 상추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흠린 밥알 황급히 주워먹기) • 메뚜기 잡아서 눈싸움하다가 지면 풀어주기 • 뽕밭에서 게를 잡다가 손을 물리거나 모래밭에서 생합잡기

198) 한 개인이 자기 교유의 필연적 운동법칙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대응한다고 할 때, 그러한 대응의 역사로서의 집합적 내면성의 역사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반응의 역사일 뿐이다. 이종영, 『내면성의 형식들』, 2002, 새물결, p.16.

이런 소망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 몇가지 더 가감하기(예를 들면 검지로 이마를 콧 쪽으며 너는 어느 별에서 왔냐고 묻는다거나 괜히 한숨을 포옥 쉬면서 더듬거리기도 할 것 등등)

에에,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유리잔은 혼자서도 깨진다는 것을 발견한 어느 좀팽이가 지니고 있는 꿈입니다.

- 강형철, 「겨우 존재하는 것들 2」¹⁹⁹⁾ 전문

얼핏 위 시에 제시된 모든 행위들은 유용성이나 그 가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무가치하고 한낱 부질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기” 등은 고립적이고 감상적(感傷的)이기까지 하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에 “부두”의 “말뚝 위에 걸터앉아 있”거나 “태풍 부는 날”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를 보고 놀라지 않기” 등의 “소망”은, 그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주목대상조차 못 되는 것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뽕뽕이를 잡아서 눈 싸움하다가 지면 풀어주기”라든가 “뽕뽕에서 게를 잡다가 손을 물리”는 등의 행위는, 거시적인 문화의 차원에서 볼 때 있으나마나한 극히 미미한 일상사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와 사회의 눈으로 포착될 수 없는 틈, 문화 내지 문명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야말로 시가 존재할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매우 자폐적이고 고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 좋은 방”에 놓여 있는 “흔들의자”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인 것에서 보여주듯이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가며 진행되는 일련의 놀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존재적 욕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상추씨 심어 상추”가 자라면 “된장”을 “조금 넣”은 “상추”쌈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행위 속엔功利性(功利性)이나 계산가능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인간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다가 “홀린 밥알”을 “황급”하게 “주워먹”는 행위는 일개 궁상이 아니라, 행여 실수나 부주의로 당황해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이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해관계나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금세 사라지고 마는 초미립자처럼 거의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것들이다. “뽕뽕에서 게를 잡다가 손을 물리거나 모래밭에서 생합잡기”와 같은 행위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망에 결코 포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겨우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밭에 묻은 뽕”을 “씻”는 대신 “햇빛에 말려 털어내기”와 같은 게으르고 무기력하기

199) 강형철, 『도선장 불빛 아래 서 있다』, 창작과 비평사, 2002.

까지 한 “꿈”은, 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온갖 규정성과 도덕률을 벗어난 무한의 가치를 갖는 그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검지로 이마를 콧 찍으며” “너는 어느 별에서 왔느냐 고 묻는” 것에서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경외의 마음가짐과 더불어 “괜히 한 숨을 포옥 쉬면서 더듬거리기도” 하는 겸손함은, 타자부정이나 자기학대를 바탕으로 하는 집합적 내면성의 역사의식과 그 궤를 달리 시가 개별적 차원의 삶의 욕망 또는 진리체험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김종삼은 살아가노라면 어디선가 굴욕 따위를 맞볼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이면 되건 안 되건 무엇인가 그적거리고 싶었으며 그게 바로 시도 못되는 자신의 시라고 했다. 마치 이 세상에 잘못 놀러 나온 사람처럼 부재(不在)로서 자신의 고독과 대면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비로소 시인이라 부른다.

- 이시영, 「시인」 200) 전문

위 시에 의지해 볼 때 “김종삼” “시인”에게 “시”는 삶의 영광과 환희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대다수 그의 시는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맞” 봐야 하는 “굴욕”과 수치에 기반해 있다. 자신의 정체성 확인이나 존재 해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마저도 위협당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최소한의 자존이나 존재감마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적거”린 것들인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 잘못 놀러 나온 사람” 중의 한 명이며,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 자인 “시인”이다. 엄연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그곳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듯 “부재”로서만 스스로를 증명하며, “자신의 고독과 대면하며 살아”갔던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시영은 “김종삼”시인을 통해 “굴욕”이나 “고독”을 좋은 시와 시인의 탄생조건으로 본 것일까.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는 “굴욕”감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할 터이지만, 자기 존재가 철저히 무화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또는 수동성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타자와 세계를 아무런 편견이나 자의식 없이 바라보게 된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주체에게 타자가 침투할 공간은 그리 넓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시선과 통제 아래 두려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덕목 중의 하나인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참된 의미의 “고독”은 온갖 이해관계나 기존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나’라는 인칭적 자의식이 자의식을

200) 이시영, 『우리들의 죽은 자들을 위해』, 창작과 비평사, 2007.

무화시키는 순수한 비인칭적 고독 속에서 매년 전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타자의 타자성,²⁰¹⁾ 곧 모든 이들의 불행과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르시시즘에 근거해 형성된 자아는 자기 현실에 대해 폭력을 구성하고 또 타자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는 나르시시즘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고독”은 기존의 편견과 관습을 버리고 가능한 것과 잊혀져 간 것들의 부름에 귀 기울이게 한다. 참된 “고독”은 침묵의 소리에 민감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의하게 만들기에 “시인”들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그 무엇이 되는 셈이다.²⁰²⁾

결과적으로 특히 시가 역사적 특수성이나 보편성에 관계하기보다 개별성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시가 집단이나 조직의 문제보다는 자주 개별적인 삶의 욕망과 고통, 외로움과 그리움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것들이 철저하게 한 사회의 내부에 발생하고 존재하지만 한 사회의 가치나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권리가 애초부터 차단당한 그 어떤 맹점 또는 빈틈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가 자주 겨우 존재하는 것들의 눈물겨움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 간신히 지탱하는 생명의 숨결과 때로 감당하기 힘든 열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한 사회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한 이후에도 근본적인 결핍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당하고 정상적으로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문화적 의식 차원으로 환원하거나 동일시킬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포착 불가능한 개별성을 드러내게 하는 시를 쓰게 한다고 할 수 있다.

4. 진리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예술의 힘과 담론 투쟁

한 인간이 주체로 선다는 것은, 다른 아닌 자기 내부에 고유한 행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행위의 원인을 순전히 자기 내부에서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 주체성은 언어와 욕망,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 정체성 사이의 작은 틈새에 겨우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다. 문명화 또는 상징계에 균열을 내는 실재와의 만남이나 그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잃지 않는 주체성이 탄생한다.²⁰³⁾ 유아론의 유혹을 극복한

201) 부단히 자기 자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현재 있는 바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부단히 새롭게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은 “현재 있지 않은 바”대로의 존재이다. 대자존재는 그리하여 타자에 의해 결코 포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자마자, 그는 곧장 그러한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202) 미셸 콜로/정선아 옮김,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 지성사, p.201~2.

203) 이종영, 『내면성의 형식들』, 새물결, 2002, p.17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은 모든 것을 보편의 차원에서 개체와 실존을 포섭하려는 사유체계에 대한 저항과 도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²⁰⁴⁾

그렇다고 한 주체로서 개별자는 결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수한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형성된 개별자의 존재는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존재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 개별자 내부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타자들이 하나의 직물(織物)처럼 가로지르고 있다. 다시 말해,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은 한 개인 내에서 서로 교착된 상태로 존재한다. 특히 보편성의 토대 위에서 특수성과 개별성은 상호규정적인 관계를 맺는다.²⁰⁵⁾ 개별자는 ‘침전된 역사’인 것이고, 이 ‘침전된 역사’는 개별자 내부에 있으면서도 또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햇별이 질화로처럼 따뜻한 봄날이다

일전, 썩발골 미나리밭에서는 새순 돌아 일어나는 미나리의 연약한 힘에 받혀 살얼음 바스러지는 소리가 사금파리처럼 반짝거리다가 화를 치는 장닭울음 소리에 채여 지리산 화개골쪽으로 사라지는 화음이 멀기도 멀었다

늙은 집 돌각담에 등을 대고 오돌오돌 앉아서 실성한 듯 투덜거리는 저 홀할머니의 아들 하나는 빨치산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 서정춘, 「화음」 전문

“햇별이 질화로처럼 따뜻한” 어느 “봄날”, 모자라는 온기를 보충하려고 “늙은 집 돌각담에 등을 대고 오돌오돌” 떨며 “실성한 듯 투덜거리는” “홀할머니”를 관통하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으로서 6·25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다. 그녀의 “아들” 한 명이 육이오를 전후로 활동한 “빨치산” 출신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그 저 평범해 보이는 늙은 시골 “할머니”에게도 육이오가 남긴 상흔이 깊게 새겨져 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것이나 “실성한 듯” 혼자 “투덜거리는” 행위는, 그녀의 삶이 결코 한국현대사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로인한 그녀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나”는 “썩발골 미나리밭”에서 “돌아”나는 “미나리” “새순”의 “힘에 받혀” “살얼음”이 깨지는 순

204) 강영안 지음,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2001, p.18,

205) 이종영, 『정치와 반정치』, p.83~4.

간 얼핏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소리 아닌 소리에 더 주목한다. 행여 그마저도 “해를 치는 장닭 울음 소리에 채여 지리산 화개골쪽으로” 금세 “사라”지고 마는데, 이는 곧 “나”의 관심사가 거의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시의 자리는 마치 “사금파리”처럼 날카롭게 “반짝거리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음”처럼 개념화하거나 표상 불가능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가만 일러주고 있다.

서정춘의 시 「화음」이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그녀가 줄곧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특히 그녀의 행위를 특정한 역사적 이해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 인간을 자연 구속적 법칙이나 기계적인 해석의 눈이 아니라, 한 개체의 고유한 내면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진실에 가닿으려는 노력으로 다가온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지성과 판단보다는 가뭇없는 연민과 조건 없는 애정이 실현되는 장소가 시적 공간이며, 그 어떤 일반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성의 진리’가 펼쳐지는 무대가 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아도르노가 말한대로 ‘진리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개별성의 진리에 관여하는 시문학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때로 반역사적이고 반정치적이기까지 하는 시의 기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단일한 목소리로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다만 문학의 반정치 또는 반역사성이 새로운 합리성 내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종의 존재양식이라는 점이다. 일종의 담론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는 부끄러운 정치와 폭력적인 역사와 원리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담보할 때 더욱 그 존재의의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폭력을 가하는 물리력과 언어의 난무 속에서 시적 욕망은, 근본적으로 지배욕과 권력욕으로 점철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욕망과 달리, 끊임없는 노동과 사랑 속에서 자기실현만을 목표로 하는 매우 자유롭고 순수한 존재적 욕망의 일종이다. 특히 타자들의 복종이나 변별적 정체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적 욕망은,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권력과 정치에 맞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설운 것이 역사다
 두려운 것이 역사다
 두려워도 피할 수 없는 것 역사
 아하
 그 역사의

잔설 위에 서서 오늘 밤
 별발을 우러르며
 역사로부터 우주를 보고
 우주로부터 역사를 보고
 잔설 속에서 아리따운 별발을 또 보고

- 김지하, 「겨울 겨울·2」 206) 전문

주지하다시피 시가 ‘개별성의 진리’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설운 것”이자 “두려운 것”으로서 “역사”는 결코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개별성이 특수성으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든 자신들이 신분적 특수성이나 역사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도르노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만일 축적된 고통에 대한 기억을 떨쳐 버린다면, 역사기술로서의 예술”이 설 자리와 그 “의미”²⁰⁷⁾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반정치 또는 반역사성은 역사와 현실정치로부터 도피를 가리키지 않는다. 상호투쟁으로서 점철된 부끄러운 ‘정치’와 야만과 살육으로 이어진 “역사의/잔설” 속에서 다른 새로운 합리성, 즉 “별발을 우러”러 보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담론생산과 관계되어 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담론에서 이제 “역사로부터 우주를 보고/우주로부터 역사를 보”는 새로운 담론으로의 존재전환을 의미한다. 채 가지지 않는 고통과 시련의 “잔설” 속에서도 “아리따운 별발”을 “보고” “또 보”는 노력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우주”관계성과 연대성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하고 실천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바른 의미의 시적 반정치성 내지 반역사성은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기억에 대한 저항과 대항 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합리성과 주체양식을 만들어 가는 한 개인의 실천적 태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약력 : 1959년 광주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졸(석사).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 시작. 이후 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운주사 가는 길』, 『벽을 문으로』, 『처음 사랑을 느꼈다』,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시화집 『내 애인은 왼손잡이』 5·18 20주년 기념 시선집 『꿈, 어떤 맑은 날』, 산문집 『들키고 싶은 비밀』, 시론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을 펴냈으며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겸임)로 재직중.

206) 김지하, 『김지하 시전집 2』, 솔, 1993.

207) T.W. 아도르노 저/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4쇄), p.402.

제5장 여순사건과 한국군

여순사건 61주기 학술심포지엄
2009. 10. 16.

한국군의 창설과 여순사건

- 지휘부를 중심으로 / 노영기

국군의 여수·순천 진압작전 / 김득중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 주한미임시고문단(PMAG)의 진압‘주도’작전의 경위와 성격 / 안정애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과 진압

- 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 이선아

한국군의 창설과 여순사건

- 지휘부를 중심으로 -

노영기(조선대)

- I. 머리말
- II. 미군정의 군대 창설과 국방경비대의 창설
- III.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특성
- IV. 한국군의 지휘부 구성과 특성
- V. 맺음말

I. 머리말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에 바탕을 둔 극우반공체제를 수립했다. 여순사건 이후 군은 여순사건의 배경에 대처하며 ‘반공’의 군대로 거듭났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의 영향력은 확대돼 민간사회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고 지배하는 물리적 도구로 거듭났다. 이렇듯 여순사건은 한국사회와 군부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군의 창설과정과 특징 그리고 군 지휘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과정에서 여순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II. 미군정의 군대 창설과 국방경비대의 창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사회의 과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이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건국준비위원회로부

터 시작된 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그중 한 가지로 청년들이 치안대를 조직해 일제의 경찰조직을 대체하는 치안유지활동을 전개했다. 치안유지활동과 함께 과거 군사 경력자들이 군대를 창설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현재 약 30여 개의 군사단체가 만들어졌다. 군사단체들은 군대 경력자들의 지휘 아래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또 일부는 직접 일본 경찰로부터 무기를 인계받아 치안유지 활동을 전개했다. 학병동맹은 9월 8일 종로경찰서로 가서 일본경찰과 협상해 무기를 인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임시군사준비위원회 산하 학도대도 성북경찰서로 갔으나 교섭 과정에서 소동이 생기고 일본 경찰이 발포해 오히려 사상자가 발생했다.¹⁾

군사단체의 활동은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직후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1945년 9월 8일 진주한 미군은 38도선 이남의 정세가 무질서 한 것으로 평가했다.²⁾ 미군은 일제의 경찰 조직을 복원시켜 치안유지 임무를 맡겼고, 그로 인해 남한 각지에서는 경찰과 자치조직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³⁾

동시에 미군은 진주 직후부터 한국인들의 무기 소유와 치안유지 활동을 금지했다. 1945년 9월 10일 미군 제40사단 사단장 아놀드 소장은 “조선인 일본인 기타 누구를 물론하고 무기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니 무기를 가진 단체 혹은 개인은 속히 미군당국에 수납(收納)하라”고 명령했다.⁴⁾ 9월 20일 미군정 군정장관 아놀드는 일본군이 남긴 무기를 9월 23일까지 반납하라며 동시에 ‘치안권’은 미군과 경찰에게 있다고 했다.⁵⁾

이렇듯 미군은 해방 직후 전개된 한국인들이 전개한 치안유지활동과 군사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미군의 입장은 해방 직후의 건국운동에 대한 입장과 동일했다.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라며 자주적인 건국운동을 부정했다.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의 강력한 탄압으로 점차 약화됐다.⁶⁾

미군정은 단순한 경고만이 아니라 무기의 사적 소유와 치안유지 활동을 규제했다. 9

1) 경향신문특별취재반, 「비화한세대 : 창군 전야」 4, 5(「경향신문」 1976. 11. 5.과 11. 6.);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278쪽.

2) C. L. 호그 지음, 신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 상, 풀빛, 1992, 183쪽.

3) Headquarters 40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11, 1945. 10. 5-10. 6; Headquarters 40th Infantry Division, G-2 Periodic Report No. 18, 1945. 10. 12-10. 13.

4) 「매일신보」 1945. 9. 11.

5) 「매일신보」 1945. 9. 21.

6) 해방후 건국운동과 미군정의 건국운동 부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브루스 커밍스 著·김주환 譯, 『한국전쟁의 기원』 上, 청사, 1986, 130~178쪽과 231~299쪽;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195~281쪽.

월 23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3호를 공포해 일반인의 무장해제와 무기·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 소유를 금지했고,⁷⁾ 9월 29일에는 군정법령 제5호를 공포해 일반인의 무장을 규제했다.⁸⁾

미군정이 일반인의 무장 해제 및 금지를 명령하고 군사단체들이 소유한 무기를 빼앗자 군사단체의 활동 영역과 그 기능이 축소됐다. 미군정의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 군사단체들은 무기를 반납한 채 목총 등으로 군사훈련에만 치중했다. 또 이를 계기로 군사단체들은 각 정치세력의 외곽단체나 물리기구로 전환했다. 군사단체 성원들 중 일부는 무기 휴대가 금지되자 경찰로 옮겨갔다. 조선임시군사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이치업은 미군정이 무기 소유를 금지하자 미군 헌병에게 무기를 반납한 뒤 경찰로 이직했다. 이후 그는 군사영어학교가 개교하자 입교해 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했다.⁹⁾

미군은 치안을 유지하며 미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래 한국에 독립정부가 수립될 때를 대비하려고 군대 창설을 주도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점령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많은 사소한 일로부터 미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달성하는 장래에 대비해 한국군을 창설하는데 매우 큰 관심이 있었다”며¹⁰⁾ 군대 창설 구상을 밝혔다. 즉 미군정은 향후 국가 건설에 대비해 군대 창설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한국군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에는 국방부서가 없었다. 그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구조를 계승한 미군정에는 국방 예산과 사무실이 없었고, 군대 창설의 임무를 맡길 능력 있는 한국인들이 부족했다. 또 미군정은 한국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향후 수립될 정부보다는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충성할 것이라고 우려가 있었다.¹¹⁾ 미군정의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미군정은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했다.¹²⁾ 여기에는 당면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포함됐다. 미군정청에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를 설치했고, 주한미군사령부 헌병사령관 쉑크(Shick) 준장을 국방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1월 19일 국방사령관 쉑크 준장은 ‘군사단체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군사단체를 허가제로 제한하며 각

7)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123쪽.

8) 한국법제연구회편, 위의 책, 125쪽.

9) 이치업, 스티븐 엠·팔프 공저, 『Call Me “Speedy Lee” 번개장군』, 원민, 2001, 74~81쪽.

10) Sawyer, Robert,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USGPO, 1962, pp 21.

11)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the Advisory to the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Subject : Outline of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pp 4~5(정용욱 편, 『해방직후 정치·사회사자료집』 제2권, 1994, 228~229쪽).

12) 한국법제연구회편, 앞의 책, 145쪽.

군사단체의 현황-본부 및 지부 기타 건물의 장소, (단체설립 : 인용자)목적, 자본, 급료, 단원 명부, 단원에게 제공할 물건(식량, 의복 및 장비 등)-을 기입한 허가신청서를 12월 1일까지 국방사령부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 신청서에 군사단체 성원들의 비무장 서약서 및 단원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함께 첨부하며, 12월 1일 이후 그 수가 변경될 때 보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¹³⁾ 지나치리 만큼 세세하고 엄격한 ‘군사단체관리규정’은 군사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미군정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후 미군정은 경찰을 동원해 대표적인 군사단체이며 좌익세력의 물리력으로 기능했던 학병동맹과 국군준비대를 해산시켰다. 그 외 단체들도 미군정의 명령에 따라 해산했다.

미군정청 국방사령부는 국방 문제를 검토할 ‘장교단(board of officers)’을 구성했다. 그런데, 국방과 관련한 사항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이상의 일이었다.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점령 한다는 것 외에 한반도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독자적으로 국방 문제를 검토하며, 이것을 담당할 국방사령부를 설치했다. 또 12월 29일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소 양군이 언제 철수하느냐는 질문에 “조선의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함으로 필요 없으면 돌아간다”고¹⁴⁾ 답했다.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의도를 밝힌 것이다.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장교단은 1945년 11월 13일, 15일, 16일 3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토의하고 ‘국내외 적으로부터 한국이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군대 창설 및 국방 관련 문제들을 토의했다. 장교단은 한국의 정치, 군사적 상황을 평가한 「정치 군사적 상황 평가(*Estimate of Military and Political Situation*)」를 작성했다.¹⁵⁾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평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세력-소련,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일본, 북한-을 장래 한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경계하며,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을 인수하려면 2개의 정예사단(good divisions)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겨두려면 한국인 장교와 사병들을 미군의 교리와 감독 아래 교육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한 가지는, 일제시기 군대 경력자들에 대한 평가이다. 부분적으

13) 「중앙신문」 1945. 11. 20.

14) 「동아일보」 1945. 12. 30.

15) 이 평가서는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나와 있지 않은 채 작성됐다. 내용으로 볼 때 국방사령부의 장교단에서 세 차례의 모임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군대창설계획의 부록으로 첨부됐다. *Estimate of Military and Political Situation*.

로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국 국민당과 같은 다른 열강에 충성하지 않는 군대 지휘관들을 선발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중국 국민당 군대 보다 잘 조직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장교들을 활용토록 제안했다. 그리하여 한국군의 몇몇 핵심 지위(Key positions)에 과거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임을 지적했다. 또 과거 하급 장교들(junior officers)이 벌써 6만에서 7만에 이르는 느슨한 군대조직(군사단체를 지칭 - 인용자)을 만들고 있으므로 한국군의 창설에 관한 조치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미국에 우호적인 군대를 유지하려면 친일파라도 등용하라는 평가이다. 이 제안에 따라 미군정기 내내 친일파로 비판받을 만한 군대 경력자들을 계속 등용했고,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것은 국방경비대의 주요 지휘관 인사에도 반영됐다.

11월 18일 장교단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제출했다. 경찰 25,000명을 포함해 육군과 공군 45,000명, 해군과 해안경비대 5,000명으로 구성된 총 75,000명의 국방군을 창설한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사관학교(Korean Military Academy), 비행학교(Flight School), 해안경비사관학교(Coast Guard School), 경찰학교(Police Academy) 등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¹⁶⁾ ‘알파계획(Alpa Plan)’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11월 22일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제출됐다.¹⁷⁾ 하지 중장은 ‘알파계획’을 승인한 뒤 상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직속 상관인 맥아더에게 한국에서의 ‘군대 창설’을 문의했다. 맥아더는 미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병력이 1946년 1월 1일까지 25,000명에 달하며, 계속적인 병력 증강과 적절한 무장은 주한 미군이 경찰 기능을 맡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계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맥아더는 미 육군 참모총장에게 한국군 창설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문의했다.¹⁸⁾

삼부조정위원회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군대창설계획을 검토했다. 삼부조정위원회 극동소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는 한국경찰에 미국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국방군 창설계획 등을 검토했다. 그 결론은, 한국경찰에게 미국제 무기를 공급하는 권한을 맥아더에게 부여하며 그에 따른 추가 정보를 보고토록 요구했다. 반면 한국 국방군 창설계획은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국제 공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연기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1946년 1월 9일자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합동참모부는 한국 경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16) HQ. USAFIK, *Report of proceedings of Board of Officers*, 1945. 11. 18.

17)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미군사』 3, 68~70쪽.); Sawyer, 10쪽.

18)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가 참모총장(아이젠하워)에게(1945. 11. 26.)」.

국방군 창설 계획은 연기하고 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¹⁹⁾

상부에 보고한 이후로도 주한미군사령부는 군대 창설 계획을 정교화 시켰다. 국방사령부 사령관 쉼크 준장은 군대 창설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12월 1일 새로운 계획을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육군을 중심으로 향후 국방 일정 및 각 부서의 역할까지 포괄했다. 하지만, 쉼크의 군대 창설계획안은 너무 정교해 상부로부터 허가받기 힘든 것이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원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했다. 미국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에서의 군대 창설에 관해 논의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20일 국방사령부 사령관은 쉼크 준장에서 참페니 대령으로 교체됐다.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그를 소환해 쉼크의 군대 창설 계획은 너무 정교하고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이며 소규모적인 군대 창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참페니 대령은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뱀부계획(Bamboo Plan)이다.²⁰⁾

뱀부계획은 경찰보조기구인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는 국방경비대를 경찰예비대로 창설한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경찰예비대라는 제약 때문에 훈련 등에 제약이 많았음을 지적했다.²¹⁾ 뱀부계획은 아직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 없이 해방 직후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려고 만들어진 까닭에 한계가 있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향후 국가 수립에 대비한 ‘군대창설계획’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경비대의 임무를 경찰예비대로 제한하면서도 향후 군대를 예정했다. 즉 국방경비대는 전면전(general war)이 발생했을 때 군대의 기초가 된다고 규정했다.²²⁾ 즉 미군정은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경찰보조기구인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도 향후 국가수립에 대비해 군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뱀부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해방 직후부터 활동했던 군사단체를 통제하고 북한의 군대 창설 움직임에 대응하며, 경찰의 치안유지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물리기구의 창설을 구상했다. 그렇기에 국방경비대는 경찰보조기구인 동시에 군대 창설을 대비한 기구였다. 그리고 뱀부계획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미군정이 애초의 구상처럼 군대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 때

19) 「합동참모부가 동경의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대장에게(1946. 1. 9.)」.

20) Sawyer, pp 13~14.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4쪽과 261쪽.

22)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Department of the Director of Internal Security*(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6.).

문이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 때문에 뱀부계획은 군대창설계획이면서도 직접 군대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만들지 않고, 국방경비대의 성격도 경찰예비대로 제한했다.

둘째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즉 미국의 기준에 적절한 군대 경력자들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²³⁾ 미군은 점령 초기부터 군대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군사단체들을 예의 주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사경력자들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의 경험만 있을 뿐이었다. 미군의 지원이나 감독 아래 훈련을 받았거나 일본군에 대항했던 세력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미군의 훈련을 받았던 광복군 주력은 중국 대륙에서 확군을 추진하며 귀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 일본군 출신들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과 싸웠던 과거 일본군 출신들은 조직을 만들어 치안유지 활동을 벌이는 등 군대 창설의 주역을 자처하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군사기술을 습득했던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다.²⁴⁾

이 같은 조건에서 미군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군사단체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켜 미군의 감독 아래 미국식 군사교리로 재교육 시키는 것이었다.²⁵⁾ 또 미군은 군사단체 성원들이 향후 수립될 정부에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을 곧바로 군대로 전환시킬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군은 국방경비대의 성격을 경찰예비대로 제한했고, 국방경비대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회색시킬 수 있는 ‘불편부당’과 ‘정치적 중립’을 국방경비대의 이념으로 주입시켰다.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구 감리신학교 건물에 군사영어학교(Military English School)가 개교했다. 일반적으로 군사영어학교의 개교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즉 통역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알려졌다.²⁶⁾ 그러나 군사영어학교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육기관이었다. 첫째,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 미군정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 문제를 검토할 때부터 언어장벽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해 학

23) 정용욱, 앞의 자료집, 2권, 229쪽.

24) *Estimate of Military and Political Situation*.

25)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냈던 프라이스대령이 (국방경비대의 : 인용자 주)연대장 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밭(田)을 가(耕)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황무지를 그대로 마구 가라뒤틀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이것을 정리해 버릴 것을 버리고 돌을 것은 돌우어 정연하게 만들어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 경비대는 마구 가라 뒤틀기는 판이니 너머 세밀히 하면은 도리어 위축하기 쉽다”고 훈시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한민국과 남북통일』 『국방』 1949. 2, 국방부 정훈국에서 재인용.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1967, 257~258쪽; 한용원, 앞의 책, 72쪽.

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뒤 국방경비대 장교와 미군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다.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200여 명 중 110명이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됐고, 그 외 졸업생들 중 일부는 미군 통역관이나 경찰 및 미군정의 관리로 임용됐다. 미군정의 또 다른 의도는 군대의 장교 양성이었다.²⁷⁾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기구였다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사영어학교가 문을 열었던 12월 5일은 알파계획에 대한 본국의 회신이 도착하기 전이었다.²⁸⁾ 즉 주한미군사령부의 군대 창설에 대한 본국의 검토와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했다. 둘째, 미군정은 군사영어학교 입학생들의 자격을 일제시기 장교와 준사관 계급 이상의 군대 경력자로 한정했다. 단순히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군대 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고, 군사영어학교 학생 모집 때 군사단체들의 대표자들을 초청할 이유도 없었다. 셋째, 군사영어학교의 교과 과정에 참모학과 무기 훈련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교과 내용은 통역관이 아닌 장교 양성을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군사영어학교는 알파계획 중 군사학교 설치를 실제로 적용한 사관학교였다.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정 장관은 국방사령부와 군무부 설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선의 군대 조직과 사관학교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도 임명했다고 답변했다.²⁹⁾

또 군사단체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했다.³⁰⁾ 미군청은 군사영어학교 설치하기에 앞서 각 단체 대표들을 미군정 국방사령부로 초청해 각 단체별로 대상자들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모든 군사단체들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대상자들을 추천한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다수의 군사영어학교 입학생들은 군사단체로부터 추천됐다. 또 이응준과 원용덕이 군대경력자들을 군사영어학교에 추천했다.

군사영어학교 졸업생들의 계급은 일제시기 경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됐다. 임관할 당시 부위(副尉 : 중위) 이상 계급으로 임관한 장교는 총 18명이다.³¹⁾ 계급별로 살펴보면,

27)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57쪽; 김영만, 「미군정기 조선경비대 창설과정 연구-군사영어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1985, 42~44쪽.

28) 국방부의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은 미국 본국의 ‘국방계획’의 승인에 대비해 군정 당국이 문제점을 토의했고, 미국식 훈련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영어학교가 설치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사실관계가 뒤바뀐 서술이다. 언어 문제는 국방계획을 토의할 때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군사영어학교는 본국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설립됐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257쪽.

29) 「자유신문」 1945. 11. 23.

30) 김영만, 앞의 논문, 43~44쪽.

31)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의 창설 과정을 다룬 김영만은 중위(부위) 이상이 18여명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한용원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한용원의 연구 또한 11명이 부위 이상으로 임관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통계일 뿐 군사영어학교 임관자 110명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한용원, 앞의 책, 73~81쪽; 김영만, 앞의 논문, 56쪽.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고문 이응준이 정령(正領 : 대령)으로 임관했고, 군사영어학교 부교장 원용덕은 참령(參領 : 소령)으로 임관했다. 8명의 장교가 정위로 임관했고, 8명은 부위로 임관했다. 정위로 임관한 8명 중 5명이 일본육사를 졸업한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으며, 양국진과 김일환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만주군 경리장교 출신이다. 박동균은 만주군 군의 출신으로 군의관으로 임관했다. 부위로 임관한 8명중 김종석은 일본육사를 56기로 졸업한 일본군 대위 출신이다. 김홍준, 최남근, 김백일, 백선엽, 윤수현 등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만주군 출신이다. 이들 중 윤수현을 제외한 나머지 만주군 출신들은 간도특설대 출신이다. 윤수현은 만주의 육군군수학교를 졸업한 뒤 만주군 경리장교를 지냈다. 유해준과 이성가는 각각 광복군과 중국 왕정위군 출신이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 중 국방경비대에 부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관했던 장교들을 살펴보면 미군이 국방경비대 장교를 임관시킬 때 적용한 몇 가지 원칙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군은 다른 군대 경력의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육사를 졸업한 장교들을 우대했다. 국방경비대 정위 임관자 중 과반수 이상이 일본육사를 졸업했다. 일본육사 출신들이 모두 해방 당시 일본군 계급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주군이나 학병 출신들에 비해 높은 계급으로 임관했다. 이것은 일본육사 출신들이 정규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사엘리트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둘째, 일본육사 출신들과 함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만주군 출신들, 그중에서도 간도특설대 출신들이 중시됐다. 국방경비대 초대 각 연대의 창설 중대장에 간도특설대 출신의 김백일(제3연대장)과 김홍준(제4연대장)이 임명됐고, 백선엽(제5연대장)과 최남근(제6연대장)도 김백일과 같은 날 부위로 임관한 뒤 이전부터 연대 창설을 준비해왔던 학병 출신을 대체해 연대의 선임 중대장으로 임명됐다.

다음으로 국방경비대 창설을 앞두고 경리 장교 출신들이 우대됐다. 일본육사를 졸업하지 않고 정위로 임관한 양국진과 김일환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만주군에서 경리장교를 지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병과 출신들과 달리 정위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경리장교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 창설하고 부대의 재정운영을 담당할 실무 장교가 필요한 국방경비대 내부 사정을 반영한 때문이다. 미군정 국방사령부에서 처음 설치한 부서는 1945년 12월 1일 창설한 재정국이였다. 그 뒤 19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에 고급부관실 및 조달보급과를 설치했다. 고급부관실의 고급부관은 미군 장교가 취임했고 한국인 부관은 학병단 출신의 임선하 참위였다. 이 때 조달보급과장은 만주군 경리장교 출신의 양국진 정위가 취임했다.³²⁾

32) 육군본부, 『육군역사일지』

Ⅲ.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특성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 주둔 제1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8개 연대가 2월말까지 만들어졌고, 2월 7일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가 설치됐다.³³⁾ 같은 해 11월 16일 제주도에 제9연대가 창설됐다.³⁴⁾ 각 지역마다 연대 창설 시기의 편차가 있었는데, 창설 요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1연대는 1월 15일 창설 직후부터 모병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의 각 연대에 파견할 미군 고문관들이 부족했고, 마찬가지로 한국인 창설 요원들도 많지 않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946년 1월 24일 해편 중인 미 제40사단의 중위 18명을 국방사령부에 배치했다. 이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그중 16명은 2인 1조로 8개 지역에 분산 배치됐다.³⁵⁾ 또 1월 28일 각 지방에 근무할 장교들이 임명됐다. 충남은 이형근 대위와 심연봉 소위, 전남은 김홍준 중위와 조암 소위, 전북은 김종오 소위, 경북은 김영환 소위, 경남은 박병권 소위 등이 각각 배치됐다.³⁶⁾ 각 연대의 부대 주둔지는 과거 일본군이 병영으로 사용했던 곳이 선택됐다. 다음의 표는 각 연대의 창설지와 창설일 및 각 연대의 창설 중대장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1연대-9연대의 창설일·창설 부대장·주둔지

연대명	창 설 일	주둔지	창설 중대장	과거 경력
제1연대	1. 15	경기도 양주	정위 채병덕	일본군 소좌, 병기장교
제2연대	2. 28	충남 대전	정위 이형근	일본군 대위, 포병대위
제3연대	2. 26	전북 이리	부위 김백일	만주군 대위, 간도특설대
제4연대	2. 15	전남 광주	부위 김홍준	만주군 대위, 간도특설대
제5연대	1. 29	경남 부산	참위 박병권	일본군 소위, 학병
제6연대	2. 18	경북 대구	참위 김영환	일본군 소위, 학병
제7연대	2. 7	충북 청주	참위 민기식	일본군 소위, 학병
제8연대	4. 1	강원도 춘천	부위 김종갑	일본군 소위, 학병
제9연대	11. 16	제주도	정위 장창국	일본육사 사관후보생

33) 육군본부, 1956, 『육군발전사』 제1권, 일지편 3쪽.

34) 각 연대의 창설 과정은 다음을 참고. 육군본부, 앞의 책, 1959, 3~4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267~268쪽과 276~303쪽; 육군본부, 앞의 책, 1980, 333~367쪽; 한용원, 앞의 책 69~71쪽.

35) Sawyer, 앞의 책, 15쪽.

36) 「대동신문」 1946. 1. 30.

출전 : 『육군역사일지』・『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창군전사』・『창군』

국방경비대 창설기 각 연대의 창설 중대장을 살펴보면, 미군정의 국방경비대 장교 임용 원칙을 알 수 있다. ‘뱀부계획’에 따르면, 창설 연대장은 미군 장교들이 맡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다. 그러나 국방사령관 고문 이응준이 창설 중대장에 한국인 장교들을 임명토록 권유했고, 이것을 미군정에서 받아들였다. 채병덕은 일본육사 49기 출신으로 해방 당시 부평의 병기창 장교로 근무했으며 당시 계급은 일본군 소좌(소령)였다. 이형근은 대한민국 군번 1번(10001)으로 일본육사 56기 출신이며, 일본에서 포병장교로 근무하던 중 해방 당시 일본군 대위로 제대했다. 김백일은 만주 봉천군관학교 5기 출신으로 간도특설대 군관 출신(간도특설대 군관 5기)이었다.³⁷⁾ 그는 1945년 12월 최남근, 백선엽 등과 함께 월남해 군사영어학교에서 2주간 교육받은 뒤 부위로 임관했다. 김백일은 임관한 뒤 곧바로 제3연대장으로 부임했다. 김홍준은 김백일과 마찬가지로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박병권은 연희전문을 나온 학병 출신이었다. 김영환은 일본육사 출신의 김정렬의 동생으로³⁸⁾ 학병 출신이었다. 민기식은 만주 건국대학(建國大學)을 나온 학병 출신이었다. 김종갑은 연희전문을 나와 일본군 소위를 지낸 학병 출신이었다. 이들 중 이형근과 민기식은 각각 고향 부근 연대에 배치됐다.

이들이 창설 중대장으로 배치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과거 경력에 따라 임명된 경우이다. 제1연대부터 제4연대까지의 창설 중대장들은 부위 이상의 계급으로, 이들은 모두 일본육사(채병덕과 이형근)와 만주군관학교 및 간도특설대(김백일과 김홍준) 출신이다. 과거 일본군과 만주군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창설 중대장에 임명됐다. 둘째, 미군정은 국방경비대 창설 직후 창설 요원들이 부족한 탓에 학병 출신들을 창설 중대장에 임명했다. 제5연대부터 제8연대까지의 창설 중대장들은 모두 학병 출신으로 참위 계급이었다. 이것은 제1연대부터 제4연대까지의 창설 중대장들이 일본육사나 만주군 출신으로 군대 경험이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중 제8연대장 김종갑은 임관 때는 참위였으나 제8연대가 4월 1일 창설되는 것과 동시에 부위로 승진했다. 학병 출신들이 각 연대의 창설 중대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의 상급자들이 각 연대의 창설 중대장이나 제1연대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학병 출신의 창설 중대장들은 일본육사나 만주군 출신들로 교체됐다.

37) 김석범・정일권 지음, 앞의 책, 36쪽.

38) 김영환은 김정렬의 동생이다. 그의 집안은 일본육사 출신들이 많았다. 그의 큰아버지, 아버지, 형이 모두 일본육사를 졸업했다. 이후 김영환도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과했는데, 한국전쟁 때 전사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때 각 연대의 부대장들은 군사영어학교 졸업생들의 임관에서 확인되는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의 우대 원칙이 지켜졌다. 미군정 국방사령부는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을 각 연대의 창설 부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국방경비대 창설 요원들이 부족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학병 출신의 참위들을 부대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일본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자 학병 출신의 부대장들을 대부분 만주군 출신들로 대체했다.

미군은 특별한 제한이나 사상검열이 없이 ‘불편부당’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국방경비대원들을 모집했다. 당시 국방사령부 사령관의 고문이었던 이응준은 신원조사를 제안했으나 미군 장교들은 정보기구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⁹⁾ 이응준은 사병들의 모병에 주거지 경찰의 신분증명서를 첨부시켜 좌익 계열의 입대를 방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군 담당자가 군문에 들어오면 군율에 의해 통제되므로 그러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⁴⁰⁾ 치안유지와 군사단체에 대한 통제가 시급했던 미군의 입장에서 사상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또 이응준의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에서처럼 국방경비대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 즉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정보기구가 충분했다. 미군정 국방사령부는 군무국(軍務局)의 하부 부서로 정보과를 설치했는데, 사상문제를 포함한 국방경비대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가 주어졌다.⁴¹⁾ 국방경비대총사령부 정보과와 군기대(軍紀隊 : 헌병대의 전신) 등의 사찰기구가 설치돼 국방경비대 내부 동향을 감시했다. 또 국방경비대 이외의 사찰기구도 국방경비대 내부 동향을 주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와 미군방첩대(CIC)⁴²⁾ 그리고 경찰도 국방경비대를 감시했다. 미군정은 국방경비대가 정치와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불편부당’을 국방경비대의 이념으로 주입시켰다. 즉 국방경비대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군대와 정치를 분리시켰다. 이와 함께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 국내 치안확보에 전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⁴³⁾

국방경비대의 특성은 과거 일본군의 유산이 많이 있었던 점이다. 대다수 장교나 하사관들이 과거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 군사경력을 쌓았다. 자연 국방경비대에 일본군의 문화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천황의 군대’임을 자부하던 일본군은 특성이 있었다. 천황을 중핵에 놓은 엄격한 명령복종관계, 총검돌격만능론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정신주의,

3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8, 265~266쪽.

40) 이응준, 앞의 책, 241쪽.

41) 「자료 4 - 제4국(미공간 자료)」.

42) 미군방첩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정용욱, 2007, 「해방 직후 미군방첩대의 조직 체계와 활동」, 『한국사론』 53, 서울대 국사학과, 2007.

43) 「서울신문」 1946. 1. 29.

내무반에서 이루어진 사적 제재라는 이름의 처참한 린치,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각종 전쟁범죄 등이었다.⁴⁴⁾ 또 일본군은 군기를 유지하려고 폭력에 호소했다. 예를 들어 “모자 쓰는 법이 빼박하다”, “단추 하나 끼는 것을 잊었다”와 같은 복장에서, “병기의 손질이 소홀하다”, “방의 청소상태가 나쁘다”, “규정집을 암기하지 않았다”, “정렬이 느리다”, “대답이 느리다”, “소리가 작다”, “동작이 둔하다”, “태도가 건방지다”는 등 모든 것이 폭력의 대상이 됐다.⁴⁵⁾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유산을 철폐하는 조치들을 실행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6일 남조선국방경비대내무 위병 제도를 개정했다. 즉 일본식 내무위병제도를 폐지하고 이날부터 미국식으로 개정 실시했다.⁴⁶⁾ 또 8월 1일에는 일본식으로 행해져오던 하사관 상호간의 경례 제도도 폐지했다.⁴⁷⁾ 그러나 미군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기합과 구타라는 전통적인 일본식 군대 통솔법이 국방경비대에서도 그대로 답습됐다.⁴⁸⁾ 또 주요 무기기가 일본군이 남기고 간 일제 38식이나 99식 소총이므로 국방경비대는 여기에 맞춰 군사훈련(제식훈련, 총기분해, 전투훈련 등)을 진행했다.

그러므로 국방경비대에는 일본식과 미국식 군사훈련이 혼재했고, 때로는 일본군대식 훈련을 금지하려는 미군 고문관과 한국인 장교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경비대를 경찰예비대로 한정시키며 향후 국가건설 후 군대 창설에 대비해 군사훈련만을 시키려는 미군 고문관들과, 국방경비대를 군대로 기능케 하려는 한국인 장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중첩돼 한국인 장교들과 미군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싼 대립이 자주 발생했다.⁴⁹⁾ 이형근은 1946년 2월경 2연대에서 정신훈화가 일본군의 유산이라며 금지시키는 미군 장교와 대립했다. 이후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대리 겸 군기사령관에 임명된 그는 종종 미군과 갈등했다.⁵⁰⁾ 일본육사 출신의 정래혁과 이한림은 언어 문제 때문에 미군 교범을 따르지 않은 채 일본군대 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 문제로 미군과 한국인 장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정래혁은 미군 하사관을 구타한 뒤 국방경비대를 사직하고 경찰로 들어갔다. 그와 함께 이한림도 사직했으나 원용덕의 만류로 그만두지 않은 채 제1차 장교 보수교육에 참가했다.⁵¹⁾

44)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著 ; 최혜주 옮김, 『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 논형, 2005, 22쪽.

45) 와카쓰키 야스오 지음 · 김광식 옮김, 『일본군국주의를 벗긴다』, 화산문화, 1996, 67쪽.

46) 육군본부, 『육군역사일지』; 국방부, 1954, 앞의 책, 3쪽.

47) 『육군역사일지』

48) 장창국, 앞의 책, 91쪽.

49) 한용원은 이를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설명했다. 한용원, 앞의 책, 50쪽.

50) 이형근, 앞의 책, 29~32쪽.

미군은 국방경비대를 창설하기 전부터 국가가 수립됐을 때 한국군이 미국에 우호적인 기구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미군의 교리(敎理)를 받아들이도록 계획했다. 이 때문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해 입학생들에게 영어를 교육시켰다. 국방경비대 창설 후에는 직접 미군 교범을 번역해 사용토록 했다. 또 국방경비대의 최고 간부이면서도 미군 고문관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재교육시켰다. 1946년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미군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 군사영어학교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 경비사관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비사관학교 1기생들이 1946년 6월 15일부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사관학교 2기생들은 100일 만인 9월 24일에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⁵²⁾

국방경비대의 초기 특성 중 하나는 그 성격과 향후 전망이 불명확하고 이중적이었던 점이다. 뱀부계획을 실행하며 미군은 국방경비대의 성격을 경찰예비대로 한정했다. 그러나 국방경비대나 이 조직을 바라보는 일반의 여론은 국방경비대를 장차 국가가 수립되면 ‘군대’의 기간이 될 것으로⁵³⁾ 인식했다. 국방부 고문이었던 이응준은 국방부 소속 각 대원(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모두 지칭 : 인용자)은 정식 군대가 아니며 경찰과 더불어 치안확보를 하는 바탕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 정규군으로 될 기초를 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⁵⁴⁾ 경찰예비대이면서도 장래 군대 창설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은 국방경비대의 훈련에 반영됐다.

국방경비대 각 연대의 미군 고문관들과 한국인 지휘관들은 향후 군대 창설에 대비해 국방경비대를 운영했다. 경찰을 보조하는 기구라는 제한적 성격 때문에 아직 국방경비대에 미군 신무기가 보급되지 않았어도 장교들 중 일부는 주변의 미군 부대에서 신무기를 빌려오거나 미군 분대까지 데려다 국방경비대에게 미국제 신무기를 훈련시켰다.⁵⁵⁾

미군정은 국방경비대를 향후 수립될 국가의 ‘군대’로 기초로 삼겠다고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했다. 이것은 국방경비대의 운영에 직접 반영됐다.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의 명칭을 변경했다. 1946년 3월 29일 미군정 법령 제63에 따라 종래 국방사령부 산하의 경무국이 경무부로 독립했고, 같은 날 공포된 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했다. 즉 미군정은 종래 국방사령부가 관할하던 국방과 치안을 분리했고, 동시에 경찰과 국방경비대의 임무와 기능도 분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명칭을 다시 변경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51) 이한림, 위의 책, 65쪽; 육군본부, 앞의 책, 1981, 429쪽.

52) 육군사관학교삼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9쪽.

53) 「한성일보」 1946. 6. 23; 「동아일보」 1946. 11. 10.

54) 「동아일보」 1946. 4. 15.

55) Sawyer, 앞의 책, 24쪽.

대표단이 항의하자 6월 15일 미군정 법령 제86호를 발포해 국방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 한국은 이후 ‘통위부’로 사용)로 변경했다.⁵⁶⁾ 국방부의 통위부로의 명칭 변경은 국방경비대 운영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국방경비대는 6월 17일 이전까지의 각종 명령서에 ‘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6월 17일부터 각종 명령서에 ‘조선육상경비대’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⁵⁷⁾ 이후 6월 하순경부터 각종 명령서에 ‘국방’을 빼고 ‘조선경비대’만으로 기술했다.⁵⁸⁾

IV. 한국군의 지휘부 구성과 특성

미군정의 일본군(만주군 포함) 우대정책은 미군정기에 시행됐고, 이것은 정부수립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인물들이다.

<표2>역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육군 참모총장(1946. 1. 15-1950. 6. 24)

이름	직책	과거경력
원용덕	사령관	만주군
이형근	사령관	일본육사
송호성	사령관	광복군
이응준	참모총장	일본육사
채병덕	참모총장	일본육사
신태영	참모총장 대리	일본육사
채병덕	참모총장	일본육사

초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된 원용덕 만주군 군의(軍醫) 중좌 출신이었다. 그는 만주군 출신들과 함께 신정보안사령부를 조직한 뒤 소련군이 남하하자 월남했다. 월남하기 위해 38선을 넘던 도중 미군을 만나 자신을 소개한 뒤 서울로 들어왔다. 그 뒤 일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4~305쪽 참고.

57) 재조선미군정 조선육상경비대 총사령부, 「특명」 26호, 1946. 6. 17.

58) 6월 25일자 특명에는 ‘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이 사용됐으나 한 차례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명령은 누군가의 착오로 인한 기술의 잘못일 것이다. 재조선미군정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 「특명」 29호, 1946. 6. 25.

시적으로 국군준비대에 가담하는 등 사설군사단체의 건군운동에 참여했으나 곧 주한미군정의 소환을 받고 군대 창설에 협력했다. 그는 군사영어학교가 설립되자 한국인 부교장으로 임명됐다. 그 뒤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가 정식 출범하자 사령관에 임명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서 해임된 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간사로 보직 변경됐다. 그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하는 등 뛰어난 어학실력으로 주한미군정 국방사령부의 소환을 받았으나 만주군 군의관 출신이었다. 이 같은 과거 경력 때문에 여순사건 직후 진압군 사령부가 설치됐을 때도 자신의 휘하에 있던 부대마저도 지휘하지 못했다.⁵⁹⁾ 국방경비대와 육군 내에서 그의 역할은 군사 경력자라기보다는 만주군 출신들이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그의 뒤를 이어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대리에 발탁된 인물은 이형근이다.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는 주한미군정의 소환을 받고 국방사령부 고문 이응준의 통역관을 지냈다.⁶⁰⁾ 그 뒤 제2연대 창설 중대장에 임명돼 한동안 제2연대장으로 근무하다 원용덕의 후임으로 총사령관에 발탁됐다. 그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포병 대위를 지냈으며 해방 당시 일본 동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정식으로 군사영어학교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뛰어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군번 1번(10001)으로 임관했다. 그가 국방경비대 정식 사령관이 아닌 대리로 임명된 이유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친일과 청산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군 대위 출신이었던 그를 정식 사령관으로 임명할 없었다. 국방경비대 총사령 대리에 임명된 그는 광복군 간부 출신인 송호성이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자 부사령관으로 보직 변경됐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인 송호성은 광복군 출신이었다. 그가 총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일본군 잔재에 대한 국방경비대 내부의 거부와 광복군 출신이었던 통위부장 유동열의 후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경력자들에 비해 나이도 많았으며 동족상잔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다. 송호성은 1947년 초반기 김창룡이 공산주의자를 조사해 숙청하는 것에 대해 동족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1948년 2월 한 신문과의 대담에서 “남북(南北)이 갈려 있으면 물론 국방력도 이분(二分)되는 것이다. 삼천만이 한 덩어리가 돼도 외국 국방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상태인데 하물며 남북이 분립한다는 것은 민족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⁶¹⁾ 단선·단정에 반대했다. 송호성은 여순사건이 진압된 후인 10월 29일 귀경 기자회견에서 제일성으로 “이번 사

59) 한국전쟁후 헌병총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야전 경험이 부족한 그의 경력이 고려됐을 것이다.

60) 이 때의 인연으로 이형근은 이응준의 만사위가 됐으나 한국전쟁기 첫 부인은 부산에서 병사했다.

61) 『조선중앙일보』 1948. 2. 19.

건에서 얻은 것은 오직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는 소감을 밝히며⁶²⁾ 동족상잔(同族相殘)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시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송호성의 소감은 정부와 다른 군 지휘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진압작전을 지휘하던 중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동족상잔’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공산주의자·불순분자들의 책동이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이승만·이범석·채병덕 등 정부와 군부 핵심 지휘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그의 성향은 무능력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한미군 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송호성의 건강상의 문제로 야전 지휘관으로 부적절하고 야전상황의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대한민국에 충성스럽고 많은 군인들에게 존경받고 달변가(good talker)이므로 국방장관의 특사(special representative)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⁶³⁾ 이 때문에 송호성은 육군 최고 지휘부에서 탈락하게 됐고, 1949년 2월 4일 육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할 때 채병덕과 이응준으로 소장으로 진급했으나 송호성은 탈락했다.⁶⁴⁾ 이후 그는 호국군 총사령관과 제2사단장을 지냈으나 한국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성시백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보직 해임됐다. 결국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 후 월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이응준은 일본육사를 졸업한 뒤 일본군 대좌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한말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 육사에 진학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한인 유학생들은 우선 일본으로부터 군사 교육을 받은 뒤 기회를 엿봐 탈출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 결의에 따라 그의 일본 육사 동기였던 지대형(池大亨 :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의 본명)은 일본군을 탈출해 독립군에 합류한 뒤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다. 하지만, 이응준은 지대형과는 정반대로 일본군에 계속 남아 있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학병권유 연설’을 다니며 조선인 학생들에게 천황을 위한 전장터에 나서기를 권유했다. 그는 해방 당시 일본군 대좌로 원산 부두 및 철도 경비사령관이었으나 소련군이 참전하자 곧바로 월남했다. 해방 직후 그는 주한미군정청 국방사령부 고문에 임명돼 주한미군의 군대 창설에 적극 협력했다. 이후 그는 군사영어학교 마지막 임관번호인 10110번을 부여받은 채 정령(正領 : 대령)으로 임관했다. 이후 그는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감찰감과 여단장 등을 역임한 뒤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됐다. 1948년 11월 20일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그는 여순사건 직후 숙군을 주도하는 등 육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각종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62) 『동아일보』 1948. 10. 31.

63) 이 서한은 제목이 없다.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12 NOVEMBER 1948.

64) 주한 미군 보고서의 논평에서 미군 고문관이 그를 능력있는 장교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G-2 P, #1065, 1949. 2. 15~2. 16.

여순사건 직후 그는 ‘사병훈’과 ‘국군 3대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소(분)대장에게 배포해 매일 아침 낭독케 했다.⁶⁵⁾ 그는 ‘강·표월복사건’이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육군 참모총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그는 제3사단과 제5사단장 등을 역임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이했다.

이응준으로 후임으로 일본육사 출신인 신태영이 임명됐다. 그는 이응준과 일본육사 동기였으나 해방 직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특별 임관됐다. 그는 이응준을 대신해 임시로 육군 참모총장 대리에 임명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채병덕이 임명됨으로써 육군참모총장 대리직에서 물러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방부 총참모장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됐던 채병덕은 일본육사를 졸업한 병기장교 출신이었다. 그는 국방경비대가 처음 편성될 때 제1연대장이었으나 부정부패 사건에 항의하는 제1연대원들의 시위가 있는 뒤 보직 해임된 뒤 특별부대 사령관 등을 지냈다. 그의 군대경력 중 한 가지 특징은 야전 지휘관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해방 전 부평의 일본군 조병창의 병기 장교였으며, 해방 후 국방경비대 시절에도 제1연대장·여단장·특별부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방부 총참모장에 임명됐다. 일제시기와 해방후 경력에서 볼 때 그가 실전에서 경험을 쌓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다른 지휘관들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이응준과 김석원은 일제시기 실전을 경험했으며, 해방 직후에도 여단장이나 사단장 등으로 실전에 참가했다. 이응준은 1949년 여단장 시절 태백산 지구를 통해 내려오던 북한의 유격대와 전투를 치렀고, 김석원 역시 제1사단장으로 개성방면의 38도선 충돌 전투를 직접 지휘했다. 그가 군번 문제로 시기했던 이형근 역시 보병장교 출신이었으며 영어에 능통했던 반면, 채병덕은 전투에는 경험이 없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지휘관이었다. 결국 그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군참모총장 직에서 물러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남 하동에서 전사했다.

전체적으로 한국전쟁 전까지 국방경비대와 육군의 최고 지휘관은 일본 육사 출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1946년 12월부터 2년 동안 광복군 제1지대장 출신인 송호성이 임명됐다. 비록 송호성이 사령관이고 통위부장 또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광복군 출신들이 특별하게 우대받은 것은 아니었다. 숫자도 일본군과 만주군에 비해 소수였을 뿐 아니라 오동기의 예에서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탈락한 인물도 나타났다. 광복군 출신들 중 야전지휘관이었던 채원개는 1949년에 탈락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많은 광복군 출신들이 입대했으나 이미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

65) 이응준, 앞의 책, 266~267쪽.

이 핵심 보직을 장악한 가운데 일부만이 사단장에 임명됐다. 다음으로 여단장과 각 사단장에 임명된 장교들을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는 역대 여단장 및 사단장을 정리한 표이다⁶⁶⁾

<표3 > 한국전쟁 전 여단장 및 사단장

부대명칭	여단장및사단장	주요경력(해방전/해방후)
1사단	송호성	광복군 1지대장/국방경비대 사령관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김석원	일본육사, 일본군 중좌/제1사단장
	유승렬	일본육사, 일본군 대좌/사단장
	백선엽	만주봉천군관학교, 간도특설대/ 육군 정보국장, 육군참모총장
2사단	원용덕	만주군 군의/국방경비대 총사령관, 헌병대 총사령관
	채원개	광복군/여단장, 1949년 불명예파면
	유승렬	일본육사/일본군 대좌
	송호성	광복군/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유재흥	일본육사, 일본군 대위/사단장
	이형근	일본육사, 일본군 대위/최초 도미유학생, 육군참모총장
제3사단	이응준	일본육사, 일본군 대좌/국방경비대 감찰감, 육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채원개	광복군/여단장/1949년 파면
	최덕신	광복군/사단장, 거창사건 책임자
	이응준	일본육사/일본군 대좌/국방경비대 감찰감
	김백일	만주봉천군관학교, 간도특설대/제3연대장, 웅진지구 전투사령관, 지리산전투사령관
	유승렬	
5사단	김상겸	폴란드군/제주경비사령관
	김백일	
	원용덕	세브란스 의전/만주군 군의/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백선엽	만주봉천군관학교/만주군/연대장

66) 1949년 5월 12일 기존의 여단들이 사단으로 승격했고 사단장도 기존의 여단장들이 계속 유지했다.

	이응준	
6사단	채병덕	일본육사, 일본군 소좌/제1연대장, 제4여단장, 국방부총참모장, 육군참모총장
	유재흥	일본육사/일본군 대위
	김백일	
	유재흥	
	신상철	일본육사, 일본군 소위/제15연대장, 사단장
	김종오	학병 소위/제8연대장
7사단	이준식	광복군/사단장
	유재흥	
8사단	이형근	
	이성가	중국중앙군관학교, 중국군 소교/제1연대장
수도경비사령부	권준	광복군/수경사령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여단장 및 사단장 등 일선 최상급 부대를 살펴보면 국방경비대와 육군의 지휘부 구성이 잘 나타난다. 광복군 출신으로 사단장을 지냈던 송호성, 채원개, 최덕신, 이준식, 권준 등이었다. 반면 일본육사 출신들은 이응준, 김석원, 유승렬, 유재흥, 이형근, 유재흥, 이종찬, 신상철 등이었다. 만주군 출신으로는 원용덕, 김백일, 백선엽 등이었다. 학병 출신 중에는 김종오가 유일하게 사단장을 역임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사단장에 임명된 가운데 광복군 출신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해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을 우대했던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일선 사단장 중 몇몇은 광복군 출신들이 임명되기도 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군의 창설과정은 미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평가는 한국군 지휘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국방경비대와 육군 지휘부 구성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국방경비대 창설 때는 일본육사들이 상대적으로 국방경비대와 육군의 지휘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본육사를 졸업했던 일부 장교들은 지휘권을 놓고 주한미군 고문관들과

대립했다.⁶⁷⁾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한국인 지휘관과 미군 고문관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싼 대립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군과 미군이 다른 군사문화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학병이나 지원병 출신들과는 달리 이들은 정규 일본육사를 졸업한 군사엘리트였으며, 다른 어느 집단보다 일본군의 문화가 강력했던 집단이었다. 이 때문에 해방 후에도 일본군의 문화적 유산이 잔존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정신 교육을 강조했으나 미군 고문관들은 이를 금지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를 둘러싼 미군 고문관과 한인 장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일본육사 출신들은 이 때문에 국방경비대를 그만 둔 뒤 경찰에 투신하기도 했다. 미군 고문관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육사 출신들 중 대위급 이상의 경력자들은 국방경비대 창설 때부터 군내 최고 지휘부를 형성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육군참모총장은 모두 일본육사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둘째로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육군으로의 전환기에 과거의 경험이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는 만주군 출신들이 일제시기 일본의 군사고문단의 고문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문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해방 후 미군과 호흡이 일치됐다고 평가됐다.⁶⁸⁾ 부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지만 해방 직후 정세에서 이들이 군의 지휘관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자신들의 역량을 해방 후 정세와 국방경비대의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만주군 출신들은 과거 일제시기 항일 빨치산을 진압한 경험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간도특설대 출신들은 다른 어느 집단에 비해 실전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주에서 쌓은 경험을 국방경비대와 육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순사건 진압작전과 그 이후의 빨치산 진압작전에서의 만주군 출신들의 활약이다. 만주군 출신들은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진압작전 등에서 현지 전투사령부의 최고 지휘부를 구성하며 실전에 투입됐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백일과 백선엽, 그리고 정일권 등이었다. 김백일은 제5여단장으로 부임해 만주군 군의 출신인 원용덕을 배제한 채 여순사건 직후 현지에서 진압병력을 총괄 지휘했다. 백선엽은 참모장으로 작전을 조율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또 과거 만주군에서 정보 계통에서 일한 경험을 십분 발휘해 여순사건 직후의 숙군을 주도했다. 정일권은 1949년 이후 3월 이후 지리산전투사령부가 구성됐을 때 빨치산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광복군 출신들은 주한미군정 시기에 유동열이 통위부장으로 근무했으므로 송호성 국방경비대 사령관 등의 직위에 임명됐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오히려 일본군이나 만

67) 한용원, 앞의 책, 41쪽.

68) 한용원, 앞의 책, 50쪽.

주군 출신들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임관한 광복군 출신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으며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못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직으로 내몰렸다. 특히 광복군 출신들은 김구와의 관련성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는 오히려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으로부터 배척받게 됐다.

해방 후 국방경비대와 육군의 주요 지휘관으로 일본육사 출신들과 만주군 출신들이 육군의 지휘부 자리 잡았다. 이것은 주한미군정이 과거 경력과 함께 해방 직후 정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전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1948년 제주도에서 ‘4·3항쟁’이 발생하고 제주도 제9연대장 김익렬이 평화협상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자 미군정은 그를 해임하고 국방경비대 인사국장이었던 박진경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그가 발탁된 이유는 영어에 능통했던 점도 고려됐지만 일제 말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 때문이었다. 또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진압작전이나 38도선 충돌 등 준전시의 상황에서 전투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지역에는 과거 만주군 간도특설대나 일본군에서 실전경험이 입증된 인물들이 중용됐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석원이었다.

김석원은 과거 중일전쟁 시기 일본군 1개 대대로 중국군 1개 사단을 물리쳤던 공로로 일본 천황의 은사금을 받은 일본군지휘관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 군사훈련을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또 과거 일본군 출신들과 함께 ‘육해공군동지회’를 조직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군대 창설에 관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별 효과가 없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하자 육군에 입대해 38선 경비를 맡고 있었던 육군 제1사단장에 임명됐다. 그의 전투방식은 전형적인 일본군 방식이었다. 적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돌진하던 방식이나 ‘육탄 3용사’와 비슷한 ‘육탄 10용사’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은 그가 제1사단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김백일은 만주 간도특설대 군관 출신으로 만주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했던 경험의 소유자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일권은 과거 만주군 헌병 장교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과거의 경험에 바탕으로 예관수와 함께 중국에서의 유격전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책을 편역했고, 그러한 그의 경력을 인정받아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에 발탁됐다. 만주군 출신의 장교들은 과거 만주에서의 경험과 같이 대비정규전을 수행했고, 점차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김백일은 여순사건 당시 군의관 출신인 원용덕을 대신해 진압부대 작전 전체를 지휘했다. 당시 후방부대 사령관이었던 김백일은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제5여단장에 발탁됐는데, 5여단장이었던 김상겸 대령이

제주도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됐으므로 공식이 된 것이 이유였지만 만주에서 빨치산 토벌의 실적과 그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성격이 높이 평가돼 소방관 역으로 등용됐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은 김백일을 “전투 지휘에 있어 그의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출중했으며 전기(戰機)를 폭착하는 눈은 발군이였다. 그는 육군본부가 요망하는 바를 충분히 응해 주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를 소방관 역으로 웅진과 지리산의 토벌군 지휘관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대군을 지휘하는데 경험과 기량적 면에서 문제가 있어 그의 전술은 게릴라 토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투에는 강했으나 전략 능력면에서는 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⁶⁹⁾ 1949년에도 빨치산의 활동이 계속되자 김백일은 다시 지리산 지구전투사령관에 발탁됐다. 이곳에서 그는 지방조직망을 조직하고 자위대를 부락단위로 편성했으며, 지리산 골짜기 깊은 곳의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출입금지구역을 만들어 비민분리를 했고, 또 양도차단(糧道遮斷)의 방법과 전향공작 등을 전개했다.⁷⁰⁾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만주군이 항일 빨치산을 진압할 때 사용했던 ‘비민분리(匪民分離)’ 진압 방식을 지리산에서 재현한 것이었다. 반면 만주군 군의관 출신으로 국방경비대 창설 때부터 관여하며 국방경비대의 고위직을 전전했던 원용덕은 실제 전투지휘관으로는 합당치 못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제2여단의 병력조차 김백일에게 양보해야 하는 등 점차 전투 현장과는 멀어져 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일선부대를 전전하지 않은 채 오히려 헌병대 사령관에 임명됐다. 그의 임명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한 경력 탓일 수도 있다.

69) 사사키, 앞의 책, 334쪽.

70) 김종문 편저,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제1집, 국방부, 1955, 65~66쪽.

국군의 여수·순천 진압작전

김 득 중(성균관대)

- I. 머리말
- II. 학구전투와 순천진압작전
- III. 여수진압작전
- IV. 진압작전의 성격
- V. 여순진압작전이 국군에 끼친 영향

I. 머리말

10월 19일 제14연대 하사관·사병들이 봉기 한 이래,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했다. 봉기 첫날에는 여수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전투가 발생했고, 다음날에는 여수와 순천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 여순사건 초기에 발생한 이 전투들은 경찰의 무참한 패배와 봉기군의 승리로 끝났다.

순천을 장악한 봉기군은 북상하여 진압군과 학구에서 최초의 전투를 벌인다. 그러나 학구 전투에서 후퇴하기 시작한 봉기군은 이후 정규군을 상대로 이렇다 할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학구 패배 이후 봉기군은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기의 지속과 확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수세적인 상황에서도 진압군을 상대로 한 산발적인 습격과 승리가 있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후 봉기군은 산악지대에 들어가 유격전을 전개하게 된다.

이 글은 진압군 활동을 중심으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진 전투를 살펴보고자 한다. 60여 년 전에 일어난 전투나 군사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과 2차 연구문헌들을 통해 보면 당시의 대체적인 흐름이 파악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기 이후 진압군 대응을 중심으로 당시 학구, 순천, 여수의 전투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전투 당시에 정부군의 처지와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군대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

1) 전투 상황에 대한 서술은 김득중, 2007,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23~294쪽을 대부분 참고했다.

둘째로는 ‘초토화작전’으로 요약되는 여순지역 진압작전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순진압작전은 국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고 육·해·공군이 참여한 종합 작전이었다. 군 지휘부는 이러한 점에 여순진압작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어느 전투이든시간에 완전히 비정치적이거나 완전히 군사적인 성격만으로 구성된 전투는 없다. 전쟁이 물리적 방법으로 타인을 굴복시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정치와 군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여순사건 진압작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군대의 ‘종합훈련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작전이 정식 군대가 아닌 봉기군·지방좌익 세력을 ‘적’으로 삼아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민간인 살상 작전은 제주도에서 더욱 격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여순진압작전이 이후 국군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구전투와 순천진압작전

초기의 진압작전 준비

광주 4연대 부연대장이었던 박기병은 상관의 공식으로 사실상 지휘 책임을 맡고 있었다.²⁾ 사건 발발 소식을 들은 그는 일단 부대에 비상을 거는 한편 즉각 서울에 있는 육군 총사령부와 미 임시군사고문단에 보고한 뒤 연대병력을 비상소집 했다.³⁾ 그 뒤 여수경찰서가 췌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연대의 1개 중대가 순천 북쪽에 위치한 학구를 경유하여 순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주를 떠났고, 남은 병력은 출동을 준비했다.

여수봉기 소식은 서울에도 바로 전해졌다. 봉기 소식을 들은 서울의 미 임시군사고문단 수뇌부는 10월 20일 오전에 관계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H. S. Roberts)가 소집한 이 회의에는 미군 측에서 경비대 고문 하우스만(James H. Hausman), G-2 소속의 존 리드(John P. Reed), 전 5여단 고문인 트레드웰(J. H. W. Treadwell) 대위, 현 5여단 고문 프라이(Robert F. Frey) 대위가 참석했고, 육군에서는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백선엽 정보국장, 고정훈 정보장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 진압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일단 광

2) 佐佐木春隆, 1977, 『한국전 비사 - 건군과 시련』(상), 병학사, 321~323쪽. 광주 제5여단장인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되어 제주도에 가 있었고, 참모장인 오덕준은 제주에 파병될 14연대의 환송을 위해 여수에 있었다. 또 광주 주둔 제4연대장 이성가는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당시에 광주에 남아있던 최상급장교는 4연대 부연대장인 박기병 소령이었다.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 - 해방과 건군』, 458쪽

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⁴⁾

이 회의를 주도한 것은 미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미군은 진압작전을 펼칠 때에는 미국인 군사고문단 장교를 대동하도록 했다. 하우스만은 미 임시군사고문단을 대표하는 작전 책임자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됐다.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의 한국군 측 업무는 백선엽과 김점곤 두 사람이 주로 담당했는데, 백선엽 정보국장은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서 참모장을, 김점곤 정보 과장은 작전·정보·병참 업무를 담당했다.⁵⁾ 박정희는 김점곤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⁶⁾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 옆에는 미 군사고문관 하우스만 대위와 2명의 미 고문관이 작전을 구상했다.⁷⁾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광주 제5여단 사령부에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진압작전에는 서울과 대북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병력 그리고 제주도항쟁을 진압하는 데 투입된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되었다.⁸⁾

이에 따라 대전(제2연대), 전주(제3연대), 광주(제4연대), 부산(제5연대), 대구(제6연대), 군산(제12연대), 마산(제15연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가운데 총 11개 대대가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들 병력 중 제2연대는 원용덕이 지휘하는 제2여단으로 소속되었고, 제3, 4, 12연대는 김백일이 지휘하는 제5여단에 소속되었다. 제6, 15연대는 송호성 준장이 직접 지휘했다. 부산의 5연대는 해안경비대와 함께 여수 앞 바다에서 해상작전을 전개했다.

14연대의 진압을 위해 4연대 병력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진압작전 초기에 쟁점이 되었다. 군 수뇌부는 14연대의 봉기가 다른 부대로 파급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⁹⁾ 제4연대는 제14연대의 모체가 된 부대였으므로 봉기군에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4연대 선발 중대가 순천에서 봉기군에 합류한 사실은 이 점을

4) G-3 Section, II 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and the 6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0 November 1948, p.3 ; 짐 하우스만, 짐 하우스만, 정일화(역),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71~172쪽 ; 백선엽,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64쪽 ; HQ,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Special Orders, 23 August, 1848 ; 3 January, 1949 ; 7 May, 1949, Arno P. Mowitz Jr. Papers, 미 육군군사연구소(USAMHI, United State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소장

5) 佐佐木春隆, 위의 책, 335쪽

6) 조갑제, 1998,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 조선일보사, 213쪽 ; 백선엽, 앞의 책, 165~166쪽.

7) R. K.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39쪽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59~460쪽 ; 육군본부, 1954, 『공비토벌사』, 15~16쪽 ; 존 R. 메릴,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사상사, 209쪽

9) 佐佐木春隆, 앞의 책, 333쪽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육군은 4연대를 진압작전에 동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미국 고문단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봉기가 빨치산 유격투쟁으로 전화하여 계속 말쑥거리로 남게 되는 것을 가장 염려하여 시급한 봉기 진압을 주장했다. 하우스만은 만약 4연대가 봉기군에 합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군대도 마찬가지로 일것이고, 어느 정도 공산조직이 침투하지 않은 부대는 없으므로 4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봉기 진압에서는 첫 조우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게 일차 공격을 가해 봉기군의 자만심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대가 봉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제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미 임시군사고문단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만의 주장은 관철되었다.¹⁰⁾

학구 전투

박기병이 지휘하는 대대가 10월 21일 학구 방면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최천(崔天) 부청장이 지휘하는 전남8관구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200여 명이 있었다. 진압작전에 나선 장병들에게는 반란군에 대한 적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작전 참여를 기피하는 장병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작전 초기에 지휘관들은 진압군 내부에서 사병들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박기병 부연대장은 진압군 철모에 백색 띠를 두르도록 지시하였다. 봉기군과 진압군을 서로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학구(鶴口, 현재 순천시 서면)는 구례-남원 방면과 승주-화순-광주 방면으로 갈라지는 삼거리로서 순천에서부터 북상하는 봉기군으로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요충지였고, 진압군으로서는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봉기군과 진압군의 첫 전투는 10월 21일에 벌어졌다. 정오경에 열차로 학구리 남쪽 비월리에 도착한 600여 명의 반란군은 오후 1시부터 동쪽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진압군을 공격하여 이를 지키고 있던 4연대를 후퇴시켰다. 이후 소규모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란군이 보강되자 진압은 더 어려워졌다.

저녁때까지 진압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박기병은 병력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떠나고, 이성이 제4연대 연대장이 지휘를 맡았다.¹¹⁾ 그 뒤 3연대 2개 대대 병력, 백인엽이 지휘하는 제2대대(김희준 대위), 제3대대(이우성 대위)가 합류하여, 진압군의 병력 우위가 확실해지자, 진압군과 대치하던 반란군은 23일 오전 8시 돌연 학구에서 퇴각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학구에서 증원된 진압군의 공격을 받아 후퇴한 봉기군 중 일부는 순천과 광양방면으

10) 짐 하우스만, 앞의 책, 175~176쪽 ; 존 R. 메릴, 앞의 책, 208쪽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59쪽

로 퇴각해 갔고 또 일부 병력은 투항했다.¹²⁾ 봉기군이 학구에서 퇴각하자 김백일 제5여단장은 제12연대(백인엽)와 제3연대 제2대대(조재미)를 지휘하여 곧바로 순천 공격에 나섰고, 학구에는 제4연대(1개 대대)와 여단 하사관 교육대를 남겼다. 제4연대가 반란에 합류할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학구전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순천, 여수에 비하면 학구에서 벌어진 전투는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전투의 규모는 작았지만, 학구 전투는 이후 여순사건의 전향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학구 전투는 진압군과 봉기군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첫 번째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동료였던 봉기군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진압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진압군의 전투 의지는 매우 약했기 때문에 지휘관은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탈자나 반란 합류자가 생기지 않을지에 무척 신경을 써야만 했다. 만약 진압군이 자신의 동료였던 봉기군에 합류한다면 갓 태어난 이승만 정권의 체제에 재앙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반란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진압하러 출동했던 정부군이 반란군 편으로 속속 넘어왔기 때문에 반란군은 학구에서도 사병들을 설득하여 자기 편에 합류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합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학구 전투에 참가한 진압군의 사병들과 장교들은 반란군의 회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고, 병력 집중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반란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 학구 전투는 이 점을 확인시켜준 전투였다.

두 번째로, 진압군이나 반란군이 똑같은 정규군이기는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인 기동력, 통신, 가용 병력 수에서 반란군은 열세일 수밖에 없었고, 군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반란군 패배는 예고된 것이었다. 10월 22일 각각 병력을 증원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은, 정부군의 병력이 속속 보강되면서 우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군사적 열세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봉기지역을 급속하게 넓히면서 봉기를 확산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기군의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봉기군의 목표는 이런데 있지 않았던 것 같다.

학구에서 반란군은 ‘전투’에서의 패배했기 때문에 후퇴한 것이 아니라, 병력의 열세를 감지하고 자진하여 ‘돌연’히 퇴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구 전투에서 진압군은 봉기군 1개 중대를 포로로 잡았다는¹³⁾ 기록이 있지만, 당시 정부군의 「전투상보」는 학구 전투에서 반란군 포로가 16명, 사상자가 10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¹⁴⁾ 학구리에 집중

12) HQ, USAFIK, *G-2 Weekly Summar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No. 163(1948. 10. 22~10. 28))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58~459쪽

된 양쪽의 병력수가 1,000여 명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학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봉기군의 전투 자세는 순천과 여수에서 반복되었다. 진압군은 병력을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봉기군은 시민들과 같이 일정 부분을 방어하고 퇴각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 봉기에 합류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반복된 패턴이었다.

세 번째로, 이 전투에서 반란군이 패퇴함으로써 정부군은 승기를 잡고 순천-여수 공략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반란군은 순천-여수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은 학구, 보성, 광양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는데, 학구는 구례를 통해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길이기도 했지만 화순을 거쳐 광주로 진입할 수 있는 갈림길이기도 했다. 만약 학구 전투에서 반란군이 승리했다면 광주방면으로 반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구 전투의 패배로 이제는 더 이상 봉기를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순천 진압작전(10. 21~10. 23)

학구 전투 이후의 진압작전은 순천 탈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순천 진압에 성공한다면 여수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봉기군의 기세가 커져 버려 다른 연대에 있는 ‘불평분자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봉기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봉기군의 태세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정부에 충성스러운 병력을 총집중하여 공격해야만 했다.

순천작전은 세 방면에서 포위공격하기로 결정되었다. 북쪽의 주요 공격에는 제3, 4, 12연대를 배치했다. 보조공격은 동쪽에서 최남근이 이끄는 15연대 제1대대가 광양을 경유하여 순천을 향하기로 하고, 서쪽에서는 오덕준이 이끄는 4연대 제1대대 병력이 보성을 거쳐 순천을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덕준의 4연대 제1대대 병력 중 2개 중대 병력이 보성에서 매복공격을 받고 와해되고,¹⁴⁾ 최남근의 15연대는 21일 아침 광양 옥곡면에서 공격을 받아, 최남근 연대장과 제1중대장이 생포되고 대대장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다. 결국 주력을 도와 동쪽과 서쪽에서 공격하기로 했던 진압군 병력이 무너져 버림으로써 순천을 공격하는 부대는 주공(主攻) 세력만이 남은 꼴이 되었다.

이 무렵 광주의 송호성 사령관은 진압군 병력을 집중한 다음에 순천을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김백일과 백선엽은 전화 연락을 통해 이를 무시한 채 즉각

14) 「제5여단 순려(順麗) 전투부대 전투상보 제1호」,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1949, 『전투상보』, 12쪽

15) 佐佐木春隆, 앞의 책, 338~339쪽

공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압군의 순천 공격은 10월 21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10월 21일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의 송호성 사령관을 만나 봉기군을 맹공격 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순천과 여수를 조속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란세력으로부터 이곳을 해방시키는 것은 선전 상 중대한 가치를 갖는 도덕적·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다.”¹⁶⁾

10월 21일 오후 4시경 순천 교외에서는 백인엽 부대와 봉기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했다. 백인엽이 지휘하는 12연대 2개 대대병력은 주요 도로에 배치되었다. 한편 순천에 있던 약 2개 대대 병력 정도의 봉기군은 이 부대도 순천에서 봉기에 합류한 4연대 일부 병력처럼 자신들에게 합류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봉기군은 이 진압군을 4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⁷⁾ 그러나 12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봉기군을 순천교와 동순천역 방향으로 몰아갔고, 새로 지급받은 81mm 박격포로 봉기군이 모여 있던 국민학교와 경찰서 부근에 포격을 가했다.¹⁸⁾

양측은 서로 “항복하라”, “우리 쪽에 합세하라”는 등의 말을 주고받기도 했으나,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진압명령을 어긴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제12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김응록 중위가 작전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다.¹⁹⁾ 진압작전의 승패를 가늠하게 될 순천 공략에서 동쪽의 15연대, 서쪽의 4연대 병력이 와해된 데다가 결국 일부 군 장교들이 우려했던 대로 진압군 부대가 봉기군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진압군은 순천시내에 진출하여 시가지를 점령했으나, 저녁이 되자 외곽지대로 빠져 주변의 방어선을 굳혔다.²⁰⁾ 이날 밤 대전의 2연대 제1대대(崔鍾倫 대위)와 강필원 대위가 지휘하는 수색대의 기갑부대가 증원됐다. 남원을 거쳐 순천에 도착한 기갑부대는 10월 22일 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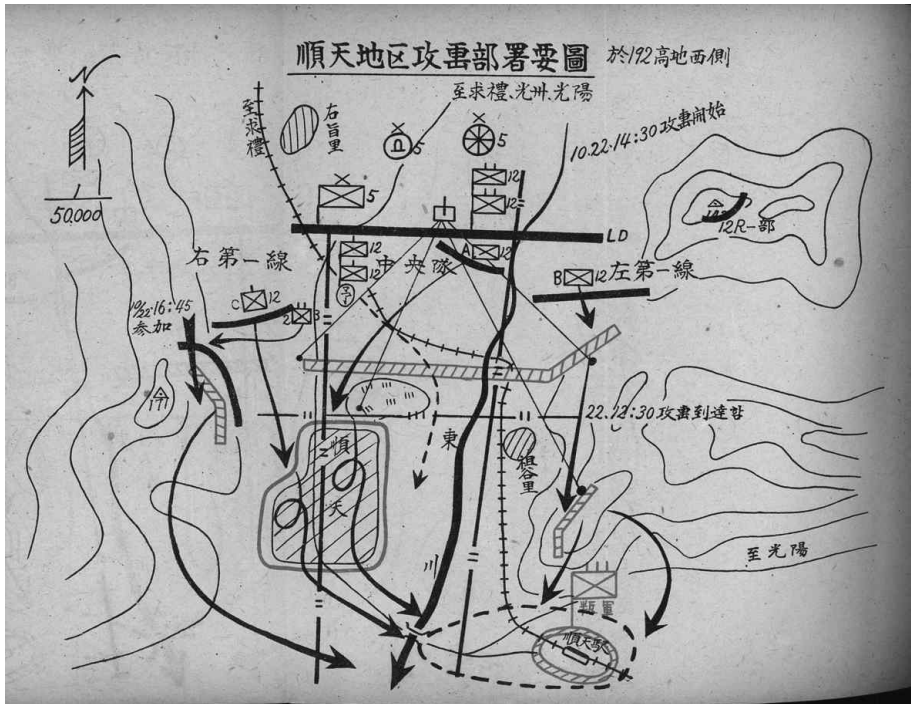
16)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 264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62쪽

18) 진압군은 사전에 박격포 사용법을 교육받지 못하여, 새로 지급받은 80mm 박격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순천작전에서는 안전핀도 빠지 않은 채 사격하여 폭발하지도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 박격포에는 조준경이 달려 있지 않아서 사거리와 사격방향을 어렵짐작으로 낸 다음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순천 시내 민가를 포격하는 사태도 벌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63쪽

20) 佐佐木春隆, 앞의 책, 349쪽



<그림 1> 진압군의 순천 공격 계획

10월 22일, 김백일 제5여단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격한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계엄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압군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계엄 발표는 민간인을 통제하는 용이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군이 압도적 권한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수행하려는 법적인 포석이었다.

봉기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삐라 살포를 통한 선무공작을 진행하면서 군과 경찰당국은 순천관내 주암지서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순천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백일 여단장이 지휘하는 진압부대는 장갑차 부대를 앞세우고 순천으로 진격했다. 제3, 4, 12연대의 병력은 박격포 사격을 해대며 순천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전투는 순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인 매곡동 근처에서 치열하게 벌어졌고,²¹⁾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공격을 멈추었다. 12연대를 주력으로 하는 진압군은 저항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한 L-4 연락기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10월 23일 오전에 순천 작전을 펼쳤다. 진압

21) 정종균, 1982, 「미제와 리승만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어난 려수군인폭동」, 『력사과학』 1호, 28쪽

군의 길을 인도한 것은 순천 지역에서 강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국학생총연맹의 간부들이었다.²²⁾

순천 탈환작전은 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는 아니었다. 10월 21일 진압군이 순천 진입을 시도하자, 병력의 열세를 절감한 봉기군 주력은 이날 밤 시내를 탈출하여 본부를 광양으로 이동시켰다.²³⁾ 순천에서 진압군에 저항한 세력은 잔류했던 14연대 봉기군과 순천 여러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시민 무장대 그리고 순천군 각 면에서 올라온 무장대들이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죽창과 경찰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²⁴⁾ 진압군이 순천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연대 봉기군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진압군의 훌륭한 작전 덕택은 아니었다.

순천 진압작전을 주도했던 김백일은 반군 외에도 무기를 소지한 치안대, 학생, 민에 청원들과 협력자를 색출하기 위해 집집을 수색했다.²⁵⁾

김백일은 순천 남국민학교에 여단사령부를 설치하고 각 부대에게는 경비구역을 정해 주었다.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순천 시내에는 진압 군인들로 꽉 찼다. 선제공격부대인 12연대(2개 대대), 3연대(1개 대대), 2연대(1개 대대), 4연대(1개 대대)의 5개 대대와 장갑부대, 전투사령부가 있었고, 여기에 서울 등지에서 파견된 경찰부대까지 들어와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III. 여수진압작전(10. 23~10. 27)

여수봉기 사실을 접한 서울의 해안경비대 본부는 진압작전을 위해 10월 22일 임시정대(臨時艇隊)를 편성했다. 임시정대는 여수 앞 바다에 머물면서 봉기군이 다른 섬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한편 육군부대와 협조하여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산에 주둔하고 있다가 천안호(LST)를 타고 온 부대는 김종원이 지휘하는 5연대 1대대였다. 10월 23일 새벽에 도착한 김종원 부대는 09시 40분 곧바로 여수 상륙을 시도했다. 이 공격은 여수에 대한 진압군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사전 정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이 발포하지도 않았지만 김종원이 이끄는 5연대 병사들은 육지를 향해 ‘맹목적으로 난폭하게’ 목표 없는 사격을 감행한 다음 여수 항구 쪽으로 상륙을 시도했다. 미 임시군사고문단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결과는 ‘재앙’이었다. 일

22) 이철승, 1976, 『전국학련』, 중앙일보·동양방송, 345쪽

23) 「유창남 인터뷰」, RG 338 Entry 11071 Box 2, Yosu Rebellion

24) 정종균, 1982,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일어난 여수군인폭동」, 『력사과학』 1호, 28쪽

25) 『동광신문』, 1948. 10. 27.

단 수적으로도 진압군은 봉기군에 열세였다. 봉기군은 기관총을 쏘아대며 강력히 저항했다.²⁶⁾ 또한 다른 해안경비대 선박과는 아무런 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상륙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적에게 아군을 노출하고 탄약만 써버리는 ‘용서할 수 없는 낭비’를 저지른 결과가 되었다.²⁷⁾ 결국 김종원은 전투사령부 본부로부터 상륙하지 말 것을 지시 받았다.²⁸⁾

한편 10월 23일 육지에서는 진압군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날 김동성 공보처장은 “여수는 23일 상오 8시 30분에, 순천은 동 6시 30분에 각각 완전히 탈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해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오전 9시 30분경 시작되었으므로, 이날 아침 8시 여수에는 진압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시간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아직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수가 탈환되었다는 허위 발표를 할 만큼 쫓기고 있었다.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송호성 준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처음으로 진압작전의 선두에 나섰다.²⁹⁾ 공격부대는 송석하 부연대장이 지휘하는 3연대 1개 대대와 장갑차부대였고, 제5연대 병력을 비롯한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여전히 여수만을 포위하고 있었다.³⁰⁾

송호성은 봉기군을 설득하려고 확성기를 통해 봉기군 청년장병들에게 호소했으나 대화가 쉽지 않았다. 송호성이 여수 초입인 미평면 오림리(일명 원구부, 잉구부)에 이르자, 이 일대에 매복하고 있던 봉기군은 기습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송호성은 고막이 찢어지고, 반격에 놀라 긴급히 후퇴했다.

이날 해안으로부터의 상륙작전도 육지와 똑같이 실패했다. 24일 오전 8시경, 여수 동쪽 해안에서는 일부 함정이 여수 신항에 상륙하려다 철수했고, 3척은 봉기군이 사격하는 소총탄을 무릅쓰고 구항을 통과하여 신월리 앞 바다에 한 시간쯤 멈추었다가 다시 회항했다. 이날 함정에서는 여수와 돌산도를 향해 사격을 했으나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로우는 기본적인 군사 작전의 원칙조차 망각한 채 상륙에 안달이 나서 사격하는 군인들을 보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군인(trigger-happy soldier)’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³¹⁾ 하지만 후일 국군은 이러한 행동을 함포도 없는 미비한 상태에서 소총으로 싸운 ‘영웅작전’이라고 평가했다.³²⁾

26) HQ, USMAG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25 ; HQ, USAFIK, *G-2 Weekly Summar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No. 163(1948. 10. 22~10. 28)

27) Captain Howard W. Darrow, *The Yosu Rebellion, Amphibious Phase*, RG 338 Entry 11071 Box 2, *Yosu Rebellion*, pp.2~3(이후 대로우 대위, 「여수반란, 상륙 국면」으로 줄임). 이 보고는 대로우 대위가 작전 중의 기록을 참고하여 한국군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요약하고 평가한 것인데, 김종원 부대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8) G-3 Section, II IV Corps, op.cit., p.6.

29) 김낙원, 1962, 『여수항토사』, 여수문화원, 69쪽

30) 장창국, 1984,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71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66~469쪽 ; 존 R. 메릴, 앞의 책, 211쪽

31) 대로우 대위, 「여수반란, 상륙 국면」, 4~6쪽

32)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의 발언, 『연합신문』, 1949. 5. 26.

육지와 해안을 통한 여수 2차 공격도 실패로 돌아가자 군의 진압능력이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승만은 “반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수를 탈환하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창피냐”면서 진압군을 질책했다.³³⁾ 여수가 탈환되지 못하자 이승만 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미군은 수립된 지 2개월밖에 안된 이승만 정부가 과연 이 봉기를 진압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여수탈환이 이승만 정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됨에 따라 여수 탈환 작전은 지리산 방면으로 퇴각하는 봉기군 추격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결국 진압군은 광양 쪽의 입산을 막으려 갔던 병력까지 불러들여 주요 전투력을 여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풀러(H. E. Fuller) 대령을 여수에 파견하여, 여수 진압작전의 책임을 부여했다.

병력을 집중하여 여수를 공략하려는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수에 있던 봉기군은 섬진강을 거쳐 지리산으로 잠입했다. 이제 여수에는 인민위원회가 지휘하는 300명 미만의 시민부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고, 그 결과 여수 시가지 전투는 ‘반란 진압작전’으로부터 ‘봉기 시민 소탕전’으로 변화했다.³⁴⁾

한편 하우스만과 백선엽 등은 시급하게 여수를 점령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임시고문단의 입장에 반대했다. 하우스만은 여수를 탈환하는데 병력을 집중해서는 안되며 백운산 지역에 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만의 가장 큰 걱정은 남은 봉기군이 지리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유격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³⁵⁾ 백선엽도 이와 같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미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수탈환을 통해 이승만 정부의 존재함을 보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육해 양면을 통한 제3차 진압작전이 재개되었다. 육지의 김백일 부대와 협조하라는 미 고문관의 지시를 무시한 김종원은 상륙작전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³⁶⁾ 하지만 육지에서의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진압부대는 장갑차를 앞세워 여수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진압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오후 3시경 여수읍 외곽고지를 장악한 다음 시가지에 박격포공격을 가했다. 밤이 되자 진압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외곽 고지로부터 철수했다.³⁷⁾ 철수한 이유는 아직 진압군

33) 백선엽, 1992, 앞의 책, 185쪽

34) 『세계일보』, 1948. 10. 31. 여수에 남아 있는 시민군의 수를 1,000명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69쪽 ; 여수여천문화원, 1975, 『여수여천향토지』, 313쪽 ; 존 R. 메릴, 앞의 책, 214~215쪽)

35) 존 R. 메릴, 앞의 책, 213쪽 ; 짐 하우스만,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85쪽

36) Allan R. Millett, 김광수(역), 2000, 『하우스만 대위와 한국군 창설(1945~1950)』, 『군사』 40호, 261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69쪽 ; 존 R. 메릴, 앞의 책, 215쪽

병력 증강이 여수 시내를 장악할 만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평에서 봉기군의 매복에 걸린 경험 때문이기도 했다.

10월 26일 정오가 지나서 진압부대는 여수에 대한 제4차 최종 공세를 폈다. 장갑차, LST의 박격포사격의 지원을 받은 12연대 2개 대대, 순천에 있던 4연대 일부 병력, 3연대 1개 대대와 2연대의 일부 병력, LST에 승선 중이던 5연대 1개 대대, 장갑차부대, 경찰지원부대가 여수로 진격했고, L-4항공기 등과 해안경비대 경비정이 여수반도를 포위한 채 공중과 해상에서 진압작전을 도왔다.

주공인 12연대는 시가지 공격에서 동쪽을 담당하여 마래산으로부터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내로 들어갔다. 3연대는 종고산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했다. 한편 2여단 군수참모 함병선 소령이 지휘하는 2연대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해안선을 따라 신항 쪽에서 시내로 들어왔다.³⁸⁾ 함병선의 예비부대는 상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로 향했으나 부두 부근에서 저항 세력과 충돌했다.

이미 14연대 병력이 퇴각한 뒤였기 때문에 여수 초입인 미평은 쉽게 통과했고, 오후 3시경에는 구봉산, 종고산, 장군산 등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3시경 외곽고지를 점령한 진압군은 곧이어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 사격을 고지와 바다에서 전개했다.³⁹⁾ 박격포 사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각 연대는 시내로 돌입하여 민가를 가가호호 수색했다. 4연대 병력을 이끄는 박기병 소령은 여수지구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진압사령부는 여수군청에 설치되었다.⁴⁰⁾

장갑차를 타고 시내로 돌진한 12연대와 작전에 참가한 각 대대는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시민들을 진남관이나 서국민학교 운동장 등에 모이게 했다.

10월 27일 새벽부터 여수에 대한 초토화 소탕작전이 시작되었다. 진압군은 장갑차 12대를 앞세우고 여수로 진입했다. 여수공격에는 12연대, 3연대, 2연대, 5연대(해안경비대)가 참가했다. 송석하 소령이 지휘하는 3연대 1개 대대는 종고산 방면에서,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12연대와 장갑부대는 신월리에 있는 14연대 주둔지에서 소탕전에 나섰다. 남아 있던 저항세력들은 진압군에 밀려 후퇴했고, 여수 시내는 3시 30분경 점령되었으며, 저녁 6시 소탕전은 완료되었다. 다른 부대가 여수를 거의 점령했을 때 도착한 박기병의 4연대는 이 다른 부대와 함께 봉기 혐의자 색출을 시작했다.

이상규 소령이 지휘하는 충무공정을 기함으로 하고 6척의 해안경비대 선박과 김종원이 지휘하는 전차양륙정(LST)의 5연대 병사들도 해안에서 작전을 개시했다.⁴¹⁾ 5연대원

38) 김계유, 1991, 앞의 글, 2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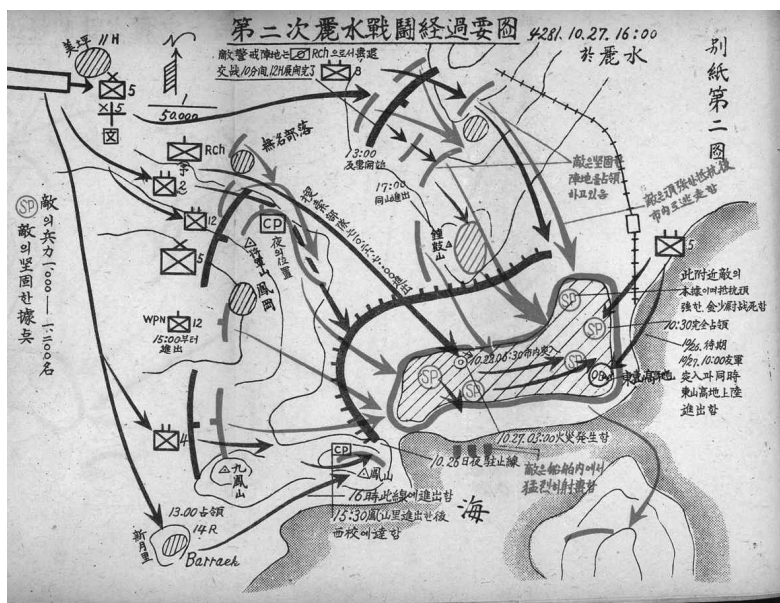
39)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시사』, 772쪽

40) 장창국, 앞의 책, 172쪽

41) 『부산일보』, 1948. 10. 30.

들은 81mm 박격포 사격을 하며 상륙하려 했으나,⁴²⁾ 함정의 반동으로 포가 튀어 탄착점을 포착할 수 없었다. 이 포격으로 12연대 5중대장과 병사 2명이 전사했고 시가지 도처에서는 불이 났다.⁴³⁾ 이에 백인엽은 쓸데없는 사격과 상륙작전 중지를 요구했다. 결국 5연대는 진압이 끝난 뒤에야 상륙할 수 있었다. 10시 40분경, 5연대는 여수에 상륙하여 부두 뒷편의 야산을 점령했다. 여수에서 봉기군을 완전히 격퇴한 오후 1시 20분, 해안경비대는 “여수는 우리 수중에 있다(Yosu is ours). 포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우군(友軍)과의 연락은 좋다...”라는 짧은 말로 본부에 여수 점령 사실을 보고했다.⁴⁴⁾

여수 진압작전이 끝남에 따라 송호성과 그의 참모들은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의 지휘권을 원용덕에게 넘기고 서울로 돌아갔다. 여수는 김백일 5여단장의 지휘로 법과 질서가 복구되었다고 미군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지만,⁴⁵⁾ 그 질서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기초로 세워진 강요된 침묵과 죽음의 질서였다.



<그림 2> 진압군의 여수 공격 상황(1948. 10. 27)

42) 당시 신문 보도나 나중의 증언들은 함정에서 함포 사격이 있었다고 기록하거나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 앞 바다에 떠 있던 LST에서 발사된 것은 ‘함포’가 아니라 ‘박격포’였다. 당시 해안경비대는 제대로 된 함정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군사적 지식과 경비대 장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기자나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포탄의 굉음을 듣고 이를 함포사격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70쪽.

44) 『한성일보』, 1948. 11. 6.

45) G-3 Section, II IV Corps, op.cit., p.9

여수탈환은 성공했지만, 이 같은 작전 진행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던 미 고문단원인 대로우 대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작전은 졸작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여수를 탈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육지에서의 진압군이었고, 5연대는 지상군에 의해 여수가 완전히 평정된 뒤에야 상륙할 수 있었다.

해안경비대는 여순사건 후, 임시정대 지휘관 이상규 소령은 여순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무기가 빈약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육전대 창설을 제기했다.⁴⁶⁾ 여순작전 당시 해안경비대는 여수 해안을 봉쇄했으나, 상륙작전은 부산에서 파견된 5연대가 전적으로 맡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해안경비대는 경비만 선 꼴이 되었고, 이 같은 경험에 따라 상륙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육전대 창설을 제기했던 것이다. 해군본부 수뇌부에서는 과거 일본 해군육전대 같은 상륙군 부대를 해군 내에 창설하자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통제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에게 구체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이 건의는 나중에 해병대가 창설(1949. 4. 15)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여수상륙작전에서 더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은 무기 문제라기보다는 작전의 개념조차 없는 지휘관들의 무능력이었다. 제5연대원들은 적도 없는 곳에 아무 때나 총을 쏘았고, 고문단원들과 상관의 명령도 무시했으며, 막상 상륙작전 때에는 여수에 진입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봉기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대원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륙작전을 맡았던 김종원에 대해서는 총알만 낭비하는 무차별적인 사격을 한 그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야만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⁴⁷⁾ 해안경비대도 비슷했다. 함정 대원들은 봉기군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대원들이 죽어나가자,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고 아무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⁴⁸⁾

국군은 연합작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진압작전 과정에서 병력 이동과 통신 연락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심지어는 같은 진압군끼리 전투가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몇 번 있었다. 광양에서는 12연대와 15연대가 전투를 벌였고, 여수상륙작전에서는 함정에서 쏜 박격포 사격에 12연대 진압군이 죽기도 했다.⁴⁹⁾ 이 같은 군사작전의 오류와 시행착오는 작전 과정에서 각 부대 간에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지휘 장교들이 무능하여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군 지휘부는 진압작전에서 최초로 경험한 육·해·공군 합동

46) 『대한민국 해군사(행정편)』, 53~54쪽 ; 국방부장훈국, 1949, 『국방』 5월호, 32~37쪽(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국방사』, 366쪽에서 재인용).

47) 대로우 대위, 「여수반란, 상륙 국면」

48) 이러한 지휘 계통의 혼란은 리영희의 회고록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리영희는 국립해양대학 실습생으로 천안호에 탑승하고 있었다(리영희, 1988, 『역정 - 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19~122쪽).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70쪽

작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수·순천에서의 실제 전투 경험을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압작전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무장한 좌익세력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였다는 점은 의식되지 못하였다. 군사적 효율성에 가득 차 있는 이 같은 평가야말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가 또 다시 민간인 학살에 나설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IV. 진압작전의 성격

초토화 작전의 배경

여순사건에서 군·경은 계엄령을 발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사람을 반란군이나 부역자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사실상의 ‘초토화 작전’을 구사했다. 여순사건을 보도한 당시 언론 기사나 군 작전 명령서 등에는 ‘초토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진압작전에서 사용된 방식(무차별적 인명 살상, 가옥 전소)을 보면 여순진압작전이 사실상 ‘초토화’ 작전 개념에 의거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순진압작전은 일반적인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초토화 양상에서 더 나아가 지역민(국민)을 대량학살하는 더욱 더 심한 인명 살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잔학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여순사건이 상당한 규모의 대중적 저항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 1948년은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형성 시기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이 무장 봉기로 표출됨에 따라 신생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봉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섬멸’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초토화 진압 작전은 사실 진압작전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발표된 정부의 성명서는 철저한 보복이 실시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 성명서와 계엄 선포문은 진압군이 계엄 하에서 봉기군을 숨겨 주는 사람도 ‘사형’에 처할 것이며 반란에 협조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공포 했다. 이 같은 이승만 정부의 조급한 섬멸전 의도는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에 김완룡 법무관을 불러 “임자가 가서 한달 안에 그 빨갱이들 전부다 재판해서 토살(討殺)하고 올라오라, 그럼 계엄령을 해제 하겠다”라고 말했다.⁵⁰⁾ 계엄을 반란군 토살의 한 방법으로 여긴 것이다.

50) 김완룡 증언,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팀, 1999, 『MBC 여순사건 증언록』(미간행 녹취록)

1948년 11월 4일에는 ‘어린이들이 앞잡이’가 되었고 여학생들도 심하게 봉기군에 가담했다며, ‘우선 각 정부기관에서는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여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⁵¹⁾ 어린이이건 학생이건 일단 불순분자로 간주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었다.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⁵²⁾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인명살상과 가옥 전소 등은 반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강력한 방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라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다.

상부 권력으로 나온 이와 같은 엄격한 죄의 규정은 사실상 살인 허가나 다름이 없었다. 계엄 하에서 군경에 의해 이루어졌던 즉결처분은 이같은 정부 인식이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된 것이었다. 계엄법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발포된 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었고, 계엄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즉결처분 조치 또한 초법적 행위였다. 즉결처분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살인행위였다.

명령과 복종의 가치가 어느 것보다 중요시되는 군대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나 명령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일본도로 혐의자의 목을 베는 끔찍한 처형이 수많은 장소에서 공공연히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봉기 협력자와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좋다는 상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인을 법도 없이 맘대로 살해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비인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명령에 복종하는 애국적 군인들의 권위와 위엄을 한껏 뽐내는 일로 간주되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은 김종원, 백인엽 등 몇몇 군인들의 일탈된 행위가 아니었다. 김종원이 아무리 야만적으로 시민들을 구타하고 살해했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상부의 권위에 의해 인정되고 묵인되었기 때문이다.

초토화 작전의 확산, 제주도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민간인 학살은 11월 중순에 시작되었지만, ‘전도 해안선부터 5 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한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

51) 『국제신문』, 『수산경제신문』, 1948. 11. 5.

52) 『국무회의록』, 1949. 1. 21.

장 송요찬 소령의 포고문은 사실상 중산간 마을 소개를 통한 초토화 작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제9연대 선임하사였던 이기봉(李基鳳)은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안지대로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공비로 인정을 했다”고 증언했다.⁵³⁾

그러나 진압군은 일부 중산간 마을의 경우 소개령이 채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을 덮쳐 가옥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총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변마을로 소개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명이라도 사라졌다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4·3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제주 초토화 작전은 제주도를 고립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는 고립되기 쉬운 섬이었지만, 여기에 더해 제주 해안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0월 18일부터 이미 봉쇄되었다. 해군이 7척의 함정과 수병 203명을 동원해 제주해안을 차단한 것이다.⁵⁴⁾ 이때부터 제주도는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11월 이전에도 민간인 희생이 곳곳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 강도와 희생 규모 면에서,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11월 중순 이후’는 이전 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바로 이 때이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 사라지는 등 제주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특히 11월 중순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된데 반해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토벌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총살함으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이 때 희생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의 희생자가 76.5%를 차지한다. 또한 61세 이상 희생자 중에서는 이 기간에 76.6%가 희생됐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시기는 여순사건이 어느 정도 진압된 1948년 11월 중순 경부터였고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여순진압작전의 군 작전 경

53) 이기봉(40세, 경북 성주, 당시 9연대 선임하사, 중령 예편, 1966. 3. 15 채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54)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Lee Bum Suk,” December 14,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Entry: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1948-19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1949-1953), Box 11 :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 『국제신문』, 1948년 12월 9일.

협이 제주도로 이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순사건보다 몇 달 전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은 여순사건 발발의 한 원인이었다. 14연대가 제주도 토벌반대를 외치며 봉기했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에서 경험된 군의 진압 방식이 제주도에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은 제주-여순-제주로 이어지는 원인-결과의 순환적 고리로 맺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순사건 때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제9연대 군수참모로서 강경진압작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김정무는 “그 때에 초토화 작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짝 끌어버린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에)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무장세력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분리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적이라는 작전개념이었다”⁵⁵⁾고 증언했다.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다는 말이었다. 무장대와 지역민간의 연계를 끊고, 무장대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것이다.

제9연대 선임하사였던 윤태준은 “송요찬 연대장은 초토화 작전을 폈다. 거쳐 가능한 곳을 없애라, 또는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육지에서도 없었다. 초토화 작전이 상부의 지시인지 또는 연대장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요찬 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으로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⁶⁾

초토화 작전은 적에 대한 인적 섬멸뿐만 아니라 반란군-주민 간의 연관 관계를 끊고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가옥 파괴·전소 등이 포함된다.

여순사건의 진압작전 과정에서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회부가 발표한 재산피해를 따르면, 총 5천 호에 달하는 가옥 피해가 발생했다.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명 피해에 그치고 가옥을 전소하는 사례가 극히 희박했기 때문에 가옥 피해는 대부분 진압군측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⁵⁷⁾

그 뒤 중앙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여수, 순천을 비롯한 구례, 곡성, 광양, 고흥, 보성, 화순 등을 현지 답사한 뒤, 피해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949년 1월 10일까지 밝혀진 가옥 피해는 8,554호(전소 5,242호, 반소 1,118호, 소개 2,184호)였다. 가옥을 비롯한 총 재산 피해 추정액은 99억 1,763만 395원에 달했고, 가장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대상 주택은 1만 3,819호로써 그 인원은 6만 7,332명이었다.⁵⁸⁾

55) 김정무(77세·서울시 종로구 부암동·당시 제9연대 군수참모, 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2002. 9. 25. 채록) 증언.

56) 윤태준(73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중령 예편, 2001. 5. 2. 채록) 증언.

57) 『국회속기록』 제2회 제13호(1949. 1. 25), 243~245쪽

58) 『동아일보』, 1949. 1. 22.

중앙청이 조사한 가옥 피해 항목 중에 소개(疏開)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리산 일대에서 벌어진 토벌작전에서 진압군이 주민과 빨치산 세력의 연관 고리를 끊기 위해 주민들을 살던 마을에서 완전히 내몰았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전남도 당국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조사했다. 이 자료는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도민의 피해를 전반적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가옥 피해는 1만 1,871호, 이재민 총수는 31만 8,457명(5만 8,734호)에 달했다.⁵⁹⁾

V. 여순진압작전이 국군에 끼친 영향

여순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국가 기구는 군대였다. 경찰이나 우익청년단도 진압작전에 참여했지만, 군대보다는 전투력이나 조직력에서 열세였고 저항이 무장투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군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군은 여순사건에서 많은 숫자의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근현대 역사에서 내전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 아니지만, 제주와 여순에서 나타났던 민간인 희생은 그 규모나 희생 방법에서 매우 가혹했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이어졌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군대가 여순과 제주에서의 전투행위를 ‘애국’과 ‘호국’ 행위로 자랑스럽게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군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 대한민국 초기의 국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전투를 통해 형성되었다.

미군정 시기에 경찰예비대로 만들어졌던 조선경비대가 ‘국군’으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였다. 조선경비대 시절부터 군대를 지향했지만, 경찰예비대 역할을 했던 국군은 작전·정보 경험도 없었고, 경찰에 비해 소총을 비롯한 기본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으며, 통신기기를 운용할 인력도 부족했다. 조직 운용면에서도 국군은 미국의 법전과 전투 매뉴얼 등을 번역하여 익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계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도 거의 없었다. 조선경비대 시절부터 누적된 장교-사병간의 이질감, 장교들 간의 이념적 견해 차이도 극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한마디로 조직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59) 『호남신문』, 1949. 11. 11.

이러한 국군의 조직 상태는 제주와 여순사건에서 사병들의 (집단) 탈영과 이탈, 장교들의 봉기군으로의 합류, 소극적 전투 자세, 항명(抗命)과 강경과 지휘관에 대한 암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 시설의 미비와 전투 능력의 부족은 아군끼리의 전투로 종종 나타났다.

국군은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군대’로 자리 잡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군대의 첫 전투는 봉기군을 상대로 한 전투가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였기 때문이다. 봉기군뿐만 아니라, 거주 주민들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섬멸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만주군(일본군) 출신들이 진압작전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면서 증폭되었다. 주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초토화 작전의 개념은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군대 특유의 조직 문화와 융합되면서 군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그대로 관철되었다.

2. 조선경비대가 국군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미군 역할은 절대적이였다.

미군의 지원은 단지 작전, 정보 측면뿐만 아니라 군수, 교통 등의 물질적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 주요 작전 개념과 군대 운용은 미 임시군사 고문단에 의해 좌우되었다. 국군과 고문단원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정보를 장악하고 인사권과 작전권을 가진 군사고문단원들이었다.

여순사건 당시에는 육군 고문관으로 하우스만(James H. Hausman), G-2 소속의 존 리드(John P. Reed), 전 5여단 고문인 트레드웰(J. H. W. Treadwell) 대위, 현 5여단 고문 프라이(Robert F. Frey) 대위 등이 정보와 작전을 장악했다.

미군정 당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하지 제24군단장과 딘 미군정장관이 개입했으며, 사건의 고비마다 미군을 직접 파견하여 작전을 주도했다. 미군정은 4월 17일, 제주 주둔 미군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을 통해 경비대 9연대에 게 진압작전에 참여토록 명령했고, 며칠 뒤에는 부산 제5연대 1개 대대(진해 주둔)를 제주에 파견하도록 명령하면서 부산 제3여단의 미 고문관 드루스(Clarence Dog De Reus) 대위가 이에 합류하도록 했다.⁶⁰⁾

또한 5월에는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60) "Message," April 17,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Bulk Declass E. O. Misc. Series, Box No. 119

미군정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미 임시군사고문단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군은 국군의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와 여순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미군은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있다.

3. 여순사건 뒤 이루어진 숙군은 개혁적, 민족적 성향의 지휘관을 제거하고 만주군·일본군 인맥이 군을 장악하는 과정이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광복군 세력은 경비대가 미국에 의한 군대라며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광복군 세력보다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광복군 출신이거나 김구 세력과 연관이 있었던 유동렬, 송호성, 오동기 등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과는 달리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 한직으로 좌천당하거나 숙청되었다. 그 결과 군대에서는 일본과과 특히 만주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여순사건에서는 만주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초기 진압작전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군 지휘 계통이 무너지면서 만주군 출신의 지휘관들이 부상했던 것이다.

여순 진압작전 초기에는 기존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원래 제3연대장은 함준호 중령이었고, 제12연대장은 백인기 중령이었다. 하지만 두 연대의 상급부대인 제2여단의 원용덕 여단장은 부연대장이었던 송석하(3연대 부연대장), 백인엽(12연대 부연대장)을 각각 연대장에 임명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원용덕은 이전의 만주군 경험으로 미루어 부연대장 송석하와 백인엽의 작전 능력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송석하는 원용덕과 함께 만군 출신의 군인이었고, 백인엽은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군 출신인 백선엽의 동생이었다.⁶¹⁾ 하지만 원용덕 자신도 군대조직의 명령 체계에서 배제되었다. 원용덕 제2여단장은 원래 산하에 있는 제2, 12연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백일 제5여단장은 제2여단의 예하부대인 제12연대에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채병덕 참모총장은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이 군의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지휘선상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12연대는 김백일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송호성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사령관도 휘하에 제2, 5여단을 지휘하여 병력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병력을 움직인 것은 5여단장 김백일 대령과 백선엽 정

61) 장창국, 1984,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69쪽 ;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72쪽 ; 佐佐木春隆, 위의 책, 532·535·546쪽. 원용덕은 만주군 군의(軍醫) 중령 출신이다. 송석하는 만주봉천군관학교를 5기로 졸업했다. 백인엽은 명치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학도병으로 출진하여 일본항공병 소위를 지냈다.

보국장 두 사람이었다.

해방 직후 친일과 청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경비대는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 수립 직후에도 이승만 정권은 친일과 척결문제에 부정적이었는데, 일본군·만주군 인맥이 실권을 장악한 국군 지휘부는 친일 전력 때문에 이승만 정권과 이해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국군은 정권의 반공노선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반공 집단으로 성장해 갔다.

4.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군은 국가를 떠받치는 주요한 국가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군·경 갈등은 해소되었고, 국군은 국가 조직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미군정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물리적 조직은 경찰이었다. 미군정은 친일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이들을 경력을 통치에 이용했다. 식량수집부터 잡다한 일선 행정과 감시 기능을 경찰이 수행했기 때문에 경찰은 민중의 원성을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경비대는 민중과 직접 접촉면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는 조직적 이해관계가 배치되었다. 1946년부터 나타난 군경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양조직의 관계개선을 도모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군·경 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 경찰의 영향력은 축소되었지만, 국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내세우고 계엄령 같은 법제적 위호를 받으며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제주와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대는 1948년 중반기의 군대 모습이 아니었다. 국가를 떠받치는 간성으로 주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는 국가의 군사적 물리력이 확실하게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5. 정부의 진압 압력과 '빨갱이'의 양산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의 시급한 진압 지시는 현장에서 진압 작전에 종사하고 있던 군인들이 전과를 과장, 허위 보고를 양산했다. 이는 진압군 지휘관의 공적과도 연관되면서 허위보고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더 빈발하였다.

제주 봉기 당시 경찰이 파악한 무장대의 숫자는 200명에서 2,000명으로 오락가락했지만, 여수도 이와 비슷했다. 처음부터 진압군은 봉기군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순사건의 전투상황을 기록한 『전투상보』는 전투가 시작되는 10월 21일부터 진압군의 여수 점령후인 10월31일까지 진압군의 통계표에 의하면 11일 동안 장교 1명, 병(兵) 370명, 인민군 1,095명, 일반인 650명이 포로로 잡혔고, 적 유기 시체는 329구였

다. 진압군은 전과를 보고할 때, 부로(俘虜) 항목을 장교·병·인민군·일반인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유기시체’를 따로 표시하였다. 이때 유기시체란 일반인들을 사살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만 하더라도 봉기세력 전체 숫자와 유사하지만, 이후 11월부터 지리산 토벌작전이 전개되자 포로의 숫자는 계속 이 추이를 유지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 동안 지리산 부근 전투에서는 인민군 55명 폭도 563명이 포로로 잡혔고,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병 475명, 인민군 1,791명이 포로가 되었다. 1948년 12월말까지의 포로만 해도, 총 5,000명이나 된다.⁶²⁾

진압군의 여수 점령 후에도 14연대 군인들이 지리산에 들어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리산에서 게릴라 투쟁이 전개된 1948년 말부터 1949년까지 국군은 토벌 전과를 계속 발표했다. 전투 과정에서 희생된 지역 주민이나 무고한 민간인들은 모두 전공으로 취급되었다.

국회에서 민간인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자, 호남지구 전투사령관인 원용덕은 “무장폭도가 20여 명이 나타나면 민간 폭도도 이와 합세하여 고향을 치면서 몽둥이를 들고 기세를 올리며 악악 소리를 지를 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총부리를 안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³⁾ 그러나 국군은 민간인 희생자를 따로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폭도'였기 때문이다.

6. 진압작전 이후 국군은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세력으로 등장했다.

여순사건에서는 반란군과 협력자를 좌익 혼란 분자, 파괴자, 악마,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가 생산되고 유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가장 잘 체현한 국가 조직은 군대였다. 일본군·만주군 출신 군인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반공주의는 군대 내에서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공산주의자는 섬멸되어야 할 적이라는 논리는 초토화 작전과 결합되면서 주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작전으로 이어졌다. 무고한 국민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을 뿌리 뽑고 파괴분자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신념은 국민 살상을 일상화하였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살상하면서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 행위로 이해되었다. 살상에 무감각한 애국심은 진급과 훈장과 포장으로 보상되었다.

전투에서 숨진 군인들은 성대한 합동위령제로 보상받았다. 여순 진압작전에서 무공을 세운 군인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특진되었다. 여순작전 뒤, 기갑연대의

62)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1949, 『전투상보』(육군 20-15), 84~85, 92쪽

63) 「국회 민정조사반, 원용덕 호남지구전투사령관과 회견하고 반란정세에 대해 기자와 문답」, 『동광신문』 1949.5.10.

수색단 장갑중대는 출동 장병 전원이 1계급 특진되었고,⁶⁴⁾ 순천 탈환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12연대 장병 전원도 1계급 특진됐다.⁶⁵⁾

1949년도에 제정된 건국공로장의 서훈 자격을 보면, “민국정부 수립에 탁월한 공적이 유(有)한 자” 뿐만 아니라 “금차(今次) 반란진압의 공로자 순직자 급 그 유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서 여순 진압작전에 참가한 공훈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⁶⁶⁾ 진압군은 반공 국가 건설의 공을 충분히 인정받았던 것이고, 군인들에게 여순사건은 스스로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압작전에 참가한 미군도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다. 미 국방부는 1949년 1월 10일 여순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하우스만에게 미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주었다.⁶⁷⁾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 포함되어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을 담당했던 정보참모부의 고정훈도 여순사건 뒤에 공을 인정받아 대위로 특진했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브라운 대령의 진두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해 온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의 인정을 받아,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했다.⁶⁸⁾ 당시 그의 진급은 선임자를 앞지른 것으로서 딘 장군의 배려에 따른 특진이었다.⁶⁹⁾ 제주도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차별 체포 작전’이었지만 딘 장군은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해 제주에 온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대령으로 특진시킨 것이었다.

여순사건에서 활약했던 백선엽, 백인엽, 김백일, 함병선 등은 모두 군 요직을 거쳐 승승장구했다. 제주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박진경, 송요찬도 똑같이 영전했다. 이에 비해 여순사건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송호성, 무장대와 화평협상을 추진했던 김익렬 등은 사건 직후에 좌천되었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에 대한 포상과 좌천 인사는 강경하고 가혹한 진압,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군사적 행위를 부추기는 기제였다.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324쪽

65) 장창국, 1984,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70쪽

66) 『경향신문』, 1949. 2. 2.

67) *Chronology*, James H. Hausman Autography(하우스만 회고록).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1쪽.

69) 백선엽, 앞의 책, 125쪽.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PMAG)을 중심으로 한 진압‘주도’작전의 경위와 성격 -

안 정 애(인하대)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임시군사고문단(PMAG)의 조직과 활동
 - 1) 임시군사고문단의 조직
 - 2) 임시군사고문단의 활동
- III.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인식과 대응
 - 1)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 2) 여순사건에 대한 대응
 - 가.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 지도
 - 나. 고문관 파견과 동원
 - 다. 무기와 군수물자의 원조
- IV.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평가와 영향
 - 1)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평가
 - 2) 여순사건의 영향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여순사건에서의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현대사에서 반복되는 미국의 책임론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한반도 분할점령 초기부터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을, 즉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떠받칠 무장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에 진주한 미24군단은 한국군의 창설과 확대, 훈련, 무장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는 곧 미식화된 군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반소반공노선을 표방하고 있던 미국 정

부의 입장은 이승만 정권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본국의 제지와 정책부재로 인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은 점령초기부터 남한 내에 정규군을 창설하고자 하였으며, 점령 내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원형을 만들고 이들을 훈련, 무장시킨 주체였다.

따라서 여순사건은 자신들이 만든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신들이 무관할 수 없었고, 이는 적극적인 진압행태와 이후 군 내부의 숙청 주도로 연결된다.

한국 공간사에는 여순사건에서의 미군의 역할이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일부 최소한의 역할만을 언급하고 있다. 언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활동상은 기술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대상¹⁾이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군의 주도성 과시욕과 함께 한국군을 창설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주체이자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주도작전의 면모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여순사건을 군 문제로 축소시켜 파악하고 있었다. 즉 대중투쟁으로서의, 민중항쟁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고려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을 ‘군반란’으로 규정한 미국은 단순히 이를 진압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여순사건은 주한미군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고, 비록 총병력 수는 16,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철군완료 이전까지는 정식편제를 갖춘 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주한미군은 미24군단의 체제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철군보완책으로 설치된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PMAG/이하 임시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정식 지휘체계를 통해 진압에 나섰다. 점에서 여순사건의 진압을 ‘주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단순한 개입의 차원을 넘어 초기부터 대규모 고문단을 진압 사령부에 파견하고, 진압작전을 계획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무기 및 장비, 군량에 이르기까지 진압작전에 필요한 군수품 일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하였던 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RG 554로 분류되어 있는 여순사건 관련 문서군을 살펴보면 정보수집, 군배치, 군사장비 제공, 상륙 자문, 마지막 민간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군작전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NSC)과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시까지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면서 훈련, 조직, 무장, 군사원조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기능하였으며, 이를 전담한 것이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1)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4연대 부연대장이었던 “박기병 소령은 총사령부에 보고하는 한편 미고문관과 협의하여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해방과 건군』, 1968, 458쪽.

이 글에서는 미국이 임시군사고문단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압을 어떻게 계획·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전수립경위와 전투지휘, 무기 등 각종 군수장비 지원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순사건에 대한 미국의 진압작전 ‘주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 여순사건과 관련된 미국측 자료는 RG554로 정리되어 있는데, 진압작전 시기에 전국 각지의 미24군 정보기관 등 관련기관의 보고서를 포함, 최소 240건 이상이 ‘여수 사건 보고서’(Report on Yosu Event)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임시군사고문단과 광주진압사령부 사이에 교환되었던 지시, 명령서, 전보문, 보고서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소속불명의 특수공작원(Special Agent No. # 9016)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서들을 중심으로 당시 임시군사고문단이 전개하였던 진압작전의 경과와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

II. 임시군사고문단(PMAG)의 조직과 활동

1) 임시군사고문단의 조직

미군정 초기 주한미군, 즉 미24군단의 일부로서 경비대의 창설 및 증편, 훈련, 무장화 등의 역할을 하던 초기 군사고문관 조직은 1947년 중반 이후 주한미군철수 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임시군사고문단으로 출범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군부의 철군론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 철군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로서 경비대를 강화시키는 문제와 이를 위한 적절한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남한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권도 군대의 강화를 위해 미국이 육·해군 고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경비대가 창설되면서부터 미군의 경비대에 대한 고문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인원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 및 활동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정기의 경비대에 대한 고문활동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고문단의 업무와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공식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앞서 언급한 철군논의에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등장한 것이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 1947년 12월 3일, 육군부는 군사고문단이나 사절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극동사령부에 지시하였다.²⁾ 극동군사령부는 다시 주한미군사령부에 이 지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주한미군

2) JCS file, 091 Korea, SCAP, P&O.

사령부는 “제안된 한국군대의 조직이 승인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고문단의 규모는 장교와 사병 각각 300명이며 1,800 여명 규모의 지원부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³⁾ 이에 대해 극동군사령부는 고문단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점령 초기부터 정식으로 한국군 창설을 극도로 꺼리던 미국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미육군부는 1948년 3월 21일, 주한미군이 8월 15일에 철수를 시작하여 12월 15일에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는 철군계획을 극동군사령부에 통보하는 전문에서 “미국은 50,000명으로 증강된 남한경비대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며 증강된 경비대는 미군 철수 이전에 훈련되고 무장될 것임”을 밝혔는데, 무기와 장비지원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든 문서에는 정식 국방군이 아닌 경비대, 또는 치안군(security force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극동군사령부의 반대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새로운 고문단 조직표를 작성하였는데, 고문단 162명, 지원부대 529명 등 총 691명이었다.⁴⁾

이와 같이 고문단 조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남한에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는 논의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시작되었다. NSC 8(1948. 4. 2)은 미국의 철군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약을 종료(1948. 12. 31 철군)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 점령지로부터 철군은 하되 보완기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소련에 의한 전 한반도의 소비에트화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철수 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토착 군사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않는다면(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서), 극동과 각 우방국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지므로... 미군 철수 이전에 (가능한 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북한의 공격에 대항할 장비와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군철수 후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미국 외교기구의 하나로 적절한 수의 군사고문단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임시군사고문단이 발족하게 된다.

남한에 미군을 진주시키면서도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했던 신탁통치안 외에는 구체적인 한반도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미국은 전후 국제문제 처리과정에서 소련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독자적인 점령정책, 점령지인 남한에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갔다.

한반도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은 3부조정위원회(이하 3부조위)⁵⁾ 산하 극동문제소위원회

3) 같은 문서.

4) 같은 문서.

5)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서 전통적으로 대군사문민우위를 지켜 왔으나,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군 지도자들이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 전통은 깨지게 되고 상대적인 군부우위의 경향이 형성되었다. 미국무부로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그리고 책임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외교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세계대전 이후 상당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군부에 위

회(이하 극동소위)였다. 종전 전인 1944년 미국은 점령지에서 실시할 군정이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하여 육군의 민정참모부와 해군의 점령지 담당국은 이 문제를 합동참모회의(Joint Chiefs of Staff)와 협의하였다.

한반도에 관련된 미국측의 정책은 극동소위에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육군부측 대표들은 야전지휘관들이 담당하게 될 군정지역에서 정치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언받기를 희망했다.⁶⁾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가 엄격히 구별되기는 불가능하였고, 미국의 대한정책의 모호성이 계속됨에 따라 미군정 내내 국무부 연락관들⁷⁾ 뿐만 아니라 하지는 혼란을 감수해야만 했다.

미 군부가 갖고 있던 주한미군정의 주요 목표는 전반적인 미국 외교 목표와 다르지 않았다. 일찍이 미군부는 주한미군의 주요 목적이 반공성채 구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1945년 10월 14일에 크리스트(Christ) 장군이 미의회에서 “한국에서 미군정의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한반도가 공산주의에 대한 성채(bulwark)가 되도록 하는 것”⁸⁾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군정은 통치기간 동안 표면상으로는 공식적인 반공노선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인민공화국에 대한 비승인정책 등을 표방함으로써 이미 점령초기부터 실질적인 반공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최초로 전달된 정책은 ‘한국의 미군 점령 지역 내 민간행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 방면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의 기본훈령’(SWNCC 176/8)으로서 1945년 10월 13일에야 전달되었는데, 이후 1946년 1월 28일에 다시 전달된 정책(SWNCC 176/18)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반도정책이 미소의 분할점령, 4개국 신탁통치 실시, 독립정부수립이라는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미소공위의 실패에 따라

임’되었다. Grant E. Meade,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7쪽. 이후 전쟁관련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1944년 12월 1일에 국무부와 육군부, 해군부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3부조위가 출범하였고, 이어 산하에는 극동문제를 다룰 극동소위가 구성되어 한반도 관련 정책을 이 부서에서 주로 입안되었다.

6) 육군부측 대표인 스트롱(George Strong)소장은 회의석상에서 “현지 지휘관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그의 조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민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제한된다는 것을 조언받아야 한다. 현지 지휘관은 또 장기적인 정치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현지 점령군이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군사적인 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SWNCC 176/8.

7) 1943년부터 국무부 영토관계 소위원회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보가 많았고, 초기에 하지의 정치고문이었던 베닝호프는 하지사령부가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을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한반도정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FRUS 1945**, 648쪽.

8) Grant E. Mead, 1951, 62쪽.

더 이상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전 중에 구상했던 점령정책의 단순한 연장에 불과했다.

군사문제의 상위개념으로서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들어 미국은 연말 주한미군 철수, 즉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약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전제는 당시 세계적인 냉전 상황에서 소련의 전 한반도 소비에트화가 곧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방어기제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철수 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토착 군사력(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서)을 충분히 양성하지 않는다면, 극동과 각 우방국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지므로... 미군 철수 이전에 북한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한 경비대의 무장 및 훈련을 조속히 완수할 것”으로 결정(NSC 8(1948. 4. 2)되었다.

현지 사령관 하지를 비롯한 점령군 수뇌부는 남한에 국방군(national defense forces) 창설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는 점령지 남한의 치안 유지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 후원되는 정부, 즉 미국의 국가이익이 관철되는 정부가 수립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군 창설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만약 미국에 의해 후원되는 정부가 유지되려면 내부 소요 진압과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찰 조직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⁹⁾

나는 점령 초기부터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미군부대를 사소한 일로부터 경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우리의 임무를 달성하는 장래를 위해 한국군을 수립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이 있었다.¹⁰⁾

처음에 미국은 한국이 분단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지자 미국의 정책은 한국군(지상군)의 육성에 중점을 둔 국방군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¹¹⁾

이처럼 점령초기부터 남한에 국방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이 점령당국의 의사였고, 이에 대해 맥아더와 합참, 국무부는 소련을 의식, 이에 계속 반대하였으나 1947년 제2차 미소공위가 실패로 끝나자 한반도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함으로써 남한단정수립의 기틀을 잡아 나갔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하지는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의 일부가 소련과의 협의

9) Sawyer, 1962, 9쪽.

10) Sawyer, 1962, 21쪽.

11) 전편위, 하우스만 증언록(HA04887).

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책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남한에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한에 세력화하고 있던 좌익과 이들이 이끌고 있는 군사단체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방군 창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의 남한국방군 창설에 대한 집착은 본국의 일관된 대한정책 부재 속에서 점령지에서의 정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책임자로서 당장 실현가능한 독자적인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격동기였던 남한에서 여러 가지 사회갈등 상황에 직면, 치안유지와 소련과의 분할선 즉 38선 경계 임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던 점령당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리력, 즉 정규군의 창설이 필수적이며, 이 물리력은 장차 수립될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에 필수적인 것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11일에 행정의 조선인화(Koreanization) 정책에 의해 대부분의 행정인 형식상 한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미군정은 감독만을 맡도록 되어 경비대에 근무하는 미군 장교들 역시 명령자(command)에서 고문의 지위(advisory position)로 바뀌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미군 장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야 했다.

주한미군은 경비대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여기에 고문관을 배치하여 한국군 창설과 훈련, 장비보급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미군의 이동과 해체 등에 따라 경비대의 많은 군정고문관들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경비대사령부 내에 6명 내외, 통위부에 20명 정도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²⁾

비록 고문관의 부족과 훈련 방법 규제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경비대의 훈련이 제한적이었다고는 하나,¹³⁾ 미고문관들은 경비대 조직에 있어 모병에서 행정과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고문관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키는 경비대가 훗날 정식 한국군으로 정식 출범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훈련의 제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문관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한국인 부대를 훈련시키려고 가까운 미군부대로부터 미군무기 뿐만 아니라 사병까지 빌려오는 경우가 있었고, 경비대의 무장이 일제소총 등으로 공식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미군무기가 지급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M1소총, 박격포, 기관총 등으로 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이들 고문관들에게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전술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12) Sawyer, 1962, 23쪽.

13) 미군 G-2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대는 단지 소형무기의 사용, 기본적인 훈련(교련), 그리고 ‘국내치안의 방법’만을 훈련했다. Quasi-Military Force, Project 3996(1948. 5. 12), ACofS, G-2, FE A Pac Br, DA.

14) Sawyer, 1962, 25쪽.

기회를 제공하였다. 데루스(Clarence C. DeReus) 중령의 경우 “공산주의가 조직한 시민폭동과 게릴라 활동이 전술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¹⁵⁾고 기록하였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진압하는 일에 투입된 경비대는 군사작전에서 지휘의 필요성과 부락전투의 이론을 포함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47년 후반기 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데루스의 지휘 아래 있던 부대는 야간기습과 대대전술을 결합시켜 실전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고문관들은 중국군이나 일본군 출신자들의 군사적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전술훈련의 부족을 메꾸곤 하였는데, 미군에 의해 지도된 이론과 때때로 충돌하기는 했지만 적에 대항하는 ‘반자이(만세)’ 정신면에서 “이 장교들의 가치가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기”¹⁶⁾ 때문에 고문관들은 이를 충분히 이용하였다. 미군정기에 군사기술자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으며, 이는 여순사건에서도 보듯이 간도특설대 등 일본군대에서 독립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토벌경험을 갖고 있던 만주군 출신들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 이어지는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발생과 깊은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미고문관들은 경비대 창설 초기부터 정식 군대를 전제로 하여 경비대를 조직, 훈련, 무장시켰으며, 특별히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반란진압작전에 대한 연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여순사건은 고문단에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하우스만이 회고하는 대로 “비교적 조속히 진압된”¹⁷⁾ 사건으로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은 경비대로 하여금 사령부, 참모, 부대의 훈련동기를 제공하고, 대규모동원훈련을 가능케 한 연습 기회였다.

2) 임시군사고문단의 활동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군철수 논의와 함께 임시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에 미군정 법령 일반명령 31호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48년 8월 24일에 한미군사잠정협정(공식명칭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¹⁸⁾이 체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 방위력의 지배권과 명령권을 가능한 한 빨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동의하에 한국정부로 넘겨주는 것을 진전시킬 목적”¹⁹⁾에서 체결되었는데, 이는 경

15) DeReus가 Sawyer에게 보낸 서한(1953. 8. 28), Sawyer, 앞 책, 25쪽에서 재인용.

16) Sawyer, 25쪽.

17)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32쪽.

18) 국방군사연구소, 1990, 『국방조약집 1집』, 238쪽.

비대 창설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방위력 건설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해 왔음과 단정 수립 때까지도 방위력의 주체성을 담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한 이 협정은 이러한 방위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데에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체결되었다. 미군철수 시까지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전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훈련·무장하며(1조),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2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무기이양, 조직, 훈련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군을 전제로 한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을 미군의 자의에 맡김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우위성과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²⁰⁾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특히 작전통제권 보유 명시는 신생 한국정부의 국방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 잠정협정이 체결된 이틀 후 무초는 주한 미사절단(American Mission in Korea/AMIK)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임시군사고문단을 설치하여, 군정초기부터 경비대의 조직과 훈련을 담당해 왔던 미군정 소속의 미군고문관들을 흡수하였다.

며칠 후인 9월 11일에는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정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물건, 현금, 예금, 설비 및 군수물자 등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익을 양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한군 조직,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 및 군수물자 역시 미군의 장악 하에 있었다.

로버츠 준장을 단장으로 한 임시군사고문단의 규모는 1948년 말에 이르러 출범 초기 100여 명²¹⁾에서 241명으로 확장되었으며, 1949년 4월 2일에 잔류 주한미군의 철수 명령 때에 이르러서는 500명으로 증편 지시를 받고 총인원 480명의 기구 확장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고문관 숫자는 한국군 대대까지 고문관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으나 계속된 한국군 증강으로 인해 대대 수준까지 고문관이 배치되기는 힘들었다.

로버츠는 재임경력이 짧았던 다른 전임자들과는 달리 경비대 부장 시절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약 2년간을 고문단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한국군 훈련뿐만 아니라 무기이양 및 대한군사원조의 효과적 접수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고문단이 시행한 미군 무기 이양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

19) Jacobs to Secretary of State(Aug 24, 1948), FRUS 1948, 1287-1288쪽.

20) 서울신문사(편), 1979, 『주한미군 30년사』, 103쪽.

21) 미 육군부는 철군계획을 통보하는 전문에서 미외교사절단 소속으로 61명의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군사고문단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고문단 조직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JCS file, 091 Korea, SCAP, P&O.

었는데, 당시 경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 중 60-80%의 소형, 자동무기가 미제였으나 박격포, 중기관총 등의 중무기가 부족한 상태였다. 주한미군은 90mm, 105mm 포를 52대만 이양했을 뿐이며, 57mm 대전차포는 쌍안경, 조준기 등 부품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105mm M2 곡사포나 57mm, 75mm 무반동총 등 비교적 성능이 좋은 것들은 이양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군의 중무장화를 원치 않았음을 뜻한다.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에 따른 후속 보완 업무, 즉 미국의 대한군원 집행과 철군 시 미군이 남긴 무기의 이양, 각종 군사시설 관리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임시군사고문단은, 고문 업무로써 점령초기부터 해 오던 업무, 즉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지도, 이양 무기의 사용법 교육과 보급, 통신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시행하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임시군사고문단은 육군, 해안경비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한국무장력을 조직·관리하며 무장·훈련시키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주체였다.

임시군사고문단은 담당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범위·방법 등을 조사하여 6개월 간격으로 미 육군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은 군사문제 이외에는 절대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다.

임시군사고문단은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인사, 정보, 작전, 군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문화시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인사문제는 고급부관실과 G-1, 정보는 G-2에서 처리하였다. 고문단은 연대급 고문관 회의와 참모급 고문관 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와 장교위원회와 같은 비정기적인 회의²²⁾를 통해 고문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결하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인사국은 1946년 2월 9일에 경비대총사령부 내에 설치된 인사과가 개편(1948. 8. 20)된 것으로, G-1 소속의 고문관은 한국군 G-1의 군·민간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1949년 4월 1일부터는 군요원의 이동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한편 1949년 11월 1일부터는 인사카드와 일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인사관리를 하였다.

1948년 9월 15일에 정보국(G-2)으로 개편된 정보과는 1946년 1월 14일에 경비대총사령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초대 과장에 미육군 소령인 까스가 임명되어 1년 여 동안 정보국 창설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다.²³⁾ 까스 외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대위와 상사 각 한 명이 정보과에 소속되어 한국군에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활동을

22) K MAG file에 육군부에 보내는 임시군사고문단의 연대급 고문관 회합의 스케줄에 관한 짧은 보고서를 통해 추정되는 것으로, 정확한 회의 개최 주기와 토의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단 참모급 고문관 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dm Office PMAG to Staff PMAG, sub: Brigade Advisors, Aug. 19, 1948.

23) 전사편찬위원회, 1968, 273쪽.

지도하였다. 이들은 미24군단의 정보참모부 소속 화이트 대령에게 교관 파견을 교섭하여 심문법, 독도법, 전투정보 수집과 방첩요령 등을 한국군에게 교육시켰다. 여순사건 후에는 전투정보과와 방첩대가 정보국에 설치되어 본격적인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보국은 모든 고문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임무를 띠었다. 한국군으로부터의 정보는 리드(Reed)대위가 고문단장인 로버츠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G-2에서는 일일보고서와 주간보고서, 브리핑 자료, 정치사건 수사록 등을 발간하였으며, 본국의 정보기구와의 연락을 맡고 있었다. 고문단은 한국군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한국군에 인식시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38선부대에 배치된 고문관의 경우 전투보고서와 북한군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미군정기 주한미군사령부의 G-2는 정보수집 담당 영역에 따라 행정과, 남한과, 북한과 등으로 나뉘었으며, 971 CIC 지대, 315사령부 정보지대, 민간통신 검열대(CCIG-K) 등을 두어 방첩 정보수집과 문서 번역, 국내 우편물 및 전보, 전화 검열 등을 실시하였다.²⁴⁾

이처럼 고문단은 한국군의 기능 중 정보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켜 군 정보 기구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제주도 사건 및 여순사건, 기타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

1946년 1월 14일에 국방사령부 내에 설치된 작전교육국(G-3)의 소속 고문관은 한국군의 조직과 훈련, 무장화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띠었는데, 주요 임무는 역시 한국군의 훈련이었다. 이를 위해 훈련비망록과 지침서가 한국군 G-3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한국군 부대의 훈련상태와 군수공급, 유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되어 주간활동보고서와 작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G-3에서는 훈련비망록과 중요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한국어로 발간하는 작업도 펼쳤다. 한국군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고문관은 여러 훈련기관을 방문할 것과 선발부대의 훈련 시범 실시, 한국측 상대역(counterpart)을 훈련과정과 감독에 동반하도록 하였다.²⁵⁾

군수(G-4)는 임시고문단 시절, 보급과 병참문제를 G-4 고문관인 러셀(Russell G. Geist, Jr.)이 담당하였으나, 철군 이후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1949년 6월 28일에 보급부를 설치, 고문단의 모든 병참문제를 취급하였다. 군수체계는 미군의 한국군에로의 군사원조와 특수 채널을 통한 고문단의 특수장비보급, 그리고 남한의 군수공장과 중앙조달과(Central Procurement Agency, 1948. 8. 15에 군수국 내에 설치)를 통한 구매

24) 이 외에도 G-2에는 군사실과 정치고문부, 평양 연락사무소 등이 있었다. Advisor's Handbook, section III, G-2 part.

25) Advisor's Handbook IV, G-3 part.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단위 부대는 군수와 장비에 관한 실제 목록을 매달 말일까지 작성해야 했으며, 부족 물품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통해 G-4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속 고문관은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또한 여기에 소속된 고문관들은 한국측 상대에게 군수보급의 어려움을 들어 현재 보유 중인 군수물자에 대한 통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임도 띠고 있었다.

이 외에도 고급부관실, 공병감실, 해안경비대, 헌병감실, 병기감실, 병참감실, 후생감실, 통신감실 등이 있어 이들 부서에 소속된 고문관들은 해당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통신감실의 경우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부문으로 무선 교환수와 신호수는 고문단 통신 장교와 사단의 고참 고문관의 지휘 하에 있었다. 통신감실 소속 고문관은 한국군 통신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지원과 무선통신망 제공 등과 같은 실제적인 전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으며, 통신사단과 통신중대 등에 미군통신대 요원을 배치하고 통신망을 통해 고문단 본부와의 교신을 항상 유지하였다. 여순사건 때는 무전기 M208이 한국군에 소개²⁶⁾되어 무전통신을 통한 작전체계가 갖추어졌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위에서 제기한 고문업무를 계속하는 동시에 미군의 완전철수 시까지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여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지급을 계속하며 군대유지에 필요한 설비와 기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III.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인식과 대응

1)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임시군사고문단은 비록 봉기 발생에 대한 사전 정보나 보고가 없었지만²⁷⁾, 점령초기부터 자신들이 창설시키고 훈련시켰으며, 자국에 우호적이고 친미적이어야 할 경비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대한정책과 일치한다. 즉 미국 정부로서는 여러 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이 후원하여 설립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1945년 한반도 분할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의 국익, 즉 동아시아에서의 반공보루 구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이러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 4연대 부연대장으로 진압을 지휘하고 있던 박기병은 “그 때 여수로 부대를 빼지

26) 하우스만 · 정일화, 183쪽.

27) “History of the Rebellion,” 1쪽. RG554.

않으면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고 강력한 명령이 내렸”²⁸⁾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본국정부와 주한미군 등 위로부터 여순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로버츠와 쿨터 등은 조속한 진압을 계획하게 된다.

진압작전을 총괄했던 고문단장 로버츠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진압을 촉구하였다.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순천과 여수를 조속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란세력으로부터 이 곳을 해방시키는 것은 선전상 중대한 가치를 갖는 도덕적, 정치적 승리가 될 것²⁹⁾

이것은 주한미사절단의 견해, 즉 “남한의 장래가 이승만과 그의 협력자들이 불만세력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통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³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일한 인식 하에서 무초 주한미대사와 로버츠 고문단장은 “이제 막 출범한 이승만 정권이 군대반란으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속히 평정하라’는 불같은 명령을 계속 내렸다.”³¹⁾

하지의 뒤를 이어 주한미군사령관이 된 John B. Coulter는 “이승만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투입되지 않을 것”³²⁾이라는 방침을 정하였는데, 사실상 “남한괴뢰 정권에 대한 남한 인민의 불만”³³⁾으로 봉기가 일어난다는 소련측 선전에 이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현지 미군병력을 진압작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임시군사고문단을 이용한 진압작전을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로버츠는 실제 모든 고문관들에게 “전투지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것. 만일 전투 개입 상황이 포착될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간주할 것”³⁴⁾이라는 경고를 발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미군개입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또한 Coulter는 혹시 광주도 봉기군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³⁵⁾ 이는 미군 당국이

28) 전사편찬위원회, 「박기병 증언록(HA03005)」

29)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62.

30) Dispatch 90, American Mission in Korea, 16 Nov 1948, sub : Political Summary for October 1948, G-2 Doc Lib, DA, ID 0509409, Sawyer, 1962, 39쪽에서 재인용.

31)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179쪽.

32) “History of the Rebellion,” 2쪽.

33) ‘Official Deny Rebellion Report,’ “Stars and Stripes,”(1948. 10. 19)(이하 여순작전관련 1차 문건 인용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RG554 문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간주).

34) “Summary of Situation from Gen Roberts”(21 Oct 1948)

대도시에 반이승만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의미한다.

사건 발생 직후 임시군사고문단은 다른 지방에서의 동요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10월 23일에 인천과 원주 등지의 CIC정보는 “60명의 김일성 특수간첩단이 38선 접경 부근에 파견”되었다는 것과 “남로당 부산지부가 비밀 회의를 개최했다”³⁵⁾는 것으로, 여순의 파문이 다른 지방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수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³⁷⁾을 보여 준다. 외신 기자들까지 파견되어 사건을 취재³⁸⁾하였는데, 고문단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초기에는 발생원인과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는 사건발생 이유가 전 연대장의 음모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과 제주파견 반대 불만자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며, 봉기군 규모도 40명, 400명, 700명³⁹⁾ 등 최대 17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초기 사건파악이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대한 신속한 반란봉쇄와 진압계획 수립”(Plan to contain and suppress rebels at earliest moment)⁴⁰⁾을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정부의 발표, 즉 극우정객이나 혁명의용군에 의해 여순사건이 발발했다는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주한미사령관 쿨터는 “이번 반란은 반란을 구실로 제주도에 출전했던 경비대원 중 사상을 달리 하는 자들에 의한 것이고, 그 혼란을 신속히 이용하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가담에 의한 것”⁴¹⁾이라고 하여 반란의 주모자를 일부 군인들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여순사건의 계획성 유무와 남로당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의도된 것이라는 ‘계획설’과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우발설’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는데, 사건 진압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고문관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남로당이 1948년 연말을 기해 군부 반란을 추진했지만, 갑작스런 14연대의 제주도 출병을 계기로 미처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너무 일찍 폭발한(prematurely touched off)”⁴²⁾ 봉기로 보고 있다. 여순진압작전에서 하우스만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군사고문단 정보참모 리드(John P. Reed)의 경우,⁴³⁾ 그는 남로당이 무장봉

35) Roberts to Senior advisor Kwangju(23 October 09:50).

36) G-2, XXIV Corps, Flash Report(23 October 1948).

37) Roberts to Hausman and Roberts to Simmons.

38) Beech, Mydans, Raymond, Lambert 등 4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Roberts to Hausman(23 October 11:30).

39) Roberts to CG USAFIK(1948. 10. 20).

40) 앞 문서.

41) 『세계일보』, 1948. 10. 24. 김득중 앞 논문, 204쪽에서 재인용.

42) Sawyer, 39쪽.

43) John P. Reed, The Truth about the Yosu Incident, RG319 Box 726.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기계획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여수봉기는 갑작스런 제주도 출동 지시 때문에 시기상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우스만도 경비대 내 좌익 세력 제거를 위해 정보부에 있던 리드 대위와 논의하여 백선엽을 정보담당자로 선발하여 일을 맡게 하고,⁴⁴⁾ 이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14연대 오동기 연대장 체포사건 등은 반정부적 활동의 증거일 뿐 14연대 전체가 남로당의 계획과 지도하에 조직적으로 봉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미군 정보과가 14연대의 봉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10월 20일로 제시⁴⁵⁾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봉기 당일인 10월 19일 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연대 부연대장인 박기병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고문관에게 사건 발생 직후 ‘협의’하였다는 것은 봉기 소식이 즉각적으로 미고문단에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2) 여순사건에 대한 대응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임시군사고문단은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즉시 고문관 파견을 시작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남한 진압군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무한정 투입을 통한 조기진압이라는 정책을 폈다.

가.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 지도

14연대의 봉기 소식은 봉기 당일인 10월 19일에 임시군사고문단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⁴⁶⁾ 정식 문건에 의하면 다음 날인 20일 09:10에 주한미24군단 G-2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⁴⁷⁾⁴⁸⁾

반공체제의 구축,’ 2004,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2쪽에서 재인용. Bennie W. Giffith도 남로당은 소련군이 철수한 뒤에 국방경비대 내에서 일어나는 봉기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44) Allan R. Millet 김광수 역, 위의 글, 255-256쪽.

45) “History of the Rebellion,” 2쪽.

46)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주한미24군단 G-2에 10월 20일 09:10에 사건보고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and the 6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10 November, 1948)(이하 “History of Rebellion”으로 생략), 2쪽. RG554, Entry A1 13서, 76, Box #12), 박기병(전편위, 군편증언록)과 하우스만의 회고(미군 대위)에 따르면 10월 19일로서 당시 정황으로 보아 바로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7) “History of the Rebellion,” 1쪽.

48) 현재 공개된 미군문서에서 확인가능한 최초보고로 5여단 S-2의 보고를 들 수 있는데, 사건 접수시각은 20일 08:20으로, 미25군단 G-2에 접수되었으며, 사건 내용은 1) 1948년 10월 19일 21:00~10월 20일 02:00에 제주출동 예정인 14연대 40명의 사병이 반란을 일으켰음, 2) 무기고 점령, 3) 시민도 합류한 상태에서 여수경찰서와 철도경찰서 공격, 4) 반란숫자 증가 중, 5) 여수-광주 통신 불통, 6) 광주는 조용한 상태임 등이다. Reed 보고(1948. 10. 20)

사건이 접수되자 미24군단 G-2와 G-3는 당일 오후 5시부터 전 부대에 24시간 비상 경계령을 발령⁴⁹⁾하여 전 부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였고, 전체작전의 진압책임을 맡은 로버츠는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던 미24군단의 탄약고를 비롯,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진압작전을 시도하였으며,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 지역에서 봉기군을 강력하게 깨부술 것”⁵⁰⁾을 송호성에게 조언하였다. 이 작전은 보병 뿐만 아니라 해경 함정, 수송기, 경비행기 등이 총망라된 육·해·공 입체작전이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의 보고체계는 각 지역 고문관 → 로버츠 →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이어졌으며, 이 보고는 통상 기존의 체계 즉 미극동군사령관 → 미합참으로 이어져 본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미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6사단 G-2가 미24군단 G-2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정보체계는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로버츠가 진압작전의 정점에서 임시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그 때까지 존속하고 있던 미24군단을 이용,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우선 봉기군이 제주도로 탈출할 것을 우려, 해안경비대 함정 총 8척을 여수 앞 바다에 배치, 순시하도록 하였고,⁵¹⁾ 부산 5연대로 하여금 부산을 출발, 여수로 상륙하여 진압작전에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지에서는 진압작전 초기 하우스만이 로버츠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였는데, 하우스만은 처음부터 봉기군이 지리산 등으로 빠져 나가 유격대와 합류할 것을 우려, 이들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고문단이 취한 작전은 ‘기선제압작전’으로, 이는 봉기군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었다. 고문단은 봉기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라고 보고 광주 4연대의 1개 대대를 급조, 10월 21일 11시 30분에 순천 북방에 있는 서면 학구리에서 봉기군에 맞서도록 하였다.

당시 반군토벌전투사령부(고문단은 ‘기동작전군사령부’(Task Force Command)로 호칭. 이하 토벌사령부) 지휘부에서는 순천 북방으로 진격하고 있는 봉기군에 대한 선발 공격을 타 지역의 지원부대가 도착한 후 작전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들이 광주 4연대 투입을 반대한 이유는 그동안 경찰과의 잦은 유혈 충돌 등 중앙 정부의 신임을 잃을 만한 일을 저질렀고, 병력 수가 470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였으며, 잘못하다가는 14연대와 합류시킬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⁵²⁾였다.

49) “History of the Rebellion,” 2쪽.

50) DF from Chief PMAG to CG USAFIK(21 Oct 1948).

51) 앞 문서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월 20일부터 ‘작전상황지도(Situation Map)’가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10월 23일에는 8척의 해안경비대 함정배치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누락이유가 불분명한 가운데 10월 22일자(지도 일련번호 3번)가 빠져 있어서, 10월 22일자로 함정이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2)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174-175쪽.

그러나 하우스만은 우선 일차 공격을 가해 봉기군의 자만심을 꺾을 필요가 있었고 어차피 다른 경비대에도 약간씩은 공산 조직이 침투하지 않은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전투에서는 첫 조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4연대를 일단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⁵³⁾

임시군사고문단의 작전에 따라 박기병 소령이 이끄는 4연대가 순천 북방 학구에 투입되었는데 가장 먼저 순천에 들어간 부대는 4연대 1개 대대였다. 미고문관 켈소 중위가 이 부대를 따라 순천에 들어갔다.

이 학구전투는 봉기군이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전술의 일환인 후퇴작전이기도 했지만, 하우스만이 자평하듯이 이 기선제압작전은 봉기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성공”⁵⁴⁾하였다.

이 기선제압작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봉기군의 북상은 저지되었고, 이후 진압군의 병력이 증강됨에 따라 봉기군이 목표로 했던 북상은 완전히 차단당했다.⁵⁵⁾ 결과적으로 임시군사고문단의 작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작전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임시군사고문단은 순천탈환이 이루어지자 4F(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 전술⁵⁶⁾을 한국군에 제시했는데, 이는 흩어진 반군을 찾아서-고정시킨 후-싸워서-끝낸다는 것으로, 끝까지 봉기군을 추적, 그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는 경비대 시절 소요진압과 게릴라 토벌의 경험을 살린 것이었으며, 만주군 출신의 진압군 주도세력의 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계속된 봉기 진압 작전 전술의 지침이 되었다.

풀러가 도착한 이후 여수, 순천 지역으로의 진격작전 명령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달되었다.

- 1) 5연대 1대대 부산으로부터 여수로 상륙할 것
- 2) 대전 소재 2여단 병원, 대전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
- 3) 2연대 3대대, 대전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4) 1병참부대, 서울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5) 6연대 1대대, 대구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6) 5여단, 4연대 사령부 학구리로 이동할 것
- 7) 해안경비함 8척 여수-제주 간 배치 · 순시할 것⁵⁷⁾

53) 앞 책, 176쪽.

54) 하우스만 · 정일화, 177쪽.

55) 이 전투에서 패한 봉기군 일부는 투항했고, 일부는 순천과 광양 백운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56) 하우스만 · 정일화, 184쪽.

57) “History of Rebellion,” 5-6쪽.

해안경비대 함정 순시는 작전 3일째인 10월 22일에 이루어졌다. 즉 봉기군의 제주 진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여수와 제주 간 8척의 경비함을 배치, 순시하도록 하였고,⁵⁸⁾ 여수상륙작전은 부산 5연대가 동원되어 수행되었다. 부산 5연대 고문관이었던 Howard W. Darrow대위와 Ramond T. Moore중위는 10월 22일, 부산으로부터 여수상륙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3여단 고문 Rose 중위와 Symmond 대위에 의해 군량과 수송 수단인 함정을 지원받아 Darrow 대위와 Moore 중위가 김종원이 지휘하는 함정에 동승하여 출항한 지 닷새만인 27일에 여수항에 입항하게 된다. 원래 하루만에 여수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봉기군의 저항과 정보부재, 해안경비대와의 작전협조 부재 등의 이유로 쉽게 상륙하지 못하였다. 이 와중에 김종원의 독선적인 행태는 가관이었다. 대로우의 평가에 따르면 김종원은 상륙하지 말라는 상부명령도 무시하고 계속 상륙을 고집하였고, 해안경비대를 불신하여 독자적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는가 하면 안전확보도 없이 무조건 사병들에게 상륙을 지시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대로우의 눈에 비친 김종원의 상륙작전은 한 마디로 “전술,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도 없는 맹목적인 것”⁵⁹⁾이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진압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을 조율해야 했다. 이승만과 무초, 쿨터, 로버츠 등은 도시 탈환을 주장하였으나, 반면에 하우스만과 백선엽 등은 지리산 방면으로 퇴각하는 봉기군 추격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판단과 군사적인 판단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즉 전자의 인물들은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도 여순이 즉시 탈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반이승만 선전이 타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각 지방의 좌익 동향을 파악, 해양순시함을 여수항에 정박시킴으로써 타 도시로 반이승만 선전이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반면 하우스만 등은 봉기군 게릴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출로인 외곽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⁶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봉기군이 산게릴라로 침투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백운산, 지리산 등의 퇴로를 우회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으로, 시간과 경비가 더 들 것이지만 태백산 줄기와 전라도 섬들을 통해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는 북한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산악으로 스며들기 전 평지에서 완전 소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시탈환작전’과 ‘퇴로봉쇄작전’의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이승만과 로버츠, 쿨터의 주장이 득세⁶¹⁾함으로써 ‘도시탈환작전’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58) “History of the Rebellion,” 5쪽 및 RG554 문서 작전지도 ‘Situation Map.’

59) Howard W. Darrow, “The Y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8쪽.

60)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185-186쪽.

61) 하우스만은 자신의 이러한 건의가 “대한민국 정부, 무초 대사, 로버츠 단장 등이 일단 여수 · 순천을 속히 탈환하는 것에 변함없는 우선 순위를 두고 내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앞 책, 186쪽.

이렇게 철저한 봉기군 추적·진압지침을 마련한 임시군사고문단은 인사권자로서 진압군의 지휘체계가 문란해지는 것도 묵인하였다.

여수봉기가 발생한 10월 19일부터 순천 작전이 시작되는 10월 21일까지 진압군의 작전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군 지휘체통이 무너지면서 만주군 출신의 지휘관들이 부상하였는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은 바로 임시군사고문단이었다. 한 예로서 광주 송호성 사령관은 진압군 병력을 집중한 다음에 순천을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김백일과 백선엽은 전화연락을 통해 이를 무시한 채 즉각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하우스만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승만-이범석-채병덕-김백일, 백선엽, 백인엽, 송석하 등으로 이어지는 강경파의 득세, 일제 하 만주군 출신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우스만이 기억하는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만주군출신으로 특히 백선엽, 김백일, 송석하 등은 만주에서 조선독립군을 ‘사냥’하던 ‘간도특설대’ 출신이었다.

하우스만은 로버츠로부터 토벌사령부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고문단을 대표하는 작전 책임자이자 총사령관 송호성 고문 자격이었으며 “토벌군사령부가 사태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할 경우 즉각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것과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행위를 할 것,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 등”⁶²⁾을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주장,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예정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토벌사령부 구성과 감독행위, 작전계획수립과 실행 등 철저한 작전주도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고문관 파견과 동원

로버츠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임시군사고문관을 진압작전에 투입시키면서 임시군사고문단의 동원되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실제 모든 고문관들에게 “전투지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것. 만일 전투 개입정황이 포착될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간주할 것”⁶³⁾이라는 경고를 발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미군개입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각 연대에는 고문관이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부대가 여순 진압작전에 투입되면서 자동적으로 작전에 참여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토벌사령부에 고문관을 추가 배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압작전을 주도해 나갔다. 사건 당시 주둔 중이던 미6사단 G-2도 공중정찰 등의 형태로 진압작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2)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172쪽.

63) "Summary of Situation from Gen Roberts"(21 Oct 1948)

당시 광주 반군토벌전투사령부(이하 토벌사령부)에 파견되었던 고문관의 숫자는 자료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Sawyer의 경우 총8명으로 보고 있는데⁶⁴⁾, 토벌사령부에 파견된 고문관은 문서마다 약간씩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미 CIC가 동행했다는 사실이다. 로버츠가 쿨터에게 보고한 문서⁶⁵⁾와 작전과에서 24군단 참모장에게 보고⁶⁶⁾한 바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의 CIC 요원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며,⁶⁷⁾ 토벌사령부에 파견된 고문관은 수시로 총 인원수가 변했지만 최소 5명에서 8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고문단 자료 및 하우스만 회고록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여순진압작전에 동원된 미군의 명단과 계급, 소속, 임무 등은 다음과 같다.⁶⁸⁾

(표) 여순진압작전 관련 미군의 현황

이 름	직 책	계급	임 무	비 고
Jphn B. Coulter	주한미군사령관	중장	주한미군 총 책임	John R. Hodge 후임
W. L. Roberts	임시군사고문단장	준장	진압작전 총괄	
West	G-3 고문관		작전계획 담당	
Hurley Fuller		대령	현지 진압작전 총괄	
James Hausman	임시군사고문단원	대위	현지작전계획(G-3) 담당	
John P. Reed	임시군사고문단원	대위	현지 정보(G-2) 담당	
Marvin G. Wilson	임시군사고문단원	중위	현지 군수(G-4) 담당	
Arthur G. Griffith			연락항공기 조종, 정찰	
Mohr	14연대 고문관	중위	정보수집 및 동향 파악	봉기군에 의해 잠시 억류 후 진압사령부에 합류
Greenbaum	14연대 고문관	중위	정보수집 및 동향 파악	위와 같음
Minor L. Kelso	4연대 고문관	중위	작전수행	진압군의 순천진입 시 4연대 1대대와 동행
F.Foster Cowey	12연대 고문관	중위	작전수행	백인엽과 동행

64) Sawyer, 1962, 39-40쪽.

65) 이 문서에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직책만 기재된 두 명의 미고문관이 등장한다. 즉 감찰장교 1명과 CIC 요원 1명이 그것이다. Roberts to CG USAFIK(20 Oct 48).

66) G-3 to C/S(20 Oct 48).

67) "History of the Rebellion," 3쪽.

68) 진압에 동원된 부대는 주지하다시피 2여단의 4개연대(2, 12, 6, 15)와 5여단의 3개 연대(3, 4, 14), 그리고 서울에서 파견된 수색대와 항공대, 해안봉쇄와 상륙작전을 담당한 해안경비대와 5연대 등이다.

Howard. W. Darrow	5연대 고문관	대위	여수상륙작전 수행	김종원과 동승, 보고서 작성
R. T. Moore	5연대 고문관	중위	여수상륙작전 수행	김종원과 동승
Symmonds	3여단 고문관	대위	여수상륙작전 지원	식량 및 수송수단 준비
Rose	3여단 고문관	중위	여수상륙작전 지원	식량 및 수송수단 준비
Reenstadna	미 6사단	대위	정보(G-2) 수집 및 분석	
Grant				진압사령부에 소속되어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추정
Howard	민간인		정찰보고	미 CIC 요원으로 추정
Treadwell		대위	정찰보고	순천상공 시찰(2명의 미고문관 생존과 10/23자 순천상황보고서작성.
Laubac		대위	작전담당	김포에서 정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
Baker		중위		보고서
Mowitz		소령		보고서
Yates		대위		
Simmons	5여단 고문관	대위		
Burgess	9연대 고문관	대위	정보수집 및 보고	제주에서의 빨치산 동향 보고
Sutherland				미확인 B-25 항공기의 여수 상공 비행 보고
Fowzer		대위	정찰보고	진압군의 보성 공격 보고
Raynold	20연대 통신대	소령	통신장비와 운영요원 지원	최신 무전기 M208 지원

사건 당시 해안경비대 소속 고문관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군 정 초기인 1946년 9월에 미해경고문단 15명의 도착이 확인되나, 이후 미군감축계획에 따른 철수요구에 의해 주한미군측은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고문단을 요청한 이후 교체시기와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무기와 군수물자의 원조

로버츠와 쿨터는 사건 발생 직후 무조건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실제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들은 거의 무한정의 탄약, 무기, 식량 지원을 하였는데, “C47기는 물론 탄약· 무기· 식량 등을 닥치는 대로 실어 날랐다...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할 때 화차 2량에 무기· 화약· 휘발유· 식량 등을 가득 싣고 갔었다”⁶⁹⁾(강조는 필자)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진압군에 대한 지원이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되나 몇 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작성된 미군측 문서와 하우스만의 회고 등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철도는 봉기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임시군사고문단은 주로 트럭과 수송기 편이 이용, 이들 물자를 수송하였다.

무기와 실탄은 미24군 탄약고로부터 대량으로 조달되었는데, M1 소총과 실탄, 81mm 와 61mm 박격포와 실탄, 경기관총(LMG)과 실탄 등이 지원되었으나, 구체적인 양은 알려지지 않는다. 특히 임시군사고문단은 이 때 처음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된 모든 진압군에게 M1을 지급, 신형무기로 무장시켰다.

우선 한국군 항공기에는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미군조종사와 L-5연락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⁷⁰⁾ 수송기, 정찰기 등 항공기는 병력수송과 봉기군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과 전달에 이용되었는데, C47 수송기의 경우 1대가 배치되어 하루 한 번씩 서울-광주 간 연락을 담당하였고 특히 로버츠와 파견고문관과의 연락에 이용되었다. 이 수송기를 통해 1일 작전 명령과 1일 작전보고가 오고 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L4 경비행기 10대가 광주와 전주에 각각 5대씩 배치되어 부대간 연락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A-26가 2대가 배치되어 여수 상공을 비행, 정보 수집⁷¹⁾을 하였다.

그리고 M8 반트럭 정찰차 9대⁷²⁾가 지원되어 정찰에 이용되었다. 식량도 쌀과 육류가 미군으로부터 지원되었는데, 육류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공수한”⁷³⁾ 것까지 보급이 되었다. 이외에도 최신 무전기 M208이 지원⁷⁴⁾되었고, 나중에는 로버츠가 암호문까지 하달하여 무전 통신을 통한 작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69)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82쪽. 문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하우스만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한 기록 사본에는 “어느날 C47기가 쌀 6톤, 육류 20박스를 싣고 온 것이 적혀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대량의 식량운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 Mike to Roberts, 230220 Oct 48. RG 554, Entry A1 1374, Box # 10.

71) G-3 Journal(23 Oct 48).

72) W. L. Roberts(Chief, PMAG) to CG USAFIK(1948. 10. 21), RG554, Entry A1 1374, Box # 10

73) 앞 문서, 182쪽.

74) 하우스만 · 정일화, 183쪽.

IV.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평가와 영향

1) 여순사건에 대한 임시군사고문단의 평가

임시군사고문단에게 여순사건은 “경찰 보조 병력으로 산돼지 몰이나 하던 한국군”이 대규모 작전을 펼친 “놀라운 일”⁷⁵⁾로 받아들여졌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여순사건진압작전을 통해 “대부대가 연합작전을 펴는 요령을 경험”하였고, “군의 작전능력과 순발력을 과시한 계기”가 되었으며, 통신 수송 개념도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⁷⁶⁾하는 등 “한국군 현대화의 시발”⁷⁷⁾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권과 본국정부가 원했던 도시탈환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여순진압작전을 통해 일단 이승만정권의 안정은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었다.⁷⁸⁾ 미국측에서는 여순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을 볼 때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더라도 이들이 남한 정부를 위협할 만큼 충분한 추종자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에 도달하였는데,⁷⁹⁾ 무초는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11월 19일자 전문에서 자신과 주한미사령관 쿨터가 이승만과 국무총리, 내무장관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신감과 정부 내외의 비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짜 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⁸⁰⁾함으로써 반공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남한 점령 이후 내부의 폭동은 남한 전체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14연대반란’으로 규정지은 여순사건은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던 미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보성, 벌교, 광양 등 호남 일대 7개군에 걸쳐 확산된 여순사건은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정부의 장래가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이 반대파들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통제하게 되는 것”⁸¹⁾을 의미했으며, 이 진압작전이 일단 성공했다고 자평한 미국정부는 반공을 통한 이승만정권의 공고화로 나아가게 된다.

75) 184쪽.

76) 181쪽.

77) 180쪽.

78) 여순 사건 종결 후 미 국방부는 하우스먼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여순반란 진압 작전의 공로를 인정해 미공훈장(Legion of Merit)을 수여”하였는데, 당시 임시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가 공적서를 쓰고 참모장인 풀러가 증인 선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하우스먼은 이 훈장이 서열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세계대전과 같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런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또 영광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우스먼 · 정일화, 1995, 193쪽.

79) Joint Weeka, 1948. 10. 31, 250쪽.

80) FRUS 1948, 1332~1333쪽.

81) Sawyer, 1962, 39쪽.

2) 여순사건의 영향

가. 숙군의 가속화

여순사건은 주지하다시피 남한군대 내의 좌익을 뿌리 뽑는 것 뿐만 아니라 반이승만 세력 제거에 이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숙군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정권 즉 반소반공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국의 후원과 지지로 성립된 남한단독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권 하에 놓여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숙군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승만의 이해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주한미대사관은 숙군과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공을 통한 이승만정권의 공고화와 일치시키고 있다. 무초는 이범석이 언론에 발표한 여순사건 관련 내용을 국무부에 전달하면서 “이 나라는 위협스럽지 않다. 신정부가 경비대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공산주의를 숙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⁸²⁾고 하여 숙군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반공화, 나아가 반이승만세력 제거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승만에게 주한미군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동시에 자신의 물리력인 한국군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임시군사고문단은 여순사건 이후 진행된 숙군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임시군사고문단은 경비대가 “공산주의자(Communists) 뿐만 아니라 “선동가(agitators), 불평불만자(malcontents), 반대당(dissident parties)”⁸³⁾ 등이 침투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반대당이라 함은 반이승만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경비대 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ranks of undesirables)을 제거하는 운동”⁸⁴⁾으로서의 숙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존재하고 있던 미24군단 작전보고에서도 한국군 사령부가 여순진압 후 숙군을 강화하고 14연대 뿐만 아니라 대구 6연대 사건 관련자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확인⁸⁵⁾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숙군의 진행과 과정, 결과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경비대 초창기부터 군 창설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온 하우스만은 숙군 진행내용을 김창룡으로부터 보고 받아 로버츠 고문단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는데, 이승만으로부터 숙군대상자 명단을 건네받았을 때 오류를 지적할 정도로 숙군자의 명단을 훤히 꿰고 있었다.⁸⁶⁾ 하우스만이 주요 인물로 부각된 데에는 미군 지휘체통의 무책임이 주요 요인으로

82) FRUS, 무초가 국무부장관에게(1948. 10. 28)

83) Sawyer, 1962, 26쪽.

84) Sawyer, 1962, 26쪽.

85) “History of the Rebellion,” 10쪽.

작용했다. 즉 남한에 파견된 미24군단 내에 전문적인 한국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잦은 교체와 장교와 사병의 한국 근무 기피 등의 영향으로 미군 지휘부는 불안하였고, 따라서 일관된 정책 시행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우스만의 경비대에 대한 집착은 초창기부터 부대 창설과 증편, 훈련, 무장 등 일련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도록 하였으며, 그는 이를 배경으로 자국군 지휘관보다 미군을 더 신뢰하던 이승만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이승만의 신임을 얻었던 하우스만은 이승만 정적제거의 일환인 숙군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했다. 하우스만 역시 하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공산주의’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것. 한국이 공산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미국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다는 것”⁸⁷⁾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남한의 공산주의자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의 숙군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우스만은 여수 14연대 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대 내의 5개 연대, 춘천 8연대, 대구 6연대, 마산 15연대, 제주 9연대 등에도 공산당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숙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인물로, 경비대 내의 좌익세력 제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여순사건진압이 끝나자마자 “14연대에만 적색분자가 있으라는 법이 없다”는 전제 아래 “전군에 적색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과 정보를 갖고”⁸⁸⁾ 우선 장교들의 성분 조사를 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숙군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이 투입되어 있다는 인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승만의 정책과 노선에 반대하는 김구세력을 비롯한 모든 반이승만세력의 제거를 시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만은 경찰이 주동이 되어 숙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발뻠하고 있으며, 고위장교 숙청자 명단도 경찰이 만들어 이승만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진술⁸⁹⁾하고 있다.

하우스만은 “성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무고한 사람들까지 많이 혐의를 받았고, 당시 미군정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데에 큰 책임이 있다”⁹⁰⁾고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숙군작업이 임시군사고문단의 적극적인 개입⁹¹⁾과 주도로 이루어졌음과 숙군이 졸속으

86) 그는 군 고위층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던 이 명단이 “국립경찰의 어떤 인사들이 국군의 고위 장성 장교들을 불신시키려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승만에게 불러가 그 명단의 착오, 즉 기처형자가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숙군자의 명단을 훤히 꿰고 있었다. 전편위, 하우스만 증언록(HA04887).

87)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23쪽.

88) 하우스만 · 정일화, 1995, 32쪽.

89) 앞 책, 192쪽.

90) 하우스만 증언록(HA04887).

91) 숙군과 관련하여 당시 고위장교 숙청자 명단이 고문단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는 고문단은 숙군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러한 소문이 나무하게 된

로 처리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희생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시적 변화 : 철군연기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NSC 8, 즉 남한에서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국무부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무초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무초는 여순사건 발생 직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일자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였다. 무초는 당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패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군의 주둔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철수를 몇 달 연기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38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은 내전이 발생하면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군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막을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수를 연기시키는 것만이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대한반도정책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²⁾

이러한 무초의 건의에 대해 국무부는 1948년 12월 17일에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의 공산화 방지 필요”라는 의견을 전제로 철군 재검토를 요구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NSC 8/2(1949. 3. 22)가 결정되었다. 철군일자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결정은 “현재 남한 안보와 공공질서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외부침략 또는 외부로부터 사주된 폭동에 의한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라고 함으로써 여순사건이 철군연기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순사건 직후 응급조치로 미육군부는 1948년 11월 15일에 맥아더에게 7,500명 상한선의 1개 연대를 무기한으로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한 후,⁹³⁾ 미국은 주한미군 철군일자 연기(1949. 6. 30)를 결정하였으며, 보완책으로서 철수 전 한국병력에 미군장비와 6개월간의 예비보급품 이양, 한국군 훈련 및 군사원조의 효율적 이용 주체로서의 미군사고문단 즉시 설치, 육군 65,000명, 해안경비대 4,000명, 경찰 35,000명으로의 증강 등⁹⁴⁾을 결정하였다. 또한 최종 철수에 앞서 한국의 육군, 해안경비대, 경찰에 장비를 이양하며 정식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한미군의 철군 직후인 1949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 출범하게 된다.

배경에는 이승만의 행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이승만은 군 계통을 무시하고 미군을 이용, 숙군관련 문제를 처리해 나갔는데, 이승만은 하우스만에게 숙군관련 일일보고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숙군자 명단도 한국군 참모총장에게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고문단을 통해 나중에 건네 받도록 하였다. 하우스만 증언록(HA04887).

92) DS Records 740.00119 Control(Korea)/11-1248, November 12, 1948. Box no. 3831A, RG 59.

93) November 15, 1948. JCS Records CCS 383.21 Korea(3-9-45), RG 218.

94) FRUS 1949, Vol. VII, 967-968쪽.

V. 맺는 말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관된 목표, 즉 반공반소 보루로서의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이라는 목표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이러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무력기제로 존재했는데, 미군정 시기에 주한미군은 남한 민중의 변혁 욕구, 즉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항쟁에 대해 주한미군을 동원, 직접 진압에 나선 바 있다. 여순사건도 주한미군 동원만 없었을 뿐 법적으로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시군사고문단이 주체가 되어 남한단정 수립 후 정식 군으로 전환한 경비대를 총동원, 진압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무기를 무한정 지원하였으며, 고문관을 파견, 이를 진두지휘하여 작전을 이끌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미24군 정보(G-2), 작전(G-3), 군수(G-4) 등이 총동원된 사실상의 진압작전 주체로 등장한 임시군사고문단은, 고유권한 즉 인사권, 이동명령, 무기 및 장비 제공, 배치, 작전지도 등이 포함되는 작전지휘권을 이용, 사건 발생 직후 미고문단장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설치 및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사실상의 사령부 역할을 하였다. 여순봉기를 군대 내의 공산주의 세포가 일으킨 반란으로 간주한 임시군사고문단은 강력한 반공주의로 중무장한 만주군 출신 지휘관들을 이용, 한국군이 봉기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지휘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한국군이 이승만정권에 충실한 반공화된 군으로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여순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정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수사였을 뿐, 실제 미군 병력을 제외한 모든 가용 인력, 즉 고문관과 진압무기 및 군수물자를 동원, 조기 진압에 나선 것으로 문서상 확인된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이 후원한 신생정부가 공산세력에 의해 전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이는 여순사건진압 후 바로 이어진 숙군에 동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진압작전 관련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여순사건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일관된 목표인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과 진압

- 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

이 선 아(성균관대)

【 차례 】

머리말

I. 여순사건 주도세력의 입산과 유격대 개편

II. 빨치산 활동과 1949년 ‘춘계토벌’

III. 1949년 ‘조국전선’ 결성과 ‘9월 공세’

IV. 군의 진압과 빨치산 활동의 무력화

맺음말

머리말

여순사건을 계기로 점화된 빨치산 활동은 한국전쟁 이전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 하에 펼쳐졌던 조직적 활동 중 가장 높은 수위이자 최후적 형태의 활동이었다. 1948년 ‘2.7 구국투쟁’, 단선단정 반대운동을 전후하여 남로당 지방당 조직이 탄압을 피해 야산지대로 피신해 있으면서 ‘野山隊’, ‘산사람’, ‘虎隊’ 등으로 불렸던 것은 기존 연구와 증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었는데, 사회주의 운동에서 유력한 전술로 채택되는 빨치산 혹은 유격대의 의미는 이전의 자위적이고 초보적인 무장집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무장유격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군사활동, 태업, 파괴, 선전선동이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여순사건 이후 반군 세력이 빨치산·유격대로 개편되는 과정 및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이전 빨치산 활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여순사건 주도세력의 입산과 유격대 개편

1948년 10월 19일 저녁, 여수 14연대 병사들은 지창수 상사를 비롯한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10월 20일 여수를 장악하였다. 이후 반군 주력은 김지회 중위의 지휘로 순천으로 이동해 경찰과 교전한 후 순천을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2대 중대가 홍순석 중위의 지휘 하에 합류했다. 반군들은 10월 22일 순천 북쪽으로 전진하다가 학구에서 진압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패배, 퇴각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등지로 분산했다.¹⁾ 이들은 다시 순천으로 집결, 구례를 거쳐 10월 26일경 두 부대로 나뉘어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한 부대는 화엄사골을 거쳐 입산했고, 다른 한 부대는 구례에서 문수리를 통해 지리산으로 향했다.²⁾

여순사건의 주도세력은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 기존 문헌과 증언에서는 당시 이들이 반란 이후 즉시 지리산으로 입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³⁾ 진압군 및 진압에 관여했던 미군측도 반군 세력의 입산과 그로 인한 사건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었다.⁴⁾ 한편으로 반군들의 지리산 입산과 관련한 몇몇 증언과 연구는 이현상의 순천 출현으로 인한 반군 세력의 방향 전환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14연대의 전략 수정, 조직개편의 계기로 설명되어 왔다.⁵⁾ 그러나 순천 군당 출신 윤기남은 이현상이 1948년 말에 지리산에 도착하였다고 증언하였고⁶⁾, 함양 군당과 남부군에서 활동했던 하종구도 이현상의 지리산 도착 정황과 경위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구술했다.⁷⁾ 이현상 순천 등장설은 신화적 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순사건은 김삼룡의 서울지도부, 남로당 전남도당의 직접 지시와 무관하게 발생했다. 여순사건 발생 초기에 반군 주체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남로당 중앙과 전남도당은 반란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반란 호응 여부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 조직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⁸⁾ 반란과 이후 후폭풍에 대해 중앙당, 도당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⁹⁾

1)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968, 1948.10.20~10.21; 노영기, 2005, 「여순사건과 구례」 『사회와 역사』 68호, 42쪽.

2) 노영기, 2005, 앞의 논문, 43쪽.

3) 김광일, 『근로자』 1949년 2호, 31쪽;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윤기남, 「여순사건을 말한다」 『끝나지 않은 여정』, 247쪽;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앞의 책, 806쪽.

4) 제임스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173쪽; 백선엽, 1992, 『실록지리산』, 221쪽.

5) 김득중, 2009, 『‘빨갱의’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100쪽.

6)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앞의 책, 802쪽.

7) 하종구(1922-2006) 구술(면담:필자), 2003년 5월, 서울.

8)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6, 앞의 책, 246쪽; 김세원, 1993, 『비트』 상, 51쪽.

9) 전남도당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윤기남(남로당 순천군당 간부)은 ‘알고는 있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요지의 구술을 한 바 있다.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에서 겪은 여순사건」 『순천시

남로당 중앙은 여순사건 여파 확산과 1948년 11월 2일 대구 6연대 반란, 제4연대 나주지구 파견대 반란 같은 지역의 우발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남로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정치노선과 투쟁방향이 무장유격투쟁으로 발전하는 명확한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남로당은 여순사건에 대해 ‘조선인민의 위대한 구국항쟁은 더욱 널리 또한 높은 단계로 확대 강화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¹⁰⁾ 또한 여순사건을 ‘자연발생적으로 격기한 병사와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전남 인민들의 무장진출’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야 할 일로 해석하였다.¹¹⁾ 이러한 표명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로당 좌익세력의 합법적 활동과 공간이 봉쇄된 상황에서 유격투쟁은 이들이 전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활동형태였다.

14연대 반군 세력의 주축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기존의 야산대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대로 군의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전투병력이었기 때문이다. 향토연대라는 특성상 이들은 주변의 지리적 상황에 토벌부대보다 익숙했을 것이다. 지방당과 지역민 일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점도 활동 지속의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여순사건 발생 당시 명분이었던 제주도 파병 반대는 단선단정 반대 운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졌던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정부의 미온적 친일청산, 친일경력자에 대한 반일감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이를 여순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할 정도였다. 張洪琰의원은, “금일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망을 받고 있는지 의심되는 바이다. 그 원인은 정부가 애국단체 애국지사를 냉대한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金明東의원도 “인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그는 정부의 관리나 법률이나 또는 매곡법 등 모든 것이 일제나 군정시나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¹²⁾ 이와 함께 피해한 농촌의 형편도 유격투쟁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여수 14연대 반란에 대해 정부는 10월 21일부터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은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고, 반란진압에 5개 연대 10개 대대, 비행대, 수색대를 동원하였다. 진압군은 10월 23일에 순천을 탈환하고, 24일에는 보성과 벌교를 탈환했다. 10월 24일, 해군과 육군이 여수를 공격하자 지창수와 함께 여수에 잔류했던 14연대 병력 일부는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철수했다. 지창수가 이끄는 부대는 11월 13일경 섬진강을 건너 구례군을 통해 지리산 문수골로 입산했다. 이후 반군은 산악을 근거지 삼아 지리산과 맞닿아 있는 주변 지역을 다니며 경찰지서 등 관공서를 습격하거나 추격하

사』 801쪽.

10) 『노력인민』 1948.10.30

11) 『노력인민』 1948.11.7

12) 「국회, 반란사건 수습대책에 대한 격렬한 논전 전개」 『조선일보』 1948.10.30.

는 등 정부군을 기습하고 지리산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보급 투쟁을 다녔다.¹³⁾

여수가 10월 27일에 정부군에게 탈환되자 군의 진압작전은 남원, 구례, 백운산, 지리산 일대의 반군 추격전으로 변경되었다.¹⁴⁾ 진압군은 여수 점령 후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개편해 10월 30일에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사령관 송호성 준장) 호남방면전투사령부는 하동-순천-학구-주암-광주 연결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전투지구를 구분하여 북지구는 제2여단(사령관 김백일 중령)이, 남지구는 제5여단(사령관 원용덕 대령)이 맡았다. 이는 여단과 사령관이 거꾸로 배치된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한다.¹⁵⁾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설치 직후 정부는 1948년 11월 1일을 기해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였다.¹⁶⁾

순천여수지구 전투사령부는 11월 8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 전투가 일단락되었으므로 전투사령부를 6일부로 해체하고, 이후의 진압작전은 제5여단(여단장 김백일)으로 귀속된다고 발표하였다.¹⁷⁾ 그러나 당시 전투상보에 따르면, 호남방면전투사령부는 11월 4일에 해체되었다.¹⁸⁾ 사령부 해체 후 원용덕과 김백일은 각각 원래의 위치대로 제2여단과 제5여단으로 복귀하였다. 군 공간사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운용과 해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 발표 후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¹⁹⁾ 그러나 전투사령부 해체 후에도 지리산 일대의 반군 진압은 남북지구로 나뉘어 계속되었다.

입산한 반군 세력과 추격하는 진압군의 교전 중 대표적인 것은 11월 19일 구례중앙국민학교 기습이다.²⁰⁾ 김지회 부대 5백여 명과 지창수 부대 200여 명은 12연대(연대장 대리 백인엽 소령)가 주둔하고 있던 구례중앙국민학교를 공격했으나 정부군에 의해 격퇴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는 반군들이 구례읍내를 포위하고 시가까지 돌입해 약 3시간에 걸쳐 전개된 시가전이였다. 기습은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고, 전투의 결과 군은 死體 200구, 포로 75명, 일반폭도 300명(일부 사살)의 전과를 올렸다고 보도되었다.²¹⁾ 또 다른 언론은 군이 반군 37명을 체포하고, 폭도 450을 생포했으며 203

13) 노영기, 2005, 앞의 논문, 43-44쪽.

1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해방과 건군』, 459쪽.

15)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270쪽.

16) 『동광신문』 1948.11.5

17) 『호남신문』 1949.11.10

18) 김득중, 2009, 앞의 책, 270쪽.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77쪽.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 1-해방과 건군』은 구례중앙국민학교 기습 일자를 11월 8일로 전하고 있으나 당시 언론 보도(동광신문 1948.11.23)와 실록자료(정지아, 1991, 『빨치산의 딸』 121쪽), G-2 보고서 등을 참조할 때, 노영기(2005)의 지적대로 11월 19일을 정확한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 『동광신문』 1948.11.23; 한편 전과와 관련해 정지아는 당시 반군 손실이 사망 26명이라고 서술했는데(1991, 122쪽) 전과로 보도된 死體 숫자와, 일부 사살했다는 ‘일반폭도’ 중 상당수는 민간인일 가능성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²²⁾ 이 두 사건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보도된 전과가 상이한 이유와 민간인 피해 정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구례 기습 실패 후 김지회 부대는 지리산으로 퇴각하고, 월동을 위해 병력을 분산시켰다.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하여 근거지를 설정하고, 일부는 태석봉, 둔철산, 정수산, 감악산 일대에, 나머지는 달궁, 장안산, 덕유산, 천마산 등으로 분산해서 유격지를 설정하였다.²³⁾ 11월 23일에는 제20연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가 백운산에서 유격대와 교전하고, 유격대 본부를 점령하고 기지를 전소시키는 토벌을 벌였다. 이 작전에서 군은 포로 3명, 遺棄死體 7구의 전과를 기록했다.²⁴⁾

반군 병력이 분산된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의 대규모 부대의 기습 전술에서 유격활동으로 방향을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산악지역에서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서도 유격전술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남로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빨치산 부대로 개편되었다. 1950년에 발간된 한 북한 문헌은 이 과정에서 ‘폭동군’을 유격대로 전환시킨 ‘조동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조동무’의 본명은 윤재옥, 일명 유일석으로 알려졌다.²⁵⁾ 문헌은 그가 해방 후 서울대, 경전 내 조직을 지도하고 영등포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했으며, ‘10월항쟁’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반군을 유격대로 개편하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서술한다. 지리산에 입산한 반군 세력을 ‘이현상부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²⁶⁾, 이들이 이현상의 지도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격대 편성 과정에서 이현상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반군 세력은 봉기 초반부터 지역 조직의 협조를 받았고, 남로당 조직의 도움으로 유격대로 전환하여 겨울을 날 수 있었다.

2. 빨치산 활동과 1949년 ‘춘계토벌’

유격대 활동은 경북, 강원 지역에서도 시작되었다. 지리산 일대의 진압군 추격이 전개되고, 군내에서는 숙군이 진행되던 중 1948년 11월 2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군 제6연대 병사들 중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이탈하여 달성지서를 습격한 다음 팔공산으로 입산하였다.²⁷⁾ 12월 6일과 1949년 1월 30일에도 6연대 예하 병사들의 반란이 발생하여 이들은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메릴(1982), 노영기(2005)의 연구를 참조.

22) 『남산경제신문』 1948.11.24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해방과 건군』, 479쪽.

24) 『동광신문』 1948.11.27

25)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950, 5, 『남반부 청년들의 영웅한 투쟁모습』, 56~61쪽. (RG242, Captured Enemy Document); 한편 윤기남은 구술을 통해 14연대 조직지도 오르고 ‘조동무’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두 인물이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26) 이태, 1990, 『남부군 비극의 사령관 이현상』; 정지아, 1991, 『빨치산의 딸』 上 참조.

27) 『서울신문』 1948.11.5

전개했다.²⁸⁾

경북 내륙 산악에서도 무장유격대가 출현하고, 남로당 선전물과 벽보가 나붙는 일이 자주 있었다. 빨치산들은 부락에 소규모로 나타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인공기를 게양한 후 정치선전연설을 하고 퇴각했다. 1948년 12월 5일과 6일, ‘당 노선’을 담은 좌익 빨라와 선전물이 상주, 안동 등지에 뿌려졌다. 12월 8일에는 청도군에 무장한 인원이 나타나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인공기를 게양한 후 공산주의 선전을 하기도 했다.²⁹⁾ 경북 지역의 유격대 활동은 경찰 대응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³⁰⁾ 강원 지역에서는 1948년 5월 강릉 사천지서 습격을 시작으로 주로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유격활동이 전개되었다.

전남, 경북, 강원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무장유격활동이 확대되면서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남로당 야산대 조직과 지역 좌익세력이 이에 결합하여 지리산, 호남 동남 지역, 태백산, 영남 지역에는 유격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지리산 유격지구는 전남, 경남, 전북 3도에 걸쳐 있는 만큼 산청, 함양, 거창, 하동, 무주, 남원, 순창, 구례, 곡성, 영광, 함평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빨치산과 유격지구가 형성됨으로써 자생적인 무장유격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에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들이 남로당 서울지도부, 재북 남로당 지도부와 연계된 흔적은 거의 없다.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 함양군당 간부 하종구가 서울로 들어가 남로당 서울지도부의 도움으로 의약품 두 트렁크를 가져온 것 이외에 다른 연락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남로당 서울지도부와 구성원들도 지속되는 체포, 검거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³¹⁾ 그러나 1948년 겨울 지리산 인근의 빨치산들은 순천, 벌교, 남원에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들은 마을에서 식량을 가져가거나 지서를 습격한 후 지리산으로 퇴각하곤 했다.³²⁾

보성 벌교의 경우, 1948년 12월 10일 현재, 대략 320명 가량의 반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원에서는 지역 내 한 마을에 반군 100여 명이 나타나 식량을 갖고 지리산 쪽으로 이동했다.³³⁾ 12월 16일에는 순천군 외서면, 낙안면 지서가 빨치산들에게 습격을 당했고, 12월 18일에는 국군모를 착용하고 지리산 근처에서 내려온 30명이 마천 지서를 기관총으로 습격했다.³⁴⁾ 지리산 일대 빨치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산 및 그 주변 하동, 함양, 구례, 남원 경찰지서가 폐쇄되었다.³⁵⁾ 전라도에서 주한미

28) 김남식, 1990,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한국전쟁연구』, 137쪽.

29)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13, 1948.12.14~12.15

30)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13, 1948.12.14~12.15

31) 하종구 구술, 2003. 5, 서울.

32)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14, 1948.12.15~12.16

33)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14, 1948.12.15~12.16

34)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14, 1948.12.15~12.16

군사고문단으로 있었던 그리피스는 유격대 진압이 어려웠고, 토벌의 성과는 유격대 활동을 일정 지역으로 한정시키는 것뿐이었다고 하였다.³⁶⁾

정부와 군은 반군추격 및 빨치산 토벌에 대해 강력한 진압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14연대 반군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빨치산들은 겨울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을 전개했다. G-2보고서는 1948년 12월 하순부터 1월 하순까지 ‘게릴라’들의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김지회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948. 12. 26. 김지회 부대로 생각되는 무장부대가 마을 두 곳을 공격, 경찰 5명 사망.³⁷⁾

1949. 1. 2. 경남 함양에서 폭도들과 교전.³⁸⁾

1949. 1. 5. 모후산에서 김지회가 이끈다는 부대가 군과 5시간 교전.³⁹⁾

1949. 1. 12. 경남 산청에서 빨치산 20명과 군 교전.⁴⁰⁾

1949. 1. 22. 전북 산매에서 김지회가 이끈다는 무장인원 130명과 군경 교전.⁴¹⁾

군은 지리산 방면에서 개별 부대 단위로 진압을 지속했다.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은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순천, 화순, 보성, 나주, 장흥, 곡성 방면에서 전투를 벌인 제20연대, 제15연대의 전과가 유기사체 72구, 포로 8명이라고 발표했다.⁴²⁾ 이듬해 1월 초에도 장성 북상면에서 제20연대가 유격대 80여 명과 전투를 벌여 시체 17구, 포로 7명의 전과를 거두었다고 보도되었다.⁴³⁾ 경찰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순천, 고흥, 나주, 광양, 장성, 담양, 광산, 보성 방면의 소규모 전투성과를 올렸다.⁴⁴⁾ 그러나 1948년에서 194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는 군의 대규모 토벌공세가 진행되지 않았다.⁴⁵⁾

여순사건 후 산악지역의 반군 세력이 유격대로 전환되고 군경과 전투를 벌이는 사이에 이른바 ‘반란지구’와 그 외의 전남 일대에서는 좌익 혐의자 검거 선봉이 불었다. 제8관구경찰청(전남)이 체포했다고 발표한 수치는 3천여 명을 넘어섰다.⁴⁶⁾ 이 중 10월 27일에서 11월 10일까지 광주에서 검거한 숫자만 3백 명에 이르렀다. 언론 발표만으로

3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년, 263쪽.

36) 메릴(신성환 역), 1982(1988), 『침략전쟁인가 해방전쟁인가』, 235쪽.

37)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28,

38)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33,

39)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33.

40)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46,

41)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48,

42) 『동광신문』 1948.12.28

43) 『서울신문』 1949.1.9

44) 『동광신문』 1948.12.3; 같은 신문 1948.12. 22

45) 백선엽은 1948년 겨울에 지리산 일대에 동계토벌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훈련 상태, 보급 능력 등에 대한 군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백선엽, 1992, 앞의 책, 239쪽.

46) 『자유신문』 1948.11.14. 이 기사에 따르면, 제8관구 경찰청은 ‘반란지역’에서 2천5백명, 이외 전남도 지역에서 865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모두 좌익 혐의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순사건 후 대규모 검거로 남로당 기층 조직이 파괴되고 전남도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역의 군당, 면당 구성원들은 검거를 피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입산을 선택했다.

1949년 3월로 접어들면 군의 대규모 ‘토벌’이 전개된다. 육군본부는 1949년 3월 1일자로 호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 준장)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정일권 준장)를 설치하였다.⁴⁷⁾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광주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남원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토벌의 주요한 방향은 지리산 지구에 있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는 제3연대, 제5연대, 제9연대, 제19연대와 독립유격대대가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진압에 나섰다. 1949년 3월, 토벌과 맞물린 유격대 활동은 지리산 주변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들은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에 자주 나타나 면사무소, 경찰지서 습격을 단행했다.⁴⁸⁾

군의 지리산 일대 진압작전은 3단계로 구분 실시되었는데, 3월 초 작전 부대가 구례, 남원, 화개장, 하동, 진주, 산청, 함양 등지에서 수색을 전개해 야산지대에 흩어져 있는 빨치산들을 지리산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화개장에서 제9연대 제3대대가 김지회 부대에게 기습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1949년 3월 11일부터 군은 2단계 작전으로 접어들어 지리산 일대를 집중 수색했으나 빨치산들은 함양, 안의, 거창 등지로 분산했다. 3월 16일부터 실시된 3단계 작전에서는 빨치산이 이동한 지역에서 소탕작전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⁴⁹⁾ 김지회 부대는 구례 지역 유격대의 도움으로 토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김지회, 홍순석은 3월 하순에 유격부대 500여 명을 이끌고 덕유산으로 이동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덕유산을 포위하려 하다가 첩보를 받고 안의에 출동하여 90여 명을 사살하고, 패관산에서도 빨치산들과 교전했다. 빨치산들은 지리산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군은 4월 9일에 김지회, 홍순석 부대의 일부를 포착하여 공격한 결과, 홍순석 등 17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했다. 김지회는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남원 산내면 반선리 부근에서 사망했다.⁵¹⁾ 김지회의 시신은 남원야전병원으로 이송되고,⁵²⁾ 조정순과 생포된 동료들이 김지회의 신원을 확인했다.⁵³⁾ 이와 함께 14연대 반란을 주도했던 지창수도 1948년 말에서 1949년 3월 이전 사이에 사망하거나 생포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81쪽.

48) 『연합신문』 1949.4.3

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6.25전쟁사1-전쟁의 배경과 원인』, 470~471쪽.

50) 이태, 1994, 『여순병란』 下, 103쪽.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앞의 책, 475쪽.

52) 『자유신문』 1949.5.1

53) 군 공간사와 당시 언론은 이때 홍순석이 함께 부대를 이끌다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노영기는 빨치산 출신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홍순석이 1948년 12월에 사망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노영기, 2005, 앞의 논문, 51쪽.

1949년 4월까지 반군 세력은 초기 지도부를 모두 잃었다.

1949년 4월 1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정일권 준장은 육군본부로 복귀하고, 남원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후임으로 와서 토벌을 진행하다가 5월 9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해체되었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원용덕 준장이 사단으로 승격된 제5여단의 사단장을 겸직하면서 유지되었다.⁵⁵⁾

3. 1949년 ‘조국전선’ 결성과 ‘9월 공세’

1949년 4월 김지회 사망 이후 흩어졌던 반군 출신 유격대는 남은 인원을 수습해 구례군당 유격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 이현상이 지리산유격대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즈음의 활동부터일 것이다. 한편 1948년 말에서 1949년 3월 사이에 이현상은 남로당 서울지도부로부터 전남 여수, 순천, 구례, 광양, 곡성 5개 군 당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한다.⁵⁶⁾ 1949년 6월에는 전남도당 조직 복구를 위해 최현(유격대 사령관), 전인수(도당 위원장), 김선우(도당 부위원장), 박찬봉 등이 중앙에서 투입되었다. 이들은 1949년 8월에 장흥 유치로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펼치게 되었다. 이현상은 유격투쟁에 집중하면서 구례, 곡성, 광양, 여수군 당부가 포함된 백운산 특수지구당을 지도하였다.

1949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남한 지역 빨치산 활동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형성 초기의 자생적 지역적 성격에서 상층지도부에 의해 선도되는 경향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재북 남로당 지도부와 북한 당국에 의한 지시와 유격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격대 지원사업은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파견된 무장 유격대에 한정된다. 지리산 유격대는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남로당 서울지도부에서 문화공작대가 지리산으로 파견되어 잠시 머물렀으나 유격투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⁵⁷⁾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가 이 시기에 상층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미사여구로 치장된 격려와 정치적 찬사 같은 것이 전부였다.

1949년에 들어서면서 남북로동당은 ‘국토완정’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켰다. 남북로동당의 기본 방침은 남한의 빨치산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 이승만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남북한의 ‘혁명세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통합되었다.⁵⁸⁾ 6월

54) 하종구 구술, 2003년 5월, 서울; 이태, 1994, 앞의 책, 104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93쪽.

56) 이태, 1994, 앞의 책; 정관호, 2007, 앞의 책 참조.

57) 유진오(시인), 홍순학(영화기사) 등 채관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1949.9.28 참조

에는 남로당과 북로당이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여 명목상 남한지역 빨치산 활동의 지도 권한은 남로당이 아닌 조선로동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로당 계열 인물들이 남한 유격투쟁을 전담하였다.⁵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는 미군 철수와 이승만 정권 타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강령은 통일반대세력 반대, 남한에서 토지개혁과 주요산업 국유화 실시를 골자로 하였다. 강령 실천을 위한 평화통일선언서는 1949년 9월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입법기관 선거를 남북한에서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⁶⁰⁾ 9월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에서 ‘9월 공세’라는 말이 나왔고, 이는 남한 빨치산 활동이 194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유격투쟁의 전형을 벗어나 격렬하게 전개되도록 한 주요한 배경이 된다.⁶¹⁾

1949년도 하반기 빨치산 활동의 특징은 대규모 공세를 지시받고, 이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리산, 태백산 지역의 유격대는 3개 병단으로 편성되고, 각 도당과 지방당 조직이 군사체제로 개편했다. 이전까지의 활동이 통상적인 경찰지서 기습, 교란의 범주에서 진행되었다면, 그 후에는 기존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성, 거창, 광양, 진주, 광주 등 지방행정 중심지와 경찰본서, 군대의 거점 공격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⁶²⁾

‘9월 공세’는 지리산 일원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전남 곡성군당의 경우, 9월 14일에 ‘모든 당세를 총동원하여 적의 거점을 공격,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시를 백운산 지구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활동 목표량이 할당된 구체적인 지시였다.⁶³⁾ 약 30여 명 정도의 곡성군당 구성원들이 오후에는 전단, 벽보쓰기를 하고, 밤에는 도로 파괴, 전단 살포, 전신주 절단 등을 했지만 열악한 조직 상황에서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웠다. 전신주 절단만은 상대적으로 감행하기 쉬웠으므로 정해진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지시된 활동을 전부 수행하는 것은 무리였다.⁶⁴⁾

전남 지역에서 경찰서와 군대 거점을 습격하여 성공한 경우가 있다. 9월 16일 새벽, 전남도당 내 백운산 특수지구당 유격대(유격대장 朴宗河)가 보성, 순천, 고흥지구 유격

58)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1950년), 209쪽.

59)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I, 412쪽.

60) 국사편찬위원회, 1988, 『북한관계사료집』 6, 220~221쪽.

61) 이에 관해 ‘조국전선’의 의장단이었던 허헌은 「국내외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대한 보고」(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6, 247쪽.)에서 평화통일방안과 관련, “만약 매국노 이승만도당이 이것을 방해할 때에는 인민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길에서 소탕해 버릴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조국전선’ 결성을 둘러싼 정치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이신철, 2005, 『북의 통일정책과 월·남북인의 통일운동(1948~1961년)』,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II장 3절 참조.

62)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 1950년, 265쪽.

63) 정지아, 1991, 앞의 책, 164~165쪽.

64) 이보다 시기는 이르지만 1949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나주, 순천, 함평, 장흥, 벌교, 조성, 밀양, 포항, 경주 등에서 경찰용 전신주 150여 개가 절단되었다는 점도 참조할 수 있다.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51-197 참조.

대와 연합하여 광양에 주둔하고 있던 15연대 1대대 본부와 광양경찰서를 기습했다. G-2보고서는 약 150여 명의 유격대가 15연대 1대대 본부와 경찰서를 새벽 2시부터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천-광양 간 전화선은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불통이었다. 순천에서 교대를 위해 파견된 분견대도 광양으로 향하다가 유격부대의 매복에 걸려 사상자를 냈다. 기습공격과 매복으로 국군 20명과 경찰 7명이 사망하였지만 유격대 측의 사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습격 성공 후 유격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다.⁶⁵⁾

빨치산 측 기록은, 박종하와 정재숙의 지휘로 인원을 나누어 각각 15연대와 광양경찰서를 습격하고, M1을 비롯한 각종 소총 1천여 정, 기관총 30정, 박격포 6문 등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⁶⁶⁾ 군 공간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리산지구 공비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 일대 경찰지서 및 부락 습격을 비롯하여 광양군 · 보성군 등지를 기습하여 무기 및 탄약과 식량을 약탈하면서...” 정도로 서술할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⁶⁷⁾

9월 16일 이후, 이현상은 박종하의 백운산 특수지구당 유격대를 지리산으로 소환해 제2병단의 한 연대를 구성하게 했다. 제2병단은 유격대로 전화한 14연대 반군 잔여세력과 지역 유격대원들이 결합된 부대였다. 이들은 각각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덕유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시기 제2병단의 규모는 250명에서 650명 사이로 추정되는 데⁶⁸⁾, 김지회 사살 이후 수습된 병력이 130여 명 내외였다는 견해를 감안할 때, 250여 명 정도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제2병단에 결합된 박종하의 유격대는 소규모 부대였기 때문이다.⁶⁹⁾

‘공세’ 기간인 1949년 7월 17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남한 지역에서 빨치산들이 절단한 전신주는 664개 이상이었다. 다리 파괴 철도 부분 파손, 변전소와 발전소 공격, 전력사무소 공격, 면사무소 공격, 전화선 절단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⁷⁰⁾ 부락에 인공기가 게양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⁷¹⁾ 이 외에도 경찰지서 습격, 금융조합 공격, 열차 습격, 재판소 공격이 감행되었다.⁷²⁾ 이는 ‘조국전선’ 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남로당의 ‘9월봉기설’에 의해 진행된 일이다.⁷³⁾

65)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83, 1949.9.19

66) 정지아, 1991, 앞의 책, 166쪽; 이태, 1994, 앞의 책, 124쪽; 정관호, 2007, 앞의 책, 29쪽.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00쪽.

68) 전자의 추정은 이태의 추정(1994, 앞의 책, 127쪽), 후자는 군의 추정임(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02쪽.)

69) 1949년 4월경 박종하부대는 45명 내외로 추정된다(정지아, 1991, 앞의 책, 143쪽.)

70)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51~197.

71)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68, 1949.8.19~8.22;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72, 1949.8.26~8.29.

72)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72, 1949.8.26~8.29.

73) 남로당은 인민군이 9월에 남한에 내려올 것이므로 각 군당이 쌀 200석, 돈 20만원을 준비하고, 인민군에 5명씩 인원을 내보내야 하며, 인민군 남하시 빨치산들이 인민군들의 안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펴뜨렸다고 한다.(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72, 1949.8.26~8.29.)

북한은 ‘조국전선’ 결성을 ‘남조선 애국인민들의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전개된 빨치산 활동에 대해 ‘산간에서 대도읍에 대한 대량적 공격’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1949년 8월 한 달에만 빨치산들이 44,262명 동원되었고(전남 16,760명, 경북 12,300명), 759회 교전했으며, 철도를 66개소 파괴하고 전주 1,590주를 파괴했다고 하였다. 9월에는 77,000명 이상의 유격대가 군경들과 1,776회 교전하여 1,272명을 ‘소탕’하고 832명을 포로로 했다고 주장하였다.⁷⁴⁾ 빨치산 활동이 격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나머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였다.

북한의 주장대로 빨치산 활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9월 공세’ 기간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격 목표를 정면에서 습격하는 공세적 전투는 유격활동의 통상적 수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일시적인 전술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유격대의 급속한 역량 소모를 초래하고, 군경의 대규모 토벌작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 북한의 무장유격대 남파 (1948.11. ~ 1950.3.)⁷⁵⁾

구분	침투일시	인원	경로·목적지	경과
1차	1948.11.14	약 180명	오대산 방면	대부분 진압, 생존자 충북방면 도주
2차	1949.6.1	약 400명	오대산 방면	대부분 진압, 일부 동해안 일대 활동
3차	1949.7.6	약 200명	오대산 방면	대부분 사살, 생존자 중봉산 방면 도주
4차	1949.8.4	김달삼부대	일월산	보현산에서 동해여단 결성, 지방당 조직과 합류, 무기 반입
5차	1949.8.12	15명(철원에 근거를 둔 유격대 선발대)	양주군 용문산	도주(월북)
6차	1949.8.15	약 49명(위 유격대 주력 일부)	양주군 용문산	20명 사살, 나머지 도주(월북)
7차	1949.8월 중순	인민유격대 제1군단 약 360명(지휘 이호제)	태백산맥	대부분 분산, 약 100명은 김달삼 부대와 합류, 경북 일대에서 활동
8차	1949.9.28	약 50명	양양	분산 도주
9차	1949.11.6	약 100명	영일군 지경리	해상 침투하여 보현산에서 김달삼 부대에 합류
10차	1950.3.28	김상호 부대 · 김무현 부대 약 700명	오대산	군에 의해 진압

74)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1950년), 264쪽.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99~50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495쪽에서 재구성; 한편 군 공간자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남파되었으리라고 보는 연구가 있다. 메릴은 미군 기록을 인용하여 윤전길 부대(280명), ‘도시진공작전부대’(480명)의 존재를 추가로 언급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무장유격대가 남파되었다고 추정한다.(메릴/신성환, 1982/1988, 앞의 책, 311쪽.)

이 시기를 전후하여 빨치산 활동은 여순사건 이후의 형성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자생적·지역적 형태에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비된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남한에 있는 유격대가 대규모 공세를 벌이는 동안 북한에서는 훈련받은 무장유격부대를 남하시켜 전체 유격전 양상은 한층 치열해졌다.

북한 당국과 남로당 지도부가 남쪽 출신자를 유격대원으로 양성해서 내려보낸 것은 여순사건 후 1948년 11월부터였다. 이 시도는 국군에 의해 격퇴되었지만, 약 7개월 후인 1949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유격대 남파는 계속되었다. 군 공간사는 1948년 11월 14일 이래 모두 10회에 걸쳐 무장유격대가 남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인 5차례의 유격대 파견은 ‘9월 공세’ 기간과 맞물리는 194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유격대원들은 유격대 양성소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남한으로 침투되었다.

초기의 강동정치학원은 남한 출신 인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때에는 이론학습, 군사훈련을 단기 강습한 유격대원들을 양성하여 내려 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월북 당시의 개인적 희망과 달리 유격대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⁷⁶⁾

무장유격대는 오대산 부근 38도선 상에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남하하거나 해상으로 침투하였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국군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흩어진 인원을 제외한 이들이 지방당에 합류해 ‘인민유격대’ 3개 병단을 편성했다. ‘인민유격대’ 제1병단은 이호제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구성되어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했으며, 제3병단은 김달삼과 남도부가 중심이 되어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했다.⁷⁷⁾ 이현상을 사령관으로 한 지리산 지구 ‘인민유격대’는 4개 연대로 조직된 제2병단으로 편성되었다.⁷⁸⁾

무장유격대 남파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침투에 성공하여 유격전을 전개한 것은 4차로 내려온 김달삼, 남도부가 지휘하는 부대의 일부였다. 이들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의 공격으로 주력을 잃고, 194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인원을 수습해 보현산으로 이동했다. 김달삼 부대는 보현산에서 지역 유격대와 결합해 약 360여 명의 규모를 지닌 동해여단을 편성하였다. 이후 49년 8월에 내려온 이호제 부대의 생존 병력이 동해여단에 합쳐져 이들은 500여 명 규모의 제1군단으로 재편되었다.⁷⁹⁾ 그러나 지속적인 토벌작전

76)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1004; 이영식, 1988, 『빨치산』, 73쪽; 정원석, 2006, 『북위38도선』.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500쪽.

78) HQ, USMAGIK, G-2 Peoridic Report #259, 1950.2.6~2.7

으로 손실이 컸고, 잔류 대원들은 38선을 넘어 퇴각하려 하였다. 북한이 1950년 3월 파견한 김무현·김상호 부대는 이들의 탈출을 엄호하기 위해 중무장한 유격부대였다.⁸⁰⁾ 김달삼은 월북에 성공했지만 유격대원들은 오대산 지역에서 벌어진 추격전에서 대부분 사살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파된 인원 중 대략 2,000여 명이 사망했다.

남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토대로 한 유격부대도, 북한 지역에서 파견한 유격부대도 ‘9월 공세’를 거치며 큰 인명 손실을 입고 약화되었다. 남파된 무장유격대와 달리, 지역에 기반하고 있었던 남한 지역 빨치산들은 탈출을 시도할 공간도 갖지 못했다. 당 조직거의가 입산한 상황에서 빨치산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락에 내려가 식량과 물자를 강제로 빼앗아야만 했다.

‘9월 공세’는 빨치산들만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부도 ‘9월 공세’에 대비했다. 빨치산들이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철도·전신·전화와 같은 ‘소규모 파괴에서 방화·살상으로 옮겨’ 갔다는 점이 인지되었다. 철도경찰은 철도경찰, 8·9월 공세로 철도파괴를 계획한 남로당원 등을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직전까지 96명을 검거했다.⁸¹⁾ 정부는 1949년 8월 18일,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장관이 모여 열차에 무장경관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24일에는 도지사회의를 열어 치안 강화를 지시했다.⁸²⁾ 언론을 통해 ‘7월 공세’, ‘8월 공세’라는 말이 널리 알려질 정도였으므로 정부의 대책이 강화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산악지역 유격대가 토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도시의 남로당원들과 관련단체 구성원들은 경찰의 주요한 검거 대상이었다. 대규모 검거, ‘일망타진’ 소식이 신문에 줄을 이었다. 보도연맹 결성과 같은 전향 캠페인의 대대적인 전개로 좌익 세력과 그 지지층은 대거 이탈하였다. 유숙계 실시 등 여순사건 이후 사회적 감시망은 더욱 조여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9월 공세’는 남아있는 역량을 드러내고 낱알이 파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 지역 빨치산들에게 ‘9월 공세’의 후폭풍은 곧 재앙으로 닥쳤다. 군의 강력한 동계 토벌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4. 군의 진압과 빨치산 활동의 무력화

1949년 하반기 유격활동의 격화는 이승만 정부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릴라’와 인플레이션은 국무총리의 양대 근심거리였다.⁸³⁾ 정부는 9월 22일 내무부에서 군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45쪽.

80) 메틸(신성환 역), 1988, 앞의 책, 343쪽.

81) 『경향신문』 1949.8.17

82) 『국도신문』 1949.12.18

경 수뇌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내무부장관(김효석), 국방부장관(신성모), 내무부차관(장경근), 참모총장(채병덕), 참모부장(정일권), 치안국장(이호)이 참석하여 대규모 토벌작전을 결정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1949년 5월 9일자로 해체된 후 호남지역의 빨치산 진압·토벌은 제5사단 예하 제15연대(순천)와 제20연대(광주),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고 있었다. 함양, 산청 지역은 제23연대 제1대대와 해병 진주부대가 맡고 있었다. 군경 수뇌회의에서 토벌이 결의된 후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지휘권은 9월 28일자로 김백일 대령이 인수했다. 사령부는 남원에 마련되었고,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사령관 최치환 중령)도 역시 남원에 설치되어 군경이 합동으로 토벌작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⁸⁴⁾

동계토벌은 10월 30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28에 종료된 4개월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군 공간사는 지리산지구 토벌이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1949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유격대 활동 근거지에서 첩보 수집, 주민 파악을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1950년 12월 16일에서 1950년 2월 말까지는 전투지역의 복구사업을 진행했다.

공세가 집중되었던 지리산지구의 제2병단은 군경의 토벌을 피해 병력을 분산했다. 박종하가 이끄는 3연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고, 이영희의 5연대는 쌍치 가마골로 갔다.⁸⁵⁾ 토벌기간 동안 제2병단의 활동으로 눈에 띄는 것은 11월 5일의 무주경찰서 습격이다. 이날 새벽 무주 읍내에 들어왔던 빨치산들이 경찰서를 공격했지만 점령은 하지 못했다. 빨치산들은 11명의 사망자를 낸 후 보급품을 갖고 덕유산 쪽으로 이동했다. 차일혁의 진중기록》과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볼 때, 이들은 지리산에서 분산된 제2병단의 일부일 것이다.⁸⁶⁾ 제2병단의 주력은 지리산에서 빠져나와 소백산맥 인근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구 토벌은 전남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제5사단이 담당했다. 사단장은 1949년 8월 2일 부임한 백선엽 대령이었다.⁸⁷⁾ 제5사단 전투사령부는 10월 16일 화순국민학교에 설치되었다. 제5사단 전투사령부는 장성, 장흥, 보성, 화순과 지역 현지부대로 3개 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빨치산 부대와 전남지역 남로당 조직 운용에 대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토벌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1월 9일에는 장흥군 유치면의 전남유격대총사령부 아지트를 습격하여 16명을 사살하고 9명을 생포했는데, 그 중에는 40대와 10

83) *Memorandum by the Ambassdor at Large, Philip C. Jessup*(1950.1.14), FRUS, 1950, Volume.VII, p.4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03쪽.

85) 이태, 1994, 앞의 책, 127쪽.

86) 『동광신문』 1949.11.11; 백선엽, 1992, 앞의 책, 298~299쪽.

87) 『동광신문』 1949.8.2

대 후반의 여자 두 명이 섞여 있었다. 전남유격대 총사령관 최현도 여기에서 사살되었고, 그의 시신은 광주 역전에 내걸렸다.⁸⁸⁾

혹한이 다가올수록 동계토벌 전개를 둘러싼 정부와 군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해졌다. 1949년 11월 25일에서 26일까지 대전에서는 남한 전역에 걸친 토벌 방안을 결정하는 회의가 국방·법무·내무·사회 4부 합동으로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지리산·태백산·영남·호남·영남 안동지구의 전투사령관이 모두 집결하였다. 참석자들은 토벌방안, 사회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토벌총사령부를 대전에 두기로 했는데, 그 목적은 남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토벌전을 전개하려는 것이었다.⁸⁹⁾ 군의 동계토벌 전과는 국방부 정훈국 발표를 통해 보도되었다.

12월 21일 국방부는 지리산지구에서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 주필 김기선, 제2병단 제7연대장 임만평, 여맹 책임자 김말선을 생포하고, 지구사령관 ‘羅 동무’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⁹⁰⁾ 이어 군은 12월 말, 동기 내한연습 겸 토벌에 나섰다. 육군 참모부장 정일권이 시찰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군은 지리산 인근을 포위하고 압축해 들어가며 토벌하는 방식을 구사했다. 김백일 대령이 영하 43도를 오르내리는 지리산 고지대에서 실시된 내한연습의 총감독을 맡았다. 창군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 연습에서 군은 12월 31일까지 74명의 빨치산을 사살하고, 35명을 생포했다.⁹¹⁾ 빨치산들은 군의 동계 내한훈련을 위한 “산(生) 연습자료”처럼 언급되었다.⁹²⁾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 총지휘관 최치환 총경은 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1949년 10월 1일부터 1950년 2월 5일까지의 경찰 단독 전과를 발표했다. 사살 283명, 포로 146명, 귀순자(자수자) 4,679명이라는 결과였다. 경찰은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⁹³⁾

1949년 동계토벌은 빨치산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오대산, 태백산 지구에서도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초에 군의 진압으로 입은 손실을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에 들어서서 남한 지역의 유격대 3개 병단은 사실상 무력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생존을 위한 보급에 매달려야만 했다. 보급을 위한 소규모 전투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인원은 계속 줄어들었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연인원 12,336명의 빨치산들이 556회 출현하였다. 군은 그 중 365명을 사살하고 187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투항한 빨치산은 4,694명으로 기록되었다.⁹⁴⁾ 군은 1949년

88) 『호남신문』 1949.11.13; 정관호, 2007, 앞의 책, 29쪽; 정지아, 1991, 앞의 책, 173쪽.

89) 『경향신문』 1949.11.28

90) 『국도신문』 1949.12.22

91) 『서울신문』 1950.1.4

92) 『조선일보』 1950.1.4

93) 『자유민보』 1950.2.12

4월 말 현재 오대산,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지구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의 총 인원을 700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그해 12월 15일에는 760명으로 약간 늘어났다. 1950년 6월 24일에는 460명으로 줄어들었다.⁹⁵⁾ 동계토벌에서 살아남은 지리산지구의 빨치산은 100에서 150명 정도, 호남지구 빨치산은 90여 명쯤이 남은 것으로 추산되었다.⁹⁶⁾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1950년 1월 25일에 해체되고, 호남 지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은 1950년 2월 25일자로 해제되었다.⁹⁷⁾

1949년 동계 토벌에서는 산간 지역 주민과 빨치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고립시키는 작전이 구사되었다. 이른바 ‘비민분리’였다.⁹⁸⁾ 10월 25일 현재, 전남도 내에서 토벌작전으로 소개된 농민의 수는 18만 2,852명(3만 3,646호)이나 되었다.⁹⁹⁾ 여순사건 후 전남도의 인명피해는 1만 1,131명, 주택 파괴 소실이 1만 1,871호에 달했다. 전남의 이재민의 총 수는 31만 8,734명(5만 8,734호)였다. 정부의 소개 중지결정에 따라 희망자에게 복귀를 허락했을 때 복귀 가능 인원은 6만 5,289명(1만 2,151호)에 불과했다.

소개가 문제시된 것은 전남에서만 일만은 아니었다. 10월 초, 경북 봉화지역 9개면 소개 대책이 국회에서 토의되었다.¹⁰⁰⁾ 국회와 행정부 책임장관의 토의 결과 소란지구의 주택소개대책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어 11명으로 구성된 소개대책위원회가 민가 소개의 방침과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¹⁰¹⁾ 국회가 20호 이상 집단부락이나 자동차 도로 2km 이내 부락의 소개 시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별반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소개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0년 2월 20일 현재, 사회부는 4.3 및 여순사건 이래 각종 사변으로 발생한 이재민이 1950년 2월 20일 현재 14만 9,899호 총 78만 9,913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¹⁰²⁾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산간지역의 주민들은 소개 뿐 아니라 큰 인명피해, 여타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기존에 조사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빨치산 활동 구역 근방의 주민들은 통비부락, 통비분자로 몰려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2월 10일, 제130부대장 김백일 대령은 “공비를 감추어두고 식사 기타를 제공해서 보낸 다음 비로소 지서에 연락하는 등의 이적행위를 감행하는 자는 부락 전체에 책임을 지우고 엄중히 처단”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군의 이와 같은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김지회를 사살한 후 실시한 작전관계관 좌담회에서도 지리산 인근 주민들은 ‘무지한 백성’,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05쪽.

95)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附圖 2~4호.

96) 이태, 1994, 앞의 책, 127쪽; 백선엽, 1992, 앞의 책, 295쪽.

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06쪽.

98) 윤휘탁, 1994, 『일제하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 연구』 참조.

99) 『호남신문』 1949.11.11

100) 제5회 국회속기록 제16호.

101) 『서울신문』 1949.10.12

102) 『연합신문』 1950.3.8

‘적화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순사건 진압을 비롯해 그 이후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소개, 학살 문제는 별도의,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요하는 사안이다.

한편 남한 지역 빨치산들이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과 남로당 지도부는 유격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장된 선전을 지속했다. 이승엽은 “1950년 봄을 맞아 적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섬멸하는 대담한 작전으로 용감하게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빨치산들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한 선전 선동에 불과했다.¹⁰³⁾

맺음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대중운동의 형태를 유격투쟁이라는 격렬한 활동으로 변모시켰다. 여순사건은 정부에도,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에도 큰 충격이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진압·토벌하는 입장을 취했고, 빨치산들이 갖고 있었던 형성 초기의 자생성과 지역민과 협조관계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상실되었고, 활동 또한 무력화되어갔다. 빨치산 활동과 그 토벌과정은 한국전쟁 이전의 ‘작은 전쟁’과 같았다.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 연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자료, 당사자 기록의 발굴이라 생각된다. 토벌주체와 토벌 방식에 대한 연구, 민간인 학살과 피해에 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빨치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와 같은 향후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료 발굴과 꾸준한 천착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103) 이승엽, 「원썹들의 동기토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1950년 6호.

제6장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학살의 진상규명

여순사건63주기,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1 전국학술대회
2011. 10. 21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허상수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이상윤
제주4·3사건 진실규명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 김은희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허 상 수(성공회대 교수)

국가는 집중되고 조직된 형태의 폭력을 대변한다 - 마하트마 간디 -

1. 왜 여순사건인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군대야말로 국가의 가장 사악한 면을 잘 보여준다고 봤다. “모든 정부와 통치 계급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필요로 한다”(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든가 “세금을 성공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상비군을 유지한다”(애국심과 정부)라고 썼다. 한 마디로 톨스토이는 ‘국가는 폭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들 국가가 다음 네 가지 폭력의 사슬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테러리즘, 강탈, 세뇌, 강력한 정신적 마비와 야수화과정.¹⁾

1948년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인권체제(regime)가 정립된 매우 의미심장한 한 해였다.

첫째, 오늘날 세계인권규범의 모체를 구성하는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 발표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 주장과 확보가 천부적 인권에 기초한 인류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천명하였다.

둘째, 그 다음 중요한 진전은 새로운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여순사건 와중인 1948년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UN)총회는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개 조항)을 세계 9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²⁾ 이때 집단살해 금지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의 체결국(締約國)은 평화시기와 전쟁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 14일, 이 조약에 가입하여 1951년 12월 12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집단살해는

1) 레프 톨스토이 지음. 조윤정 옮김. 2008. 국가는 폭력이다-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 달팽이출판.

2) 폴란드 법률학자 라파엘 렘킨은 1944년, 국제법에서 집단학살을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규정에서 수립한 국제법 원칙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집단살해 금지협약 제5조는, 조약국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집단학살의 처벌대상으로 집단살해의 정범, 공모자, 교사범, 미수범과 공범을 규

“집단성원들에 대한 집단 학살과 같은 물리적 파괴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회적 연결망, 제도,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절멸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⁴⁾ 집단학살은 단지 많은 사람만의 몰살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연장선상에서 1949년 체결된 제4차 제네바협정은 전시의 민간인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전쟁시에도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인권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시행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내용상 당시 신생국가 가운데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규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⁵⁾

이와 같은 국내외 세 가지 인권 체제의 정비라는 정세의 진전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읍 신월리에서 일어난 육군 제14연대의 군사반란에 이은 전라도와 경상도 민 피학살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진상 조사보고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시점(視點)을 제공해 준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의 채택은 사건의 실제 파악에 대한 공식적 인정(acknowledgement)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피해 회복, 또는 이를 위한 재심 청구의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⁶⁾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 특히 1948년 제헌헌법은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들여다보는 돋보기 또는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상당히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국적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큰 설득력을 쥐게 된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로 국가 공권력의 불미스런 사안에 대한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진실보한 인권국가로 탄생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글에서 다룰 분석 방향과 평가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사계획서에 기준한 전수조사와 통사적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조사 시간에 쫓긴 상태에서 처리 건수만 채우려고 했던 일종의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사건을 지역별, 유형별로 분리하

정)에 열거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협약 가입 6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5조에서 약속한 국내입법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상태이다.

4) 강성현 2008.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8호. 96쪽.

5) 허상수 2009 진실과 기억 혹은 미래 : 학살사건진상규명운동의 비교연구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6) 프리실라 B. 헤이너 지음 주혜경 옮김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그치고 말았는가? 만약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볼 때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보려는 것이다.

진상조사는 크게 피해 진상과 가해 진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피해 진상은 주로 피학살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유가족들에 의해 제기된다. 가해 진상은 피해 진상과 함께 사건 전모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기간의 경과, 자료의 부실, 시차의 혼선, 당사자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잘 조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해 진상은 조각난 사실들의 조합과 분석, 재해석을 통해 범행의 특별한 의도(specific intent), 범행 동기와 배경, 범행 이후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 분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수·순천사건 신청서 접수현황은 신청인 수로는 강태용(사건번호 : 17) 외 777 명, 신청사건 수로는 김화자(사건 번호 : 354)외 832 건에 이르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과정을 보면 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사건 중 여순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총 832건이었다.

제14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6. 7. 25.)는 구례 봉성산 여순사건 9건을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 제17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6. 9. 29.)는 구례 봉성산 여순사건 3건을 병합·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다시 1개월 후 제20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6. 10. 31.)는 여순사건 288건을 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다음달인 '06년 11월 10일, '구례 봉성산 여순사건'을 여순사건으로 병합·사건명칭 변경을 결정하였다(조사1팀-1373).

2개월 후 제26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7. 1. 30.)는 414건을 병합·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7. 2. 13.)는 63건을 병합·조사개시 결정하고, 제30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07. 2. 28.)는 7건을 병합·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여순사건 관련 신청 사건들은 여러 개로 분산 조사하기로 결정되고 말았다. 그 결과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조사보고서
- 나.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조사보고서
- 다. 전남 동부지역(구례·광양·여수·보성·고흥·곡성·순천) 민간인 희생사건(1)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경찰, 경찰토벌대)

- 라. 전남 동부지역(순천·승주·광양·여천·고흥·곡성·담양) 민간인 희생사건(2)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경찰, 경찰토벌대)
- 마.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보고서
- 바. 전남국민보도연맹사건(1) 조사보고서
- 사.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가해자: 보성·고흥 경찰서, 제8관구 경찰청 경찰, 국군 4(이후 20)연대, 15연대)
- 아. 구례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3연대(1, 2 대대), 12연대(1, 2, 3 대대), 구례경찰서 경찰)
- 자. 순천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2연대(1, 2대대), 제3연대(1, 2 대대), 제4(20)연대(1, 2 대대), 12연대(1, 2, 3 대대), 15연대(1, 2 대대), 순천경찰서 경찰)
- 차. 여수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3연대(1, 2 대대), 제4(20) 연대(1, 2, 3 대대), 5연대(1, 2 대대), 12연대(1, 2, 3 대대), 15연대(1, 2, 3 대대),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 경찰)
- 카. 화순·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보고서
(가해자: 국군 4(20)연대, 11사단 20연대, 8사단, 화순·나주경찰서, 경찰토벌대)
- 파.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보고서 등

1) 직권조사 결정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39차 전원위원회('07. 3. 6)는 기 조사개시 되었던 784건과 미조사개시 되었던 48건을 포함한 832건을 직권조사 형태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상기 위원회가 행한 직권조사 결정의 근거는

첫째, 여순사건이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둘째, 여순 사건은 계엄령 실시, 국가보안법 제정(1948. 12. 1) 등 한국사회의 분단체제 공고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이라고 적시하였다.

셋째,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제2전선지역에서의 민간인 집단희생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여순사건은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여순사건은 지역적으로, 사건 당시 전라 남·북도, 경남일부 지역까지 ‘반란 지구’로 분류되고 지역민들은 ‘반란 동조세력’으로 규정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은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작동하여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지역사회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여순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로의 전환을 의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은 기획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획조사는 당시 조사관들의 엄청난 헌신적 노력과 작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직권조사 결정 직후 위원회 산하 집단희생조사기획관실 조사1팀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여순사건 조사계획서는 105쪽에 이른다. 그 주요 골자는 기존 연구 및 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 쟁점으로서 크게 희생 이유와 규모, 처형·집행과정, 지휘·명령 계통, 법적·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조사계획으로서 관련 기관 자료조사, 일반 문헌 자료 조사, 참고인 조사, 신청인 조사, 현장 조사를 하고, 조사 일정 및 주요 참고자료 및 조사 대상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직권조사 결정이후 3년 9개월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속 7명의 조사관이 당시까지 이미 832건을 처리하는데 무려 7,369일이나 소요될 것이라고 산정하고 있는 나름대로 방대하고 의욕에 찬 조사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조사관들이 세운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진상조사보고서는 많은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 수립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를 안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순사건의 전체적 조망의 역사적 기회는 사라지거나 멀어지고 말았다.

2) 정부 진실규명 작업의 성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명목상 형식적으로는 유족들의 한과 눈물과 땀에 찌든 진상규명 신청 사건의 전부(100%)를 진실규명했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여수 126건(‘10. 6. 29일 결정), 순천 258건(‘09. 1. 5일 결정), 광양 64건(‘10. 5. 11일 결정), 구례 186건(‘08. 7. 8일 결정), 고흥 43건(‘09. 11. 10일 결정), 보성 49건(‘09. 11. 10일 결정), 기타 지역 141건(‘10. 5. 18일 결정-최종), 적대세력사건 235건(‘10. 4. 27일 결정)으로 총 1,102건의 여순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 피해 인원과 추정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

(단위 : 명, %)

	추 정(명)	신 청(명/%)		확 인(명/%)		비 고
여 수	1,300	111	8.5	126	9.7	
순 천	2,060	205	9.9	258	12.5	
광 양	563	43	7.6	64	11.4	
구 례	1,318	154	11.7	186	14.1	
고 흥	150	41	27.3	43	28.7	
보 성	200	44	22.0	49	24.5	
기타지역		91		141		
적대세력사건		174		235		
계	1) 5,591	863	15.4	1,102	19.7	설명 추정1)
	2) 11,131	(대표신청포함)	7.8		9.9	설명 추정2)

- ※ 1. 추정 1) 5,591명은 1948년 11월 1일 현재, 전라남도 보건후생국 통계자료와 2008년, 2009년
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구용역 피해자현황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참조한
최소 기준임.
2. 추정 2) 11,131명은 여순사건 발발 1년 후 전남도가 1949. 11. 11일에 조사한 인명피해 자
료임.
3. 기타 지역 : 화순, 나주, 곡성, 담양, 목포, 신안, 영암, 장성, 장흥 지역 등
4. 적대세력사건 : 여순사건 당시 인민군과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피해 사건으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담양 지역 등
5. 위의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은 여순사건 관련 해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재소
자, 부역혐의사건 피해자 360여명은 누락된 자료임

3)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정부 위원회의 이 조사결과를 보면, 사건 발생 당시 집계되었던 1만명 정도가 되었던
사망 피해 규모, 2008년과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구용역 피해
자 현황조사에서 추정하였던 피해 규모의 1/5 또는 1/10 정도에 그치는 사망 피해 사
실만이 규명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수조사의 미진으로 사건 희생자를 전체 규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순사건 진상조사는 신청사건의 100%를 완료했지
만, 피해 추정인원 대비 신청 인원은 7.8%~15.4%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조사 확인된 피해 인원은 9.9%~19.7%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전체 피해 추정 인원의 1/5~1/10 이하 수준이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행한 조사결과가 실질적인 사건의 진실규명과는 요원한 “진실규명 아닌 진실규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로 전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소수의 신청인 중심의 개별지역 사건 수준의 조사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수 만성리(17명)와 형무소 재소자 중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판결 피해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②항에 의거하여 의당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인권침해사건으로 이관 분류하여 조사를 계속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했다. 이런 처리 결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런 저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치유될 수 없는 엄연한 직무유기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직무유기란 업무 태만, 업무지연행위, 직무이탈행위,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적 행위 등 의무불이행을 뜻한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① 여순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원위원회(2007. 3. 6)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② 직권조사를 제대로 활용하여 미군을 포함하여 진압군에 의한 민간인집단희생사건과 함께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및 제14연대 반란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적대세력사건도 모두 포괄하여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족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많은 국민들의 역사적 상처를 건드려만 놓고, 전혀 치유책을 제공해 주지 않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역설적이며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③ 지난 60여 년간 계속된 지역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풀고 화해와 상생과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지역별·사건 유형별의 개별 조사보고서가 아닌 반드시 여순사건의 해당 전 지역과 사건의 유형을 포괄하는 총체적이며 자세한 기술(記述)로 재구성하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는 상태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임무 종료됨으로 인해 사회통합이나 인권보장,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지역별·사건 유형별 결정보고서라는 개별조사보고서는 실제에 있어서 여순사건 발생 지역과 피해 유족들을 지역과 사건 유형별로 분리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유족회 공동체의 유대와 화목한 관계가 파괴됨은 물론, 여순사건이라는 역사 공동체 또한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의 성과주의의 매몰되어 미처 예기치 못한 공동체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계속된 지역사회 내의 갈등과 반목과 대립을 풀고 화해와 상생과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사적인 구체적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 등을 구분하여 독립적인 사건으로 개별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어 여순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을 뿐 더러, 사건시기도 지역마다 달라져 역사적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조사업무의 편의와 기능상, 조사를 지역별과 사건 유형별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결정보고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것이라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추가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직권조사 대상에서 조차 제외됨으로써 진상조사의 파편화가 되고 말았다. 직권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사건 이외에도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해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등 360여건이 있으나, 직권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지역정치와 군사행동의 편재성에 대한 관심 부족

여수·순천에서만 군인반란이 발생하였는가? 아니다. 1948년 당시 한반도에서의 소요와 무장봉기는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미 전국적 차원에서 1948년 소위 2·7구국투쟁이 일어났었고, 뒤 이어 절해고도에서 제주4·3무장봉기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도 군대내 하극상 또는 조직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남 동부지방(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은 1946년 ‘추수폭동’ 기간 동안 외딴섬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남서부지방에서 전개된 경찰·지방관리·지주에 대한 습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⁷⁾ 왜 그랬을까? 황남준은 지역정치의 특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이 긴장·대립관계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었던 지방정치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⁸⁾

7) 194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의 미군정보고서, 국내신문의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보성을 경계선으로 전남 동부지방은 서부지방과는 달리 소요사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황남준은 평가하고 있다(황남준, 여순항쟁).

8) 황남준은 ‘추수폭동’이 동부지방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의 폭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구전(口傳), 봉화 등의 원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접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경우 경찰과 관리는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전에 방비할 태세를 갖추거나, 무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쪽(순천)으로는 조계산 줄기가, 동쪽(광양)으로는 백운산이 막고 있으며, 북쪽(구례·곡성)으로는 지리산으로 막혀 있어서 전남 서부지방, 전북 동남지방, 전북 동남지방, 경남 서남지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여수·순천을 중심으

이 지역정치의 특수성은 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 1945년 말부터 46년 전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지역의 점령정책을 실시했던 제69군정단의 활동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군정단과는 달리 비교적 많은 해군장교로 구성되어 있었던 제69군정단은 요원의 잦은 본국귀환으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⁹⁾

5) 미군의 행적 조사

진상조사보고서는 왜 미합중국 육군과 해군의 동태는 추적하지 않았는가? 보고서는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지적하고 있으나 민간인 희생과정엔 아무런 직접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보고서 6권 여수지역 여순사건 부분에서 제14연대 반란과 정부의 진압작전을 살피면서 미군의 직접적 개입 부문을 미합중국 임시군사고문단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인 희생 기술부분에서는 모두 빠지고 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10. 6권, 434-438쪽).

로 독자적인 경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수는 해방 전 중요한 미곡·수산물 수출항이었으며, 동시에 일본인들이 토지와 소비재산업에 투기한 교역·산업금융의 중심지였다. 여수·여천향토지 편찬위원회, 1982. 여수·여천향토지. 동광인쇄공사, 437-529쪽. 재인용.

9) G. Meade, 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 's Brown Press, Columbia University. 183쪽.

<표 6> 여·순 사건 확대지역표



여순사건 확대지역표

그렇다면 도대체 집단살해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명령권자와 상급자의 책임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르완다 제노사이드 범죄를 추궁하기 위한 국제연합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 의견을 경청해 보자.¹⁰⁾ 상급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언급한 행위(제노사이드범죄행위-인용자)가 전부 하위직에 의해 저질러졌다 해도, 하급자가 그런 행위를 하려 하거나 이미 저질렀음을 상급자가 알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상급자가 그 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급자의 범죄 책임은 덮어질 수 없다.”

그리고 직급상 상하관계의 존재는 상하관계가 공식·비공식적 위계관계를 보임으로써 성립된다. 문제는 상급자가 하급자가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위의 유무이다. 범법행위시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실효적 통제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하급자의 범죄에 대한 상급자의 인지 또는 인지할 만한 동기에 관한 것이다. 이때 주목할 만한 12가지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가. 불법행위의 횟수

나. 불법행위의 유형

10) 박선기 2009. 9. 르완다 제노사이드,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르완다와 아프리카의 교훈.
http://rwanda-embassy.or.kr/img/file001_kor.doc(2011. 9. 30 검색).

- 다. 불법행위의 범위
- 라.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데 소요된 시간
- 마. 동원된 부대의 수와 유형
- 바. (만약 있다면) 동원된 군수품
- 사. 그 행위가 일어난 지리적 위치
- 아. 그 행위가 만연된 정도
- 자. 작전의 전술적 속도
- 차. 비슷한 불법행위들의 수법
- 카. 연루된 장교와 참모들
- 파. 사건 발생 시점에 상급자의 소재지

이 사건당시 미합중국 육군과 해군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창설하고, 그들에 대하여 사실상 감독(direction)과 지휘(order)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현대전의 요체인 3C1I인 명령(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정보(intelligence) 뿐만 아니라 조정(coordination)과 병참(supply and quartermaster)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한국군경의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인사(personnel)권 행사와 보상(reward)을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어떻게 주권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었는가? 다음은 기존 연구로부터 발췌해 본 미군의 사건 개입 전모의 일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당시 ‘구세주’로 알려졌던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 휘하의 주한미군사령관은 점령군으로서의 임무교대이후 시점인 1948년 8월 24일, 한미군사잠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었다.¹¹⁾ 이 협정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의 지배권과 명령권을 가능한 한 빨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동의하에 한국정부로 넘겨주는 것을 진전시킬 목적”¹²⁾이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은 국방경비대 창설 이후 모든 군사력 또는 방위력을 미합중국,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고, 남한 단독정부 때까지도 방위력의 독자적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왜 이런 굴욕적 불평등 협정이 필요한 것이었을까? 이 행정협정은 한국의 방위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데에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1) 국방군사연구소, 1990, 『국방조약집 1집』, 238쪽.

12) Jacobs to Secretary of State(Aug 24, 1948), FRUS 1948, 1287-1288쪽.

이 협정의 골자는 한반도에서 점령군이었던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전문)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 경찰 파견대를 포함)을 계속하여 조직·훈련·무장하며(1조),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over-all operational control)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2조)”하는 것이었다.¹³⁾ 이 협정은 철군을 전제로 한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군사력 증강을 미군의 자의에 맡김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우위성과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¹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군의 작전통제권 보유 명시는 신생 한국정부의 국방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라고 안정애는 지적하고 있다.¹⁵⁾

미합중국 임시군사고문단에 소속된 고문관들은 당시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전술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도 한다. 미합중국 육군 중령 데루스(Clarence C. DeReus)의 경우 “공산주의가 조직한 시민폭동과 게릴라 활동이 전술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¹⁶⁾고 기록하였다. 일련의 사건들을 진압하는 일에 투입된 국방경비대는 미합중국 임시군사고문단의 통제아래 군사작전에서 지휘의 필요성과 부락전투의 이론을 포함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¹⁷⁾

나아가 사건발생 직후 한미합동 진압작전을 총괄했던 고문단장 로버츠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진압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순천과 여수를 조속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란세력으로부터 이곳을 해방시키는 것은 선전상 중대한 가치를 갖는 도덕적,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다.¹⁸⁾

이런 멘션(mentions)은 주한미사절단의 외교적 견해, 즉 “남한의 장래가 이승만과 그의 협력자들이 불만세력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통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¹⁹⁾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미국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13) 1948. 8. 26일, 2일전 체결된 군사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고문사절단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임시군사고문단(PMAGiK;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in Korea)를 두고, 사절단장에 무초 대통령 특사, 고문단장에 로버츠 준장이 임명되고 248명의 고문단원이 배치되었다.

14) 서울신문사(편), 1979, 『주한미군 30년사』, 103쪽.

15) 안영애 2009.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발제문.

16) DeReus가 Sawyer에게 보낸 서한(1953. 8. 28), R.K.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Offices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25쪽에서 재인용.

17) 안영애 2009.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발제문.

18) Bruce Cum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62.

19) Dispatch 90, American Mission in Korea, 16 Nov 1948, sub : Political Summary for October 1948, G-2 Doc Lib, DA, ID 0509409, Sawyer, 1962, 39쪽에서 재인용.

이런 정세 인식 하에서 무초 주한미합중국 대사와 로버츠 임시군사고문단장은 “이제 막 출범한 이승만 정권이 군대반란으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속히 평정하라’는 불같은 명령을 계속 내렸다.”고 한다.²⁰⁾

여수에서 제주4·3 무장봉기진압 출병거부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은 초기에 군인반란의 발생원인과 규모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단장은 사건발생 이유로 첫째, 전 연대장의 음모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과 둘째, 제주과견 반대 불만자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고, 봉기군 규모도 40명, 400명, 700명²¹⁾ 등 최대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미군들은 “최대한 신속한 반란봉쇄와 진압계획”(Plan to contain and suppress rebels at earliest moment)²²⁾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기록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점령군 사령관 하지 장군에 이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쿨터는, “이번 반란은 반란을 구실로 제주도에 출전했던 경비대원 중 사상을 달리 하는 자들에 의한 것이고, 그 혼란을 신속히 이용하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가담에 의한 것”²³⁾이라고 하면서 반란의 주모자를 일부 군인들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단정했던 사건성격 규정과 매우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견해는 여순사건의 계획성 유무와 남로당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의도된 ‘계획설’과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우발설’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는데, 사건 진압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미합중국 임시군사고문관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로버츠 단장은 전체 작전의 진압책임을 맡았으며,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던 미24군단의 탄약고를 비롯하여 모든 장비를 지원하고,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진압 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는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 지역에서 봉기군을 강력하게 깨부술 것”²⁴⁾을 송호성 사령관에게 말하였다. 이 작전은 보병뿐만 아니라 해경 함정, 수송기, 경비행기 등이 총망라된 육·해·공 입체작전이었다.²⁵⁾

20) 짐 하우스만 · 정일화 역,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79쪽.

21) Roberts to CG USAFIK(1948. 10. 20).

22) 앞 문서.

23) 『세계일보』, 1948. 10. 24. 김득중 앞 논문, 204쪽에서 재인용.

24) DF from Chief PMAG to CG USAFIK(21 Oct 1948).

25) 임시군사고문단의 보고체계는 각 지역 고문관 → 로버츠 →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이어졌으며, 이 보고는 통상 기존의 체계 즉 미국동군사령관 → 미합참으로 이어져 본국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미국동군사령관으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6사단 G-2가 미24군단 G-2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정보체계는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안정애. 2009. 앞 논문.

10월 20일 새벽, 주한미군임시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상회의를 요청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국방장관 이범석, 총사령관 송호성, 수명의 미군사고문관 및 한국인 장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작전을 지도할 특수부대를 광주에 파견기로 결정했다.²⁶⁾ 전반적인 작전계획은 이 특수부대가 20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직후 수립되었다.²⁷⁾ 당시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미군임시군사고문관 하우스만 대위와 그 외의 2명의 미고문관의 작전보조를 받았으며, 그 후 5명의 고문관이 보강되었다.²⁸⁾

군사반란 진압작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미합중국 임시군사고문관들의 군사적 원조와 조정, 통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²⁹⁾ 하우스만 대위와 몇몇 고문관들은 경비대의 취약성, 즉 부대전투능력의 부족, 유능한 지휘관의 부재, 인접부대간의 상호협동작전의 부재, 광범위한 포위망 형성에 따라 통신두절, 부대내의 좌익의 침투, 장교와 사병간의 일체감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작전계획수립, 병력집결지 선정, 작전지원 등을 통해 진압작전이 그나마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게끔 했다. 이러한 경비대의 취약성과 제1공화국의 정치적 취약성은 미군의 작전과 장비를 통한 진압작전 원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군들이 지리산을 도주, 유격전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었다(황남준).

나아가 로버츠 준장은 하우스만 대위에게 공식 명령 네 가지를 주지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사령부가 사태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관장할 것. 둘째,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행위를 할 것. 셋째, 결과를 신속히 고문단 본부에 보고할 것. 넷째,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³⁰⁾

임시군사고문단의 작전에 따라 박기병 소령이 이끄는 4연대가 순천 북방 학구에 투입되었는데 가장 먼저 순천에 들어간 부대는 4연대 1개 대대였다. 미고문관 켈소 중위가 이 부대를 따라 순천에 들어갔다.

이 학구전투는 봉기군이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전술의 일환인 후퇴작전이기도 했지만, 하우스만이 자평하듯이 이 기선제압작전은 봉기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26) J.R. Merrill, 1982.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University. of Delaware, PH, D. Dissertation., p. 224.

27) J. Merrill, 1982, 225쪽.

28) R. K. Sawyer, 1962, 39쪽.

29) R. K. Sawyer, 1962, 40쪽.

30) 김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172쪽. 김득중 2001.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여순사건 5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 테러리즘. 재인용.

성공”³¹⁾하였다.

이 기선제압작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봉기군의 복상은 저지되었고, 이후 진압군의 병력이 증강됨에 따라 봉기군이 목표로 했던 복상은 완전히 차단당했다.³²⁾ 결과적으로 임시군사고문단의 작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군사작전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임시군사고문단은 순천탈환이 이루어지자 4F(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 전술³³⁾을 한국군에 제시했다. 이 전술은 흩어진 반란군을 찾아서-고정시킨 후-싸워서-끝낸다는 것으로, 끝까지 봉기군을 추적, 그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전술은 국방경비대 시절 소요진압과 게릴라 토벌의 경험을 살린 것이었으며, 만주군 출신의 진압군 주도세력의 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는데, 이후 계속된 봉기 진압 작전 전술의 지침이 되었다.

임시군사고문단 풀러 대령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여수, 순천 지역으로의 진격작전 명령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달되었다.

- 가. 5연대 1대대 부산으로부터 여수로 상륙할 것
- 나. 대전 소재 2여단 병원, 대전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
- 다. 2연대 3대대, 대전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라. 1병참부대, 서울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마. 6연대 1대대, 대구에서 남원으로 이동할 것
- 바. 5여단, 4연대 사령부 학구리로 이동할 것
- 사. 해안경비함 8척, 여수-제주 간 배치·순시할 것³⁴⁾

안정애의 연구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문단 자료 및 하우스만 회고록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반란의 진압작전에 동원된 미군의 명단과 계급, 소속, 임무 등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⁵⁾

31) 하우스만 · 정일화, 앞의 책. 177쪽.

32) 이 전투에서 패한 봉기군 일부는 투항했고, 일부는 순천과 광양 백운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33) 하우스만 · 정일화, 앞의 책. 184쪽.

34) “History of Rebellion,” 5-6쪽.

35) 진압에 동원된 부대는 주지하다시피 2여단의 4개 연대(2, 12, 6, 15)와 5여단의 3개 연대(3, 4, 14), 그리고 서울에서 파견된 수색대와 항공대, 해안봉쇄와 상륙작전을 담당한 해안경비대와 5연대 등이다.

반란 진압작전 관련 미군의 현황

이 름	직 책	계급	임 무	비 고
MacArthur	미국동군사령관	원수	주한미군 등 최고 책임자	인용자 추가
John B. Coulter	주한미군사령관	중장	주한미군 총 책임	John R. Hodge 후임
W. L. Roberts	임시군사고문단장	준장	진압작전 총괄	
Hurley Fuller	임시군사고문단원	대령	현지 진압작전 총괄	
West	G-3 고문관		작전계획 담당	
James Hausman	임시군사고문단원	대위	현지작전계획(G-3)담당	
John P. Reed	임시군사고문단원	대위	현지 정보(G-2) 담당	
Marvin G. Wilson	임시군사고문단원	중위	현지 군수(G-4) 담당	
Arthur G. Griffith			연락항공기 조종, 정찰	
Joe W. Finley	14연대 선임고문관	중위	14연대의 반정부 흐름 의심	인용자 추가
Mohr	14연대 고문관	중위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봉기군에 의해 잠시 억류 후 진압사령부에 합류
Greenbaum	14연대 고문관	중위	정보수집 및 동향 파악	위와 같음
Minor L. Kelso	4연대 고문관	중위	작전수행	진압군의 순천진입 시 4연 대 1대대와 동행
F. Foster Cowey	12연대 고문관	중위	작전수행	백인엽과 동행
Howard. W. Darrow	5연대 고문관	대위	여수상륙작전 수행	김종원과 동승, 보고서 작성
R. T. Moore	5연대 고문관	중위	여수상륙작전 수행	김종원과 동승
Symmonds	3여단 고문관	대위	여수상륙작전 지원	식량 및 수송수단 준비
Rose	3여단 고문관	중위	여수상륙작전 지원	식량 및 수송수단 준비
Reenstadna	미 6사단	대위	정보(G-2) 수집 및 분석	
Grant				진압사령부에 소속되어 정 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추정
Howard	민간인		정찰보고	미 CIC 요원으로 추정
Treadwell	광주 5여단 고문관	대위	정찰보고	순천상공 시찰(2명의 미고문 관 생존과 10/23자 순천상황 보고서작성.
Laubac		대위	작전담당	김포에서 정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
Baker		중위		보고서
Mowitz		소령		보고서
Yates		대위		
Simmons	5여단 고문관	대위		
Burgess	9연대 고문관	대위	정보수집 및 보고	제주에서의 빨치산 동향 보 고
Sutherland				미확인 B-25 항공기의 여수 상공 비행 보고
Fowzer		대위	정찰보고	진압군의 보성 공격 보고
Raynold	20연대 통신대	소령	통신장비와 운영요원 지원	최신 무전기 M208 지원

사건발생 직후 외신 기자들까지 파견되어 사건을 취재³⁶⁾하였는데, 임시군사고문단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국제신문은 진압이 거이 끝난 뒤 12장의 사진

을 포함한 현지보도 특집을 부록으로 발행하였는데 이 신문 보도는 일반 국민들이 여순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⁷⁾

3. 여순사건 진실규명 작업의 평가

1) 민간인 진실규명 작업의 성과

1995년부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유족회가 나름대로 진실규명작업을 벌여 왔고 2000년부터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왔다. 진상규명운동을 시작한지 10여년 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2) 정부 진실규명 작업의 한계와 문제점의 치유

상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 유족회, 전문가들과 사회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노력과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했다고 한다.³⁸⁾

① 2008년 10월 22일, 김동춘 상임위원(성공회대 교수)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할 당시에, 여순사건 조사 담당자들과 간담회(장소 :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② 2008년 11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주최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학술심포지엄’(장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많은 발표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기대했다.

③ 2008년 12월 18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유족회는 당시 안병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와의 간담회(장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주문했다.

이후에도 이 문제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서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간의 노력은

36) 생명(Life)지 Mydans 기자 이외에도 Beech, Raymond, Lambert 등 4명의 언론인 명단이 확인되고 있다. Roberts to Hausman(23 October 11:30). 당시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Revolt in Korea: A New Communist Uprising Men into Butchers(한국에서의 반란: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의 봉기는 남자들을 도살자로 바뀌고 있다).

37)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15쪽.

38) 모임 자료 참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료와 더불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더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사건의 추모제에 몇 번 관련자를 참석 시킨 것 이외에, 사실상 아무런 치유사업도 전개하지 않고, 5년에 걸친 활동을 정리했다.

이제 대안은 이미 진행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들에 준하는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요구하고 관철해 내는 일이다.

결국 여순사건에 관련된 지역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미신청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여순사건이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우고 특별법 제정 운동에 돌입하였다. 시민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최소한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점점 더 활동이 활발해지고,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의 유사하게 전개되었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들(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 현실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현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필수사항이다(김충조 의원 외 18인 법률 제정안 참조).

2011년 2월 1일자 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제주43진상규명및명회복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기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한 사건의 추가조사,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신청사건의 조사 결광의 미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원회 말기였던 3기 위원장과 보수우익성향 위원들의 정치이념과잉의 역사 해석과 편파적 운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의 위령사업을 위한 위령사업과 사료관 조성, 이를 위한 인권평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2011.10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2001.4.12일부터 계류중인 상태이다. 국회의 적극적 입법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법운동의 연장선에서 지난 2011년 10월 11일,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에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든다면 첫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직권조사 방식으로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정작 신청인 조사에 국한하여 피해추정 최대인원 대비 1/10의 진실규명에 불과하였다.

둘째, 사건 피해자 9/10가 아직 미신청된 상태이며, 피해 신청자마저도 진실화해위원회 3기 위원들의 역사적 편향으로 인해 진실 규명 불능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추가조사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진실규명 기구를 통해 조사를 마치고도 계속 추가 조사 하였던 사례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제주4.3사건 관련 위원회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치고 계속 추가 조사를 한 타 기관의 사례를 든다면 첫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 볼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2000년 1월 15일 제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상당수의 미해결사건이 남아 이를 위해 2002년 11월 법을 다시 개정하였고, 그럼에도 조사를 마치지 못하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의 부칙 제3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다시 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둘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국회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2000년 1월 12일 제정하여 6년 동안 6차에 걸쳐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 조사를 위해 2007년 1월 24일 법을 개정하여 추가 신고접수를 하여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여순사건에 대하여도 법률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조사와 재조사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4. 진실규명 작업과 사건 성격 규정은 불가분

다시 톨스토이로 돌아가 보자. “정부 폭력을 없애버리는 길은 단 한가지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우리 시대의 노예제). 한마디로 비폭력과 무저항이다. 이런 생각들은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에 맞선 간디의 직접행동으로 표출되었다.

1948년 10월, 남한에서는 일부 군인들이 동족에 대한 강경토벌작전의 출병을 거부하면서 우발적으로 신생 독립국가, 이승만 정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물리적 저항형태인 무장봉기로 대항하였고, 한미혼성군경의 가공할만한 화력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혼성군경의 비인도적 개입은 민간인학살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행로를 가게 만들었다.³⁹⁾ 이 와중에 무수한 전라·경상도민들은 한미혼성군대와 경찰이 옥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 무차별 학살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그 이후 반세기동안 사건의 진실과 실체는 독재권력에 의해 거론조차 금기시되었고, 사실 은폐·호도·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추잡한 공산주의자의 비어로 낙인을 찍기 위하여 엄청난 사실 날조와 역사 변조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10·19 ‘국방경비대/육군 제14연대반란’과 ‘전라·경상도민 피학살’ 사건 진상조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사건 성격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 사건 성격 규정

여순사건은 무엇인가? 첫째, 봉기설이다. ‘여순봉기’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던 일본인 학자 히구찌 유우이찌(樋口雄一)는 ‘여순봉기’가 미군에 반대했던 봉기임을 상기시키며, 여순봉기가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과 싸운 중국 인민의 투쟁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운 베트남 독립해방투쟁과 공통의 과제를 가진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⁴⁰⁾ 나아가 그는, ‘송요찬, 함병선, 백선엽, 김점곤, 박정희 등,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 장교들은 이후 군대안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¹⁾ 이승만과 더불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군인들이다.

둘째, 폭동설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여순사건을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폭동으로

39) 미국의 정부 관련 인사들조차 집단학살을 예방, 저지, 차단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조한다. 하이덴리히 장원석 강병철 공역 2008. 제노사이드 예방학. 온누리. Heidenrich, John G. 2001. How to Prevent Genocide. Praeger.

40) 樋口雄一, 1967,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 62, 37~38쪽.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재인용.

41) 樋口雄一, 1976,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 4, 社會評論社, 74쪽.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재인용.

바라보고 있다. 커밍스는 여순사건을 해방 후의 ‘좌절된 정치’에서 기인하는 ‘막판의 저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행은 한낱 ‘참주전자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²⁾ 이 같은 관점은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하사관 세력이 주체가 된 초기 상황에는 주목하지만, 군인·‘봉기’가 대중들이 합류하면서 ‘항쟁’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점과 이에 따른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의를 기울인다고 김득중은 평가하고 있다.⁴³⁾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시 이승만정권의 사건성격 규정은 어떠했는가? 첫째, 여순사건 발생 직후 이승만 정권은 이 사건을 극우정객과 극좌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이라고 발표했다.⁴⁴⁾ 즉 이승만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적이었던 김구세력을 반란의 진원지로 지목하여 공격하고자 했다. 즉각 김구는 이런 관련설을 부정하였고, 일반 여론도 동조하지 않게 되자 이승만정권의 이런 의도는 큰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⁴⁵⁾

둘째, 이승만 정권은 이 봉기를 지역의 민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바꾸어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는 여수에 대한 초기 진압작전이 실패하고, 지방좌익세력과 대중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불안감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취해졌다. 반체제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승만정권의 책략은 곧이어 여순봉기의 주체를 소련과 북한을 포함하는 외부의 좌익 반체제 세력으로 설정하게 했다.⁴⁶⁾

결국 이들의 시각에서 본 여순사건의 성격은 공산당 책동으로 단정하고, 국민들을 양분하며 정치적으로 차별하면서 대량학살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반공국가체제를 완성하려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절대권력은 절대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했다.

집단살해(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제안했던 럼멜은 ‘정부에 의한 죽음’을 데모사이드(Democide)라고 부르고 있다⁴⁷⁾(Rummel, 1997). 여기에서 데모사이드란 이념이나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국가권력의 민간인 대량학살을 의미한다. 1948년 전라·경상도 민 피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데모사이드 또는 정치학살(politicide)에 의한 것이

42)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59~267.

43)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44) 극우와 극좌세력이 연합해 ‘혁명용군’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발표는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용군은 ‘실체가 없는 허상의 군대’였다고 한다.

45)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46)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에서 여순사건을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난하는 한편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항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평화일보』, 1948. 11. 5).

47) Rummel, Rudolph, 1997 Death by Government. Transaction Publishers.

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잔혹 살인행위에 대한 징치가 필요하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불처벌 관행과 싸우는 확실하고도 실현가능한 메커니즘’이다. 진실규명과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양립하지 못한다면 굳이 엄청난 비용과 인력, 시간을 들이면서 과거청산을 추진할 실익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행기 정의의 실현은 과거청산과 함께 잔인무도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인권과 평화 보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형성의 가교를 마련하는데 있다.

2) 1948년체제의 청산

1948년체제는 1948년 제헌헌법체제이자 반공국가체제이다. 이 1948년 반공국가체제는 여순사건이 일단락된 시점에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하여 확립, 완성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처리과정에서 이승만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제정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지배적 국가운영원리를 제공하는 법률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1948년체제의 청산은 반공보수우익체제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박찬표는 한국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군사적 점령통치와 반공체제의 형성, 반공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서 찾고 있다.⁴⁸⁾ 이혜숙은 미군정기 지배구조를 8·15이후 국가-시민사회의 역사적 구조화에서 접근하면서 한국은 내생권력이라기 보다는 외삽권력에 의한 외삽국가(外挿國家)라고 해석하고 있다.⁴⁹⁾

미군정 2년 11개월의 역사적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한민족과 국민들의 운명을 갈라왔다. 그런 낡은 체제를 해체, 청산하지 않은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하거나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반공보수우익체제의 해체

1948년체제의 청산은 완고한 반공보수우익체제의 해체를 통해야 한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공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공산주의반대만이 국가운영의 기조라는 협소한 국가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냉전체제의 해체, 냉전의식의 극복, 반공체제 유지만이 자신들의 생명줄이라는 기득권의 포기, 양보, 퇴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말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야만 본래의 자유주의가 설 땅이 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에만 보수주의도 의미를 지닌다. 그 길위에서만 민주주의는 만개할 수 있다.

48)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49) 이혜숙 2008.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해방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선인.

4) 공소시효 배제의 특별입법의 제정

대한민국은 한꺼번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두 명의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범을 단죄하기 위해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던 나라이다. 이 법률 제3조 제2호는 “형법 제250조의 죄(살인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과거 1980년 5월, 광주·전남도민 피학살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추함으로써 단죄할 수 있었다.

이제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도 진실과 정의 모형이 실현될 때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회복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 상 율(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연구실장)

< 요약 >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¹⁾에서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 대구·칠곡·영천·경주 -’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함.

진실화해위에서 조사한 대구·경북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그리고 위 진실규명 결정 전·후의 연구 성과, 기고문, 유족회가 발간한 추모자료집을 참고하여 ‘대구10월사건’²⁾의 전개과정,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조사·연구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I. 들어가며

진실화해위는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대구·칠곡·영천·경주-’사건에 대하여 1946년 10월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까지 김제억 등 4명을 포함한 민간인 60명이³⁾ 대구·경북의 각 지역에서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 등에게 적법절차 없이 희생되거나 1946년 이후에도 ‘대구10월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적법절차 없이 체포·구금되었다가 여러 장소에서 학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
- 1)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위’는 2005.12.1. 출범, 2010. 업무를 종료하였음. 이하 서술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진실화해위’라고 줄임.
 - 2) 그간 학계, 언론계에서 ‘추수봉기’, 대구폭동, 10.1사건, 영남폭동, 10.1소요, 영남소요, 10월인민항쟁 등으로 불리어 오던 이 ‘대구10월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서’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대구10월사건’으로 표기하였다. 진실화해위의 담당조사관이었던 김상숙은 2010. 8. 20. 담양에서 있는 2010. 민주연구단체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이 1946년 10월 1일에서 2일 사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1946년 10월항쟁”으로 부를 것을 주장함. 결정서의 내용을 언급할 때는 ‘대구10월사건’으로 적고, 필자는 ‘10월항쟁’으로 적고자 한다. ‘10월항쟁’으로 기술하는 내용은 후술한다.
 - 3) 신청 6건중 한 희생자는 연행된 후 행방이 묘연하여 희생추정, 신청인 한명은 총탄에 부상을 입고 생존하나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규명불능결정을 내림. 신청인 4명의 희생자들과 위 희생추정자 1명, 미신청인 희생자 55명을 포함 희생자는 60명임

위 진실규명한 결정서의 첨부자료1에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도 대구10월사건 관련 자라는 이유로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거명된 민간인들을 ‘희생거명자’⁴⁾로 분류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영천 지역의 희생자인 경우 진실화해위의 ‘영천 민간인희생사건’과 ‘영천국민보도연맹사건’에 포함하였다.⁵⁾

II. ‘대구10월사건’의 조사 내용

1. 조사 개요와 조사 방법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에서 신청인 6명에 대한 사건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분류하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조사개시결정하여 민간인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있는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을 주로 조사하였다.

국가기관의 자료로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제4대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1960)’와 경찰서 자료로 영천경찰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1979), 신원기록편람(1981), 경주경찰서의 신원기록편람(1980) 등에 포함된 처형자 명부, 사건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한 ‘경찰연혁사’등을 참고하였다. 경찰청과거사위원회의 ‘46년 대구 10.1사건 중간조사결과(2006)’, 진실화해위의 ‘피해자현황 용역조사 및 기초 사실조사 관련 자료’, 미군문서, 군과 경찰의 발간자료, 정해구 교수의 ‘10월인민항쟁연구’ 등 학계, 언론계의 단행본, 사건 관련자의 회고록 및 구술 사료와 각 신청인 피해자의 제적부, 족보 등을 참고하였다.

신청인 6명에 대한 조사는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 참고인 조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참고인 108명은 피해자 측 또는 목격자 등이고, 참고인 20명은 사건 당시 경찰 및 청년단원 등 가해자 측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신청인과 참고인이 사건발생장소로 지목한 대구역과 대구공회당 부근, 칠곡군 칠곡경찰서 부근,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뒷산, 영천시 북안면 북동,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4) 같은 희생자로서 다만, 1945. 8. 15. 이전까지 희생된 피해자를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자’로 하였고, 그 이후 희생된 피해자를 ‘희생거명자’라고 하였음. 앞으로, 연구에서도 항쟁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벌어진 1946. 까지의 시기를 10월항쟁으로 볼 것인지 또는 그 후 계속 경찰과 CIC(방첩대: counter intelligence corps, 1948 육군정보국 산하 방첩대 SIS로 출발, 1949. 10. 20. CIC로 개칭되었는데, 경찰과 어떤 지휘, 통제관계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서북청년회, 그리고 군부대에 의한 10월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과정에서 학살이 자행되고, 이에 대한 대항, 항쟁이 전개된 데 대한 연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함.

5)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칠곡,영천,경주지역- 진실규명결정서 56쪽,

숲,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공동묘지 등에서 현장 조사도 실시하였다.

2. 진실규명결정서의 사건 배경에 대한 검토

사건의 원인에 대해 미군 문서와 학계 문헌을 참고하여 보고서의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익세력의 운동전술 변화와 미군정과 대구·경북 지역 사회운동세력의 관계 변화의 영향으로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격화하였다는 점,

둘째,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식량공출정책을 가혹하게 추진한 점, 셋째, 해방직후부터 대구·경북에는 귀환동포 30만명이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했으나 미군정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1946년 봄부터 자살자가 늘어나고 실업, 범죄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하였고 농민들의 경우 토지개혁이 지연되면서 지주 소작관계에 대한 갈등이 심해진 사정 등 사회경제적 갈등이 고조된 점,

넷째,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이후 사건 당시에도 자행된 경찰들의 일제 때부터 고문 등 수사의 답습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증오심이 컸다는 점,

다섯째, 1946년 초부터 있었던 기민시위와 9월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보았다. 기민시위는 1946년 3월 11일, 4월 1일, 7월 1일, 8월 19일 등 4차례에 걸쳐서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시위대들이 식량배급을 요구하며 발생하였으며, 토지개혁문제로 경북에서 1946년 한 해 동안 1,552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하였고, 1946년 3월에 의성군과 달성군, 4월에는 경주군, 7월에는 칠곡군(왜관읍)과 경주군에서 미군정의 식량공출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있었던 점, 여름 이후부터 농민들은 추곡수집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벼를 베어 식량공출에 반대한 절박한 사정 등 민중들이 기아 상태에 있었던 자료를 참고하였다.

3.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서에서 1946년 10월 1일을 전후하여 전개된 ‘대구10월사건’에 대하여 정해구의 연구 내용 등과 문서자료, 사건 목격자들과 경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에 대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주요 사항
1946. 9. 23.	○ 대구에서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들어감	9월 총파업
1946. 9. 27.	○ 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시투)가 결성되었음.	

1946. 9. 29.	○ 부청과 도청에서 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개됨. 미군정은 경찰동원 파업본부를 진압	노동자 1,200명 검거
1946. 10. 1. 오전	○ 아침 무렵 노동자 수천명이 대구역과 공회당 인근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시투라고 함.) 본부 사무실 주위에 집결, 경찰 100명과 대치함.	
1946. 10. 1. 오후	○ 경찰 30여명이 시투 간부들과 군중 해산 문제를 협상하던 중 약 1만 5천명으로 불어난 군중들이 경찰을 포위함. ○ 권영석 경찰청장이 무장경찰 60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군중은 거부함.	
1946. 10. 1. 밤	○ 오후 6시경 대구역 앞에서 운수경찰과 운수노동자들의 충돌이 일어나자 대구경찰서 수사주임과 경찰 3명이 출동함. ○ 군중들이 이들을 구타하여 수사 주임과 경찰 3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자, 오후 7시경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함.	경찰의 발포가 시작 됨.
1946. 10. 2. 아침	○ 오전 8시부터 대구역 앞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무장경찰이 대치함. ○ 최무학 등 대구의전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시위대는 시신 한구를 들것에 메고 전날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의 것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면서 대구경찰서로 감.	이 대치과정에서 군중들 속에서 경찰을 향해발포함.
1946. 10. 2. 오전	○ 오전 10시경 대구경찰서 앞에 학생과 교수, 노동자, 시민 1만명이 모임. 이에 권영석 제5관구 경찰청장과 미국인 경찰청장이 시위군중을 해산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 미군정 경찰부장 프레이저는 이성욱 대구 경찰서장에게 무력으로 시위군중을 해산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성욱 서장은 총기를 무기고에 넣고, 경찰을 본정초등학교(지금의 종로초등학교)로 철수함. 시위대는 무장 경찰 100여명을 무장해제시키고 일부는 대구경찰서로 들어가 유치장 문을 열고 수감자 100여명을 석방함. ○ 최문식, 이재복 등 인민당 간부들이 시민의 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함.	학생대표단의 '구금자석방, 경찰의 무장해제, 대중 발포와 폭력진압 중지'등의 요구에, 미군정측 담당자가 이를 수용하자 학교로 돌아감.
1946. 10. 2. 오후	○ 오후 5시경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함. 경북의 시위는 10월 1-2일에 달성군으로부터 시작해 2-3일 철곡, 고령, 3일에 성주, 김천, 4일에 영주, 영일 등 19개 군으로 파급되었으며 10월 6일 경 대부분 진압되었음.	이후 경남, 전남북, 충청, 경기, 강원, 1946. 12까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됨.

4. 사건의 발생과 민간인 피살자의 신원 확인 내용

진실규명결정서에 발생 원인에 대해 경찰청과거사위보고서를 인용하여 1946년 10월 1일 오후 6시경 대구역 앞에서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정에 오후 7시경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것이 10월 2일 대구 봉기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 24군단사령부 감찰참모실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이상익(노조지도자)과 신원 미상의 노동자 1명 등 총 2명이 10월 1일 발포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신원 미상의 시신으로 시신시위를 한 사실⁶⁾,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유병화의 진술을 근거로, 이

시신 시위의 희생자가 김용태라는 것을 밝혔고, 1946. 11. 14. 대구시보에 나온 대구부 후생과에서 파악한 민간인 피살자 명단 23명 중 2명이 위 이상익과 김용태로 일치하는 것이 새로이 조사되어 밝혀졌다. 나머지 21명의 사망 경위, 피해자의 신원은 이름, 나이, 직업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한 것인지, 이들의 최종적인 신원확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5. 가해자와 피해자

진실규명결정서에서는 1946. 10. 당시 ‘10.1사건 대책위원회’가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른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1946. 10. 1.-2. 당시 대구를 관할한 5관구경찰청 특공대, 대구경찰서나 남대구경찰서의 경찰관들이 발포를 한 사실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었으며, 1946. 시기 이후의 사건들은 현지 경찰, 군 토벌대, 서북청년회 7)등 청년단체, 민보단 등에 의해 10월 사건에 연루자라는 이유로 각 적법절차 없이 피해자들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희생된 사실을 밝혔다.

가. 대구·달성 지역

- 1) 1946년 10월 1일 오후 노동자 김용태와 이상익이 대구공회당(대구역 부근) 시위현장에서 사살됨.
- 2) 1946년 11월 13일 현재 대구·달성 지역 민간인 피살자가 23명임(대구부 후생과 자료)
- 3) 1947년 7월 20일 대구상업중학교 앞에서 조명해가 강제로 연행된 뒤 돌아오지 않음(사망을 추정함)

나. 칠곡 지역

- 1) 1946년 10월 4일 새벽 칠곡경찰서 부근에서 이수황, 이종학 등 주민 수십명이 충남경찰부대에게 사살됨, 왜관읍 왜관동 주민이 다수 살해됨.
- 2) 1946년 10월 4일 오전 칠곡경찰서 부근에서 김제억이 충남경찰부대 경찰에게 사살됨.
- 3) 1946년 10월 4일 오후 칠곡군 약목면 동안동에서 김희문 등 주민 11명이 충남경찰

6) 진실규명결정서 16쪽 주석 43) 미 24군단 사령부 감찰참모실, 「Report of Taegu Situation(1946. 10. 2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7) 허호준(2010),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194쪽, 약칭 ‘서청’, 평안청년회 등 단체가 1946. 11. 30. 통합하면서 발족, 강령으로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빨갱이 사냥(red hunt)”에 매달렸으며, 좌익혐의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대표적인 단체로서 정치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음.

부대에게 사살됨.

4) 1946년 10월 5일 오후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에서 박치도가 충남경찰부대에게 사살됨.

다. 영천 지역

1) 1946년10월 3일-12월말: 대창면 대재동 방달도 등 9명이 각각 충남경찰부대에게 사살됨. 화북면 정각동의 10여가구가 방화됨. 화북면 황계동 정재섭과 화북면 자천동 주민 7명은 화북면 자천리 오리장림 등지에서 사살됨.

2) 1947년 1월초-1947년 6월말: 화남면 사천동 박도치 등 10여명이 삼창지서 인근 영천교 밑, 용수골 등지에서 사살됨

3) 1947년 7월초 -1947년 12월말: 영천읍 괴연동 김달용 등 13-14명이 영천경찰서, 고경면 골짜기, 청통면 골짜기, 화북면 자천동 오리장림 등지에서 사살됨.

4) 1948년 1월 초- 1948년 8월 중순: 화산면 연계동 김의술 등 12명이 영천읍 주남다리 밑, 고경면 논실리, 화산면 등에서 사살되거나 강제로 연행된 후 돌아오지 않음.

라. 경주지역

1) 1946년10월 8일: 진실규명대상자 이학상이 지역 청년단원들에게 사살됨.

2) 1946년 10월 10일: 월성군 천북면 문유찬, 고문사함.

3) 1946년 10월 불상일에 진실규명대상자 손진성은 안강지서 소속 특경대의 총격으로 장애인이 됨.

4) 1948년 4월 14일 경주시 구정동의 최병호, 불국사 인근에서 여러 명과 함께 사살됨.

Ⅲ. 역사적 의의와 평가

1. 역사적 의의

위와 같이 진실규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이 진실규명사실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진실규명보고서에 의하면, 1946. 10.을 기점으로 경찰은 서북청년회와 함께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미신청인의 피해자들, 함께 60명에 대하여 희생당한 것을 인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이 대구, 달성, 칠곡, 영천, 경주지역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희생자가 추가로 진실규명될 것이라는 점을 추

정하였다.

국가기관에서 신청인들의 신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청인들의 피해자는 물론, 시월항쟁과 관련한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최초로 내린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유족들은 2010. 10. 1. 국채보상공원에서 ‘10월항쟁 64주년 희생자 추모제’를 지내면서 고유문⁸⁾에서 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추도사’들에서 대구광역시장, 진실화해위원장이 모두 ‘대구10월사건’에 대한 애도와 경찰에 의한 가해사실의 인정이라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역사적 진전이 있었다 할 수 있다.

2. ‘항쟁’에 대하여

위에서 살폈듯이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국가기관에서 조사과정에서 정한 사건의 명칭이 ‘대구10월사건’일 뿐, 실제로 사건의 성격과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이 ‘대구10월사건’은 이미 ‘항쟁’으로 연구자들, 학계에서 주장, 사용되어왔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기에 ‘10월항쟁’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 진상규명의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더욱 우리 사회에서 ‘10월항쟁’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학계에서 정해구 등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에 ‘항쟁’으로 규정되었었다.

1945. 8. 15이후 10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미군정이 독립운동세력들이나 민중들이 지지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민족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점차 배격하면서 탄압을 가하고, 친일관료와 친일경찰을 동원하여 미군정체제를 이끌어오면서 민중들을 식량위기에 이르게 한 점, 10월항쟁 당시 발포사실, 그리고 사후 수습과정에서 학살로 일관한 측면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저항과정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항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종성⁹⁾ ‘이것이 이른바 중국의 ’인민전쟁‘에 해당하는 ’유사·변용 개념‘인지 아니면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현대사적 기초일 것인지에 관해서는 술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그것이 단순 ’폭동‘이나 ’소요‘의 차원으로 폄훼될 경우 행위국면 전체에 스며있던 정치적 적극성이나 사회경제적 정당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은 ’항쟁‘ 차원으로 격상되어야 한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안진¹⁰⁾ ‘1946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은 좌익 조직의 지도하에 미군정의 친일 관료층에 대한 한국 민중의

8) 2010. 10. 1. 10월항쟁64주년 희생자 추모제 자료집 ‘고유문’, ‘인사말’,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추도사’, 대구광역시장의 ‘추도사’

9) 박종성(2000),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대학교출판부, 172쪽

10) 안진(1996), 미군정기 억압기구연구, 새길, 140쪽

적대감이 촉발 요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군정 경찰의 반민족적, 억압적 성격은 10월 항쟁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10월 인민항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것을 주도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조공·전평·전농 등 좌익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투쟁의 표적이 미군정 지배기구와 그 수행자들이었다는 점과 전국적인 동원 규모로 평가해 볼 때, 미군정(그리고 그 동맹세력인 한민당계 보수 우익과 군정 관료들)에 대한 조선 민중의 항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정해구, 1987)는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라고 하였다. 일반민중은 절박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한 것이었다.¹¹⁾는 것 이상의 기근시위, 아사 상태, 콜레라 만연 등 상황에서 민중생존권적 저항의 실체도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항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광주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대해 끊임없는 규명운동 등 노력들이 있었듯이 10월항쟁의 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나 규명 활동에 보다 양적인 많은 노력이 투과되는 과정에서 ‘항쟁’의 ‘성격’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당시 미군정의 근본적인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월항쟁은 농민과 민중의 기대가 미군의 탄압과 우익의 테러에 의해 좌절되는 것에 반발해 지방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 등 지방조직들에 의해 한꺼번에 분출된 민족해방투쟁이라는 측면이 있다.’¹²⁾는 관점에서 보면, 항쟁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당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증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10월항쟁을 겪은 분들의 연령을 보면, 현재 10월항쟁 65주년의 해이니, 현재 85세 된 분들이 당시 20세 전후의 청년기일 때이고, 80세된 분들은 15세 전후일 때이므로, 이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질문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 내용을 채록하여야 할 것이다. 구술이 기존 공식역사에 도전하고 여러 사실을 교정하였음에도 정작 제보자, 구술자가 자신들이 이념문제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현실, 아직도 ‘양민’과 ‘빨갱이’를 나누는 담론과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점, 그 현실도¹³⁾ 힘든 점이지만, 구술은 ‘사실’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절박한 것이다.

3. 평가: 진실규명의 과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초로 국가기관에서 신청인의 접수를 받아서 그 신청사건들을 ‘대구10월사건’으로 특정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그 사실 자체가 큰 의의가 있

11) 위 허호준의 논문, 196쪽

12) 위 허호준의 논문, 196쪽

13) 김득중(2010), 구술을 통한 공식역사의 균열과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음을 살폈다. 10월항쟁에 관련 신청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진실규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개별 신청사건의 피해사실을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여 피해자들의 희생사실이 규명된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평가이외에 더욱 조사 과제가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의 과제에 대하여 김상숙의¹⁴⁾ ‘진상규명의 과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 10월항쟁의 조사범위를 공간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1946년 10월항쟁은 해방정국 최대의 사건이며 전국적인 항쟁이었다.

둘째, 기존 연구가 사회운동 지도부의 행적과 도시지역 노동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향이 있는데, 빈민들, 농촌지역 주민들의 항쟁 참여 실상과 항쟁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1946년 10월항쟁은 1946년 10월의 일회성 항쟁이 아니라 이후의 항쟁과 민간인 희생과 연결된 사건이다. 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필자가 추가할 진상규명의 과제는,

첫째로, 1945. 8. 15. 해방이후부터 10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미군정정책의 지역적 구체적 사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사료수집과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1946. 10. 당시의 ‘항쟁’ 상황에 대해 문헌사료 발굴이외에도 구술을 받는 것으로 생존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채록하여 사료로 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의 확보와, 시월항쟁연구회 등, 연구 단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IV. ‘10월항쟁’ 조사·연구를 위하여(대구·경북의 연구과제)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에 주력한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전과정적인 실체나 성격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 그간 진행되었거나 조사, 연구된 사례들을 참고하고, 국가기관에서 조사할 때 이상으로 지역의 관련 유족회 성원들, 드러나지 않은 유족들에게 신뢰로 조사에 임할 조사주체가 필요하다. 당장 진실화해위와 같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

14) 김상숙(2010), 1946년 10월항쟁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과 진상규명의 과제-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과를 중심으로- 18-19쪽

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0월항쟁’이 시작된 대구 지역에서 그 항쟁의 구체적인 전모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를 개시하는 민간의 역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3’과 ‘여순’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의 길을 수십년간 꾸준히 걸어오고 있으며, 계속 장애물들을 넘어 전진하고 있다. 국가의 특별법 등 법적 인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하였다.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성과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에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한 집단희생사건들은 10월항쟁 이후 야산대의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사건 등 여러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 곳곳에서 10월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10월항쟁의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가족, 그 지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이 약탈의 대상이 되어 희생양이 된 마을 주민들도 있다. 이 진실화해위의 사건조사나 기타 연구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로는 1946. 10.의 사건이후로 ‘야산대’가 생기고,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내전 양상으로 변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와 피해자현황조사가 이루어 낸 큰 성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이외에도 연구사료를 생산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사 성과를 지역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10월 항쟁’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그간 지역의 ‘10월항쟁’연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단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는 학제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전공, 관심있는 주제나 그 시점의 연구로 귀결되거나 연구가 답보상태일 가능성의 여지도 생긴다. 이에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연구회, 사료를 상시 볼 수 있는 공간,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연구소에 대한 고민이 일차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를 개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사 분량이나 집약되고 분석되어야 할 시기별 내용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 목격자나 항쟁에 참여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¹⁵⁾

둘째로, 항쟁 당시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민간에서의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07. 피해자현황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제보자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를 신뢰하기보다는 면담자가 지역의 가까운 대학교의 교수 신분이라는 점을 더 신뢰하

15) 지금까지 구술채록한 분들 이외에 분들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고 제보, 구술에 응한 사례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구술을 채록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이고 좋은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세움에 있어서 진실화해위의 2007. - 2009. 실시된 ‘피해자 현황조사’의 연구방법과 ‘4.3’과 ‘여순’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를 더욱 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3. 진실규명활동을 위하여

2009. 시월항쟁유족회가 결성되었다. 유족회의 목표는 진상규명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들이나 법률가 등 모든 사람들과 연대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 재정, 활동가 부족 등 모든 점에서 어렵고 힘들다. 그간 전국유족회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각 과거사위원회가 생겨날 수 있었듯이 지역에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자들, 정치세력, 행정기관, 경찰청 등과도 당당히 진실규명에 대해 요청할 것은 요구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그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사실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더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학자들이 진실규명의 과제와 관련한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께하고 이 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의 역사이기에 그렇다. 즉,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의 조사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최소 몇 년간의 조사 및 정책 생산계획을 유족과 시민 사회에 제시, 항쟁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서 정치적으로 특별법제정에 누구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V. 결론

10월항쟁이 발생한 각 지역의 개별 사건들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더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10월항쟁연구’라고 하기보다 ‘10월항쟁조사·연구’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2009)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중간보고서.
- 고희림(2011), 인간의 문제4, 인간의 문제7, 대구작가 제 15호.
- 김득중(2010) , 구술을 통한 공식역사의 균열과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 김산영(2009) ,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 - 청도·경산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숙(2010) , 1946년 10월항쟁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과 진상규명의 과제, 2010. 민주연구단체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상숙(2011) , 1946년 10월항쟁의 지역적 전개양상 -영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대한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자료집.
- 김상숙(2011) ,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민간인 학살사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 정의, 역사와 책임 창간호.
- 김순규(2010)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영덕군 지품면을 중심으로 - .
- 안소영(2011) , 경북지방 10.1 연구와 미군정,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대한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 여은경(2011) , 언론보도와 구술로 복원하는 해방공간 최문식·이재복 목사의 위상.
- 이상점(2011) , 해방 전 후 기독교 사회운동가 최문식, 이재복의 활동.
- 이성빈(2011) , 한국전쟁유족회가 나아갈 길, 대구작가회의 대구작가 제15호 2011.
- 10월항쟁유족회(2011) , 10월항쟁 65주년 추모제 및 염무웅선생 강연회 자료집.
- 이주영(2010) ,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역사화-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흥원(2005) , 한국전쟁 전후(1948년 -1952년) 민간인 학살 양상,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창현(2009) ,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8) , 2008년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중간보고서.
- 정택근(2010) , 해방 전후 전라남도 영광의 지역정치구조와 민간인 학살 - 이념갈등과 학살체제(massacre regime)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해구(1988) , 10월인민항쟁연구, 열음사.
- 정해구(2011) , 해방 공간에서의 10월 항쟁: 그 의미와 평가(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대한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진실규명결정서,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부 제2소위원회 사건(1)(55쪽-154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9.

최승호(2011), 영천지역 민간인 학살의 실상, 대구작가회의 대구작가 제15호 2011.

함중호(2010),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1),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87호.

함중호(2011),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2),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88호.

함중호(2011),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3 도독촌 진골목),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89호.

함중호(2011),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4 기독교사회주의자),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90호.

함중호(2011),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5 대구형무소 민간인학살),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91호.

함중호(2011), 활동가가 쓰는 대구의 근현대 진보운동 이야기(10월항쟁6 학살 터),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통권92호.

함중호(2011), 110만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성격, 대구작가, 제15호.

허호준(2010),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jinsil.go.kr/> 끝.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김 은 희(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1.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

2003년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나온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보고서가 확정된 후 2003년 10월 31일,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그 후, 8년을 보내고 뒤돌아보니, 그때 당시는 모든 4·3의 문제가 탄탄대로로 척척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 여전히 4·3은 힘들고, 더디며, 싸워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은 보고서 이후 8년 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다. 보고서 초안을 확정할 당시, ‘대정부 7대 건의안’¹⁾을 상정했고, 제일 먼저 이루어 낸 것이 정부의 사과였다. 우리 역사에서 과거 국가 잘못에 대해 국가 원수가 사과한 일은 4·3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사과는 보고서가 이루어 낸 가장 큰 업적이며, 4·3 유족들의 55년 동안 맺힌 한과 울분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보고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학생들에게 금기시 됐던 제주 4·3을 알리는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매장지 유해발굴 사업은 총 396구의 유해가 발굴됨으로써 4·3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희생자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진실이 새롭게 조명되는 일도 있었다.²⁾

4·3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대해, “그동안 사적 기억 속에 밀봉되었거나 억압적 상황으로 인해 금기시 되었던 4·3에 대한 기억들을 공식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4·3의 진상을 모두 밝혔다고 할 수는 없다. 총론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지만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아직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

1) 대정부 7대 건의안 : 1. 제주 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2.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3. 진상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 4·3평화공원 조성 적극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6.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사업 지원 7.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

2) 국제비행장 1단계 유해발굴에서 드러난 사실은 몇구의 희생자 신원이 밝혀지면서 서귀포쪽 사람들이 비행장에서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귀포쪽 유족들은 어디에서 죽은 줄을 몰라 주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서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³⁾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이후, 자유시민연대 등 43개 보수단체에서는 2004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 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를 취소하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이들은 4·3특별법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재산권 등에 침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이 청구를 각하하였다.(화해와 상생: 123쪽)

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틀 안에서, 최선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4·3특별법에 제시한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걸친 사건으로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복잡한 상황과 장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와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졌다는 공간적 범위 등등을 고려한다면 제주 4·3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었다. 2여 년의 짧은 기간에 불모지였던 4·3을 공적인 위치로 올려놓는 일을 담당했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의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열의가 높았고, 기존에 진상조사를 해온 제주도의회와 언론사, 방송국, 제주 4·3연구소 등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방대한 사건이었으나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었다.

5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4·3이므로 제주도민들은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반면, 보수 단체들의 견제도 심했다. 보고서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너무 온건하여 4·3의 성격이 없다,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실체가 어디로 갔냐는 질타와 비판, 반대로 좌익들이 만든 ‘좌익보고서’라서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는 등의 공격도 거세었다. 보수단체들은 보고서와 희생자 선정에 대한 소송을 오늘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2.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의 분석

1) 제주 4·3특별법의 한계⁴⁾

제주 4·3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정부차원의 4·3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배상(보상)법이 아니라 일종의 인권법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4) 제노사이드연구회 심포지움, “올바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찬식, ‘4·3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 11월11일 참조함

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자체가 과거청산의 정식(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명예회복-> 재발방지)에 맞추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게 약간의 생계비 정도 지원하는 법안이었다.

제2조 (정의)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의 부분은 그동안 1948년 4월 3일을 발발 기점으로 하여 ‘공산 폭동’으로 매도하고 학살행위를 정당화하여 왔다면, 1년 앞선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무차별 발포 시점과 민간인 희생이 4·3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어 50여 년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4·3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개별 피해 보상이 없다는 것, 재심 조항이 빠진 것, 연좌제 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의 조항이 없는 것 등, 더구나 관 주도로 4·3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다분해서 제2의 왜곡의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법이었다. 또한 특별법은 정의·처벌이 아닌 화합과 용서를 도민에게 은근히 강요하는 법안으로 화해·상생을 강조했다.

제주 4·3특별법은 4·3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미약하였다. 진상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권한 정도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하여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인 4·3평화기념관과 민·관 협력형인 평화재단 설립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점은 평가할 만하다.(화해와 상생: 322쪽)

2)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활동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특별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 부지사 등 당연직 5명, 유족대표·학자·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기획단 구성원은 서로 성향이 다른 인사들이 있어서 진상조사보고서 심의 과정에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예견되었다.(화해와 상생:57쪽)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업무를 담당할 상근 조사팀 5인(양조훈 수석전문위원)과 조사요원 15명 등 20명이 선정되었다.

기획단은 4·3특별법의 한계 속에서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요쟁점이 된 사항, 발발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등등 진상조사의 핵심요소 16가지를 선정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화해와 상생 : 73쪽)

- ① 50여 년의 진상규명 역사
- ② 4·3사건의 정의
- ③ 4·3사건의 배경과 발발원인
- ④ 남로당의 개입범위와 역할
- ⑤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⑥ 서청의 개입범위와 역할
- ⑦ 사망자 숫자
- ⑧ 가해자 통계구분
- ⑨ 무장대에 의한 피해
- ⑩ 토벌대에 의한 피해
- ⑪ 집단피해 마을 및 물적 피해
- ⑫ 군법회의의 적법여부
- ⑬ 계엄령의 집행문제
- ⑭ 집단살상 지휘체계
- ⑮ 미군의 개입과 역할
- ⑯ 연좌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 11,063건, 관련도서 2,013권

- 국내기관(17개소) : 국회, 법무·국방부, 정부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등
- 국외기관(9개소)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집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자료집』 총12권 발간

증언 대상자 503명 선정 증언채록 - 『증언록』 총 7권 발간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회의 12회 개최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안) 작성

2003년 2월 7일, 제10차 회의 때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상정되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체로 유족들은 보고서 초안을 보고 온건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과, 개별 배상 근거를 명시 등을 요구하는 반면, 군경측 위원들은 군경과잉진압에 치중하여 주민피해상황을 과도하게 표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화해와 상생: 59쪽) 이러한 과정에 초토화 작전-> 대토벌 작전, 강경진압작전으로, 송요찬, 함병선 -> 9연대장, 2연대장으로, 미국->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으로 수정하는 등 소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30여 곳을 변경하였다.

최종 보고서에는 4·3을 이렇게 정의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간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⁵⁾

3. 보고서의 미흡한 내용 추가 진상조사

2007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내용은 희생자 범위를 확대해서 ‘수형자’ 추가, 유족이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가능, 위원회 의결사항에 ‘집단 학살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추가, 제주 4·3평화재단에 정부기금 출연 근거 신설, 호적등재에 관한 특례조항 확대, 재심의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안이 검토되면서, 미흡한 부분의 추가 조사는 정부에서 계속 하지 못하므로 4·3평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추가 진상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재단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화해 상생: 323쪽)

앞으로 4·3평화재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추가진상조사나 추모사업,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사업, 문화·학술사업 외에도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하는 것 등이 재단의 역할이다. 4·3관련 자료를 계속 발굴하여, 교육자료 발간 및 4·3평화공원의 전시자료를 보강하는 일도 중요하다.(화해와 상생: 325쪽)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이다.⁶⁾

- ① 제주 4·3사건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 : 통일운동으로서의 ‘4·3’의 정명 찾기, 학살의 책임자 처벌 문제, 무장봉기의 주체인 무장대의 규모, 인물, 남로당과 관계, 무장대의 성격 등 다방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행방불명의 실태와 마을별 피해실태 부족 : 전국 형무소 자료 검색, 행불인 한국 전쟁 희생자 신원확인 조사, 정밀한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압매장지 및 유적지 관련 조사가 있어야 한다.
- ③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 지적 : 국가 권력의 개입 과정, 4·3의 책임 부분, 미국의 기밀 자료 및 대한민국 정부자료, 군·경의 추가자료 검색 등 자료 수집과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 ④ 희생자 추가 선정

보수단체들의 4·3특별법 위헌 소원 청구를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결과,

5) 별첨 : 보고서 ‘결론’ 참고할 것

6) 제노사이드연구회 심포지움, “올바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찬식, ‘4·3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진상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 11월11일 참조하여 재정리 함.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희생자 선정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및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는 희생자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삽입시켰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2002년 3월 14일(제4차),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에서,

-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단,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은 희생자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이로 인해 희생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당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시대의 희생자로 인정될 것이라 믿었던 제주도민들에게 실망과 분노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희생자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2009년 11월에 출범한 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를 정부로 부터 위임받았으나 예산 지원이 없어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4·3평화공원 3단계 예산도 삭제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일부 30억을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의 4·3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보수 단체들의 견제도 더욱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난 4·3위원회의 활동은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과거사 정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2007년 작성한 「과거사 정리정책 보고서」에서 “제주4·3위원회는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어떻게 미래를 향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시민운동과 지역 언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적 진실규명 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과거청산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화해와 상생: 321쪽)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7년 3월 2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4·3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됐으며, 평가대로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이 됐으며 이런 일들이 큰 교훈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화해와 상생: 322쪽)

4·3은 정부에서 확정된 보고서로 인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인정했다고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는 4·3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추가 진상조사와 유족들의 생계지원 확대, 3단계 4·3평화 공원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가 확정된 지 8년이란 세월 동안, 4·3평화 공원에는 4·3평화기념관이 개관되고 4·3평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제 국가 지원하의 4·3 사업은 4·3평화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재단은 민·관 조직으로서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재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그 역할을 잘 해낼지 제주 도민과 유족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별첨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결론>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그치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동북아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이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군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3·1절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 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 등이 대거 제주에 내려가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검속 한달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사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초기에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 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측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 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쪽에 또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산간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변 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

경은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홍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실로 7년 7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다음의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

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 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시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 진압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 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명 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 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준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조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제7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의 모색

여순사건 64주기 학술심포지엄

2012. 12. 21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장완익

여순사건의 제도적 청산과 진상규명의 실재 / 정호기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소고 / 이영문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장 완 익(법무법인 해마루)

I.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50년 9. 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II.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위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현재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

회에서 준비 중인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특별법안의 성격, 여수·순천10·19사건의 정의와 희생자의 정의 및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보론의 형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특별법의 필요성

진화위가 ‘여순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작업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진실규명 신청된 사안들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함으로 인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진상 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법안의 성격

특별법의 명칭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며, 기본적으로는 제주4·3사건을 조사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진화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정의

(1). 특별법안 제2조 제1호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1948년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제주4·3사건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이라고 하여 사망·행방불명·부상·가옥소실(재산상 피해) 등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는 진화위 활동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살된 경우만을 희생으로 판단하고 행방불명·부상·가옥소실 등을 피해 사실에서 제외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성상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 하지만 조사 시기를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로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명시한 지역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 특히 “경상남도 일부지역”이라고만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희생자의 정의

특별법안 제2조 제2호는 희생자를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제주4·3사건의 경우는 수형자를 희생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포함된다.

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설치

특별법안 제3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수습,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하며,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특별법안 상의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진화위 수준의 조사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원회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특별법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밖에 없으며, 피해자나 유족들도 피해조사 신청이 아니라 피해사실 신고(특별법안 제12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결론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성은 충분하나, 지금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이러한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진화위가 다른 형태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경우 2기 진화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수·순천10·19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구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여수·순천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이익의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령사업)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관련사업

제10조(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의)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이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순사건의 제도적 청산과 진상규명의 실제

- 「진화위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

정 호 기(광운대)

1. 머리말

한국은 정부가 수립되자 안정화될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이는 미군정시기의 갈등과 대립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었다. 곧이어 새 국가에 대한 엄청난 첫 충격으로 기록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여순사건이 발발했던 것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은 군대에서 촉발했던 반란에 민간인이 대거 동조·가담하면서 한반도 남부와 산악지대로 폭동이 확산되었고, ‘빨갱이’라는 또는 이들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제주4·3에 이어 비국민으로 간주되었던 민간인의 대규모 죽음이 양산되었던 과거사이다(김득중, 2009: 604~607). 여순사건은 사건 발발 10여 일만에 일단락되었지만, 산악지대로 도피한 반군은 수차례 대규모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잔존해 있었다(이선아, 2011).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초기 시각은 1948년 10월 21일에 발표되었던 이범석 국무총리의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담화에서 ‘공산주의자와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일부 극우정객 분자가 결탁되어’ 여순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¹⁾ 사건이 전개되면서 정부는 몇 차례 걸쳐 후속발표를 했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치적 이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진술하지 않았다. 여순사건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상황의 극단적 측면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계속되면서 반론과 이견의 제기가 금지된 채 고착화되었다. 공고화된 여순사건에 대한 평가는 재연 또는 확대되었고, 다양한 아류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른바 안보 담론 주창자들이 분단의 고착화 이유를 거론하고, 반공 국가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정부 세력을 비판할 때, 여순사건을 빈번하게 재활용했다.

현존하는 책과 글에서 여순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6·25전쟁 이후에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군과 경찰 조직의 형성과 변천을 기록한 책들이다. 이들 가운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68)가 발간했던

1) ‘국군 일부 전남서 반란, 좌익과 합세 2천여 명’, 「조선일보」, 1948. 10. 23. 이 담화는 21일에 발표되었으나, 보도판제가 해제되었던 23일 신문에 수록되었다.

『한국전쟁사 1: 해방과 건군』은 인용 빈도가 가장 높고,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참고가 되고 있다.²⁾ 이 책에는 토벌군 지휘관들의 면접도 수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래서 이 책을 전거로 또는 이 책이 발간된 이후 밝혀진 진상³⁾ 등에 근거하여 여순사건에 관한 도그마와 오류를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와 다른 관점에서 집필된 글들도 있다. 이러한 글들은 이승만 정부시대에 지역에서 발행되었던 매체들에서도 확인된다. 『여수향토사』(김낙원, 1962)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여순사건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었던 지역들에서 발간되었던 향토지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여순사건의 정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초기의 글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이 책에는 여순사건에 관한 내용이 총 20쪽에, 6·25전쟁에 관한 내용이 총 4쪽 미만으로 실려 있다. 두 사건에 대한 기술 분량의 크게 차이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여순사건이 지역 사회에 주었던 영향이 컸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된 시점도 관심을 끈다. 『여수향토사』는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서슬과란 위압이 한국 사회 전반을 짓누르던 시기에 출판되었다. 여순사건의 재현 방식에서도 이 책은 남달랐다. 이 책은 진압군의 잔인한 처벌 행위⁴⁾, 무고한 민간인의 즉결처분과 집단적 죽음, 폐허와 같은 피해상황과 공포 그리고 지역 공동체 파괴를 ‘신음하는 아우성 소리, 참상, 몸서리치는, 통곡’ 등 마치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러한 점들은 여순사건의 여진이 계속되었고, 생생한 생채기와 사회적 기억으로 현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발간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와 유사한 관점의 글들은 다수 발표되었음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생산했던 여순사건 보고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순사건의 재 규명을 위한 집단적 활동은 사건이 발발한지 4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다. 여순사건의 진원지였던 여수와 확산지였던 순천에서 ‘개칭운동’이 발원했는데, 지역과 지역민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했다. 여수문화원과 여수청년회의소가 1988년 12월에 촉발시켰던 개칭운동은 1992년에 이르러 여천과 순천의 문화원들이 협력하면서 ‘지역사 바로잡기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교과서와 정부 문서에 수록되고 있던 ‘여순 반란사건’이라는 용어를 개칭해달고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탄원했다. 이들은 ‘14연대 반란사건’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1994년 11월에 개칭되

2) 이 책은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들에서도 중요하게 인용되었다.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국가가 발간한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빈번한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이 글에서 ‘진상’과 ‘진실’은 유사어로 사용했지만, 진상은 여순사건의 재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칭할 때, 진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을 지칭할 때 주로 명명했다.

4) 토벌군의 처벌이 자의적이었음은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황두연, 순천지청 박찬길 검사, 여수여자중학교 송옥 교장 등도 반란에 가담했거나 빨갱이로 간주되어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었던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었다(여수문화원, 1997: 127~155). 개칭 이후에는 정부에 위령탑 건립을 요구했는데, 활동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편, 1990년에는 여수문화원이 발간한 『여수문화』에, 순천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하기 시작했던 『지역과 전망』에 여순사건 증언과 자료가 수록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정치민주화가 진전하면서 해방부터 6·25전쟁기에 대한 회고의 글, 자서전, 목격담 등이 대거 발표되었기 때문이었다(홍영기, 2001: xvii). 이와 같이 여순사건의 재조명 작업은 개인적 차원에서 빈번해지고, 집단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었으나, 현지조사에 의한 자료 생산과 사실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현지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사망자 명단과 특성, 가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디뎠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1998년에 발간했던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제1집)는 이런 활동의 첫 성과였다.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에 관한 학술행사들이 개최되었고, 4권의 자료집 또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2000; 홍영기, 2001; 여순사건조사위원회, 2006).⁵⁾ 현지조사는 진상규명운동이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환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경험자의 생생한 기억과 구술이 점증적으로 기록되고 축적되어갔다. 또한 이 자료들은 탄원과 호소에 의한 명예회복 중심의 인정투쟁이 진상규명 중심의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도록 자극했다. 그리하여 운동의 목표는 국가의 잘못 인정과 사죄로 모아졌고, 다양한 치유방안들의 실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화위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국가의 공식 담론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이 분명하다.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던 민간인의 죽음은 7,600여 건이었는데, 여순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1,102건이었다(허상수, 2011: 7). 현재 이들 모두에 대한 진실규명이 내려졌는데, 정치·사회적 여론 환기와 인식 전환이라는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와 영향이 크지 않음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학술행사의 장에서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관한 연구 발표는 두 번 있었다(김득중, 2008; 허상수, 2011).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들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고, 수년 동안 침묵하는 것은 과거청산의 방법과 성과에 대한 공론화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들을 통해 과거사의 제도적 청산을 성찰하고, 진실규명의 실재와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⁶⁾ 이를 위해 첫째, 과거사 청산 작업의

5) 보고서와 자료집의 발간은 진화위의 출범과 더불어 사실상 중지되었다.

6) 이 글은 보고서의 세부적인 기술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제도의 형성과 실행, 구조와 쟁점

결과로 발간되었던 여러 보고서들을 정리하고, 여순사건 조사보고서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발간까지를 직권조사 의결과 조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사계획의 실행을 부각시켜 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여순사건 조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법률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구조적 환경, 진화위의 활동 현실,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여순사건의 사례가 갖는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과거사 진상규명의 성과와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성과 : 진상규명 보고서

과거사 청산은 과거사의 상흔들을 현재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환경에서 치유하는 것이며, 유사 상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장치의 구축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과거사 청산 기구들의 설립 근거가 되었던 법률들의 조항에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이유는 이를 위해서이다. 과거사 청산 작업은 과거사의 발생적 특성, 피해자들의 요구 내용과 형태, 세계적 동향과 성과, 선 진행된 과거사 청산 작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적 이해와 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법률과 대통령 지시로 설치되었던 과거사 청산 기구들은 활동 분야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일반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성취할 목표에 입각하여 보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피해보상’ 유형들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들이 상호 결합되어 있기도 했다.

이 유형들은 성과를 결산하는 방식과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명한 진상을 수록한 ‘보고서’⁷⁾ 발간은 정치·사회적 이목을 끌었고, 이를 사회화 하는데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阿部利洋, 2008: 121~123). 보고서 발간은 ‘진상규명’에 역점을 둔 과거사 청산에서 특히 중요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의 과거사 기구들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활동으로 종료했다(Hayner, 2008: 47). 한국의 과거사 청산에서 진상규명이 주요 목적이 아닌 기구들이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정치·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환기·전환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보고서 발간이 필수였다.

등 중점위적 수준에서 고찰한다.

7) 이 글에서 ‘보고서’는 과거사 청산 기구들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와 달리 규명한 진상을 수록한 책자를 의미한다. 이 기구들이 발간한 책자의 제목에 ‘보고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도 했으나, ‘보고서’로 통용되었다.

과거사 기구들의 진상규명과 보고서 발간은 사법부의 재판에 의한 진상규명의 한계와 역사 왜곡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의미부여 되기도 한다(Rigby, 2007: 6~7). 그래서 진상을 수록한 보고서는 공신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과거사를 재구성하는데 권위가 있는 근거가 되었다. 과거사 기구들은 규명한 진상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阿部利洋, 2008: 123). 공청회 개최는 보고서의 성과를 사회화하는 주요 과정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보고서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널리 파급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였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은 정치·사회·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들 혹은 현재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따라 선호를 달리했다. 환원하면 언론과 방송이 기사화하지 않은 과거사의 진상규명 내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에는 과거사 청산의 발단, 과정, 결과 등이 수록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실종자 진상규명 국가위원회」가 발간했던 최종보고서 『눈까마스(Nunca Más)』는 길가의 가판대에서 판매되어 그 효과를 최대화 했지만(Hayner, 2008: 81~82), 한국의 경우는 한정판으로 발간되어 특정 기관들과 특정인들에게만 무상 배포되었다. 한국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보고서가 처음 발간되었던 것은 1960년이었다. 6·25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의 집단죽음을 규명할 목적으로 국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가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6월 21일 개최된 제42차 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⁸⁾ 이 보고서는 사건 조사에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지만 조케라의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보고서 작성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2000년부터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가 발간했던 보고서가 사실상 국회 산하에 구척 사례라고 보고순 있다.⁹⁾ 의문사위원회는 보고서의 구조와 수록할 내용을 고민했고, 선례를 해외에서 찾았다. 의문사위원회가 2002년 5월에 발간했던 『외국진실위원회 보고서 권고사례 및 관련 자료』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책자가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서 구성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쳤는가는 알기 어렵다. 의문사위원회의 내부용으로 제작되었던 이 책자는 진화위를 통해 보다 확대된 형태로 재 발행되었다.¹⁰⁾

의문사위원회 보고서는 기 공표된 진상규명 내용을 보완하여 확정 수록하는 것과 활동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국

8)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피살자의 인적정보, 가해기관, 피살시기, 피살장소, 피살경위 등이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전갑생(2007), 이강수(2008), 김상숙(2011)이 있다.

9)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서 발간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보고 등)와 제30조의 2(조사보고서의 발간)에 의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0) 진화위는 의문사위원회가 발간한 위 책자에다가 자체 번역 자료를 첨부하여 2008년에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가가 해야 할 조치들이 권고되어 있다. 한편 2003년에는 1960년 이후에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첫 정부 조사 보고서였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후 과거사 청산 작업은 규명한 진상을 수록한 보고서의 발간이 당연히 되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이 발족했던 과거사 관련 기구들도 모두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기구들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규명한 진상을 공개한 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¹¹⁾

그러나 진화위의 조사보고서 발간 환경은 이와 달랐다. 진화위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운영을 지속하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조사보고서’를 발간했고, 기구를 해산하면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진화위는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매년 2회에 걸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었으나, 진실규명 내용은 그 해 하반기 보고서에 처음 수록되었다. 그리고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내용은 2007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수록되었다. 조사보고서는 진화위 운영의 특성상 종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두터워졌는데, 활동 종료 직전에는 각 8권과 1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와 같이 종반기에 보고가 집중됨으로 인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여부에 의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김태우, 2011: 128). 종합보고서는 마지막 조사보고서와 거의 동시에 발간되었다. 총4권으로 구성된 종합보고서는 제1권에는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그리고 종합 권고, 제2권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제3권에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권에는 인권침해사건이 각각 수록되었다.

나. 「여순사건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특성

진화위는 대체로 사건 또는 지역을 단위로 진상규명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부역혐의사건 등과 같은 일부 사건들은 다수의 관련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순사건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위의 사건들은 비록 단일 사건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각 다른 사건들로 분리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들이 단일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순사건의 경우는 위의 사건들과 크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여순사건은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들로 확산되었고,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참여 혹은 개입되었던

11) 국정원에서 발간했던 종합보고서는 두 기구가 발간했던 종합보고서 형태들과 차이가 있었다.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것과 더불어 시대상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글들도 함께 수록했다.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정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였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일컫는 것이다.

진화위는 2007년 3월 6일에 개최된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이때만 해도 여순사건이 단일 보고서로 발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2008년 7월 8일 여순사건에 관한 첫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보고서 명칭이 「구례지역 여순사건」이었다. 이후 2009년 1월에 「순천지역 여순사건」, 2009년 11월에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2010년 6월에 「여수지역 여순사건」 보고서가 각각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여순사건이라는 제목을 갖는 총 5개의 보고서가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여순사건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지역들을 통상 전라남도 동부 6개 시도(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라고 했는데, 광양 지역에 관한 보고서는 누락되었다. 그러나 광양 지역에 관한 보고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광양 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기록한 보고서는 5개로 확인된다.¹²⁾ 이 보고서들은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의 다수가 여순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여순사건에서 파생했던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도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로 분류할 수 있다.¹³⁾

이렇게 보면, 여순사건에 관한 보고서의 수량을 가늠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여순사건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의한 피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합보고서도 이러한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¹⁴⁾ 여순사건은 종합보고서 제3권 제3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개괄적 사건 전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종합보고서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여순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 기술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보고서에 수록된 여순사건은 진실규명 이전에 연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생산했던 연구와 보고서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그르지 않다. 그나마 성과를 찾는다면,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추정된 희생자 수, 지역별 추정 희생규모, 지역별 희생자 수, 희생자 성별 분포, 희생자 연령별 분포, 희생자 직업별 분포를 정리한 통계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표들은 여순사건 이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망라한 것이다. 따라서 여순사건만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화위의 보고서들을 근거로 여순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고,

12)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1)」(2008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2009년), 「전남국민보도연맹사건(1)」(2009년), 「광양, 곡성, 구례, 담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2010년),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010년)이 이에 해당한다.

13) 조사보고서에서 여순사건이 언급된 지역들을 분류하면, 약 26개 지역으로 추정된다.

14) “사건의 원인과 발생 배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순사건은 전남 동부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재소사 희생사건,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등과 연관된다”(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70).

오랜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보고서 작성자들이 다수였고, 이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조사 보고서들이 큰 틀과 구조는 준수했으나, 각 보고서들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다른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들과 달리 여순사건이 미완의 진실규명 상태에 놓여 있으며, 단일 사건으로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직권조사의 의결과 조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여순사건의 범위

가. 직권조사의 의결과 조사계획서 작성

진화위는 여순사건의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105쪽 분량의 조사계획서를 만들었다. 조사계획서는 그간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생산한 정보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계획서는 진상규명이 최소 6개 시도를 망라해야 하며, 파장이 미쳤던 그 외 지역들에서 발생했던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들도 포괄하는 것으로 입안되었다. 조사 방침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자의 관련성과 죽음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의문점들과 여순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이 진화위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자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직권조사 의결과 조사계획서 확정에 앞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주목해야 한다. 여순사건의 직권조사 개시일은 2007년 3월이었으나, 이에 앞서 조사가 착수되었기 때문이다. 종합보고서는 구례지역 여순사건은 2006년 10월 31일, 순천지역 여순사건은 2006년 7월 25일,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은 2006년 10월 10일, 여수지역 여순사건은 2007년 1월 28일에 각각 조사가 시작되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232~235). 그리고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2007년 3월 6일, 전남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2007년 2월 28일이 조사 개시 일이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조사는 직권조사 결정 이전에 시작되었고, 전반적인 사건 규모와 체계적 진실규명을 위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화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효력을 담보하지 못한 의결이었고, 조사계획서는 참고용에 불과했다. 진화위는 직권조사 결정 이전의 조사 방침으로 사건조사를 실시했고,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순사건에 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었던 「구례지역 여순사건」은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유발했다. 보고서는 진실규명을 분할하여 발표한 이유를 “타 지역 여순사건과의 관계, 지역사회 및 관련 유족의 진실규명 노력, 유해 발굴 사업과의 관련성, 사건 규모,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b: 852). 이 글귀는 그간의 진화위의 활동을 이해시키는데 불충분하고, 관련자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점은 진상규명운동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더 충분한 설명과 근거 제시가 필요했고, 진실규명 결정을 주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의 수반되어야 했다. 그러나 진화위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간담회나 추모제 등에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충분하게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해도, 만회의 기회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첫 진실규명 결정 직후에, 진화위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였다.¹⁵⁾ 이 행사에서 ‘구례지역 여순사건’ 보고서를 논평했던 글은 직권조사의 충분성, 진상규명한 내용,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자료, 위원회 내부와 외부의 소통과 관계 맺기, 서술 방식 등에 주안점을 두고 발표되었다(김득중, 2008). 이 글의 내용들 일부는 진화위의 출범과 조사 착수 즈음에 개최되었던 토론회와 학술행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이기도 했다.¹⁶⁾ 진화위 관계자들은 이 글의 평가에 대해 법률과 제도의 한계로 시행할 수 없는 점들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진화위가 학술행사의 평가를 진정성을 갖고 수용했다면, 이후에 발표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 결정들은 동일한 문제의 발생 억제와 한계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직권조사 결정과 조사계획서 작성 의도를 복기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위는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나. 여순사건의 범위 설정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가장 큰 난점은 시·공간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발한 시점은 명확하지만, 종료 시점과 상황이 전개되었던 지역들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학계와 시민사회도 이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여순사건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고, 분류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기준들을 확정하기가 난해하여 여순사건 유족회들의 구성도 다양성을 띠고 있었다. 즉 여순사건 유족회에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서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류했던 사건들(교도소 재소자

15) 이 발표는 2008년 7월 17일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학술심포지엄”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평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술심포지엄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주제로 진화위가 개최했던 유일한 공식 행사였다. 외부 학술행사나 토론회 등에서는 진화위 구성원이 참석하여 발표 혹은 토론을 하기도 했으나, 이를 직접 주관하여 소통하려는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16) 홍순권(2006)과 이춘열(2007)의 우려는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 그러므로 진화위의 성과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점들이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고, 해소할 수 없었다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희생사건, 보도연맹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들과 6·25전쟁 발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서 발생한 피해자들 유족들도 가입되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순사건이라는 사건명이 함의하는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유족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순사건은 특정한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때로는 6·25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의 죽음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명명되었다.¹⁷⁾ 이러한 점들이 진상규명운동에서 쟁점화 되지 않았던 것은 차이보다는 포괄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렵사리 형성된 진상규명운동의 의지를 냉각시킬 수 있었고, 애써 이룬 유족회들의 결집력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즉 여순사건의 종기 설정과 지역의 규정은 진상규명운동의 목적과 영향력에 크게 지배받고 있었다.

여순사건에 관한 논문과 글들은 사건 발발과 전개, 반군의 활동, 토벌 작전 등에 초점을 두었고, 두 가지의 시간적 범주를 중시했다. 첫째, 사건이 발발했던 1948년 10월 19일부터 토벌군이 여수시를 점령했던 10월 27일까지의 국면이다. 정부는 여수시를 재점령하면서 여순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발표했는데, 토벌군과 반군 및 가담자의 대치선이 지리산과 백운산 등과 같은 산악지대 인근으로 이동하여 재형성되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악지대의 반군(빨치산)을 토벌하는 작전이 전개되는 한편, 이들을 지원했던 혹은 이들에 의해 동원되었던 이른바 부역자들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분류하고 처벌하던 국면이다. 시간적 범위 논쟁은 바로 두 번째 시기를 언제로 규정해야 하는가에서 주로 발생했다.

<표 1> 여순사건 관련 토벌작전 시기와 토벌군 편성

작전 시기	토벌군 편성	주요 지휘관
1948. 10. 30 ~ 1948. 11. 30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원용덕, 김백일
1949. 3. 1 ~ 1949. 4. 18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정일권, 원용덕
1949. 7. 13 ~ 1949. 9.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유격대	김상봉
1949. 9. 22 ~ 1950. 4.	지리산전투지구경찰대(남원)	최치환
1949. 9. 28 ~ 1950. 1. 15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김백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5회 이상의 대규모 토벌군을 편성했다. 토벌작전은 공백기도 있었으나, 195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호남 일원에 내려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1950년 2월 5일이었고, 토벌작전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

17) 대표적인 사례가 순천 지역이다.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의 회원들은 6·25전쟁 기간에 발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다수 가입해 있다.

었던 것은 1950년 4월이었다. 그런데 이를 중시하여 토벌작전 종료와 여순사건 종료를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정부와 진압군의 관점만을 수용한 것이다. 산악지대에는 빨치산이 잔존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가 없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여순사건의 종결 시점을 규정하는데 반군과 가담자들의 활동과 토벌작전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준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최대 시간적 범위는 6·25전쟁 발발이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구 빨치산’이 등장했고, 이들의 일부가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활동을 지속했으나,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 국면이 전개되었던 시기라고 할 것이다.

<표 2>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의 시간적 범위

발표 형태 혹은 조사보고서	발표 시기	시간적 범위
제39차 전원위원회 회의	2007. 3.	1948년 10월 19일 ~ 1950년 9·28수복 이후 10월
구례지역 여순사건 보고서	2008. 7.	1948년 10월 말 ~ 1949년 7월
순천지역 여순사건 보고서	2009. 1.	1948년 10월 말 ~ 1950년 2월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보고서	2009. 11.	1948년 10월 말 ~ 1950년 6월
여수지역 여순사건 보고서	2010. 6.	1948년 10월 말 ~ 1949년 8월
『종합보고서 III』 제3장	2010. 12.	1948년 10월 19일 ~ 1950년 10월

그러므로 여순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이 포괄되는데, 지역과 개별 사건 등으로 분열되면서 시간적 범위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진화위가 여순사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하면서 발표한 시간적 범위까지 누적한다면(<표 2>), 여순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6회였다.

진화위의 공식 발표와 조사보고서 그리고 종합보고서가 규정한 여순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제각각이었다. 가장 넓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것은 직권조사를 결정할 당시와 종합보고서였다. 시간적 범위에 대한 차별성은 지역별 조사보고서 내에서도 발생했다. 조사보고서들이 설정했던 여순사건의 종결 시점은 모두 달랐다. 빨치산 활동이 지속되었던 지리산에 인접해 있던 구례지역 여순사건의 시간적 범위가 가장 짧고, 다음으로 여수지역이 짧았다. 반면, 당시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산악지대도 아니고 빨치산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도 아닌 보성과 고흥의 시간 범위가 가장 넓

었다. 이것은 각 지역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을 수도 있으나, 신청된 사건들에 입각하여 종결 시점을 확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각 보고서들은 종기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권조사를 의결할 당시 수립되었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관점이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보고서는 다시 직권조사를 의결할 당시의 시간 범위에 의거하여 여순사건을 요약했다. 따라서 종합보고서는 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시간 범위의 사건들까지 여순사건에 포함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공간 범위는 여순사건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공간성은 이 사건의 파장이 미친 지역과 6개 지역 외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포괄 범위에 관한 것이다. 여순사건의 공간성에 대한 파악은 지금까지 발간되었던 조사보고서들을 낱알이 확인하고 정리할 때, 어렵듯하게나마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들은 이러한 공간성을 행정구역 단위라는 편의성과 유족회가 구성된 지역 단위의 민원 강도에 따라 구분했고, 진실규명 활동이 미비한 지역들은 은닉시켰다.

종합보고서는 여순사건의 지역별 진실규명과 개별화한 수많은 죽음과 사건을 총괄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종합보고서는 진실위의 활동 성과인 조사보고서들의 내용을 담지 않았고, 지역별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하여 여순사건의 조사보고서들로는 사건 전개에 따른 지역들의 관계와 공간 범위 그리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의 상관성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4. 구조적 환경과 활동의 현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

가. 구조적 환경 : 법률의 제약과 시각차 그리고 자기 검열

여순사건을 비롯하여 진화위가 발표했던 진실규명 결정에 관한 토론이나 평가 등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다. 진화위 구성원들은 시민사회나 유족 그리고 연구자 등이 제도 영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리는 진화위의 조사와 진상규명 결정 그리고 조사보고서 발표 등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유족,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민간인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법률에 수록된 정의들은 명확하지 않았다.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학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에서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규

정했다. 그리고 제2조의 다른 조항들에서는 가해자가 ‘적대시하는 세력’인 경우는 ‘학살’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사건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이견 대립은 법률 제정에서 발생했던 불비(不備)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면 다양한 반론과 공박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법률 검토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을 가늠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진화위는 가해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대해 ‘희생’으로 규정했다.

진화위와 시민사회 및 유족들의 입장차는 여순사건 조사 과정에서 뚜렷해졌다. 진화위는 사건 조사 대상과 범위 확장을 망설였던 반면, 시민사회와 유족들은 그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무엇이 밝혀지리라 기대했다. 이는 진화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시각차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유족, 시민사회, 학계는 여순사건 조사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진실규명 의결만을 기다려야 했다. 이것은 오해와 갈등을 증증시켰고, 신뢰 축소와 지지 철회 등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들이 발생했던 근본 원인도 법률의 규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진화위는 법률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7항의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41조(비밀준수 의무)의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를 엄격한 자기 검열로 받아들였다.

진화위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족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인적구성이 갖는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 역시 법률의 제약을 받았던 것인데, 조사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다수의 인력들이 진화위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이는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였다(정근식, 2010: 98~99). 인적 구성의 특성은 조사 지연뿐만 아니라, 관료화와 형식주의를 양산 및 유포했고, 기구의 체질을 변화시켰다. 진화위가 제정했던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진화위 규칙 제3호, 2006. 1. 24. 제정)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에 따르면, ‘조사업무 중 일부를 …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진화위, 2010: 271), 조사연구 용역사업 몇 건을 제외하면 조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례들을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진화위 조사관들은 여순사건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와 그 그 그로부터 자료와 정보는 수집해왔으나,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와 확보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진실규명 의결 이전에 다른 사건의 내용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료의 학술적 활용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진화위의 소통 단절은 더욱 심각해졌고, 자기 검열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학술·연구단체들은 진화위를 블랙홀과 같은 조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진상규명운동에서 형성되었던 관계들은 소원,

불신, 단절로 변해갔다. 수차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전락했고, 조사관은 민원 해소 관료로 자리매김했다. 이 관계는 진화위를 출범했던 근본 목적의 달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통제하게 했다.

그리하여 여순사건을 포함하여 과거사 상흔을 치유한다는 진화위의 대의는 사법적 판결을 위한 경유지로 전락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을 주도했던 다수의 세력들이나 법률을 제정했던 관료들의 의도와 달리, 사법부 재심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되었다. 만일 진화위법이 국가 보상과 배상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와는 크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야 했다. 결국 법률적 한계로 인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인 상태가 되었다. 여순사건도 2011년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국비와 행정력 소비 그리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 지속 등으로 이어졌다. 진화위법은 기존 과거사 위원회들에서 차용한 조문들도 다수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보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웠는데(안병욱, 2006: 10), 이런 한계들이 중반과 중반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나. 활동의 현실

진화위가 법률과 제도적 한계와 제약 속에서 운영되었고, 이것이 진실규명 보고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여순사건에 관한 보고서들에 대한 검토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여순사건 보고서들에 적시된 내용과 근거로 사용된 자료들 그리고 사건의 전개와 죽음에 관한 상세한 확인과 고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여순사건에 관한 종합적 조사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었다면, 중요하게 파악했어야 할 지점들을 고려하여 활동의 현실과 맹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과거사에 관한 보고서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역점을 둘 점은 사건의 발단과 배경이다. 더욱이 여순사건은 정부와 공식 담론에서 오랫동안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및 기록되어 왔기에(정지환, 2001),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멀리는 해방 정국부터, 가깝게는 한반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관한 미군정의 정책과 활동, 국가의 성격과 권력 장악을 위한 다양한 대립과 격돌, 그리고 무수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여순사건 보고서들이 이에 관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누락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 맥락은 생략되었고, 지역에서의 상황 전개를 간략하게 언급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여순사건과 부 수립결합 또는 연결되군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의 배경과 기계적으로 병렬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순사건 보고서들은 제주4·3사건 진압에 반대하는 군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내용들은 여

순사건과 본론에서는 연구자들이 이미 밝힌 내용과 신청 사안들에 의거해 여순사건의 전개와 흐름들을 기술했다. 그리고 여순사건에서 미국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극히 간략화 되었다. 이것이 여순사건 진실규명의 전부이자 실체였고, 조사보고서의 대부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죽음의 근거를 입증하는 과정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둘째,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와 근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순사건은 진화위 출범 이전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생산 또는 보관한 일부 자료, 신문과 잡지 등 언론 매체, 미군정이 생산한 자료, 수기와 자서전 그리고 증언 등에 의해 주로 조사·연구되었다. 그런데 진화위의 여순사건 보고서들에 수록된 자료 목록들을 보면, 대체로 이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찰국 등이 생산했던 자료들이 일부 눈에 띄지만, 상당수의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활용된 것들이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면담 또는 증언은 다수 조사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순사건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이 신청인과 참고인의 면담과 증언 자료들에 크게 의존하여 진실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도 새로운 자료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에 의구심을 심어준다. 그나마 어렵게 발굴된 자료들은 조사보고서 작성에만 일부 이용되었고, 역사 자료화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사회가 향후 진행할 진상규명 작업과 연구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법부의 재판에도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후 보다 치밀하고 상세하게 사건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국가의 관리체제 내로 재 통합됨으로 인해 진실의 확장과 사건의 재구성 기반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셋째, 여순사건은 자기 완결성을 갖춘 단일 보고서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여순사건에 관한 지역별 보고서 발간이 불가피했다면, 종합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했다. 즉 각 보고서들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여순사건의 전반적 양상과 형상을 구성하고, 인식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소자 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집단적 죽음들과 더불어 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들¹⁸⁾이 어떤 상호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했다. 이러한 점들은 진화위 법률이 지닌 불비와 기구 운영의 한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순사건이 그 시대에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를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진화위의 여순사건 보고서가 국가가 승인

18)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점금 상해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조사와 진상규명으로 보면, 진상을 규명할 사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례들을 모두 개별 사건으로 처리한다면,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남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민간인 사망자 명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죽음을 앞으로 어떻게 추모할 것이며, 죽음의 의미를 반추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임을 의미했다.

넷째, 진실위에서 발간했던 모든 조사보고서들을 총괄하여 여순사건을 재구성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에 대한 기록과 보고서들이 그것이다. 여순사건과 다수의 사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사건 전개에서 반군 및 가담자와 빨치산에 의해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군경 및 민간인 전투부대와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순사건의 특성과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복합적 사건 전개와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에 입각하여 조사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순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며, 역사적·사회적 갈등 해소와 완화 그리고 화해 방안을 도출하는데 실질적 의미와 효과를 갖게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다. 시민사회의 인식과 대응

여순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유족, 시민사회 그리고 연구자 집단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지만, 남겨 놓은 중요한 미해결 과제들은 근심과 난감함으로 다가왔다. 진실위의 다른 조사보고서들에 비해 여순사건은 이러한 점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족들은 개인 또는 단체 차원에서 의견과 문제를 제기했다.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시민사회와 함께, 2008년에만 세 차례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간담회, 학술행사, 위령제 등은 유족들이 발언하고 의견을 표방하는 주요 장들이었다. 이들의 주된 입장은 조사보고서가 ‘학살’임을 보다 명백하게 규정할 것, 조사보고서의 발표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던 원인의 해명, 유족들을 배제하고 조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힐 것, 그리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진상을 분명하게 밝힐 것 등이었다.¹⁹⁾

한편, 여순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원화되어갔다. 시민사회와 유족들 내부에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점점 차이가 선명해졌다. 전반적으로 보면, 유족과 신청인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의의를 부여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유족과 신청인이 진화위 출범 당시에 가졌던 기대와 바람은 진실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서 등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점점 축소되었는데, 이것이 유족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실익 추구로 활동 방향을 선회하도록 했다. 진실규명 결과를 받은 유족과 신청인

19) 이상의 내용은 2008년 11월 6일 개최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여순사건 유족 장경자의 발언 내용인데,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은 ‘국가 보상’으로 활동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했고, 종합적 진상규명, 미신청자 문제, 자료 공개, 위령사업 등에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선 진행되었던 사건들이 취했던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행보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분할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했던 기준이 되었던 ‘지역’과 ‘사건 범주’에 따라 각각 독자 행보를 취했다. 이 과정은 여순사건을 매개로 형성되었던 사회운동성이 탈각하고, 이익집단으로 정체성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²⁰⁾ 진화위의 조사 보고서들이 여순사건을 매개로 형성되었던 공동체에 균열과 반목 그리고 부정적 해산을 유도했던 것이다(정호기, 2010). 그리하여 진상규명운동으로 어렵사리 형성되었던 현대사의 피해자 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공동체의 분화 조짐들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진실규명 결정이 사회운동의 구조와 구성원들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진화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휴지기를 갖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했던 일부가 진화위의 구성원들로 합류했고, 중요한 의사 결정 단위에도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규명하고자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었다. 진화위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응과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주목할 지점이다(정근식, 2010: 104). 여순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보다 가중되었다. 진화위가 활동하던 시기에 민간부문에서의 여순사건에 관한 모든 조사가 중단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진화위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논평은 한 차례 뿐이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 발발 제62주기가 임박했던 무렵에 발표했던 「의견서」가 그것이었다.²¹⁾ 진화위의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들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제기와 쟁점화가 꾸준히 있었으나, 공식화된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발표는 진화위의 사건 처리 완료일 하루 전인 2010년 6월 29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견서가 조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로 기 발표되었던 조사 결과들이 거의 변함이 없이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었고,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은 종료되었다.

의견서는 여순사건과 관련한 진화위의 활동과 조사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후 개인들 혹은 소집단들 차원의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공식화한 것은 없었고, 해결된 것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이러한 점들은 갖가지 혼란을 초래했다. 여러 단체들이 정체성을 달리하여 갖게 되었고, 어렵사리 형성 및 유지되었던 연대 관계를 해체시켰다. 이는 관련자 및 관련단체들의 결속력과 영향력 축소와 쇠퇴로 이어졌다.

21)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2010년 10월 9일에 “진실화위원회 「여수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의견”을 공개했다.

의견서는 먼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지닌 긍정점을 간단하게 기술한 후, 이것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① 직권조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중심의 형식적 조사만 진행, ② 여순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 및 적대 세력사건, 고문 후의 부상자, 만성리 형제묘 사건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진행하지 못한 점, ③ 여순사건을 매개로 형성되었던 지역 공동체와 역사 공동체의 파괴, ④ 관련자 및 관련단체들과 불 소통, ⑤ 재심사유 및 인권침해사건으로 이관 분류해야 할 사건들을 각하 결정, ⑥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지 않고, 관련자 및 지역자치단체에 우편통보만 하여 효과를 축소한 점 등이었다.

여순사건에 관련된 시민사회와 일부 유족들은 2010년 추모행사 기간을 계기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운동을 부활시켰다. 진화위법의 제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특별법 제정운동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재개된 것이다. 이들은 과거사 관련 통합입법에 참여했던 성과가 없지는 않으나,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대다수의 과거사 관련자들이 진상규명운동에서 후퇴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와 사법부의 보상 재판에 관심을 두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여순사건이 과거사 청산에서 다소 이질적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바탕에는 유사 사건으로 비유되곤 했던 제주4·3사건, 거창사건, 함양·산청사건, 노근리사건 등과 큰 차이로 마무리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5. 맺음말

2005년 12월 진화위의 출범은 과거사의 고통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비추어졌다. 진화위법이 심각한 문제와 한계를 지녔고, 과거사 청산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관계와 사회적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진화위는 보수 진영 또는 가해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다.²²⁾ 이는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으로, 어렵지만 감내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났다. 진화위가 활동을 개시하고 일정 시점을 경과하면서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지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어쩌면 진화위는 정치와 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과거사 청산 작업을 수행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진화위는 4년 6개월 동안 다수의 조사보고서들과 종합보고서를 생산했고, 국가에 대한 권고들을 남긴 채 해산했다.²³⁾ 이제 진화위 활동의 주요

22)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수진영의 부정적 평가는 이어졌다(김정우, 2010).

23) 진화위는 2006년 하반기 조사 보고서의 마지막에 ‘과제’를 수록했는데, ① 조사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결과물은 이들 조사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그러므로 보고서에 관한 분석과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글은 진화위의 조사보고서들에서 여순사건을 명기했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고찰했다.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다른 과거사들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60년 전에, 2년여에 걸쳐 동안 남한 곳곳에서 전개되었던 여순사건을 퍼즐을 맞추듯이 구성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진화위의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는 이중적 의미를 가졌다. 하나는 더 많은 사실의 발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밝혀낸 또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여 재구성하고 입증하는 것이었다. 진화위는 이와 같은 진실규명 결과물에 국가의 공신력과 권위를 부여했다.

여순사건 보고서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여순사건들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상 별개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은 다른 과거사들에 비해 단일한 구성과 자기 완결적 보고서 발간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직권조사 의결과 조사계획서 작성은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절차와 행동이었다. 게다가 각각의 조사보고서들이 조율되지 못하고, 쟁점들도 규명되지 않았다. 시간적 범위 선정에 대한 원칙도 명확하지 않고, 사건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들도 시민사회와 학계가 규명했던 경계선을 거의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들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지역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했는가를 밝히지 못했고, 각각 사건과 지역에서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순사건의 실체는 오히려 불분명해졌으며,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는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 바가 컸다. 특히 법률의 제약과 구속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화위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질과 신념 너머에 있는 장벽이었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동감과 이 일에 대한 전문성이 형성되지 않은 관료들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사고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했다. 구조적 한계는 진화위와 민간부문 사이의 문턱을 높이고, 거리를 확대시켰으며, 다양한 소통과 논의에 의거한 과거사 청산 기반의 와해로 이어졌다. 여순사건의 경우, 진화위와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자 사이의 간극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었고, 급격히 냉각되었던 것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었다. 또한 법률의 불비는 힘들여 규명한 진실이

단체 지원 예산 확보, ②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방안 마련과 협조체제 강화, ③ 피해자들의 미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 ④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위원회 기본법 개정 추진이었다(진화위, 2007: 448). 진화위가 이 과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한 후, 그 대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부의 보상 관련 재판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보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서 의의를 찾게 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로 귀결되었다. 또한 진실규명 조사보고서의 효과와 영향은 사회구성원의 인식 재구성, 사회적 및 개인적 기억의 수정, 그리고 이를 근거하는 증거와 자료들의 생산과 배포가 동반될 때 비로소 제대로 발현된다고 할 것인데, 이 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법률의 불비로 인한 진화위의 구조적 제약은 법률 개정 작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좌절되었다. 그런데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들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는 법률의 제약과 더불어 진화위의 운영 및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중첩된 산물이었다. 법률의 제약과 관련성이 사항들은 진화위 운영과 활동 방침의 정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의 배경과 발단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사건 발발의 개연성에 대한 규명, 여순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입증 자료들이 향후 진실의 확산과 확장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여순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종합하고 총괄하여 단일 사건으로 재구성,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등을 포괄하여 사건의 전개와 확산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은 진화위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 필요성, 방향 등에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들과 의견들을 좌시했음을 잘 보여주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이너(P. B. Hayner)는 진실위원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기준들에서 “과정(process)”에 대해 다음을 지적했다. 진실위원회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대중이 얼마나 알도록 노력했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데, 공청회 개최 여부, 조사 전 단계에 모든 관련자들을 충실히 참여시켰는가 여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위원회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이었는가 등으로 세분된다(Hayner, 2008: 421). 이러한 측면들에서 보면, 여순사건의 진실조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시민사회와 유족 그리고 연구자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순사건은 여러 사건들과 지역들로 분화되었다. 진상규명운동이라는 공통 대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망은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차이가 심화되면서 대부분 해체되었다. 이제 국가 보상이 현실적인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각각의 조사보고서가 다르므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순사건을 둘러싼 여러 집단들 가운데 일부에서 진상규명운동으로 다시 연대의 틀을 모색하고 있으나, 진화위의 출범 이전에 비해 취약한 상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사 청산 제도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장 공통된 분모는 진상규명이다. 한국에서는 5·18민중항쟁의 제도적 청산을 필두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청산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국가는 1988년에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간주했고, 이에 근거하여 명예회복과 배에 그리고 기념사업 등을 진행했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순사건을 비롯하여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유형과 형태를 형성하는 기반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거사 청산의 흐름에서 보면, 여순사건의 제도적 청산은 진상규명을 흐름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과거사의 제도적 청산과 피해자 및 시민사회의 기대 사이의 간극이 충족되지 못하면,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참고문헌>

- 김동춘(2011a),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 성과와 과제」, 『역사와 책임』 창간호,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 정의.
- 김동춘(2011b),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며」, 『황해문화』 72.
- 김동춘(2012), 「지연된 진실규명, 더욱 지연된 후속작업」, 『역사비평』 100.
-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 김득중(2008),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학술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김상숙(2011),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성 :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02.
- 김정우(2010), 「진실화해위엔 진실도 없고 화해도 없었다」, 《월간조선》 8월호.
- 김태우(2011), 「진실화해위원회의 미군 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연구』 21.
- 노영기(2005), 「여순사건과 구레 : 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8.
- 노영기(2008),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병욱(2006), 「과거청산과 진실규명」,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종철(2000),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 『여순사건 제52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
- 여순사건조사위원회(2006), 『여순사건 순천지역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
- 여수문화원(1997), 『여수문화 : 14연대 반란 50년 결산집』 12.
- 여수지역사회연구소(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
- 여수지역사회연구소(1999), 『여순사건 자료집』 2.
- 여수지역사회연구소(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
- 이강수(2008),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 「조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5.
- 이선아(2011),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과 그 영향 : 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20.
- 이영일(2010), 「여순사건의 정치·사회적 영향과 진상규명의 현주소」, 『한국의 과거사와 민주화(학술행사 자료집)』, 제주4·3연구소.
- 이춘열(2007), 「고양 금정굴 사건 : 미완으로 끝난 무리한 조각 맞추기」, 『진실화해위의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 과제 : 토론회 자료집』,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범국민위원회.
- 전갑생(2007), 「1960년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

이드 연구』창간호.

정근식(2007),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현황과 과제」, 『제노사이드연구』 창간호.

정근식(2010), 「진실규명과 화해, 어디까지 왔는가?」, 『황해문화』 67.

정낙원(1962), 『여수항토사』, 여수문화원.

정석균(1989),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 여·순반란군 토벌을 중심으로」, 『군사』 19.

정지환(2001),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여순사건 53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정호기(2010), 「과거의 재조명에서 시민주체의 형성과 연대 그리고 와해」, 『사회와 역사』 8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8a), 『해의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I, I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8b), 「구례지역 여순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9), 「순천지역 여순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a), 「보성·고흥순천지역 여순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b), 「여수지역 여순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c),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d),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최정기(2008), 「여수지역의 해방 3년사」, 『지역사회연구』 16-4.

한성훈(2010),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권고사항의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3.

허상수(2011),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1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홍순권(200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방향과 원칙」, 『100만 민간인학살 어떻게 밝힐 것인가? :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홍영기 책임편집(2001), 『여순사건자료집 I』. 선인.

Hayner, Priscilla B., 2002. Unspeakable Truth : Confronting State Terror. Marsh Agency Ltd. 주혜경 역.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Rigby, Andrew(2001), Justice and Reconciliation : After the Violence, Lynne Rienner Publishers. 장원석 역(2007), 『과거사 청산의 비교정치학』, 오누리.

阿部利洋(2008), 『眞實委員會という選擇』. 岩波書店.

여순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에 대한 소고(小考)

이 영 문(이음병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 여순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개요

1) 역사적 사건

한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집단을 죽이는 행위를 인간학살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 역사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후의 인간학살의 특성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위로 커지고 있고, 희생자의 범위 또한 커지고 있으며, 학살에 사용된 기술이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살의 동기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생기는 정신적 외상의 정도와 질병 양상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 사회의 사회적 사건들에 해석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제시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사건의 결과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한 범위와 정도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정신적 외상에 대한 인간반응을 유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유방안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사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신건강 해석의 부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왕따 현상,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사회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늘 반복적인 국가 및 매스컴들의 학교 관리책임의 변을 듣게 된다. 모든 학교에는 학원폭력 추방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이는 실종되고 만다. 결국 몇 명의 폭력 가해자만이 처벌되는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 우리 내부에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다수의 안위를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당연히 가장 힘없고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쏠리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86년에 뉴욕시 페리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도 똑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었다. 당시 43세의 쿠바난민 출신의 홈리스 환자는 환청에 의해 순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며칠전 이미 이 환자는 뉴욕시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입원실 부족으로 인해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홈리스 상태로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의료보험은 상실되었고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우선 환자 자체와 시립병원의 직원교육 수준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갑자기 홈리스들의 응급실 방문이 50%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뉴욕 외곽의 정신병원에 입원환자 또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과연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매트릭스 모형에 따라 이를 대입시켜보자.

표 1. New York 총기 난사 사건의 이해

Dimension	(A) Input Phase	(B) Process Phase	(C) Outcome Phase
1) Country/ Regional Level	총기공급의 문제점 지역분포에 따르지 않 은 지나친 탈수용화	홈리스 정신건강정책의 부재	관료주의 실적주의
2) Local Level	입원병상의 부족	1)시립병원 직원의 응 급 치료서비스 부재 2) 표준 치료의 부족	안이한 응급구 조체계 운영
3) Patient Level	무보험	평가받을 수 있는 의 료기관 접근부재	환청에 의한 총기 난사

상기 표 1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는 입원병상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process phase에 초점을 두어, 뉴욕시 정신병원 전체 스태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과연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 정신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우선 무리한 입원병상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병상회전율이 유지되었는가 하는 지역 수준에서의 input phase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수준에 있어 몇 년째 방치된 홈리스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수준의 문제와 지역정신보건의 입원병상 문제를 덮어둔 채 매우 제한적인 조치만으로 끝나고 환자 및 보호자 수준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되었다. 결국 이 같은 미봉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3) 여순사건의 사회학적 의미

제주4.3항쟁이나 광주5.18민주화항쟁 등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중폭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일련의 민족사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사과와 경제적 보상,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내

부 환기를 통한 심리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전혀 경제적 보상과 물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대한 개요는 1948년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은 잘 낮지 않는다. 여순사건의 1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오늘도 스스로 피해자임을 밝히지 않는다. 아무런 보상도 없거니와 낙인효과가 생길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4) 심리적 외상과 PTSD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에게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외상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 사건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상황들과 이 사건을 대하는 주변인 및 사회적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때로는 외상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경험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심리 외상의 희생자들의 예후는 단지 외상 사건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상 전의 위험인자와 외상 후의 조치들, 즉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피해자를 처음 대하는 치료자 및 전문가의 태도 및 접근방법, 사회적 지지의 정도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외상 후에 추가되는 이차적 외상의 경험은 희생자들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정신질환의 한 특수한 형태가 정신의학 내부의 중요한 진단의 하나로 정식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을 전후해서 이다. 비록 1980년이 되어서야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로 트라우마 연관 진단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TSD 진단 이전에 존재하였던 트라우마 증후군으로는 '전쟁 피로증', '생존자 증후군', '전쟁신경증', '일과성 상황 장애'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질환도 존재하였다.

최근에는 아동폭력 관련 질환, 여성의 성폭력 관련, 자동차 사고, 사회적 재난 등과 연관된 새로운 형태의 트라우마 관련 질환들의 발병율과 재발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¹⁾.

1) 일반적인 PTSD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사고 12%, 전쟁 생존 병사 15%, 성폭행 피해자 69%, 강간피해 76%, 정치적 망명자와 난민 50%, 고문피해자 70%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출처 : 5.18 기념재단 :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연구보고서, 2006

2. 현대 역사와 대량학살 피해자 연구 현황

한국 사회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인한 고문피해는 1970년대부터 주요 성명서와 회고록, 사례집과 자료집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고문 근절과 고문 후유증 해결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시도되었다. 최근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문피해사례가 보도되는 등 고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량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량학살 피해자 연구

	조사 대상자수	PTSD 진단 가능군	비고
4.3 제주항쟁 유가족	70명	68.6%	이 중 약 53.3%가 우울증 동반
5.18 광주민주항쟁 유가족	291명	41.6%	인터뷰 version
여순사건 피해자 유가족	150명	평균 점수 35.8	비고 15점 이상 질환군 *30점 이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

이 연구들은 모두 양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기존 패널조사와 같은 방법론의 도입없이 단순 현황 파악에만 치우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65세-7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차를 두고 몇 %가 PTSD인가의 중요정보보다는 PTSD를 매개로 어떤 변화가 개인 혹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표 3. 정신건강 체크를 위한 설문지 구성안

기본 측정도구	항목 구분	비고
SSI(자살생각척도)	21문항 version	신뢰도 계수 0.87
PSS(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척도)	17문항 version	제주 4.3 연구 사용버전
BDI(우울증 척도)	21문항 version	자가 척도
BAI(불안척도)	19문항	자가 척도

아직까지 제주4·3항쟁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건강 실태에 관한 규모 있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김문두 교수가 발표한 “4·3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조사보고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70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²⁾ 이는 2006년 실시된 광주5·18 유공자와 가족의 PTSD 장애율 41.6%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이다. 또 이 조사에서 PTSD 장애를 겪는 4·3피해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있어 적절한 보호와 지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신건강의 문제성 범위

1) 역학연구 결과

5년마다 행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나타난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field 연구결과를 2012년 2월에 발표하고 4월에 최종 version을 제출하였다.

-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 유병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13.4%, 불안장애가 8.7%, 기분장애가 7.5%(주요우울장애 6.7%), 니코틴 사용장애가 7.2%, 신체형장애가 1.5%, 정신병적 장애가 0.6% 순서로 나타났다.
- 알코올 사용장애가 가장 흔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여성에서는 불안장애가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표준인구로 삼고, 유병률 수치를 이용하여 국내 추정 정신질환자수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1년 사이, 만 18세 이상 만 74세 이하에서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남자 2,071,597명, 여자 2,802,958명으로 총 4,873,160 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알코올,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경우 남자 1,098,847명, 여자 2,585,955명, 전체 3,681,943명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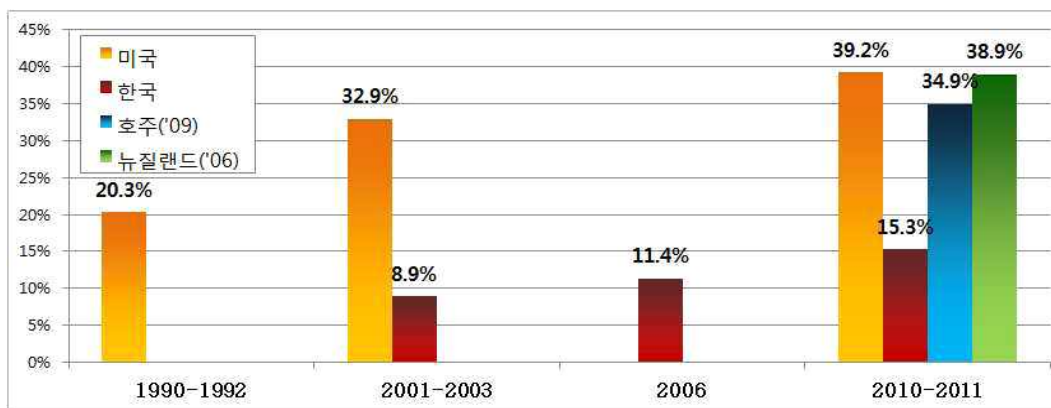
2)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심한편이라, 실제 질병빈도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역사회 일반성인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0%이었다.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

2) 김문두,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4.3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 제주4·3 63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2011. 4. 29.~30. 제주4·3평화재단

람의 15.3%만이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를 한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정신질환 이환자 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비교



*호주, 뉴질랜드: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단, 2001년의 경우 기분장애에는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만이 포함됨

*미국 :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2010)

2006년에 정신장애 이환자 중 의료서비스이용률이 11.4%였던 것에 비하면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한 비율은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 있는 사람의 11.9%에 지나지 않았다. 정신의료 서비스 사용률은 2001년 8.7%, 2006년 11.4%, 2011년 15.3%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정신건강의 문제성 : 자살문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결여

뒤르케임은 과도한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가 자살률을 높인다고 주장하였고, 이기주의는 개인이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가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한국 문화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라는 서구의 가치들에 의해 변환을 겪고 있다. 이 변환은 표면적인 개인과 사회의 유대를 깨뜨렸다는 것이고 세계시장과의 경쟁에 과도하게 노출된 개인은 결속력이 강한 전통적 공동체와 가족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개인과 사회의 강한 유대가 깨어질 때 무의미한 개인은 이기주의적 자살의 충동에 노출되며 또한 노년층에게 사회변환의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

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경제적 이유와 함께 문화의 변화는 그들의 자기 보존성 관리에 위협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된 핵가족화, 도시화로 대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의 붕괴,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의 심화, 정보화 등에 따른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빠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각종 위기와 기회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배제와 차별에 대해 개인적인 역동적 대응력이 크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노동조합의 결성, 높은 임금 인상률과 높은 생산성 향상률, 인구의 수도권 집중, 청년 인재의 수도권 대학집중 현상 등이 그 예로 나타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율, 청년 실업률, 대학진학률, 특목고, 사교육, 유학열풍 등은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의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한국은 시장, 자원, 에너지 등의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제정치와 경제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급속한 도시화는 밀집사회를 낳고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고학력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화의 변화가 또한 빠르다.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외부환경과 시스템(법과 제도) 및 문화와 리더십의 충돌이 격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 시스템, 리더십의 부조화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스펙트럼은 매우 크다. 가족 영역의 변화는 그 중 가장 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핵가족은 1970년 71.5%에서 2005년 82.7%로 증가하였다. 3대가족 등의 직계가족 비중은 동일 기간 중에 18.8%에서 6.9%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 편, 현재의 노년 세대는 전통적 가족관계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가족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왔으며 전통적 가족관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자식세대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타적 자살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봉양과 효라는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짐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여명의 증가와 더불어 닥쳐온 경제적 취약성과 전통가치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철학의 부재, 부풀어 오른 성과주의, 가족관계의 변화 등은 노년 세대의 자살에 대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4)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 요약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재정의 고갈,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등과 같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가재정 지출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현상과 예측이 매일 나오고 있다. 또한 소득양극화,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가난의 대물림, 사회적 배제의 일상화(학원폭력, 자정폭력, 왕따 현상 등), 근로빈곤층의 양산, 가족의 해체,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이 새로운

사회위기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황폐해지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산발적인 복지정책의 난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통합되지 못한 국가 재정구조는 각 부처의 이익에 부합되는 혹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많으나 이를 산발적인 사안으로 처리한 결과, 핵심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대응방식에 주목하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발상과 전문가들의 해묵은 해법만이 끼어 맞추기 식의 땀질용 보고서만이 남고 있다. 즉, 해결책은 매번 페이지 상에 나와 있으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4.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건강 차원의 해석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반응은 매우 중요한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하게, 세상에 대처하는 태도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피해자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경생리학적적인 새로운 지견,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법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실제로 우리의 삶 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넓혀가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 주요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나누었을 때 3가지 주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격적인 외상 기억의 반복적인 재경험(re-experience)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마치 현재에서도 그 외상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하철을 편하게 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재경험의 증상 때문이다. 이러한 외상 기억의 재경험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미지나 잔상의 형태로

일어나는 플래시백(flashback)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반복적인 악몽으로 거침없이 의식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대개 이러한 재경험은 원래의 외상 기억과 비슷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 비오는 날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비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그 때 폭행을 한 가해자와 비슷한 옷을 입을 남자만 보아도 공포에 질리게 된다. 때로는 외상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비슷한 곳에만 가도 그 때의 기억의 파편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상 기억의 재경험은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반복하여 유발하기 때문에 생존자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공포심, 무력감, 분노감에 반복하여 시달리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두 번째 증상인 회피(avoidance)와 둔감화(numbness)라는 증상이다. 압도적인 위협에 대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대개 실제 어떤 저항을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의식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방어를 하게 된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꿈을 꾸듯이 멍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 감각이 둔해지거나 상실되고, 시간 감각마저 변형이 된다. 그래서 마치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현실을 생생한 실체가 아니라 마치 아련한 꿈같이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의식이 옆으로 분리되어 나와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몸이 느끼는 고통, 놀람, 두려움을 직접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분리된 의식은 아무 것도 느끼지 않고 그저 멍하니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게 된다. 때로는 아예 외상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을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둔감화 증상은 해리라고 하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리와 같은 의식의 변형 상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 매커니즘이다.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미쳐버리게 되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의식을 변형하여 주변 자극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응적인 방어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라우마의 위협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러한 의식의 변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생기게 된다. 주변의 자극에 대해 되도록이면 정서적 동요를 안 느끼려 하고, 외상과 연관된 어떠한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삶의 주도성, 적극성, 계획성, 의미부여 같은 것들은 다 포기하게 되고, 그저 최소화된 삶을 영위하려 하게 된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회피 증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세 번째 증상은 과도한 각성상태(hyper-arousal state)와 연관된 증상들이다. 충격적 사건 이후 언제 또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늘 위협에 대한 경계상태가 지속된다.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대해 심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보니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집중이 안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매우 커진다. 이러한 과도한 각성상태와 연관된 증상들은 대부분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했거나 놀랐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외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러다가 위험이 사라지거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활성화된 교감신경계가 다시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과도한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 되다 보면 스트레스에 점점 취약해져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때로는 심한 분노 폭발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한 각성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화 되었을 때 위의 회피증상과 같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된다.

2) 사회적 결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은 위에서 말한 극단적인 흥분 상태의 증상들(hyperarousal state)과 극단적인 회피와 둔감 상태(hypoarousal state)의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극단적 상태로의 전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수 년 동안 계속 되기도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처리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들은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주의 집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쉽게 지치게 되어 결국 점점 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점점 더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우울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폭식, 등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심한 자살사고를 갖게 되기도 하고 결국 사회생활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다양한 심리적 외상으로 생기는 증상들은 삶의 질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인간을 마치 영혼이 없는 꼭두각시(walking zombie) 같은 존재로 만든다. 삶에 침입(intrusion)하는 공포성 기억이나 이로 인한 심신의 과민화(hypersensitivity), 그리고 공포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요소를 피하기 위한 무감각과 무기력 등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이 때문에 하루하루 의미도 생동감도 없는 좀비와 같은 나날을 보낸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

어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으니 무엇을 해 볼 의욕이 나지 않는다. 물론 대인관계는 어렵게 제한되고 외상 이전에 즐겼던 일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나날이 지루하기 한이 없는 권태의 지속이다.

6. 인간의 기억,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

1) 인간의 기억

인간의 기억시스템은 내재적 기억과 외재적 기억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기억이라는 것은 흔히 3세 전의 기억장치로써 생후 바로 활성화되어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을 말한다. 주로 정서적 기억, 신체 감각적 기억, 행동기억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억이 해당된다. 이러한 내재적 기억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기억들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내재적 기억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일생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기 때 겪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반응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외현적 기억시스템이 있다. 약 3세 이후 언어적 도구를 습득한 이후에 발달되는 이 시스템은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이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 단어의 의미 등과 같은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이 외현적 기억시스템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뇌안은 이와 같은 내재적 기억과 외현적 기억 시스템이 서로 혼재되어 존재한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적절하게 기능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는 경험과 함께 통합되어 조화를 이루게 된다.

2)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의 왜곡

압도적인 트라우마가 갑자기 몰아쳤을 때, 특히 그 당시 나이가 3세 이전의 나이로 언어적 도구가 없는 상태일 때 겪게 되는 트라우마는 내재적 기억으로 남게 된다.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마비가 오게 되고 온통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미지가 기억된 채 강렬한 신체감각과 고통으로 남게 된다. 정서적 교감 또한 산산히 부서진 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으로 남지 않게 된다.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 것은 이같은 기억들이 시간 개념 없이 단편적인 감각들로 산산히 부서진 채 내재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으로 이 고통을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외현화 되지 못한 내재적 기억의 고통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고통을 몰아간

다.

7. 여순사건을 통한 트라우마의 재정의

여순사건과 같은 대량학살,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예측할 수 없던 상황에서의 사회적 사건은 일생을 두고 큰 공포 반응을 희생자들에게 남긴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건은 특별하다. 사건이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다.

트라우마는 대개 저항을 할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꿈쩍 못하고 생명과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다. 때문에 보통의 인간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력 상실, 붕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

여순사건에서의 학살을 목격한 경우, 혹은 생존한 경우, 이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정신의학 진단분류(미국 정신의학 분류 DSM-IV)에서는, 트라우마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전쟁, 강간, 성폭력, 신체적 폭력, 강도, 재난, 재해, 유괴, 인질, 테러공격, 교통사고, 생명이 위험한 질병, 죽음이나 심한 상처의 목격,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트라우마는 매우 극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의 생명 위협 트라우마로 평가될 수 있다.

8. 극한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일부 전문가들은 사건의 끔찍함이나 두려움의 정도로 트라우마를 정의하지 말고, 그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혹은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트라우마를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여순사건에 대입시켜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외상은 대부분이 학살에 의한 것이지만, 각 개인에 따라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라우마 정도가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에게 동일한 국가폭력이 가해진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심리적 방어 정도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국가폭력 정도를 개인의 심리적 역량에 따라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주로 단일 사건(single event)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순사건 이후 피해자 각 개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사건까지도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발달학적 트라우마(Developmental trauma disorder)의 진단명이 붙는 경우인데, 큰 트라우마 유무와 상관없이 발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양육자의 방임, 무시, 강압적인 훈육, 학대와 같은 대인관계적 트라우마(interpersonal trauma)가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하는 트라우마, 일명 빅 트라우마(Big Trauma³⁾)가 있었을 경우, 발달학적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의 존재 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9. 트라우마 연구의 역사적 배경

트라우마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사건을 증언함으로써 인간의 취약성과 나약함, 그리고 때로는 인간본성의 악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제 3자, 중립자는 대부분 이러한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역사 속에서 트라우마의 연구는 수면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왔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Jean Martin Charcot)은 그의 유명한 화요강의를 통해 히스테리아 환자의 마비 증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히스테리아 증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류하였다. 샤르코 이전 시대에는 히스테리아 증상을 보이는 여자들은 피병을 부리는 것, 혹은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치료 또한 대개는 최면술사나 마술사, 혹은 종교적인 치료자들이 맡았다. 과학적 계몽주의자였던 샤르코는 종교적인 개념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일반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령에 홀린 상태, 종교적인 황홀경, 주술, 등과 같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히스테리아 증상의 원인에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샤르코의 제자였던 자네는 심리적 외상 사건으로 인한 압도적인 정서적 반응(vehement emotion)이 의식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것이 히스테리아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식의 변형을 해리(dissociation)라고 하였다. 그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지 못하고, 강한 정서적 경험, 신체적 고통, 혹은 신체감각으로 단지 반복하여 재경험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의 기억이 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3) big T 트라우마란 강간, 아동기의 성폭행 혹은 신체적 학대, 재난, 사고, 상실과 같이 한 개인에게 극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말하는데, 개인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렬한 위협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악몽, 플래시백, 불안, 공포, 두려움, 집과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일으킨다.

하기 때문에, 해리된 이 트라우마의 기억 파편(fragmented memory)이 통합되지 않는 한 그들의 인간적인 삶이나 기능이 발달하는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프로이트 역시 히스테리아 환자들의 증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히스테리아 환자들이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는 1896년 18명의 히스테리아 환자의 사례 연구를 토대로 히스테리아의 원인론을 발표하면서 히스테리아에 관한 모든 사례의 근원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아동기 성적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으로 인한 외상 신경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찰스 마이어스(Charles Myers)는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보이는 증상에 대해 "Shell shock"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럼 카디너(Abram Kardiner)는 "The Traumatic neurosis of War"라는 저서에서 전쟁의 참혹함이 인간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발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전쟁 신경증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많은 전쟁 신경증 환자들이 전쟁터에서 떠나고 난 뒤에도 마치 원래의 트라우마 상황에 놓인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신경증에 대한 이러한 의학적 관심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사라져갔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의 참전용사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의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전쟁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확히 알리려 위해, 전쟁의 후유증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규모의 연구를 정신의학자들에게 의뢰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이 가족과 잘 지내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결혼하는 비율은 낮았고, 이혼하는 비율은 높았으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으며,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마침내 베트남 전쟁이 남긴 후유증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 결과에 자극받은 미국 정신의학회는 1980년 처음으로 전쟁 신경증의 실체를 인정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붙여주게 되었다.

그 이후 강간,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같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다시 많은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여기에 애착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조명, 신경생리학의 발달, 새로운 치료기법의 개발,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0. 트라우마의 신경생리학

1) 내재적 기억과 외현적 기억

우리 인간의 기억 시스템은 내재적 기억(implicit memory)과 외현적 기억(explicit memory)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억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내재적 기억(implicit memory)은 생후에 바로 활성화되어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으로 주로 편도체(amygdala)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으며, 정서적 기억, 신체감각적 기억, 행동기억,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내재적 기억 시스템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잘 안되며, 언제 어디서 경험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 내재적 기억 시스템은 비록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하고 논리적인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지만, 일생을 통해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신념이나 가치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외현적 기억(explicit memory)은 약 3세 이후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발달하는 기억 시스템으로 주로 해마(hippocampus)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억(narrative memory),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 단어의 의미에 대한 기억, 등과 같이 주로 언어적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외현적 기억 시스템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가능 합니다. 또한 외현적 기억 시스템에는 경험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뇌 안에서 이러한 내재적 기억 시스템과 외현적 기억 시스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적절히 할 때,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입력되는 정보는 위의 두 가지 기억 처리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정서적 기억이나 신체감각의 기억이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2) 여순사건의 트라우마

그런데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압도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은 이러한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마비를 일으켜, 언어로 된 일상의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되는 해마의 기능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미지로 기억을 저장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트라우마의 기억은 주로 우측뇌의 편도체에 내재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즉 트라우마의 기억은 강렬한 신체감각들과 이미지, 그리고 강렬한 정서의 상태로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통합적인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저장이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 기억이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내재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렬한 감정으로 느껴지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이야기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1.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외상 치유의 필요성⁴⁾

국가폭력의 대표적 형태로서 고문은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다수 연구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피해자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이며, 이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밖에도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후유증은 심각해지며 자살,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이차적 피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게 한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한 개인에게 "영구적인 내적 폭력"으로 작용하여 고문과 같은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는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사건 당시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악몽을 꾸며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런 심리적 위급성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폭로, 모임 결성, 소송제기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존재와 고통들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 과거청산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들의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금과 보상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금전적·물질적 지원에 치중되었고, 정신·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을 치유하는 의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당사자들과 가족,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알려져 왔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자, 가족 및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에서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PTSD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4) 임채도 : 4.3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방안.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2

발표하였다. 피해자 가족들도 10명 중 3명꼴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 국가폭력의 내용은 고문 및 불법 구금 등으로 만성적인 피해의식이 상당기간 존속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로 인해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불행이 지속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주위 가족들이 피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특징이 있었다.

2007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실태조사⁶⁾를 시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중 다수가 고문, 수감, 장기간 수배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안, 수면장애, 악몽, 외상 재경험, 회피 등이 수반되는 PTSD와 우울장애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매우 심각한 후유증으로는 고립 경향을 보고하면서 피해자들은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로부터 위축되고 고립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하였다.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폭력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⁷⁾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상황에서 인간성과 정체성을 유린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213명 중 163명(76.5%)에서 PTSD를 확인할 수 있었다. PTSD 외에도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증상으로 지각하는 신체화증상(43.2%), 대인관계 적응문제(27.7%), 우울(25.4%), 불안(31.9%), 적대감(27.7%)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국가폭력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고문을 경험하였거나 사건 이후 사회적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24.4%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의 자살시도율 10.4%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면 우울증은 22.8%로 우울장애 평생 전체유병률에 비해 약 4배정도 많았고, 불안장애는 17.9%로 불안장애 평생 전체유병률보다 2.8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높은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빈번한 자살 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료 개입의 위급성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피해 경험이 가족에게로 전달되는 전이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애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과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전남대심리건강연구소,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2007.

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실태조사』, 2007.

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학연구소 (<http://www.imhr.or.kr>) 『고문피해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목격하거나, 보안관찰을 겪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재 등 사회적 지지부재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조차 부재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으로서 겪은 특수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은 더욱이 부족했을 것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당사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한 피해 사실의 인정이나 법원 재판 결과 국가폭력을 인정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의 재조사 결과 진실이 규명되거나 재판을 거쳐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여러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국가구제조치를 통한 진실 규명이나 법적 결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배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정신 심리적 후유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 후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해자가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법적 구제조치 이외에 심리 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2. 여순사건, 다시 프로이트를 읽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외상성 신경증의 근원은 그 외상을 초래했던 재해의 순간이 무의식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이 환자들에게 외상의 무의식적 저항이 그대로 눌러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겪었던 외상과 유사한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 외상을 입었던 상황으로 마음이 되돌아가게 되고 그 당시의 기억에 의존해 신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짧은 시간에 겪은 심적생활의 자극이 너무도 큰 나머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충격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불리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또한 무의식의 심리적 부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많은 영화들 속에 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PTSD의 주요한 증상은 심적 외상을 몇 번이고 떠올리며 반복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결과 심적 외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억 상실이나 한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전쟁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면과 더불어 공포반응, 불면이 동반되는 것은 매우 흔한 PTSD의 증상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적인 증상을 의사에 의해 평가하기는 방법론의 한계가 있었다. 다만, 간접적으로 측정한 자살생각 척도, 우울증 척도와 불안감 척도, 자기 존중감 등은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존재불안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 150명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일반적 정신건강 상태(N=150)

	평균 점수	결과 판정
SSI(자살생각 척도)	17.9	일반적인 결과와 유사
PSS(외상후 스트레스 척도)	35.8	매우 높은 점수
BDI(우울증 자가 척도)	32.8	극심한 우울상태
BAI(불안증 자가 척도)	31.1	심한 불안 상태

13. 에필로그 :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

: Safe Environment와 Safe Milieu의 차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안정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앞선 환경의 개념은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진행된 안전감이다. 자유 공간속에서의 불확실성과 모순성. 이것은 인간에게 하등의 자유를 주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인간 성숙을 전제로 한다. 안전한 환경 속에 있다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 성숙이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지닌다. 안정된 심리적 환경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현상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치료공동체 개념은 이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한다. 공동체내부의 치료과정에 대한 합의나, 원칙들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고유한 판단을 적극 존중하지만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안정된 심리적 환경의 구축에 있다. 안전한 공간만을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보건현장을 포함한 인간 조직은 모두 안전한 공간만

들기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사람이 물리는 것이 안전한 공간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추구형태이다. 치료공동체는 이와 같은 권력의 구성을 뒤 바꾸어 놓는다. 모두가 권력이자, 또한 모두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노력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좋은 치료환경이 되고 그곳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치유와 성찰이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8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색

2013. 5. 10

제주4·3특별법 제정과정과 4·3위원회 활동성과 /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 / 박찬식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의 입법경위와 과제 / 김성곤

제주4·3특별법 제정 과정과 4·3위원회 활동 성과

양 조 훈¹⁾

I. 달라진 4·3의 위상

제주4·3이 오늘의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수난과 시련, 탄압과 이에 대한 응전이 있었다. 제주4·3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까이 논의가 제한되었다.²⁾ 과거 군사정권은 이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다. 1980년대 말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북한공산당의 사주 아래 발생한 제주도 폭동사건”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이 규정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세월 속에서도 뜻있는 예술인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형상화했고, 지역언론, 연구소, 시민단체, 도의회 등에 의한 진실규명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또한 뜻있는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됐다. 2년여 동안의 조사와 정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법정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새로이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폭동’으로 규정했던 제주4·3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원수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으로 변천됐다. 우리 현대사에는 여순사건 등 4·3과 비슷한 불행한 사건이 많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원수가 사과한 일은 제주4·3이 처음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4·3특별법 제정과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4·3희생자와 유족 결정,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재단 설립 등 일정한 성과를 ‘쟁취’했다.³⁾

1) 제주신문 및 제민일보 4·3취재반장, 제민일보 편집국장,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3평화재단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역임

2) 1992년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제주4·3을 ‘20세기 세계 10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 특집 보도했다. 4·3을 선정한 이유로 첫째, 제주섬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점, 둘째, 이런 중대한 사건이 한국 안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3) 제주4·3은 매우 특수한 사건인데, 필자는 그 특수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발발배경을 보면 외부 세력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란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둘째,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

그러자 이번에는 보수단체에서 제주4·3에 대한 국가차원의 역사 정리와 대통령 사과, 희생자 심사 등이 잘못되었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자칭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줄기차게 헌법소원, 국가소송 등을 제기하며 4·3 폄훼운동을 벌였다.

따라서 제주4·3의 위상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즉 특별법 제정 이전의 50년 세월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마음을 졸이며 은폐·왜곡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시기였다면, 특별법 제정 이후의 10여 년은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가진 극우 보수단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법적 투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바뀌진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금기의 벽을 뚫고 벌어진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과 특별법 제정 이후에 조직된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검토하고,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수단체들의 반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활동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과 평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4·3특별법 제정과정

1. 특별법 제정 이전 상황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불행한 사건이었다. 수많은 도민들이 살해되거나 형무소에 갇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누구도 그 실상을 말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봉쇄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잠시 4·3 진상규명 운동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쿠데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일에 앞장섰던 신문사 간부와 대학생들이 구속됐다. 경찰은 심지어 ‘백조일손 위령비’를 부수어 땅속에 묻어 버렸다. 4·3의 진실을 땅속에 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북촌학살사건을 다룬 단편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했다가 군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뿔어진 민주화 열기가 이 덮여진 사건의 진실찾기운동에도 불을 지폈다. 4·3을 다룬 장편시와 자료집 등이 발표됐다. 그렇지만 당국은 시인과 자료집 발행인 등을 구속했다. 1991년에는 4·3 추모제에 참석하려던 시민·학생 400명 가까이가 경찰에 연행되는

명피해가 엄청나다는 점. 셋째, 이런 중대한 사건이 50년 가까이 금기시되어온 점. 넷째, 제주도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평화·통일·인권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제주4·3 진실찾기 작업은 계속되었다. 1989년 4월 3일 제주신문 4·3취재반의 『4·3의 증언』 연재(1990년부터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이어짐)와 그해 5월 제주4·3연구소의 출범은 진상규명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제주 도내와 서울, 일본 등지에서의 4·3단체의 결성과 활발한 활동, 그리고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발족으로 4·3진상규명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1998년 4·3사건 발발 50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에서 범국민위원회 조직이 결성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도민연대라는 4·3운동 단체가 출범했다. 1998년 서울 한 복판에서 4·3 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이 벌어지고, 1999년 제주도의회 주최로 제주4·3 국토순례 홍보단이 전국을 누비기도 했다.

1999년 10월에는 유족회를 포함해서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된 ‘제주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돼 가열찬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2월 제15대 국회 폐회 전에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도민결기대회, 서명 활동, 청와대 및 국회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과 성금 기탁 등으로 성원했다.

2. 특별법 제정과정

제주4·3특별법 제정의 역사를 회고할 때,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회의는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당내에 ‘제주도 4·3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998년 5월에 제주에서, 9월에 국회에서 각각 ‘4·3사건 공청회’⁴⁾를 열었다. ‘4·3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3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공청회 주제였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회의는 의지만 보였을 뿐 그 걸음은 더디었다.

제주도에서 4·3특별법 제정문제가 부각되자 오히려 적극성을 보인 쪽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당시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변정일, 양정규, 현경대)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그들은 제주도민사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1999년 10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4·3특별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4) 추미애 국회의원의 사회로 제주에서는 필자와 김순태 교수가, 서울에서는 서중석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강창일, 박원순, 심지연, 정근식과 필자 등이 나섰다.

반면,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국회 내에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후 차후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채정 정책위 의장 등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박상천 원내총무 등이 이를 반대했다. 원내총무실은 이듬해 봄 총선을 앞두고 이념논쟁의 선거 구도로 가면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제15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에,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4·3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4·3진영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4·3특별법 쟁취 연대회의는 즉각 “실효성없는 4·3특위 구성안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뒤 상경 투쟁을 벌였다.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항의했다. 이어서 11월 26일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을 만났다. 우리들은 “4·3특별법 제정은 대선 공약사항이다. 현재의 국민회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란 사실을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만남이 결정적으로 주효했다. 김 수석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특별법으로 가야한다는 제주도민의 주장이 맞다면서 국민회의에 특명을 내리도록 했다. 드디어 12월 1일 추미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민회의 국회의원 103명이 서명한 4·3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두 당의 4·3특별법안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뒤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한다는 큰 그림은 같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는 4·3사건 정의 규정에 나오는 ‘기점’이다. 국민회의 안은 ‘1947년 3월 1일’로, 한나라당 안은 ‘1948년 4월 3일’로 제안됐다. 우리는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가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어렵게 반영시켰다.

두 번째는 국민회의 안에만 포함된 ‘4·3평화재단 설립’조항과, 한나라당 안에만 명시됐던 ‘국가추념일 제정’조항과 ‘재심’조항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병합 심의 과정에서 모두 빠지고 말았다.

이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국회에 진을 치고 지켜봤다.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심사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우리를 설득했다. 조항에 너무 집착하다가 가는 아차하는 순간 법안 통과가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면서 “일단 법만 제정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우선하자”고 달랜 것이다. 그래서 평화재단 설립과 국가추념일 제정, 재심 규정 등이 누락되는 아픔이 있었다.⁵⁾ 이런 와중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23개 보수단체가 4·3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5) 4·3특별법은 2007년 개정되는데, 4·3평화재단 설립과 정부 지원조항이 부활되고, 희생자 범위에 ‘수형자’가 추가되면서 재심의 효과를 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추념일 제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99년 12월 16일 11개 조항으로 조정된 4·3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조사해 그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이 역사를 승계한 후대의 의무”라면서 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법”이라면서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준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됐다면서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 4·3특별법이 기적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4·3특별법은 21세기 벽두인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특별법 공포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있었다. 그날 김대중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Ⅲ. 4·3위원회 활동성과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에는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희생자 및 유족 심사와 명예회복 추진,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및 위령탑 건립, 정부 입장표명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4·3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 발족하였다. 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8명과 유족대표, 학자, 변호사, 군 장성 출신, 시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 민간인 1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는 진상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 아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사무기구로 서울에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제주4·3사건 처리 지원단’, 제주에는 제주도 산하의 ‘제주4·3사건 지원 사업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러나 4·3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 여러 진통이 있었다. 첫째는 보수단체들이 “4·3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두 번째는 4·3특별법 시행령 작성 과정의 파동이었다. 특별법 조문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그 특별법 운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안 작성을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면서 관 주도의 성격을 노골적

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민사회가 폭발했다. 2000년 4월 17일 제주도내 33개 단체가 시행령안 개악 철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의 농성, 도민 쫓기대회 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던 4·3특별법 시행령 심의가 두 차례 연기되었다. 당초 시행 예상일보다 한 달 가량 늦은 5월에 이르러 시행령이 확정됐는데, 그 사이 내용이 많이 개선되었다.⁶⁾

세 번째는 위원회와 기획단, 조사인력 등 인적 구성의 논란이었다. 인선을 둘러싸고 4·3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각축전을 벌였다. 여기에 국방부가 가세하면서 난산의 고통이 거듭된 것이다.⁷⁾ 4·3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 수차례 험난한 고비가 있었지만, 4·3진영이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중추적인 인사들을 4·3위원회 위원들로 위촉할 수 있었다.

1.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4·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4·3위원회는 여타 과거사위원회와는 달리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민감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2001년 1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을 출범시켰다.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에도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국장 등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군경 측 민간인 단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예고됐다.

기획단 산하에 상근 진상조사팀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진상조사팀은 전문위원 5명, 조사요원 15명 등 20명으로 꾸려졌고, 팀장 역할을 수석전문위원인 필자가 맡았다.

진상조사팀은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경찰청·국가기록원등 국내 19개 기관과 미국·러시아·일본 등 외국 9개 국가를 대상으로 1만여 건의 자료를 입수했다. 사건 관련자 503명을 대상으로 증언채록 조사도 벌였다. 자료집 12권과 증언집 7권도 발간했다.

2003년 2월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이 기획단 회의에 상정되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4·3의 성격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발발원인의 책임문제, 남로

6) 일례로, 조사 인력을 당초의 시안에는 '2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진상조사도 민간인을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시행세칙을 통해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 등 모두 20명의 조사 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했다.

7) 위원회 위원 구성 못지않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발족도 심한 진통을 겪었다. 그해 9월에 출범할 예정이던 기획단은 4개월이나 늦은 2001년 1월에야 겨우 닻을 올렸다. 박원순 변호사가 기획단장에 임명되기까지 그렇게 산통이 심했다.

당 및 미군의 역할범위, 진압작전의 실상, 계엄령과 군법회의 불법성 여부, 집단희생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무장봉기’냐, ‘무장폭동이냐’는 용어 하나를 놓고도 장시간 격론이 오갔다.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은 격론 끝에 2003년 2월 25일 기획단 제12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4·3위원회 전체회의(제6차)가 3월 2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격한 논쟁이 벌어지자 조사보고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18일 군 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영관)는 국무총리에게 건의서를 보내 “4·3진상조사보고서안이 군경의 진압작전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과 군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보고서 심의 유보를 주장했다.

일부 수정된 진상조사보고서안은 2003년 3월 29일 열린 제7차 4·3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란 끝에 진상조사보고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다.

2003년 9월 접수된 수정의견⁸⁾을 심의하기 위해 검토소위원회가 재구성됐다. 검토소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수정안을 심의했다. 결국 고건 총리는 3월에 이어 진상조사보고서 심의를 위해 모두 8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기록을 세웠다. 심지어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부분은 중요하다면서 8쪽에 이르는 결론 서술내용을 직접 읽어가며 축조심의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3년 10월 15일 제8차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의결⁹⁾됐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 전반¹⁰⁾에 대해 기술한데 이어 4·3사건 전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15,100명) 가운데 86%가 토벌대에 의해, 14%가 무장대에 의해 희생됐으며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노약자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이후 초토화 등의 강경 진압작전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이런 집단인명 피해의 책임이 제9연대장과 제2연대장, 이승만 대통령, 주한미군사고문단에 있다

8) 2003년 9월말까지 20개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376건의 수정의견이 접수됐다.

9) 참석 위원 17명 중 총리 등 12명이 찬성을, 군경측 민간인 위원 3명이 반대를, 국방부장관 등 2명이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10)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고 기술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1948년 제주 섬에서 국가공권력이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방지 국제협약을 어겼으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도는 세계 냉전체제의 최대 피해지역이었으며,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4·3위원회는 이런 진상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항의 대정부 건의문¹¹⁾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2. 희생자 및 유족 결정

4·3특별법은 4·3위원회에서 희생자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희생자 심사기준을 어떠한 방향에서 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쪽은 보수단체들이었다.

2000년 보수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폭도들의 죽음마저 값진 희생인 것처럼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4·3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권 등은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이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다만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4·3희생자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런 헌재의 권고는 위원회의 희생자 심사 기준 결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희생자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는 심사 기준안을 채택하는 문제만 놓고 3개월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수단체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성명서를 발표, 강화된 심사 기준 제정을 촉구했는가 하면 4·3 유족들은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2년 3월 희생자 심사 기준안이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렵게 의결됐다. 그 심사기준은 4·3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희생자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희생자 제외대상을 ① 4·3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11) ①정부의 사과 ②4·3추모기념일 제정 ③진상조사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 ④4·3평화공원 조성 적극 지원 ⑤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⑥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⑦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

핵심간부 ②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으로 정하되 이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희생자 심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군법회의 수형자들에 대한 희생자 인정 여부였다. 수형자의 다수를 차지한 군법회의 대상자는 내란죄와 간첩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무겁고, 판결문도 없어서 심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들을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보수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심사소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4·3 사건 당시의 군법회의에 상당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03년 확정된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1948년과 1949년에 제주에서 이뤄진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또한 2007년 4·3특별법 개정법률에서 희생자 범위를 종전의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에서 ‘수형자’를 추가함으로써 수형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았다.

4·3위원회는 접수된 희생 신고자를 심사한 결과, 현재까지 14,032명(사망자 10,144명, 행방불명자 3,518명, 후유장애자 156명, 수형자¹²⁾ 214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 가족 31,253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 특히 4·3위원회는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인정해, 사형수 318명을 포함하여 수형자 2,700명도 4·3희생자로 결정했다. 현재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350명)와 유족(27,44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3. 명예회복 후속조치

1) 대통령 사과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원수가 반세기동안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온 4·3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

12) 여기는 말하는 ‘수형자’는 2007년 4·3당시 수형자를 희생자 범위에 추가하는 특별법 개정이후 수형자 신분으로 추가 신고한 희생자를 뜻한다.

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4·3위원회는 이에 앞서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을 토대로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중에도 ‘정부의 사과’가 맨 앞자리에 있었다. 노 대통령은 4·3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6년 4월 3일에 거행된 ‘제58주년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하여 제주도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잘못된 역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원수가 사과한 일은 제주4·3이 처음이다. 또한 4·3위령제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도 노 대통령이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사 정리 과정을 비교 검토한 프리실라 헤이너는 ‘아는 것(knowledge)’과 ‘인정하는 것(acknowledgement)’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표현했다.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인정하지 않는 ‘아는 것’은 진실이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4·3에 대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에 가속도가 붙는 전기를 마련했다.

아직도 제주도민들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노 대통령의 용단에 의해 발표된 이 한마디의 사과가 반세기동안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짓눌러 왔던 이념적 누명과 불명예를 한꺼번에 씻어 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법석을 떨던 그들은 끝내 사과 표명이 있자 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에 따른 대통령 사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각하했다.

물론 노 대통령은 4·3특별법에 명시된 ‘정부 입장 표명’이란 법률적 절차에 의해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국가원수의 개인적 의지도 담겨져 있었다. 보수세력들의 다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해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제주도민들을 옥죄었던 4·3문제가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국가원수의 사과 등 해결 단계로 접어들면서 ‘평화의 섬’논의는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선포했다. 평화의 섬 선언문에도 나타났듯이 “4·3비극의 화해·상생 승화”가 평화의 섬 지정에 한몫을 하게 된 것이다.

2) 4·3평화공원 조성과 기념관 개관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제주시 봉개동 396,743㎡(약 12만평)에 만들어지고 있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는 2012년까지 모두 국비 630여억 원이 투입되었다. 앞으로 3단계 사업비 12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제1단계 사업으로 위령제단·위령탑·추념광장 등이 조성됐고, 제2단계 사업으로 평화기념관 건립과 위패봉안실, 행방불명 희생자 개인표석, 발굴유해 안치 봉안당 등이 마련됐다. 앞으로 추진될 제3단계 사업으로는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건립과 평화의 종 제작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380억원이 투입되어 2008년에 개관된 제주4·3평화기념관(연면적 11,455㎡)은 4·3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마련된 상설전시실(6관)과 다량위굴 참상을 재연한 특별전시실 등이 갖추어져 4·3사료전시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적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화기념관에는 해마다 2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다크투어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3) 유해 발굴과 유적지 복원

4·3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은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를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60년간 방치됐던 유해를 안치함으로써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뜻도 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해 발굴사업은 제주대학교와 제주4·3연구소에 위탁돼 시행됐다. 그 결과 화북천 인근 밭과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에서 4·3 당시 희생된 유해들이 발굴되더니 2007년부터 제주국제공항 경내에서 유해 393구가 무더기로 쏟아지듯 발굴되자 충격을 던지면서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특히, 특수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국제공항 부지 안에서의 유해 발굴은 특별법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이 공항 경내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1949년 불법적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된 자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예비 검속된 희생자임이 밝혀졌다. 이미 4·3위원회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유해들이다.

아무리 범법자라 할지라도 유해를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물며 4·3 당시의 군법회의나 예비 검속이 불법적으로 집행됐고,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후 60년 동안 그 유해를 암매장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유해 발굴사업은 역사 속에

문혀 잊혀져버릴 뻔한 학살 현장을 세상에 드러내 그 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발굴된 유해를 대상으로 DNA분석 등을 통하여 신원 찾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희생자 71명의 신원이 확인되어 60여년 만에 희생자와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제주4·3평화공원 안에 봉안관이 마련되어 ‘행방불명인 발굴유해 영령 봉안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역사현장으로 남아있는 4·3관련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복원사업도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복촌 학살터, 첫알오름 학살터, 선흘 성터 등에 대한 유적지 복원이었다.

4) 4·3평화재단 설립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기념사업, 유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 4·3평화공원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0일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했다. 2007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주제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5) 4·3평화교육 활성화

4·3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5년 개정된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국사』에 4·3사건에 대한 설명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되었다. 검정교과서에도 4·3에 대한 배경 설명이 추가되고, 정부의 진상규명활동이 소개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기교육의 자료로 4·3사건에 대한 자료집을 편찬, 향토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제주도의회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소요재원 확보, 평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학생의 평화교육 참여 증대, 교직원 연수 기회확대, 4·3평화주간 지정 운영,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후속조치

4·3 후유장애자와 유족들에게 소액이나마 생활보조비가 지원되고 있다. 2011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에 의해 생존 희생자에게 월 8만원, 유족에게 월 3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3평화재단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의료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4월 3일 전후해 위령제와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금년 위령제엔 정부를 대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여야 정당 대표 등 1만명이 참석했다. 4·3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에 불만을 토로하자 청와대측은 대통령 조화를 보내는 한편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 대처로 불가피한 불참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정홍원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4·3추념일 지정과 4·3평화재단의 국고 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 활동성과 요약

제주4·3위원회의 활동성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사적 기억 속에 밀봉되었거나 억압된 상황으로 인하여 금기시되었던 4·3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공식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핵심에 4·3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 법정 보고서는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둘째, 이 사건으로 희생된 14,032명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4·3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반세기동안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왔다. 정부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은 바로 이런 족쇄를 풀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밝혀 수형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회가 2006년 12월 여야 합의로 4·3사건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입법부도 4·3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셋째, 활발한 위령사업, 유해 발굴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비단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또한 전 사회적 차원의 기억과 추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의 뜻도 담겨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 4·3평화기념관의 개관, 유해 발굴, 유적지 복원, 위령제 봉행 등은 4·3위원회가 이 같은 목적 아래 추진한 사업들이다.

넷째, 4·3평화재단 설립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4·3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면서, 7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 건의 내용 중에는 추가 진상조

사와 기념사업의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평화재단이다. 국회는 이런 뜻을 감안해 2006년 개정된 4·3특별법에 평화재단 설립 근거와 국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4·3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영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모델을 확보한 것이다.

제주4·3위원회가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적잖은 진통도 있었다. 앞에서 밝혔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념 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제주4·3이 지하에서 나와 ‘당당한 역사’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에는 우리나라 학계·법조계·종교계 등에서 내로라하는 훌륭한 분들이 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힘이 되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고비 고비마다 힘을 주고 성원했던 유족과 관련단체의 역할도 컸다.

제주4·3특별법은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4·3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미약했다. 4·3특별법에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권한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하여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인 4·3평화기념관 개관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점은 내외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IV. 보수단체의 반발과 대처

보수단체에서는 4·3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희생자 결정, 평화기념관 개관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그 시발은 2000년 4월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 보수 측 인사 15명이 “4·3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 5월에는 성우회(회장 정승화) 회원 333명이 같은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잘못 기록됐던 4·3역사가 바로 정립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보수단체의 반발과 도전도 더욱 치열해졌다.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표명 직후에 보수단체에서는 자칭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 집요하게 보고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자유시민연대’등 43개 보수단체에서는 2004년 7월 헌법재판소에 4·3진상조사보고서와 이에 따른 대통령 사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¹³⁾ 위헌심판을 제기한 보수단체에서는 4·3특별법에 근본적 오류가 있고, 진상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재산권 등에 침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각하했다.

13) 이때 보수단체에서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4·3진상보고서를 반대하는 185,689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편, 2004년 국방부에서 발행한 『6·25전쟁사』에 기술된 4·3사건 관련내용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무시하고, 기존의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과문이 일어났다. 4·3관련단체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으로 비화됐던 이 과문은 청와대의 중재로 국방부와 4·3위원회 관계자들이 회합, 협의한 결과 논란이 됐던 ‘무장폭동’ 용어 삭제 등 모두 35건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¹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수진영의 조직적인 반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폐기, 4·3평화기념관의 개관 중지, 4·3위원회의 통폐합, 4·3희생자 결정 무효화로 모아졌다.

4·3진상조사보고서의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보고서’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즉 4·3특별법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기구와 조사기한,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절차에 거쳐 정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누구든 임의로 고칠 수 없고, 수정하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2008년에는 평화기념관의 개관을 막는 보수단체의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평화기념관 개관 반대운동은 소위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불을 지폈고, 이에 재향군인회가 가세하였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출범을 계기로 총결집된 보수단체의 연합체인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¹⁵⁾가 전면에 나섰다.

급기야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재향군인회 임원과의 회동도 이뤄졌다.¹⁶⁾ 이런 진통 속에서도 제주4·3평화기념관은 예정대로 2008년 3월 28일 개관되었다.

또한, 국방부가 2008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수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제주4·3을 ‘좌익폭동’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과문이 일었다. 그리고 2008년 11월부터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 의해 4·3위원회 폐지를 목표로 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착수되자 제주도에서 조직적인 반대운동¹⁷⁾이 일어났다.

14) 수정내용은 오류부분 18건, 왜곡·편향부분 13건, 추가내용 4건으로 정리됐다. 결국 국방부가 4·3위원회와 합의해 35건의 수정문을 만들어 배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법정보고서의 존재와 위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 이 단체는 2008년 3월 조선·동아일보 등에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광고 문안 중에는 ‘날조·왜곡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먼저 시정하라’,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주도한 좌익폭동이었다’, ‘어떻게 군·경이 학살자이고 초대 대통령이 악마인가’, ‘4·3평화기념관에는 좌익폭도도 희생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문구 등이 있다.

16) 2008년 3월 18일 김태환 도지사와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 등과의 서울 회동 자리에 필자도 동참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기념관 전시내용을 추상적으로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5월 23일 재향군인회 회장단과 전국 시·도 지회장 등 23명이 4·3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필자는 그때 “4·3 당시의 초도화작전은 국제법에서도 금지된 잘못된 작전인데, 그걸 왜 오늘의 재향군인회가 떠안아 변호하려는가?”고 따졌다.

4·3에 대한 이런 요동이 일어나자 국회 차원에서 4·3에 대한 새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2008년 9월과 10월 각각 답변을 통해 “정부는 ‘제주4·3특별법 제2조’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보수진영의 강력한 요청에도 법률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망과 불만을 가진 보수진영은 2009년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2009년 한 해 동안 2건의 헌법소원, 2건의 국가소송, 2건의 행정소송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보수진영은 모두 패소하였다.

결과적으로 4·3의 진실찾기는 입법부의 4·3특별법 제정, 행정부의 진상조사와 국가원수 사과, 후속사업 추진에 이어 사법부까지 법적인 심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세력도 임의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굳건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V. 4·3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제주4·3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미래를 향한 기반임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의 시민운동과 언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진실규명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민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과거청산의 전범(典範)이다.”¹⁸⁾

위의 글은 참여정부 국정홍보처가 펴낸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제2권-민주주의』에 나온 내용이다.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한 ‘제4절 과거사 정리’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제주4·3위원회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을 성공적인 사례로 들면서, 그 성공 이유로 지역 시민운동, 지역 언론, 지방자치단체, 국가적 진실규명활동 등 네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한 것이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성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이후 추진된 후속조치 등과 맞물려 4·3위원회의 활동은 학계에서도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 사례”¹⁹⁾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과거사 위원회 전체의 흐름과 4·3위원회의 활동을

17) 2008년 12월 제주 도내 49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18)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제2권-민주주의』(2008), 305쪽

19) 서중석, 「한국현대사에서의 4·3의 위치」, 『4·3문화아카데미』(2009), 9쪽

연구한 논문(「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국제적 확산 경향에 관한 비교 연구」)으로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에 의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의 사례”²⁰⁾란 평가를 받았다.

미 보스턴 웨트위스 공과대학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최근 “제주4·3사건은 좌파의 반란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비롯되었고, 그 점이 4·3배후의 핵심 동인(driver)이었다. 4·3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고, 미국도 그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중략). 그러나 이런 비극을 극복하고 일어난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놀랐고, 더구나 세계평화의 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도전이 놀랍다”고 피력하였다.²¹⁾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진실찾기에 목표를 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 피나는 투쟁이 있었다. 4·3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김대중 대통령과 사과 표명으로 4·3운동 진로에 새 전기를 마련해준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순항하던 4·3 관련 사업들이 시련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수진영의 조직적인 반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4·3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4·3이 과거처럼 지하에 갇힐 수는 없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과거사 정리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4·3은 이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위치에 터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4·3 위상도 달라졌다. 4·3 역사 흐름도를 정리하면 ① ‘저항의 역사’, ‘수난의 역사’ ⇒ ② ‘은폐의 역사’, ‘침묵의 역사’ ⇒ ③ 진실 찾기 운동, 정부의 조사·사과 ⇒ ④ ‘세계평화의 섬’선포, 평화·통일·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VI. 제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운동은 바위에 계란 던지듯 매우 어렵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누군가 의지를 갖고 첫 걸음을 내딛게 되면 눈덩이가 구르면서 불어나듯 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여순사건과 유사한 제주4·3사건의 특별법 제정과정은 한마디로

20) 김현준, 「해외에서의 4·3 연구 동향과 4·3의 세계화 방향」, 『제주4·3연구 및 평화교류의 확산』(2011), 24쪽

21) 「The Jeju Weekly」, 2010년 4월 30일자 보도

‘고행의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난관과 고초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필자는 그런 뜻에서 ‘쟁취’란 표현을 즐겨 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벌어진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과정, 위원회 인적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희생자 심사, 특별법 개정작업, 평화기념관 개관, 평화재단 출범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넘어간 일은 없다.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훼방과 폄훼, 제동이 있었고 4·3진영은 결집된 힘과 의지로 이 고비들을 헤쳐 왔다.

분명한 것은 제주4·3의 위상이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보수단체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 사과 표명 이후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집요하게 보고서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해 왔다. 4·3에 대한 기존의 정부문서들이 왜곡됐다는 민원이 그치지 않아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추진된 것인데, 이번에는 역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잘못됐다면서 보수단체들이 ‘역사바로잡기 운동’을 벌이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일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제약요인이 될 지역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4·3특별법뿐만 아니라, 1996년 거창사건 등의 특별법, 2004년 노근리사건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0년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성사시킨 마산지역의 활동상황도 참고하는 등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역량이 총 결집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결합이 중요하다. 특히 유족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범국민위원회 같은 성격의 전국 조직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이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여론 확산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 일에 신명을 바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제출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우선시할 것인가, 법 조항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는 법안 통과에 우선 비중을 둘 것을 권하고 싶다.

<관련자료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 1.12 법률 6117호

일부개정 2007. 1.24 법률 제8264호

일부개정 2007. 5.17 법률 제8435호

※ 밑줄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4, 2007.5.17>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4>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1.24>

제5조 (불이익의 처우금지) ①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4·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8조의2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4>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제12조 (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13조 (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14조 (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4>

<참고자료 2>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섬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중의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추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목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 냈습니다.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 국민과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31

대통령 노무현

제주4·3평화재단 설립 과정과 활동 성과

박 찬 식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

1. 4·3 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과정

1) 4·3 특별법의 제·개정과 재단설립의 추진

○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함.

○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목을 빕니다”라고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혔으며, 정부 차원에서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음.

○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함.

○ 2005년 10월 19일 강창일의원 등 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주4·3 평화인권재단’에 관한 규정이 들어감.

○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 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 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현애자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도 2005년 11월 30일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2)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필요성

○ 진상규명 과정에서 당초에 제정된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게 되며, 애초에 제정된 4·3특별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음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됨.

○ 처음에는 ‘4·3 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의 재단설립이 제안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초기에 제안된 재단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 기구설립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이 정치적 관점에 의해 의심받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임.

- 둘째, 추가진상규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임.

- 셋째, 재단설립을 통해 정부주도의 기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임.

- 넷째, 사건 재발방지와 인권평화교육을 위하여 재단설립이 필요함.

○ 그 이후 현재 설립된 명칭의 재단과 동일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하게 제기되기 시작함.

○ 이러한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주로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의 주체의 혼선과 관련해서 제기되었으며, 당시의 4·3특별법에는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구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음.

○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해 위령사업과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음.

○ 이러한 재단의 역할은 지속적인 진상조사, 사료관 및 평화공원 관리·운영, 명예회복을 포함한 위령사업의 추진으로 요약되었으며, 재단설립의 재원은 4·3에 대한 집단보상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됨.

3) 개정 특별법 및 시행령 중 4·3평화재단 관련 내용

○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24일 개정된 4·3특별법 제8조의2는 “제주 4·3 관련 재단에의 출연”이라는 제목 하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제주 4·3 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 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제주 4·3 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 4·3 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 4·3 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5. 그밖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은 제주4·3평화재단의 기본적 성격을 보여주며, 우선 제주 4·3평화재단은 ‘재단법인’임.

○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은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재단법인에 대해 중앙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임.

4) 제주4·3평화재단의 최종적인 설립

○ 제주4·3평화재단은 위와 같은 특별법 개정 이후에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31일 재단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됨.

○ 제주4·3평화재단의 초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초대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맡게 되었음.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작성이 필요하며, 4·3평화재단의 정관은 총 36 개조로 구성됨.

○ 한편 4·3평화재단의 경우와 설립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국내사례로는 5·18기념재단이 있으며, 실제로 4·3평화재단 설립논의 과정에서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관장하는 5·18기념재단이 여러 번 언급되었었음.

○ 그러나 4·3평화재단과 5·18기념재단의 설립과정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존재함.

○ 5·18기념재단은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이전에 순수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8월 30일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5·18기념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인 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임.

○ 반면에 4·3평화재단의 경우에는 4·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법 개정에 의해 기금출연의 근거조항이 마련된 후에 설립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음.

2.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의의와 위상

1)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의 의의

○ 제주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 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실체이며, 이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써, 4·3 위령사업 및 진상규명 등에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독립적 재단의 설립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5·18기념재단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임.

○ 4·3평화재단의 설립에 의해 제주 4·3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실체와 조직적 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제주 4·3사건 이후 60여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2) 제주4·3평화재단의 위상

○ 제주4·3평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재단법인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자체가 4·3특별법에 의한 것은 아니며, 4·3특별법에서는 이미 설립된 재단에 대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음.

○ 그러나 제주4·3평화재단은 일반 재단법인과는 달리 4·3특별법에 기금출연의 근거를 둔 재단법인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은 본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진상규명 사업과 위령사업을 수행하는 등 그 사업내용의 공공성이 강한 재단법인임.

○ 일반 재단법인은 친목사업도 할 수 있는 등 공공성이 약한 경우들도 많지만, 이와는 달리 제주4·3평화재단은 공공성이 강한 특징을 갖는 재단법인임.

○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의 공공적 성격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며, 정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위원 1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간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

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소속위원 1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인”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음.

○ 이처럼 이사회 구성에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국가공무원, 도의원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제주4·3평화재단의 공공적 성격을 보여줌.

3) 재단법인으로서 제주4·3평화재단의 성격

○ 제주4·3평화재단은 재단법인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그 중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임.

○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고, 재단법인 설립의 일반적 근거는 민법 제32조이며, 이에 의하면 “학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됨.

○ 다만, 성격상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들도 있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러하며,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법인의 설립절차 등이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들이 있음.

○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자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특수한 법인의 설립을 위해 제정된 법이고,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정관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제주4·3평화재단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는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설립절차 등에 대해서는 4·3특별법에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명칭 자체도 특별법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제주4·3평화재단의 경우에는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민간재단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형식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록 4·3평화재단이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하지만, 일반 재단법인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본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위령사업, 기념사업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둘째, 4·3평화재단은 조직상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의회 등이 관여하여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셋째, 4·3평화재단은 일반 재단법인과는 달리 민관협력방식에 의해 설립·운영되

는 재단법인이며, 일반적인 재단법인은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기금출연 등을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임.

- 그런 점에서 4·3평화재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민관협력 또는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음.

4) 4·3평화재단의 사업에 관한 검토

○ 정관 제4조에 의하면 4·3평화재단의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그 중 ①부터 ④는 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내용과 같음.

○ 그리고 ⑤, ⑥은 재단의 정관을 통해 추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재단의 정관을 통해 사업을 추가한 것은 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4·3평화재단 정관상의 목적사업>

- ① 제주 4·3 평화공원 및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 ②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③ 제주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④ 제주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 ⑤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 ⑥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 ⑦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위와 같은 사업내용은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별법 시행령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이나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이라는 4·3평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4·3평화재단의 사업은 5·18기념재단의 목적사업과도 유사하며, 다만 5·18기념재단 정관의 경우에는 장학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사업, 시상사업도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4·3평화재단과 5·18기념재단의 목적사업 비교

4·3평화재단	5·18 기념재단
① 제주 4·3평화공원 및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 ②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③ 제주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④ 제주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⑤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⑥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사업 ⑦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①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②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③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④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사업 ⑤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⑥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사업 ⑦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사업 ⑧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 연대사업 ⑨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제주4·3평화재단 현황

1) 설립 목적

○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이후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를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2) 설립유형 및 과정(주요연혁)

○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유형 및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설립유형 및 과정			
설립유형			재단법인
설립과정	2005	10. 19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 정부지원 규정이 반영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 개정안 국회발의
	2007	01. 24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법률 제8264호) 공포
	2008	09. 22	재단설립 발기인 창립총회(이사회 구성)
	2008	10. 16	재단설립 허가(행정안전부)

	2008	10. 21	재단설립 등기
	2008	11. 10	제주4·3평화재단 출범식

3) 주요 추진사업

○ 제주4·3평화재단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내 용
· 제주4·3평화기념관 및 4·3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유족복지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 제주4·3평화재단은 설립 이후 4·3희생자 위령제 봉행 등의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4·3장한어머니상 시상 등의 유족복지사업과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육사업 등을 전개해왔음.

○ 2012년 김영훈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위의 기본적인 사업 외에 제주4·3사건추가 진상조사와 국내외 평화교류, 그리고 평화교육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 제주4·3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제주4·3사건의 성격, 마을별 피해실태 및 행방불명 희생실태 등이 미흡하게 정리되어 이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임. 6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기에 경험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달리하는 것도 추가진상조사가 시급한 이유임.

이를 위해 조사단을 꾸리고 학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본격 조사활동에 들어갔음. 조사단은 앞으로 3년여에 걸쳐 제주도내 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피해 및 행방불명 희생실태 그리고 연좌제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할 것임. 뿐만 아니라 2003년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확보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기존의 진상보고서를 보완할 것이며, 자료집 및 추가진상보고서도 발간할 것임.

○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국내외 평화교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지난 5월, 5·18기념재단 등 국내 5개, 히로시마평화기념관 등 국외 4개 기관단체가 모여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공동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제주4·3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연구 확장을 위해 진상보고서의 영문 번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일어, 중국어 등의 번역도 추진할 것.

○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사업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음. 특히 대중교육프로그램인 4·3역사문화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청소년 4·3평화캠프도 활성화되고 있음.

4) 주요시설 개요

○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부지면적은 220,394m(1,2단계 부지)임.

○ 시설부문은 4·3평화기념관, 위령재단, 위령탑, 상징조형물 등이 있으며,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12,314m(건축물 4개동), 조경연면적 160,631m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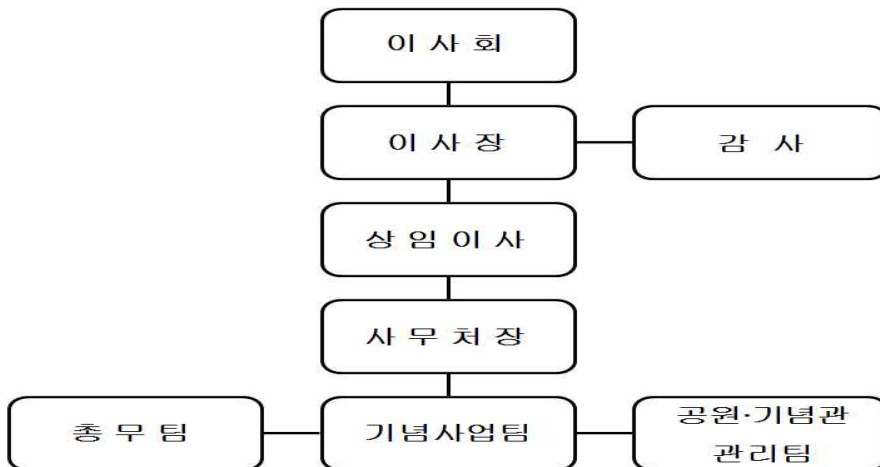
○ 현재 4·3평화공원 조성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단계의 총 공사계획 중 2단계까지 완료됨.

5) 조직체계 현황

○ 제주4·3평화재단은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사무처장을 두고 있음.

○ 조직운영부서는 사무처 산하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 관리팀을 두었음. 2011년부터 4·3사업소와 4·3재단의 업무 분장에 따라 공원관리팀은 4·3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이사장 : 초대 이상복 행정부지사, 2대 장정언, 현재 3대 김영훈 이사장.

○ 상임이사 : 초대 양조훈, 2대 이성찬, 현재 공석 중.

○ 사무처 : 처음 설립 당시에는 전원 제주도 4·3사업소 공무원이 겸직하다가 2009

년부터 민간인 채용, 민관협력형 체제로 운영. 사무처장·총무팀장은 공무원 파견, 나머지 인원은 민간인 채용. 현재 사무처장 1인, 팀장 2인 등 12명 인원.

※ 추가진상조사단 : 2012년 3월부터 비상근체제로 단장 1인, 전문위원 3인, 조사원 3인 체제로 별도 구성 운영

6) 기금 및 예산

○ 제주4·3평화재단의 예산은 2013년도 기준 26억 5천만원으로, 국비 지원 20억원, 지방비 지원 6억5천만원임. 국비는 사업비로, 도비는 운영비로 지출.

평화재단 적립 기금 16억원, 유족 장학기금 6억원 등 총 22억원.

※ 국내 과거사 관련 재단의 특성별 비교

구분	설립주체	위상/성격	목적/사업	운영특성	예산	재원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화운동 인사	사단법인	부산지역민주화 운동계승	민간주도	21억원 (‘09)	수탁운영비 기금 등
5·18기념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인사	재단법인	광주지역민주화 운동계승	민간주도	25억원 (‘08)	국고보조 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인사	특수법인	민주화운동계승	민간주도	88억원 (‘08)	국고보조 주
전쟁기념 사업회	국가	특수법인	호국정신함양	관주도 (국방부)	95억원 (‘07)	국고보조30% 자체수익70%
동북아 역사재단	국가	특수법인	역사분쟁해결	관주도 (교과부/외통부)	200억원 (‘08)	국고보조
독립기념관	국가	특수법인	호국정신함양	관주도 (국가보훈처)	241억원 (‘08)	국고보조 주

4.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의 어려움

4·3평화재단은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라 민·관 협력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내재화되어 있음. 예산 책정과 집행, 인사,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앙정부, 자치단체의 제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설립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 2008년 1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발족됨. 이 준비추진위는 4·3유족회와 4·3관련단체, 도의회, 학계, 법조계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됨. 이사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유족회와 4·3관련단체 사이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임.

- 난항과 파행이 계속되자 본질은 사라지고, 지역사회에는 “4·3 단체 간에 밥그릇

싸움한다”는 식으로 비쳐짐.

- 결국 과도기 체제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여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안이 보류되고, 공무원인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평화재단이 2008년 11월에 이르러 겨우 출범함. 그러나 유족회를 제외한 4·3 관련단체들은 이를 정상적인 재단 출범으로 볼 수 없다며 참여를 보이콧하여 15명의 이사 중 7명으로 시작함.

○ 안정적인 기금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 자체 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대는 상황.

- 현재 재단이 유족들의 병원진료비를 매년 10억원 넘게 집행하고 있음. 국가추념일 제정을 통한 국가의 별도 유족복지사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4·3평화공원, 기념관에 대한 충실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기념관 전시, 아카이브 구축, 지속적인 진상조사 및 학술연구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재단 운영비의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충원의 필요성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입법경위¹⁾와 과제

김 성 곤(국회의원, 여수갑)

I. 특별법 추진 경과

이 특별법안(정식명칭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2013년 2월 28일 김성곤의원 등 16인(심재권·이낙연·유은혜·김선동·이상민·신경민·배기운·이한성·우윤근·신장용·문병호·전해철·전정희·홍종학·주승용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3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당초 국회 의안과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국방위원회 회부를 요구하였으나, 이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방위원회보다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사건의 연혁과 제주4·3사건특별법의 제정경과 등을 집중 설득하여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도록 조치하였다.²⁾

이 특별법은 지난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충조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해주었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또는 의회내 공감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2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여순사건 64주년 학술심포지엄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같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접하고 비극적 현대사의 공동피해자인 지역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화합을 위하여 제 19대 국회에서 다시금 의원입법의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1) 이 자료는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2)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법률 현황(시행일)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4.6)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4.13)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6.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17)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5.1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10.2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12.1)

II.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1.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법의 제안 이유이다.

가.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동 반란으로 인하여 확산된 사건으로서, 당시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률안주요내용

구 분	제19대 제출 법률안의 내용
목적 (제1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적용범위 (제2조)	○적용기간 : 1948. 10. 19~종료시점은 명기하지 않음 ○적용지역 : <u>사건발생 기점 이후 진압과 토벌 중 민간이 희생이 이루어진 전지역</u> ○희생자의 범위 - 위원회가 여수·순천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 ○유족의 범위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적용기간과 적용지역, 희생자의 범위(군인 및 적대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원회에 심의재량에 맡겨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위원회 구성 (제3조·제4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안행부장관 소속, 위원장(장관)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전라남도지사 소속, 위원장(전라남도지사)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
자료조사 및 보고서 (제7조·제8조)	○조사기간 : 위원회 구성 후 <u>3년 이내</u> 에 사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완료 ○진상보고서 작성 - 조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
위령사업 (제9조)	○위령묘역조성,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재단에의 출연 (제10조)	○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재단 설립시 기금 출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제11조·제12조)	○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의료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그 밖의 사항	○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재심의 등

2. 제정의 필요성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여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³⁾.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과 관련, 전라남북도 및 경남 일대 21개 지역에서 1년간 신청 접수 후 개별 신청사건 730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총 1,237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활동종료시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도 동 사건의 정리에 상당 분량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사건을 모두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조사한 여수·순천사건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고⁴⁾, 종합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조사기간과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당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라는 결정과는 달리 신청사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희생규모와 희생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수·순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연구자들이 추가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는 동시에 반대측 의견으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정부기관인 진

-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 사건 목록〉

유형별	사 건 명	직권조사 개시결정 일자
민간인 집단희생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6. 10. 10.
	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006. 11. 07.
	여순사건	2007. 03. 06.

〈참고자료 2-2 :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근거〉 참조

- 4) 진실규명 신청기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유족도 많았으며, 위원회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진실규명이 의미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피해를 염려하여 신청을 기피한 유족이 많았음(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95쪽).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수·순천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추정인원 대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인원은 15%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음.

실화해위원회가 이미 조사한 여수·순천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다른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⁵⁾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측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Ⅲ. 제주4·3특별법 제정사례

여수·순천10·19사건과 연관성이 깊은 제주4·3사건도 70년대 말까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가 현기영 작가의 소설‘순이삼촌’을 통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87년 88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사건 발생 40여년만에 4·3사건 기념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입법논의는 95년 이후 제주4·3연구소가 50주년 기념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추진되고 위원회의 사업으로 특별법 제정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기에 이른다.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이다. 2003년 10월‘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⁶⁾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000년 제주4·3사건특별법 제정당시 사건 진상조사와 정부측의 사과 그리고 특별법개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민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단행된 측면

5) 군·경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51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2건 등

※‘국민보도연맹사건’, ‘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 군·경찰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희생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짐. 아래 표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1,445건, 희생자 4,514명)’ 제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수(가해유형별)>

구 분	계	군경 관련	예비검속/보도연맹/형무소	미군 관련
계	16,106	9,231	5,822	1,053
진실규명된 피해자수(명)	9,698	4,935	4,000	763
비 율(%)	100.0	50.9	41.2	7.9
추가확인된 피해자수(명)	6,408	4,296	1,822	290

<자료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Ⅲ. 6쪽 재구성>

6)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의 특징

첫째, 사건발생 55년만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된 종합보고서이며
둘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셋째,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특별법 제정여건은 제주4·3특별법 제정 당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다. 가령, 과거사위원회 활동결과로 다수의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여러개의 개별사건들을 퍼즐 맞추는 방식으로 여수·순천 사건과의 연계성을 되짚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사건으로 여수·순천 사건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과거사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과거사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재조사되었던 결과 이에 대한 개별 특별법 제정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제주4·3특별법 제정 당시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수·순천사건은 제주4·3사건에 비하여 진상규명 절차가 늦어졌고, 또한 진상규명의 범위도 매우 제한된 면도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수순천사건과 역사적 배경이 가장 유사한 제주4·3사건의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등에 관한 입법이 완비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부 전문 연구자들은 사건의 규모나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현재적 의미, 그리고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제주4·3사건 보다 여수·순천사건이 영향력이 더 컸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의 제도적 비교

	여수·순천사건	제주4·3사건
시 기	1948. 10. 19 - 1950. 10월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1947. 3. 1 - 1954. 9. 21 ※ 제주4·3사건특별법
지 역	전라남도 전체, 전북·경남 일부	제주도 전체
피해유형	군경토벌,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 적대세력사건	군경토벌, 예비검속,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 적대세력사건
발단이유	단정단선 반대, 제주4·3진압 거부	단정단선 반대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과 제주4·3사건특별법 비교

구 분	여수·순천10·19법(김성곤의원안)	제주4·3법
목 적 (제1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적용범위 (제2조)	○적용기간 : 1948. 10. 19 ~ 미확정 ○적용지역 : 미확정(사건발생 기점 이후 진압과 토벌 중 민간인이 희생된 전 지역) ○희생자 : 위원회가 여수·순천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적용기간 : 1947. 3.1. ~ 1954. 9.21 ○적용지역 : 제주도 ○희생자 :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자 또는 수형자 및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자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원회 구성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안 제3조) : 인행부장관 소속, 위원장(인행부장관)을 포함한 20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안 제4조) : 전라남도지사 소속, 위원장(전라남도지사)을 포함한 15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3조) :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제4조) : 제주도지사 소속, 위원장(제주도지사)을 포함한 15인
조사기간 및 보고서작성	○조사기간 : 위원회 구성 후 3년 이내에 사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완료(안 제7조) ○진상보고서 작성 : 조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안 제8조)	○조사기간 : 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사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완료(제6조) ○진상보고서 작성 : 조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제7조)
위령사업	위령묘역조성,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안 제9조)	위령묘역조성,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제8조)
재단에의 출연	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재단 설립시 기금출연(안 제10조)	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재단 설립시 기금 출연(제8조의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11조 및 제12조)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제9조)
그 밖의 사항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재심의 등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재심의 등

IV.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제

1. 국회입법의 절차

국회의 입법발의 절차는 크게 의원입법, 정부입법으로 대별되며 의원입법 절차는 과정이 단순한 대신 통과에 대한 검토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의원발의법률안은

-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 ②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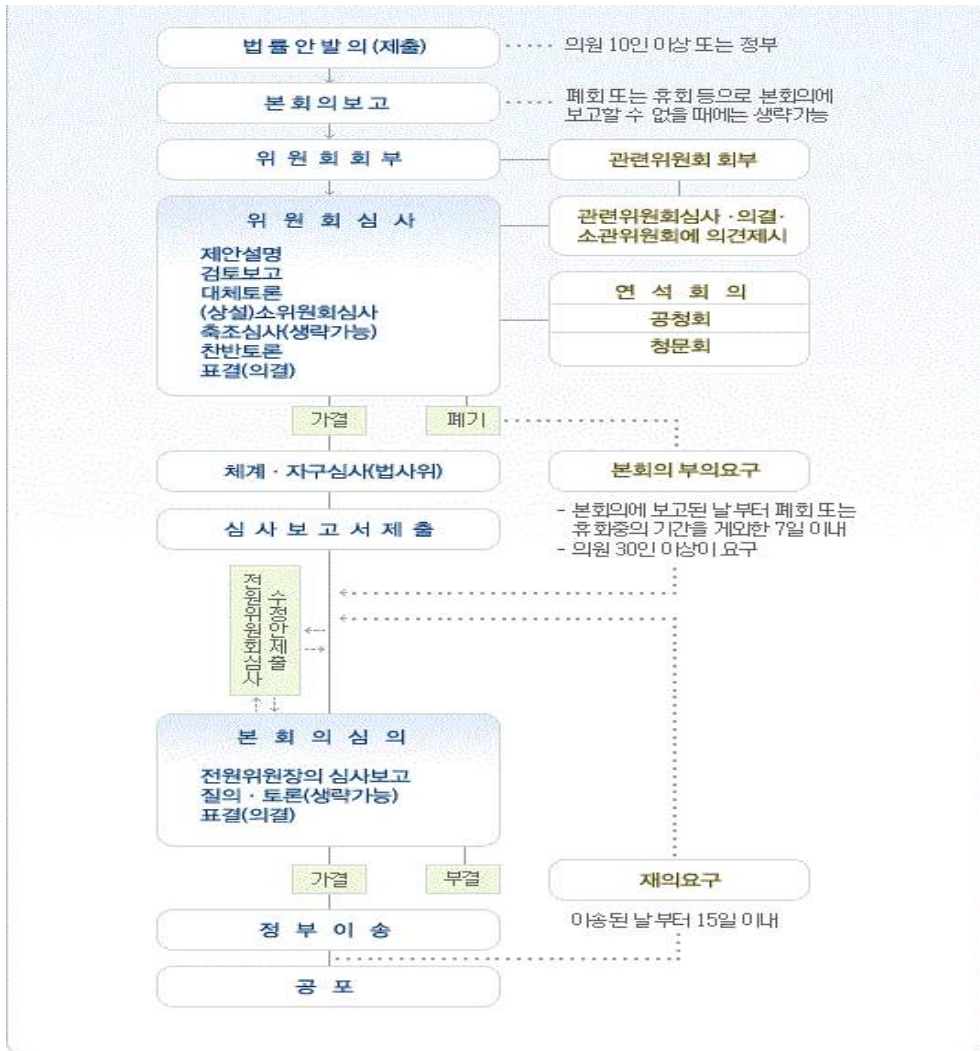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성안하며, 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한다(국79②).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회부(국81·82)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 ② 관련위원회 회부(국83)
- ③ 위원회 심사(국58) : 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의결)
- ④ 체계·자구심사(국86) : 법제사법위원회
- ⑤ 심사보고서 작성·제출(국66) : 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 ⑥ 전원위원회 심사(국63의2) :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하며 전원위원장 명의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⑦ 본회의 심의(국93) : 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경우) 질의·토론 의결
- ⑧ 법률안의 정리(국97) :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98①),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53①).



2.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우선 여야의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행정부의 전폭적 또는 묵시적 지지 및 묵인이 있어야 최종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특별법의 제정에는 반드시 국민적·입법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제주4·3사건특별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령사업, 재단설립,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등에서는 대등하게 가고자 했으며, 다만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통과되면 장차 설치되는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재량권을 강하게 인정하여 군경과 적대세력 모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받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한 이행사항 등의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도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개별적인 청구소송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전술했다시피 이미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의 경우는 각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들에 보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지난해 말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여수·순천사건 등을 포괄하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본법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논의전개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개별법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각각의 사건들에 역사적 배경 등이 다르기에 일괄적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특별법의 심의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대로 과거와 다른 입법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쉽지않은 상황하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역사적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점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례발굴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며, 각종 학술조사는 물론 언론매체의 뉴스와 다큐의 소재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사실적이고 진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결과에 의거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하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40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90건이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1,237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숫자는 유족단체와 지역사회단체가 주장하는 피해자 규모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 규모가 대규모로 추정되는 점은 향후 법안이 통과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규모에 비례하여 정부의 재정투입 금액도 차이가 날 뿐더러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률통과 요구와 재정지원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측의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다.⁷⁾ 정부 주장에 따르면,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제주4·3사건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이미 확인된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추계하더라도 3조 5,8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부담은 역사적 과오를 해소하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인 국민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편익에 비하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65년전의 가슴 아픈 역사적 실체를 다시금 파헤쳐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가슴아프다고 해서 덮고만 간다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못할뿐더러 가슴속의 응어리는 더욱 커져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용서와 화해는 진실속에서만 가능하고 국가는 그러한 진실을 밝혀줄 책무가 있다.

7) 민간인희생자현황 및 재정소요(추계)

구 분	계	진실화해	거창사건 등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희생자 수	35,813명	20,620명	934명	14,033명	226명
재정 소요	3조 5,813억원	2조620억원	934억원	1조4,033억원	226억원

※ 희생자 1인당 1억원 지급 기준(1인당 민주화보상 1.3억원, 1인당 5·18보상 1.1억원)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참고 1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수·순천사건 조사내역

□ 총 괄

구분	신청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비고
민간인집단희생사건 (군·경에 의한 희생)	640	622	1	17	
적대세력사건 (반군·좌익·빨치산에 의한 희생)	90	90	-	-	
계	730	712	1	17	

□ 가해자·지역별 사건 현황

구분	사건명	신청 건수	희생자수	결정일자	비고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례지역 여순사건	146	157 (165)	2008.7.8	진실규명
	순천지역 여순사건	203	258 (439)	2009.1.5	"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68	81 (88)	2009.11.10	"
	광양지역 여순사건	43	44 (64)	2010.5.11	"
	화순·나주지역 여순사건	22	75 (81)	2010.5.11	진실규명, 불능(1)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30	45 (74)	2010.5.18	진실규명
	여수지역 여순사건	128	119 (124)	2010.6.29	진실규명, 각하(17건)
소계		640	779 (1,035)		
적대 세력 사건	순천·여수 적대사건	34	36 (57)	2010.4.27	진실규명
	보성·고흥 적대사건	30	38 (71)	2010.4.27	"
	강진 등 10개 지역 적대사건	26	53 (74)	2010.4.27	"
소계		90	127 (202)		
계		730	906 (1,237)		

** ()는 직권조사를 통해 미신청자까지 포함한 희생자 수.

참고 2 과거사 관련 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기본법	진실화해 기본법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주4·3사건 특별법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제 정 (발 의)	'13.2.28 발의 (김성곤의원)	'12.12.18 발의 (이낙연의원)	'05.5.31제정	'04·3.5제정	'00.1.12제정	'96.1.5제정
시 기	'48. 10.19. (시기 불명확)	'45. 8.15. 시행일까지	일제강점기 또는 직전 ~ 권위주의 통치시기	'50. 7.25. '50. 7.29.	'47. 3. 1. '54. 9.21.	'51. 2. 7. '51. 2.11.
대 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전후 <u>민간인 집단 희생사건</u> 인권침해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전후 <u>민간인 집단 희생사건</u> 인권침해사건 적대세력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중 미합중국군인에 의한 희생 <p>(희생자 226명) 사망·행불·장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사태 및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 희생 <p>(희생자 14,032명) 사망·행불·장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한 주민 희생 <p>(사망자 934명)</p>
	여수·순천 지역 등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황간면 노근리)	제주도	경남 거창군(신원면), 산청군(금서면), 함양군(휴천·유림면)
배·보상 언급	X	○	X	X	X	X
위령 사업 (지원)	○	○	○	○	○	○
재단 설립	○	○	○	X	○	X
의료비 지원 (근거)	○	X	X	○ 36명, 478백만원 (1인당 평균 1,327만원)	○ 119명, 508백만원 (1인당 평균 427만원)	X
생활비 지원 (근거)	○	X	X	X	○	X

※ 의료비지원은 장애정도에 따라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참고 3

제19대국회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의안(제정안) 접수현황

2013. 4. 8. 현재

구분	의 안 명	발 의 자 (발의연월일)	주 요 내 용	소관 위원회	의안 번호
1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우윤근의원 등 33인 (12.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사건관련자 및 유족에 대해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거창사건: 1951년 2월 9일 ~ 11일 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법제사법	422
2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0인 (12.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도록 함. ※경주기계천사건: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국방	1235
3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12.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함. ※거창사건 등: 1951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법제사법	1451
4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문병호의원 등 10인 (12.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월미도사건: 6·25전쟁 당시 인천광역시 월미도지역 일대에서 아군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국방	1746
5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12.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희생자 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예천산성동사건: 1951년 1월 19일 미군 폭격기가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 	국방	2120

			에 폭탄을 투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등 36인 (1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전행정	3102
7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동원의원 등 18인 (13.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및 임실군 일대에서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건 	국방	3618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등 16인 (13.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하여 안행부장관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근거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근거 마련. ※여수·순천10·19사건 : 1948. 10. 19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으로 인하여 확산된 사건으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안전행정	3916

참고 4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민간인희생사건 소송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소송건수	소송가액
국방부	보도연맹	울산보도연맹 외 36건	1,569
	예비검속	밀양경찰서 외 1건	82
	재소자	대전형무소사건 외 11건	138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문경집단학살 외 46건	1,596
소 계		98건	3,385
육 군	보도연맹	충남서부보도연맹 외 9건	61
	재소자	대구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외 2건	5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고창지역민간인희생사건 외 18건	103
소 계		32건	169
해 군	예비검속	제주예비검속사건 외 3건	166
	재소자	부산경남지역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1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전남영암지역민간인희생사건 외 2건	32
소 계		8건	199
경찰청	보도연맹	군위,고령,대구보도연맹사건 외 13건	410
	부역혐의	김포 부역혐의	261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고양금정굴 민간인 희생사건 외 21건	174
소 계		37건	845
총 계		175건	4,598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 대법원의 파기환송('11.6.30) 사건인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희생자(197명) 유족(482명)에게 201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12. 4.13)
 - * 희생자 1인당 약 1.1억원(희생자 8천, 배우자 5천, 직계존비속 8백, 형제 4백)
 - * '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도 140억원 지급 판결(서울고법, '12. 4.13)

□ 문경석달마을 집단희생사건(확인된 희생자 : 16명)

- 대법 : 시효완성을 이유로 국가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11.9.8)/ *손배소송 제기 : '08.7
- 1심·고법 : 시효소멸을 이유로 10억 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원고(4명) 패소

□ 거창사건(확인된 희생자: 66명 <신청49, 미신청17>)

- 대법 : 원고 패소('08. 5.29) / * 손배소송 제기 : '00. 2.17
 -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며(소멸시효 5년 완성)
 - 거창사건 후속조치는 국민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

※제16대국회 : 거창사건 등 보상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04. 3. 2.),

정부에서 재의요구('04. 3.25.),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산청·함양사건 포함

※제17·18대국회 : 거창사건관련 보·배상법,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9대국회 : 거창사건(등) 관련 배상법 발의

· 우윤근의원안('12.7.2) 및 김재경의원안('12.8.31) : 법사위 소위 회부('12.11.14)

□ 기타 진행중인 소송

- '청주·청원보도연맹사건'('11.9.30), '고양금정굴사건'('11.11.24)
 - 손배소송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유족)에 배상 판결
 - * 국가가 청주·청원보도연맹 원고(유족 251명)에게 78억원, 고양금정굴 원고(유족 3명)에게 1억원 배상 판결

참고 5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발굴유해 안치현황

발굴 대상지	발굴 년도	발굴 유해수	현재 보관 장소	발굴 기관
경기 고양시 금정골	1995	157	경기도 일산 청아공원	금정골유족회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인근 대원골	2005	80	코발트광산 인근 컨테이너	유족, 영남대
경남 마산시 여양리	2004	167	경남대 내 박물관 컨테이너	유족, 경남대
충북 청원군 분터골, 지경골	2007 -2008	336	충북대 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2016. 7월까지 임시 안치)	진실화해위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2007 -2009	370		
전남 구례군 봉성산	2007	14		
충남 대전시 동구 낭월동	2007	34		
경남 산청군 원리, 외공리	2008	257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	2008	19		
전남 함평군 해보면 일대	2009	159		
충남 공주시 상왕동 일대	2009	317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2009	111		
총 계		2,021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안 제3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안 제4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보고서작성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라. 여수·순천10·19사건 위령사업(안 제9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설, 사료관 등을 건립한다.

마.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안 제10조)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다.

바.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11조)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 심의·의결 및 관련 예산편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사종료 후 위령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다.
-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령시설 설치 등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총 604억 2천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 2013~2019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안 제3조(위원회)	7.8	11.7	12.2	12.8	13.4	14.0	14.6	86.5
안 제4조(실무위원회)	1.6	2.3	2.5	2.6	2.7	2.9	3.0	17.7
안 제9조(위령사업)	35.0	15.0	10.0	100.0	140.0	40.0	20.0	360.0
안 제10조(재단출연금)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40.0
합 계	64.4	49.0	44.7	135.4	176.1	76.9	57.7	604.2

주 :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9장 여순사건, 지방자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순사건 66주기 심포지엄

2014. 10. 20.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완석

과거사의 치유공간과 운영 주체의 성격 / 정호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및

추진방안 / 이영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 완 석(여수시의원)

1. 제정 이유

○ 지난 2010년 6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지역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일부 군경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에 내린 평화공원 조성 및 화해권고 조치는 이행되지 않은 실정임.

○ 2008년 6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발표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서만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124명 이상이 학살되었고, 전남동부지역 전체에서는 816명으로 밝혀졌으며,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동부지역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이는 사건 당시 1949년 11월 전라남도과 학계 및 시민사회, 유족회가 주장하는 10,000여명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 결과임

○ 이에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여수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수시장으로 하여금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일부 군경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수시장은 안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여수시에 안 제4호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시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다. 여수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사업,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2

5.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여수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과 일부 군경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여수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여수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일부 군경에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민간연구단체가 대행할 경우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물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

식)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조금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30 조례 제6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참고자료 2>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4.08 조례 제11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진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참고자료 3>

- 2000,1,21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2006,6,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조례 제정
 - 이로 인해 기존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주진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내역
 - 2001,7,21 여수시의회 제34회 정례회 본회의 건의안 채택
(서완석의원 대표발의)
 - 2003,7,18 여수시의회 제58회 정례회 본회의 건의안 채택
(이행우의원 대표발의)
 - 2013,11,21 여수시의회 제152회 정례회 본회의 건의안 채택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속칭 과거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

조사 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이며 2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 가능.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0년 1월 22일 2개월 6일을 연장하여 2010년 6월 30일 조사 활동이 종료.

법에 따라 위원회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010년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종료.

과거사의 치유공간과 운영 주체의 성격¹⁾
- ‘여순10·19평화공원(가칭)’²⁾ 조성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 호 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1. 머리말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과거사의 재평가를 넘어 청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재개되었다. 이는 점점 더 확장되어 2000년대에는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통치체제가 격변하던 시기, 즉 해방 정국, 한국전쟁 국면, 4월혁명 국면, 박정희 정부 집권기 등에 청산 작업이 진행되었다(정근식, 2002). 회고해보면, 이러한 과거사 청산은 국가권력과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요법(對症療法)과 같았다. 이에 비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청문회 개최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집행은 비록 집권당의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과거사 청산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위원회’로 명명되었던 국가 기구들이 설치·운영되었다.

한국은 이제 법률과 제도에서는 다양한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경험을 갖게 된 국가가 되었고, 거의 동시대에 다양한 과거사들의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하게 성과도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뒤틀리기도 하지만,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구들이 지금도 운영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사 청산 작업의 결과에 대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안병욱 외, 2012). 이처럼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상흔 치유를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활동들은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활동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도 분화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가

* 이 글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회 이후에 관련자들의 면담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인용에 주의를 부탁드린다.

2) ‘여순사건’은 다양하게 호명되어 왔다. 공식적인 명칭은 ‘여순10·19사건’이지만, 진화위는 ‘여순사건’으로 명명했다. 여순사건은 가장 일반적으로 호명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를 주제로 조성된 모든 시설들의 명칭에서 ‘사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례는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이 유일하다. 아마도 ‘사건’이라는 단어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로 인한 것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여순사건이라고 호명하더라도, 이와 관한 치유공간이 조성된다면 ‘여순10·19’로 호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사료된다. 앞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호명을 둘러싼 논의와 토론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 첫째, 미흡하게 마무리되었거나 좌절되었던 과거사들의 진상규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종료되었던 기존 법률들을 부활시키려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사의 책임을 묻는 문제, 진정성과 실효성이 담긴 사과,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화해와 치유 등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들은 대체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들의 배(보)상에 관한 제반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배(보)상 소송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고, 소송 주체들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급변되는 양상이어서 그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간단한 정리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현재에도 운영되는 과거사 관련 국가 기구들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업무가 종결되지 않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여럿이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근래에 제정되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 그리고 기존 과거사 위원회들이 활동을 종료하며 제안했던 권고조치와 후속조치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8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20532호로 제정되었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³⁾

이처럼 과거사 청산 관련 작업들과 후속 조치 및 활동들의 진행이 복잡해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사 법률들의 불비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해 야기된 측면도 상당하다. 비록 과거사 관련 법률들의 내용과 역할이 미비했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업무를 종결한 위원회들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법률적 근거와 체계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 설치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들은 2010년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직전 무렵부터 한층 심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0년 12월 1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화위의 주최로 열렸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고유제 및 합동 추모제’에서 유족과 관련자들이 양분되어 각각 추모제를 지내면서 정부를 규탄하던 함성은 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후 유족회가 분열되면서 이러한 규모의 합

3)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진화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거창사건명예회복법, 제4·3사건법, 노근리사건법 등 다양한 과거사 관련 법률들에 의해 제안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후속 조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동추모제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면서 과거사 해결의 과제와 활동들이 한층 복잡하게 얽혀버린 다수의 사안들이 등장했는데, ‘여순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이 발발한지 66년이 되는 여순사건은 다양한 방식의 청산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며, 진화위에서 인정받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국가 보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전반기에 비해 응집력은 와해되고 목적 달성 의지는 위축되어서 우려와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순사건 치유공간(space for caring and restoration)의 조성은 파급력을 갖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기존에 조성되었던 과거사 관련 치유공간들의 고찰을 통해 여순사건 관련 추모와 치유 그리고 의미의 재고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치유공간의 조성에서 유의할 점과 쟁점에 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째, 각각의 치유공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제반 환경들을 주제별로 유형화하고 주요 사례들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사 치유와 관련한 주요 주체들의 형성 과정과 특성 그리고 치유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대상을 치유공간으로 명명한 것은 과거사 관련 공간들과 시설들이 표방하는 목적과 주제가 다양하고, 그에 맞추어 여러 명칭들이 불리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개념으로 판단되었다.

2. 국내·외 과거사 치유공간의 조성 과정과 특성

1)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과거사 치유공간 조성의 과정과 변화

우리의 일상공간과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념 또는 추모 공간과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간과 시설들이 항상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한 시점에 국한되어 관심을 받게 되지만, 정치·사회적 행위와 의례 및 담론의 중심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존재 이유를 갖는다. 이 공간과 시설들은 조성 목적과 의의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지기도 한다. 치유공간은 기념을 목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과 교훈 및 의미의 전승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추모하려는 활동은 사건이 발발한 직후부터 등장했다. 그러

나 당시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엄혹한 시절이었다.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의 넋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그래서 운 좋게 목숨을 연명한 혹은 전쟁 이후에 출생한 가족 및 후손들이 은밀하게 피해자들의 죽음을 되새기곤 했다.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대한 추모 행위는 정치체제의 변동에 결부되어 표출되었다. 이들을 추모할 기회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던 첫 시기는 1960년 4월혁명 직후였다. 이승만 정권이 종식을 고하고,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전쟁 전후기에 발생한 일부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특히 1960년 10월 20일 결성된 「전국피학살유족회」는 이러한 활동을 촉진시켰다(한상구, 1990). 유족회는 출범하면서 그간의 한과 고통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6개 항으로 정리된 결의사항들에 압축되었다. 결의사항은 ① 법을 거치지 않고 살인을 지시한 자 및 관련자를 엄중 처단하라. ② 피학살자 명단 및 집행 시일 장소를 명시하라. ③ 피학살자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의 감시를 즉시 해제하라. ④ 피학살자의 호적을 조속히 정리하라. ⑤ 피학살자 유족에게 국가의 형사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⑥ 합동위령제 및 위령비 건립에 당국을 책임지라였다. 이 결의사항들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적용해도 그다지 손색이 없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국가에게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해결 방안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특히 ‘위령제 개최와 위령비 건립’은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따른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고,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상징적 합의였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묵살했다. 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 함평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부터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몇몇 사건들에 국한하여 국회 차원의 개괄적 조사로 마무리되고 말았다(김영택, 2001).

추모는 민간 영역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과거사를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었다. 그 일환으로 1960년에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추모하는 시설이 건립되었다. 현재로서는 울산유족회가 10월 1일 함월산 백양사 옆에 합동묘지를 조성하고, “6·25사변 당시 원사자 합동추모비”를 건립한 것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추모비의 후면에는 “여기 죄 없이 학살당한 7백여 명 혼백이”로 시작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162~163). 그러나 이 묘지와 비는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 해체되고 파괴되어 사라졌다.

다음으로 건립된 것은 3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박산합동묘역’과 거창사건 위령비였다.⁴⁾ 11월 18일에 건립되었던 이 위령비도 5·16군사정변이 발발한 직후인 6월 25일

4) 박산합동묘역은 1954년 4월 7일에 조성되었다. 유족들이 사건이 발발한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수습되지 않은 유해들을 모아 ‘남자합동지묘’, ‘여자합동지묘’, ‘소아합동지묘’라는 3개의 봉분을 만들었다.

경남도지사의 지시로 파괴되어 땅속에 묻혔다. 현재 이곳에는 여러 개의 추모비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처음 건립된 위령비의 비문은 크게 훼손되고 파손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당시의 심각한 정세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 위령비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활성화되던 무렵인 1988년에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현재와 같이 묘지들 앞에 놓이게 되었다(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 28~30; 김백영·김민환, 2009).

군사정부들의 집권기에는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추모사업이 공백이었다. 추모를 위한 활동이 재개되었던 것은 1990년대였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회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의 추모비 혹은 위령비들이 전국에서 건립되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함양군 도북면에 건립된 위령비는 이 시기 가장 빨리 건립된 추모시설로 확인된다. 이어서 1994년 5월 26일에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삼장학살사건에 관한 ‘난몰주민위령비’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다수의 추모비나 추모시설들이 건립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대다수의 추모시설들은 2000년대에 모습을 드러냈다.⁵⁾ 이러한 시설들 대부분은 비 혹은 탑의 형태를 띠었는데, 추모제를 위한 주요한 시설로 이용되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곳에는 학살지 표지판(석)이나 알림판이 건립되었다. 또한 유족회가 추모사업을 주관하면서 표지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민간이 주도했던 추모사업은 사건 현장에 경험과 기억의 장소를 확정하고, 공공공간에 사회적 기억을 투사시키고 장기화하는 진상규명운동에 역점이 있었다. 대비적으로, 국가가 주관한 추모사업은 법률에 의거한 대규모 공원묘지 조성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에 완공되었던 거창사건추모공원은 첫 사례였다. 이 공원묘지는 1996년 1월에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199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확장과 확대를 거듭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와중에도 진상조사를 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고, 4월혁명에 따른 정치적 이행기 국면에서도 활발한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인해 가장 먼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거창사건은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대한 추모사업의 인도자가 아니라, 홀로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거창사건의 추모사업에 대한 반발력으로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2008년 완공)이 조성되었고, 두 사건을 둘러싼 사회관계는 격렬한 갈등과 반목으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거창사건추모공원은 이와 유사하게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후속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형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여러 연구들과 평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창사건추모공원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

5) 미군이 가해자임을 명시한 첫 추모비는 2000년 10월 28일 익산역 광장 앞에 건립된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위령비’이다.

기 어렵다.

제주4·3평화공원도 2008년에 완공되었다. 제주4·3평화공원은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주제로 조성된 가장 대규모 치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노근리평화공원이 완공되었다. 이곳은 미군이 가해자라는 전쟁 상흔을 공간에 재연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해외 주요 치유공간의 특성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건립되어 있는 가장 흔한 치유공간들은 전승, 전투, 참전, 전사자 추모 등 주로 전쟁에 관한 것들이다. 반면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관한 치유공간들은 한국에서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간헐적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던 것은 나치 체제하에서 자행된 인종 및 소수자 대량 숙청과 이에 관한 치유공간들이었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것들 가운데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들은 이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치유공간들은 국가 혹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그리고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는데, 장소성과의 관계에서 보면 두 가지 유형들로 분류된다.

첫째, 집단적 죽음이 발생한 장소와 공간 그리고 건조물 등을 활용하여 기념관이나 추모시설들을 건립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에 관한 것이 특히 많은데, 수용시설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 치유공간들은 전쟁범죄를 참회하고 기억하기 위해 가능한 원형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발발한 당시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가감이 없이 전승하기 위함이었다. 치유공간들은 전시실, 실내외 추모 공간, 아카이브 등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피학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비나 탑 또는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되었다(김민환, 2012).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 박물관, 오스트리아의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Mauthausen Concentration Camp),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 원폭자료관, 원폭위령비,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자국 내의 갈등과 내전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과 학살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이 사건이 갖는 반인륜의 행태들을 알리는 시설들이 사건의 주요 현장에 남겨진 건조물과 유물들을 활용하여 재구성되었다. 대만의 2·28기념관, 캄보디아의 톨슬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국가 및 전쟁 범죄와 폭력 그리고 사건과 집단적 죽음을 추모하는 치유공간을 신축한 경우이다. 사건 현장과 다른 곳에 치유공간이 조성되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들 때문이었다. ① 사건의 현장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훼손되어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했

기 때문이다. ② 사건 현장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만, 접근이 불편하고 추모시설의 건립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집단적 죽음이 발생한 장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곳들이 많다. ③ 장소의 협소함이나 부적절성으로 인해 추모시설을 건립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조건과 환경이기 때문이다. 작은 비나 탑을 건립하는 경우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추모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의례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공간과 장소의 확보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④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주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계승 및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⑤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추모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제약 조건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로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Yad Vashem), 독일 베를린의 유대박물관(Jüdisches Museum),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기념관(Holocaust Museum)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해외 사례들에 국한되어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한국의 치유공간이나 시설들에 적용해도 대체로 무방하다.

3. 과거사 치유공간들의 주제별 유형화: 추모, 기념, 보존, 복합

1) 추모 : 공원묘지

과거사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치유공간은 공원묘지라고 할 수 있다. 공원묘지가 치유공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이 ‘(집단적) 죽음’과 관련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과거사 청산운동이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던 점이 치유공간의 조성에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원묘지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무하고, 유족들의 아픔과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의 결과로 처음 건립되었던 치유공간이 ‘4·19묘지’였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과거사 치유공간으로 공원묘지의 조성이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대안으로 선호되었다. 국립5·18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거창사건추모공원, 함양산청사건추모공원, 노근리평화공원 등이 조성되었던 공통된 배경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에는 추모의 목적 이외에도 전시, 교육, 휴식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동반되어 있지만, 추모의 기능이 우위에 있고, 법률에서도 ‘공원묘지’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원묘지들은 도시 외곽이나 사건 관련 장소 인근에 조성되었다. 특히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공원묘지는 모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던 배경과 연원을 고찰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진상규명 운동이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다른 과거사들에 비해 상징성이나 인지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공원묘지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은 민주화운동과 민간인 학살에 관한 것이 각각 3곳으로 총 6곳인데, 이들 모두가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대표된다.

둘째,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던 사례들은 4·19혁명과 3·15의거를 제외하면 독립된 특별법을 갖고 있다. 즉 각각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상, 위령사업 등이 진행되었고, 공원묘지 조성은 위령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4·19혁명의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치유 작업이 진행되었고, 시대적 여건상 법률의 제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경과한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공원묘지 조성이 법률이 수행한 주요한 목적으로 포함되었다.

셋째, 공원묘지 조성의 근거가 되었던 기존 추모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망월묘역이, 3·15의거는 희생자 집단묘지가,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은 피해자들(719명)이 안장된 집단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집단묘지들은 피해자가족들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지속시키는 구심점으로 작용했고, 사회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 공간으로 의미부여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사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원묘지의 조성이 주장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법률과 제도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기념 : 공원

‘기념’을 주요 주제로 하는 치유공간은 공원이나 기념관으로 명명된 시설들의 조성이 일반적이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조성된 5·18기념공원과 부산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이 대표적이다. 기념을 주제로 하는 치유공간들은 과거사로 발생한 피해와 희생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사건의 의미나 의의를 조명하는데 보다 강조점이 부여되는 특징을 갖는다.

기념형 치유공간들은 광장과 잔디밭 등이 주요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기념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요구되는 만큼, 기념관의 성격을 띠는 건조물과 상징물을 필수 시설들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교육, 전시, 행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기념형 치유공간들은 관련 법률이 없이 조성되기도 했고, 지방정부 주도로 조성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공원묘지와 같은 치유공간들과 차이가 있다. 부산민주공원이 대표적이다. 그것은 공원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민의 휴식과 삶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다(고연옥, 1999: 15). 따라서 기념형 치유공간들은 도심 내에 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의 일부로 위치함으로서 친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모두 도시 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입지 환경에서는 차이가 있다. 5·18기념공원은 상무대가 이전한 부지에 새롭게 도심이 형성된 곳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일상생활공원의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보수산 능선에 위치한 부산민주공원은 대청공원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지역민들의 일상공간과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차량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불편함이 있다.

3) 보존 : 유적지와 표지시설

보존형은 사건의 주요 현장들의 원형 유지를 목적으로 치유공간이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과거사의 사건 현장들은 시간의 경과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공간이거나 자산가치가 높아진 곳들은 재개발과 용도 변경 등으로 대부분 변형되었다. 비교적 원형을 유지한 곳들은 나후 지역이거나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들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다. 또한 사유지이거나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접근마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사유지의 경우에는 방문이 잦아지자 장소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례들도 있다.

그리하여 과거사의 주요 현장 보존과 관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실제로 과거사의 주요 현장들에 치유공간이 조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현장을 고증하여 방문자들을 위한 표지시설들이 설치된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여러 이유들로 쉽게 망실되었다. 또한 갈수록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현장 보존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보존형 치유공간이 조성된 사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예시할 수 있다. 첫째, 5·18자유공원이다. 상무대 영창과 법정 그리고 헌병대 주둔 시설들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이곳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다수가 수감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구타 그리고 기합 등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고통과 실상을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현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서 상무대의 이전이 확정되기 전부터 보존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수립 및 추진했고, 보존 여론이 고조될 무렵에

는 대부분 파손된 상태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5·18자유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으나, 구성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축된 것들이고, 기존 시설의 일부 자재만 5·18자유공원 조성에 재활용되었다.

둘째, 비교적 현장을 잘 보존되어 치유공간이 조성되기도 했다. 제주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 기념관이 개관했던 2009년 3월 31일에 맞추어 그 일대의 정비 작업과 조형물 건립이 병행되었다. 4·3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가 비교적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과 피해자들의 노력이 컸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발의 위기를 용케 모면했던 것도 현장 보존이 가능했던 이유였다.

셋째, 주요 현장들에 표지 또는 안내시설들이 세워져 있다. 이들 시설물은 유족회나 관련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경우와 진화위에서 설치한 경우로 나뉜다. 여순사건으로 보면 여수와 순천의 주요 장소에 표지시설들이 설치되었는데, 순천은 망실된 것들이 여럿으로 확인된다. 여수도 훼손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여수시와 격론을 벌이면서 재 건립되었다. 진화위는 전국의 주요 장소들에 안내시설들을 설치했으나, 현재의 상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4) 복합 : 추모+기념

복합형은 추모와 기념 및 계승 등의 담론이 혼합된 치유 공간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치유 공간들은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제주4·3평화공원으로 판단된다. 제주4·3평화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충혼묘지’와 같은 집단묘지가 주는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역점을 두어 구상되었다(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1: 356~257).

평화공원은 ‘제주4·3평화기념관’을 가장 핵심 시설로 의미 부여했으나,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묘지의 요소와 특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2단계 사업에서 ‘행방불명 희생자 개인표석’과 ‘발굴유해 안치 봉안당’⁶⁾ 등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공원묘지의 이미지로 변환되었다. 이는 제주4·3평화공원이 추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공원에서는 해마다 합동위령제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추모’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주장이 반영되었고, 공원묘지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복합형 치유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6) 봉안당은 2011년에 완공되었다. 한편 3단계 사업으로 4·3평화교육센터와 4·3고난극복전시관 건립, 평화의 종 제작 등이 검토되고 있다(양조훈, 2013: 16).

4. 과거사 관련 재단들의 설립과 치유공간의 운영 주체

1) 과거사 관련 재단들의 설립과 특성

과거사와 관련하여 설립·운영 중인 재단의 성격을 갖는 단체들은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등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관명에서 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재단 설립운동의 성과물이고, 설립목적과 운영 내용 등에서 거의 동일하며, 특수법인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재단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단이 어떤 배경 그리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민간자율형 :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표면화되다가 1993년 2월 ‘5·18민주항쟁동지회(이하 오항동)’가 책임자 처벌 등을 쟁점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구체화되었다. 오항동은 1993년에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또 다른 단체인 ‘5·18광주민주민중항쟁연합(이하 오민련)’의 참여 문제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좌초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두 단체의 갈등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윤강옥, 1995: 410).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미흡’, ‘정부의 공식 피해자로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였는데, 관련단체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합의의 도출이 난항을 거듭했다(정수만, 1998: 377).

1993년에 ‘5월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이 정립되고, 그 가운데 하나로 기념사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를 수행할 어떤 조직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재단 설립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것은 1994년 5·18민주화운동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5·18정신과 의미의 계승과 확산의 필요성을 자극했고, 이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여기에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던 기념사업과 향후 계속될 후속사업 등이 줄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윤강옥, 1995: 408). 당시 정부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관련 시설들이 훼손되고 해체되는 것을 방관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를 주도하여 시민사회

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1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1994년 8월 30일에 조비오 신부를 대표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창립하기 위한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내무부는 12월 22일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법인설립을 신청했던 것은 전국적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기 위함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전남에 한정시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5·18보상법은 근래로 올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이지만, 제1~3차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 대상들에 대한 심사는 포괄적이었고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보상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시간적 범위가 넓었고, 공간적으로 전국을 망라했다. 당시에는 5·18보상법이 유일한 과거사 관련 법률이었고, 다른 과거사 법률들이 제정될 가능성도 낮았기 때문에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최대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5년에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단 설립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치·사회 전반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작용했다.

물론 공감대 형성과 의지만으로 재단이 설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단 설립을 촉발시키는 구심의 형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태동한 것은 5·18보상법에 의해 국가 배상을 받았던 피해자들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령한 배상금을 자신의 조건에 따라 기부하고, 시민들이 성금을 출연하여 재단 설립의 씨앗으로 약 3억 5천만 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후원회’로 명명되었고, 재단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사회는 설립 초기에는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이었는데,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었다. 이사회의 인원과 구성원의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달라졌다. 이사회가 오늘날과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된 것은 1999년 제3기부터였다. 재단은 창립 목적의 성취와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위해 민주화운동 또는 과거사 관련 단체들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다수 포함하여 이사진을 구성했다.⁷⁾

재단은 1997년 말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공동대책위 등 5개 단체가 합류를 결정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설립되었던 단체들의 대다수가 재단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일부 단체는 해산했다. 이는 5·18기념사업의 주체가 재단으로 수렴되었고, 광주시가 주관해 온 추모행사를 비롯해

7) 5·18기념재단이 창립될 당시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사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 3인(주로 회장이 참석), 후원회 4인,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각 1인,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제주4·3관련 단체·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각 1인씩을 추천했다.

진상규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재단으로 업무 이관되었다. 재단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외부 지원금과 기업체 협찬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에 재단이 운영하던 기금은 5·18기념행사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4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재단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1998년 3월 초에 광주광역시가 ‘5·18기념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억 원을 기념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여건이 다소 안정화되었다(정수만, 1998: 127). 이 자금은 5·18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모금되었다가 집행되지 못하고 광주시가 보관했던 것이었다.⁸⁾ 이후에도 다양하게 조성된 12억 5천여 만 원이 출연금으로 추가되었고, 2005년에는 약 8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기금은 증가했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에 문제가 발생했고, 과실금으로 운영하던 재단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재단은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 기한의 만료가 임박하고 있다.

(2) 특수법인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은 1998년 8월에 가시화되었다.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가칭) 한국민주재단 준비모임’의 결성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 즈음은 이들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실질적인 힘을 갖기 어려웠고,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1999년 5월 초순경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결성되었다. 이처럼 두 개의 조직이 결성되었던 것은 모임을 구성한 인물들의 네트워크가 달랐고,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1999년 6월항쟁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모임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6월 19일에 ‘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통상 ‘민주재단’으로 명명되었다. 민주재단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설립 목적과 이유를 널리 알렸고, 1999년 10월 4일에 창립대회를, 2000년 6월 16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8) 성금의 모금 경위와 그간의 사용 내역 그리고 기금 운용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중심에 놓였던 것은 1982년 12월 15일에 출범했던 ‘전남개발협의회’였다. 이 단체는 교황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1983~1984년에 진행되었던 ‘망월묘역’ 해체 작업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유족들과 부상자 등 연인원 1,591명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총 2,669백만 원을 지급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

민주재단은 이사장단의 40%, 부이사장단의 50%가 국회의원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강구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민주재단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출범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초기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촉발시켰던 사람들의 일부는 불참했고, 통합 과정에서 ‘6월사랑방’ 등이 논의 구조에서 탈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가 된 점은 민주재단 설립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결성 과정과 주도 세력에 대한 불신과 이른바 민중단체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임원과 실무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2001년 6월 28일 법률 제6495호로 기념사업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4일 공포되면서 갈등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이러한 분위기는 2001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이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큰 부담이 되었고, 다양한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 1월 29일에 공식 창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할 때에는 갈등과 논쟁의 결과가 반영되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및 국회의원이 임원진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민주재단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된 지 한참 후에 해산되었다는 점 등에서 민주재단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연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3) 민관공동형 : 4·3평화재단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자 5·18기념재단에 착안하여 4·3 평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2005년에 지방비를 책정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198).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05년 10월 19일에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7년 1월 24일 개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법률 제8264호)」 제12조 2(제주4·3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에는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59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여 추도사를 통해 4·3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 도민 등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진상조사, 4·3평화인권재단 설립 지원 등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4·3사건을 역사

의 교훈으로 삼아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2007년 3월 19일에 기 개정된 시행령에서 재단 설립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재단 설립 분위기가 무르익자 2007년 12월 21일에 「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2007).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로부터 「제주4·3과거사청산의 의의와 4·3평화재단」에 관한 강연을 듣고, 5·18기념재단 조진태 사무처장이 발표한 「역사적 사건과 기념사업」을 바탕으로 재단설립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2008년 9월 22일 재단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10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10월 21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11월 10일에 ‘제주4·3평화재단’ 출범식을 열었다. 제주4·3평화재단은 공익성을 띤 민법상의 재단 법인이었지만, 창립 당시 적립한 3억 원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없었다.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인, 위 위원회 간사, 실무위원회 추천 위원 1인, 도의회 의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의 구성이 보여주듯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박찬식, 2013). 이를 공공적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도 있다. 2014년 현재 4·3평화재단은 이사장 포함 1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4) 정부후원형 :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사건은 2004년 3월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5호)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청산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05년 5월 23일 상해, 사망, 실종 등 희생자 218명과 유족 2,170명을 확정했다. 위의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위령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위령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관리·운영할 주체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유족회를 중심으로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법적 청산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이와 달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이 필요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완공은 2010년 11월로 예정되었는데, 정부는 지방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운영하기를 바랐다. 노근리사건의 주요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것이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화공원을 운영할 주체에 관한 논의와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행정안전부 과거사처리지원단이 ‘재단 창립 준비단’을 만들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설립을 주도하게 되었다.⁹⁾ 피해자들이 재단 설립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와 추진 주체는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2010년 6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2명의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선출하면서 공식기구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예정과 달리 노근리평화공원은 2011년 10월 26일에 준공되었고, 그로 인해 평화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은 것은 2012년 4월부터였다.

2) 치유공간들의 관리와 운영 주체

치유공간의 조성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치유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도 항상 논란이 되었다. 치유공간의 관리와 운영은 과거사 청산의 제반 환경과 관련자 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량 등에 따라 여러 양상들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유공간은 조성하게 된 주요 취지에 따라 추모형과 기념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차이가 치유공간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첫째, 추모형의 치유공간들, 즉 공원묘지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와 운영의 주체였다. 국립4·19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그리고 국립3·15민주묘지는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공원묘지들은 안장 대상자들이 유공자법률들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립묘지법의 적용대상도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의 관리 대상이 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것이다. 그 밖에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2곳과 호국원 3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거창사건추모공원과 함양산청사건추모공원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노근리평화공원도 근래에까지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다가 2012년부터 재단으로 운영이 위탁되었다.

둘째, 기념형 치유공간들은 관리와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5·18기념공원과 부산민주공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5·18기념공원은 광주광역시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5·18기념재단이 5·18기념문화관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도 5·18기념문화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역시 임대의 방식이다.

반면 부산민주공원은 관리와 운영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 개관할 때는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그 가운데 일부 운영권을

9)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초대 이사장 취임’, 『충북인뉴스』 2010. 6. 15.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재 위탁받는 방식을 취했다(이은정, 2000: 38).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관리와 운영권 모두를 위탁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권의 성향이 달라지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구성이 달라지면서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재연되었다. 견해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화운동을 이해하지 못한 단체에 위탁하려하여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노근리평화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운영하다가 2012년 4월부터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민관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례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4·3평화재단이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영한다. 4·3평화재단은 조직과 인적 구성으로 보면 독립된 기관이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 선출 등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사무처장과 총무팀장 등은 관료가 파견되고 있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에 관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사 대상이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등 사실상 반관 기관 성격을 띠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관료집단과 민간부문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으며,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민간부문 내에서의 알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맺음말 : 여순사건의 치유공간과 운영 주체는?

2010년 12월 말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전환점을 돌았다. 어쩌면 그 보다 일찍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거사 청산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던 ‘5·18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뒤늦게 시작된 과거사 청산이 오히려 빨리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배·보상과 치유공간의 조성 그리고 재단설립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김동춘, 2012). 특히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에 대한 치유공간의 조성과 재단 설립은 논란만 무성한 채 수년째 답보상태이다.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고통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후손된 자로서 선진들의 넋을 추모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더욱이 이들의 죽음은 자연의 순리가 아닌 정치·사회적 구조와 갈등으로 인해 생겨났던 것이므로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피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위로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유공간의 조성은 현재의 권력관계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결국 현재를 살

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엇을 재현하고 기려야 하는가는 핵심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흔히 가감이 없이 역사적 사실과 실체를 보여주어야 하며,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억의 정치에서 보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수도 없다. 과거는 선택되고 선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이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생각이고,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명쾌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성찰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가능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사의 치유공간과 재단의 설립 그리고 운영 주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사례와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보여주는 구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여순사건은 시·공간적 범위와 피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여서 선례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여순사건은 독립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치유공간들이 대체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거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위는 “여수지역 여순사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Ⅲ. 결론과 권고사항 - 2. 권고사항 - 나. 위령사업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현재로서는 공허한 문구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없이도 치유공간을 조성할 있는 방법을 탐구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살펴본 선례들에서 이에 부합한 것은 ‘부산민주공원과 민주항쟁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이 치유공간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치유공간이 조성될 장소와 구성 요소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순사건으로 보면, 치유공간의 주요 주제를 추모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치유와 화해에서 찾을 것인가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 이후에 고민할 지점은 공원묘지형과 시민공원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하는 것일 터이지만, 법적·시민 정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나누어 추진하는 분리형인데, 관리와 운영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오늘날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보완적 선택형과 단계별 추진형 가운데에서 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사료된다.

셋째, 관리와 운영 주체 그리고 비용에 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치유공간들의 관리와 운영 주체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공익재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민간공익재단의 형태와 운영 유형은 기금을 보유한 민간자율형, 정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특수법인형, 민·관협력형 등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례들에서 치유공간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문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여순사건에서도 불가피하게 갈등과 의견 충돌이 생겨날 터인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치유공간에서 역점을 두고 수행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치유공간은 기본적으로 추모제의 공간, 전시와 교육 공간, 피해자들의 만남과 연대의 공간, 문화와 연구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65년이 되면서 이제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유족들의 구성을 보아도 조부모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들이 죽음을 당해 유고된 일방적 피해자인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그래서 진상을 현실감 있게 증언해주고, 입증해 주는 것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여순사건의 의미를 되찾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여순사건의 비 경험 세대가 대부분이다. 여순사건은 시간이 더 흐를수록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문자 등의 구성된 기록들에 의존하여 반추되고 회고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료화되지 않은 여순사건에 관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이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5. 『거창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 자료집』.
- 고연옥. 1999. 「부산민주공원, 항쟁의 도시 부산을 깨우는가」, 『시민시대』 10호.
- 김동춘. 2012. 「지연된 진실규명, 더욱 지연된 후속작업」, 『역사비평』 100호.
-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백영·김민환. 2009.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창사거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 김영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2006.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년사』.
- 박찬식. 2013.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 송충기 외. 2009. 「피해·명예회복 및 화해·위령사업, 재단 화해사례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안병욱 외. 2012. 「해결되지 못한 과거청산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과거사 미청산과제 집담회」, 『역사와 책임』 3호.
- 양조훈. 2013. 「제주4·3특별법 제정 과정과 4·3위위회 활동 성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 윤강욱. 1995. 「5·18기념재단의 출범과 행보」, 『생활성서』 12권.
- 이성형. 2009. 「해외 화해·위령·재단 사례와 시사점」,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I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 이은정. 2000. 「‘부산민주공원 개관 1주년’ 그 성과와 한계」, 『시민시대』 10월호.
- 정근식. 2002. 「과거 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역사』 61집.
- 정수만. 1998. 「5·18기념재단 정수만 상임이사」, 『WIN』 5월호. 월간중앙.
- 정호기. 2005. 「기념관 건립운동의 변화와 동학: 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5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정호기. 2007.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07. 『제주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민 토론회』.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2001.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 조진태. 2007. 「역사적 사건과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도민 토론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가려진 역사 밝혀낸 진실』.
- 한상구. 1990.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개정 및 추진방안

이 영 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I. 서 문

지난 2013년 2월 28일,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김성곤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었다. 이는 2001년 4월 6일(김충조 국회의원 외 39인)과 2011년 2월 1일(김충조 국회의원 외 18명)에 이어 세 번째의 법안 발의이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제16대와 제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가장 최근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 중인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 28일,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13년 3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1년 8개월째 계류 중인 채 현재 계속 답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 김성곤 의원과 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는 2013년 5월 10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에 법안 통과를 위한 사례로 제주4.3특별법의 제정 과정과 활동성과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았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입법 경위와 과제와 함께 개정 및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때에 논의되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개정 방안 및 향후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¹⁾

1.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1) 이 자료는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진화위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법의 제안 이유이다. 이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제19대 제출 법률안의 내용
목적 (제1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적용범위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 1948. 10. 19 ~ <u>종료시점은 명기하지 않음</u> ○ 적용지역 : <u>사건발생 기점 이후 진압과 토벌 중 민간이 희생이 이루어진 전지역</u> ○ 희생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여수·순천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 ○ 유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p>※ 적용기간과 적용지역, 희생자의 범위(군인 및 적대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위원회에 심의재량에 맡겨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p>
위원회 구성 (제3조·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행부장관 소속, 위원장(장관)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지사 소속, 위원장(전라남도지사)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
자료조사 및 보고서 (제7조·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위원회 구성 후 3년 이내에 사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완료 ○ 진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
위령사업 (제9조)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재단에의 출연 (제10조)	○ 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재단 설립시 기금 출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제11조·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의료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재심의 등

2. 제정의 필요성

진화위는 여수·순천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여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조사에 국한한 점이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직권조사인 울산보도연맹사건은 225건에 불과함에도 전수조사의 형태로 신청사건의 181%인 407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여순사건을 직권조사로 규정하여 지역별, 유형별사건과 함께 적대세력사건도 통합하여 통사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지역별과 유형별로 분리하여 개별보고서로 발표함으로 인해, 여순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 전모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된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순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별 역량의 차이로 인해 조사의 기준과 원칙이 상이함으로 인해 각각의 매우 다른 지역별 유형별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순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화위 위원들의 심의 의결 기준과 원칙의 차이로 인해 매우 상이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건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각각 상이하다.

진화위는 여수·순천사건과 관련, 전라남도 및 경남 일대 21개 지역에서 1년간 신청 접수 후 개별 신청사건 730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총 1,237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활동 종료시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도 동 사건의 정리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진화위가 신청사건을 모두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조사한 여수·순천사건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고³⁾, 종합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조사기간과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당초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진화위의 ‘직권조사’ 사건 목록〉

유형별	사 건 명	직권조사 개시결정 일자
민간인 집단희생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6. 10. 10.
	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006. 11. 07.
	여순사건	2007. 03. 06.

〈참고자료 2-2 : 진화위의 직권조사 결정 근거〉 참조

- 3) 진실규명 신청기간 동안 진화위의 존재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유족도 많았으며, 위원회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진실규명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피해를 염려하여 신청을 기피한 유족이 많았음(진화위 종합보고서 III. 95쪽).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수·순천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추정인원 대비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인원은 15%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라는 결정과는 달리 신청사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희생규모와 희생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수·순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연구자들이 추가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인정하고 있다.

III. 특별법의 개정 방안

1. 특별법의 개정안 의견

지난 2003년 5월 10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득중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는 양조훈 발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⁴⁾

(1) 사건의 시작과 끝 : 사건의 기점만 규정하고, 사건의 종점은 규정하지 않음.

※ 진화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1948.10.19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 9.28 서울수복까지 약 2년간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규정됨.

(2) 지역 문제 : 진화위 보고서에도 여순사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발의안 제4조를 보면,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여순사건 지역을 전라남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이고, 진화위 보고서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이런 조직으로 운영한다면, 실제 시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의 명예회복위원회, 전남도지사 소속의 명예회복실무위원회라는 두 조직의 위상 설정은 적당인가? 또한 이들 위원회 구성을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적당인가?

그런가 하면, 장완익 변호사는 김성곤 의원의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입법 경위와

4) 김득중,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2013), 연구소, 41-44쪽

과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⁵⁾

(1)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정의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진압과정과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사건”으로 정의

- 초안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 시기 :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 무력충돌, 진압과정 및 처형과정
->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진압과정, 토벌과정
- 지역 :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 -> 지역 관련 규정 없음
- 피해 유형 : 사망·행방불명·부상·가옥 등 소실 -> 희생사건
- 희생자 : 주민 -> 무고한 민간인

(2) 희생자의 정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위원회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

- 진실화해위에서 결정 받은 사람은?
- 재산상 피해 입은 사람?

(3)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 안정행정부장관이 위원장(초안은 국무총리)
-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 기획단과 실무위원회의 관계는? 조사 기구의 이원화

(4) 조사기간 및 존속기간

- 위원회 구성 후 3년 이내(초안 2년 이내)
- 집단학살지 조사, 암매장지 조사도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지?
- 유골 발굴·수습
- 위원 임기 없으며,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조사 종료 후 위령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7년간 위원회 존속 예정

5) 장완익,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2013), 연구소, 95-96쪽

(5) 위령사업

-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 위령공원 조성? 평화공원 조성?

(6) 재단 출연

- 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 20억원씩 7년간 140억원 출연
- 타 재단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동북아역사재단).
- 정부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대일항쟁기조사지원법)

(7) 생활지원금

- 제주4·3사건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 사항을 반영

(8) 재심의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 신청기간을 60일로

2. 특별법 주요 개정안

이상 김득중, 장완익의 특별법의 개정안 의견을 종합하여 특별법의 주요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정의

진화위 종합보고서의 ‘여순사건의 정의’를 도입한다.

제2조(정의) 1호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까지 약 2년간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제3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위원회 존속기간

위원의 임기가 없으므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조사 종류 후 위령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7년간 위원회 존속 예정으로 한다.

제3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생활지원금

제주4·3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주4·3사건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IV. 향후 추진 방안

여순사건 발발 66주기를 맞아, 제19대 국회에 바라는 여순사건 유족들은 이제 제주 4.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김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 발의를 통해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무지와 박약한 의지로 인해 해를 넘기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난 7월 8일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의 입장으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자치 민선6기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당위가 힘을 얻으면서 마침 특별법 발의자인 김성곤 의원의 제안으로 여순사건 위령기

념사업 중·단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반드시 성사시켜 나아가야만 한다. 이를 위한 일련의 중·단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순사건 위령기념사업 중·단기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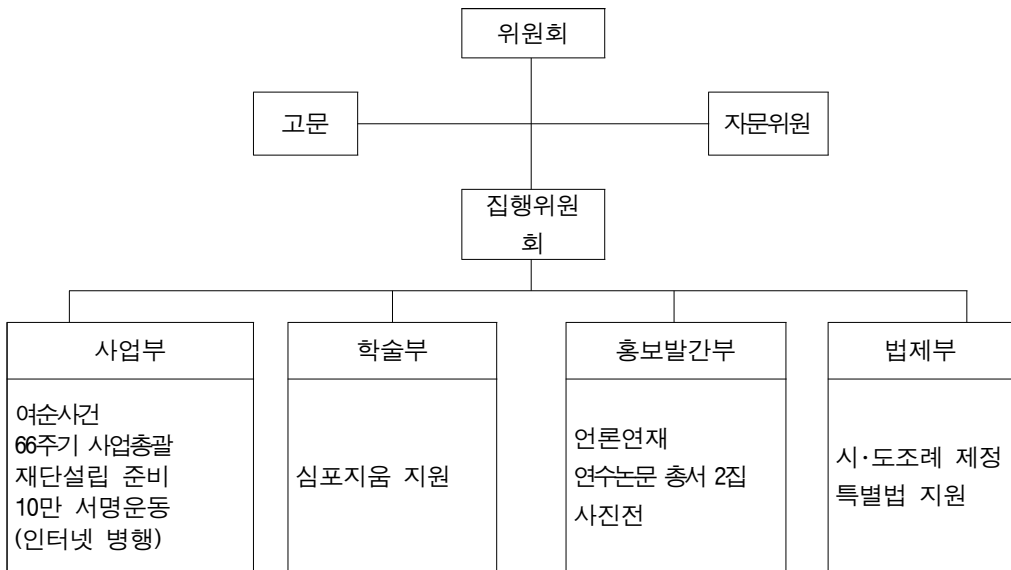
1. 주요 사업별 계획

가. 여순사건평화공원 건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 설립

- 시 기 : 2014. 11 ~ 12월중
- 역 할 : 여순사건 위령기념사업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구 성 : 지역의 정계(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재계(상공회의소 등), 학계(전남대, 한영대 등), 언론계, 예술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유족, 반공안보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계 등 범지역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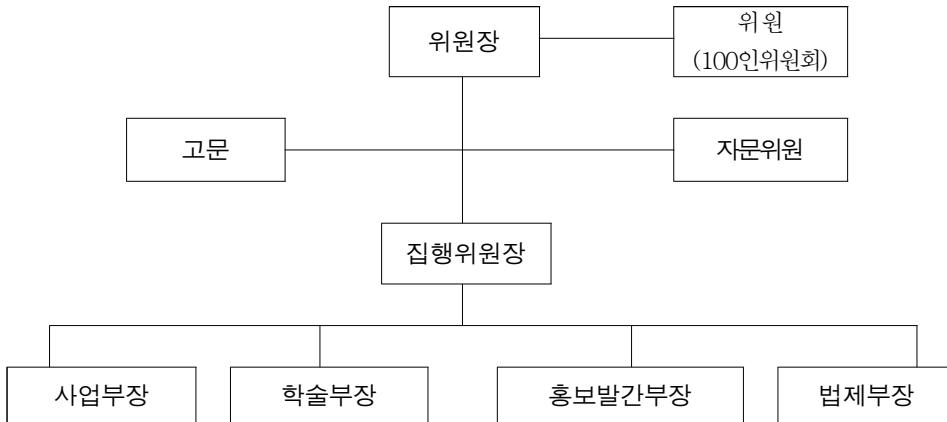
<조직표 1>



<조직표 2>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fit-content;"> 위원회 (공동위원장/선출직) </div> <div style="margin-top: 10px;">*위원 100인 위원회</div> </div>	
구 분	위 원
시도의원	도의원 6명, 시의원 26명
재계	상공회의소 위원 10명
학계	전남대, 한영대 교수 5명
언론계	지역 언론인 10명
예술계	예총, 민예총 지부장과 분과위원장 12명
유족회	여수유족회 회장단 5명
시민사회	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10명
반공안보단체	안보단체 6명
사회복지단체	영역별 회장단 5명
종교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공회 5명
계	100명

<기구표>



(2) 제주4.3유적지 및 평화공원답사

- 시 기 : 2014. 11월중
- 여순사건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제주4.3사건의 현장을 답사한 후 이를 여수에 도입하기 위해 위령기념사업 추진위원 3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4.3

유적지 및 평화공원 답사를 추진

(3) 여순10.19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전시관(사료관, 교육관, 재단 사무실), 위령탑, 봉안소, 부대시설(추모광장, 기타 시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트라우마힐링센터 등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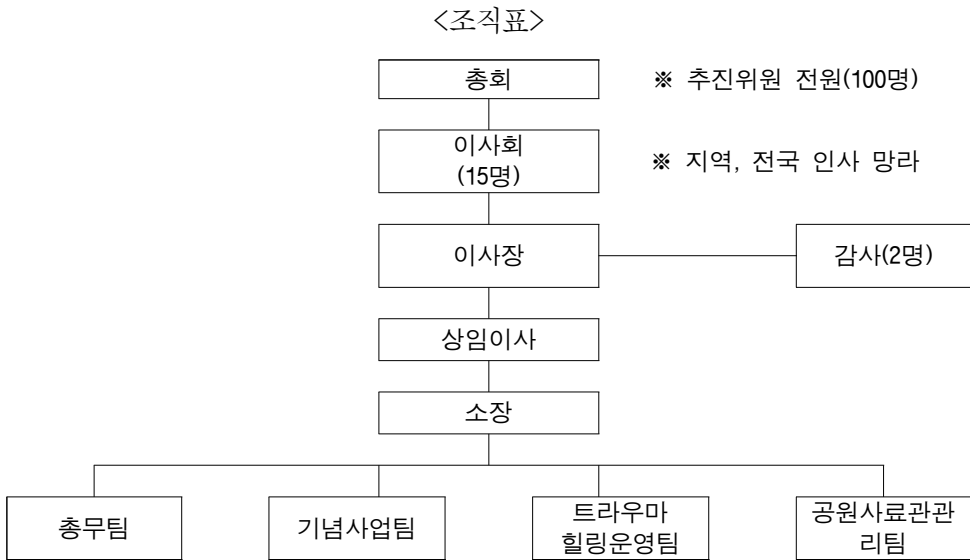
- 시 기 : 2014. 8~12월

- 제주4.3유적지 및 평화공원 답사와 여순사건 66주기 심포지움을 토대로 가칭 ‘여순10.19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시관(사료관, 교육관, 재단 사무실), 위령탑, 봉안소, 부대시설(추모광장, 기타 시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트라우마힐링센터 등 기본계획 마련

(4) 여순10.19평화재단 설립

- 시 기 : 2015년초

- 2014년도 여순사건 위령기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시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위령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여순사건 평화재단으로 위상 전환을 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함. 또한 이를 토대로 전남도 조례 및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에 동력을 주고자 함.



※ 제주4.3평화재단 조직도 일부 참조

2. 일정별 사업 추진계획

내 용		2014						2015				
		7	8	9	10	11	12	1	2	3	4	5
중·단기 종합계획수립		*										
위령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	*					
	제주4.3유적지 답사					*						
	평화공원 기본계획		*	*	*	*	*					
	여순사건평화재단설립							*	*	*		
조례제정	시조례 제정					*						
	도조례 제정							*				
홍보발간	신문연재							*	*	*	*	*
	지리산전 사진전					*						
	여순사건논문총서2집						*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	*		
	성명서/국회방문									*		
	특별법 추진										*	*

3. 2015년 이후 향후 계획

가.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운영

- 2015. 2월부터 조직 정비
- 운영비 재원 마련 : 기금과 보조금
- 조례에 의한 사업 지원
 - ① 위령사업 지원
 - ②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 ③ 간행물 발간
 - ④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 ⑤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연구 주제 개발
 - ①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연구 주제
 - ② 인권과 평화, 분단과 통일의 담론으로 연구방향 설정
- 트라우마 치유 예술프로그램 & 힐링 명상 프로그램 센터 운영

- ① 여순사건 트라우마 예술치유 : 여순사건 유족 대상
- ②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술치유 : 여수산단 등 산업재해 유족 대상
- ③ 힐링명상 프로그램 : 일반시민 대상(여순사건의 대중적 접근과 친밀도를 위해)

- 사업 발굴 : 대중적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소설, 영화, 연극 등의 장르

나. 여순10.19평화공원 조성사업

- 국비 사업비 예산 신청 / 2015년 부터
- 사업비 확보 및 평화공원 조성 / 2016년 부터

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조직 및 국회 방문 등
 - ① 전남동부지역 시장군수 성명서
 - ② 도지사와 도의회, 시군의회 성명서
 - ③ 전남동부지역 사회단체, 유족회 성명서
 - ④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여순사건 특별법 추진을 위한 로드맵
 - ① 김성곤, 주승용 의원 / 2015년도 정세에 맞춰
 - ②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 대상 설명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550-260 전남 여수시 여서1로 95-7

Tel 061) 651-1530 / Fax 061) 654-7749

www.yosuicc.com / yosuicc@hanmail.net